발간등록번호
72-6420103-000004-11

第7代 江原道議會 前半期

議政白書

(2006. 7. ~ 2008. 6.)

江原道議會

民意의 殿堂, 道民을 위한 議政

江原道議會

本會議場

發刊辭

제7대 강원도의회는 도의회 개원 반세기를 맞이하는 2006년 7월 12일 열린 개원식에서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에게 약속한 다짐을 한시도 잊지 않고 도민 여러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도내 곳곳을 누비며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한 「의정백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백서가 도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의회는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을 거울삼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한 민생정치, 생활정치 실현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나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방의 소외받는 강원도가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서 세계속의 강원도, 가장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강원도의회 의장 최 ○○

道義會 議長團(前半期)

의장 이 기 순

(2006. 7. 12. ~ 2008. 7. 11.)

부의장 최 재 규

부의장 백 선 열

常任委員會 委員長(前半期)

•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이 준 연

•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이 병 선

• 교육사회위원회 •

위원장 김 기 남

• 산업경제위원회 •

위원장 박 상 수

• 관광건설위원회 •

위원장 서 동 철

道 議 員

姓 名	學 歷 및 經 歷
황 철 (춘천 1)	소양초 · 춘천중 · 강원고 · 한림성심대학 사회복지과 · 강원대학교 철학과 · 강원대학교 대학원 졸업(철학석사), 춘천시청 근무, 전문건설협회 춘천시협의회장 · 강원도부회장, 강원도레슬링협회 회장, 강원도체육회 감사,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 및 지방건축위원회위원, 건축특급기술자, 사회복지사, 캐어복지사, 제6대 춘천시의회 의원(운영위원장), 춘천YMCA 청년회장 · 이사, 춘천시체육회이사,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춘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춘천시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운영위원, 강원고등학교 동창회 수석부회장, 자유총연맹 춘천시지부장, 강원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사)강원복지정책 연구소 이사장, 강원도결핵협회 부지부장,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백 선 열 (춘천 2)	춘천고등학교 · 강원대학교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정치학 석사) 졸업, 강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재학, 제4대 춘천시의회 의원, 제6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한 · 중 친선교류협회장, 소양야간 중 · 고등학교 교장, 춘천호반로타리클럽 회장,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춘천고등학교 및 강원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강원도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위원, 춘천가정법률상담소 이사, 춘천시 체육회 · 번영회 ·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강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위원, 강원도 곰두리공판장 및 강원도 아동전문기관 운영위원, 사단법인 춘천인형극장 이사, 한국물사랑협회 강원도지부장,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장,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부의장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 대 천 (원주 1)	매지초등학교 · 육민관중 · 고등학교 ·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일요시사 정치부 기자, 워싱턴선데이타임즈 편집위원,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위원, 강원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강원도선대위 전략기획단장, (사)전국생활체조연합회 이사, (사)한국해상재난구조단 이사, 생활체육 강원도 농구협회장,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연구회(기강연) 간사,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이 인 섭 (원주 2)	원주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경희대학교 대학원(정치학 석사) · 상지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강원대 · 상지대 대학원 · 상지영서대 · 원주대 강사, 지방분권 국민운동 강원지역 공동대표, 강원행정학회 부회장, 제2대 원주시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5, 6, 7대의원, 제6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반기), 사회복지법인 상애원 이사,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위원, 강원도 장애인 농구협회 회장, 대한걷기연맹 부회장,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최 재 규 (강릉 1)	사천초 · 사천중, 강릉고 · 관동대 관광경영학과 · 강릉대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관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산업자원부장관 · 제2회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 국무총리 표창, '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지원특위 위원장, 강원도스쿼시연맹 회장,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운영예결위 · 산업경제위 · 관광건설위위원), 태풍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부회장,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강원도지부장, 강원도 경제선진도위원회 위원,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제1 부의장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姓 名	學 歷 및 經 歷
 박 호 창 (강릉 2)	관동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강원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건축사(박호창건축사사무소), 국립 삼척대학교 · 강릉 영동대학 ·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강사,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릉시 장애인 생활체육회 고문, 대한건축학회 이사, 강원행정학회 이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강원도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강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강원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부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이 성 기 (동해 1)	송정초 · 북평중 · 북평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중퇴, 동해 북평청년회의소 제11대 회장, 동해시 체육회 이사, 동해시 송정지구 번영회장, 북평-일본 쓰루가항 페리오 취항 추진위원회 이사, 동해시 무릉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북평중 · 고교 총동문회 부회장 및 지역동문회 회장, 동해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동해시 발전협의회 이사, 동해시 사적지 보전위원회 부위원장, 백두대간보전회장, 제1, 2대 동해시의회 의원(2대 의장), 한나라당 동해시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원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회장,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기강연) 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권 순 일 (동해 2)	묵호초 · 묵호중 · 묵호고 · 삼척공업전문대 토목과 ·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제2, 3, 4대 동해시의회 의원(제3대 부의장 역임), 묵호청년회의소(JC) 회장, 발한동 주민자치위원장, 묵호초 · 동호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부연맹장, 태평양수산 대표, 묵호중 · 고 · 관동대 총동문회 부회장, 삼척대 총동문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 동해경찰서 피해자지원협의회 위원, 동해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동해시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장, 동해시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소 협력기관장, 동해시체육회 이사, 동해시 낚시연합회 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심 재 영 (태백 1)	태백기계공고 졸업, 제1대 태백시의회 의원(부의장 역임), 한나라당 태백 · 정선지구당 사무국장, 상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상장동 주민자치위원장,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태백시 장애인총연합회 고문,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회장, 도민 삶의 질과 중심의정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회원, 제7대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김 연 식 (태백 2)	황지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석사),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 강원도기자협회 사무국장 · 부회장, KBS춘천방송총국 정치해설, 한국언론재단 선거보도 전문기자 연수, 강원도의회 한러국제교류협회 총무간사,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 강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대관령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위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위원, 강원관광대학 겸임교수,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姓 名	學 歷 및 經 歷
 이 병 선 (속초 1)	속초초 · 속초중 · 속초고 · 동국대학교 사학과 · 동국대 교육대학원 졸업(역사교육학 석사), 한국산업은행 근무, 국회입법비서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비서실장, 속초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재단법인 유암문화재단 이사,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영북발전위원회 위원, 강원도체육회 이사, 제6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제6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후반기),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동국대 총동창회 이사, 속초문화원 이사, 한나라당 중앙위원, 강원도의회 한러국제교류협회 회장,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회원,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 시 성 (속초 2)	설악고등학교 졸업,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동우대학 서무과 경리계장,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국회 정책보좌관(4급상당), 설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한나라당 속초 · 고성 · 양양 당원협의회 정책실장,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속초시 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속초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영북발전위원,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김 양 호 (삼척 1)	서부초등학교 · 삼척중학교 · 삼척고등학교 졸업, 강원대 행정학과 졸업, 민주자유당 삼척시 · 군 지구당 청년부장, 삼척시 비서실장 (1995~2006), 삼척 서부초등학교 총동문회 상임고문, 삼척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삼척시 모범운전자회 고문, 삼척시 야구협회 고문, 반석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회원, 제7대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 상 수 (삼척 2)	진주초등학교 · 삼척중학교, 삼척고등학교 졸업, 삼척대학교, 관동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삼척대 초대 총학생회장, 삼척대 총동문회 자문위원, 제6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삼척시 새마을협의회 이사, 삼척시 축구협회 고문, 삼척시 태권도협회 고문, 삼척 죽서 R · C 회원, (사)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삼척시지부 고문, 삼척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강원해양수산포럼 감사,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삼척경찰서 방범자문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명 열 (홍천 1)	협신초, 홍천중학교 졸업, 홍천농고 2년중퇴('02년 명예졸업),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 홍천여중 · 홍천고교 운영위원장, JCI코리아 홍천 회장, 새마을운동 홍천군지회장,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 수석부회장, 제3, 4대 홍천군의회 의원, 리바트가구 홍천대리점운영, 홍천군 보디빌딩협회 고문, 홍천군 농구협회 이사, 새마을운동중앙회 홍천군지회 이사,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姓 名	學 歷 및 經 歷
 김 기 남 (홍천 2)	춘천고등학교, 춘천대학(현 강원대학교) 상학과 졸업, 캘리포니아주 하비스트대학 명예철학박사, 경희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연구반 수료, 호남 작물시험장 2년 재직, 홍천군 내면 면장, 동면 면장(10년 재직), 새마을지도자, 버섯재배, 목장경영 10년, 내면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장, 국무총리실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정화추진위원장(내면), 민주정의당 중앙위원,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지구당 사무국장, 한나라당 홍천 횡성지구당 사무국장, 제6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결산검사 대표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홍천군지회장, 전국 견지낚시대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진 기 엽 (횡성 1)	횡성초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고등학교 졸업,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횡성군 미래연대 회장, 횡성군 음식업지부 이사, 횡성중 · 고등학교 33, 36회 동창회장, 강원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횡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횡성군 청년위원장 · 운영위원, 횡성읍 번영회 위원, 횡성로타리클럽 사회봉사분과위원, 대한적십자사 태기봉사회 청소년분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원도 반부패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강원도 명예도민선정위원회 위원,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 간사,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 명 서 (횡성 2)	둔내초 · 승덕중 · 신일고 · 상지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둔내면 청년회장, 둔내면 체육회 총무, 둔내초등학교 동문회 총무, 상지대학교 자원공학과 동문회장, 국제라이온스354-E(강원)지구 둔내 라이온스 회장, 11기 민주평화통일 횡성군협의회 회장, 태풍문화재 위원장, 제3, 4대 횡성군의회 의원(제4대 전반기 의장), 강원도 시 · 군의장단협의회 사무처장(4대 전반기),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대책위원회 위원,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위원, 강원도 시 · 군청년의원협의회 재무위원, 은나래합창단 단장, 강원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 진 국 (영월 1)	녹전초 · 상동중 · 상동고 · 세경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녹전초등학교 총동문회장, 농협 근무 (16년), 녹전청년회장, 영월 상동JC 감사, 자유총연맹 중동면 위원장, 녹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녹전중학교 육성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장,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조정위원, 제1, 2, 3, 4대 영월군의회 의원(1대 전반기 부의장, 2대 전반기 의장), 동강문학회원, 강원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 부회장,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 회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권 석 주 (영월 2)	주천초등학교 · 주천중학교 · 주천고등학교 졸업, 영월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평창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영흥테니스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위원, 주천 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姓 名	學 歷 및 經 歷
이 영 덕 (평창 1)	평창초등학교, 평창중학교, 평창농업고등학교 졸업, 평창군 축구협회 고문, 평창군청 축구회 회장, 평창중 · 고 총동문회 부회장, 평창군 평창읍 부읍장, 평창군 지역경제과장 · 새마을과장 · 재무과장, 평창군 내무과장 · 민원봉사실장,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사)농업경영인 평창군 연합회 고문, (사)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 회원, 강원도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이 준 연 (평창 2)	용산초 · 도암중 · 대관령종고 ·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및 경영행정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평창군 번영회 이사, 노성제 부위원장, 도암중 · 대관령종고 총동문회장, 2010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대관령 JC회장, 대관령지역 상가번영회장,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위원, 강원문화재단 이사, 2014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도 컬링경기연맹 회장, 강원도체육회 감사, 제6대 강원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제6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 위원장(후반기),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 강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원도 삶의 질 일등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홍 건 표 (정선 1)	정선초등학교, 정선중학교 졸업, 정선군 임계면장, 정선군 문화공보실장, 정선군 정선읍장, 정선중 · 종고, 정보공고 동문회 상임부회장, 정선군 북평면장, 정선군 북면장, 제7대 강원도의회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남 경 문 (정선 2)	사북초 · 사북중 · 서울 오산고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토목공학과 졸업, 동원탄좌(주) 삼왕광업소, 동원보건원(종합병원) 원무과장, 사북청년회의소 회장, (사)축산기업중앙회 정선군지부장, 사북읍 번영회 부회장, 한국청년회의소 이사 및 상무위원, 동원보건원 살리기 추진위원, (주)금강건설 대표이사, 새시대 개혁연대 강원도지부장,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 이사,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민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북읍번영회 자문위원, 정선경찰서 남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강원도회 부회장,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범죄예방위원,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댐주변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 동 일 (철원 1)	묘장초 · 철원중 · 수원비봉고등학교 졸업,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부 재학, 철원청년회의소 회장, 철원군 이장협의회장, 묘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제6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농민회/쌀전업농/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회 활동, 강원도생활체육회 이사, 철원평화광장 자문위원, 철원군 행정혁신위원, 경원선복원 범군민추진위 위원, 강원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 강원도재활병원 운영위원,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간사, 강원도의회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姓 名	學 歷 및 經 歷
김 영 칠 (철원 2)	김화중학교 졸업, 철원군 동송읍 부읍장 · 의회사무과장, 강원도 재산관리담당 · 문화예술담당 · 관광기획담당 · 인사담당, 강원도 지역지원과장, 강원도의회 의정자료담당, 철원군 부군수, 명예철원소방서장, 신인문학상 수상(문학세계, 수필부문), 한국문인협회 및 강원수필문학회 회원,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한나라당 지방의원협의회장,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새마을문고 강원도지회장, 강원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강원도 성가평가위원회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기부심사위원회 · 출자출연심의위원회 ·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도민 삶의 질과 중심 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 회원, 제7대 강원도의회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장 세 국 (화천 1)	화천초 · 화천중 ·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졸업, 화천군 화천읍 부읍장, 화천군 민방위과장 · 사회과장 · 재무과장 · 자치행정과장 · 의회사무과장, 화천군 기획감사실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원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 위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위원, 해군동지회 중앙회 부회장, 화천군 재향군인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 충 수 (화천 2)	홍익행정 · 사법고시학원, 솔본느대 AMP, 민주산악회 화천군지부장, 강원도 농어촌 · 농어업발전 심의위원,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 제5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전반기), 제5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후반기), 제6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화천군지회장, 강원도의회 한중국제교류협회 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이 기 찬 (양구 1)	죽리초 · 양구중 · 양구종고 · 한림전문대학 지방행정과 졸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4년 재학, 양구군 공무원 재직, 강원도민일보 양구지사장, 한림성심대학 지방행정과 강사,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 사무국장, 한림성심대 총동창회장, 양구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강원도당 유세기획단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양구중 · 고 총동문회 대의원, 양구군 여성축구단장, 강원도체육회 이사, 강원도씨름협회 부회장, 강원청년지도자회 회장, 양구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조 영 기 (양구 2)	도촌초 · 양구중 · 양구고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과 · 한림성심대학 문화컨텐츠개발과 졸업, 강원도지방공무원 사무관 명예퇴임(24년 3월), 양구군청 비서실장, 양구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양구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새마을문고 양구군지부회장, 양구군 태권도협회 부회장, 양구군 축구협회 자문위원, 양구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이사,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자문위원,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 회원, 제7대 강원도의회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姓 名	學 歷 및 經 歷
이 기 순 (인제 1)	인제초 · 인제중 · 인제종합고등학교 졸업, 농협대학 경영과정 수료,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인제청년회의소 초대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제군협의회장, 인제농협 상무, 인제군번영회장, 내린천댐건설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21세기젊은의원모임 초대회장, 제3, 4, 5, 6대 강원도의회 의원, 제5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5대 강원도의회 부의장(전반기), 제6대 강원도의회 부의장(전반기), 제6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전반기), 제7대 강원도의회 의장
정 을 권 (인제 2)	기린초등, 옥수초등 · 덕수중 · 서울상문고 · 서울디지털대 e-비지니스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재학(경영학 전공), 농어민후계자 및 신지식인 선정,강원 농어민대상 수상(소득증대부문), 인제군민대상(지역개발부문), 제1회 강원중소기업대상(특별상) 수상, 제6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제6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제6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반기), 명진농장 대표,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강원도 인제사무소 고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이 강 덕 (고성 1)	속초고등학교 졸업, 관동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중퇴, 고성수협 대의원(9~13대), 토성농협 이사, 토성면 봉포리장, 토성자율방범후원회장, 토성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회장, 고성군 자율방범 위원, 강원도 사이클연맹 이사, 천진초등학교 육성회장, 고성군 태권도후원회장, 제2, 3, 4대 고성군의회 의원(제2대 부의장, 제3대 의장 역임), 강원도시 · 군의회 의장협의회 제3대 후반기 총무,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서 동 철 (고성 2)	거진초등학교, · 고성중학교 · 서울 환일고등학교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수료, 고성군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장, 속초 YMCA 부이사장, 수성문화제 부위원장, 고성명태축제(1, 2, 3, 4회)위원장, 고성군 번영회장, 제6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제6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태풍루사특별위원회 위원,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 강원도의회 JC동호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융 길 (양양 1)	양양고등학교 졸업,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흥양제재소 대표, 양양청년회의소 회장, 양양군 태권도협회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양양군협의회장, 양양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지역혁신 양양군협의회 의장, 양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제5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제6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제6대 강원도의회 부의장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후반기), 양양군체육회 수석부회장, 양양군 현산장학회 이사장,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姓 名	學 歷 및 經 歷
임 용 식 (양양 2)	강원대학교 임산가공학과 졸업,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양양군체육회 이사, 춘천지검 속초지청 범죄예방위원,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양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청정양양21 실천협의회 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김 동 자 (비례대표)	강동초등학교, 한림여자중학교, 한림여자고등학교 졸업,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한국미용장중앙회 회장(3, 4, 5대),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장, 한나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 및 강원여성의원협의회 회장, 강원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강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강릉시 번영회 부회장, 강원도 체육회 이사, 강릉디자인직업전문학교 교장,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부회장,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유 순 임 (비례대표)	원주초 · 원주여중 · 원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원주우체국 근무, 전국노동조합원주전화국 연합분회장, 한국통신 원주전신전화국 근무, 한국통신 노동조합 강원지구 부녀부장, 한국통신 춘천전신전화국 근무, 전문직여성클럽 원주지역 부회장, 강원도 도정상담위원, 원주여고 운영위원, 원주여중 · 고 총동문회장, 한국통신 동우회 부회장 · 강원지부 이사, 원주명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회장, 원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원주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원주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최 경 순 (비례대표)	주봉초 · 홍천여중 · 홍천여자고등학교 졸업,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강원중 · 춘천고 어머니회장, 춘천시 학교어머니협의회(초중고) 회장, 춘천시 번영회 이사, 춘천시 교육청 상담자원봉사, 청룡환경여성협의회 강원도지부 회장, 애호협회 강원도지부 운영위원,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 이사,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 통합민주당 · 민주당 중앙위원,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위원장, 국립춘천박물관 운영자문위원, 관광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청정강원실천협의회 위원, 강원도정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위원, 강원도의회 한러국제교류협회 부회장, 제7대 강원도의회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최 원 자 (비례대표)	한림성심대학 지방행정과 졸업, 한림대학교 법학부 재학, 강원도 간호조무사회 진료보조원 대표, 강원도 간호조무사회 공보이사, 춘성군청, 춘천시청 근무,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초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부본부장, 전국공무원노조 춘천지부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춘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춘천여성민우회 회원,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운영위원, 한국간호조무사회 정책위원, 전국 지방여성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회원, 제7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7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江原道議會事務處 幹部

• 사무처장 •
홍 기 업

• 총무담당관 •
신 창 근

• 의사담당관 •
유 명 춘

• 운영예결전문위원 •
홍 원 표

• 기획행정전문위원 •
서 재 명

• 교육사회전문위원 •
함 석 근

• 산업경제전문위원 •
송 재 명

• 관광건설전문위원 •
박 동 헌

• 정책지원전문위원 •
이 계 동

主要議政活動

▲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서(2006. 7. 12.)

▲ 제7대 강원도의회 개원 기념(2006. 7. 12.)

▲ 의장단 수해 지역 방문(2006. 7. 21.)

▲ 도의원 수해 지역 자원봉사(2006. 7. 25.)

▲ 강원관광 서울 홍보(2006. 8. 1.)

▲ 제8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2006. 9. 6.)

▲ 개원 50주년 기념 지방자치 발전 토론회(2006. 12. 14.)

▲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 도의회 방문(2007. 4. 23.)

▲ 중국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도의회 방문(2007. 5. 25.)

▲ 일본 나가노현의회 대표단 도의회 방문(2007. 6. 5.)

▲ 수도권 집중화 반대 1,000만인 서명 운동 (2007. 7. 18.)

▲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전략 토론회 (2007. 9. 12.)

▲ 제7대 전반기 어린이의회(2007. 10. 17.)

▲ 강원 오피니언 리더 정책 워크숍(2007. 10. 25.)

▲ 일본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도의회 방문(2007. 11. 5.)

▲ 2008년 의원 총회(2008. 1. 22.)

▲ 새만금 카지노 설립 반대 성명서 발표(2008. 2. 19.)

▲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도의회 방문(2008. 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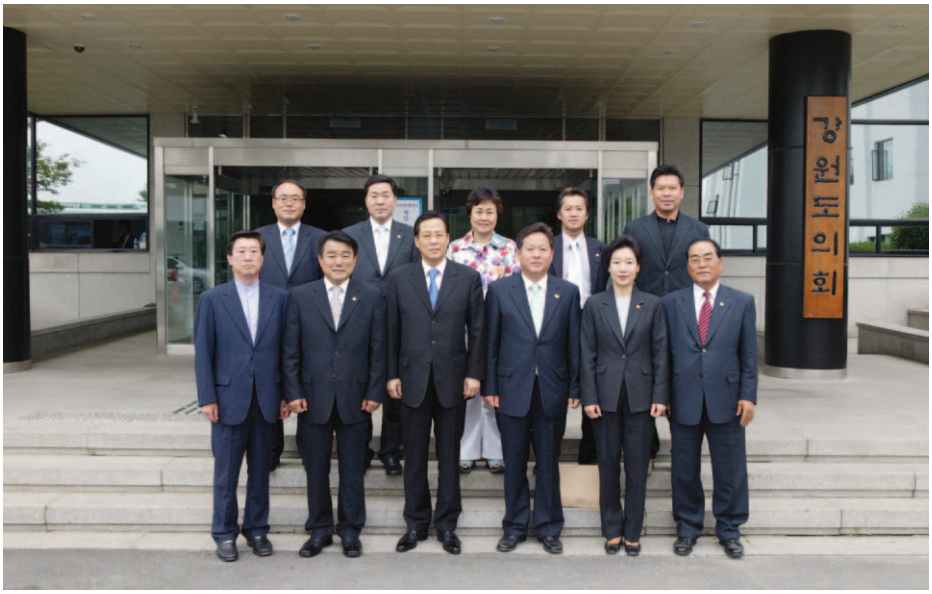
▲ 상지대학교 김성훈 총장 초청 강연회(2008. 4. 17.)

▲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서 발표(2008. 4. 24.)

▲ 강원도의회 지역 순회 의정간담회(2008. 5. 6.)

▲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정기회(2008. 5. 22.)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도의회 방문(2007. 6. 7.)

▲ 제9차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2007. 6. 12.)

▲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정연찬회(2007. 11. 1.)

▲ 의회청사 리모델링계획 보고 청취(2008. 6. 18.)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지 현지 확인(2007. 6. 19.)

▲ 2008년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2008. 1. 10.)

▲ 목조문화재(구룡사) 소방시설 설치 실태 현지 확인(2008. 3. 18.)

▲태안 기름유출사고 현장 자원봉사(2008. 4. 22.)

교 육 사 회 위 원 회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2007. 4. 18.)

▲ 양양 강원영어학습체험장 현지 시찰(2008. 3. 17.)

▲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 (2008. 4. 23.)

▲ 원주시 학교시설 예정부지 현지 확인 (2008. 6. 19.)

산 업 경 제 위 원 회

▲ '08신년 연찬회 및 군납농가 간담회(2008. 1. 24.)

▲ 강원도 우수 기업체(태양3C) 방문(2008. 1. 25.)

▲ 모종이식 봉사활동 (2008. 4. 21.)

▲ 횡성축협 생축장 현지 시찰 (2008. 6. 19.)

관 광 건 설 위 원 회

▲ 2008 신년 연찬회 (2008. 1. 16.)

▲ 화천 산천어축제 현지 확인 (2008. 1. 17.)

▲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 체험(2008. 4. 23.)

▲ 평창 진부 수해복구공사 현지 확인(2008.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 당초예산 예산안 심사(2007. 12. 6.)

▲ 200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2008. 5. 1.)

2014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동계올림픽 유치염원 강원 843km 대장정 출정식(2007. 1. 29.)

▲ 동계올림픽유치 전국 합수 합토 기원제(2007. 3. 27.)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수해지역(평창 진부) 현지 확인(2006. 8. 3.)

▲ 너울파도 피해지역(속초) 현지 확인(2006. 10. 25.)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송전탑 설치 예정 지역(평창 운교리) 현지 확인(2008. 2. 28.)

▲ 송전탑 설치 예정 지역(인제 진동리) 주민 간담회(2008. 2. 29.)

댐 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댐특위 1차 회의 안건 심사(2008. 3. 13.)

▲ 도암댐 현지 방문(2008. 4. 24.)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

▲ 기강연 창립총회 및 기업유치 전략 보고회(2006. 10. 11.)

▲ 2007 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참석(2007. 3. 16.)

민생 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 민생 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창립회의(2007. 3. 13.)

▲ (사)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방문 간담회(2008. 3. 4.)

도민 삶의 질과 중심 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 도 · 중 · 연 창립회의(2007. 4. 12.)

▲ 도 · 중 · 연 연찬회(2007. 12. 21.)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2007. 7. 18 / 대회의실

목 차

제 1 장 개 관 | 11

제1절 강원도의회 연혁 ····· 13

1. 최초의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 13
2. 제1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13
3. 제2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13
4. 제3대 강원도의회 개원 준비 ····· 14
5.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14
6.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14
7.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15
8.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16
9.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16

제2절 의원 선거 ····· 17

1. 개 요 ····· 17
   가. 개 요 ····· 17
   나. 선거 사무 일정표 ····· 17
   다. 선거구 및 의원 정수 ····· 18
2. 의원 선거 ····· 20
   가. 후보자 등록 ····· 20
   나. 선거 결과 ····· 36

제3절 개 원 ····· 39

1. 개원식 ····· 39
2. 기 타 ····· 39

제 4 절 의회 구성 ····· 40
1. 의회 조직 ····· 40
가. 현 황 ····· 40
나. 의원 등록 및 변동 ····· 40
2. 원구성 ····· 40
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 ····· 40
나.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 42
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4

제 5 절 의회사무처 ····· 46
1. 기 구 ····· 46
가. 기구표 ····· 46
나. 사무분장 ····· 47
2. 인 력 ····· 48
가. 정・현원 현황 ····· 48
나. 사무처 간부 ····· 50
3. 의회 청사 ····· 53

제 2 장 의 정 활 동 | 55

제 1 절 의회 운영 총괄 ····· 57
1. 개 황 ····· 57
가. 회기 운영 ····· 57
나. 회기별 주요 사항 ····· 59
2. 회의 운영 현황 ····· 60
가. 회의 개최 ····· 60
나. 회의 출석 현황 ····· 61
다. 의안 처리 현황 ····· 61

3.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61
가. 개 요 ····· 61
나. 회기별 질문 현황 ····· 62
다. 분야별 질문 현황 ····· 62
라. 질문 의원 현황 ····· 63
4. 행정사무감사 ····· 64
가. 개 요 ····· 64
나. 자료 요구 사항 ····· 64
다. 시정 및 처리 요구 현황 ····· 64
5. 각종 의안 처리 현황 ····· 65
가. 의안별 처리 현황 ····· 65
나. 위원회 처리 현황 ····· 66
다. 제안자별 처리 현황 ····· 68

제2절 회기 운영 ····· 70

1. 제168회 임시회 ····· 70
가. 개 회 ····· 70
나. 의사일정 ····· 70
다. 의안 처리 현황 ····· 73
2. 제169회 임시회 ····· 75
가. 개 회 ····· 75
나. 의사일정 ····· 76
다. 의안 처리 현황 ····· 79
3. 제170회 정례회 ····· 81
가. 개 회 ····· 81
나. 의사일정 ····· 81
다. 의안 처리 현황 ····· 85
4. 제171회 정례회 ····· 87
가. 개 회 ····· 87
나. 의사일정 ····· 87
다. 의안 처리 현황 ····· 95

5. 제172회 임시회 ····· 101
가. 개 회 ····· 101
나. 의사일정 ····· 101
다. 의안 처리 현황 ····· 104
6. 제173회 임시회 ····· 105
가. 개 회 ····· 105
나. 의사일정 ····· 105
다. 의안 처리 현황 ····· 107
7. 제174회 임시회 ····· 109
가. 개 회 ····· 109
나. 의사일정 ····· 109
다. 의안 처리 현황 ····· 111
8. 제175회 임시회 ····· 113
가. 개 회 ····· 113
나. 의사일정 ····· 113
다. 의안 처리 현황 ····· 116
9. 제176회 임시회 ····· 118
가. 개 회 ····· 118
나. 의사일정 ····· 118
다. 의안 처리 현황 ····· 120
10. 제177회 정례회 ····· 122
가. 개 회 ····· 122
나. 의사일정 ····· 122
다. 의안 처리 현황 ····· 126
11. 제178회 임시회 ····· 127
가. 개 회 ····· 127
나. 의사일정 ····· 128
다. 의안 처리 현황 ····· 130
12. 제179회 임시회 ····· 133
가. 개 회 ····· 133

나. 의사일정 ····· 133
다. 의안 처리 현황 ····· 136
13. 제180회 정례회 ····· 139
가. 개 회 ····· 139
나. 의사일정 ····· 140
다. 의안 처리 현황 ····· 147
14. 제181회 임시회 ····· 154
가. 개 회 ····· 154
나. 의사일정 ····· 154
다. 의안 처리 현황 ····· 157
15. 제182회 임시회 ····· 160
가. 개 회 ····· 160
나. 의사일정 ····· 161
다. 의안 처리 현황 ····· 163
16. 제183회 임시회 ····· 165
가. 개 회 ····· 165
나. 의사일정 ····· 165
다. 의안 처리 현황 ····· 167
17. 제184회 임시회 ····· 168
가. 개 회 ····· 168
나. 의사일정 ····· 169
다. 의안 처리 현황 ····· 173
18. 제185회 임시회 ····· 176
가. 개 회 ····· 176
나. 의사일정 ····· 177
다. 의안 처리 현황 ····· 179
19. 현지 활동 ····· 180
가. 목 적 ····· 180
나. 현 황 ····· 180
다. 위원회별 현황 ····· 182

20. 5분 자유발언 ····· 189
가. 근거 및 내용 ····· 189
나. 운영 실적 ····· 189
다. 연도별 발언 의원 현황 ····· 190
21. 서면질문 ····· 191
가. 근거 및 내용 ····· 191
나. 운영 실적 ····· 191

제 3 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192

1. 제170회 정례회 ····· 192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192
1) 김영칠 의원 / 192 2) 심재영 의원 / 194
3) 김동자 의원 / 197 4) 남경문 의원 / 201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205
1) 정을권 의원 / 205 2) 김대천 의원 / 211
3) 황 철 의원 / 214 4) 이성기 의원 / 220
다. 제4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224
1) 김동일 의원 / 224 2) 최경순 의원 / 229 3) 서동철 의원 / 234
2. 제173회 임시회 ····· 246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246
1) 이준연 의원 / 246 2) 홍건표 의원 / 265
3) 임용식 의원 / 284 4) 최원자 의원 / 296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305
1) 유순임 의원 / 305 2) 권석주 의원 / 315
3) 서동철 의원 / 324 4) 조영기 의원 / 334
3. 제179회 임시회 ····· 339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339
1) 정을권 의원 / 339 2) 서동철 의원 / 355 3) 홍건표 의원 / 366
4) 남경문 의원 / 385 5) 진기엽 의원 / 389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393
1) 최원자 의원 / 393 2) 황 철 의원 / 406 3) 정을권 의원 / 409

4. 제182회 임시회 ····· 418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418
1) 임용식 의원 / 418 2) 김기남 의원 / 425 3) 박명서 의원 / 433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437
1) 조영기 의원 / 437 2) 김동일 의원 / 447 3) 김대천 의원 / 451
5. 제185회 임시회 ····· 456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456
1) 이병선 의원 / 456 2) 김시성 의원 / 462
3) 김동일 의원 / 465 4) 권순일 의원 / 468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 471
1) 이영덕 의원 / 471 2) 남경문 의원 / 472 3) 김양호 의원 / 475

제 4 절 행정사무감사 ····· 478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478
가. 개 요 ····· 478
나. 자료 제출 요구 ····· 478
다. 감사 일정 ····· 480
라. 감사 결과 ····· 480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543
가. 개 요 ····· 543
나. 자료 제출 요구 ····· 543
다. 감사 일정 ····· 544
라. 감사 결과 ····· 545

제 5 절 진정 및 청원 처리 ····· 624

1. 진정 처리 ····· 624
가. 총 괄 ····· 624
나. 접수 현황 ····· 624
다. 처리 현황 ····· 624
라. 처리 결과 ····· 625
2. 진정 목록 및 처리 현황 ····· 625
3. 청원 처리 ····· 632

제 3 장 연찬회 · 교류 · 행사 | 633

제 1 절 연찬회, 간담회 등 ····· 635

1. 도의원 연찬회 ····· 635
   가. 2006년도 의정 연찬회 ····· 635
   나. 2007년도 의정 연찬회 ····· 635
2. 의원 총회 ····· 636
   가. 2007년도 의원 총회 ····· 636
   나. 2008년도 의원 총회 ····· 636
3.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 637
   가. 2006년도 연찬회 ····· 637
   나. 2007년도 연찬회 ····· 637
4.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 ····· 637
   가. 2006년 하반기 연찬회 ····· 637
   나. 2007년 하반기 연찬회 ····· 638
   다. 2008년 상반기 연찬회 ····· 638
5. 교육사회위원회 연찬회 ····· 639
   가. 2006년 하반기 연찬회 ····· 639
   나. 2007년도 연찬회 ····· 639
6. 산업경제위원회 연찬회 ····· 639
   가. 2006년도 연찬회 ····· 639
   나. 2007년 하반기 연찬회 ····· 640
   다. 2008년 상반기 연찬회 ····· 640
7. 관광건설위원회 연찬회 ····· 641
   가. 2006년 하계 연찬회 ····· 641
   나. 2007년 하계 연찬회 ····· 641
   다. 2008년 신년 연찬회 ····· 641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 642
   가. 2006년도 연찬회 ····· 642
   나. 2007년도 연찬회 ····· 642

다. 2008년 상반기 연찬회 ····· 643
9. 특별위원회 활동 ····· 643
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643
나.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644
다.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645
라. 댐 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646
10. 의원연구회 활동 ····· 646
가.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 ····· 646
나. 민생 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 647
다. 도민 삶의 질과 중심 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 648

제 2 절 국제 교류 활동 ····· 649

1. 강원도의회 해외 방문 ····· 649
가. 도의회 대표단 일본 미야기현의회 방문 ····· 649
나. 도의회 대표단 중국 방문 ····· 649
다. 도의회 대표단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 650
라. 도의회 대표단 중국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 650
마. 도의회 대표단 러시아 연해주의회 방문 ····· 650
2. 외국의회 등 강원도의회 방문 ····· 651
가. 일본 토야마현의회 대표단 ····· 651
나.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651
다. 중국 지린성 정치협상위원회 대표단 ····· 651
라.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 ····· 652
마. 중국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652
바. 일본 나가노현의회 대표단 ····· 652
사. 중국 지린성 정치협상위원회 대표단 ····· 652
아. 일본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 652
자.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653
차. 일본 돗토리현의회 의장 일행 ····· 653
카. 필리핀 세부주지사 일행 ····· 653

타.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653
파. 일본 돗토리현 교육장 일행 ····· 653
하. 중국 길림일보사 대표단 ····· 654
3. 해외 연수 ····· 654
가. 기획행정위원회 ····· 654
나. 교육사회위원회 ····· 657
다. 산업경제위원회 ····· 661
라. 관광건설위원회 ····· 664

제 3 절 협의회 · 행사 ····· 668

1. 전국 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 668
가. 협의회 연혁 및 현황 ····· 668
나. 정책위원회 ····· 669
다. 협의회 사무처 ····· 670
라.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 670
마. 정책위원회 운영 ····· 673
2.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 674
가. 구 성 ····· 674
나. 기 능 ····· 674
다. 운영 현황 ····· 675
3. 강원자치봉사대상 ····· 680
가. 제정 의의 ····· 680
나. 시상 내용 ····· 680
다. 수상자 현황 ····· 680
4. 강원 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 681
가. 의 의 ····· 681
나. 2006년도 ····· 681
다. 2007년도(제6회 대회, 강릉) ····· 681

제 1 장

개 관

제1절

강원도의회 연혁

1. 최초의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1952년 5월 10일 실시된 최초의 도의회 의원 선거 시 본도에서는 시국의 불안정과 6·25사변으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제1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1956년 8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 2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시·군별로 보면 춘천시 1, 원주시 2, 강릉시 1, 춘성군 2, 홍천군 3, 횡성군 2, 원성군 1, 영월군 2, 평창군 2, 정선군 1, 명주군 3, 삼척군 3명과 현재의 경북 울진군에서 2명이었다.

1956년 9월 6일 제1회 임시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3. 제2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1960년 12월 12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 2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시·군별로 보면 춘천시 2, 원주시 2, 강릉시 2, 춘성군 2, 홍천군 2, 횡성군 2, 원주군 2, 영월군 2, 평창군 2, 정선군 2, 명주군 2, 삼척군 4명과 현재의 경북 울진군에서 2명이었다.

1960년 12월 21일 제22회 임시회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 제3대 강원도의회 개원 준비

○ 의회 청사 신축 준공 : 현재의 청사는 1989년 7월 31일 착공하여 1990년 10월 30일 준공하였다.

○ 의회준비단 발족 : 1991년 2월 1일 강원도 내무국 지방과에 3명의 인원으로 의회 설치를 위한 준비단을 발족하였다.

5.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도의회 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 도내 22개 시·군에서 54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도의회 원구성

- 전반기

1991년 7월 8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후반기

1993년 7월 6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명칭 일부 변경

1995년 5월 9일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건설위원회”를 “건설방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시행은 1995년 6월 27일부터 이다.

6.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도의회 의원 선거

-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도지사, 시장·군수, 시·군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되었으며 18개 시·군 52개 선거구에서 총156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52명의 의원과 이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6명 등 총 5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도의회 원구성

- 전반기

1995년 7월 13일 제63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방재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후반기

1997년 1월 9일 제78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명칭 일부 변경

1996년 7월 22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건설방재위원회”를 “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그 시행일은 1996년 8월 8일부터이다.

7.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도의회 의원 선거

-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18개 시·군 42개 선거구에서 총104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42명의 의원과 이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5명 등 총 47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도의회 원구성

- 전반기

1998년 7월 13일 제92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후반기

2000년 7월 11일 제112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8.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도의회 의원 선거

-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18개 시·군 39개 선거구에서 총 103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39명의 의원과 이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4명 등 총 43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도의회 원구성

- 전반기

  2002년 7월 15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후반기

  2004년 7월 15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9.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및 원구성

○ 도의회 의원 선거

-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18개 시·군 36개 선거구에서 총 112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36명의 의원과 이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 4명 등 총 4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도의회 원구성

- 전반기

  2006년 7월 12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 2 절

의원 선거[1)]

1. 개 요

가. 개 요

○ 제7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선거일)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5월 31일 실시되어 총 36개의 선거구에서 36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하여 총 4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 선거인 수는 총 660개 투표구에서 574,978세대 1,509,405명 중 76.9%인 1,160,977명이며 투표인 수는 선거인 수의 58.7%인 681,63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 투표결과는 무효 16,630표를 제외한 664,978표가 유효표로 확정되었으며 정당별 득표결과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198,410표, 한나라당 342,969표, 민주노동당이 6,633표를 얻었고 무소속은 116,966표를 얻었다.

나. 선거 사무 일정표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2005.12.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1. 21.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1. 3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 · 도지사선거)
3. 2.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 · 리 ·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3. 2.부터 5. 31.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3.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기타 지방선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정보 조회 시스템(http://www.nec.go.kr:7070/dextern)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4. 1.부터 5. 31.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4. 1.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
5. 12.부터 5. 1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5. 16.부터 5. 1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5. 20.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선거 공보 제출
5. 22.까지	선전벽보 첩부, 부재자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선거공보 동봉)
5. 23.까지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5. 24.	선거인명부 확정
5. 26.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선거공보 동봉), 개표소 공고
5. 31.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6. 10.까지(6.12.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6. 30.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수입·지출보고서 제출
7. 30.까지(7.28.까지)	선거비용 보전

다.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시군별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선거구수	의원정수
계			36	40
춘천시	제1선거구	신북읍, 동면, 동산면, 북산면, 동내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신사우동	2	2
	제2선거구	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퇴계동, 강남동		
원주시	제1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	2	2
	제2선거구	소초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행구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강릉시	제1선거구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2	2
	제2선거구	주문진읍, 사천면, 연곡면,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경포동		

시군별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선거구수	의원정수
동해시	제1선거구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삼화동	2	2
	제2선거구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태백시	제1선거구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2	2
	제2선거구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속초시	제1선거구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2	2
	제2선거구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삼척시	제1선거구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2	2
	제2선거구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교동, 정라동		
홍천군	제1선거구	홍천읍, 북방면	2	2
	제2선거구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내면		
횡성군	제1선거구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2	2
	제2선거구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영월군	제1선거구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2	2
	제2선거구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평창군	제1선거구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2	2
	제2선거구	봉평면, 용편면, 진부면, 도암면		
정선군	제1선거구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2	2
	제2선거구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철원군	제1선거구	철원읍, 동송읍	2	2
	제2선거구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화천군	제1선거구	화천읍, 간동면	2	2
	제2선거구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군	제1선거구	양구읍	2	2
	제2선거구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인제군	제1선거구	인제읍, 북면, 서화면	2	2
	제2선거구	남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	제1선거구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2	2
	제2선거구	거진읍, 현내면		
양양군	제1선거구	양양읍, 서면, 강현면	2	2
	제2선거구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비례대표		강원도 일원		4

※ 근거 : 「공직선거법」 제26조①에 의한 별표 2 시 · 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2. 의원 선거

가. 후보자 등록

1) 등록 현황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2006년 5월 16일~5월 17일) 총 112명이 등록하였으며, 후보자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정당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비 고
112 (7)	32 (2)	36 (3)	3 (2)	41	( )은 비례대표

나) 직업별

계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공·광업	수산업	건설업	금융업	회사원	교육자	공무원	무직	기타
112 (7)	32 (3)	19	18	0	2	3	1	2	1 (1)	1	7 (1)	25 (2)

다) 학력별

계	미기재	초졸	중졸	고퇴	고졸	대재	대퇴	대학교 수료	대 졸	대학원 재	대학원 수료	대학원 졸
112 (7)	1	4	4	2	30 (3)	12 (1)	4	1	25 (3)	10	1	18

라) 연령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112 (7)	109 (1)	3 (6)	0	11 (1)	52 (2)	33 (3)	16	0 (1)

2) 후보자 명부

가) 지역구

○ 춘천시(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비고
춘천시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정 한 (鄭 한)	남	'59.04.14.	동내면 거두리 부영아파트 203-101	국회의원 보좌관	강원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현)국회의원 보좌관	13,214 (25.38)	
	2	한나라당	황 철 (黃 哲)	남	'56.10.22.	후평 3동 금호빌리지 13- 101	회사원	강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1학기 재학 (석사과정)	*제6대 춘천시 의원 (운영위원장) *춘천YMCA 이사	25,521 (49.02)	당선
	6	무소속	유호순 (柳浩順)	여	'54.02.15.	후평1동 742-19 5통6반	무직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초등학교교사 *강원도의회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13,317 (25.58)	
춘천시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강청룡 (姜淸龍)	남	'60.12.27.	근화동 800-1 21통 4반	정당인	강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언론정보전공 2학기 휴학 중 (석사과정)	*춘천시의회 제5, 제6대 의원 *춘천시 생활체육 협의회 이사	14,085 (28.44)	
	2	한나라당	백선열 (白善烈)	남	'60.05.05.	근화동 788-8 1통 4반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학기 휴학 (박사과정)	*춘천시의원 *소양야간중고등학교 교장	25,135 (50.76)	당선
	4	민주 노동당	오용남 (吳龍南)	남	'52.07.22.	퇴계동 주공2차@ 211- 904	보험 설계사	강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졸업	*봉의한울회 부회장 *황해도 청년회 강원지부 감사	4,686 (9.46)	
	6	무소속	민성숙 (閔成淑)	여	'63.02.28.	운교동 41-3 8통 6반	음악 학원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졸업 (교육학 석사)	전)중등교사 현)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강사 (교육학 석사)	5,609 (11.32)	

○ 원주시(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원주시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이종근 (李鍾根)	남	'54.09.25.	일산동 244-5 (4/7)	건축사	한라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전) 제5대 강원도 의회 의원 현)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예당대표	18,876 (36.77)	
	2	한나라당	김대천 (金大天)	남	'67.12.13.	태장2동 주공아파트 206-805	국회의원 보좌관	충북대학교 졸업	* 국회의원 보좌관 * 정치부 기자	32,453 (63.22)	당선
원주시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곽도영 (郭度榮)	남	'63.04.21.	명륜1동 성원아파트 103-305	자영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전)상지대학교총학생 회장 현)강원개혁정책 연구소 이사	16,648 (31.53)	
	2	한나라당	이인섭 (李寅燮)	남	'63.07.20.	명륜1동 현대1차@ 101-503	강원도의회 의원	상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 강원도의회 기획 행정위원장 * 행정학박사	36,142 (68.46)	당선

○ 강릉시(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강릉시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김흥기 (金興起)	남	'64.12.26.	노암동 342	자영업 (명주 방앗간)	서강대학교 2년 중퇴	*참여정치실천연대 균형발전위원장 *열린우리당 강릉 시당협 정책위원	9,245 (19.60)	
	2	한나라당	최재규 (崔在圭)	남	'60.08.15.	노암동 294-1	강원도의회 의원	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재학 (제5학기)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 *(사)한국소기업소상 공인연합회 강릉지 회장	31,038 (65.81)	당선
	6	무소속	권혁돈 (權赫燉)	남	'50.04.03.	노암동 181-24	무직	강릉농공고등 학교 졸업	*강릉시의회 '06년 전반기 의장 *평화통일자문회의 강릉시 협의회장 역임	6,873 (14.57)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강릉시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김용배 (金龍培)	남	'60.03.15.	옥천동 78-4	강릉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국회입법보좌관 *강릉자활후견기관장	6,487 (14.94)	
	2	한나라당	박호창 (朴浩彰)	남	'60.03.18.	교동 1035-1번지 강릉빌라트 901호	건축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삼척대,강릉영동대 외래교수 역임 *(현)박호창건축사 사무소 대표	20,920 (48.19)	당선
	6	무소속	김원덕 (金元德)	남	'59.06.08.	교동 1220-7	무직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전 국회정책연구위원(2급상당)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	6,333 (14.59)	
	7	무소속	이훈 (李勳)	남	'45.11.11.	교2동 18-16 대림아파트 703호	강원도의회 의원	관동대학교 경상대학 상학과 졸업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부의장	4,527 (10.42)	

○ 동해시(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동해시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김진연 (金鎭沇)	남	'50.12.26.	효가동 462-5 (5통 6반)	정당인	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	*북삼동 번영회장 *전국자연보호 강원본부장	8,337 (29.35)	
	2	한나라당	이성기 (李成基)	남	'41.05.15.	송정동 842 (5통 6반)	정당인	경희대학교(영문학과1년 중퇴 1960.4.11. - 1961.2.28)	*동해시의회 의원, 의장 (전) *한나라당 동해시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15,306 (53.88)	당선
	6	무소속	이영우 (李永雨)	남	'52.11.10.	천곡동 한양2차@ 23-201	무직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부 도시방재(박사 과정3학기) 재학	*강원은행 동해지점장 *강원일보 동해지사장	4,761 (16.76)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동해시 제2선거구	1	열린우리당	김형원(金亨元)	남	'62.12.26.	부곡동 73-5 강경2차 205호 9/5	동부생명 동해지점 부지점장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자치분권동해연대 공동대표 *묵호초등총동문회 사무국장	4,442(32.73)	
	2	한나라당	권순일(權純逸)	남	'58.01.12.	발한동 16-34 (8통 4반)	자영업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동해시의회 의원 3선(2대,3대,4대) *동해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9,128(67.26)	당선

○ 태백시(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태백시 제1선거구	2	한나라당	심재영(沈在榮)	남	'47.01.04.	상장동 131-2 (6통4반)	동운양행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초대 태백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태백, 정선 지구당 사무국장	7,974(46.56)	당선
	6	무소속	김진필(金振必)	남	'50.03.24.	황지동 253-82	태백방역공사 대표	북평고등학교 졸업	*청소년지도위원장(전) *태백시번영회장(현)	4,847(28.30)	
	7	무소속	이상출(李相黜)	남	'58.04.10.	화전동 사랑의 집 가 - 102	제일화재 아가피아 대리점 대표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석사)	*태백시의회 의원(2대) *강원관광대학 강사(현)	4,302(25.12)	
태백시 제2선거구	1	열린우리당	손석암(孫石岩)	남	'46.03.15.	문곡동 광원아파트204-206	서진기업 대표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위원장(전) *제5대 강원도의원(전)	3,949(39.17)	
	2	한나라당	김연식(金鍊寔)	남	'68.03.09.	장성동 133-1 홍익베스트빌 101-1504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대변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2학기 (재)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대변인, 정책자문위원(현)	3,951(39.19)	당선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태백시 제 2 선거구	4	민주노동당	양기현(梁奇鉉)	남	'66.06.16.	소도동 19 한솔아파트 1-309	노동자	한일신학대학교 신학과 4학년 1학기 제적	*함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대의원	752 (7.46)	
	6	무소속	홍성욱(洪性郁)	남	'59.01.22.	구문소동 국민주택 30호(6/5)	태백산흑염소영농조합 대표이사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4년 졸업	*태백시의회의원(전) *태백산흑염소영농조합 대표이사(현)	1,428 (14.16)	

○ 속초시(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속초시 제 1 선거구	1	열린우리당	송흥교(宋興敎)	남	'61.07.20.	조양동 1448 (1/2)	신창수산 대표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1년 재학	*NGO환경보호운동 속초지회 사무국장 *대통령자문 민주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3,965 (25.94)	
	2	한나라당	이병선(李秉宣)	남	'63.02.10.	교동 동부아파트 107-1906	강원도의회 의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졸업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11,317 (74.05)	당선
속초시 제 2 선거구	1	열린우리당	최종현(崔宗炫)	남	'72.07.29.	조양동 부영아파트 분산상가 -202호	설악미래리서치 대표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3학년 재학	*동우대학 제12대 총학생회장 *15.16대 국회의원 비서, 정책보좌관	6,384 (35.48)	
	2	한나라당	김시성(金是晟)	남	'63.12.15.	조양동 부영아파트 603-1009	정당인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속초시생활체육협의회 선임이사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4급)	11,607 (64.51)	당선

○ 삼척시(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삼척시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최병헌 (崔秉憲)	남	'67.04.10.	도계읍 도계1리 3반 348-4번지	튼튼 유치원 이사장	퍼시픽 예일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중 (5학기)	*한국웅변인협회 강원도회장 *삼척시 유치원 연합회 회장	4,344 (21.58)	
	2	한나라당	김양호 (金良鎬)	남	'61.12.01.	원당동 117번지 한양아파트 103동 1005호	정당인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삼척시비서실장(전) *민자당 삼척시 지구당 청년부장(전)	8,830 (43.88)	당선
	6	무소속	정연철 (鄭然喆)	남	'67.07.05.	남양동 293-8번지 16통 1반	대학원생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5학기 재학	*삼척대학교 총학생회장(제2대) *전)한나라당 동해, 삼척 지구당 조직부장	6,949 (34.53)	
삼척시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박재순 (朴載淳)	남	'62.11.10.	가곡면 탕곡리 462-1	가든 주유소 대표	삼척대학교 행정학과 4년 휴학	*가곡면 번영회장(현) *원덕청년회의소 회장	3,139 (16.98)	
	2	한나라당	박상수 (朴相洙)	남	'57.07.11.	정상동 457-3 석미아파트 104- 605	정당인	강원대(삼척캠퍼스)소방방제기술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현)강원도의원 *삼척시축구협회장	8,735 (47.26)	당선
	6	무소속	김경명 (金京明)	남	'40.12.27.	정상동 147 3통 1반	수산업	덕신초등학교 졸업	*민족통일 삼척시 협의회 부회장 *동해·삼척 한나라당 부위원장	1,737 (9.39)	
	7	무소속	김동열 (金東烈)	남	'55.09.09.	근덕면 궁촌리 456번지 2반	농업	삼척대학교 (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학과 2년 수료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	4,870 (26.35)	

○ 홍천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홍천군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윤종석 (尹鍾碩)	남	'71.06.01.	홍천읍 연봉3리 2반 187-4	연구원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강사(현) *국회의원 정대철 보좌관	5,212 (32.36)	
	2	한나라당	이명열 (李明烈)	남	'47.04.06.	홍천읍 희망7리 332-7	자영업	홍천농업고등학교 2년 중퇴	*3,4대 홍천군의원 *새마을운동 홍천군지회장	7,041 (43.72)	당선
	6	무소속	김영진 (金英眞)	남	'55.02.05.	북방면 상화계리 90	공인 중개사	화계초등학교 졸업	*홍천농협 감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홍천지회장	910 (5.65)	
	7	무소속	김원종 (金元鍾)	남	'41.02.06.	홍천읍 신장대리 2-8 한서연립 206호	농업	중앙대학교 4년 수료	*홍천군 2,3,4대 의원, 의장 *홍천군 동면, 북방면 면장	2,940 (18.25)	
홍천군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이성기 (李城基)	남	'54.08.22.	동면 좌운리 850번지	농업	양동고등학교 졸업	*동면농업협동 조합장 *농촌지도자 홍천군 연합회장	4,695 (27.88)	
	2	한나라당	김기남 (金箕男)	남	'43.05.03.	내면 창촌리 1588-19 (2/1)	강원도의회 의원	춘천대학 (현 강원대학교) 상학과 4년 졸업	*새마을운동 홍천군지회장(현)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현)	8,599 (51.08)	당선
	6	무소속	김창휘 (金昌輝)	남	'43.02.15.	내면 광원리 1495	농업	강릉상업고등학교 졸업	*홍천군 재무과장 *제4대 홍천군의회 의원	2,102 (12.48)	
	7	무소속	김희태 (金喜泰)	남	'62.10.20.	남면 화전리 3 (1/1)	공인 중개사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국방부 군무사무관 (예비군 지휘관) *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부지부장	1,438 (8.54)	

○ 횡성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횡성군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이관형 (李官炯)	남	'65.08.13.	횡성읍 북천리 중앙A 6-508	행정사 이관형 사무소장	상지영서대학 행정과 졸업 (행정전문학사)	*제13,14,15대 국회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민원국장	3,800 (29.48)	
	2	한나라당	진기엽 (陳起燁)	남	'67.11.02.	횡성읍 북 천리 원영 하이츠빌라 C/502	정당인	강원대학교 인문대학독어 독문학과 졸업	*(현)한나라당 횡성군청년위원장 *(전)미래연대 횡성군지회장	4,802 (37.26)	당선
	6	무소속	백기운 (白起雲)	남	'55.03.23.	횡성읍 읍상3리 3반 310-5번지	정치인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5학기 재학	*전)횡성군농업기술 센터 *현)횡성군종합사회 복지관 자문협력위원	1,692 (13.13)	
	7	무소속	정호원 (鄭鎬元)	남	'47.10.05.	횡성읍 읍상리 288-33	무직	횡성실업고등 학교 졸업(현 횡성고등학교)	*전)횡성읍장 *전)횡성군 기획 감사실장	2,592 (20.11)	
횡성군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김용식 (金龍植)	남	'56.09.15.	우천면 양적리 249번지	농업	상지영서대학 1년 재학	*전)횡성군 이장협 의회장 *현)횡성군 농촌지 도자연합회장	4,007 (37.74)	
	2	한나라당	박명서 (朴明緖)	남	'59.09.24.	둔내면 자포곡1리 415(1/3)	농업	상지대학 자원학과 졸업	*전)횡성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 *전)11기민주평화 통일횡성군협의회 회장	6,609 (62.25)	당선

○ 영월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영월군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고진국 (高鎭國)	남	'52.09.21.	중동면 녹전리 797	상업	세경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1년)	*농협근무 16년(전) *영월군의회 1대 부의장, 2대 의장(전)	5,907 (42.55)	당선
	2	한나라당	김종훈 (金鍾勳)	남	'39.06.02.	영월읍 영흥리 840-1번지	영월군산 림조합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영월군산림 조합장 *(현)강원도의회 의원	4,767 (34.34)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영월군 제 1 선거구	6	무소속	김광은 (金光銀)	남	'65.04.26.	영월읍 영흥리 1013-19 (1/1)	회사원	강원대학교 2년 재학 중	*영월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현) *2002년 강원도 의원 출마	3,207 (23.10)	
영월군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엄기만 (嚴基滿)	남	'49.03.19.	서면 쌍용리 609-4(5/2)	영월비료 영농조합 대표이사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현)쌍룡주민협의회장 *(현)영월비료대표이사	3,632 (43.42)	
	2	한나라당	권석주 (權奭周)	남	'47.11.29.	주천면 주천리 98 (6/1)	정당인	주천농업고등학교 졸업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4,731 (56.57)	당선

○ 평창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평창군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지광천 (池光天)	남	'62.01.10.	평창읍 천변리 38-1번지	상업	평창종합고등학교 졸업	*바르게살기운동 평창읍위원회 위원장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축구연합회 부회장	4,264 (39.28)	
	2	한나라당	이영덕 (李永德)	남	'46.03.04.	평창읍 하6리 189	농업	평창농업고등학교 졸업	*평창군청 민원봉사실장 (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5,619 (51.76)	당선
	6	무소속	이종준 (李鐘準)	남	'69.02.21.	미탄면 창리 877번지	운수업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동강순찰구조대장 *해병대평창군전우회 미탄면사무장	971 (8.94)	
평창군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허해성 (許海成)	남	'51.06.20.	진부면 하진부6리 시대아파트 1106호	무직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평창군 환경복지과장(전) *진부.봉평.미탄면장(전)	4,681 (38.84)	
	2	한나라당	이준연 (李俊淵)	남	'59.05.23.	도암면 횡계6리 366-8번지 강산아파트 603호	강원도의회 의원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졸업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2014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부위원장	6,072 (50.38)	당선
	6	무소속	신남선 (辛南善)	남	'66.03.17.	봉평면 원길리 199-1번지	무직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졸업	*봉평중,고 총동창회 부회장 (전) *현)봉평고운영위원장	1,298 (10.77)	

○ 정선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정선군 제1선거구	1	열린우리당	조현주(趙鉉柱)	남	'47.07.30.	정선읍 봉양9리 48-12번지	산림농업	정선농업고등학교(현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졸업	*지방공무원 37년 *지방농업서기관 명퇴	5,352(39.47)	
	2	한나라당	홍건표(洪健杓)	남	'48.05.04.	정선읍 봉양리 192(3/5)	행정사	정선중학교 졸업	*지방공무원33년	7,207(53.15)	당선
	6	무소속	장석호(張碩鎬)	남	'43.04.16.	임계면 덕암리 158	농업	하장초등학교 졸업	*정선군산림조합 대의원 *정선군축협이사	999(7.36)	
정선군 제2선거구	1	열린우리당	김진복(金鎭福)	남	'60.12.29.	고한읍 고한10리 청운서점	자영업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2학년 재학(환경방재공학과)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사북중,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3,957(35.74)	
	2	한나라당	남경문(南景文)	남	'62.06.15.	사북읍 사북리 344-3	경영인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토목공학과 4학년 재학 중	*강원남부주민(주) 대표이사 *정선고원관광레저개발주민(주) 대표이사	4,617(41.70)	당선
	4	민주노동당	심영규(沈泳奎)	남	'59.12.10.	신동읍 가사리 186번지	농업	함백종합고등학교 졸업	*민주노동당 강원도 농민위원장 *예미농협 감사	1,195(10.79)	
	6	무소속	김재석(金在錫)	남	'45.04.25.	신동읍 조동리 216-1	건설업	원주 대성고등학교 1학년 중퇴	*정선군의회 초대 부의장 *전국광산 노동조합 총연맹 상임부위원장	1,302(11.76)	

○ 철원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철원군 제1선거구	1	열린우리당	이주섭(李柱燮)	남	'66.09.18.	동송읍 오덕리 261-5(5/2)	정당인(열린우리당)	외국어대 대학원 철학과 2학기 중퇴	*강원도민일보 사회부 기자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부대변인	1,591(14.50)	
	2	한나라당	전명자(全明子)	여	'58.05.30.	동송읍 이평리 733-7(2/5)	정당인(한나라당)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전공:장애아 통합 교육)	*철원군발전연구소장 *한나라당 철원군 여성지회장	4,246(38.69)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철원군 제 1 선거구	6	무소속	김동일 (金東日)	남	'63.12.25.	철원읍 대마리 157-18(1/3)	강원도의회 의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부 1년 재학	*현)강원도의회 의원 *철원군이장협의회 회장 역임	5,135 (46.80)	당선
철원군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한금석 (韓金錫)	남	'57.05.18.	근남면 육단리 200 번지 (2/4)	농축업	근남초등학교 졸업	*철원군의회 3,4대 의원 *철원군의회 4대 후반기 의장	3,772 (28.03)	
	2	한나라당	김영칠 (金榮七)	남	'47.03.17.	갈말읍 신철원리 성우아트 빌라-306	정당인	김화중학교 졸업	*강원도청 지역지원과장 *철원군 부군수	4,427 (32.90)	당선
	6	무소속	김춘만 (金春萬)	남	'52.09.18.	갈말읍 신철원리 551-19(2/2)	공인 중개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자치행정전공) 졸업	*강원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철원로타리클럽회장	2,133 (15.85)	
	7	무소속	엄기호 (嚴基昊)	남	'60.02.16.	갈말읍 군탄리 1305-49(2/3)	법무사	신철원고등학교 졸업	*법원공무원 *철원군학교운영 위원장협의회장	3,122 (23.20)	

○ 화천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화천군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최광선 (崔光善)	남	'50.11.19.	간동면 오음리 610	농업	한국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부 3년 재학	*농업경영인 화천군회장 역임 *화천군의회 의원 (제4대)	1,241 (19.84)	
	2	한나라당	장세국 (張世國)	남	'46.07.24.	화천읍 아리 239-2(4/1)	정당인	화천실업고등학교 졸업	*전)화천군농업기술센타소장 *현)화천군 재향군인회장	2,561 (40.94)	당선
	6	무소속	김수철 (金秀哲)	남	'57.02.21.	화천읍 아리 낙원@ A동 701호	강원도의회 의원	한림성심대학. 지방행정과 졸업	강원도의회 의원(현) 향토문화연구소장(현)	2,452 (39.20)	
화천군 제 2 선거구	2	한나라당	정충수 (鄭忠洙)	남	'52.12.29.	상서면 구운리 315-1	강원도의회 의원	화천중학교 졸업	새마을화천군지회장 (현) 강원도의회의원(현)	4,414 (68.33)	당선
	6	무소속	한만호 (韓萬鎬)	남	'43.05.08.	하남면 원천리 27-2번지	농업	화천실업고등학교 졸업	*사내면장(직대)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	2,045 (31.66)	

○ 양구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양구군 제1 선거구	2	한나라당	이기찬 (李基璨)	남	'71.04.24.	양구읍 상리 129-3번지 12/3	정당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3년 중퇴	*한림성심대 총동문회장(현) *양구군 공무원	2,890 (45.47)	당선
	6	무소속	이종대 (李鍾大)	남	'54.03.30.	양구읍 상5리 199-12번지	행정사	양구종합고등학교 졸업	*한나라당 양구연락소장 *국회의원 박세환 비서관(국회)	1,228 (19.32)	
	7	무소속	최규화 (崔圭和)	남	'59.12.20.	양구읍 상3리 382-2 신태양빌라 401호	강원도의회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현)강원도의회 의원 *양구군의회 2대, 3대 의원 역임	2,237 (35.20)	
양구군 제2 선거구	2	한나라당	조영기 (趙榮基)	남	'60.07.20.	남면 창리 2리 1반	농업	한림성심대학 문화컨텐츠 개발과 2년 재학	*양구군청 군수 비서실장 *양구군생활체육 협의회 사무국장	2,550 (46.67)	당선
	6	무소속	박수근 (朴秀根)	남	'42.12.21.	방산면 장평리 235-2	농업	내촌중학교 졸업	강원도의회 의원	1,556 (28.48)	
	7	무소속	오흥구 (吳興九)	남	'57.02.22.	남면 창1리 2반 901	상업	양구종합고등학교 졸업	*양구군 청년회장 *양구군의회 1,3,4대 의원	1,357 (24.83)	

○ 인제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인제군 제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최태선 (崔泰善)	남	'55.03.01.	북면 원통리 55-18(5/2)	상업	인제농업고등학교 졸업	*원통상우회 회장 *인제농협근무 15년	3,183 (27.33)	
	2	한나라당	이기순 (李基淳)	남	'53.12.20.	인제읍 상동리 내설악@ 102- 803	강원도의회 의원	인제농업고등학교 졸업	*인제군번영회장 *강원도의회 부의장	6,800 (58.40)	당선
	6	무소속	권용재 (權容載)	남	'66.02.22.	인제읍 상동4리 427-1	하늘내린 농특산물 판매장 대표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조선일보 인제기린 지국장 *인제군농특산물 전시판매장장	1,660 (14.25)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인제군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천인석 (千寅石)	남	'64.05.11.	기린면 현4리 2반 482-3	자유 총연맹 사무국장	관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인제군자율방범 연합대장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청년협의회장	1,574 (25.68)	
	2	한나라당	정을권 (丁乙權)	남	'60.07.08.	기린면 현리 636번지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제3학기 재학	*제6대 강원도의원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2,807 (45.80)	당선
	6	무소속	최병기 (崔丙基)	남	'61.07.16.	남면 신남리 394(1/2)	농산물 판매	홍천농업고등학교 졸업	*신남1리 새마을 지도자 및 이장 *인제군 축구연합회 회장	951 (15.51)	
	7	무소속	한상철 (韓相哲)	남	'59.12.25.	기린면 현리 652-5(2/1)	상업	동대문상업고등학교 졸업	*인제군 위생협회 기린면회장 *현)기린면 상인회장	796 (12.98)	

○ 고성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고성군 제 1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함명준 (咸明埈)	남	'60.03.16.	간성읍 신안리 279	건설업	울산공전 (울산과학대) 졸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5년근무 *고성녹색사랑회 사무국장	3,198 (28.63)	
	2	한나라당	이강덕 (李康德)	남	'53.03.29.	토성면 봉포리 3반	정치인	속초고등학교 졸업	*제3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 *고성군 태권도 협회장	5,577 (49.93)	당선
	6	무소속	이철균 (李喆均)	남	'47.02.06.	간성읍 상리 459	농업	고성고등학교 졸업	*전)고성군청 환경보호과장	2,394 (21.43)	
고성군 제 2 선거구	1	열린 우리당	윤영락 (尹榮洛)	남	'50.05.07.	거진읍 거진리 동진@ B동 6004호	보험업	거진실업고등학교 (상과) 졸업	*제2대 고성군의회 부의장 역임 *제3대고성군의회 의장 역임	2,660 (37.43)	
	2	한나라당	서동철 (徐東哲)	남	'43.08.09.	거진읍 거진리 6리2반 264-6	강원도의회 의원	서울환일고등학교 졸업	*고성명태축제(1,2,3,4회)위원장 *제6대 강원도의회 의원	2,744 (38.62)	당선
	6	무소속	김형봉 (金炯鳳)	남	'57.11.27.	거진읍 거진리 동진@ B동 3001호	자영업	거진공업고등학교 졸업	*대진중,고등학교 총 동문회장 *(전)경찰공무원	1,701 (23.94)	

○ 양양군(2명)

선거구명	기호	정당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양양군 제1 선거구	1	열린우리당	김양수(金洋洙)	남	'60.02.10.	양양읍 서문리 주공아파트 101동 704호	농업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양양군의료보험조합 과장대우 *양양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 추진위원장	3,828(35.99)	
	2	한나라당	박융길(朴隆吉)	남	'45.01.03.	양양읍 서문리 163	정당인	양양고등학교 졸업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현) *양양군 생활체육 협의회장(현)	6,806(64.00)	당선
양양군 제2 선거구	1	열린우리당	이용인(李鎔仁)	남	'61.11.10.	현남면 하월천리 384	농업	강원대학교 4년 졸업	*(사)한국농업경영인 양양군연합회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양양군협의회장(현)	913(15.67)	
	2	한나라당	임용식(林勇植)	남	'60.11.15.	현남면 입암리 76-1	상업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2년 졸업	*양양군이장협의회 사무국장(전) *입암메밀타운 대표(전)	2,007(34.46)	당선
	6	무소속	김돈일(金燉佾)	남	'53.11.03.	현북면 하광정리 산70-4	강원도의회 의원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토목과 졸업	*양양군의회 의원(전) *강원도의회 의원(현)	938(16.10)	
	7	무소속	이종영(李鐘永)	남	'49.04.10.	양양읍 서문리 주공아파트 101- 804	상업	강원대학교 농학과 졸업	*예비군중대장 *태양식품 대표(현)	1,183(20.31)	
	8	무소속	함종선(咸鐘善)	남	'59.05.30.	현남면 북분리 212	건설도료 공사대표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강릉대학교 총학생회장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	783(13.44)	

나) 비례대표

○ 강원도(4명)

정당명	추천순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득표율)	비고
열린우리당	1	최경순(崔京順)	여	'53.05.13.	강원 춘천 약사동 151	정당인	홍천여자고등학교 졸업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여성위원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165,785(25.01)	당선

정당명	추천 순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득표율)	비고
열린우리당	2	서정목 (徐廷穆)	남	'25.10.08.	강원 춘천 석사동 695-3	무직	춘천농업고등 학교 3년 중퇴	대한노인회강원도 연합회장 대한노인회중앙회 부회장		
한나라당	1	김동자 (金東子)	여	'51.12.08.	강원 강릉 포남1동 1241-5	강릉디자인 직업전문 학교 교장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재학	(현)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장, 중앙부회장 (전)강원도 여성 단체협의회 회장	412,791 (62.28)	당선
	2	유순임 (兪舜姙)	여	'46.11.18.	강원 원주 우산동 100-12 (13/2)	정당인	원주여자고등 학교 졸업	(현)원주여중·고 총동문회장 (현)법무부 원주횡성 지역범죄예방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당선
	3	지명옥 (智明玉)	여	'58.08.07.	강원 춘천 후평 2동 주공아파트 505-409	사회 복지사	한림성심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현)강원도 장애인 단체연합회 사무국장 (현)한국문인협회 및 강원수필문학회 회원		
민주노동당	1	최원자 (崔原子)	여	'64.01.10.	강원 춘천 교동93-17 (1/1)	정당인	한림성심대학 지방행정과 졸업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부본부장 *민주노동당 강원 도당 부위원장	84,180 (12.70)	당선
	2	조화연 (趙花蓮)	여	'75.06.13.	강원 춘천 효자1동 낙원A 가-507	정당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춘천시 보육조례 운동본부 집행위원		

나. 선거 결과

1) 후보자별 득표 상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						무효 투표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116,966)			
계		1,160,977	681,608	198,410	342,969	6,633	85,983	25,062	5,921	16,630
춘천시	제1선거구	99,381	53,302	정한	황철		유호순			1,250
				13,214	25,521		13,317			
	제2선거구	93,263	50,849	강청룡	백선열	오용남	민성숙			1,334
				14,085	25,135	4,686	5,609			
원주시	제1선거구	106,707	52,816	이종근	김대천					1,487
				18,876	32,453					
	제2선거구	109,063	54,087	곽도영	이인섭					1,297
				16,648	36,142					
강릉시	제1선거구	87,603	48,278	김흥기	최재규		권혁돈			1,122
				9,245	31,038		6,873			
	제2선거구	83,535	44,230	김용배	박호창		김원덕	이훈	정인수	825
				6,487	20,920		6,333	4,527	5,138	
동해시	제1선거구	51,003	29,239	김진연	이성기		이영우			835
				8,337	15,306		4,761			
	제2선거구	23,881	14,031	김형원	권순일					461
				4,442	9,128					
태백시	제1선거구	27,509	17,584	심재영	김진필		이상출			461
				7,974	4,847		4,302			
	제2선거구	13,836	10,222	손석암	김연식	양기현	홍성욱			142
				3,949	3,951	752	1,428			
속초시	제1선거구	29,661	15,703	송흥교	이병선					421
				3,965	11,317					
	제2선거구	35,089	18,420	최종현	김시성					429
				6,384	11,607					
삼척시	제1선거구	30,292	20,690	최병헌	김양호		정연철			567
				4,344	8,830		6,949			
	제2선거구	27,459	19,093	박재순	박상수		김경명	김동열		612
				3,139	8,735		1,737	4,870		
홍천군	제1선거구	29,156	16,439	윤종석	이명열		김영진	김원종		336
				5,212	7,041		910	2,940		
	제2선거구	26,273	17,344	이성기	김기남		김창휘	김희태		510
				4,695	8,599		2,102	1,438		
횡성군	제1선거구	19,761	13,216	이관형	진기엽		백기운	정호원		330
				3,800	4,802		1,692	2,592		
	제2선거구	15,439	10,900	김용식	박명서					284
				4,007	6,609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득표율)						무효투표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116,966)			
영월군	제1선거구	21,204	14,146	고진국	김종훈		김광은			265
				5,907	4,767		3,207			
	제2선거구	12,245	8,582	엄기만	권석주					219
				3,632	4,731					
평창군	제1선거구	16,263	11,101	지광천	이영덕		이종준			247
				4,264	5,619		971			
	제2선거구	19,782	12,269	허해성	이준연		신남선			218
				4,681	6,072		1,298			
정선군	제1선거구	18,951	13,852	조현주	홍건표		장석호			294
				5,352	7,207		999			
	제2선거구	16,997	11,304	김진복	남경문	심영규	김재석			233
				3,957	4,617	1,195	1,302			
철원군	제1선거구	17,118	11,191	이주섭	전명자		김동일			219
				1,591	4,246		5,135			
	제2선거구	20,228	13,742	한금석	김영칠		김춘만	엄기호		288
				3,772	4,427		2,133	3,122		
화천군	제1선거구	8,856	6,392	최광선	장세국		김수철			138
				1,241	2,561		2,452			
	제2선거구	9,548	6,687	정충수			한만호			228
				4,414			2,045			
양구군	제1선거구	9,204	6,477	이기찬			이종대	최규화		122
				2,890			1,228	2,237		
	제2선거구	7,250	5,570	조영기			박수근	오흥구		107
				2,550			1,556	1,357		
인제군	제1선거구	16,434	11,952	최태선	이기순		권용재			309
				3,183	6,800		1,660			
	제2선거구	8,696	6,281	천인석	정을권		최병기	한상철		153
				1,574	2,807		951	796		
고성군	제1선거구	15,863	11,458	함명준	이강덕		이철균			289
				3,198	5,577		2,394			
	제2선거구	9,845	7,263	윤영락	서동철		김형봉			158
				2,660	2,744		1,701			
양양군	제1선거구	15,707	10,962	김양수	박윤길					328
				3,828	6,806					
	제2선거구	7,875	5,936	이용인	임용식		김돈일	이종영	함종선	112
				913	2,007		938	1,183	783	

2) 당선자 현황

가) 정당별

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무 소 속	비 고
36 (4)	1 (1)	34 (2)	(1)	1	( )은 비례대표

나) 직업별

계	직 업 별								
	지방의원	정치인	농업	상업	건축사	행정사	회사원	교육자	공무원
36 (4)	13	10 (3)	3	5	1	1	2	(1)	1

다) 학력별

계	중 졸	고 퇴	고 졸	대 퇴	대 재	대 졸	대학원재	대학원졸
36 (4)	3	1	8 (2)	2	4 (1)	7 (1)	6	5

라) 성별·연령별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36 (4)	36	(4)	4	16 (1)	10 (2)	6 (1)

마) 득표수별

계	3000미만	30000이상	50000이상	60000이상	70000이상	80000이상	100000이상	무투표
36	6	6	4	4	3	4	9	0

바) 득표율별

계	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 이상	무투표
36	5	14	8	8	1	0

제3절

개 원

1. 개원식

개원식은 2006년 7월 12일 14:0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40명과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하여 도단위 기관장, 언론사 대표, 유관 기관 대표 등을 초청한 가운데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의 사회로 국민 의례, 의원 선서, 의장 개원사, 도지사 축사, 교육감 축사의 순으로 거행되었으며, 이날 실시한 의원선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선 서 전 문>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7월 1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원

2. 기 타

개원식이 끝난 후 강원도의회 청사 현관에서 도의원 40명, 도지사, 교육감이 참석, 기념 촬영을 하고, 세종호텔에서 개원식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경축연이 있었다.

제 4 절

의회 구성

1. 의회 조직

가. 현 황

제7대 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40명으로 의장 1명, 부의장 2명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필요시에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의원 등록 및 변동

2006년 7월 1일 현재 의원 수는 40명으로 한나라당 36명, 열린우리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등록되었으며 2008년 6월 9일 한나라당 이성기 의원(동해 1)이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2. 원구성

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

1) 의장 선거

의장은 제7대 도의회 최초 회의인 2006년 7월 12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 의원인 이성기 의원이 의장 직무 대행으로 개의되었다.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 상황의 점검 및 감표 활동을 위하여 감표위원으로 이병선 의원, 김동일 의원을 지명한 후 10시 32

분에 투표를 개시하여 10시 42분에 종료되었다.

총 투표 수 40표 중 이기순 의원 14표, 이인섭 의원 14표, 박융길 의원 12표로 당선 정족수에 달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제2차 투표에서도 총 투표 수 40표 중 이기순 의원 18표, 이인섭 의원 13표, 박융길 의원 9표로 당선 정족수에 미달되었다.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인 이기순 의원과 이인섭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였고 출석의원 40명 중 이기순 의원 25표, 이인섭 의원 15표로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2) 부의장 선거

부의장 2인의 선거는 각 1명씩 선출하였는데, 첫 번째 부의장 선거는 11시 39분에 개시되어 11시 49분에 종료되었다.

총 투표 수 40표 중 최재규 의원 20표, 백선열 의원 18표, 김기남 의원 1표, 무효 1표로 당선 정족수에 1표가 미달되어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 개표 결과 출석의원 40명 중 최재규 의원 24표, 백선열 의원 15표, 무효 1표로 최재규 의원이 2차 투표에서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두 번째 부의장 선거는 12시 10분에 개시되어 12시 17분에 종료되었으며 개표 결과 출석의원 40인 중 백선열 의원 34표, 박상수 의원 1표, 조영기 의원 1표, 무효 4표로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백선열 의원이 당선되었다.

□ 의장단(2006. 7. 12. 제168회 임시회)

구 분	성 명	소속정당	지역구	비 고
의 장	이기순	한나라당	인제군	
부의장	최재규	한나라당	강릉시	교육사회위원회
부의장	백선열	한나라당	춘천시	기획행정위원회

나.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1)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는데 최초의 위원 선임은 2006년 7월 13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위원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3일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되었다.

선거는 먼저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었으며 의장은 감표위원으로 한나라당의 권순일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고진국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5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 장의 투표용지로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10시 56분 투표를 개시하여 11시 12분에 종료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투표 결과

- 의회운영위원장 : 총 40표 중 이준연 의원 35, 김대천 의원 1, 무효 4
- 기획행정위원장 : 총 40표 중 이병선 의원 38, 무효 1, 기권 1
- 교육사회위원장 : 총 40표 중 김기남 의원 37, 무효 2, 기권 1
- 산업경제위원장 : 총 40표 중 박상수 의원 36, 정을권 의원 1, 무효 1, 기권 2
- 관광건설위원장 : 총 40표 중 서동철 의원 38, 김연식 의원 1, 무효 1

이로써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준연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이병선 의원, 교육사회위원장에 김기남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박상수 의원, 관광건설위원장에 서동철 의원이 당선되었다.

3) 부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은 2006년 7월 14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5개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의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 원 회	부위원장	추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명서 위원	권순일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	김대천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황 철 위원	김동자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위원	권석주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위원	박호창 위원

4) 상임위원회 구성(2006. 7. 제168회 임시회)

구 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위 원 장	이 준 연 (한나라, 교사)	이 병 선 (한나라, 속초)	김 기 남 (한나라, 홍천)	박 상 수 (한나라, 삼척)	서 동 철 (한나라, 고성)
부위원장	박 명 서 (한나라, 관건)	조 영 기 (한나라, 양구)	황 철 (한나라, 춘천)	남 경 문 (한나라, 정선)	권 순 일 (한나라, 동해)
위 원	【한나라당】 권순일(관건) 김대천(기행) 김동자(교사) 남경문(산경) 이강덕(산경) 이명열(산경) 장세국(관건) 조영기(기행) 황 철(교사) 【열린우리당】 고진국(기행)	【한나라당】 김대천(원주) 김양호(삼척) 김영칠(철원) 백선열(춘천) 심재영(태백) 진기엽(횡성) 【열린우리당】 고진국(영월) 【민주노동당】 최원자(비례)	【한나라당】 김동자(비례) 유순임(비례) 이기찬(양구) 이인섭(원주) 이준연(평창) 최재규(강릉) 【무소속】 김동일(철원)	【한나라당】 권석주(영월) 이강덕(고성) 이명열(홍천) 이성기(동해) 이영덕(평창) 임용식(양양) 정을권(인제) 정충수(화천)	【한나라당】 김시성(속초) 김연식(태백) 박명서(횡성) 박융길(양양) 박호창(강릉) 장세국(화천) 홍건표(정선) 【열린우리당】 최경순(비례)

5)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가) 직 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심사 및 청원·진정서 처리 등의 직무를 행한다.

나) 소 관

위 원 회	소 관 사 항
의회운영 위 원 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기획행정 위 원 회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미래기획단, 동계올림픽유치단, 국제협력실,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사회 위 원 회	보건복지여성국, 공무원교육원,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교육청 소관으로써 교육위원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산업경제 위 원 회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관광건설 위 원 회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제7대 전반기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회,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3회,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3회,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4회,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2회 운영되었으며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2006년	2007년				
구 성 일	2006.10.10.	2007.7.5.	2006.7.21.	2007.10.23.	2006.7.21.	2008.02.19.
활동기간	170 ~ 176회	177~185회	2007.9.30.	2008.12.31.	2006.12.31.	2009.02.28.
위 원 장	정을권(산경)	김동일(교사)	이인섭(교사)	임용식(산경)	박융길(관건)	홍건표(관건)
부위원장	김대천(기행)	진기엽(기행)	박호창(관건)	김양호(기행)	홍건표(관건)	최경순(관건)
위원	고진국(기행)	심재영(기행)	김동자(교사)	심재영(기행)	조영기(기행)	고진국(기행)
	김양호(기행)	조영기(기행)	남경문(산경)	이인섭(교사)	최원자(기행)	김영칠(기행)
	최원자(기행)	최원자(기행)	박명서(관건)	최재규(교사)	이기찬(교사)	조영기(기행)
	김동일(교사)	유순임(교사)	백선열(교사)	박상수(산경)	황 철(교사)	김동일(교사)
	김동자(교사)	최재규(교사)	심재영(기행)	이영덕(산경)	임용식(산경)	이기찬(교사)
	유순임(교사)	황 철(교사)	이명열(산경)	권순일(관건)	정을권(산경)	황 철(교사)
	이기찬(교사)	남경문(산경)	이영덕(산경)	박명서(관건)		권석주(산경)
	권석주(산경)	이명열(산경)	이준연(교사)			남경문(산경)
	이강덕(산경)	이영덕(산경)	진기엽(기행)			이명열(산경)
	임용식(산경)	임용식(산경)	최경순(관건)			장세국(관건)
	김시성(관건)	권순일(관건)				
	김연식(관건)	박명서(관건)				
	최경순(관건)	장세국(관건)				
	홍건표(관건)	최경순(관건)				

* 특별위원 사직 : 2006. 9. 15.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박명서 의원(관건위)

제 5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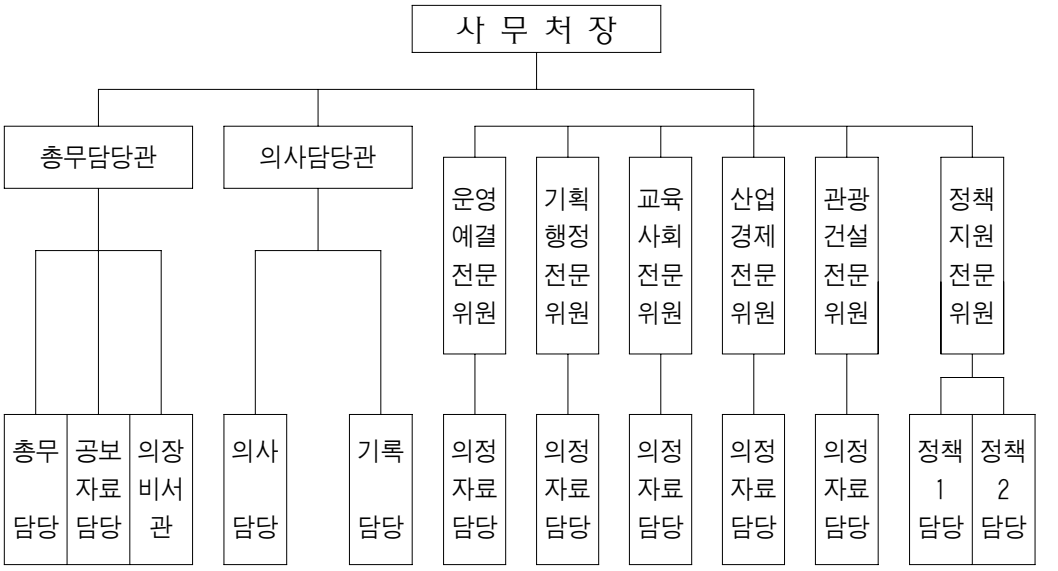
의 회 사 무 처

1. 기 구

도의회에서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2~3급인 처장을 두고 의회의 운영 및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에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그리고 6개의 전문위원실을 두어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 기구표



나. 사무분장

부 서	주 요 업 무
총무 담당관	1. 의원등록 및 세미나, 간담회 운영 2. 의원 국제친선 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5. 의회관련 각종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 6. 의정회 운영지원 7. 의회사무처 행정의 기획 및 조정 8.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 9.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10. 의회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 11.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에 관한 사항 12.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 13. 홍보 기자재 관리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 14.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 15.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타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사 담당관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3.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6.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 7.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처리 8.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 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 10. 도정보고 및 질문에 관한 종합조정 11. 서면질문·답변 관리 12.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및 위원회 구성 13. 각종 발언 신청·접수 관리 14.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전문 위원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전문위원] 1.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조사연구 2. 자치입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조례안의 체계자구심사 의견제시 4. 의회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인 력

강원도의회 사무처의 인력은 강원도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8년 6월 30일 현재 총 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인력 구성은 사무처장 및 사무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그리고 6개의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으며 총무담당관실은 총무담당과 공보자료담당, 의사담당관실은 의사담당, 기록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실은 운영예결,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5개의 전문위원실을 운영해오다 2006년 9월 29일 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제의 조사 연구, 의원연구회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전문위원을 신설하여 현재 6개의 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직급별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정 · 현원 현황(2008년 6월 30일 현재)

구 분		계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정원	현원	과결원	정원	현원	과결원	정원	현원	과결원	정원	현원	과결원
계		74	73	△1	26	27	1	19	17	△2	29	30	1
일반직	소 계	45	44	△1	13	13	0	9	8	△1	23	24	1
	2~3급	1	1	0	1	1	0						
	3급	0	1	1	0	1	1						
	4급	8	3	△5	1	0	△1	1	0	△1	6	3	△3
	5급	12	14	2	3	3	0	2	2	0	7	9	2
	6급	10	10	0	4	3	△1	2	2	0	4	5	1
	7급	13	15	2	3	5	2	3	3	0	7	7	0
	8급	1	0	△1	1	0	△1						

구 분			계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정원	현원	과결원	정원	현원	과결원	정원	현원	과결원	정원	현원	과결원
계			74	74	0	26	27	1	19	17	△2	29	30	1
기능직	소 계		29	29	0	13	14	1	10	9	△1	6	6	0
	7급	난 방	1	1	0	1	1	0						
		전 기	0	1	1	0	1	1						
		영 사	1	1	0	1	1	0						
		운 전	1	1	0	1	1	0						
		기 계	0	1	1	0	1	1						
	8급	전 기	1	0	△1	1	0	△1						
		기 계	1	0	△1	1	0	△1						
		전 산	1	1	0	1	1	0						
		워드필기	1	14	13	0	2	2	1	9	8	0	3	3
		통 신	1	1	0	1	1	0						
		운 전	0	1	1	0	1	1						
		방 호	1	1	0	1	1	0						
		조 무	0	1	1							0	1	1
	9급	통 신	1	1	0	1	1	0						
		운 전	1	0	△1	1	0	△1						
		워드·필기	7	1	△6				7	0	△7	0	1	1
		조 무	0	2	2	0	1	1				0	1	1
	10급	운 전	1	1	0	1	1	0						
		조 무	2	0	△2	1	0	△1				1	0	△1
		워드·필기	7	0	△7	2	0	△2				5	0	△5
		워드조무	1	0	△1				1	0	△1			

※ 정원외 인력 : 1명(총무담당관실 일용직)

나. 사무처 간부

1) 사무처장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최 준 익	지방부이사관	1995. 1. 1. ~ 1996. 9.20.	
함 형 구	〃	1996.10. 7. ~ 1998. 1.14.	
권 혁 인	〃	1998. 1.22. ~ 1998. 7.20.	
조 명 수	〃	1998. 9. 7. ~ 1999. 1.12.	
이 용 선	지방이사관	1999. 1.13. ~ 2003. 5. 6.	
이 만 용	〃	2003. 5. 7. ~ 2005. 1.14.	
이 광 준	지방부이사관	2005. 1.15. ~ 2005.10. 9.	
김 형 배	지방이사관	2005.10.10. ~ 2006.12.31.	
김 정 삼	〃	2007. 1. 1. ~ 2007.11.12.	
홍 기 업	지방부이사관	2007.11.13. ~ 2008. 6.30.현재	

2) 담당관

직 위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총무담당관	한 관 수	지방서기관	1991. 7. 8. ~ 1996. 6.30.	
〃	최 정 부	〃	1996. 7.19. ~ 1998. 1.22.	
〃	주 자 명	〃	1998. 2. 5. ~ 2000. 1.17.	
〃	박 종 기	〃	2000. 1.18. ~ 2003. 9. 8.	
〃	김 남 웅	〃	2003. 9. 9. ~ 2004. 8.10.	
〃	조 광 수	〃	2004. 8.23. ~ 2006. 1.23.	
〃	손 호 정	〃	2006. 1.24. ~ 2006.12.31.	
〃	정 병 식	지방부이사관	2007. 1. 1. ~ 2007.12.31.	
〃	신 창 근	〃	2008. 1. 1. ~ 2008.6.30.현재	

직 위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의사담당관	김 남 규	지방서기관	1994. 5.19. ~ 1996. 1.21.	
〃	손 효 근	〃	1996. 2. 5. ~ 1997.12.31.	
〃	정 판 교	〃	1998. 2. 5. ~ 1998.12.31.	
〃	문 창 용	〃	1999. 1.13. ~ 1999. 7.27.	
〃	신 재 현	〃	1999. 7.28. ~ 2001.10.15.	
〃	김 명 수	〃	2001.10.15. ~ 2003. 9. 8.	
〃	조 광 수	〃	2003. 9. 9. ~ 2004. 8.22.	
〃	김 규 원	〃	2004. 8.23. ~ 2005. 1.14.	
〃	손 호 정	〃	2005. 1.15. ~ 2006. 1.23.	
〃	정 병 식	지방부이사관	2006. 1.24. ~ 2006.12.31.	
〃	유 명 춘	지방서기관	2007. 1. 1. ~ 2008. 5. 4.	

3) 전문위원

부서명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운영예결	이 명 균	지방서기관	1994. 6. 3. ~ 1996. 6.30.	
〃	이 원 용	〃	1996. 7.19. ~ 1997. 6.30.	
〃	전 정 기	〃	1997. 7.25. ~ 1998. 2. 4.	
〃	박 종 기	〃	1998. 2. 5. ~ 2000. 1.17.	
〃	장 국 광	〃	2000. 1.18. ~ 2001.10.14.	
〃	신 승 엽	〃	2001.10.15. ~ 2002. 1.25.	
〃	유 희 수	〃	2002. 1.25. ~ 2003. 1.10.	
〃	심 재 철	〃	2003. 1.11. ~ 2005. 8.31.	
〃	김 완 수	〃	2005. 9. 1. ~ 2006.12.31.	
〃	홍 원 표	〃	2007. 1. 1. ~ 2008.6.30.현재	

부서명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기획행정	권 오 동	지방서기관	1994. 6. 3. ~ 1995. 9.16.	
	함 영 일	〃	1995.10. 7. ~ 1996.12.31.	
	주 자 명	〃	1997. 1.28. ~ 1998. 2. 4.	
	전 정 기	〃	1998. 2. 5. ~ 1999. 7.27.	
	최 종 춘	〃	1999. 7.28. ~ 2001. 3.11.	
	최 동 용	〃	2001. 3.12. ~ 2002. 3.23.	
	박 종 덕	〃	2002. 3.23. ~ 2003. 5. 6.	
	박 민 호	〃	2003. 5. 7. ~ 2006. 1.23.	
	홍 경 표	〃	2006. 1.24. ~ 2007.12.31.	
	서 재 명	지방행정사무관	2008.1.4. ~ 2008.6.30.현재	
교육사회	서 의 승	지방별정4급	1991. 8.26. ~ 2003. 1.10.	
	유 명 춘	지방서기관	2003. 1.11. ~ 2006.12.31.	
	이 석 남	〃	2007. 1. 1. ~ 2008. 1. 3.	
	이 주 익	지방행정사무관	2008. 1. 4. ~ 2008. 5. 7.	
	함 석 근	〃	2008. 5. 8. ~ 2008.6.30.현재	
산업경제	박 종 인	지방서기관	1995. 1. 6. ~ 1996. 7.18.	
	정 판 교	〃	1996. 7.19. ~ 1998. 2. 4.	
	이 수 길	〃	1998. 2. 5. ~ 1999. 7.27.	
	김 용 기	〃	1999. 1.13. ~ 2000. 1.17.	
	전 창 범	〃	2000. 1.18. ~ 2001. 1.21.	
	유 희 수	〃	2001. 1.22. ~ 2002. 1.25.	
	정 병 식	〃	2002. 1.25. ~ 2003. 5. 6.	
	신 광 균	〃	2003. 5. 7. ~ 2005. 1.23.	
	엄 석 현	〃	2005. 1.24. ~ 2005. 8.31.	
	홍 덕 표	〃	2005. 9. 1. ~ 2006.12.31.	
	정 정 균	〃	2007. 1. 1. ~ 2008. 1. 3.	
	송 재 명	지방행정사무관	2008. 1. 4. ~ 2008.6.30.현재	

부서명	성 명	직 급	재 임 기 간	비 고
관광건설	임 병 환	지방별정4급	1991. 8.26. ~ 1999. 7.27.	
	신 동 철	지방서기관	1999. 7.28. ~ 2000.11.22.	
	배 영 규	〃	2000.11.23. ~ 2002. 7.16.	
	박 용 목	〃	2002. 7.16. ~ 2003. 1.10.	
	이 수 조	〃	2003. 1.11. ~ 2003. 9.21.	
	김 명 수	〃	2003. 9.22. ~ 2005. 1.23.	
	정 연 덕	지방행정사무관	2005. 1.24. ~ 2005. 8.31.	
	엄 석 현	지방서기관	2005. 9. 1. ~ 2006.10. 9.	
	박 동 헌	지방기술서기관	2006.10.10. ~ 2008.6.30.현재	
정책지원	엄 석 현	지방서기관	2006.10.10. ~ 2007.12.31.	
	이 계 동	〃	2008.1.4. ~ 2008.6.30.현재	

3. 의회 청사

의회청사는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번지)에 강원도청과 병존하고 있다. 1989년 7월 31일 착공하여 총 232억의 예산을 투입 1년 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90년 10월 30일 준공되었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6,314㎡(1,910평)으로 지상 4층, 지하 3층으로 이중 본회의장 106평, 의장단실 2개소 55평, 상임위원회 위원실 4개소 127평, 상임위원회 회의실 5개소 171평, 사무실 9개소 175평 기타 자료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1,276평으로 배치되어 있다.

제2장
의 정 활 동

제 1 절

의회 운영 총괄

1. 개 황

가. 회기 운영

제7대 도의회 후반기에 개회된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임시회는 총 14회 135일 동안 운영되었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2회 20일(제168회, 제169회), 2007년도에는 7회 66일(제172회 ~ 179회, 제177회 제외), 2008년도에는 5회 49일간(제181회 ~ 제185회) 개회되었다.

정례회는 총 4회 84일간 운영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2회 40일간(제170회, 제171회), 2007년도에는 2회 44일간(제177회, 제180회) 개회되었다.

【 회기별 운영현황 】

(단위 : 일)

구분		회기일정		개 의 횟 수								
		기 간	일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계	운영	기행	교사	산경	관건	예결	기타
2006년		4회	60	12	85	9	26	13	20	17	7	6
임시회	계	2회	20	5	20	3	5	3	4	5	-	5
	168회	7.12. ~ 7.21.	10	3	12	2	3	2	2	3	-	5
	169회	9. 5. ~ 9.14.	10	2	8	1	2	1	2	2	-	-
정례회	계	2회	40	7	65	6	21	10	16	12	7	1
	170회	10.10. ~ 10.23.	14	5	14	2	3	2	4	3	2	-
	171회	11.20. ~ 12.15.	26	2	51	4	18	8	12	9	5	1

(단위 : 일)

구분		회기일정		개의횟수								
		기간	일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계	운영	기행	교사	산경	관건	예결	기타
2007년		9회	110	23	147	17	36	28	36	30	10	3
임시회	계	7회	66	18	79	11	19	16	19	14	3	1
	172회	2. 6.~ 2.13.	8	2	17	2	3	4	5	3	-	-
	173회	3.13.~ 3.22.	10	4	8	1	2	1	2	2	-	-
	174회	4.12.~ 4.19.	8	2	8	1	2	1	2	2	-	-
	175회	5. 9.~ 5.22.	14	2	15	3	3	3	4	2	3	-
	176회	6.14.~ 6.20.	7	2	8	1	2	2	2	1	-	-
	178회	9. 5.~ 9.13.	9	2	11	1	4	3	1	2	-	-
	179회	10.16.~10.25.	10	4	12	2	3	2	3	2	-	1
정례회	계	2회	44	5	68	6	17	12	17	16	7	2
	177회	7. 5.~ 7.18.	14	2	20	2	5	3	5	5	2	-
	180회	11.15.~12.14.	30	3	48	4	12	9	12	11	5	2
2008년		5회	49	14	57	7	16	8	13	13	3	5
임시회	계	5회	49	14	57	7	16	8	13	13	3	5
	181회	2.11.~2.19.	9	2	18	2	4	3	5	4	-	-
	182회	3.13.~3.21.	9	4	6	1	1	1	1	2	-	3
	183회	4.17.~4.24.	8	2	8	1	2	1	2	2	-	-
	184회	5.13.~5.26.	14	2	18	3	6	2	4	3	3	-
	185회	6.18.~6.26.	9	4	7	-	3	1	1	2	-	2

나. 회기별 주요 사항

구분 / 회기별	일수	의 사 일 정	주 요 내 용
제168회 임시회	10	'06. 7. 12.~ 7. 21.	○ 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개원(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및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69회 임시회	10	'06. 9. 5.~ 9. 14.	○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제8회 강원자치봉사대상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70회 정례회	14	'06. 10. 10.~ 10. 23.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안 심의
제171회 정례회	26	'06. 11. 20.~ 12. 15.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2006년 제2회 추경 및 2007년 예산 심의 ○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안 심의
제172회 임시회	8	'07. 2. 6.~ 2. 13.	○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의안 심의
제173회 임시회	10	'07. 3. 13.~ 3. 22.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74회 임시회	8	'07. 4. 12.~ 4. 19.	○ 본회의 초청연설(이연숙 전 제2정무장관)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75회 임시회	14	'07. 5. 9.~ 5. 22.	○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 의안 심의
제176회 임시회	7	'07. 6. 14.~ 6. 20.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77회 정례회	14	'07. 7. 5.~ 7. 18.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78회 임시회	9	'07. 9. 5.~ 9. 13.	○ 개원 51주년 기념행사, 제9회 강원자치봉사대상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토론회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79회 임시회	10	'07. 10. 16.~10. 25.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 의안 심의

구분 / 회기별	일수	의 사 일 정	주 요 내 용
제180회 정례회	30	'07. 11. 15.~ 12. 14.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2007년 제2회 추경 및 2008년 당초예산 심의 ○ 의안 심의
제181회 임시회	9	'08. 2. 11.~ 2. 19.	○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82회 임시회	9	'08. 3. 13.~ 3. 21.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83회 임시회	8	'08. 4. 17.~ 4. 24.	○ 본회의 초청연설(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제184회 임시회	14	'08. 5. 13.~ 5. 26.	○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 의안 심의
제185회 임시회	9	'08. 6. 18.~ 6. 26.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의안 심의 및 현지 시찰

2. 회의 운영 현황

가. 회의 개최

(단위 : 회)

구 분 / 연도별	개 의 횟 수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 위	
		계	운영	기행	교사	산업	관건	예결	기타
계	49	289	33	78	49	69	60	20	14
2006	12	85	9	26	13	20	17	7	6
2007	23	147	17	36	28	36	30	10	3
2008	14	57	7	16	8	13	13	3	5

나. 회의 출석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별	의원출석현황						비고
	본회의			위원회			
	연인원	출석인원	출석율	연인원	출석인원	출석율	
계	1,960	1,739	88.7	2,393	2,102	87.8	
2006	480	449	93.5	597	551	92.3	
2007	920	799	86.8	1,220	1,061	87.0	
2008	560	491	87.7	576	490	85.1	

다. 의안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합계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건의 및 결의안	규칙	기타
계	281	143	17	47	25	6	43
2006	77	33	6	18	5	-	15
2007	138	74	8	20	12	5	19
2008	66	36	3	9	8	1	9

3.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가. 개 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제7대 전반기 의회 운영 중에서 총 5회기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제170회, 제173회, 제179회, 제182회, 제185회) 기간 중 각 회기별로 2~3일간씩 11일간 총 41인의 의원이 질문하였는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34, 민주당 1, 민주노동당 2, 무소속 4인 이었다.(이상 연인원)

제7대 후반기 도정질문 총 건수는 312건으로 강원도 소관 249건, 강원도교육청 소관 63건이었다.

나. 회기별 질문 현황

(단위 : 건)

구분 / 회기별	의원수	건 수	내 용 별		비 고
			도 정	교육행정	
계	41	312	249	63	
170회 정례회	11	74	60	14	'06. 10월
173회 임시회	8	84	60	24	'07. 3월
179회 임시회	9	76	65	11	'07. 10월
182회 임시회	6	40	32	8	'08. 3월
185회 임시회	7	38	32	6	'08. 6월

다. 분야별 질문 현황

(단위 : 건)

회기별 / 분야별	합 계	170회	173회	179회	182회	185회	비 고
합 계	312	74	84	76	40	38	
일반행정	88	13	19	28	12	16	
사회복지	47	18	10	8	9	2	
산업경제	56	15	15	10	8	8	
관광건설	58	14	16	19	3	6	
교육행정	63	14	24	11	8	6	

라. 질문 의원 현황

(단위 : 명)

회 기 별	본회의 차수 및 일자	질문 의원수	소속 위원회별				질문건수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계		41	11	10	11	9	계 312 도 249 교 63
제170회 (정례회)	제2차 '06.10.18.(수)	11	김영칠(한) 심재영(한)	김동자(한)	남경문(한)	-	계 74 도 60 교 14
	제3차 '06.10.19.(목)		김대천(한)	황 철(한)	정을권(한) 이성기(한)	-	
	제4차 '06.10.20.(금)		-	김동일(무)	-	서동철(한) 최경순(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07.3.20.(화)	8	최원자(민노)	이준연(한)	임용식(한)	홍건표(한)	계 84 도 60 교 24
	제3차 '07.3.21.(수)		조영기(한)	유순임(한)	권석주(한)	서동철(한)	
제179회 (임시회)	제2차 '07.10.23.(화)	9	진기엽(한)	-	남경문(한) 정을권(한)	서동철(한) 홍건표(한)	계 76 도 65 교 11
	제3차 '07.10.24.(수)		최원자(민노)	김동일(무) 황 철(한)	이명열(한)	-	
제182회 (임시회)	제2차 '08. 3.19.(수)	6	-	김기남 (한)	임용식(한)	박명서(한)	계 40 도 32 교 8
	제3차 '08. 3.20.(목)		조영기(한) 김대천(한)	김동일(무)	-	-	
제185회 (임시회)	제2차 '08. 6.24.(화)	7	이병선(한)	김동일 (무)	-	김시성(한) 권순일(한)	계 38 도 32 교 6
	제3차 '08. 6.25.(수)		김양호(한)	-	이영덕(한) 남경문(한)	-	

※ 정당별 질문의원수 : 한나라 34, 민주 1, 민주노동 2, 무소속 4

4. 행정사무감사

가. 개 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각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며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였다.

나. 자료 요구 사항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합 계	상임위원회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합 계	1,765	435	506	318	466	40
2006년	874	234	250	132	243	15
2007년	891	201	256	186	223	25

다. 시정 및 처리 요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합 계	상임위원회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합 계	468	95	104	192	55	22
2006년	208	44	53	76	26	9
2007년	260	51	51	116	29	13

5. 각종 의안 처리 현황

가. 의안별 처리 현황

1) 회기별

(단위 : 건)

회기별 \ 의안별		계	조례안	예산안 결 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 타
합 계		281	143	17	47	23	2	6	43
'06년	소계	77	33	6	18	5			15
	168회	10	4			1			5
	169회	12	9		1	1			1
	170회	14	2	2	3	3			4
	171회	41	18	4	14				5
'07년	소계	138	74	8	20	10	2	5	19
	172회	9	6						3
	173회	8	4			2			2
	174회	8	5		1			1	1
	175회	15	4	2	3	2		2	2
	176회	12	7		2	1	1		1
	177회	12	6	2			1	1	2
	178회	16	14		1				1
	179회	18	9		1	2		1	5
	180회	40	19	4	12	3			2
'08년	소계	66	36	3	9	8		1	9
	181회	18	11			4		1	2
	182회	12	9			1			2
	183회	8	6		1				1
	184회	19	7	3	5	2			2
	185회	9	3		3	1			2

2) 의안별

(단위 : 건)

구 분	계		처 리 형 태				연 도 별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 결	계 류	'06년	'07년	'08년
계	281	100	246	29	1	5	77	138	66
조례안	143	50.9	120	17	1	5	33	74	36
예산안 · 결산	17	6.0	11	6			6	8	3
동의 · 승인안	47	16.7	43	4			18	20	9
건의안	23	8.2	22	1			5	10	8
결의안	2	0.7	2					2	
규칙안	6	2.1	6					5	1
기 타	43	15.3	42	1			15	19	9

나. 위원회 처리 현황

1) 위원회별

(단위 : 건)

구 분	계		처 리 형 태				연 도 별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 결	계 류	'06년	'07년	'08년
계	281	100	246	29	1	5	77	138	66
기획행정	93	33.1	88	4		1	32	42	19
교육사회	50	17.8	41	7		2	10	32	8
산업경제	28	10.0	25	2		1	7	15	6
관광건설	36	12.8	26	9		1	6	14	16
의회운영	18	6.4	18				3	10	5
예산결산	17	6.0	11	6			6	8	3
기타특위	4	1.4	4				1	1	2
본 회 의	35	12.5	33	1	1		12	16	7

2) 회기별

(단위 : 건)

회기별 \ 위원회		계	기획 행정	교육 사회	산업 경제	관광 건설	의회 운영	예산 결산	특 위	본회의
합 계		281	93	50	28	36	18	17	4	35
'06년	소계	77	32	10	7	6	3	6	1	12
	168회	10	3	1		1				5
	169회	12	6	2	1	2				1
	170회	14	5	1	1		2	2		3
	171회	41	18	6	5	3	1	4	1	3
'07년	소계	138	42	32	15	14	10	8	1	16
	172회	9	1	3	1	1	1			2
	173회	8	2	1	1	2	1			1
	174회	8	6				1			1
	175회	15	3	3	2	1	2	2		2
	176회	12	4	2	4	1				1
	177회	12	2	1		4	1	2		2
	178회	16	3	12						1
	179회	18	7	1	1	1	3		1	4
	180회	40	14	9	6	4	1	4		2
'08년	소계	66	19	8	6	16	5	3	2	7
	181회	18	5	3	1	5	2			2
	182회	12	1	2	1	4	2		1	1
	183회	8	3	1	1	2				1
	184회	19	6	2	3	3		3		2
	185회	9	4			2	1		1	1

3) 의안별

(단위 : 건)

구 분	계	조례안	예산안,결산	동의 ·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 타
계	281	143	17	47	23	2	6	43
기획행정	93	52		28	10	1		2
교육사회	50	43		6				1
산업경제	28	16		6	5	1		
관광건설	36	25		5	6			
의회운영	18	6					6	6
예산결산	17		17					
기타특위	4				2			2
본 회 의	35	1		2				32

다. 제안자별 처리 현황

1) 제안자별

(단위 : 건)

구 분	계		처 리 형 태				연 도 별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 결	계 류	'06년	'07년	'08년
계	281	100	246	29	1	5	77	138	66
도지사 제출	136	48.4	116	18	1	1	44	64	28
교육감 제출	39	13.9	35	4			9	26	4
의원 발의	24	8.5	14	6		4	1	8	15
의장 제의	33	11.7	32	1			11	15	7
위원회 제안	49	17.4	49				12	25	12

2) 의안별

(단위 : 건)

구 분	계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 ·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 타
계	281	143	17	47	23	2	6	43
도지사 제출	136	83	9	44				
교육감 제출	39	31	8					
의원 발의	24	20			2	1		1
의장 제의	33			2				31
위원회 제안	49	9		1	21	1	6	11

3) 회기별

(단위 : 건)

회기별 \ 의안별		계	도지사 제출	교육감 제출	의원 발의	의장 제의	위원회 제안
합 계		281	136	39	24	33	49
'06년	소계	77	44	9	1	11	12
	168회	10	3	1		5	1
	169회	12	8	2		1	1
	170회	14	5	1		3	5
	171회	41	28	5	1	2	5
'07년	소계	138	64	26	8	15	25
	172회	9	2	2	1	1	3
	173회	8	3	1	1	1	2
	174회	8	6			1	1
	175회	15	7	2		2	4
	176회	12	6	2	1	1	2
	177회	12	5	2	2	2	1
	178회	16	5	9		1	1
	179회	18	6		1	4	7
	180회	40	24	8	2	2	4
'08년	소계	66	28	4	15	7	12
	181회	18	6	2	2	2	6
	182회	12	3	1	4	1	3
	183회	8	4		3	1	
	184회	19	10	1	5	2	1
	185회	9	5		1	1	2

제 2 절

회기 운영

1. 제168회(임시회)

가. 개 회

제1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4일 강원도의회사무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10일간의 회기로 2006년 7월 12일 개회하여 7월 21일 폐회하였다.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보면 집회일인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였으며,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였으며,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폐회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당면 현안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나. 의사일정(2006. 7. 12. ~ 7. 21. 10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12.(수)	◆ 제1차 본회의 (10:00) 1. 제1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의장 선거 3. 부의장 선거			
	◆ 개원식 (14:00) ▷ 제1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개회식			

<table>
<tr><th>일 자</th><th>기획행정위원회</th><th>교육사회위원회</th><th>산업경제위원회</th><th>관광건설위원회</th></tr>
<tr><td>7.13.(목)</td><td colspan="4">◆ 제2차 본회의 (10:00)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상임위원장 선거
3. 도지사·교육감 시정연설(14:00)
▷ 5분자유발언
▷ 휴회 결의</td></tr>
<tr><td rowspan="2">7.14.(금)</td><td colspan="4">○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 건
5.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6.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7. 업무보고(의회사무처)</td></tr>
<tr><td>(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td><td>(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td><td>(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업무보고 (농정산림국)</td><td>(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td></tr>
<tr><td>7.15.(토)
~
7.16.(일)</td><td colspan="4" rowspan="2">의정 활동 자료 수집</td></tr>
<tr><td>7.17.(월)</td></tr>
<tr><td>7.18.(화)</td><td colspan="4">○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1: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3.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td></tr>
</table>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18.(화)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현지시찰 - 춘천시 강촌 호우 피해 상황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현지시찰 - 춘천~홍천 도시가스 송유관 피해 상황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현지시찰 - 춘천시 동면 지내천 호우 피해 상황
7.19.(수)	▷ 현지시찰 - 횡성·영월 지역 호우 피해 상황	▷ 현지시찰 - 수해 지역 학교 호우 피해 상황	▷ 현지시찰 - 인제군 지역 농림 어업 호우 피해 상황	▷ 현지시찰 - 횡성군(청일면), 평창군(진부면, 도암면) 지역 호우 피해 상황
7.20.(목)	▷ 현지시찰 - 양구 지역 호우 피해 상황	▷ 현지시찰 - 수해 지역 학교 호우 피해 상황	▷ 현지시찰 - 평창(진부,방림)지역 농림어업 피해 상황	▷ 현지시찰 - 양양군(양양읍, 서면), 인제군(인제읍, 북면) 지역 호우 피해 상황
7.21.(금)	(09: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09:35)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오대산으로 환수를 위한 건의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21.(금)	◆ 제3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차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11: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 제1차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11: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8.3.(목) (폐회 중)	○ 제2차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11:00) 1.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안			
8.21.(월) (폐회 중)	○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14:00)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채택의 건 3.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동계올림픽 유치단)			
8.22.(화) (폐회 중)	○ 제3차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14:00) 1. 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 현안 사항 보고(건설방재국)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6. 7. 12. (수)	1. 제16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6. 7. 12. ~ 7. 21.(10일간)
	2. 의장 선거	- 의장 : 이기순
	3. 부의장 선거	- 부의장 : 최재규, 백선열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6. 7. 13. (목)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2. 상임위원장 선거	- 의회운영위원장 : 이준연 - 기획행정위원장 : 이병선 - 교육사회위원장 : 김기남 - 산업경제위원장 : 박상수 - 관광건설위원장 : 서동철
제3차 2006. 7. 21. (금)	1.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정선소방서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정원 9명을 증원
	2.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정선소방서를 신설하고 태백, 영월소방서의 관할 구역을 일부조정
	3.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정비
	4.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 폐지 및 월정수당 신설, 원격지회의 출석비 관련조항 삭제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6. 7. 21. (금)	5.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오대산으로 환수를 위한 건의안	- 관광건설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1913년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2006년 7월에 환국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을 원래 있던 오대산 사고에 보관해 줄 것을 건의
	6.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7.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8.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2. 제169회(임시회)

가. 개 회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2006년 8월 22일 이준연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였다.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보면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9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으며, 9월 6일은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식과 제8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갖고,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현지 시찰, 대정부 활동 등을 펼쳤다.

9월 8일과 9일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고성군에서 개최된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2014동계올림픽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각각 심의·의결하였다.

나. 의사일정(2006. 9. 5. ~ 9. 14. 10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9. 5.(화)	○ 의정대표협의회 (14:00) ▷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 의회운영위원회 (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4. 2006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제17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 휴회결의			
	○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16:30)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의 건 2. 강원도 남북교육 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3. 강원도 남북교육 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9. 6.(수)	○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식 (10:00)			
	○ 제8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11:00)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9. 7.(목)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3.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 4.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	□ 강원도립대학 캠퍼스 공원화 행사 참석 (강릉시주문진읍)	□ 현지시찰 - 산림개발연구원 (춘천시 사농동) - 사방댐 시설 (춘천시 사북면) - 토고미 마을 (화천군 상서면) - 당미농원 (화천군 간동면)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에 대한 대정부 활동(국회)
9. 8.(금)	□ 한탄강댐 건설반대 관련 등 대정부활동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 의정자료수집		
9. 8.(금) ~ 9. 9.(토)	○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2014동계올림픽유치 홍보활동 - 도민생활체육대회(고성군)			
9.11.(월)	(09: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 □ 현지시찰 - 정선소방서	□ 현지시찰 - 홍성의료원(충남) - 남원의료원(전북) - 충주의료원(충북)	□ 현지시찰 - 동화지방산업단지 (원주)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 -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참석(정선) - 강원랜드(정선)	□ 의정자료수집
9.12.(화)	□ 의정자료수집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9.13.(수)	□ 의정자료수집		□ 농정산림분야 재해 대책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정부 활동(산림청, 소방방재청)	□ 현지시찰(11:00) -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공사현장 (화천군 간동면) - '통일안보관광지 개발'사업현장 (철원군 김화읍) (15:00) 1. 강원도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9.14.(목)			(09:3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 1차 시안 보고회 (10:30, 대회의실)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6. 9. 5. (화)	1.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6. 9. 5. ~ 9. 14.(10일간)
제2차 2006. 9. 14. (목)	1.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경제의 선진 도 달성과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한 도민의 의사를 수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경제선진도위원회와 강원도삶의 질일등도위원회 신설
	2.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자치법규(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3.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신설, 소방파출소 및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의 명칭을 각각 119안전센터 및 강원도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하고, 실국간 사무의 일부 조정
	4.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신설 및 국가직 직위의 지방직 전환,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증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조직 보강,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인력보강 등 지방공무원 18명을 증원 (집행기관 13명 증원, 의회사무처 5명 증원)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6. 9. 14. (목)	5. 강원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행정자치부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작성, 시달된 원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에 상응하도록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각 개별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해당 수수료를 일제 정비
	6.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상 면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면세하고자 의회의 동의 요청
	7.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과 협상내용 및 진행과정의 전면 공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협상진행 전 과정에 농업인의 참여보장 등 요구
	8.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지리정보사업의추진체계 및 기준마련
	9. 강원도 부동산 중계 수수료 및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

3. 제170회(정례회)

가. 개 회

제170회 강원도의회(정례회)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0회(정례회)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일반 안건 및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10월 16일과 1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다.

10월 17일과 18일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된 경북 김천을 방문하여 홍보 활동을 펼쳤고,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2·3·4차 본회의를 열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10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였다.

나. 의사일정(2006. 10. 10. ~ 10. 23. 14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10.(화)	○ 의정대표협의회 (13:30) ▷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4: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17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7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개회식 (16:00)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10.(화)	○ 제1차 본회의 (개회식 직후) 1. 제17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 휴회결의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0.11.(수)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 3. 소양강댐 여수로 공사 안전대책 건의안 4.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대책 건의안 5.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6.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관실) 7.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계올림픽유치단)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200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공무원교육원)	(10:00) 1.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국) 2. 강원도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농정산림국)	(10:00) 1.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환경관광문화국) 2.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방재국) 3.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실) 4.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11.(수)	8.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10.12.(목)	(10:00) 1.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국제협력실) 2.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 출자·출연 동의안 3.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미래기획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0.13.(금)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0:30) 1. 2005년도 강원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00) 1.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자치행정국) 4.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14:00) 1.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2.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강원도립대학) 3. 강원도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여성국)	(14:00) 1.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2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환동해출장소)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16.(월)	○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5.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17.(화)	○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0:00) 1. 2005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17.(화) ~ 10.18.(수)	□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홍보활동 - 전국체전(경북 김천시)			
10.18.(수)	○ 제2차 본회의 (10:00)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김영칠, 심재영, 김동자, 남경문)			
10.19.(목)			(09:30) 1.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 제3차 본회의 (10:00)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정을권, 김대천, 황철, 이성기)			
10.20.(금)				(09:40) 1.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 제4차 본회의 (10:00)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김동일, 최경순, 서동철)			
10.23.(월)	○ 제5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심의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휴회결의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6. 10. 10. (화)	1. 제17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6. 10. 10. ~ 10. 23.(14일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임기 1년의 16명의 위원 구성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감사기간 : 2006.11.21~11.30(10일간)
	4.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2차 2006. 10. 18. (수)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김영칠, 심재영, 김동자, 남경문
제3차 2006. 10. 19. (목)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정을권, 김대천, 황철, 이성기
제4차 2006. 10. 20. (금)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김동일, 최경순, 서동철
제5차 2006. 10. 23. (월)	1.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2. 2005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강원회관 부지와 건물의 매입,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의 교환과 건축면적의 일부 조정, 강릉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도 사업소의 노후청사 등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기 위한 종합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4.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에 강원도 분담액 출연(59,693백만원)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5차 2006. 10. 23. (월)	5.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대책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건의
	6. 소양강댐 여수로 공사 안전 대책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홍수조절능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 여수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3차례에 걸쳐 붕괴사고가 발생되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리, 건설교통부의 직접 담당과 확실한 안전대책 건의
	7.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촉구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05.12월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3개 시도가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8.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2005. 5. 31., 법률 제7572호)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9.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7. 15일자로 제정된 강원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동법 제3조가 삭제되면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
	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각 상임위원회 작성 내용대로 의결

4. 제171회(정례회)

가. 개 회

제171회 강원도의회(정례회)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1회(정례회) 회기 결정 및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170회(정례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과 12월 1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예비 심사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였다.

또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청 및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였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폐회 중에 5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나. 의사일정(2006. 11. 20. ~ 12. 15. 26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20.(월)	○ 의정대표협의회 (13:30) ▷ 당면 현안 사항 협의 등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4: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17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개회식 (16:00)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20.(월)	○ 제1차 본회의 (개회식 직후) 1. 제17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5분 자유발언 ▷ 휴회결의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21.(화)	□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09:00) - 평창 동계올림픽 수해복구 현장 - 알펜시아 사업장 등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 강원도재활병원 □ 행정사무감사 (13:30) (보건복지여성국)	□ 행정사무감사 (10:00) (농정산림국)	□ 행정사무감사 (10:00)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11.22.(수)	□ 행정사무감사 (10:00) (감사관실,국제협력실)	□ 행정사무감사 (10:00) (강원도교육청)	□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10:00) (농업기술원)	□ 행정사무감사 (10:00) (건설방재국)
11.23.(목)	□ 행정사무감사 (10:00) (강원도체육회, 강원발전연구원)	□ 행정사무감사 (10:00) (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 강원체육중고교 예정부지	(10:00) □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10:00) (수산자원연구원, 환동해출장소)	□ 행정사무감사 (10:00) (환경관광문화국)
11.24.(금)	□ 행정사무감사 (10:00) (동계올림픽유치단, 자치행정국)	□ 감사자료 수집	□ 감사자료 수집	□ 감사자료 수집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10:30) □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11.27.(월)	□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14:00) - 서울사무소 - 강원회관 매입 건물 - 알펜시아사업단	□ 감사 자료 수집	□ 행정사무감사 (14:00) (산업경제국)	□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14:00) - 자연환경연구소 신축공사 현장
11.28.(화)	□ 행정사무감사 (10:00) (소방본부)	□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13:30) - 사임당 교육원 □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15:00) (강원도립대학)	□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14:00) (감자원종장)	□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10:00) - 현리~진동 지방도 418호선 공사현장 - DMZ 박물관 건설공사 현장
11.29.(수)	□ 행정사무감사 (10:00) (강원도개발공사)	□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09:30) -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10:00) (산채시험장)	□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10:00)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
11.30.(목)	□ 행정사무감사 (10:00) (미래기획단, 기획관리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0:00)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0:00)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0:00)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1.(금)	(10:00) 1. 미래기획 분야 출자 출연 동의안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미래기획단)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미래기획단) 4.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기획관리 분야 출연 동의안 6.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7.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실)		(10:00) 1.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환동해출장소) 2.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환동해출장소)	
12.4.(월)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0:3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5.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4.(월)	(14: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국제협력 분야 출연 동의안 3.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국제협력실) 4.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제협력실)	(13:30) 1.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강원도립대학) 2.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강원도립대학)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14:00) 1. 농정산림분야 출연 동의안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농정산림국)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농정산림국) 4.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00) 1.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2.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3.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환경관광문화국) 4.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관광문화국)
12.5.(화)	(10:00) 1. 동계올림픽유치 분야 출연 동의안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동계올림픽유치단)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계올림픽유치단) 4.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5.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10:00) 1.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5.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00) 1. 산업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산업경제국)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경제국) 4. 강원도 비축 무연탄 관리 기금 설치 조례안	(10:00) 1.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건설방재국) 2.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방재국)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 6.(수)	○ 제1차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09:30) 1.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 협의의 건			
	(10:00) 1.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실) 2. 강원미래인재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4.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10:00)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보육 조례안 3.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4.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5.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보건복지여성국) 6.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복지여성국)	(10:00) 1.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00) 1.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공보관실)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실) 4.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5.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2. 7.(목)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3.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8.(금)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11.(월)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12.(화)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2.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12.13.(수)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10:00) 1.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강원도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안 6.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강원도재해복구 공채 조례 등 폐지 조례안 8. 강원도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9.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회기중 접수 의안 처리	□ 회기중 접수 의안 처리	□ 회기중 접수 의안 처리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14.(목)	□ 회기중 접수 의안 처리			
	※ 지방자치발전 토론회 (14:00)			
12.15.(금)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된 안건 심의 · 의결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3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채택의 건			
2007.1.8.(월) (폐회 중)	(11:3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계획 결정의 건 3.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출석증인 결정 및 요구의 건			
2007.1.12.(금) (폐회 중)	□ 행정사무조사 (10:00)			
2007.1.18.(목) (폐회 중)	□ 행정사무조사 (14:00)			
2007.1.19.(금) (폐회 중)	□ 행정사무조사 (10:00)			
2007.1.25.(목) (폐회 중)	○ 제3차 운영위원회 (16:45)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3. 17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0:00) 1.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6. 11. 20. (월)	1. 제17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6. 11. 20. ~ 12. 15.(26일간)
	2.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도지사 - 교육감
제2차 2006. 12. 15. (금)	1.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의결 -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
	2.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민회관의 탄력적·효율적 운영와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 산하기관, (사)강원도민회, 시·군민회에 대한 임대료면제 등 지원방안 도모
	3. 강원도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2004.1.1~2006.12.31)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조정
	4.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은닉·탈루세원 발굴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징수포상금을 체납액 징수 또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도 확대, 지급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6. 12. 15. (금)	5.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UN-HABITAT와 협약에 의거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센터운영을 위해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
	6.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에 따른 5명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추진에 인력보강 3명 등 8명 증원
	7.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63호)됨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명령 및 사후관리
	8.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이양된 사무를 위임규정에서 삭제
	9.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490호)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6.12.15. (금)	10. 강원도 재해복구 공채 조례 등 폐지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발행된 지방채 관련 조례가 그 기능을 완료하고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
	11. 국제협력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99.1백만원
	12. 기획관리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00백만원
	13.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 : 10억원
	14. 미래기획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원주 「지식기반형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4,510백만원,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출연 150백만원
	15. 동계올림픽 유치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3,700백만원, 2009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준비지원 60백만원, 2009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 95백만원
	1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를 모아 종합청사 신축 및 청사부지 매입
	1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의회 의사당 증축 3,360백만원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6.12.15. (금)	18. 강원도 보육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보육의 공공성 확보,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지원,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기본적 인권실현 보장
	19.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20.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부채규모 감축 등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21.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신설, 실업계고등학교 명칭 변경,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22.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지원 435백만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1,500백만원
	23.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07~2011년 기간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노인치매 조기발견 사업, 건강증진사업 계획 등)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6.12.15. (금)	24.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 기금 설치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비축무연탄의 안정적인 관리와 판매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25. 강원도립 춘천수렵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상위법 변경 및 신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6.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상위법 변경 및 신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7. 농정산림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출연 220백만원
	28. 산업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1,500백만원, (주)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출연 2,500백만원
	29. 강원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관광진흥법의 개정(1999.1.21)으로 과징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있어 그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6.12.15. (금)	30.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170백만원,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1,400백만원(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00백만원은 제외)
	31.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 120백만원
	32.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33.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34.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35.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3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37.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 홍건표 부위원장
	38.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이병선의원 외 14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MOU가 체결된 외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
	39.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및 조사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제의 -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으로 결정
	40.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조사기간 : 2007.1월~2월

5. 제172회(임시회)

가. 개 회

지난 1월 25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월 26일 이병선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2회(임시회) 회기결정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신년사가 있었으며, 2월 7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였다.

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2. 6. ~ 2. 13. 8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 6.(화)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4: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제17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007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제17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7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개회식 (16:00)			
	○ 제1차 본회의 (개회식 직후) 1. 제17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 ▷ 5분 자유발언 ▷ 휴회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 6.(화)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기타 당면 업무 협의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7.(수)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기획관리실) 3.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치행정국)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농정산림국) 2.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환경관광문화국) 2.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8.(목)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국제협력실) 2.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미래기획단)	(14:00) 1.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 이후 간주처리 예산 보고 (강원도교육청) 4.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강원도교육청)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산업경제국) 2.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농업기술원)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공보관실) 2.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 9.(금)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소방본부) 2.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감사관실) 3. 강원도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공무원교육원) 2.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강원도립대학)	(10: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환동해출장소)	□ 현지시찰 - 2014평창동계올림픽 현지실사 대비 건설방재 분야 현장지원본부 시찰 (평창군 도암면)
2. 12.(월)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1:00) 1.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처)			
		(14:00) □ 교육사회위원회 주관 2007년도 사회복지 시책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설명회(강원도개발공사 5층 대회의실)	(14:00) 1.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산업경제국)	
2.13.(화)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2. 6. (화)	1. 제17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2. 6. ~ 2. 13.(8일간)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	- 도지사, 교육감
제2차 2007. 2. 13. (화)	1.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연간 정례회를 개회할 수 있는 범위(매 30일 → 2회, 60일)와 시기 조정(11월 20일 → 11월 15일)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범위 확대 조정(15일이내 → 20일이내)
	2.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3.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선·보완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
	4.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축산물작업장(도축장)에서 도살 처리되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수수료 인상
	5.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부결 -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자부 재의 요구(관계법령의 근거 및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관계법령과 상충)
	6.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 이병선 기획행정위원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7. 교육사회위원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	- 황철 부위원장 해외연수 결과 보고

6. 제173회(임시회)

가. 개 회

2월 6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월 28일 김기남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제173회 강원도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

회기 중 의사운영 내용을 보면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3회(임시회) 회기 결정과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3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을 실시하였다.

3월 20일과 21일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3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3. 13. ~ 3. 22. 10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3.13.(화)	○ 의정대표협의회 (13:30)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4: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제17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7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3.13.(화)	(16: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기타 당면 업무 협의	(16: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14.(수)	□ 현지시찰 - 접경지역개발 사업지(철원, 양구 등)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현지시찰 - 축산기술연구센터 (횡성) -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개설 대상 (원주) -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 센터 및 재래시장(충북 충주시)	□ 현지시찰 -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 (영월~정양, 옥동교 현장) -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정선,평창,영월)
3.15.(목)		□ 현지시찰 - 원주기독병원 (원주) - 이승복 기념관 (평창)		
3.16.(금)		□ 현지시찰 - 강릉 동인병원 (강릉)		
3.19.(월)	(10:00) 1. 강원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동계올림픽유치단)		(13:30) 1. 원주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산업경제국소관)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현지시찰 - 한국농촌공사 강원도본부	(13:00) 1.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설방재국) 2.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문화재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3.20.(화)	○ 제2차 본회의 (10:00)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21.(수)	○ 제3차 본회의 (10:00)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22.(목)	○ 제4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된 안건 심의 · 의결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3. 13. (화)	1. 제17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3. 13. ~ 3. 22.(10일간)
	2.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2차 2007. 3. 20. (화)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최원자, 이준연, 임용식, 홍건표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7. 3. 21. (수)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조영기, 유순임, 권석주, 서동철
제4차 2007. 3. 22. (목)	1.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일반재정보전금 산정방법 개선 (주민등록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력 역지수 10%)
	2. 강원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세제지원
	3.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상위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관련 조항 정비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건의안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촉구
	5.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건축법」 및「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내용 반영
	6. 문화재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황철 의원 외 14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발굴·보전하기 위한 건의

7. 제174회(임시회)

가. 개 회

지난 3월 1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2일 박상수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제1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4회(임시회) 회기 결정과 이연숙 전 제2정무장관 초청 연설이 있었으며, 4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을 실시하였다.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4. 12. ~ 4. 19. 8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4.12.(목)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4. 제17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7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본회의 초청연설 ▷ 5분 자유발언 ▷ 휴회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4.12.(목)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8: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13.(금)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16.(월)	□ 일일체험 봉사활동 및 현지시찰 - 강릉의료원 - 동해안 산불 우심지역 산불감시 1일 체험활동 (삼척 노곡면)	□ 현지시찰 -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춘천시 동면) - 강원도 여성정책 개발 센터(춘천시 석사동)	(10:00) 1. 원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4.17.(화)		□ 현지시찰 -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 (양구문화체육관) - 양구도서관(양구읍)	□ 현지시찰 - 하이트맥주 홍천공장 - 화촌농산 RPC - 홍천 흑돼지 영농조합법인	□ 현지시찰 - 도립무용단·국악관현악단 연습장 (춘천 삼천·우두동) (15:00) 1.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4.18.(수)	□ 현지시찰 - 삼척 너와 정보화 마을 시찰 및 주민 간담회 (14:00) 1.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강원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감사관실 소관 현안 보고	□ 일일체험 봉사활동 -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남양동산 (춘천시 신북읍)	□ 일일체험 봉사활동 - 호반영농조합법인 육묘장 (춘천시 동면)	□ 일일체험 봉사활동 - 지방도 460호선 일원에서 일일 수로원 체험 (화천 ~ 양구간)
4.19.(목)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된 안건 심의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4. 12. (목)	1. 제17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4. 12. ~ 4. 19.(8일간)
	2. 본회의 초청연설	- 이연숙 전 제2정무장관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7. 4. 19. (목)	1.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예산안과 결산 제출 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 제출, 결산 승인 시 예산편성·운용 의견서 채택 등
	2.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도민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제고
	3.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인용법령이나 조례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문구수정
	4.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출산장려 정책 지원,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등
	5.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적용제외 대상 직위에 정무부지사 추가
	6.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폐지에 대한 일괄 정비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의 변경 매입, 중형급 이상의 소방헬기 구입 및 소형헬기 매각 등
	8.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홍건표의원 외 15명 발의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 이용료 징수를 유예

8. 제175회(임시회)

가. 개 회

4월 1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30일 서동철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5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및 교육감의 제안 설명이 있었다.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및 5월 21일과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5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강원도와 도교육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5. 9. ~ 5. 22. 14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5. 9. (수)	○ 의정대표협의회 (13:00) ▷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4. 2007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제17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5. 9. (수)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7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3.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5분 자유발언 ▷ 휴회결의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10. (목)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국제협력실) 3.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소방본부) 4.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미래기획단) 5.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감사관실)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3.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 동의안 4.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강원전문대학)	(10:00) 1.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농정산림국) 2. 강원도립 춘천수렵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농업기술원)	(10:00) 1.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건설방재국) 2. 강원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공보관실) 4.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5.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환경관광문화국)
5.11. (금)		(10:00) 1. 강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이승복기념관 운영 활성화 대책 보고 3.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5.14. (월)		(10:00) 1.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보건복지여성국)	(11:00) 1.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산업경제국) 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환동해출장소)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5.15. (화)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0:00) 1.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2.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3.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3:00) 1.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자치행정국) 4.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 예산안 (기획관리실)			
5.16. (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5.17. (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5.18. (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5.21. (월)	(15: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남북강원 단절 철도 조기개설 건의안 3. 당면 사항 업무 보고 (강원도개발공사)			
5.22. (화)			(09: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해양심층수 관련 법안의 조기입법 건의안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11:3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제17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5. 9. (수)	1. 제17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5. 9. ~ 5. 22.(14일간)
	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도지사
	3.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 교육감
제2차 2007. 5. 22. (화)	1. 강원도의회의원 국제교류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여행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2.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의원연구회 등록요건 완화
	3.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혁신분권과 전담인력 15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8.6.30일까지 연장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한국여성수련원 신축부지 교환 취득 및 처분
	5. 동해선 금강산~제진역 구간 개통과 관련한 남북강원 단절 철도 조기개설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동해선(강릉역~제진역)과 경원선(신탄리~철원), 금강산, 전철선(철원~내금강) 철도 조기 개설 건의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7. 5. 22. (화)	6. 강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76호)됨에 따라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당지급 근거·수당종류 등을 개선
	7.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사업 등 6개사업에 126억 1,65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출연
	8.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전문대학 영역별 특성화사업 등 3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90백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출연
	9. 강원도립 춘천수렵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숙박시설의 비수기 요금 30% 인하 및 소회의실 7~8월 기준요금 인하
	10. 해양심층수 관련법안 조기입법 건의안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해양심층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간 역할 체계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 요구
	11.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상향조정, 수수료 징수조항 신설, 사안별 심의위원 선정을 명문화 등
	12.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13. 2007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9명, 2007.5.25.~6.13.(20일간)

9. 제176회(임시회)

가. 개 회

지난 5월 9일 제175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운영 계획과 같이 6월 14일부터 9일간으로 협의하였으나 5월 22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정질문 유예 및 회기를 단축하여 6월 14일부터 7일간 운영하기로 변경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6월 4일 박명서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17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6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제177회로 예정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결산검사 기법 연찬회를 열었다.

6월 18일과 19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6. 14. ~ 6. 20. 7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6.14.(목)	○ 의회운영위원회 (14: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4. 제177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7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 휴회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6.14.(목)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철회 건의안
6.15.(금)	(10:00 ~ 12:00) 2006회계년도 결산심사기법 연찬회(대회의실)			
6.18.(월)	□ 현지시찰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지(평창)	(10:00) 1.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현지시찰 - 춘천교육청		
6.19.(화)	□ 현지시찰 - 태백 안전테마파크 건립지 (16:30) 1.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2.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3.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현지시찰 - 화천교육청 - 철원교육청	(13:00) 1. 강원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어항시설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4.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촉구 결의안 □ 현지시찰 - 미래농업교육원	□ 현지시찰 - 도 이미지 광고 매체 현지점검 (서울,인천,춘천)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6.20.(목)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6. 14. (목)	1. 제17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6. 14. ~ 6. 20.(7일간)
제2차 2007. 6. 20. (수)	1.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민회관의 위탁운영 및 회관의 사용료·관리비·제세 공과금 등 부과·징수 근거규정 마련
	2.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방 발전위원회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강원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3.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시·도 출신인사에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4.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및 진부119안전센터 청사부지 교환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7. 6. 20. (수)	5. 이승복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이승복기념관의 소속기관 변경과 기금출납원과 장학회 간사인 교학담당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
	6.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8098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759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7.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자금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 심의기구 설치·운영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8. 강원도 어항시설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어항법」 폐지 및「어촌·어항법」제정·시행으로 도내 지방어항의 관리업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이를 폐지
	9.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촉구 결의안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제도마련과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10.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철회 건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도내 3개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이 중단이나 재검토 대상이 되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 촉구

10. 제177회(정례회)

가. 개 회

2007년도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7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제1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7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7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월 9일은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7월 13일과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청과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을 기립 투표로 가결시켜 도정 최대 현안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 의사일정(2007. 7. 5. ~ 7. 18. 14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 5. (목)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5: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7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차 본회의 (16:00) : 개회식 직후 1. 제177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신상발언 ▷ 휴회 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 5. (목)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7. 6. (금)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 3.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소방본부 소관) 4.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국제협력실 소관) 5.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국제협력실 소관)		(10: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농정산림국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정산림국 소관)	(10: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3.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강원도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5.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6.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9. (월)	○ 강원도민의 날 행사 (10:00)			
	(15: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실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관실 소관)	(14: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강원도립대학 소관)	(15: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환동해출장소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환동해출장소 소관)	(14:3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 9. (월)		3.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4.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5.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7.10. (화)	(10:00) 1. 강원도 혁신도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미래기획단 소관) 3.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미래기획단 소관) 4.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 강원발전연구원 현안 사항 보고 (15:00)	(10:00) 1.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6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강원도교육청 소관) 3.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강원도교육청 소관)	(10: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산업경제국 소관)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14:00)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방재국 소관) 2.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건설방재국 소관) 3.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 구역 운영 청원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11. (수)	(10: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3.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 4.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10: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10:00) 1. 200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실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공보관실 소관)
7.12. (목)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1:00) 1. 2006회계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회사무처 소관) 3.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7.13. (금)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5. 2006회계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16. (월)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0:00) 1. 2006회계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 채택의 건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7.18. (수)	◆ 제2차 본회의 (09: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7. 5. (목)	1. 제177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7. 5. ~ 7. 18.(14일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임기 1년의 16명의 위원 구성
제2차 2007. 7. 18. (수)	1. 2018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안	- 조영기, 이성기, 유순임, 홍건표, 이영덕 의원 외 22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18동계올림픽에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여 반드시 유치할 것을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결의
	2. 2006회계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3. 2006회계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교육감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4.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40분 이내, 의장 허가 시 10분 추가 가능
	5. 강원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6.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마현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7. 7. 18. (수)	7. 강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 · 소비촉진 정책에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인 기반 구축
	8.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홍건표 의원 외 11명 발의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환경대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도록 공적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9.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1983년에 제정된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2001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 운영되어 기능 소멸로 폐지

11. 제178회(임시회)

가. 개 회

7월 5일 고진국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17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8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으며, 9월 6일은 도의회 개원 51주년 기념식과 제9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9월 7일은 도의회 추계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시찰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심사하였다.

9월 12일에는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원인 분석 및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된 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178회(임시회)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9. 5. ~ 9. 13. 9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9. 5. (수)	○ 의정대표협의회 (13:30)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7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5.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 휴회 결의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9. 6. (목)	○ 도의회 개원 51주년 기념식 (10:00, 본회의장)			
	○ 제9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 (11:00, 라데나리조트)			
9. 7. (금)	○ 도의회 추계체육대회 (10:00 ~ 15:00, 한강수력발전처 춘천댐운동장)			
9.10. (월)	(14:00) 1.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업무보고	(14:30) 1. 강원도 건강가정지원 조례안 2.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현지시찰 - 강원도 진품센터 (서울,15:00~16:00)	(11:00) 1.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건설방재국소관 현안사항 보고 및 간담회 - 2006년 및 2007년 수해복구 현황 보고 -「강원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관련 추진 상황 보고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9.11. (화)	(11:00) 1. 강원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10:00) 1. 강원도교육청 학교 체육 진흥 및 포상 에 관한 조례안 2.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강원도립 학교운영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강원도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기관 방문 - 농촌진흥청 농업박물관(수원, 10:00~11:00) - 한국농업대학 (화성, 1400~15:00)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9.12. (수)	(10:00)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2.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토론회 (13:30~16:00,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9.13. (목)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9. 5. (수)	1. 제17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9. 5. ~ 9. 13.(9일간)
제2차 2007. 9. 13. (목)	1.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 조정 및 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신설
	2.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관할 구역 안 지하수 보조 관측망별 수위측정 등 7개 사무 정비,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사무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지방공사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7. 9. 13. (목)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
	4.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무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복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등 신규업무 발생과 그 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5.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사회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자 정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전체종사자의 5%이상으로 정함
	6. 강원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체육대회 출전선수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격려금을 지급 근거규정 마련 및 표창수여 체육대회 및 포상유형, 포상방법 및 부상 등 지급기준 마련
	7.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시설 기준 및 필요한 시설·설비에 대한 규정 등 신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설정 및 학원생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
	8.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자격을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보완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학교급식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신설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7. 9. 13. (목)	9.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개정된 법률조항에 맞도록 정비
	10.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조례제명 및 인용법령 명칭의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전후에 낫표표기 삽입 및 상위근거법령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
	11.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회 위원총수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보완개선
	12.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조례제명 및 인용법령 명칭의 띄어쓰기와 인용법령 전후에 낫표표기 삽입보완, 상위근거법령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보완
	13.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조례 제명 및 인용법령 명칭의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 보완 등
	14. 강원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근거법령의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
	15.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위탁 관련조항 신설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 정비, 감면규정 개정 등

12. 제179회(임시회)

가. 개 회

10월 4일 권순일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건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9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 및 일반 안건 심사, 현지 시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7일은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도의회를 운영하여 직접 회의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10월 23일과 24일은 제2차·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및 송전탑 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10. 16. ~ 10. 25. 10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16. (화)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1: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6.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table>
<tr><th>일 자</th><th>기획행정위원회</th><th>교육사회위원회</th><th>산업경제위원회</th><th>관광건설위원회</th></tr>
<tr><td rowspan="3">10.16.
(화)</td><td colspan="4">◆ 제1차 본회의 (14:00)
1.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 휴회 결의</td></tr>
<tr><td colspan="4">※ 제7대 전반기 어린이 도의회 예행연습 (15:00)</td></tr>
<tr><td>(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5.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td><td>(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td><td>(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기타 당면 업무 협의</td><td>(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td></tr>
<tr><td rowspan="2">10.17.
(수)</td><td colspan="4">○ 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어린이 도의회 개최(10:00~11:30, 본회의장)</td></tr>
<tr><td>(10:00)
1.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남북교류 협력시대 강원도관련 의제 채택 건의안</td><td>□ 현지시찰
- 홍천군 장애인 근로 작업장
-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현장(강릉시)</td><td>(10:00)
1. 강원도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td><td>□ 현지시찰
- 경주세계문화EXPO 2007 「강원도의 날」 행사 참관</td></tr>
</table>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17. (수)			□ 현지시찰(15:00)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원주)	
10.18. (목)	□ 현지시찰 - 알펜시아 조성 사업장			
10.19. (금)	□ 각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 등)			
10.22. (월)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1:30) 1.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4.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토론회(새로운 남북관계, 강원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3:00~16:00,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10.23. (화)	(09:3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과 관련한 강원도 로스쿨 설치 촉구 건의안 3.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09:00) 1.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09:30) 1.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09:20) 1.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작성의 건
	◆ 제2차 본회의 (10:00)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24. (수)	◆ 제3차 본회의 (10:00)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1차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13: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0.25. (목)	◆ 제4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10. 16. (화)	1. 제17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10. 16. ~ 10. 25.(10일간)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감사기간 : 2007. 11. 19.(월) ~ 11. 28.(수), 10일간
	3. 강원도지사 등 관 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2차 2007. 10. 23. (화)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진기엽, 정을권, 서동철, 홍건표, 남경문
제3차 2007. 10. 24. (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최원자, 황 철, 이명열, 김동일
제4차 2007. 10. 25. (목)	1.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4차 2007. 10. 25. (목)	2.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
	3.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며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근거 마련
	4.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 규제정책의 심의·조정과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를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라 소방관서 정원 16명 증원 등 총 34명 증원
	6. 강원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대부료 감면 규정 신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7.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장학생 수혜대상자 중 중학생을 삭제하고 대학생을 추가, 장학생의 정원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에서 “5%이내”로 축소,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 지급 등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4차 2007. 10. 25. (목)	8. 남북협력시대 강원도 관련 의제 반영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이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향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계획된 남북총리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 강원도 관련 의제 반영 건의
	9. 정부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과 관련한 강원도 로스쿨 설치 촉구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로스쿨 관련 법률의 통과(7.3일) 및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10.17일)한 로스쿨 총입학정원(1,500명)과 관련하여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할 것과 1시도 1로스쿨 설치를 정부에 건의
	10. 강원도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계획의 승인
	12.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9명의 의원으로 구성, 2008년까지 활동 예정
	13.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 이인섭 위원장

13. 제180회(정례회)

가. 개 회

2007년도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0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및 교육감의 시정 연설과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청과 교육청의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으며, 11월 15일과 12월 13일에는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다.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63회(정례회)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또한 1월 25일 폐회 중에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회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 등을 수립하였다.

나. 의사일정(2007. 11. 15. ~ 12. 14. 30일간)

<table>
<tr><th>일 자</th><th>기획행정위원회</th><th>교육사회위원회</th><th>산업경제위원회</th><th>관광건설위원회</th></tr>
<tr><td rowspan="5">11.15.
(목)</td><td colspan="4">○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09:2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결정의 건</td></tr>
<tr><td colspan="4">○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09: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td></tr>
<tr><td colspan="4">◇ 개회식 (10:00) :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개회식</td></tr>
<tr><td colspan="4">◆ 제1차 본회의 (10:00) : 개회식 직후
1.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 휴회 결의</td></tr>
<tr><td>(11: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촉구 건의안</td><td></td><td>(11: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기타 당면 업무 협의</td><td></td></tr>
<tr><td rowspan="2">11.16.
(금)</td><td colspan="4">○ 제2차 본회의 (15:00)
1.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td></tr>
<tr><td></td><td></td><td></td><td>(10:45)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td></tr>
<tr><td>11.19.
(월)</td><td>(14:00)
□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미래기획단)</td><td>(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td><td>(10:00)
□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농정산림국)

(10:00)
□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공무원교육원)

(14:00)
□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보건복지여성국)</td><td>(10:00)
□ 2007년도 행정 사무 감사 (현지확인)
- 인제 평화생명 동산 현장 (환경관광문화국)
- 인제 한계2리 집단이주시설 현장(건설방재국)</td></tr>
</table>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19. (월)				□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현지확인) - 인제 한계천 수해복구공사 현장(건설방재국) (14:30) □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현지감사 : 자연환경 연구사업소)
11.20. (화)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소방본부)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여성국)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국)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동강관리 사업소) (11:00) □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현지확인) - 식물생태관 조성사업 현장 (동강관리사업소) -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사업 현장 (동강관리사업소) - 지방도 413호선 문곡~창리 확·포장 공사 현장 (건설방재국)
11.21. (수)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교육청)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내수면개발 시험장)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도로관리 사업소)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21. (수)			(14: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농업기술원)	(11:3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 염화물교반기, 도로대장 전산화 시연 (도로관리사업소) - 국지도 70호선 신매~오월간 확·포장공사 현장 (건설방재국)
11.22. (목)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체육회, 강원발전연구원)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장)	(14: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환동해출장소)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광문화국)
11.23. (금)	※ 의회운영위원회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14: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관리실)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가축위생시험소)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산림개발연구원)	
11.26. (월)	(14: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원도개발공사)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 원주반곡초·중학교 - 강원예술고등학교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방재국)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27. (화)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제협력실)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강원도립대학)	(09: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주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10: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공보관실) (14:00)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공보관실)
11.28. (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1.29. (목)	(10:00) 1. 미래기획 분야 출연동의안 2.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미래기획단) 3.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기획단) 4.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안 5.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소방본부) 6.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소방본부)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4.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9. 강원도 남부교육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00) 1.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 2.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농정산림국) 3.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농정산림국)	(10:00) 1.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건설방재국) 2.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방재국) 3. 강원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29. (목)		10.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11. 2008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30. (금)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0:3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3.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4.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14:00) 1. 강원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자치행정 분야 출연 동의안 4.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5.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14:00) 1.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2.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12.3. (월)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00) 1. 강원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2. 강원도 기초 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14:00) 1. 속초 ~ 니이가타~ 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 법인 강원도 출자동의안 2.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10:00) 1.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2.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공보관실)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3. (월)	3.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관실) 4.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4.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보건복지여성국) 5.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복지여성국)	3.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환동해출장소) 4.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환동해출장소)	3.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4. (화)	(10:00) 1.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간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3. 국제협력 분야 출연 동의안 4.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국제협력실) 5.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제협력실) 6. 강원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기획관리 분야 출연 동의안 8.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9.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실)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공무원교육원) 4.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5.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강원도립대학) 6.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강원도립대학)	(10:00) 1. 산업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 2.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경제국) 4.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산업경제국)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 건의안 3.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4.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환경관광문화국) 5.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관광문화국)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5. (수)			(10:00) 1.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2.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3.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6. (목)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12.7. (금)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12.10. (월)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12.11. (화)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8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12.12. (수)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8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12.13. (목)	○ 제2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15:00) 1. 송전탑 관련 업무보고 2.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			
			(17: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석탄산업법 조기 개정 촉구 건의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2.14.(금)	◆ 제3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25.(금) (폐회 중)	○ 제3차 운영위원회 (16: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4. 2008년도 도의회운영 기본계획안 5.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7. 11. 15. (목)	1.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7. 11. 15. ~ 12. 14.(30일간)
제2차 2007. 11. 16. (금)	1.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도지사 - 교육감
	2.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촉구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전국 유일의 고등법원 미 수혜지역인 강원도에 서울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및 영동지역 개인 회생(파산) 재판부 설치 건의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7. 12. 14. (금)	1. 강원도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201만 3천원에서 238만 8천원으로 37만 5천원 인상
	2. 강원도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인터넷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및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3.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시행(2007. 4. 4)됨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강원도 화재 안전관리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기준,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등)
	5. 강원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
	6.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강원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7. 12. 14. (금)	7.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수를 3,471명에서 9명 증원된 3,480명으로 함 (집행기관 8명 증원, 의회사무처 1명 증원)
	8.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 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와 필리핀 세부주가 1999년부터 지속해온 친선교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시켜 양 지역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자매결연 체결
	9.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신설(2007.1.2)되었으나, 국내외 훈련 운영을 위한 시설이 없어 현 자연환경연구공원 내에 생활관 신축 (건물신축 : 1동 / 2,013.57㎡ / 2,500백만원)
	10. 국제협력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 103.8백만원
	11. 기획관리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 2,000백만원
	12. 자치행정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미래인재 육성사업 출연 : 1,000백만원
	13. 미래기획 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20,041백만원, 2007, 2008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사업 출연 61백만원, 2008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출연 150백만원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7. 12. 14. (금)	14.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제3조 중 "85세이상 장수노인"을 "2007년 12월31일 기준 85세이상 장수노인"으로 변경
	15.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2006.12.20)으로「지방교육행정협의회」설치가 의무화되어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6.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징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17.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황철 의원외 13명 발의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도내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시 도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18.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남북강원도간의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심의기구 구성
	19.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남북강원도간에 교육교류·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운영
	20.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교육위원 월정수당을 142만원에서 1,833,500원으로 개정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7. 12. 14. (금)	21.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강원교육정보원」의 신설에 따라 관리 운영사항 규정 및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22. 강원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유 1원, 초 2교, 중 1교),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유 1원, 초 7교, 중 1교, 고 1교), 학교 명칭 변경(초 1교, 고 2교), 학교 위치 변경(초 1교, 중 1교, 고 1교)
	23.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 범위 구분적용, 혁신도시 건설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신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등
	24.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 출연 750백만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추진 935.5백만원, 지방의료원 체불임금 해소 지원 1,129백만원, 지방의료원 단기부채상환지원 1,000백만원, 영월의료원 부대시설 확충 445백만원
	25.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동해항과 속초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하여 무역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7. 12. 14. (금)	26.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사업영위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 시장·군수와 협의 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전기업에 임대료의 일부 지원 등
	27.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 개설을 위한 합작법인 강원도 출자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 항로개설을 위한 합작법인에 대한 자본금 3억원 출자
	28. 농정산림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비 출연 1,000백만원
	29. 산업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 출연 6,370백만원,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출연 1,500백만원
	30. 석탄산업법 조기 개정 촉구 건의안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국영광업으로 하여금 인접구역을 통합개발토록 하는 내용의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촉구
	31. 강원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및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3차 2007. 12. 14. (금)	32.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교통부령 제560호)으로 자동차 부분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가스자동차의 정비 또는 폐차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 등을 반영
	33.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지원 사업 출연 1억 2천만원
	34.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170백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출연 1,400백만원
	35. 양양~백두산 직항로 유치 건의안	- 관광건설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를 설악권~금강권 관광벨트에 이어 백두산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성장시켜 미래 환동해권의 관광허브로 발전하고자 양양~백두산(삼지연) 직항로의 유치를 건의
	36.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37.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38. 2008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39.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4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14. 제181회(임시회)

가. 개 회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월 29일 김대천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2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1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 및 도지사와 교육감의 신년인사가 있었으며,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하였다.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였다.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8. 2. 11. ~ 2. 19. 9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11.(월)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5:1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8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18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개회식 (16:00)			
	○ 제1차 본회의 (개회식 직후) 1.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 2.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5분 자유발언 ▷ 휴회 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11.(월)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기타 당면 업무 협의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12.(화)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소방본부 소관) 3.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미래기획단 소관) □ 당면현안 청취 및 간담회(강원발전연구원)	(14: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농정산림국 소관)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4. 설악산 국립공원 등 산로 추가개방 건의안
2.13.(수)	(17:00) 1.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 현지시찰 : 2008 국제동계대회 준비사항 -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대회장 (강릉빙상장) - 드림프로그램 (보광 휘닉스파크)	(10:00) 1.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간주 처리 예산 보고 (강원도교육청 소관) 4.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강원도교육청 소관)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건설방재국 소관) 2.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14.(목)	(10:00) □ 당면 현안 청취 및 간담회(강원도개발공사) □ 현지시찰 - 평창 바이애슬론 경기장 -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사 현장 □ 당면 현안 청취 및 간담회 (강원도체육회)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15.(금)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0:3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3.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회사무처 소관)			
	(13:00)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강원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2.18.(월)	(14: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민북전략촌 토지 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 3.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국제협력실 소관) 4.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감사관실 소관)		(14: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환동해 출장소 소관) 3.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 관련 건의안	(14:00) 1.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공보관실 소관) 2.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19.(화)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된 안건 심의 · 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8. 2. 11. (월)	1. 제18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8. 2. 11. ~ 2. 19.(9일간)
	2.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인사	- 도지사 및 교육감
	3.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확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예산안 제출 시기와 연계되도록 “11월15일”에서 “11월 12일”로 조정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8. 2. 11. (월)	4.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5분 자유발언 신청의원이 4인을 초과할 경우 의원별로 해당 연도의 5분 자유발언 횟수와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
제2차 2008. 2. 19. (화)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미래기획단 폐치 및 투자유치사업본부 신설, 실·국·본부의 분장사무 조정
	2.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478명에서 14명이 증원된 3,492명으로 함 (본청 8명, 출장소 1명, 사업소 5명 순증)
	3. 강원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및 일부 감면대상 조정
	4.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4건 신설,「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공포·시행에 따른 해당 수수료 3건 개정
	5. 민북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 촉구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전략촌 토지문제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지원대책, 주관부처의 일원화 및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6.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3,988인을 3,780인으로 208명 감원)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8. 2. 19. (화)	7.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불용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절차의 합리화, 물품의 망실·훼손시 보고체계 개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8. 내국인 출입을 전제로 한 새만금 해양카지노 건설 관련 건의안	- 산업경제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한이 만료되는 2015년까지는 전북 새만금 해양카지노를 비롯하여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의 설립의 불허 건의
	9.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정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10.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년도 2006년을 2010년으로 개정
	11. 설악산 국립공원 등산로 추가 개방 건의안	- 관광건설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대청봉 화채능선 등산코스 및 비룡폭포에서 토왕성폭포까지의 등산로 추가 개방과 설악동 B·C지구 재정비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12.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조기 착공 건의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사업을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설정하고 조기 착공해 줄 것과 강원 북서부지역(춘천, 화천, 철원지역)과 경기 중북부지역(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자유로에 연결해 줄 것을 건의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8. 2. 19. (화)	13.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특위 구성일 부터 2009. 2월말 까지 1년간 활동 예정

15. 제182회(임시회)

가. 개 회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월 29일 김동자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5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제182회 강원도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2회(임시회) 회기 결정과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3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현지 시찰을 실시하였다.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3월 19일에는 위원회 활동 기본계획 등을 채택하였다.

3월 19일과 20일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3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의사일정(2008. 3. 13. ~ 3. 21. 9일간)

<table>
<tr><th>일 자</th><th>기획행정위원회</th><th>교육사회위원회</th><th>산업경제위원회</th><th>관광건설위원회</th></tr>
<tr><td rowspan="4">3.13.(목)</td><td colspan="4">○ 제1차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13: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td></tr>
<tr><td colspan="4">○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제18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18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td></tr>
<tr><td colspan="4">◆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8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 휴회 결의</td></tr>
<tr><td>(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td><td>(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td><td>(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기타 당면 업무 협의
※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방안 간담회 (15:00)</td><td>(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td></tr>
<tr><td>3.14.(금)</td><td></td><td></td><td></td><td></td></tr>
<tr><td>3.17.(월)</td><td>□ 현지시찰
- 춘천 청평사 (11:00)
- 영월 보덕사 (17:00)</td><td>□ 현지시찰
- 강원 영어체험 학습장(13:30)
- 속초 청해학교 (15:30)</td><td>□ 현지시찰
- 강릉과학연구(산업)단지 시찰 (15:00)
- 동해안권 어촌 활력화 방안 간담회 (17:00)</td><td>(15:0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td></tr>
</table>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3.17.(월)				(15:00) 3.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업무보고(건설방재국 소관 신설부서) 5.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3.18.(화)	□ 현지시찰 - 원주 구룡사 (11:00) - 횡성 풍수원 성당 (14:00) - 홍천 수타사 (15:30)	□ 현지시찰 - 속초의료원(09:30)	□ 현지시찰 - 영월 훈제 송어 가공 공장(11:00)	□ 현지시찰 - 양구 국토 정중앙 테마공원 조성 사업장(10:40)
3.19.(수)	◆ 제2차 본회의 (10:00)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15:30)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도내 주요댐 관련 업무보고(건설방재국 소관) 3. 댐주변지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 채택의 건			
3.20.(목)	◆ 제3차 본회의 (10:00)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1차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15:00)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송전탑·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의안			
3.21.(금)	◆ 제4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8. 3. 13. (목)	1. 제18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8. 3. 13. ~ 3. 21.(9일간)
	2.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폐지된 "미래기획단"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투자유치사업본부"를 업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
	3.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2차 2008. 3. 19. (수)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임용식, 김기남, 박명서
제3차 2008. 3. 20. (목)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조영기, 김동일, 김대천
제4차 2008. 3. 21. (금)	1. 강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재영 의원 외 8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각종 학술용역사업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강원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황철 의원 외 11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3.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세국 의원 외 12명 발의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재향군인회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 등 규정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4차 2008. 3. 21. (금)	4.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2008.1.1.)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직제변경 사항 등을 반영
	5.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 조영기·김동일 의원 외 16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
	6.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도내 지방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도로상태에 따라 차별 적용, 배수시설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
	7.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
	8. 송전탑·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건의안	-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송전탑 설치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15만 4천 볼트 미만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현실성 있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 등 건의

16. 제183회(임시회)

가. 개 회

3월 1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1일 남경문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8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3회(임시회) 회기 결정과 김성훈 상지대총장 초청 연설이 있었으며, 4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현지 시찰, 도민생활현장 체험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종료하였다.

나. 의사일정(2008. 4. 17. ~ 4. 24. 8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4.17.(목)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5: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8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4. 2008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5. 제1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83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본회의 초청연설(김성훈 상지대 총장) ▷ 5분 자유발언 ▷ 휴회 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4.17.(목)	(17:1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3. 강원도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18.(금)	□ 현지실사(09: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신축 및 부지 교환(고성) - 도유림 집단화 및 산림경영 부지 교환(양양)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투자유치사업본부) 2.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00) 1.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건설방재국 현안 사항 보고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 관련)
4.21.(월)	□ 도민생활현장 체험 봉사활동 -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		□ 도민생활현장 체험 봉사활동 - 화악산 화훼작목반 (10:00)	
4.22.(화)			□ 현지시찰(인제군) - 기린면 북리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장(14:00) - 내린천 두부클러스터 사업장(15:00)	□ 현지시찰 - 홍천 수타사 및 성보박물관(13:00) - 원주 강원감영 (16:00)
4.23.(수)	(10:00) 1.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국제협력실)	□ 도민생활현장 체험 봉사활동 - 춘천 종합사회복지관(10:30)	□ 현지시찰(고성군) - 간성 라벤더 테마마을 육성사업장 (10:00)	□ 현지시찰 - 횡성댐 광역상수도 정수장(10:00)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4.23.(수)	2.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건봉 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장 (10:40) - 죽왕 삼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장 (11:30)	□ 도민생활현장 체험 봉사활동 -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13:30)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4.24.(목)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8. 4. 17. (목)	1. 제18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8. 4. 17. ~ 4. 24.(8일간)
	2. 본회의 초청연설	- 김성훈 상지대총장
제2차 2008. 4. 24. (금)	1.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김영칠 의원 외 10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발급 및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
	2.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8. 4. 24. (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한국여성수련원 신축부지 교환 취득 및 처분 - 씨감자 저장고,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의 신축,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및 도유림 집단화·산림경영 부지의 교환 취득 및 처분 등
	4. 강원도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	- 김동일·임용식 의원 외 10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신청절차 및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규정,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
	5. 강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기업의 고용 보조금 지원, 지원받은 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또는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 사후관리 강화

17. 제184회(임시회)

가. 개 회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28일 이강덕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다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4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

획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 및 교육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강원도와 도교육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0일 폐회 중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18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등을 협의하고, 제7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심의하였다.

나. 의사일정(2008. 5. 13. ~ 5. 26. 14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5.13.(화)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4: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4. 제1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3.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휴회 결의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5.13.(화)	(15: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당면업무 협의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5.14.(수)	(14: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 3.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강원도교육청 소관)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농정산림국 소관)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3.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건설방재국 소관) 2.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강원도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안 4.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공보관실 소관)
5.15.(목)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국제협력실 소관)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강원전문대학 소관) 2.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4.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소관)	(10:00) 1. 산업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산업경제국 소관) 3. 2008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산업경제국 소관) 4. 강원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강원도 보건환경연구 원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5.15.(목)			5.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환동해출장소 소관)	4.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환경관광문화국 소관) 5.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16.(금)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5.19.(월)	○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1:3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4:00) 1.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3. 자치행정 분야 출연 동의안 4.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5.20.(화)	(10:00) 1.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기획관리 분야 출연 동의안 3.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5.21.(수)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3.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22.(목)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5.23.(금)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 1.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5.26.(월)	(09:3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			
	◆ 제2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 · 제안된 안건 심의 · 의결 ▷ 5분 자유 발언 (신청 의원) ▷ 회의록 서명 의원			
6.10.(화) (폐회 중)	○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7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6. 제186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7. 접경지역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8. 5. 13. (화)	1. 제1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8. 5. 13. ~ 5. 26.(14일간)
	2.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도지사
	3.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교육감
	4.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	- 이강덕·서동철 의원 외 10명 발의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국회의정연수원 건립부지가 고성군 토성면 도원지구로 '08.4월 최종 결정되었으나 일부지역 및 공당에서 접근성과 제17대 국회 임기말 결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논란을 제공하고 있어 재검토 논란 중단 및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의 조속한 추진 건의
제2차 2008. 5. 26. (월)	1.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정부부처(장관) 명칭 변경에 따른 17개 조례 정비 및 법명변경에 따른 1개 조례 정비
	2.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
	3. 기획관리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 500백만원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8. 5. 26. (월)	4.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09 평창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개최 출연 2,000백만원, 2009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 준비 지원 출연 1,000백만원
	5.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건의안	-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동·서·남해안권특별법에 설악산 삭도 및 궤도 설치 사업, 경전철 사업의 포함과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율의 구체화 등을 건의
	6.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안	- 김동일·유순임 의원 외 10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경로당 기능강화와 보호·육성의 시책 강구, 정기적인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등
	7.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6,734백만원(국비3,367),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35백만원(전액국비), 강릉의료원 시설보수 100백만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10백만원은 삭제)
	8.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 사무 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정을권 의원 외 12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수시로 시험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술원에서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험 거부 조항 신설
	9. 산업경제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 출연 550백만원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8. 5. 26. (월)	10. 강원도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05. 12. 30. 제정·공포되고 '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11.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공회전의 제한(5분 초과), 단속공무원의 임명,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일부 권한의 위임 등
	12. 강원도 경관 형성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강원도 고유의 특성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갖춘 강원도형 경관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13.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이준연·박명서 의원 외 9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지사 관리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도지정문화재 외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확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방재대책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명시, 소방 및 방재설비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문화재애호운동에 관한 사항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14.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이영덕·홍건표 의원 외 11명 발의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4조(수수료 감면) 제2항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검사료 일부 감면(50%) 조항 신설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2차 2008. 5. 26. (월)	15.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연 500백만원
	16.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 경정 예산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수정가결
	17.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18.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 교육감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19.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9명, 위촉기간 : 2008.5.28~6.16, 20일간

18. 제185회(임시회)

가. 개 회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 5일 이명열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1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

회기 중 의사 운영 내용을 보면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5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 시찰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6월 24일과 폐회 중인 7월 4일에 위원회를 열어 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상정 및 댐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 받았다.

6월 24일과 25일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의사일정(2008. 6. 18. ~ 6. 26. 9일간)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6.18. (수)	◆ 제1차 본회의 (16:00) 1. 제1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 ▷ 휴회 결의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의료원 경영개선 특별보고(보건복지여성국)	(17: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3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6.19. (목)	□ 현지시찰(13:00) - 영월소방서 운영 실태 확인	□ 현지시찰(09:50) - 강원교육정보원 (행구동) - 원주고등학교 이전사업장(반곡동) - 원주 무삼초등학교 신설사업장 (무실동) -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사업장 (봉평면) - 평창 문화복지센터 (평창읍)	□ 현지시찰(11:00) - 원주 (주)강원LPC (축산물종합처리장) - 횡성축협 생축사업장	□ 현지시찰(10:00) - 강림~수주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 정양~하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 강원랜드 관광 운영 실태 점검
6.20. (금)			□ 현지시찰(11:00) - 강원도립 춘천 수렵장	□ 현지시찰(09:30) - 호명지구 수해복구 공사 현장

일 자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6.23.(월)	(15:00) 1.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간의 자매결연협정체결 동의안 2. 강원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4. 2018동계올림픽 유치 동의안 ※ 강원발전연구원 경영쇄신안 보고			(13:30) 1. 강원도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 조례안 2.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 현지시찰(14:30) - 소양강댐 및 여수로 공사 현장
6.24.(화)	◆ 제2차 본회의 (10:00)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1차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16:00)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댐관련 현안 사항 보고(건설방재국, 환경관광문화국) 3. 도암댐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6.25.(수)	◆ 제3차 본회의 (10:00)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6: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동의안			
6.26.(목)	◆ 제4차 본회의 (10:00) 1.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심의·의결 ▷ 5분 자유발언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7. 4.(금) (폐회 중)	□ 제2차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10:00)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댐 관련 현안사항 보고(방재정책관, 환동해출장소장)			

다. 의안 처리 현황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1차 2008. 6. 18. (수)	1. 제1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회기 : 2008. 6. 18. ~ 6. 26.(9일간)
	2.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2차 2008. 6. 24. (화)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이병선, 김시성, 김동일, 권순일
제3차 2008. 6. 25. (수)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질문의원 : 이영덕, 남경문, 김양호
제4차 2008. 6. 26. (목)	1.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지사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가목 적용,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정액제 신설
	2.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 9월 강원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카주 간의 자매결연 체결
	3.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타 시·도 출신인사 12인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4.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동의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동의
	5. 강원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최재규·임용식 의원 외 9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설치근거 법률의 명칭 및 협의회의 기능 변경,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15인 이내→30인 이내) 등

일 시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제4차 2008. 6. 26. (목)	6.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 도지사 제출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위임된 재정지원,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
	7. 강원도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 조례안	- 권순일 의원 외 8명 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모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 2005. 12. 14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했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
	8.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건의안	- 관광건설위원장 제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도암댐의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 수질오염 저감 대책 관련비용은 정부(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이 전액 부담, 퇴적물 준설 사업의 적기 추진

19. 현지 활동

가. 목 적

도정을 집행하는 기관 및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함으로써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현 황

현지 활동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147회 240개소(기관 76, 현장 164) 이며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21회 42개소(기관 7, 현장 35), 교육사회위원회 16회 37개소(기관 31, 현장 6), 산업경제위원회 46회 46개소(기관 21, 현장 25), 관광건설위원회 43회 59개소(기관 16, 현장 43)를 실시하였다.

특별위원회도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6회 8개소(기관 1, 현장 7), 2014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13회 44개소(기관 0, 현장 44),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1회 3개소(기관 0, 현장 3), 댐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1회 1개소(기관 0, 현장 1)를 실시하였다.

1) 연도별 현지 활동 실적

구분 / 연도별	계		기관방문		현장확인		비 고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합 계	147	240	55	76	92	164	
2006년	55	73	17	24	38	49	
2007년	50	103	24	34	26	69	
2008년	42	64	14	18	28	46	

2) 위원회별 현지 활동 실적

구분 / 연도별	계		기관방문		현장확인		비 고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합 계	147	240	55	76	92	164	
기획행정	21	42	5	7	16	35	
교육사회	16	37	13	31	3	6	
산업경제	46	46	21	21	25	25	
관광건설	43	59	15	16	28	43	
호우특위	6	8	1	1	5	7	
동계특위	13	44	-	-	13	44	
송전특위	1	3	-	-	1	3	
댐 특 위	1	1	-	-	1	1	

다. 위원회별 현황

1) 기획행정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 방문		현장 확인		주요현지시찰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합계		21	42	5	7	16	35	
'06	계	6	8	2	3	4	5	
	7월	3	4			3	4	• 수해지역 방문(춘천, 횡성, 영월, 양구)
	9월	1	1	1	1			• 당면 현안 대정부 활동(건설교통부)
	11월	2	3	1	2	1	1	• 서울사무소, 강원회관 매입 건물, 알펜시아사업단
'07	계	7	18			7	18	
	1월	1	4			1	4	• 행정사무조사 관련 현지 시찰(고성, 강릉, 속초, 횡성)
	3월	1	3			1	3	• 접경지역 개발 사업지(철원, 화천, 양구)
	4월	1	3			1	3	• 체험 봉사활동 및 현지 시찰 - 강릉의료원(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동해안 산불 우심지역(체험봉사활동) - 삼척 너와 정보화마을 시찰 및 주민 간담회
		1	4			1	4	• 기획행정위원회 해외 연수 (포루투갈,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6월	1	2			1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지(평창), 태백 안전 테마파크 건립지
	10월	1	1			1	1	• 알펜시아 조성사업지 현지 시찰(평창)
	11월	1	1			1	1	•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지 확인(홍천)
'08	계	8	16	3	4	5	12	
	2월	1	4			1	4	• 2008 국제 동계대회 준비 상황 점검 (평창 바이애슬론 경기장, 알펜시아 리조트, 강릉 빙상장, 보광피닉스파크)
		2	3	2	3			• 현안 청취 및 간담회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체육회, 강원발전연구원)
	3월	1	4			1	4	• 목조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실태 현지 시찰 (춘천, 원주, 횡성, 홍천)
	4월	1	2			1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현지 시찰(고성, 양양)
		1	1			1	1	• 체험 봉사 활동 (충남 태안)
	5월	1	1			1	1	• 산촌체험 봉사 활동 (태백)
	6월	1	1	1	1			• 영월소방서 운영 실태 확인(영월)

2) 교육사회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 방문		현장 확인		주요현지시찰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합계		16	37	13	31	3	6	
'06	계	6	12	5	11	1	1	
	9월	1	3	1	3			• 홍성 · 남원 · 충주의료원 운영사례 벤치마킹
	11월	4	6	3	5	1	1	•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강원도재활병원회 5)
	12월	1	3	1	3			• 제주의료원 등 운영사례 벤치마킹
'07	계	6	16	5	15	1	1	
	3월	1	3	1	3			• 원주기독병원 · 이승복기념관 운영상황 파악 등
	4월	1	5	1	5			• 공무원교육원 현황파악 및 일일체험봉사활동 등
	6월	1	3	1	3			• 철원 · 화천 · 춘천교육청 현황보고 청취
	10월	1	2	1	2			•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 방문 등
	11월	2	3	1	2	1	1	• 원주 반곡초 · 중학교 건설현장 방문 등
'08	계	4	9	3	5	1	4	
	3월	1	3	1	3			• 강원영어체험학습장 등 3개소 업무현황청취 등
	4월	1	1	1	1			•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일일봉사체험활동
	6월	2	5	1	1	1	4	• 강원교육정보원 등 5개소 업무현황청취 등

3) 산업경제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 방문		현장 확인		주요현지시찰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합 계		46	46	21	21	25	25	
'06	계	23	23	7	7	16	16	
	7월	10	10			10	10	• 수해현장 (10개소)
	9월	8	8	4	4	4	4	• 산림개발연구원, 사방댐 시설 (춘천) • 토고미마을, 당미농원 (화천) • 동화 지방산업단지, 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 • 강원랜드,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정선)
	12월	5	5	3	3	2	2	• 강정화훼수출단지, 농산물원종장, 길갈축산, 행원풍력발전단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제주도)
'07	계	13	13	11	11	2	2	
	2월	1	1	1	1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춘천)
	3월	4	4	2	2	2	2	• 축산기술연구센터(횡성),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개설대상지(원주), 충주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충주), 무학 재래시장(충주)
	4월	3	3	3	3			• 하이트맥주 강원공장, 홍천 흑돼지영농조합법인, 화촌농산 RPC(홍천)
	6월	1	1	1	1			• 미래농업교육원(춘천)
	9월	3	3	3	3			•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서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수원), 한국농업대학(화성)
	10월	1	1	1	1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원주)
'08	계	10	10	3	3	7	7	
	3월	1	3	1	3			• 강릉과학산업단지, 영월 훈제송어가공공장
	4월	1	1	1	1			•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장, 내린천 두부클러스터 사업장, 라벤더 테마마을 육성사업장, 건봉 다시마장 브랜드화 사업장, 삼포지구 대 구획 경지정리 사업장
	6월	2	5	1	1	1	4	• (주)강원LPC(축산물 종합 처리장, 원주), 횡성 축협 생축사업장, 강원도립 춘천수련장

4) 관광건설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방문		현장확인		주요 현지 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합계		43	59	15	16	28	43	
'06	계	6	7	2	2	4	5	
	7월	1	1			1	1	• 춘천 서면 신매 ~ 오월 간 지방도 공사현장 -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정도 파악 - 수해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 점검
	9월	2	2			2	2	• 도내 DMZ 접경지역내 관광사업 추진상황 점검 -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공사 현장 - 통일안보관광지개발 사업현장
	12월	3	4	2	2	1	2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신축공사 현장 - 현리~진동(조침령) 지방도 418호선 공사현장 - DMZ박물관 건설현장 방문
'07	계	19	27	8	8	11	19	
	2월	4	6	3	3	1	3	•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IOC현지실사 대비 - 보광휘닉스파크, 건설방재 분야 현장지원본부 방문 (도암면사무소), 알파인 · 스노보드 경기장 - 용평리조트 주요 행사장, 루지 · 봅슬레이 경기장 - 알펜시아리조트 조성 현장
	3월	3	7	1	1	2	6	• 2시간대 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방도로망 확충 사업 (도로관리사업소) - 영월~정양 간 지방도 확 · 포장 공사 현장 - 국지도 88호 옥동교 개축 현장 • 동강 보전 · 관리실태 점검, 동강유역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제장마을, 가수리, 귤암리, 진탄나루, 문산나루)

연도별 \ 구분		계		기관 방문		현장 확인		주요 현지 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07	4월	3	4	2	3	1	1	• 강원도적 문화예술 진흥 방안 모색 - 도립 국악관현악단 및 무용단 • 1일 수로원 체험봉사 활동 - 화천 간동면 지방도, 평화의 댐
	6월	12	14	2	2	10	12	• 도정 이미지 홍보 및 2014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현장 점검 - 인천공항, 김포공항, 서울시청, 청량리역, 춘천 • 2006 수해복구현장 현지시찰 - 민생 관련 시설 및 재 피해 우려 시설위주 점검 - 집단이주단지 등 9개 사업장
	10월	2	3	1	1	1	2	• 『경주세계문화EXPO 2007』 『강원도의 날』 행사에 도 대표단으로 참관 - 조직위 방문, 강원도의 날 행사, 엑스포장 관람
	12월	10	11	3	3	7	8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 - 동강관리사업소,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 인제 平和生命 동산, 수해복구 현장 확인(2개소) - 연구관 전시시설 및 공원,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식물생태관 조성사업, 민물고기 생태관 - 지방도413호선 문곡~창리 확·포장
	계	18	25	5	6	13	19	
'08	2월	1	4			1	4	• 도내 각종 축제 발전방안 모색 - 군함·해경정·어선 시승, 명태덕장 및 수산물 공예 전시관, 먹거리 장터 및 향토음식점 체험 기타 행사장 방문·격려 등

구분 / 연도별		계		기관 방문		현장 확인		주요 현지 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08	3월	3	7	1	1	2	6	• 양구 지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실태 종합 점검 -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사업장, 도촌리 천문대 - 박수근미술관, 향토사료관, 선사박물관, 강원외고 건설 현장
	4월	3	4	2	3	1	1	• 전통사찰 등 문화재 관리실태 확인·점검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원주 강원감영 - 횡성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 횡성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자원 재활용 선별 체험
	6월	12	14	2	2	10	12	• 장마 대비 주요 공사현장 및 미 완공 수해복구 사업장 현지 점검 실시 - 강림~수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 정양~하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 - 강원랜드 관광 운영실태 점검 - 호명지구 종합 수해복구 공사 현장

5)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 방문		현장 확인		주요 현지 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계		6	8	1	1	5	7	
'06	7월	1	1			1	1	• 수해복구 봉사활동(인제, 평창)
	8월	3	5	1	1	2	4	• 평창 진부, 양양 오색지구 및 시가지 침수 지역, 인제 덕산 및 주택침수지역 • 도내 수해지역 강원관광홍보 가두 캠페인(서울) • 중앙 언론사 방문
	10월	1	1			1	1	• 동해안 해안지역 및 항구 중심 피해 상황 점검
	11월	1	1			1	1	• 호우피해 응급복구 상황 점검

6) 2014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 방문		현장 확인		주요 현지 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합계		13	44			13	44	
'06	계	8	15			8	15	
	7월	1	8			1	8	• 2014 동계올림픽 시설 현지 시찰 (강릉, 평창, 정선)
	8월	2	2			2	2	• 경포 해수욕장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 2014평창 동계특위 개최(평창 도암면사무소)
	9월	2	2			2	2	•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총회 참석(서울) •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유치 홍보(고성)
	10월	2	2			2	2	• 전국체전 2014동계올림픽 유치 홍보(경북 김천) • 2006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 참석(서울 코엑스)
	11월	1	1			1	1	•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대회 참석(강릉)
'07	계	5	29			5	29	
	1월	3	22			3	22	• 2014동계올림픽 릴레이 거리 홍보(18시군) •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해외 시찰 (소치, 잘츠부르크) •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참가 해외 홍보활동(중국)
	3월	1	6			1	6	•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국토 합수·합토 기원제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 백두산, 태백산)
	6월	1	1			1	1	• 2007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홍보(울산)

7)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방문		현장확인		주요 현지 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계		1	3			1	3	
'08	2월	1	3			1	3	• 송전탑피해 민원지역(평창2, 인제1)

8) 댐 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분 / 연도별		계		기관방문		현장확인		주요 현지 활동
		횟수	개소	횟수	개소	횟수	개소	
계		1	1			1	1	
'08	4월	1	1			1	1	• 도암댐 현지 확인

20. 5분 자유발언

가. 근거 및 목적

5분 자유발언은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그 내용을 보면 '의원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 본회의 개의전일 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매 본회의시마다 4인 이내로 운영, 도정질문시 제외)

나. 운영 실적

7대 전반기 도의회 회기 중 발언 의원 수 및 횟수는 연 60명, 113회이며,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7명, 25회, 2007년 23명, 52회, 2008년 20명, 36회이다.

그리고 7대 전반기 도의회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이다.

다. 연도별 발언 의원 현황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60(113)	17(25)	23(52)	20(36)
1회	34(34)	김기남, 남경문 박명서, 박호창 심재영, 이병선 임용식, 최경순 최재규, 홍건표 황 철	고진국, 김시성 남경문, 박명서 박상수, 백선열 유순임, 이명열 이준연, 임용식 정을권, 최경순	권석주, 김기남 김동일, 남경문 박상수, 심재영 유순임, 이명열 임용식, 장세국 최경순
2회	12(24)	권석주, 김대천, 서동철, 이강덕	서동철, 이기찬 최재규	고진국, 김영칠 이기찬, 이영덕 홍건표
3회	10(30)	고진국, 최원자	김대천, 심재영 장세국, 홍건표 황 철	서동철, 조영기 황 철
5회	1(5)		조영기	
6회	1(6)			최원자
7회	2(14)		권석주, 최원자	
미발언	60	23	17	20

※ ( )안은 발언 횟수

21. 서면질문

가. 근거 및 내용

서면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그 내용을 보면 '의원이 도정 전반(교육행정 포함)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회기 중·휴회 중·폐회 중 어느 때라도 질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운영 실적

7대 전반기 도의회 임기 중 서면질문 운영 실적을 보면 총 35명이 403회, 1,073건의 서면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최다 질문 의원은 최원자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으로 43회 120건 이며, 서면질문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한 의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및 분야별 서면질문 현황]

연도별 / 분야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1,073	256	586	231
일반행정	367	93	184	90
사회복지	138	32	85	21
산업경제	135	9	94	32
관광건설	213	75	101	37
교육행정	220	47	122	51

제3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1. 제170회 정례회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김영칠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최근의 진척상황과 근본적인 대책은?

답 변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현재 국방부에서 제정 추진중인「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할 것이며, 또한, 법안 내용중 보호구역 설정범위를 현행 25㎞를 유지하는 조문에 대하여도 15㎞로 축소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도모하겠음.

아울러,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내 건축 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부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 위탁지역 확대 건의를 통하여 주민 재산권행사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음.

질 문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축소조정과 관련하여 국가농업 개방과 구조개혁 차원에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연구검토 방안은?

답 변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도내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철저를 기하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과 지정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시 최대한 반영하여 농림부에 해제 요청을 할 예정이며,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개발촉진지구,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도 법상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개별사안 발생 시 농림부에 해제 요청하여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질 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대책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답 변

농작물 피해보상 재원대책은 도에서는 2003년도 전국 최초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시·군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 등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중에 있음. 도에서는 금년부터 조례제정이 되어 보상중인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보상비 1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임. 또한 매년 3-4개 시·군을 순환 수렵장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그리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현재 원주, 영월, 인제 3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국비지원 확대 등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임.

질 문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관련 강원도에서는 댐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대책 강구 차원에서 전담팀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 주문

답 변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댐건설은 안 된다는 것이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결정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댐 건설계획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자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기술용역을 통하여 대응논리를 개발 중에 있음. 전담팀 구성 관련하여 현재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 관리 기본법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에서는 정부의 물 관리 기본법 제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

2) 심재영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에 관한 향후계획,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이 타 시도보다 적어 노인복지 정책이 소홀한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계획, 급속하게 늘고 있는 여성노인 인력의 효과적 활용 방안이 있는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성취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문제의 갈등 해소방안과 고령사회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한 도의 복안이 무엇인지?

답 변

저출산·고령화가 도정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종합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T/F팀」을 조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도내 노인들의 취미생활 등 체계적인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도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1시군 1복지회관」 건립 계획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노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여성노인 인력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교통안전봉사단」과 「가정파견봉사단」 등 새로운 일자리를 신설하고, 여성노인 참여비율이 높은 복지형 등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계획임.

질 문

도 및 시군 또는 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품 구매실적과 도 및 시군에서 법정 의무고용 이상 장애인 고용현황과 도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어떤 시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은?

답 변

도 및 시·군에서는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동안 총 구매액의 34%를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한 바 있음. 구매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의무고용 관련 현재 도와 시군의 적용공무원 9,014명중 장애인 공무원은 324명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은 3.59%로써 전국 상위수준임. 또한 도내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는 292개로서 적용대상 근로자 3만 1,951명중 장애인 근로자는 717명으로 기준고용율 100분의 2보다 많은 2.24%가 되겠음.

도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 우수업체 발굴 홍보, 장애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공동사업을 개발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시책사업으로 장애인 공무원시험 대비 특별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

질 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의 확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우리도에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6년까지 34개 시장에 1,00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2008년까지 모든 재재시장 시설개선을 1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임. 또한 재래시장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현대화로 매출을 증대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경영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강원상업경영인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및 다양한 이벤트로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올해 4개시장, 내년에 5개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고,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 중간유통 단계를 단축토록 하였으며,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방향은 시장별로 강점을 살린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상인들의 자구노력 증대와 재래시장 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질 문

동해안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강원, 울산, 경북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중앙정부에 제시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전략과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은?

답 변

동해안 광역권은 국토 3대 연안축의 하나임에도 그동안 정부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2004년 11월 8일 경북, 울산과 함께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2005년)하였고, 지난해 12월 16일 국무총리를 면담, 정부계획 반영과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를 건의 하였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였고, 국토연구원은 동해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2006년 6월)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작업중임. 정부 검토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으로 실행력은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계획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태백 전몰학생 기념관이 협소하고 단순한 구조로 건립되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계획은?

답 변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온 태백학도병기념관은 시설이 협소하여 증축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참전 전우 모임인 화백회와 태백교육청에서 기념관의 증축 및 전시물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태백학도병기념관의 증축 및 전시물 재배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3) 김동자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노인학대 예방센터 확대 의향과 각 시·군별 노인학대의 효과적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 변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는 2004년 10월에 개원되어 매년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전국보다 빠른 고령화 추세 및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2007년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센터 상담인원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할 계획임.

또한 신고비율이 저조한데 따라 시·군 경로당 노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경찰청 등 학대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각종 홍보물, 언론매체, 사진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항 홍보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임. 아울러 지역사회 어르신 지킴이단 양성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 원주, 횡성

지역에 어르신 지킴이단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질 문

급속히 늘고 있는 여성노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여성노인 인력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능력있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금년도에는 교육형, 복지형 등 4,16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92%증가한 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특히, 여성노인인력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교통안전 봉사단과 가정파견 봉사단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노인 참여비율이 높은 복지형과 시장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질 문

공립치매 요양병원 건립 관련 지금까지의 진척상황과 병원 완공으로 치매환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와 향후대책, 치매환자 예방을 위한 도내 활동 및 저소득 가정의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답 변

도내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8.3%인 1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환자는 2,000명으로 보고 있음. 현재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전문병원 1개소 75병상, 요양병원 8개소에 911병상이 있으며, 춘천·강릉 치매요양병원 건립이 완공(310병상)되면 700여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부족되는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공립치매병원과 사립 요양병원 건립을 계속 유도해 나가겠으며, 재가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치매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질 문

거처가 없는 저소득 부자가정이 함께 자활을 위해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도내에 한 곳도 없는데 향후 설치계획과 도차원의 추진중인 정책이나 대안은?

답 변

6월말 현재 우리도내에는 3,641세대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모자가정이 2,841세대이고 부자가정이 800세대에 이르고 있음. 전체 세대중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1,645세대이고, 1,996세대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음.

이중 무주택 모자가정 24세대는 강릉의 모자가정 자립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음. 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자립시설에 대하여는 모자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부자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또한 조부모 가정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부모 아동의 가정생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질 문

저출산 해소와 관련하여 다자녀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은?

답 변

다자녀 육아비용 지원책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도부터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자녀 이상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수준 이하(4인가족 353만 원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연령에 따라 10만 5천원 ~ 4만 7천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향후 도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하기 위하여 셋째자녀 이상 가구 중 우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대하여 보육료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고자 함.

질 문

북 핵실험 강행과 관련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향후대처 등 자체적인 검토와 대응책 마련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이번 북 핵 실험은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도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우리는 분권적·미시적 접근이라는 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동향과 정부방침, 도민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또한, 철원평화시 건설, 평화플라자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작금의 정세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특히,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변화 추이로 보아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될 수 있는 만큼 IOC일정에 따른 제반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임.

나) 교육행정

질 문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 수가 줄면서 학급 수를 감축하거나 아예 학교문을 닫는 등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금년 10월 현재 폐교된 학교는 총 377개로 이중 101개교는 매각 및 반환·교환되어 276개교를 보존 관리하고 있음. 그중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만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32개이고, 폐교 중 219개교는 지역주민 또는 개인·단체 등 교육시설과 수련시설 등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해지 등 기타 불필요한 사

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는 25개임.

폐교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 또는 시정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25개 폐교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정보제공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부를 추진하고, 기대부 시설에 대하여는 목적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 설치 방지 등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나갈 것임.

4) 남경문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현행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의 목표 수질의 설정이 달라 상류지역이 불리한 실정이며, 경기도의 경우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정부의 한강수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대비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부의 의무제 시행을 저지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추진대책은?

답 변

우리도의 입장은 국가차원에서 물관리 정책상 불가피하다면 상류지역 지원대책을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삭감대책 등 기술적 문제 등의 해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 문제와 관련 현재의 상황 및 조치계획은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은 반드시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도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 등 공동 대응해서 우리도의 입장을 적극 반영 조치 계획임.

질 문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① 현재까지 주요성과와 사업별로 미진하다

면 그 이유와 개선대책 ② 권역별 생명·건강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투자실적과 사업효과 ③ 도시지역외 권역별 특화산업 지원대책 ④ 대학의 지식·기술과 인력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방안 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시 지방단위 역할과 한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용의는?

답 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지역혁신 과제가 그간 국가발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우리 강원도의 경우, 정부차원의 철저한 균형발전과 차별적 지원원칙이 확실히 강구되고 아울러, 우선적으로 추진동력, 인프라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이 있어야 함.

이러한 상황에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음.

앞으로도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 전체적으로 생명건강산업수도 육성, 동아시아 관광허브 조성, 동북아 물류중심축 형성 등 개발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의 모든 역량을 총력 집중해 나가면서 정부에서도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해 나가겠음.

질 문

지방분권 시책추진 과제중 일부과제만 완료되었는데 지방단위 역할이 미흡한 건 아닌지? 지역특성에 맞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조정을 비롯하여 관광세·지역개발세 등 세원발굴 대책은?

답 변

지방분권 과제 추진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제의 발굴, 방향제시, 대안의 논리 마련, 중앙 논의 및 다양한 워크숍·토론회 등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음.

향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국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라든지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분권 주체들과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임.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과 관련하여 우선 국세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 환경세화 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조세정책으로 검토 중에 있음.

우리도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송전철탑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해에는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종전대비 150%인상해 지방세수를 증대한 바 있음. 이외에도 관광세 신설과 폐광지역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폐광 카지노에 지역개발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관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 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강원도의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위한 복안은?

답 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로 인한 도정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 종합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T/F팀을 조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질 문

도내 방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와 관련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대책과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답 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대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철저한 보존, 완벽한 개

발의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가지고 2000년부터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를 제정하여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자연환경 훼손 방지, 경관형성 심의 등을 하고, 금년부터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시 자연경관이 미치는 영향을 심의·검토하는 자연경관 영향 협의제도도 시행 중에 있음.

또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 우수한 생태계를 보존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자연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97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출입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철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원환경감시대를 18개 시·군에 173명을 조직해서 운영 중에 있음.

이밖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민둥산 생태관광지를 완료하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내년 4월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제 평화생명동산을 5월에 착공해서 추진중임. 그리고 양구 수변생태공원도 6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음.

나) 교육행정

질 문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일선 교육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정부정책 중 중앙에 개선해야 할 사항과 교육청 자체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위해 추진중인 시책은?

답 변

교원수가 현재 법정정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으로 밀도 있는 수업에 차질이 발생되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배분 방식도 우리도에 불리하며, 잦은 대입제도의 변화로 현장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으로부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임.

우리도에서는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초·중·고학교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도시지역 학교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임.

이외에도 논술대비를 위한 논술강좌의 개설, e-learning 체제의 구축, 농산어촌 지역의 EBS 수능강의, 인터넷 강의 등 사이버 가정학습을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질 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 및 광산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활성화 대책과 학부모 자녀유학 교육비 경감, 군 또는 읍면지역을 묶어 공립학교 설립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변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계획 강화, 어촌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농산어촌 학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농산어촌지역 우수고교 집중육성,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강원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산어촌 및 광산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아울러 공립학원 문제는 타 시·도의 모범적 운영 사례 등을 연구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공립학원이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정을권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 수해지역 국도관리 및 조기 복구를 위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지사님의 역할은?

답 변

수해지역 국도관리 및 조기복구와 관련하여 우리 도내에 도로 수해피해는 국도 및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1,045개소(301㎞, 피해액 3,873억 원)가 발생하였으며 그 간 조기복구방침에 따라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 사업이 추진 중인 바 이미 572개소에 대하여는 공사가 진행 중임.

나머지 470개소는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어 늦어도 11월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복구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491개소(총 건수 대비 47%)가 완료될 계획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해복구지침을 마련하여 조기복구를 위해 개산계약방식을 금년에 처음 도입하여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복구예산 확보를 통한 완벽한 개선복구 및 자연친화적 복구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특히 지역의 주 간선망인 국도에 대해서는 수해발생 당시부터 최대 예산확보 및 조기 개선복구를 위한 우리 도의 의지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왔음.

특히 국도 44호선 한계령 도로는 관광명소임을 감안하여 조기복구 및 환경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또한 국도 59호선 평창 진부~정선 나전 구간은 동계올림픽을 고려하여 조기복구와 완벽한 개선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왔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번 수해복구 사업을 과거의 어느 때보다 획기적이고 완벽한 개선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수해 진행과정을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장래 재 피해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임.

질 문

도내 규제관련 용도지역 현황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하지 않은 시·군을 파악하여 면적대비 용도지정이 아닌 해당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산권행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답 변

강원도의 가치창출을 위한 토지공간 구조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또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용도지정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10월에 시·군 관련 부서간 T/F팀을 구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를 하여왔음.

금년 5월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비롯한 17개 규제관련 용도지역이 총 2만 7,925㎢, 이것은 여러 가지 중복지정이 된 것임. 여기에 대해 토지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조정대상 용도지역이 필요한 부분이 약 1,870㎢정도 되는데 이중 적어도 240㎢내외는 꼭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아주 정밀하게 따져보고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개편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질 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원 조성과 관련 금융권의 대출절차 비현실성으로 담보한계와 대출한도에 노출된 도내 소기업이 자금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출절차의 규정 완화와 기금중 1,000억원은 1,200여개 사업장의 창업년도와 연간 매출실적 등 대비 대출(부실이 걱정되면 보증보험에 가입)과 잔여기금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강구?

답 변

향후 자금취급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무담보·무보증 기업을 위한 은행순수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담보평가비율 상향 및 불합리한 보증지원 제도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금년도에 기금 2,000억 원 조성이 완료되면 '07년부터 조성된 기금 중 일부를 기금관리 은행에 위탁, 낮은 금리(재경부 고시금리 4.22%)로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음.

제안하신 부실 우려 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확인한 바로는 기업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증보험은 취급하지 않지만 타 시·도 운용사례를 참고하여 보증보험회사와 가능여부를 적극 협의 하겠으며, 잔여기금은 고금리 운용수익을 위해 3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되 이자는 1년 단위로 징수, 기금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을 포함하여 도내 중소기업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문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도로서 지방채를 제외한 다른 생산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은?

답 변

지방채는 주로 재해복구나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는 가능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원리금의 적기상환, 자금의 적기 차입 등 이자부담 운영관리를 통해서 지방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음.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러 재원의 확보는 신 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일정의 한계가 있음. 향후 생산적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삼각 테크노 사업은 춘천, 원주, 강릉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소외된 10개 이상 시·군에 대해 소외감을 일소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 변

강원도정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시·군별로 특성화 시키고, 또 시·군별 고르게 거점을 육성하여 거점지역 핵심 사업들을 선정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간전략, 사업전략을 짜고 있음. 초기 단계에서는 삼각테크노벨리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였으나 2단계 테크노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서 육성하는 7+6플랜으로 새로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18개 시·군별로 특성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하고 있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지역별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고 상생 발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도민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중 지방 소도읍 지정 사업이 연차적으로 기존 7개 도읍이 선정되어 지원되었는바, 연차적으로 15개 시·군 24개 읍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2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균등배분 방식에 따른 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2003년부터는 관련법에 의거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지원 방식을 채택해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군에서 작성한 제안서를 소도읍 육성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이 우수한 지역부터 선정된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10개년 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사업순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도읍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우리도에서도 나머지 모든 도읍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문

보건복지부문과 관련 ①정신지체 장애인 시설 및 중증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 사업계획 ②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중 난방시설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의 시·군별 시행계획과 향후 계획 ③ HACCP적용 희망업체를 위해서 강원도의 지원내용은?

답 변

도내 정신지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시설이 17개소가 있으며 837명의 장애인들이 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음. 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금년도의 경우 강원재

활원 등 1개 시설에서 배수로 설치, 담장설치,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화장실 보수 등 4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음.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시설 정비 사업은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경로당 난방시설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은 2001년부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799개소의 경로당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종료하는 사업임.

HACCP적용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하여 주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소로 융자에 따른 담보능력 부족과 자부담의 문제로 HACCP지정을 기피하는 관계로 현재 융자실적은 없는 상태임.

질 문

시·군 상하수도 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부족으로 안전하게 먹는 물 관리가 되지 않으며, 마을 간이상수도 부분의 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지원조례와 담당공무원을 증원해 줄 수 있는지?

답 변

마을 상수도 지원조례 제정과 마을상수도 담당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금년 9월 소규모수도시설 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소요사업비의 국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2007년 도 국비요구액 8,911백만 원), 지원조례 제정은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제도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담당공무원 증원은 시·군의 실정에 따라 시·군별로 소규모수도시설 전담부서의 설치, 시설관리의 외부위탁 등을 유도하고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노후 된 학교로 인해 어린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조속히 30년 전후의 노후 된 학교 재점검을 실시하고 신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

답 변

노후 교사 동을 비롯한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우선 전체 교사 동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물 상태별로 A급부터 E급까지 5단계로 평가 분류하고 있고, A급은 안전시설, B급은 양호한 상태,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상태, D급은 주요부재의 노후와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E급은 주요부재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평가 분류하고 있음.

이 중 중점관리 대상인 C급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등급인 D급 및 E급 시설에 대하여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관리계획 및 이력카드 등을 작성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D급, E급 시설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보강, 사용중지, 개축,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있음.

또한 시설물 안전이 특히 위협 받는 해빙기, 동절기 및 장마철 등의 시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2) 김대천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 수와 전체매출액, 그리고 순익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2000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현황과 고용인 현황, 향후 유치해야할 주력 산업군에 대한 전망 및 계획, 그리고 이전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확보 방안은?

답 변

2005년도 12월말 기준 공장등록 현황에 의하면 도내에 등록된 기업은 1,906개 업체이며 종업원은 3만 6,452명으로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9명임. 매출액은 2004년말 기준으로 7조 9,384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45억원임.

강원도의 기업은 타 시·도에 비해 음식료품 등 소기업 비중이 크고 중대기업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규모나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향후 기업의 규모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이윤창출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 인프라가 우수하거나 원재료 구입이 용이하여 강원도에 입주하는 것이 유리한 업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98년부터 추진해 온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을 근간으로 최근의 여건변화에 맞도록 새로운 업종을 발굴 보완하여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해 나갈 계획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별 중점 유치업종은 춘천권은 BIO와 IT, 원주권은 의료정밀기기와 조립금속, 강릉권은 세라믹신소재와 해양바이오, 동해·삼척권은 자동차부품과 목재가공, 홍천·횡성권은 건강 생명산업 등이며 앞으로 조선업, 레저산업 등도 유치대상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전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확보 방안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주력해 간다는 기본방침 하에 IT 전문가 양성, 지열에너지 전문기술인력 양성, 고용특약형 맞춤교육 등 학교, 기업, 지자체간 취업협약을 분야별로 확대해 나가고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조하여 용접, 전기 등 지역의 산업수요와 관련된 단기과정 운영(6주 또는 12주) 및 수공업창업과정 등 특성화 과정 운영방안도 구상하고 있음.

또한 고급기술인력 채용 및 전문화 지원(연 40명), 석·박사급 인턴보조원 채용 지원(연 50명), 고용촉진훈련(연 220명) 등 지역전략산업인력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취업알선과 일자리 박람회, 사이버일자리시장 운영 등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가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는 등 이전기업이 기술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현황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대한 제안을 강원도가 제안할 계획은?

답 변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도로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그동안 수도권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왔음. 국무총리 면담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건의,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성명 5회, 비수도권 총연대 및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을 제안 하였음.

그 결과로 비수도권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이 연대하여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성, 대응체제 구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하여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수도권규제 정책을 유지해 나가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양분되어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부적절함. 수도권과 우리 도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 상생토록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조직기구 운영에 있어 강원도가 운영할 수 있는 실국 및 직속 기관 운영현황(행자부령에 의거 설치한 기구는, 자체 도정 운영상 설치한 기구는), 강원도 정원현황은/ 소방직 별도, '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경우 강원도 정원정책과 구체적인 대비책은? 국제협력실 외자유치팀과 연구 및 교육을 요하는 부서의 연구관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정원기구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됨. 우리도는 본청에 10국 43과, 1출장소, 15개 직속기관, 14개 사업소임. 환경정책관 등은 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 유연하게 운영함. 예를 들면 대통령령 기준 내에서 하다보니 환경산림을 구분해야 하나 환경관광문화국 같은 기형적인 기구로 운영하고 있음.

일의 효율성 때문에 정책관을 두고 있음.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대비책은 유념해서 조직기구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3) 황 철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민선 4기 선거공약 24대, 약속 88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기간, 강원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대학, 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지사의 생각은?

답 변

산·학·연간에 관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서 도정이 보다 도민 속에서 이루어 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민선 4기 공약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임기중에 완료할 사업, 임기중에 착수할 사업, 임기중에 여건조성을 할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이와 관련 지난 7월에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관리 및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 나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욱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물이용과 관련하여 법체제의 정비가 미흡한 현 국내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리권 확보에 대한 도의 준비와 도지사의 견해는?

답 변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가 모호하고 지자체의 권한도 거의 없는 상태임. 우리도가 선도적 입장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수리권 개념을 명확히하고 제도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지금 2년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기추진이 가능한 11개과제, 장기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한 5개과제를 구분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서도 도의

의견, 정책대안들이 지속 반영되도록 하면서 수리권이라는 차원에서 강원도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질 문

강원도 인구의 수도권 유입과 관련 도지사 공약중 2010년까지 800개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5만개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한 방안은?

답 변

먼저 800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0년까지 8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는 기업유치 All-In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업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정보의 획득을 위해 Hot-Line 지속운영, 투자의향 설문 확대실시, 투자유치자문역 내실운영, 이전기업 CEO와의 정례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둘째, 국내 500대 기업을 Target 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원천기술 보유회사 유치를 통한 동종 업종 집단이전을 유도해 나갈 방침임.

셋째, 공격적인 기업유치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TV-CF 광고, 동종업종 전문지 광고, 각종 협회, 조합 등의 정기모임 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기업맞춤형 밀착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넷째, 저렴하고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확대조성을 위해 전략산업단지 11개소 109만 평을 조기 준공하고 기업특화전용단지 5개소 120만 평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기업유치에서 정상운영까지 One-Stop Service 운영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기업이전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

특히 전략의 핵심인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제조 및 서비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도지사를 비롯하여 지휘부가 직접 세일즈맨이 되어 성사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다음 일자리 5만 개 창출과 관련하여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

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800개 유치와 알펜시아 등 민간·공공부문의 대형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도의 강점인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무, 관리, 인력 등 정규직 개념의 일자리(5만 개)를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임.

아울러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 자체 평가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분기별) 가동하고 도, 유관기관, 기업, 학교 간 협의체 운영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다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와 함께 일자리와 인력의 적절한 매치를 통해 우수한 산업인력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인력 육성 및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과 사이버 일자리시장, 계층별(노인, 여성 등) 일자리박람회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고질적 지역이기주의 등과 관련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과 해결방안은?

답 변

태권도 공원 유치실패, 혁신도시 문제 등과 관련 수부도시인 춘천이 역차별로 인식되거나 지역화합과 결속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앞으로 춘천의 특성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을 설정해서 조기에 가시화시키는 노력 등을 통해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G5프로젝트 개발사업, 레저스포츠의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 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춘천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며 도지사로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

질 문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리더자 부족과 관련 고소득 농어촌으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계속되는 정책보완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어떤 계획을 갖고 실행하고 있는지 도지사의 견해는?

답 변

도 미래농업교육원은 물론 도내 대학과 연계해 농어촌 전문인력과 리더 양성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향후 전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리더를 양성하고 리더중심으로 마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실천해 나가는 마을혁신시스템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정책보완과 지속추진을 위해 마을혁신시스템에 의한 농어촌의 혁신리더를 적극 육성해 나감과 아울러 기 선정된 우수마을들의 열기 지속화와 신규 참여마을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방문 벤치마킹제, 우수사례발표 종합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또한 전국화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이 운동이 필요한 지역에도 적극 홍보하여 세계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자 함.

질 문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시대에 대비한 수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에 대한 강원도의 방향과 대책과 해당권역 지자체의 사업추진 병행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답 변

본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업 시작단계부터 관련 5개 시군과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12개 사업에 37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비로 5개 사업 181억 원의 국비를 확보 하는 등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향후 춘천권 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추진 가시화를 위하여 시·군과 공동으로 국회 및 관련 처를 지속적 방문하여 국책사업으로 책정받기 위해 강력히 건의 추진하고, 시기 미도래로 착수가 안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토록 하고,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는 등 제반 여건을 착실히 준비하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문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부실공사, 보조여수로 공사 백지화에 대한 대처, 물 경관자원 이용에 대한 도의 조치와 대책 등 소양강 하류 탁수현상 피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답 변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의뢰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용역('06년 9월~12월) 결과가 나오면 시민단체와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대응논리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또한, 댐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인 만큼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공사 중지를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건의하겠음.

앞으로 중장기 프로젝트에 의거 흙탕물 저감시설설치 지속 추진,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을 연구하여 확대하고, 각종 공사장의 흙탕물 발생 유발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엄정 조치, 수계별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권역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질 오염문제와 오염사고에 능동적 대처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이 완료되면「선택적 취수탑」설치 문제를 본격 논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교육청 재원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도를 비롯한 시·군 투자병행의 도 계획과 사업추진 실적, 시설 복합화 계획은?

답 변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부지 내에 학생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문화, 체육, 보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학생 교육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이러한 복합화 사업은 정부(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군과 교육청이 대상학교, 추진방법, 사업비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임.

※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 전국 8개 사업(서울3, 부산1, 광주1, 충남2, 경남1)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대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시·군,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및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각종 건축물 등 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교육감의 견해는?

답 변

앞으로 공공시설물 건축 시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건축 및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공공성과 효율성,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하고 설계 또한 전문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과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사 초기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지정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음. 또 장기적으로는 광역시와 일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청사 전담부서 체계 도입 등 공공시설물 건축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실업계 고등학교가 보유 활용하고 있는 각종 재산의 임대와 관련해 임대자의 미활용으로 재산을 황폐화시키고 재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과

임대된 각종 재산에 관한 관리실태 등 총체적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 변

먼저 우리 교육청 산하 실업계고등학교 43개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의 경우 총 633필지, 569만 4,282㎡ 재산평가액 2,126만 9,538만 원이며, 건물보유 현황은 총 769동 51만 4,209㎡, 재산평가액 2,171억 888만 원임.

이는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업계학교의 재산비율을 보면 토지는 15.9%, 건물은 16.7%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이 중 각급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지는 217필지, 361만 7,177㎡, 재산평가액 95억 1,454만 원으로 향후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실습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임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임대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임대계약 시 임대료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고 있으며 임대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임대자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토지와 건물 전반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연속되는 동일지역의 토지는 단일필지로 확편하는 등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요점검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4) 이성기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답 변

최근 인구감소문제는 대부분의 시도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임. 광역시와 몇몇도를 제외하고는 감소가 공통된 현상.

※ '05년도 : 전북 △21천명, 전남 △19천명, 경북 △7천명 등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지역인구의 역외 유출방지 및 역내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따라서 도에서는 2010년까지 15천개 기업유치, 5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문화·복지분야 예산을 총예산의 30%수준까지 집중 투자계획.

아울러, 도전역의 균형발전과 고른 복지·문화·교육 수혜정책을 통해 도시권으로의 집중 현상도 해소해 나갈 계획임.

질 문

강원도내 인구의 유동성 잠식 주요형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실태 분석과 유동성 잠식실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유동성 유출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도의 대책은?

답 변

도내 유동성 잠식 주요형태는 대규모 유통점 진출 확대 및 매출액 본사 송금을 통한 잠식, 대규모 관광·레저산업의 대기업 진출, 수해복구 등 특정수요 발생 시 외지 대형 건설사 수주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유동성 잠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업들의 매출액 공개기피, 관련 조사 업무 미 규정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보지 못하였으며 전문조사 기관인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만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구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통계청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유동성을 추측할 수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내 진출 대규모 점포는 증가추세이며 이와 함께 유통시장의 유동성도 외지업체에 잠식됨은 물론 자금이 역외로 유통되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반면 대규모 점포의 종사자와 인건비를 살펴보면 '04년도 종사자 수는 1,143명으로 '02년 대비 23%가 증가하였고 인건비도 198억 원으로 '02년 대비 100%가 각각 증가하였으므로 고용창출 등 경제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도에서는 대규모 유통점으로 인한 도내 유동성 잠식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통점 내 지역산품 판매코너 및 우선 구매를 촉구하여 지역 내 1차 산업의 고정적인 판로 및 유동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3센터 2분소)하며,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06년 2,788건), 창업교육(7,980명)을 실시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3% 보전)도 시행하여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병행하여 '07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춘천권, 강릉권으로 확대 추진하여 유통단계 축소, 공동구입 및 물류능력 확보를 통해 중소유통업자 보호 및 유동성 유출을 감소시키겠으며 재래시장 혁신사업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도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아울러 도 연고 프랜차이즈 업체(본점에서 원부자재 및 영업기술 제공)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특판전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용확대, 소비촉진, 재 투자기반 향상 등이 계속 순환되도록 노력하겠음.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SOC 사업, 도로와 항만 등 물류시설 확충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민자유치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도의 유동성을 확대하여야 하며 도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질 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역과 가시적인 효과, 현시점에서 상인과 소비자, 유통전문가 등과 함께 현실진단과 활성

화 대책을 추진해 나 갈 의향은 없는지?

답 변

재래시장 관련해서 입점조례 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임. 지금 조례가 법령에 위반해서 권리제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 해 보면서, 참신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상인, 소비자,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강원도형「재래시장 혁신사업」으로 발전시키겠음.

시장별 강점을 살린 특화시장으로 육성,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및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대규모 유통점과 차별화시키고(지역특산품 시장), 틈새시장(실버용품 등)을 공략, 획일적인 대규모 점포와 차별화 되도록 하겠음. 재래시장 러브투어, 탐방단운영, 1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등 재래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 다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학원교육의 순기능에 대한 지원방안과 개인 과외 교습자에 대한 관리방안, 지도점검 실적 및 결과에 대하여

답 변

학원교육의 순기능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학원연합회 강원도지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학원종합문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팀과 지도교사에게 교육감의 우등상장을 표창장을 전수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학원운영자 정기연수 및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현장공적이 있는 각각 10명 내외의 학원장과 강사에게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강원도교육감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학원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 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특강 등 행정지원과 연수경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경비로 3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학원과 교습자에 대하여는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본인이 주거하는 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인 주택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 민원발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현재 개인과외교습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취지에 맞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신고필증 미게시, 수강료 허위게시, 통계자료 허위보고, 실적 전무, 공무원 출입거부, 수강료 미반환 등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임.

2006년 6월 30일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5명에 대해서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학원, 과외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다. 제4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김동일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국가 및 지방도에 설치된 전신주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인허가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과 지방도의 열악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답 변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던 지방도 도로점용허가 업무에 대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도로손상 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우리 도에 환원하여 처리하고 있음.

현재 지방도상에 설치된 전신주는 총 4만 1,332개로서 이 중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는 전체 약 23%인 9,433개임.

지방도상에 설치된 전신주 현황과 도로점용허가 현황의 차이는 지방도 도로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기 설치된 전신주 등이 시·군도에서 지방도로 노선의 승격 후 현재에 이른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음.

이어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도 노선 지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하여 일제 정비코자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대상 여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음.

향후 건설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 회신 결과에 따라서 일제 정비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다음은 지방도의 열악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지방도상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지방도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우리도가 대도시보다 화장율 저조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도민을 위한 1시간대 광역권 또는 2시간대 접근이 용이한 화장장 설치에 대한 종합적 계획에 대한 견해?

답 변

현재 도내 6개 시·군에 15기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05년도에 12,623기의 화장실적을 보였으며, 이중 도내 거주자의 화장실적은 7,616기(60%)이며,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5,007기는 서울, 경기, 충북 등 타 시·도 거주자가 본도(춘천, 원주 등)에 와서 화장한 실적임.

특히, 춘천시 화장장의 경우 2005년도 4,941기의 화장 실적 중 타 시·도 거주자 화장률이 63%(3,107기)에 이르고 있어, 도민의 화장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화장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확충사업이 시급히 요구됨.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됨으로 인해 시설건립에 어려움이 많음. 내년도 화장장 확충사업 계획으로는 춘천, 원주, 동해시 등

3개지역에 화장장 증축 및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국비보조 신청중임.

춘천시 화장로 증축 : 29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원주시 화장로 보수 : 4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동해시 화장로 보수 : 6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질 문

시각장애인 유도 신호기가 음향불량과 고장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답 변

도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기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음향신호기로서 도내에는 총 535대가 설치되어 있음.

유도신호기 작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신호기는 전체의 80%인 428대이고, 음향불량 등 상태가 나쁘거나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신호기가 가동되지 않는 것이 107대이며, 일부 시·군의 경우 신호기의 설치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음.

이처럼 신호기 일부가 작동되지 않고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유도신호기 설치부서가 건설교통부이고, 관리부서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데 따른 것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 1월 28일자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신호기 설치 관리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도 8월 30일자로 유도신호기 관리 업무를 건설교통부에 이관했음.

앞으로 유도신호기 설치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 차원에서도 유도신호기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새 농촌 건설운동 획일적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기준 점수 목표제로 전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새농촌건설운동

지역 지도자 발굴·육성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도 미래농업교육원이라든지 도내 대학과 연계한 농어촌지도자 양성,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통한 청년지도자 양성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시도를 합니다만 향후 전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혁신시스템, 이것은 빌리지 이노베이션 시스템(VIS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펼쳐나가려고 함.

예컨대 새농어촌건설운동 아카데미 같은 인력양성시스템을 운영해서 도내 마을별로 혁신지도자를 육성할 계획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현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우수마을들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측면에서 마을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리더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임.

그다음에 농어촌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리더들을 양성하는 작업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포상 확대는 물론이고 선진농업국 견학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영혁신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우수마을 지도자들 간 정보교류 확대 및 마을, 학계, 행정 간 유대강화를 위해서 매년 연찬회도 개최를 하고 더 확대 심화시켜 나 갈 것임.

질 문

강원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지향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답 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적절이 대응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투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공무원 1인당 연간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

이 예정(국회계류 중)되고 있어, 우수강사 확보 및 교육시설 개선에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

※ 2004년도 627백만원 → 2005년도 733백만원 → 2006년도 780백만원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 교과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외부 교육전문가와 교육수료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계획중인「교육운영 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11월중) 토록 하겠으며 고객감동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중기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음.

교육과정 향상분야, 친절서비스 분야, 교육시설개선 분야 등 본 교육원이 1992년 준공되어 약 15년이 경과된 관계로 노후된 생활관과 강의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단계적 현대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 중심의 활력 넘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전국 최고의 일등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에 있음.

나) 교육행정

질 문

강원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안전 및 생활기초 연중 교육시간을 수업시간과 특별활동 등을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책자교부와 실질적인 반복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교과 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 가운데 21~23시간을 안전교육을 위해 학교별로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또한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초등학교에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있음.

최근에 개발한 안전교육 자료는 2004년 '안전생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요', 2005년 '재난대비 안전교육 도움 자료'가 있고,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된 자료로

는 2004년과 2005년 '고운 마음 아름다운 생활'을 발간하여 보급한바 있으며, 2006년에는 기본생활 습관 지도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반복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생활본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초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경험하고 실천하기, 반성하기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과 기본생활습관 형성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 후 실천하도록 하고 있음.

2) 최경순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 관광정책 및 현안에 관하여 ① 시즌별·지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과 체류형 관광을 실현 할 수 있는 테마관광에 관한 집행부의 방안, 또 매년 감소하고 있는 관광수입 증대방안,

②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캐치프레이즈를 교체할 의지 ③ 대관령을 4계절 관광지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강원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관령 개발에 관한 토론회를 제안할 의지에 대한 요망 ④ '07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답 변

강원 관광활성화 방안과 관련 도에서는 "제4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이 끝나는 2011년까지, 영서권관광객 비중을 '05년 33.4% → 42.9%까지 높이고, 여름철관광객 비중을 '05년 49.3% → 40.0%로 완화하는 등 추진하고 있음.

도 전역을 지역특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된 관광자원으로 조성.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테마관광상품을 적극 개발·육성 (가족·학생 대상의 생태관광 등) 하고 있음.

도 슬로건을 관광과 어울리는 문구로 교체할 의사에 관해, 도 슬로건은 도정의 최상위 목표이자 비전으로서, 어느 특정분야만이 아니라,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총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은 것임.

“대관령 4계절 관광지”개발은 대관령 구고속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내년 조경수 식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이달 말 알펜시아 착공,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동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대관령이 포함, 종합적 개발추진.

중국관광객 유치문제는 겨울시즌의 도내 외국인 관광객 중 중화권 관광객이 30%를 차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1월초에 “홍콩스키페스티벌”과 “2006타이페이 국제박람회”에 참가, 스키관광상품 등 판촉예정이며 내년도 중국 현지 강원도 관광사무소 1곳을 설치 홍보·마케팅을 보다 체계화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중국 동방항공 등과 협의, 양양~인천~상해·청도 등의 항공노선도 조기에 취항 정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강원도의 내·외자 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조직적·행정적 시스템에 대한 답변요망, 내·외자유치 및 기업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은?

답 변

금년 7월 기업경영인 출신인 정무부지사가 취임하면서, 강원도 산업경제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경제선진도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33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 이의 달성을 위한 조직 및 행정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현 조직을 투자유치 전담조직 및 투자유치 기획, 지원조직으로 강화 정비하여 기업이전 정보수집, 투자유치 기획 및 실행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2015년까지 10조원 이상의 민·외자 유치목표를 장기비전으로 삼아 추진 중에 있으며, 외부적으로 투자사업 금융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유치과정에서의 검증 및 자문과 유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기업 및 투자유치와 경제전반에 대한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중장기 경제발전 로드맵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용역을 ’07년도에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음.

질 문

돗토리현의 독도망언과 장춘시의 백두산 공정관련 동계올림픽 유치선언 시 지사·성장회의에서 도지사와 강원도의 대응과 대응에 대한 결과, 지사·성장회의를 통한 인적·물적·경제적 교류와 그로 인해 강원도에 끼친 가치, 향후 지사·성장회의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답 변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 그것을 민간 개인 간의 문제, 지방정부 간의 문제로 다뤄서 모두 경직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는 정부 간의 문제로 놔두고 지방정부간은 지방정부간 다양하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부분들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사·성장회의에서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 지역 간, 다자간 협력할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자, 노력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사·성장회의는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지사·성장회의, 지방정부 레벨의 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하고 각국 지방정부들이 입장정리를 했음.

다만 일본 돗토리현과 강원도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그냥 다뤄지고 지방정부간에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유독 돗토리현의 가타야마 지사가 독도와 관련된 발언을 강경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돗토리현과 강원도 간에 일반적인 민간레벨이나 시·군 단위 차원은 저희들이 관계하지 않습니다만 양도간의 교류협력은 잠정 중단상태로 있고, 그 대신 별도로 지사·성장회의에는 별개로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논의할 건 논의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질 문

서울대 농생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대와 강원도, 평창군 등의 사업주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의 방안?

답 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89만여 평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 1,394억 원, 우리도 597억 원, 평창군 299억 원 등 총 2,29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교육·연구·기술개발·벤처 기업단지가 복합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임. 금년 말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 내년 초 기본설계 및 부지매입에 착수 예정임.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소요사업비 668억 원을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연구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만간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 및 도내 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단지 조성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위원회구성 방안도 적극 검토, 도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597억 원은 내년부터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음.

본 연구단지 조성으로 춘천의 실버·청정바이오, 강릉의 해양바이오, 홍천의 나노한방바이오, 정선의 바이오코스 메틱벨리 등과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하겠음.

질 문

김진선 지사의 5.31지방선거당시 공약한 교육경비 보조금 5%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답 변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 전액하고 도세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법정전출하게 되어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는 바로 3.6%를 5%로 상향시키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를 질문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이것을 고려하면서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별 증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고,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5% 이상 확대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며, 참

고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3.6%에서 5% 지원될 경우 연간 50억 정도가 더 추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림.

나) 교육행정

질 문

도의회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요청하실 생각은 없는지, 원주시 교육청과 같이 각 시·군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답 변

도내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18개 기초 자치단체 중 10월 현재 3개의 시·군에서 제정 완료했고, 4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등 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기초자치단체와도 조례제정을 위해 협의 중으로 금년 내에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교육지원에 관한 시도조례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금년도에 제정한바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중 강원도와 도의회에 조례제정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할 계획임.

질 문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춘천, 원주 등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의회에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람.

답 변

도내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18개 기초 자치단체 중 10월 현재 3개의 시·군에서 제정 완료했고, 4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등 제정절

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기초자치단체와도 조례제정을 위해 협의 중으로 금년 내에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교육지원에 관한 시·도조례는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금년도에 제정한바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중 강원도와 도의회에 조례제정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할 계획임.

3) 서동철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의 자존심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관련, 긴 역사를 품고 있는 실록은 강원도의 얼이고 혼이며 정신임. 강원도는 이렇게 소중한 강원도의 보물을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 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소장처 결정에 대해서 현재, 오대산 사고본은 문화재청 국보지정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보 151호에 추가 지정되었고, 보관 장소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도에서는 오대산으로 되찾아오기 위해 문화재청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고, 문화재청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함.

이에 따라, 반드시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강원도민의 열망을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청 국보지정 분과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

그 결과, 지난 8월 11일 월정사에서의 『환국 고유제 및 국민환영식』에서 문화재청장이 오대산으로 돌려주고도 싶은데 보관시설이 문제라면서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오대산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

앞으로, 도에서는 오대산 사고본이 원 소장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선왕조실록 기념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고 범도민적 역량을 모아 오대산 사고본의 제자리 찾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수해 피해 원상 복구보다 항구복구와 관련하여 개량복구와 항구복구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원상복구 수준으로 처리됨. 하천공사 관련 계획서는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듯이 수해복구계획서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완벽한 복구계획이 수립 추진되어 진정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변

지금 수해복구 예산을 보면 피해액이 1조 3,004억 원인데 복구 액은 2조 3,522억 원으로, 피해액 대비 복구 액이 181%가 지원되는 것임. 이것은 다른 어떤 때보다 높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우리가 지금 피해복구비를 산정할 때 서동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항구복구비, 개량복구비, 강원도형 산간계곡형 개량복구비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

그 내용들이 주로 보면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은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하되 집단이주 등 필요한 근본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것임.

그다음에 하천 범람지역은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확장하고, 천변 저류지를 확보하는 등 원래를 물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교량, 하천 횡단 구조물들은 전부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저는 이것을 내수,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 통수-물이 흐르는 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그렇게 전부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복구액이 반영이 되었고, 특히 대규모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산간계곡 사방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사방댐이 매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방댐을 많이 확보한 것임.

사방댐 설치 등 이런 저감시설을 병행 시공해서 개통적인 항구복구를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었음.

그래서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와 피해가 적은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지원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학계,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위주의 설계자문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정금액-10억 원 이상입니다만-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음.

이런 형태로 가면 자연 본래의 형상에 순응하고 자연생태계 및 주변경관도 고려하고 강원도적인 산간계곡형 자연형 개선복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빨리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사를 아주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문제로, 저희가 지금 주간보고체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앞으로도 현지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음.

질 문

강원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도 전역에 걸쳐 이어지는 구 도로를 옛 정취를 간직할 수 있는 관광도로로 발전시켜 강원도의 미래로 발전시킬 의향?

답 변

구 도로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몇 곳의 도로가 있으나 우선 시급한 미시령과 대관령 구 도로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착수했음.

도에서는 현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고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화로 인하여 구도로의 통행기능이 줄어 도로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지고, 구 도로 주변의 상가시설이나 음식시설들의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 도로 구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환경을 하나로 묶어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먼저 대관령 구 도로 사업은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2015년까지 총 5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망대 건립, 트레킹코스 개발, 노천카페 건립, 옛 길에 있던 주막 복원, 관광수목의 식재와 더불어 대관령 정상부터 성산면 입구까지 곤돌라 또는 관광미니열차 도입, 강릉 단오제가 시작되는 국사 성황당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화, 성산면 일부 지역을 먹거리 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음.

현재 대관령 구 도로에 곤돌라 또는 관광열차 설치 타당성 용역이 발주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구 도로변에 대하여 관광수목 가로수 식재사업과 대관령 정상에서 성산면으로의 패러글라이딩 이·착륙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다음 미시령 구 도로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구상은 학사평 권역, 미시령 권역, 용대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학사평 권역은 콘도, 웰빙 펜션촌, 로맨틱 펜션촌 등 숙박시설과 콩꽃마을, 테마공원, 농어촌체험마을의 공간, 또 미시령 권역은 수려한 미시령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휴양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용대 권역은 만해마을, 백담사, 황태마을, 매바위, 인공폭포,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레포츠 체험시설, 폭포경관, 테마연수시설 등이 현재 용역 과정에서 제안되고 있음.

앞으로 본 구 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2008년부터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구도로가 옛 길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지형을 맛보면서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되어서 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구 도로 지역 상가 지역의 지역경제와 조기에 회생되도록 해 나가겠음.

질 문

농촌미래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생산 못지않게 유통이 중요한데 아직 홍보의 미숙과 조직적인 유통체계가 미흡한데, 어려운 농촌에 많은 힘이 되도록 적극적인 판매 전략 등 유통망 체계 구축과 타도보다 앞서나가는 농촌을 위한 방안을 강구?

답 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전문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대형유통점이라든가 생식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안정적 생산 공급도 적극 해나가고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구축이라든가 고품질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 확충, 저온수송차량 등 Cold Chain System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한편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가 대도시 특판전, 서울진품센터에 전시 홍보하는 것도 하고 도시민들을 친환경농업 현장에 적극 초청해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수도권 등지로부터 해마다 5천여만명이 동해바다를 찾고 있는데 관광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지 못하는 등 어업전반에 문제점이 있음. 저인망 트롤어선 감척 부진과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현실성이 없음. 이렇게 어촌이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

답 변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및 트롤어선 감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지난 '02년~'04년까지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5척을 우선 감척코자 하였으나, 전문용역기관이 평가한 폐업보상금은 2억 원인 반면에,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5억 원으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어업인들이 감척에 응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의제로 채택하여 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용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07년도부터 어느 정도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저인망·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은 우리 도를 포함한 울산시와 경상북도 연안 수역 이므로 동해안 3개 시·도 수역으로서 특정 시·도의 독자적인 추진은 감척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내년도 감척사업 국비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동해안의 타시·도와 협력하여 조기에 감척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현재 kg당 500원의 수매단가는 2000년도 해수부에서 책정한 단가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가로 인해 인상에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국내·외적 통상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해양수산업을 동해안의 성장견인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8월「강원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향후 10년간, 어촌·어항권을 복합 소득공간으로 규모 있게 정비 등 세부계획들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도내 불부합지와 관련하여 과거 일제하에 측량된 지형이 위치 변경이 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문제 해결책은?

답 변

도내 18개 시·군의 10필지 이상 집단 지적 불부합 토지는 53개 지구 3,665필지로서 전국 지적 불부합 토지의 0.4% 수준으로, '97년도부터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 불부합지 토지전량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정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국비와 지방비 약 4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대상지 업무량의 89%인 39지구 3,262필지를 정리 완료했음.

지적 불부합 토지의 정리를 위한 대책으로서 미정리 불부합지는 소유자간의 경계합의 또는 금전청산 등이 부분적으로 해결 안 된 지역으로서 소유자 상호간의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음.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 불부합 토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한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에는 지적경계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에는 시범사업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재래시장 살리기에 춘천이 앞장서야함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춘천의 조건을 이용하여 가정기업 살린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권이용하기와 서민과 함께 잘사는 도시가 되도록 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남김이 어떠한지?

답 변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시장시설 개선과 함께 다양한 현대화 사업을 지향하는 재래시장 혁신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음. 재래시장 혁신산업은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소비자, 재래시장의 상인 모두

가 참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시책임.

그동안 도지사께서 설이나 추석 때 직접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장보기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도 및 시·군 공무원들도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우리 도에서는 도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도청 및 춘천시 공무원의 재래시장 장보기 날을 지정 운영하고 도청 공무원 재래시장 1일 명예 점원제,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 촉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춘천소재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재래시장 이용의 날 참여, 그리고 각종 모임 재래시장 이용하기, 재래시장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교육청과도 협조를 해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체험 현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음.

아울러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살린 특산품 상권조성, 원산지표시제, 가격표시제 강화 또 강원도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재래시장 러브투어, 주부탐방단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 단순히 상품만 구입하는 쇼핑공간이 아니고 관광과 체험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의 주어진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남녀가 동등하게 경쟁하자는 양성평등은 여성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되므로,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여성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과 올바른 생활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머니의 큰 뜻을 되찾아 주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

답 변

그동안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개정으로 형식적인 법과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증가하고 있으나

능력과 잠재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 체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존해 있다고 생각함.

우리 도에서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여성의 가치와 권익, 참여가 최대로 보장되는 여성정책 모범 도를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아래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남녀가 함께 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식기반 사회,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과 여건보호, 취약여성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가정 육성,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등의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탄력 있게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시책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에는 여성의 교육과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도에는 도와 시·군의 간부공무원 766명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여성정책개발센터와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관련과정 27개를 개설하여 6,352명을 실시한바 있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여성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을 지원 그리고 의식전환을 위해 더 많은 시책 개발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질 문

춘천을 교육의 도시로 발전 시켜야 함과 관련하여 교육의 가치가 있는 춘천을 교육의 도시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이 어떠한지?

강원도도 세계 유명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국내대학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에 대한 견해?

답 변

외국대학 분교유치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외국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 도는 현재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님.

또 전국적으로 설립된 사례는 아직은 없음. 다만 도내 각 대학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 유명대학과 복수학위제 운영이라든가 자매결연, 교환교수제 등 공동학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이런 법적제한이

갖춰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음.

질 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한강 상·하류 간 동일하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되도록 도에서도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소양강댐 흙탕물 장기간 방류는 호소내 준설작업 및 청소가 부진한 것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 1등급 목표 미달성과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에서 의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타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제로 전환하려고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의무제 수질오염 총량제는 동일한 목표수질이 아니라 하류지역의 오염배출 기득권을 인정,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상류지역에 전가함으로써 상·하류간 형평성 결여와 그 외에도 비점오염원 삭감방안 등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미흡한 면이 있어 총량제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실정임.

다만 국가차원에서 물관리 정책상 불가피하다면 상류지역 지원 대책을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삭감대책 등 기술적 문제 등의 해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수준의 협의가 완료된 다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하여 환경부와 실무협의 추진,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대응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음.

소양강댐 흙탕물 발생과 관련해서 흙탕물 발생 원인은 '99년 이후 웰빙 바람이 불면서 상류지역의 고랭지 경작지, 건설공사장과 무분별하게 시설물 등이 설치되면서 매년 흙탕물 발생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금년은 7월 북한강 상류의 집중호우로 고랭지 경작지 토양유실 및 산사태 등으로 약 15억t의 흙탕물이 발생되어 소양호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댐에 유입된 흙탕물의 특징은 진흙 미세 입자와 비료성분으로 댐의 15~18℃의 중간층에 흙탕물이 모여 중층대를 형성하여 침전이 되지 않고 있는 성질이 있고 중층 탁수대 구간에 발전방류구가

있어 침전되지 않은 흙탕물이 장기간 방류되는 것임.

댐의 준설은 준설공법 등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댐과 관련하여 침전물을 준설한 사례가 아직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자공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댐을 준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음.

그간 도에서는 흙탕물 발생지역을 전수 조사했고 흙탕물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환경부에 강력 건의해서 한강수계기금을 확보 2005년까지 82억 원을 투자하여 식생대 조성, 빗물우회수로 등을 설치했으며, 또한 도에서 2018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용역 중인 소양호 탁수저감종합대책에 선택적 방류시설 설치 방안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여 포함시켰음.

앞으로 도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의거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 지속 추진과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을 연구하여 확대하고 각종 공사장에 흙탕물 발생유발 시설에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계별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권역 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질오염 문제 및 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의함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이 완료되면 선택취수탑 설치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농촌 현실과 관련해서 친환경쌀의 판매촉진을 위한 조직적인 판매망 구축 및 홍보 유통 대책과, 질문서를 통해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동시다발적 확대추진 대책, 웰빙산업으로 새로 각광 받고 있는 양잠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동해안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촌부문 새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이 1년에 두 곳밖에 안 되는 것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전문매장을 확대 설치하고 대형유통점이라든가 생식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안정적 생산공급도 적극 해나가고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구축이라든

가 고품질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 확충, 저온수송차량 등 Cold Chain System을 적극 확충해 나가는 한편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가 대도시 특판전, 서울진품센터에 전시 홍보하는 것도 하고 도시민들을 친환경농업 현장에 적극 초청해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새농어촌건설운동 동시다발적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기 선정된 115개 우수마을 외에 매년 도내 113개 읍·면마다 한 개 이상씩 신규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에 시·군별로 2개 내지 4개 마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47개 마을이 도에 추천이 되었음.

현 단계에서 보면 어촌마을이 농촌마을보다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우수마을 선정 확대 문제는 많은 재정적인 수요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 여건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그렇지만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음.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참여 마을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로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토록 하고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농촌관광, 수출농업 등 도 시책사업도 마을들에게 적극 권장해서 운동의 참여 여건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그 외에도 이 운동을 이끌어갈 마을리더 육성과 리더 중심의 마을발전을 위한 마을혁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

양잠산업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산 누에고치라든가 농촌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다른 고소득 작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급격히 사양되었음. 금년도 현재 양잠규모는 49농가가 27㏊로 237상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 5억 정도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웰빙 분위기를 타고 최근의 양잠산물이 건강식품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획기적으로 대량소비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대대적인 양잠업 육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양잠, 농촌관광과 연계해서 양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은 농가라든가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는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림.

나) 교육행정

질 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경우는 빈번하지 않지만 타 시·도의 경우는 매우 심각함.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강원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별한 대안은?

답 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전개하여 처벌 및 규제위주의 생활지도를 칭찬 및 발굴 중심으로 전환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음.

또한 학업중단 학생을 위하여 한림청소년복지센터 등 5개 기관을 지정하여 복교 전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자 학생을 위하여 강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등 4개 기관을 지정하여 상담 및 선도활동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병원 내에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1교 1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2008년부터 대학입시에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답 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논술교육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과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먼저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직속기관에서 논술지도 직무연수 80명 등 420명을 연수시켰고, 4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120만 원씩 총 5,16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논술강좌를 개설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또한 여름방학 중에 소규모학교 논술지원팀을 두 팀 구성하여 농어촌지역 고등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춘천과 원주에서 개인별 논술 첨삭지도를 했으며 대입 실전 논술길잡이를 비롯한 독서, 논술 읽기자료 등 논술자료 7종을 발간하여 일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수능이 끝난 후에 대학입시에 대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논술 지도자료 개발과 지도방법에 대한 정보를 일선학교에 제공하고자 함.

2007년에는 교사연수를 고등학교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까지 확대하고, 중학교 교사에게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직무연수에서 필히 일정시간 논술과목을 개설토록 추진하고자 하여 도내 각 대학, 연수원, 연구원 등에 협조 요청했음.

각급 학교에서는 독서지도와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토의·토론수업을 전개하는 등 방법개선으로 논술의 바탕이 되는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고자 하며, 재량활동과 방과 후 학교시간을 활용하여 논술을 지도하고 연구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강원교수학습센터의 사이버 논술교실을 운영하고자 함.

이런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통해 학교의 논술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도 학생들의 논술능력 신장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노력해 나가겠음.

2. 제173회 임시회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이준연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IOC 위원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홍보대책은, IOC실사당시 지적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육성을 위한대책, 이런 약점을 IOC위원들에게 불식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 향후 해외홍보를 위한 미디어 대책, 우리나라에 유치 중인 각종 대회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대책은?

답 변

IOC위원에 대한 홍보대책으로 정부, KOC, 경기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총력 전개하고 평창대세론 확산에 집중 노력할 계획임. 우선,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내 IOC위원, KOC, 가맹경기단체장을 비롯해 IOC위원과의 국내외 인적네트워크를 풀 가동하고 IOC위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음.

또한, 비드파일 요약, 현지실사, 드림프로그램, 주민열정 등을 담은 뉴스레터, CD, DVD 및 IOC위원별 맞춤형 지지요청 서한문 발송, IOC공식초청행사 및 각종 국제대회·행사참가 홍보 등 비전과 명분, 개최여건과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분야별, 시기별, 대상별로 치밀하고 세밀한 전략을 전개하겠음. 또한, 동계스포츠 종목의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육성대책으로 도 차원에서는 2002년도부터 꿈나무 선수·학교지정 육성사업과 동계스포츠 인프라 개선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임.

IOC현지실사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문화부가 주체가 되어 아이스하키, 루지/봅슬레이 등 국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경기력 향상대책에 관한 계획을 전문기관(서울대 스포츠산업센터)에 용역의뢰중임(4월말까지 육성계획완료 예정).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IOC에 통보하고,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IOC위원, 국제경기연맹(IFs), 주요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해외홍보 미디어대책과 관련 국제적 홍보매체(유로스포츠, CNN, BBC월드 등), 신문사, 잡지사 등 국제메이저급 미디어를 대상으로「평창광고」를 3월부터 집중 실시하고,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을 순회하는 미디어 투어와 스포츠스타 이벤트 각종 국제대회·행사에 참가하여 평창 붐 확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인천아시안게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으로 인한 유치활동 악영향 대책으로 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박람회는 기본적으로 개최도시를 결정 방법과 절차, 개최년도가 동계올림픽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짐.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같은 해 개최되는 대회로서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을「국가적 아젠다」로 정하여 어느 대회에 우선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새 농어촌운동의 지속화 및 발전방향과 관하여 우수마을로 지정된 후 사후관리, 다른 사업비의 중복지원, 사업비를 받는 데만 관심, 나눠 먹기식 집행 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은, 향후 주민의 소득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목표 및 지원 방안은?

답 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국 최초, 유일의 농어촌혁신운동으로 그동안 우수마을 145개마을, 대표모델마을 6개 마을에 731억 원의 혁신역량사업을 지원하여, 도내 농어업인들의 자신감 회복, 마을발전 역량 배가, 상부상조의 풍토조성, 전국단위 농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점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상 문제점 해소방안과 관련, 우수마을로 지정된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로「자문단」을 구성하여 담당마을에 연간 2회 이상의 현지 방문지도를 통해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특성화 전략 컨설팅과 신기술 전수, 마을 지도자 혁신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 우수마을로 선정 후 5년차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2개 마을씩 대표모델마을로 선정,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속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우수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우수마을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과 관련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제대로 추진하여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마을이 그렇지 못한 마을에 비해 다른 시책사업 대상마을 선정 시 추진 여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마을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간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도 전역에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하지만 같은 마을에 너무 많은 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

도 있으므로 앞으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또한, 우수마을에 지원되는 5억 원의 혁신역량사업비는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는 하나, 가급적 소득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되 마을주민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마을의 사업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음.

그리고 마을의 장기적 발전목표 및 지원방안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도내 1,676개의 전체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촌 혁신운동으로 정착·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문단을 활용한 우수마을 밀착 지도방문으로 장기적인 마을 발전계획 및 비전에 대한 컨설팅 확대 등 특성화에 주력하고, 도내 전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혁신시스템(VIS)을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하여, 마을리더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농어촌 리더」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임. 더불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강화 등 강원도의 대표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강원한우의 명품화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강원한우를 전국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화 방안, 도내한우의 사육두수 확대를 위한 대책은, 광역브랜드로 개발된 하이록과 지역브랜드 중 농가의 판매소득 측면에서 어떤 브랜드가 더 효과가 있는지?

답 변

먼저 강원한우 명품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도내 시·군단위 한우브랜드는 홍천 늘푸름 한우, 횡성한우, 평창대관령 한우가 있고, 광역브랜드로는 영서북부권의 하이록 한우가 있으며, 앞으로 동해안 지역 7개 시·군 한우 농가를 연합하여 제2의 광역 브랜드화를 개발하는 등 전체적으로 5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예정임.

품질관리와 출하시기 조절,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는 먼저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종축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 등 「3통」 체제를 갖추어 나가되 그중 종축통일과 우량 밑소 확보를 위해선 인공수정 및 종축등록과 거세를 지원 하고 통일된 사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초음파측정기 등을 이용한 육질측정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해 나가고 고급육 생산 농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브랜드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농림부 및 소비자 단체주관의 전국단위 브랜드전에 출전함으로서 도내 축산물 우수성 홍보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도시나 수도권에 도내산 한우 전문매장을 늘려 나가고, TV홈쇼핑 광고 확대, 홈페이지개설운영, 도지사품질보증, 도로변 대형광고판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도내 한우의 사육두수 확대여부와 관련해선, 최근 전국적으로 소 사육 두수가 200만두를 넘어섰고 금년 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예상되어 수급여건상 금년 하반기에는 소 값 하락이 예상되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현 단계 무리한 소 입식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다만 거세 고급육으로 출하 시에는 비거세우 보다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수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적정규모로 확대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하이록 한우의 판매소득 측면 등 브랜드 효과는, 하이록 한우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영서북부 5개 시·군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브랜드로 2003년부터 착수하여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육규모는 647호 19천두로 '06년도의 경우 하이록 한우 브랜드의 연간 수입은 거세우 844두 출하로 6,729백만 원, 우량송아지생산 6,872두, 17,446백만 원 등 총 24,175백만 원 정도가 참여농가 소득으로 형성되었으며, 일반 비거세우로 출하하는 것보다 브랜드사업에 참여 고급육을 생산한데 따른 소득을 비교하면 연간 2,222백만 원의 소득을 더 올린 것으로 판단되어 브랜드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도에서는 개방화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강원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화, 전업화, 고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생산비 절감대책도 함께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생활안정대책과 관련하여「삶의 질 일등 도」실현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은?

답 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생활안정 대책 관련,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대책으로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36,414세대 63,781명('06.12.31현재)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으로 1,524억 원을, 저소득층 75천명에게 의료급여 1,7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건강 권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함께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틈새빈곤층 보호지원을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도 자체 시책인「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긴급지원 사업비 23억과 도 자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사업비 5억 등 총 28억 원을 들여 생계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 저소득층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민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2001년부터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 하고자 자활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7년에도 국비·지방비 포함 204억 원을 투자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2006년 2,75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시켜 일을 통한 탈 빈곤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한 도 자체 사업으로 강원도적 자활모델(사례관리 도우미) 시범사업 추진,「강원도 가사간병 지원센터」운영 활성화 및 자활 단체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6년 5월 12일 개소한「강원도 가사간병 지원센터」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간병사업 모델 개발 및

가사간병 자활사업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자활간병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시장경쟁력 제고, 돌봄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효율적인 자활·자립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생업자금융자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도에서는 자립촉진 및 생활안정 도모 등 탈 빈곤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생업자금융자 및 자활촉진자금대여 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0년까지 총 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생업자금융자는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자활촉진자금 대여는 도와 시·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자활공동체, 자활후견기관, 저소득층 개인 창업자의 사업자금, 전세점포 임대 지원을 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1999년부터 도에서는 매년 600가구를 선정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고자「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2007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비, 시·군비 포함 총 6억 원을 지원하여 도배·장판교체, 보일러교체·수리, 지붕·담장 수리, 화장실 수리 등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선의 급여서비스 제공과 함께 질병·생계곤란·가족해체 등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강원도적 자활사업모델의 지속적 개발을 통한 자활사업의 참여확대,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충, 자활촉진 구제금융의 확대지원을 통해 탈 빈곤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강원도 재활병원 신축사유 및 재원확보 대책, 현재 규모로 신축한 사유 및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새로 신축한 사유는, 재원확보대책, 신축할 경우 현재 건물의 활용방안, 현재 운영상의 수지분석, 신축하여 병상수를 확대하였을 경우 의료서비스 개선 및 운영상 수지 개선 능력은?

답 변

소규모 재활병원 건립사유 및 운영상의 문제점 관련 우리 도에서는 도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 5월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50병상규모의 재활병원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소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먼저 확보된 사업비의 규모(4,750백만원)를 감안하였고, 재활병원에 연접해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사업소와의 의료사업 연계, 의료재활서비스의 시범사업개념 등을 고려하여 건립하게 되었음.

그러나 도내 장애인이 현재 79,468명으로 지난 2000년도의 43,245명에 비해 연평균 6,000명씩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장기간 입원대기 하는 등 수용능력 부족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설 협소에 따른 의료시설 장비의 배치 불합리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활동공간 제공 불가, 주차장 협소에 따른 이용불편, 진입로의 교통안전 미흡, 소규모 병상운영으로 인한 적자요인 발생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새로이 재활병원을 신축하려는 사유는, 이러한 환자 수용능력 부족현상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과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전국의 6개권역에 재활병원을 건립할 목표로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였음.

우리 도에서도 기존병원시설을 개선하고자 증축개념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사업으로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재활병원의 위치로는 부지협소 등 증축환경이 열악하여 춘천시 우두동 일원에 8,500평 부지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신축할 계획에 있음.

신축사업비 예산확보 대책으로 재활병원 증축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총 270억 원으로서 국비 135억 원과 도비 135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며 국비는 2006년 11월 전액 교부완료 되었고, 도비는 현재까지 45억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90억 원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기존 병원건물의 활용방안과 관련, 기존 병원건물은 부지 2,313㎡에 건축면적 2,735㎡로서 재활병원 기능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신축하는 병원과는 원거리에

있게 되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분산으로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효율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도 단위 장애인 관련 10개 단체의 사무실 집중 배치와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민원실, 점자도서관, 정보화교육장, 심부름센터, 회의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능력 개발센터장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신축에 따른 의료서비스기능 및 운영수지 개선 전망 재활병원 신축에 따른 의료서비스 기능과 관련하여 재활치료는 의학적 치료를 비롯하여 심리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31,000㎡의 부지에 150병상규모의 재활병원을 신축하게 되면 최적의 의료 환경, 충분한 활동 공간, 쾌적한 분위기, 부대시설 확충 등 합리적인 병원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치료 대기환자의 수용능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신축에 따른 운영수지 전망과 관련하여 재활병원은 공공의 기능을 최대화하면서 취약계층 대상의 저수가 의료서비스를 지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수지균형의 분기점이 150병상으로 분석되고 있어 50병상 대비 150병상 사업수익은 150% 증가하는 반면,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10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적자운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앞으로 관계 전문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최상의 재활병원을 신축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질 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추진 지연사유, 사업추진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사유, 목표연도 내 완공이 가능한지, 국비(40억)에 비해 도비(150억)가 많이 투자 되었는데 국비 추가 확보 대책은 없는지?

답 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2005년 10월 수련원 건립 부지 내 문화재 분포지역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청에

서 2005년 11월 18일 ~ 12월 7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2월 17일 ~ 4월 7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2006년 7월 3일 ~ 9월 8일까지 문화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가능함을 통보('06. 9. 13.)함에 따라 부득이 건립 공사가 지연되었음.

목표연도 내 완공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수련원 건립공사는 2006년 10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관리동·연수동의 지하 1층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말까지 총 공정율의 47%를 완료하고, 목표연도인 2008년 말까지는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임. 다만, 총사업비 190억 원 중 50%만(95억 원) 확보되어 금년 추경 및 2008년도까지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수련원 건립 국비 추가확보 대책은, 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비는 30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해 특별교부세 15억이 반영되어 전체 4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여성가족부에 신청(2007. 3. 13.) 하였음.

지난해 기획예산처에서 여성가족부 예산 심의 시 수련원 건립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시 도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7년도 국비 10억 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음. 2008년도 국비확보(10억원)를 위해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도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질 문

아름다운 강원 만들기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와 2007년도 추진계획 및 개선대책은?

답 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사업목표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에 두고 있음. 도비지원 정비실적은 2003년부터 15개 시·군, 25개 지역, 1,961개 업소, 2,615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음.

간판 디자인 개발은 기본방향을 단순화, 최소화, 간결화, 다양화, 고급화, 조화된 색채 사용 등에 두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정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간판 개발에 전력하고 있음.

설치지역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설치지역으로 속초 학사평 콩꽃마을, 인제 용대지구, 평창 고원 눈마을, 강릉 임당동 문화의 거리, 동해 횟집 명소거리 등이 있음.

추진성과는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청정 강원도 이미지 제고를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무질서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새로운 광고 질서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초기에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불신을 가지던 도민들이 일부 추진사례를 보면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참여의사가 확대되었음.

또한, 전국 최초로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선진사례로 소개되는 등 타 시·도 지자체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2007년도 추진계획은 기 추진된 시범지구에 업종변경, 업소폐업 등의 환경변화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과 주민참여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지역, 가로종합정비 등의 집중투자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투자 사업비는 총 750백만 원으로 4개 시군, 4개 지역, 215개 업소, 302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임.

개선대책은 경관 마인드 향상을 위해 광고업체, 주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교육과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장 강원도적인 간판모델 개발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한 간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디자인과 친환경적 재료를 권장함으로서 강원도적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함.

질 문

기 착공한 지방도의 조기완공 및 주요교통망 추진대책과 관련하여 '02년도에 착공한 지방도의 추진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조기완공 대책은, 동서고속도로, 경춘선복선화도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답 변

지방도 터널공정 지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내 2시간대 도로망 구축을 위해 우리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지방도 터널화 사업이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적기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

도에서도 2000년대 초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준공이 어려운 6개소 터널(화천 부다리고개, 양구 돌산령, 태백 신리재, 평창 보래령, 삼척 건의령, 횡성 고일재)에 대하여는 금년 겨울철부터 임시개통이 가능하도록 공정계획을 수정하고,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에서 우선구매 공급하는 한편 필수사업비는 추경예산 편성시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음.

동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계획년도 완공대책과 관련하여 동서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 7×9 고속간선망의 동서 2축에 해당 서울에서 춘천을 경유 양양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현재 서울에서 동홍천 간을 착공하여 이중 서울~춘천 간 61.4km는 민자 사업으로 2004년 8월 착공하여 3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춘천~동홍천 17.1km는 2004년 3월 착공 공정율 51%로 2개구간 모두 200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다소 앞당겨 개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홍천~양양구간 71.5km는 국가사업구간으로 2006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구간별로는 2019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보다 오히려 조기에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음.

경춘선 복선전철은 수도권과 강원내륙권을 연결하고 강원지역의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청량리~춘천 간 86.2km를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중 망우~금곡 간 17.2km는 2005년 8월, 금곡~춘천간은 63.8km는 2002년 12월 각, 각 착공하여 2009년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망우~금곡간은「수도권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 현재 공정율이 19%, 금곡~춘천은 공정율 51%로서 이는 최근 정부의 SOC분야 투자 축소와 특히 광역 철도구간의 사업 특수성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질 문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전력생산 규모 및 운전상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가동 중인 풍력발전소의 발전규모 및 경제성은, 대관령 풍력발전기의 가동중단 사례 및 수리 상 문제점, 현재 기종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여 설치됨. 국산화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추진상황은?

답 변

현재 운전중인 풍력발전소의 규모는 4개단지 총 110,440㎾ 발전시설용량으로 63기의 발전기가 가동중에 있음. 풍력발전의 경제성 관련, 풍력을 비롯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선진외국에서는 상용화 단계를 넘어섰으나, 국내에서는 초기 시범사업 등 기반 구축 단계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부족한 경제성을 보전하고 있음.

풍력발전사업은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으로 투자회수기간을 7내지 13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관령과 같이 대규모로 단지화 해야 가능하고 연간 발전기의 이용률이 25%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풍력발전기의 가동중단 사례 및 수리 등 문제점 관련, 풍력발전기가 운전 중 중단되는 원인은 초속 25m/s이상의 강풍과 돌풍 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와 동절기 현장접근의 어려움으로 재가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온도센서의 불량과 같은 경미한 고장은 즉시 조치가 가능하고,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제네레터 권선의 소손, 유압펌프의 고장의 경우에는 부품 운송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재가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음.

그동안 고장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장이 예상되는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비치하였으며, 또한, 풍력발전기 제작사인 덴마크 베스타스사에서는 한국 현지 법인을 설치하여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어 금년부터는 고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고장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산풍력 추진계획 관련, 정부에서는 풍력발전기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750㎾, 1,500㎾급 풍력발전기의 실증사업에 투자를 해왔으며,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에서 조성·운영 중인 대관령 실증연구단지에 유니슨과 효성에서 750㎾급 국산풍력발전기를 실증연구 중에 있으므로 연내 성능시험을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개발 및 실증을 마친 발전기에 대한 국내 보급을 위해 금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비 126억을 포함, 총 180억 원을 투자하여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2기의 국산풍력발전기의 설치를 위해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 했으며 대관령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음.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상황은 현재 도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총 6개단지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3건, 사업대상지역 재검토가 예상되는 사업 2건, 계획 중인 사업 1건이며, 정상 추진사업 3건은 태백시 하사미동 귀네미골 일원에 추진 중인 태백풍력발전사업은 관할 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 취득 중에 있고,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강릉풍력발전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지역주민과 협의 중임.

태기산 일원에 추진 중인 태기산 풍력발전사업은 산업자원부에 발전 사업허가 및 군부대, 방송사, 이동통신사 등과 사업동의 협의 중에 있고, 사업장 재검토가 예상되는 2건은 양구풍력발전사업은 문화재관련법에 의거 2차례에 거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며, 아울러 현부지에 대해서도 천연보호구역 제척을 검토 중임.

함백산 일원에 추진 중인 함백 풍력발전 사업은 백두대간핵심 보호구역의 보존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으나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삼척시 하장지역에 독일 P&T사에서 투자를 위해 현재 풍향조사 중에 있음.

질 문

탄광지역 생활보존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국비 확보 대책은, 영월 마차리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의 총사업규모, 사업내용, 완공기간은?

답 변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은『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황폐화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폐광 카지노(강원랜드)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관광진흥기금으로 국가에 귀속됨에 따라, 지사님께서 2003년 12월「관광진흥대책보고회의」시 대통령과 문화관광부 장관께 건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임.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을 대상으로 잊혀져 가는 폐광지역 생활현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개 사업을 추진 중임.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태백『철암세상』은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등의 사유로『소도 광산 역사촌』사업으로 변경 신청되었고, 삼척『신남 어촌마을』과 도계『광부사택촌』사업은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사업구역 중복 등으로 해당 시·군에서 사업포기 신청이 있어, 9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중앙부처(문화관광부)와 협의 진행 중에 있음.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2개사업은『영월 마차 탄광문화촌』과『삼척 산양 화전마을』로서,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사업은 2006년 12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가설사무실 설치가 완료되어 공정율 5%가 진행됨. 조속한 시일 내로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앞으로 추진 계획인『태백 소도 광산역사촌』,『정선 광산문화테마파크』,『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영월 탄소마을』,『문화원형 기록보존 및 프로그램개발』등 5개 사업은 사업위치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등 여건변동이 있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하고자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 할 계획임.

또한 국비확보 대책은, 총사업비 567억 원(국비 397, 지방비 170)중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115억 원 지방비 99억 원 등 214억 원임. 현 단계에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는 부족함이 없으나,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계속적으로 잔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고 있음.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총사업규모는 250억 원으로 국비 115억 원, 지방비 99억 원, 민자 125억 원임. 앞으로 탄광촌생활사 전시관, 갱도체험장, 야외전시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은 2008년 12월 완공계획이며, 숙박시설 및 편익시설 등 민자 유치여건 확충을 위하여 현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추진 중이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실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별도의 마케팅 홍보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도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대책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대책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문 인력 양성계획은?

답 변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먼저, 도에서는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강원도적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도의 일자리유형은 수도권 등과 비교해 농림어업비중이 높고 제조업비중이 낮은 것이 현실임. 이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된 사회간접시설 낙후와 그간 이렇다 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함.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 민선4기 도정공약으로「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약속 하였으며, 2010년까지 5만개 창출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에 있음.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핵심은 기업유치임. 지난 2000년부터 기업 1,500개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05년까지 이미 700여개를 유치하였으며, 민선 4기를 기점('06년)으로 2010년까지 8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타겟 중심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기업유치 세부 실천전략으로, 먼저,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 이를 기반으로 타겟 중심의 기업유치 전략 전개, 이와 함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기업유치와 함께, 알펜시아 등 민간·공공부문의 대형프로젝트 추진과, 우리도의 강점인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시설 들의 집중적 조성(유치)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고,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계획임.

다음, 기술인력 양성 관련,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요 · 공급적 측면에서 일자리와 인력의 적절한 매치를 도모하고자, 청년층 취업능력배양 사업,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지방대학의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BK21사업,

지역맞춤형 직업훈련지원(폴리텍대학) 등 다양한 기술인력 양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특성화 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우수인력이 지역 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흙탕물의 발생실태 및 탁도 현황은,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을 위한 시설보강 대책은, 흙탕물 저감사업에 소요될 예산의 확보방안은?

답 변

소양강댐 흙탕물 발생은 강우 시 상류의 고랭지 밭과 건설공사장 등에서 유실되는 토사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북한강 상류의 집중호우로 고랭지 밭 등 농경지 유실, 산사태, 도로유실, 하천범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흙탕물이 유입되어 현재까지 방류되는 실정임.

소양강댐의 탁도는 평년에는 탁도 30NTU이상 일수가 1~2개월(9~10월) 유지되고, 최고 탁도가 42~80NTU 였으나, 지난해에는 최고 탁도가 328NTU까지 상승하였으며, 7월 18일 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탁수현상이 지속되는 상태임.

소양강댐의 흙탕물이 장기화되는 원인은 유입된 토사가 수온·밀도의 차이로 침전되지 않고 탁수층 형성 표층의 수온이 낮아지는 11월에 수층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댐 전역으로 흙탕물 확산됨.

고랭지 밭 등 상류 흙탕물 저감시설 보강대책으로 '99년부터 내린천 등 상류하천 흙탕물문제발생, 2001년부터 2006년까지「한강수계기금」으로 식생수로 및 경사면보호 등의 고랭지 흙탕물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12월「소양강댐 흙탕물 저감 종합대책」을 정부에 건의, 환경부장관 현장 방문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

흙탕물 저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대책으로 정부차원의 소양강댐 흙탕물 저감대책이 확정되면 정부합동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사업별로 소관부처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수자원공사 및 한강수계기금 등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나) 교육행정

질 문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과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3년간 연말 의회의결 간주처리 예산으로 받은 지원금이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 대구, 대전, 충남,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경우는 최근 3년간 의회 의결 간주처리 예산운용실적이 전무한데 원천적으로 지원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기 때문인지 확인요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도 말 의회의결 간주처리 교육비 예산운용제도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편의적인 예산운용인 바 이에 대한 개선의지와 부득이한 경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 바람

답 변

지난 2월 의원님께 서면답변서로 제출하여 드린 '전국 시·도별 간주처리 예산운용 현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가운데 집행시기가 촉박하여 성립 전 사용 결정하여 의회의결 간주 처리한 예산으로, 전입금 전체 현황이 아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은 시·도별 소요액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원수준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리도 2006년도의 경우 교육인적

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입액 282억 원 가운데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77억 원만 의회의결 간주 처리한 예산이며, 나머지 204억 원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임.

대구 등 5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있었으나 의회의결 간주처리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교육청은 성립 전 사용계획의 의회 별도보고 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해당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고자 예산총칙에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차후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연도 내 집행이 부득이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책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있음.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교육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산안 작성부터 의회의결까지 3개월여 기간이 소요되어 매년 10월말부터 11월까지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질 문

「강원애니고등학교」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역별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해당과를 신설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히 투자비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답변을 요청

답 변

강원애니고("가칭")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역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창달을 목표로 설립하려고 하며, 전국에서 애니메이션 분야로 신설된 학교는 경기도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

교와 울산애니원 고등학교 두 곳이 2000년, 2003년 각각 공업계열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지역 산업수요와 직결된 특성화고의 신설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학과 관련 기관-단체-산업체-대학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 그 지역 산업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지역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은 해당 지자체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자·육성해야 함.

따라서 강원애니고와 같은 특성화고의 설치 방식은 제시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여러 지역에 분산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이 되든지 한 지역에 집중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홍건표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도지사님과 관련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 전문기술직의 푸대접, 신상필벌원칙의 실종 때문이라고 사료됨. 문제점 및 조사에 대한 답변. 만약 도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 언론보도 되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

답 변

인사운영 기본방향은 “일중심·성과중심”의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고, 사전에 공개된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지침 사전공개, 승진심사 다면평가 실시, 인사사전예고제 운영 등 기준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

기술직 승진적체와 관련, 조직운영 특성상 인원수가 적고, 기술 직렬의 정원배정 등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향후 직렬 통·폐합 등을 통하여 가급적 직렬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성과중심의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관련, 업무성과와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 강

화 등 일한만큼 보상받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등은 최대한 관용이 허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소속직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한 입장으로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거나 도민들에게 폐해를 끼친다면 행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책임을 묻고,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또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관행이나 행정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 해결방안을 마련, 도민들에게 폐해가 안가는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회적 물의와 도민에게 돌아가는 폐해의 정도가 크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도정의 수반으로서의 도지사가 상황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질 문

강원도 인사운영에 관련하여 강원도공무원정원 결정, 배치기준, 근거법 규정,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운영하는 이유, 관계 법 규정, 예산집행 방법 동계올림픽유치단은 4급 정원이 2명, 5급은 정원이 2명이 결원인 이유, 직무 대리와 직위승진의 용어의 뜻과 차이점, 구분 발령이유, 현재 인원?

답 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동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구의 설치와 업무의 성질과 양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음. 공무원의 배치는 책정된 정원에 따라 각 부서별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일부부서 3~4급의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인사운영상 현원배치 기준은 직급별로 책정된 총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도의 3~4급 정·현원은, 정원이 75명(3급 11, 4급 64)이고, 현원이 72명(3급 10, 4급 62)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3명 적게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림.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관실, 환경정책과 등과 관련한 정·현원 문제는 현행 규정상 실·국의 설치가 한정되어 있어,「대국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국장의 업무영역이 넓고 여러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조직통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한하여「준국」또는「과」단위의 T/F팀(임시기구)을 만들어 운영함에 따라 일부 부서의 경우 정원이 현원보다 많게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道 전체적으로는 직급별 총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동계올림픽유치단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배치된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정원(36명)보다 9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음. 특히, 4·5급의 경우에도 정원은 12명이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13명임.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정·현원 현황표상에 결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타부서(총무과 등) 소속으로 유치위원회에 파견된 인력이있기 때문임.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추가인력을 배치한 것은 국가적 대사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것임.

또한 직무대리와 직위승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무대리는 기관의 직무를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위승진이란 현재 직무상의 직위가 올라감을 의미함.

예를 들어 계장이 과장이 되는 것은 직위승진에 해당하고, 서기관으로 보임되어 있는 과장자리에 사무관이 발령 나면 직무대리가 되는 것임. 직무대리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직위는 올라갔으나(예 : 계장→과장)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와 현행 기구·정원관련 규정에 실·국·과의 설치 수가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 T/F팀 등을 설치 할 경우 등임.

질 문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관련하여 총인원, 직원신분, 기구구성, 설치의 법적근거, 소속부처, 동계올림픽유치단과 유치위원회의 관계, 공무원 파견 근거는, 파견 공무원 인원은?

답 변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근거로 2005년 4월 14일 자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동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해 유치위원회 정관규정(제8장)에 따라「사무처」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현재, 유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은 2총장 1단장 3처 4부 1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강원도 소속공무원 47명, 시군소속 공무원 3명, 그리고 정부부처에서 7명(국무조정실 1, 문화부 2, 행자부 1, 외교통상부 1, KOC 2)등 57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47명과 국무조정실(1), 문화부(2), 행정자치부(1), 외교통상부(1), KOC(2) 등 57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전문 인력, 외국어 통·번역, 기타 유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자체 채용인력 19명 등 총 76명이 되겠음.

동계올림픽유치단과 유치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유치단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2005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 정원승인을 받은 강원도 공식 직제로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국제대회 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전체정원은 총 33명이며(3급 1, 4급 4, 5급9, 7급 10, 기능 2)으로서, 이중 21명은 유치위원회에 파견하여 올림픽 유치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12명은 유치단 소속의 국제스포츠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국제대회 유치, 드림프로그램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동계올림픽유치단장이 유치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실정임.

질 문

자주재원확충과 관련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은, 탈루세원발굴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2006년 말 현재 체납액, 읍면 재무계 부활로 인사적체해소 및 도세징수 교부금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카지노는 레저세 과세대상에 누락된 사유,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는지? 자동차 대여사업 증가에 따른 도세와 시·군세의 감액금액,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의 보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징수 실적현황, 세무조사를 실시한 실적, 승용자동차 장기대여 운행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적법한지, 외제승용차 린스권에 대한 지방세 세원추가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였는지?

답 변

우리 도에서는 탈루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탈루의 우려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연중 정기·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789개 법인을 조사하여 176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에는 조사대상 법인을 2,100개 업체로 확대하고 국세청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무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시·군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연 2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 공개, 징수포상금제 도입·시행, 체납액 정리 우수시군 선정 시상 등의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징수포상금제를 확대하여 과년도체납액 징수율을 18.5% ⇒ 30%이상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체납액 정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2006년말 현재 체납액은, 총 1,376억원으로 도세가 535억원, 시군세가 84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누적분 49억원과 과세규모 증가에 따른 체납증가분 등이 168억원임.

읍·면 재무계 부활, 인사적체 해소, 징수교부금 지급과 관련 현행 읍·면·동 사무소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정시책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사무·인력조정) 추진으로 민원발급, 복지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만을 존치하였고, 지방세, 건설 등 일반 행정 기능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였음.

현재 시·군의 인사·조직 및 정원의 책정은 인사권자인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시군별 현실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도에서 인위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세무직공무원들이 타 직렬에 비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군에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음.

도세 징수교부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와 관련하여, 도세를 시·군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토록 함에 따라 징세비 보전 차원에서 시·군에 주는 법정교부금으로, 1999년 이전까지는 징세처리비와 재정보전기능을 혼합하여 운영(도세

징수금의 30% 교부)하던 것을, 2000년부터 목적에 맞도록 징수교부금(도세징수금의 3%)과 재정보전금(도세징수금의 27%)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세 징수교부율의 경우도 외국의 사례와 우리 도의 징세처리비 등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나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카지노와 관련 카지노가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이유는, 현행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감안할 때 카지노의 경우도 레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원님 의견에 동감. 그러나 레저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레저세외에도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레저세에 80%(농어촌특별세 20%, 지방교육세 60%) 부담토록 되어 있어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카지노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해당업체 부담 등을 이유로 중앙부처에서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음.

카지노 레저세 과세관련 중앙정부와 협의한 실적은, 2001년 9월 : 폐광 카지노 지방세 과세건의(행자부), 2003년 9월 : 의원입법 발의(유재규 의원 외), 2006년 2월 : 폐광 카지노 지역개발세 과세건의(행자부).

자동차 대여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세 감소문제와 관련, 법인의 대여자동차 운행실태를 조사한 실적은 없으나, 참고로 도내에서 대여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실태를 표본으로 확인해 본 결과, 운행차량 총 79대중 자체구입차량이 33대, 리스대여 15대, 렌트카 대여 31대였음. 리스대여 차량 15대중 9대는 원주(아주오토리스영업소)에, 6대는 타 시·도(성남 4, 창원 2)의 리스영업소(아주오토리스)에 등록된 차량이었으며, 렌트카 31대중 29대는 도내(춘천 2, 원주 6, 강릉 11, 속초 10)에 등록된 차량이었고, 2대는 서울(금호렌트카)에 등록된 차량이었으며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정선군에 등록된 차량은 없었음.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대여업체의 영업소 등이 있는 시·군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법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타 시·도에 등록된 대여차량은 실업팀 지원을 위한 차량으로 선수단이 소재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대여자동차 활용에 따른 지방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리스대여 차량은 일반승용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하고 있으며, 렌트로 1년 이상 장기대여 활용할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므로 일반승용에 비해 자동차세를 10%수준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점이 모색되어야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5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장기 렌트카에 대하여는 비영업용으로 지방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입법 추진하였으나, 관계 부처간 협의지난으로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으므로 향후 법인 세무조사 시 차량을 대여하여 이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도내 및 실제 사용본거지 시·군내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음.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체의 보유자동차와 관련 도내에는 99개 영업소가 운용되고 있으며,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3,462대로서, 이들 대여업체의 보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세액(2006)은 112백만 원이며 징수액은 103백만 원임. 도내의 자동차 대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렌트업체의 경우 2004년 이후 7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한 바 없으며, 이는 도내에 리스업체의 본점이 없고 영업소만 두고 있기 때문임.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조사인력, 기간 등의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이나, 지방세 감면 법인 중 고유목적외 사용법인, 유예기간 초과법인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못하였음. 앞으로 도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 자동차를 포함한 대여 장비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법인 등의 승용자동차 장기대여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자가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렌트 비용을 지불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렌트카 방식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리스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여 받아 이용자가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대금 등을 상환해 가면서 이용하는 리스방식이 있음.

승용자동차의 장기대여 운행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법한지에 대하

여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의 장기대여 운행형태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리스)도 렌트업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대여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또한, 지입형태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으나 차량할부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 보험가입 등이 모두 대여업체 명의로 처리되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실정임.

외제승용차 리스권 지방세원 추가문제 중앙협의와 관련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리스인 경우 리스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리스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함.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리스권」세원 추가문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한 적은 없으나, 사실상 소유권이 없는「리스권」에 대하여 지방세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과세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임차권과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질 문

감사관실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관실 임무, 공직자 비리정보 수집방법, 발견 시 조치 '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때 복무단속, 특별 감사 활동 실적, '05년(1명), '06년(1명) 중징계자의 소속, 성명, 징계사유, 징계종류, 위법행위?

답 변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강원도 및 도내 시·군, 지방공기업 등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도 및 시·군의 자치법규 입법심사 등 법제행정 종합기획 조정과 행정심판·소청, 소송사무 등 도민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직자 비리, 부당행위와 관련, 공직자의 비리,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도 및 도사업소 공무원의 경우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음. 시·군 공무원은 시·군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비리연루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상 조치(징계, 훈계)를 하고 있음 .

공직자의 비리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은 도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관실 직무조사팀에 시·군별 “지역전담제”를 지정하여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 등에 게재된 비리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지역신문, 방송 등 정보매체와 검·경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자료 등을 통하여 공무원 비리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

지난해 5년 31일 지방선거 복무단속 등 관련,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 복무를 단속하기 위해 3차례의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불법선거사범 단속실적은 없었으나 민생안정 저해, 공직기강 해이 등에 관하여 총 54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54건, 신분상 46명을 조치하였음.

‘05년과 ‘06년도 감사결과 중징계 관련, 우리 도에서 2006년도에 실시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한 인원은 모두 2명임. 1명은 시·군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여 중징계 요구한 건이며, 다른 1명은 민원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한 사안임.

시·군 종합감사결과 중징계 요구된 1명의 주된 징계사유는 200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건으로서. 2004년도 ○○군 정기 종합감사 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미이행(2003년도 분 63건 1억 3,666만원, 2004년도 분 37건 7,827만원) 사실을 적발하여 행정상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2006년도 ○○군 정기 종합감사 시까지 시정 요구된 사안에 대한 강제이행금 재부과 미이행과 도에 집행전말을 보고하면서 완결처리된 것으로 허위 통보한 행위와, 2006년도 감사당시 ○○군 감사담당의 전언통보 또는 군수의 명의로 “문답서 작성을 위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 등 총 5회에 걸쳐 당해 공무원의 감사장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물어 신분상(중징계) 처분요구를 한 것임.

또 다른 1명(도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위법행위는 공무원품위유지 의무위반 사항으로서 이미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하여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3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사안임.

질 문

지방채발행에 관련하여 강원도지방채 발행시 대통령령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 근거?

답 변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재해복구나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해 발행하게 됨(지방재정법 제11조)

금년도 우리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48억 원으로 한도액 설정은 단체별 재정력 상태를 나타내는 채무상환비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의 지방채관련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행자부 장관이 산정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는 별도로 행자부장관의 추가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같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설정되면 한도액 범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세부 의결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예산안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지방채발행 사안 발생 시점에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질 문

소방서운영과 관련하여 화재발생시 근무, 타 시·군 근무자(50% 이상)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가 가능한지 산불업무의 주무부서, 소방차량만 배치하고 운전원이 없는 근무지, 부족 운전원, 충원 계획, 소방차량을 민간인이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답 변

소방공무원 근무형태는, 강원도 전체 소방공무원은 1,600명(’07. 3. 1. 기준)으로 이중 407명(25.5%)은 본부 및 소방서에서 행정요원으로 일근을 하고 있으며,

1,193명(74.5%)이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또는 상황실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현장요원은 주로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상황실, 구급대 등 현장 활동이 많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120명만이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비상사태 시 대비책과 관련 전체 소방공무원 중 타 시·군 거주자는 총 471명으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고지 연접 시·군에 배치하고 있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지역별 합격률을 분석해보면, 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도시지역 출신 직원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정선, 인제, 철원, 양구 등 연고지위주로 지역제한 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1차로 관할소방서와 인접소방서 소방력을 출동시키고, 2차로 상황에 따라 권역별 출동체계에 의해 비번직원 비상소집 등 체계적인 출동매뉴얼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방력을 투입하고 있음.

운전원이 없는 근무지와 부족 운전원 충원계획 관련, 현재 소방차량만 배치하고 운전원이 없는 근무지는 정선소방서 함백지역대 1개소이며, 지난해 정선소방서를 개서하면서 소방수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인접 신동 안전센터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동안 소방활 동이 적어 지난 2006년 10월 26일자로 운전원을 철수하였으나, 금년도 소방공무원 증원계획에 맞추어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차 운전에 대한 법적근거와 사고책임 한계는 먼저 법적근거에 대하여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8조 규정에 의거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도 조례로 설치된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운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소방인력이 부족하거나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소방관서장이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사고책임의 한계에 관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차량 운전은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내에서 아직 출동은 물론, 사고발생 사례가 없으나,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재 전 소방차량에 종합보험을 가입

해 놓은 상태이므로 1차적으로 보험처리를 우선하고, 피해를 입은 의용소방대원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 내지 제30조에 의거 개인보상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사상 책임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이 적용됨.

산불업무의 주무부서 관련, 산불업무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산림에 연접한 민가, 축사 등 주민의 재산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산불진화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산불신고가 119로 접수되어 초동대응은 지역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산불진화대와 소방서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기진화 실패 시 대형 산불로 확대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체계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자체 훈련은 물론 시·군과 협조하여 산불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질 문

동강유역생태경관보존지역 및 자연휴식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관리에 들어간 예산, 국가사무를 맡은 이유, 생태보존지역과 자연보존지역의 규제의 차이, 자연휴식지내 생태보존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편입할 의향은?

환경부는 국·공유지만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강원도는 사유지까지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사유, 사유지를 자연휴식지로 지정 시 법에 규정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유,

영월댐 수몰해지 지역내 주민들에게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지 않음을 고지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자연휴식지로 오인 하도록 한 이유, 시행령에 규정된 안내판 및 표주를 미설치한 사유, 자연휴식지가 아닌 마을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입장료를 징수한 사유, 입장료징수의 당위성?

답 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들어간 예산과 국가사무를 떠맡은 이유와 규제의 차이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하게 된 이유는 영월댐 백지화(2000. 6. 5., 대통령 선언)이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전대책이 필요.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정부에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수몰해제지역 주민들의 지원 대책에 이어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립공원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111㎢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이러한 제도는 지역주민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보다 최소화하면서 지역 스스로 동강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자연휴식지로 71.5㎢를 지정(2001. 12. 22.). 사유지와 국공유지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은 추가 제외토록 하여 환경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65㎢를 지정 고시함(2002. 8. 9.).

「자연휴식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치사무임. 지금까지 자연휴식지 관리에 들어간 예산은 '02년부터 '06년까지 총 383억 원임(경상비 29, 사업비 354)

각종 행위제한 중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활동, 어로행위, 산나물, 버섯채취 등을 보장하였으나,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임목의 벌채 등이 규제의 차이임.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가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휴식지는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사유는 사유지 매입은 매입대상 사유지 31.5㎢중 주민이 매도 희망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하고 환경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 계획임.

자연휴식지를 해제하지 않는 사유는 매도 불응에 따른 생태계 훼손행위 등 적절한 관리대책과 주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외부 탐방객의 무질서한 행락행위와 자연훼손 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불가피한 조치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국·공유지만 지정하였는데 도에서 자연휴식지를 사유지까지 지정한 차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은 생태계 전문가가 생태적 보전가치에 근거하여 제시한 범위(111㎢)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주민, 도의 의견 수렴, 1단계로 국·공유지를 우선 지정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사유지를 매입하여 앞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나갈 계획임.

자연휴식지를 사유지까지 지정한 사유는 당초 환경부에서 111㎢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제한이 엄

격하여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도내 대학교수와 생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현지실사를 하고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역을 제외한 사유지 1,288여필지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71.5㎢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함.

사유지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당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유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안내문을 2001년 10월 635명(1,288필지)에게 발송한 결과 59명(137필지)이 의견을 제출함(반영 : 36명 80필지, 미반영 : 25명 57필지). 주민설명회, 간담회면담 등을 11회에 걸쳐 실시하고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완화, 입장료 최소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함.

영월댐 수몰해제 지역 내의 5개면 15개리 49개 마을 주민이 거주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한 이유는 동강유역의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고시함(200. 12. 22.).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인근 농경지역 등을 제외하고 현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도지사 서한문을 이해관계인, 해당지역 등에 배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바 있음.

자연휴식지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실시 : 11회 안내판, 표주를 설치하지 않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만 징수 할 수 있는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행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한 사유는 안내판, 표주 설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알리는 안내판 11개소, 경계표주 65개소를 환경부에서 설치하고(토지매입 안내시설물 155개소), 자연휴식지 지역은 안내판 76개소, 차단시설 42개소를 도에서 설치함.

이용료 징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제2항(자연휴식지 지정·관리) 및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제5조(이용료 등)의 규정에 의거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면제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를 최소의 수준으로 징수함.

모든 통행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한 사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 중 동강을 관리하는 자,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을 방문하는 친지 등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

제하고, 광하 안내소와 고성안내소 구간을 단순히 차량으로 통행하는 자(2시간이내)는 이용료를 환불하고 있음.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폐지와 동강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주장의 당위성에 대하여,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폐지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갈등해소 및 국민의 문화·휴식 공간 제공 등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함.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는 동강댐 백지화 선언(대통령)에 따라 동강을 보전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국민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개념보다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외부 탐방객의 무분별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 유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용료 징수를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앞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를 관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종합계획(용역)을 바탕으로 일부사업을 보완하여 단계별(2,3단계)로 추진할 계획임.

질 문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세목별 지방세납부현황을 조사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도교육청 공무원들 거주실태 파악 근무지 미거주자 및 주민등록상 타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답 변

공무원들의 지방세 납부여부 조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서도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개개인의 세목별 지방세 납부내역조사 및 의회보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오나, 의회에 보고하여 드리기까

지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거주지 주민등록이전과 관련 주민등록은 “국민이면 누구나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출생, 국적취득 등 신규등록)”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주민등록법에서 규정(제6조)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이전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제14조)되어 있고, 이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먼저 거주한 주민등록지에서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실 거주지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재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근무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무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지방도관리와 관련하여 ‘05년 이후 200억 이상 투자하였으나, 현재 전 노선이 개통 안 된 지방도중 ’07년도 개수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지방도 현황, 그 사유는?

답 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45개 노선 1,647.9㎞로 2006년 말 현재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구간이 1,336km로서 전체 구간의 81.1%임. 국가지원 6개 노선 220.43km (포장도 214.8km), 지방도 39개 노선 1,427.46km(포장도 1,121,2km).

지방도의 경우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이 제정된 후 2004년 1월 29일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기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그 이후에는 지방교부세로 꾸준히 투자한 결과 미포장구간이 14개노선 306.0㎞가 남아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시·군 경계, 산맥을 연결하는 고개 구간으로 본 노선과 인접하여 동일기능의 대체도로가 있고, 이용자가 한정된 상태의 지형조건을 감안할 때 예산 투자가치가 낮은 곳이 대부분임.

우리 도에서는 지역 간선 기능을 갖는 지방도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각 노선마다 지역특성, 개발효과와 시기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노선별 구간개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투자를 집중함으로 인해 일부노선 사업이 중단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1995년 이후 2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방도 8개 노선 172.49㎞가 계속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 중에 중단하거나 계획자체를 취소한 사업이 없음.

나) 교육행정

질 문

학교시설 사용료징수 근거, '06년도 징수금액, 징수금액 처리 현황?

답 변

학교시설 사용료는『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2조 및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으로 편입되고, 세출예산으로는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등 학교운영비로 편성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며, 2006년도 징수실적은 20억 9백만 원으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5억8천7백만 원, 중학교 5억8천6백만 원, 고등학교 8억3천5백만 원, 특수학교는 1백여만 원임.

질 문

소규모 학교 폐교 시 지원금 지급목적, 지원규모?

답 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학교가 소규모화 함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 교육과정운영의 어려움과 교육재정 투자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 1일까지 모두 388교를 폐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저 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전망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소규모로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0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음.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폐합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이 계획에 의해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본교폐지·통합 1교당 10억원, 분교장폐지 1교당 3억원, 분교장개편 1교당 2천만원을 통학비와 교재교구구입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통폐합 4개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 100명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서,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 강원도는 전체 초·중·고의 46%에 달하는 332교가 해당되고, 우리 교육청의 자체기준인 학생 수 50명 이하의 본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만 해도 전체학교의 30%인 219교나 되기 때문에, 통폐합 추진으로 인한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기준을 학생 수 15명 이하의 본교와 10명 이하의 분교장으로 대폭 낮췄음.

그 결과 2006년 4월 4일 최종 확정된 통폐합 4개년계획은 본교폐지 3교, 분교장폐지 40교, 분교장개편 29교, 학교통합 4교 등 76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폐지대상 학교만 보면 43교로 2006학년도 전체 학교 수 720교의 6%에 해당하며, 통폐합 실적은 4개년계획 수립 이전인 2006년 3월 1일 본교 1교와 분교장 3교를 폐지하고 본교 1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데 이어, 2007년 3월 1일에는 본교 1교와 분교장 10교를 폐지하고 본교 3 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음.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2006년도분이 19억 2천만 원, 2007년도분이 40억 6천만 원 합계 59억 8천만 원으로, 2006년도 분은 금년도중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확정되었고, 2007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하고 추후 원리금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급한 통학버스 구입비 4억 5천만 원은 우선 자체재원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재 교구 구입비와 환경개선사업비는 교부금 교부 및 지

방채 발행계획 통보 즉시 조치하여 통폐합에 따른 투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질 문

읍·면·동 학교에 다목적시설이 없는 지역과 2개 이상 있는 지역 현황?

답 변

우리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목적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각급 학교의 다목적실 보유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435교 중 24%인 102교, 중학교는 164교 중 30%인 49교, 고등학교는 115교 중 58%인 67교에서 다목적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및 2007년 BTL사업으로 초등학교 31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6교 도합 44교에 대해 다목적실 신축을 추진하여 2007년 말에 준공예정에 있음.

다목적실이 없는 읍·면·동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05지역, 중학교 152지역, 고등학교 132지역이고, 다목적실이 2개 이상인 읍·면·동은 초등학교 12지역, 중학교 8지역, 고등학교 8지역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2006년도부터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실 신축은 지역 및 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신축비의 20년 장기상환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의한 학교 통폐합을 감안하여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다목적실 신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폐교 부지를 농지로 임대한 토지규모, '06년도 징수한 임차료, 법률규정에 근거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폐교 시설물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 변

1982년 소규모 통·폐합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388개교로 이중 폐교 부지를 농경지로 대부하고 있는 폐교는 18개교 10만 7,314㎡으로 2006

년도 대부료 징수액은 728만 1,830원임.

또한 폐교 대부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이 10,000㎡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 경작자에게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대부할 수 있으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의거 대부요율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현재까지 폐교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폐교는 없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폐교는 8개교임.

3) 임용식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 관광산업의 종합계획 수립 관련, 현재의 관광산업은 지역의 산, 도시, 농어촌, 해양을 입체화하고 비, 바람, 계절성, 생태계까지 총 망라하여 개발하는데, 관광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여부와 추진성과는?

국회에 계류 중인「동해안 광역권 개발지원 특별법」의 전망과 향후 대책은?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한 관광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또는 관광국 설치, 연구조직의 신설 등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구를 조직·운용할 의사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고 이용할 친환경 관광산업에는 모험 관광, 녹색관광, 생태관광, 스포츠관광, 건강관광 등의 관광산업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한 개발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 변

「강원관광개발 종합계획」수립과 관련, 자연과 문화, 관광객기호, 관광객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매 5년 마다 수립, 추진하고 있음.

지난 3월 9일「제4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을 수립 강원관광이 지속 가능한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임. 아울러, 지난 2005년도에는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와 강원관광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강원관광이 추구할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2020 강원관광 마스터 플랜」을 수립, 각종 시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관광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등 관광조직 관련, 도정에서 관광이 차지는 비중과 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 관광 전문가의 부지사급 임명 또는 관광국 설치, 연구조직의 신설 등은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짐. 하지만 부지사에 관한 정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고, 국 신설은 금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실시되는 등 요소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기존 조직 틀을 살리면서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 소양을 갖춘 직원 위주 "관광마케팅사업단"을 출범시켰으며, 현재 관광마케팅사업단장을 공모 중에 있음.

모험·생태·건강 등 대안관광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모험·녹색·생태·스포츠 등은 관광의 주류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관광정책의 독립된 한 분야로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제4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과「2020 강원관광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음.

한편 도전역의「관광·레저·휴양·스포츠」특구화를 목표로 매년 도 전역에서 20여 종목의 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 생태, 모험레포츠 관련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의 전망과 대책, 지난해 발의된 "동해안 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해안특별법과 통합법안으로 입법화하기로 합의되었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동해안 3개시도, 남해안 3개시도 등 6개시도가 공조 통합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 관련, 2006년부터 강원도에서는「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도정시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외계층의 유형과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간 도에서 추진한 사회양극화 해소노력과 그 성과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성과는? 정부·지자체·사회단체가 공조체계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교육기회 확대, 자활프로그램 등의「저소득층 사회적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 견해는?

답 변

사회 소외계층 유형과 현황 파악 관련, 소외계층의 유형은 크게 소득수준에 의한 구분과 연령·신체·가정 형태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구분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최저생계비를 일정수준 상회하는 차상위 계층을 소외계층으로 보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는 노인, 장애인, 모·부자 가정과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보호아동을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음.

이들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소외계층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생계, 교육, 의료비 등 생활비 부담과 일자리나 사업 등 소득과 관련한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도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 관련, 도에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경제를 도약시켜 경제선진도를 실현하고, 강원도형 선진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음.

경제선진도 실현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기업유치와 육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836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생명·건강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3각테크노벨리 발전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379개의 기업육성과 7,167명의 고용창출을 하였고, 앞으로 2단계 뉴스타트 발전전략을 중점 추진하여 2010년까지 800개 기업 유치와 2만 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할 계획임.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재래시장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33개소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완료하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하고 있음. 그리고 금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5,500자리를 마련하고 2010년까지 10,000자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강원도형 선진복지 실현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확대(3,000명)하여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일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에 4,160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니어클럽(2개소)운영, 노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였음.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면서, 직업재활시설(25개소)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있음.

또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아동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보호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양육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자녀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면서 차상위 계층의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2005년에 We Start마을 3개 마을을 조성하여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성과 관련,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한편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복지네트워크「나눔장터」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면서, 도 자체적으로도 소외계층 유형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먼저 저소득층 보호대책으로 단전·단수 등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 빈곤계층을 발굴하여 생계비, 난방비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16가구 2,554명을 발굴하여 위기상황 탈출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600가구의 집수리 지원과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20가구를 지원하였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무료급식(350가구) 및 의료비를 지원(50명)하고, 재가 장애인 대상(1,500명)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음.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월 12매)을 지급하고, 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만원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노인쉼터 조성, 장수 춤 체조 보급, 노인솜씨자랑대회 개최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20만원), 대학교 입학금(100만원)과 난방연료비(20만원)를 지원하고, 세대주 및 자녀의 직업훈련을 지원(22명)하였으며, 종합검진 등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정착금(1인당 1백만원)과 주거안정비(3백만원)를 지원하고, 대학입학금(25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월 20만원) 및 능력개발비(18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역사문화 탐방(60명) 및 초·중·고생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여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 입소료와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시 정부·지자체·사회단체의 공조체계 구축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도에서는 2001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근로능력 및 욕구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도 자활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시·군, 15개의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단체 등과 공조하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등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한전,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장기체납자「사전통보제」운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는 금년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5,500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사업은 복지, 보건, 청소년, 환경, 문화, 농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자리 분야별로 관련 중앙부

처와 시·군, 유관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경제선진도」,「삶의 질 일등도」실현을 위한 행정력 강화, 도내업체에서 생산한 자재 구매와 홍천 상오안 농공단지의 용수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이전 등과 같은 도내기업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도지사 직속의 민생지원팀을 신설할 의향은 있는지?

강원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미래기획단과 같은 지원부서와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와 방재복구과를 통합하여, 도민 복지를 위한 보건·위생·사회복지 등 중요 사업부서로의 인원배치에 대한 도의 의견은?

답 변

먼저, 도지사 직속「민생지원팀」신설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생지원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 하겠으나, 부서 신설은 자칫 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업무영역의 중복 등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전문 부서별로 현장중심의 ONE-STOP 행정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미래기획단 축소 등 사업부서 보강 문제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그동안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사업부서 보강을 전제로 개편작업을 실시해 왔음. 미래기획단은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미래개발과)과 혁신·분권 업무추진(혁신분권과)을 위한 한시기구로써 한시기한 종료 후 소멸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기구 및 정원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상시기구 및 정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미래개발과 '08. 10. 30., 혁신분권과 '07. 6. 30.).

재난관리부서 일원화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과는 소방방재청 신설과 발맞추어 지역 방재역량을 결집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써 재난발생시 초동대처와「사전예방」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방재복구과는 재난 발생후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부서임.

따라서,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과와 방재복구과는 업무 영역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우리 도로서는 현행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16개 시·도중 15개시·도가 우리도와 같이 예방과 복구시스템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고 있음.

아울러, 향후 조직 정비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와 에너지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행정력이 강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질 문

산불관련 진화방안 및 대책 관련, 도에서 등산객, 아마추어 무선사 등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산불예방·진화 종합계획」은 수립 하였는지? 군부대 등 공조체제 헬기의 투입가능 시간·활용성에 대한 도의 의견과 산림청 헬기 및 도 임차헬기 16대로 산불 초동진화가 가능한지? 2006년부터 시행한「동해안 산불관리 센터」에 '07년도 직원 파견현황과 업무협조 계획 등「산불관리센터」에 대한 자체 평가(문제점 등)는 어떠한지? 지구가 온난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한 강원도의 산림 식재사업 계획은?

답 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산불방지 및 진화방안과 관련, 도에서는 2000년 동해안 산불발생 이후 기존의 유급감시원 외에 매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연보호회, 해병전우회, 특전동우회 등과 산불방지 협약을 체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음(금년 324단체(14,830명)와 공조체계 구축 운영). 아마츄어 무선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문제는 향후 아마츄어 무선사 지회와 협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임차 산림청헬기 초기진화 및 군부대 헬기활용 관련, 평시에는 임차헬기, 산림청헬기, 소방, 경찰, 국립공원, 군부대 등 모두 3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시기에는 산림청 헬기 5대를 권역별로 추가 배치할 예정임. 도내 5개소 이상에서 동시 다발적 발생이 아니라면 16대로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담됨.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헬기의 공조체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제정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 국방부, 환경부, 기

상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정, 산림청)에 의거 평시는 지원체제로, 산불위험기간에는 상시 산불진화출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운영관련 동해안산불관리센터는 기관간의 공조체제유지, 정보공유, 공동대응 등 효율적인 산불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06년 3월). 산림청 헬기의 운용권 위임을 통해 공중계도 및 출동시간의 단축 (약15분)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성과가 있음.

도에서는 임업직 6급 직원 1명이 파견근무중이며(3.1.~4.30.)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동해안지역의 산불방지와 초동진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음.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식수사업 계획 관련,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도 차원의 식수계획은 지금까지는 중부북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잣나무, 낙엽송, 해송,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등 10여 수종을 주로 식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남부지역의 난대림에 생육하고 있는 많은 수종이 점차 북상할 것이 예상되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학계와의 긴밀한 협조로 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취학아동 감소와 학생들의 도시유입 관련, 2007년도에 도내에는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초등학교 및 분교장이 23개교에 달하며, 전체 초등 학생수도 1,340명이 감소, 학급수도 44학급이 감소하였는데, 도내 복식학교와 대도시 학교 학생간 학력차이를 극복(최소화)할 대책은?

답 변

우리 도 복식학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169개 초등학교(학교 수 대비 38.8%)의 334학급(학급 수 대비 7.3%)에서 복식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복식학급에서의 학력은 단식학급보다 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 향상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모든 교육 시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역점 추진하고 있음.

1995년부터 읍·면지역의 3~4개의 소규모학교를 묶어 교육과정 및 각종 행사 활동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소규모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옹골찬 두레교육'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21개 두레 69개교, 6억원 지원), 복식학급 담당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4학급 이하의 학교에 교원사무보조원을 배치하여(2007년 153명) 소규모학교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복식학급의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8억 720만원), 매년「기초학력 보정교육자료」(5,704질, 2천 9백만원),「기초학력 지도자료」제작·보급 외에도 교육부에서 개발한「복식수업 지원 프로그램」보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그밖에, 지역교육청별「소규모학교 복식학급 담당교사 연수회」,「교실수업개선 모델학급 운영」,「교실수업개선시범교육청 운영」등을 통하여 교원의 교실수업개선과 교수·학습지도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의 수년에 걸친 이와 같은 노력으로 소규모학교 복식학급의 학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수준의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와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우리 도 자체에서 주관하여 평가한 4, 5학년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우리 도의 학력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도·농 간의 학력 격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시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여 보면, 2006년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평가에서 시 지역 91.3점, 군 지역 90.4점으로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평균 성취율이 0.9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6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여 보면 시지역은 척도점수 163.9점, 벽지지역은 163.4점으로 시지역과 비교할 때 벽지지역의 성취율이 다소 낮으나 그 차이가 0.5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사이버 가정학

습, e-learning 학습체제 구축 운영, 사이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소규모 학교만이 지니는 장점을 살린 특색있는 교육으로 소규모학교 교육의 학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문

농어촌 지역문화를 파괴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지대책은?

답 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데 대해 사회 일각에서 문화공간 상실을 이유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문화, 사교육 등 여러 가지로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는 농어촌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도 복식수업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통폐합으로 인해 농어촌의 문화공간이 상실되는 문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각 또는 임대를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임.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범정부적인 중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통폐합 4개년계획 수립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는 본교 학생수 100명 이하, 분교장 학생수 20명 이하이나, 우리도는 폐지대상을 학생수 10명 이하의 분교장과 학생수 15명 이하의 본교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강제적 통폐합은 지양토록 방침을 정해 시행하고 있음.

질 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면소재지이하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감면, 방과후 학교 특별지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우선 지원에 대한 도의 의견은?

답 변

농산어촌 학생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식품비와 운영비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으로 전액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농어촌 지역 학교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다음, 방과후 학교 특별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리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 특별 지원으로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기적성교육 강사료지원, 지역교육청 순회강사비 지원, 교과프로그램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총 51억 2,051만 6천 원을 지원함. 초등보육프로그램운영지원은 시설개선비(46교)와 운영비(56교)로 7억 6천만 원이 지원되며, 4월중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시설개선비 확대 지원을 계획 중임.

특기적성교육 강사료 지원은 초·중·고·특수학교 447개교 13억 3천 8백만 원, 지역교육청 순회강사비 지원은 17개 교육청 1억 7천만 원, 교과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중·고등학교 257개교 8억4,251만6천원이 지원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자녀 6,700명(초-2,827명, 중-2,173명, 고-1,700명)에 대하여 학생 1인당 월 3만원씩 10개월간 20억 1천만 원이 지원되며,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지원 시 지원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2007학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1개 시·군당 국고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로 평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방과후 학교 기본여건조성 및 운영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으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 2007년 공·사립 유치원 57개원 36학급을 신·증설하여, 종일반 운영 유치원은 총 230개원 261학급에서 4,801명의 원아가 종일반에서 지원 받고 있음.

우리청에서 공·사립유치원 종일반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2006년도 종일반

운영비를 비롯해 9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은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으며, 1차 추경에 9억원을 요구하여 총 19억원을 지원하고자 함.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신증설 및 확대를 위하여 종일반 운영비, 시설환경 개선비, 인건비 지원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질 문

마을에서 지역의 활성화에 폐교를 이용할 경우 폐교를 매각할 의사는 있는지?

답 변

2007년 3월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총 폐교된 학교는 388개교로 이중에 104개교는 매각 및 반환, 교환되었으며 현재 보존·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284개교로 폐교재산 특별법에 의하여 폐교재산의 활용가치와 장래 교육수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매각하지 않고 대부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는 재산임.

다만, 재산관리 규정상 잡종재산을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 및 주민단체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주민단체 등에서 마을회관, 노인정 등 비영리목적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관련 업무처리요령에 의거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어서 1,000㎡이하인 소규모의 토지에 대하서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질 문

고입선발고사 관련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기 기말고사 이후 많은 여가시간이 발생하는데, 특히 여가시간이 많은 실업고 진학 중3 학생에 대한 수업과 여가활용 계획은 있는지?

답 변

200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침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11월 15일, 실업계 고등학교 전형일은 11월 26일,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선발고사)일은 12월 11일임. 전형일을 12월 11일로 결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8개 시·도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작한 문제지를 이용, 같은 날 시험

을 실시하기 때문임.

이러한 고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학교 학사 일정도 다소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학교 3학년은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하여 12월 초에 실시하던 2학기 말 고사를 예년과는 달리 11월 초에 마쳐야 하므로, 의원님께서는 내신성적이 산출되는 2학기말 고사 이후와 실업계 전형 이후 한 달 여 기간에, 중학교 3학년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각종 교원 연수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장학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임.

첫째, 금년에는 8개 시·도 중 일부 시·도의 입시전형 일정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었으나 내년에는 일정을 뒤로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음. 둘째,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학교운영계획서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지도하겠음. 학교별 연간 수업일수와 과목별 수업시수 확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을 학년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음.

셋째, 모든 학생들이 학업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학기말까지 성실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음. 즉, 고등학교 전형 이후의 시기를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의 학습을 충실히 이수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폭넓은 진로지도 교육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겠으며, 수업 태도나 학교생활 태도가 해이해지는 분위기를 막고, 안정된 면학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출결 관리를 비롯한 기본생활습관 지도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음.

4) 최원자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도민들의 주거 생존권을 박탈하는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해결 2007년 4월 20일 시행 부도임대아파트 임대특별법은 부도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부도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도민의 주거생존권 보호를 위해 원주 백운아파트를 비롯한 도내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 변

먼저, 부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는 2007년 1월 19일 제정·공포한「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금년 4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임. 제정목적은 부도발생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도내 부도임대주택 발생 현황은 2007년 2월 28일 기준으로 12개 시·군 28단지 7,103세대로서, 준공후 부도발생 22단지 5,650세대, 미준공 부도발생 6단지 1,453세대임.

부도발생 사유는 모든 단지가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이며, 부도임대주택 관리실태는 매각 및 경매완료 5단지 1,210세대, 경매진행 5단지 587세대, 경매예정 및 분양전환 검토 18단지 5,306세대 임.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는 정부가 건설교통부 산하에「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을 설치하여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계획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과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도내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강원도교육감은 20년 가까이 강원도 유아교육에 헌신한 도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25명을 해임하였는데, 해임된 전임강사 복직을 위한 건의문 서명에 도지사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답 변

현재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유사·동종 직업간에 평균임금 격차가 크고 사회보험, 고용보험, 모성보호 등 보호의 불안정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자기향상 기회가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 현재 정부(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와 전환규모, 방법, 처우수준,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 위한 회의개최 및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획예산처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

따라서, 도에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속적·상시적 근로자는 가능한 전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4대보험 등「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함.

특히,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상근인력 정수 책정 및 총액 인건비제 포함여부 등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 갈 계획임.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으로 우리도가 타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질 문

전기 및 난방 중단 위기가정 지원 관련 한국전력과 강원도시가스에서 체납가구를 지자체에 사전 통보케 하여 도에서 선별지원하게 하는 등 도내 위기가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답 변

차상위 저소득층 전기 및 난방중단위기가구 지원과 관련 전기·수도, 가스 공급중단위기를 비롯하여, 생계위기 상황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06년 1월 1일부터 도 자체 시책으로「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06년 3월 24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긴급지원제도」등 보호 안전망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지원시책에 의거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수행과 유관기관 협력체계에 의한 위기가구 사전 통보제 운영,「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의거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과 생계, 난방 등 생계위기상황지원 병행, 이와는 별도로 한국전력,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소전류제한기」설치제도를 운영 가스공급중단위기 저소득가구 「공급중지유예」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등 전기·가스 공급 중단으로 기초생활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

차상위 저소득층 단전위기가구 지원이 전체 지원예산과 단전조치가구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전 측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단전조치가구 6,265가구중 4,447건은 주거용도가 아닌 건물(휴·폐업상가, 공장 등)이며, 나머지 1,818건이 순수 주거용 단전조치대상 건물이나, 이중 비거주 폐·공가 및 외지인 별장 등이 포함되어 실제 단전 대상은 소전류 제한기를 설치한 128가구임. 단전지원 대상은 단전 조치 가구 중 실제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근본취지로 도 자체 예산 8억 7,100백만 원(단전지원 1억 3,800만원) 지원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이며, '06년 지원실적은 소전류제한기가 부착된 128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한 것으로, 예산을 두고도 지원이 요구되는 단전위기 가구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례는 없음.

앞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중단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급중단사례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 위하여 금년도 국가 긴급지원예산 23억 원과 도 자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예산 5억 원 등 28억 원을 확보하여 생계위기상황 극복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기, 가스 등 공급중단위기에 처한 차상위 저소득층을 적극 파악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제도에 대한 도민 체감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장기체납 등 공급중단위기에 놓인 저소득가구「사전 통보제」운영과 저소득층 접근성이 높은 통·리·반장, 배달원 및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인 의사, 간호사, 교사, 복지시설종사자, 이웃주민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지원요청이 가능한「129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저소득층이 전기·가스 등 공급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질 문

여성계층 관련 강원도 여성정책 성매매집결지 사업의 기본계획('07~'10년, 5개시 5개소 정비)을 2007년말까지 폐쇄하는 중앙기본계획에 반함, 수립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성취업박람회 개최로 인한 실질적인 취업자 수와 사업 자체평가는 어떠한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들의 정규직 취업 비율, 임금수준, 근속기간, 이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종의 연관성 및 사후관리 사업 내용은?

답 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폐쇄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 중장기종합계획(2004년 3월)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인식전환, 홍보 등을 통해 집결지를 정비·폐쇄토록 유도하면서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폐쇄를 위한 관련법 제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음.

강원도가 도내의 성매매업소 5개지역 폐쇄에 대한 집결지 정비·폐쇄계획을 수립을 위해 집결지가 있는 5개 시·군의 계획을 파악한 결과, 201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도로개설, 재개발지구, 주차장 확보 등 시·군 자체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업소 집결지 정비 폐쇄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린 보상문제, 업주의 생계문제, 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성산업화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2010년도까지 정비계획을 수리하였으나, 여성가족부가 이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개정)하지 않고 있어 도 자체적으로 정비 또는 폐쇄계획을 수립하여도 집결지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 향후, 강원도에서는 성매매 Clean 지수를 높이기 위해 의식개선을 위한 성매매 예방교육, 경찰청의 단속강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피해여성 인권보호와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과, 해당지역의 정비 및 폐쇄를 위한 관련부서의 재개발 촉구 등과 종사자의 전업유도, 자활지원책 등

을 강구토록 하겠음.

2006 여성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 2006 강원도 여성취업 및 유망직업 박람회는 2006년 10월 25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08개 업체가 참여하여 86명을 채용하였음.

취업박람회 참가자 및 참가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인원 947명) 중 “박람회 만족도 사항”을 정리한 결과는 참가자의 “박람회 만족도 사항”은 참가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44%)와 매우 만족 12%)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사항으로 구인업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적되었음.

참가업체의 “박람회 만족도 사항”은 박람회 개최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50%)과 매우만족(18%)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개선사항으로 박람회 개최기간 1일의 만족수준이 42%로 1일은 조금 짧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체적인 평가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2006 여성취업 및 유망직업 박람회는 총 2천여명이 참여하여 800여명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다양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와 정보에 대한 목마름을 다소 해결해 주는 자리가 되었고, 지역의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자체평가 됨.

이러한 평가 등을 반영하여 2007년에도 여성취업 및 유망직업박람회를 춘천, 강릉지역에서 2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우선 6월중 강릉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 하반기에 춘천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춘천, 강릉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문화 교육과정으로 108과정에 5,830명의 여성이 다양한 취미활동 및 자기개발의 장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생 및 사회문화 과정을 이수한 여성의 무료직업 알선 및 상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가장의 경제활동을 돕고 있으며, 2006년 실적으로 44개

업체에 53명의 여성이 참가하여 29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빈곤탈피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

취업자의 사후관리는 직업 훈련 시 직업인으로서의 소양, 직업에 대한 태도, 직장인의 대인관계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센터별로 직업상담사 1인이 상주하면서 취업상담, 직장 내의 애로사항, 개인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여성 직업훈련과 직업 상담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여성능력 개발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질 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관련 저상버스, 활동보조인, 장애인 교육비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와 도지사님과의 만남이 4월 이전에 가능한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2012년까지 저상버스를 50%이상 도입할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답 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06년 1월 28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5개년)"을 2007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에 있으며, 중앙계획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5개년)"을 수립하여야 함.

우리도의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4년부터 이미 저상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대당 국비 5천만 원과 지방비(시·군비)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내버스를 관장하는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이유로, 시내버스 업계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음.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국비와 시·군비의 매칭펀드 외에 추가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금번 법제정 및 중앙계획을 토대로 시군에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중앙계획에 맞춰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나) 교육행정

질 문

도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정규직(신규) 채용 관련 강원도의 유아교육에 20여년간 헌신해온 도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25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규직 채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 변

인사행정은 법과 규칙에 따른 행정 행위로서 이를 준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의 위배와 함께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함. 아울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전원이 요구하고, 교육부 역시 가능하다고 답변했음.

타 지역 교육청에서의 전례와 같이 연차적인 정규교사화는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15년에 걸쳐 특별채용을 비롯하여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이들 전임강사 144명을 정규교사화 한 바 있음. 최근에는(2006. 8. 22.) 이들에 대하여 별도정원 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정규교사화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교육부로부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2006. 9. 25.).

연차적인 정규직화는 결국 특별채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특별채용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 공개경쟁채용 원칙의 예외로서 일반 공개경쟁채용으로는 적기 수급을 기하기 어려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운영되는 조항일 뿐 동 조항을 적용하여 특별채용을 할 경우 전임강사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등 유사경

력을 가진 자들도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어 문제의 소지가 되며,

무엇보다도 유치원교사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양성과정에 있는 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즉 공무담임권의 기회균등을 제한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특별채용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림. 향후에도 이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안을 희망할 경우, 희망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속초 청해학교 관련 지난 3월 1일 정부로부터 200억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아 건립한 장애인 교육기관 속초 청해학교는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예산확보 여부와 교육청 차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답 변

속초 청해학교는 영북지역인 속초, 양양, 고성지역 유치원·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로서 완성 연도인 2009년에 26학급 150명 규모로 시설비 115억 4,200만 원 등 146억 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3월 1일 개교하였음.

학교 상수도 문제는 학교설립당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속초시와 상수도 인입설치를 협의한 바 학교에서 1.7km정도 떨어진 원거리에서 상수도관을 인입함에 따른 시설부담금이 약 3억 4천만 원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수질 검사 결과 설치된 지하수의 물량 및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향후 주변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학교 근접거리에서 상수도관 인입이 가능하게 되면 시설부담금이 약 3천만 원 소요되어 약 3억 원의 예산은 다른 열악한 교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계획임.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상수도를 음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유순임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연구 중심사업보다 제조업, 서비스업이 우선 지원 되어야 되는데 도의 입장은, 산업전략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방안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관리창구를 만들 용의는, 기업이전 시 도의 인력의 채용방안 및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업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도의 견해는?

답 변

제조업 등의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도는 '96년부터 춘천, 원주,강릉을 거점으로 첨단산업중심의 3각테크노벨리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첨단 R&D(연구개발)분야는 제조업과 비교할 때,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도에서는 지식산업 전략을 R&D분야 집중이 아닌, R&D기능육성을 통한 연관제조업체 유치와 창업 보육기능 강화 등에 포커스를 두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에 진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고용창출 등에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아울러, 도의 기업유치 전략은 기본적으로 생산·고용효과가 큰 규모의 제조 및 서비스기업을 타겟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도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대책 관련, 최근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나 일자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방에 있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투자기반이 취약하고 제약요인들이 많아 창출여건이 어려운 실정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 민선4기 도정에서「안정적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공약 하

였으며, 지난해 종합계획을 수립,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음.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2010년까지 유망ㆍ우수기업 800개를 유치하고 알펜시아 등 민간·공공부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도의 강점인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레져시설 집중유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고 도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계획임.

업자를 위한 전담창구 구축과 관련,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사이버상을 통한 구인·구직 매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으며, 의원님들의 예산상 배려가 있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사이버 일자리시장(가칭, 강원 job-넷)」구축을 추진하게 되었음.

앞으로 도만의 특성화된 사이트 구축을 통해, 일자리와 도내 인력이 신속히 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노동부 사업 외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관련, 정부차원의 일자리 정책의 경우, 각 부처별로 고용과 복지차원의 사회서비스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노동부의 경우도 각 지방노동지청(고용지원센터)을 통해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과 인적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부 사업 중 도와 시·군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정도에 불과하며, 이 또한 고용지원사업 수준임. 이렇듯 지방차원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정책 부재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소하고자,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정적 일자리창출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우수인력양성과 취업알선사업 등을 통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앞으로도 지역맞춤형 정책기조에 걸맞는 특성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임.

지역주민 고용극대화 차원의 이전기업 유치전략 관련,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이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

도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기업을 타겟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인프

라 조성과 이전기업이 체감하는 맞춤형 지원시책들을 적극추진, 우수기업들이 우리도로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전기업들의 지역주민 고용촉진 방안으로 이전기업에 대해 지역주민 채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지역주민 20인을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고용촉진보조금과 교육훈련비를 각각 지원, 기업당 최고 4억까지 해당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음.

질 문

강원도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영어능력향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대단위 영어타운 계획이 있는지, 농어촌지역에 외국어 지원프로그램 확대계획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추진할 의지는?

답 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언어가 중요한 경쟁력일 수 있음. 이에 따라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되었고, 외국어에 대한 학습수요 또한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지역마다 영어마을 조성, 원어민교사 배치,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등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개발과 계획을 검토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외국어 교육기회 확대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5년부터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지원, 2010년까지 422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225개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함

특히, 교육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폐광, 접경지역 등을 우선배치하여 취약지역과 도시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12명의 원어민 교사가 기배치되었고, 상반기 중에 27명을 추가하여 금년도에는 총 139명이 배치할 계획임.

대단위 영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대단위 영어마을을 조성, 운영하거나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춘천, 영월, 평창 등 일부 지역에 영어마을 조성을 검토한 바 있지만, 구체적 사업으로 실천되지 않았음.

영어마을 조성에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자본, 개인기업 등의 투자의지와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있고 모든 조성여건이 성숙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단법인 설립문제도 설립의 필요성, 재원확보 대책, 실효성 등 사회적으로 설립 여건이 조성된다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봄.

질 문

농촌마을의 단위사업부서 통합운영에 관련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분산된 농어촌마을 지원 사업 담당부서를 통합할 용의는?

답 변

현재 농어촌 마을 지원 사업은, 사업별 추진주체가 중앙부처의 경우에만 해도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이에 따라, 도의 경우에도 기획관리실, 농정산림국, 농업기술원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같은 실정으로, 그 까닭은 중앙부처에서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연관된 산하부서에 사업을 위임해 주기 때문임.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부서 일원화 문제는 일부 공감을 함.

그러나 농어촌 마을 지원 사업은 정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에 따라 정보화, 새 농어촌, 관광체험, 산촌생태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를 통합 관리할 경우, 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이 저하되어, 자칫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일선 시·군의 부서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도에서는 농어촌 마을과 관련한 사업들이 통합 가능한지를 자체 판단한 후,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질 문

다문화 가족의 정착방안과 관련하여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결혼 시 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적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모색?

답 변

현재 도내에는 약 1,100여명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 경제적 문제, 문화적 차이, 가족 간 갈등, 자녀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미래의 전문농촌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구 등 5개 시군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문화, 정보화교육, 가족 멘토링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홍천, 횡성, 평창 등 3개 군을 대상으로「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교육도우미 30명을 고용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농촌결혼 이민자 가정 180세대를 대상으로 직접방문을 통한 한글교육, 소그룹 생활상담, 각종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며, 외국인과 결혼한 농업인 일부를 대상으로 연2회「부부교실」을 운영함과 함께,「가족캠프」도 운영하여 가족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줌과 아울러, 농촌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가정에게는 부부 및 자녀의「모국방문 항공료」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 선진영농 현장견학」기회도 주어 도내 농촌정착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음.

위와 같이, 금년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제결혼 가족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향후, 국제결혼 여성을 농촌지역 원어민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도차원의 고국방문 지원 사업 등 도 단위 지원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원주 옻 및 한지산업특구와 관련하여 위 지역특화시책사업과 관련한 도의 전담부서는, 행정적 지원현황은, 2010년 세계종이 조형작가협의회 총회가 원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지원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답 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지역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04년에 수립된「강원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04년～'08년)」에 따라 전략산업, 문화관광산업, 지연산업(지역연고산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옻, 한지산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연산업과 문화관광산업에 해당되며, 옻, 한지 재료는 농정산림국, 가공특화된 상품은 산업경제국, 테마파크 조성 및 축제분야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임. 이에 따라 사업내용을 분석, 전담부서에 의한 집중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음.

그동안 도에서는 옻·한지산업과 관련 지역특구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재경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되었음. 아울러 앞으로 원주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음.

테마파크 조성과 세계종이 조형 작가협회 총회개최, 원주한지테마파크조성 관련, 원주한지테마파크는 한지의 인지도와 우수성을 소재로 한지상품 개발 및 문화관광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중임.

2006년 말까지 총 48억 원(국비 13, 도비 4, 시비31)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도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앞으로 2009년까지 총 84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한지공예관 등 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할 계획임.

2010년 세계종이조형작가협회 총회 개최 관련, 지난해 8월 (사)한지개발원에서 오스트리아 스테뮬러 총회에 참석 2010년 총회를 원주에 유치하였으며, 이와 관련 (사)한지개발원에서 원주시와 도에 공식적인 협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총회의 성격, 내용, 작가협회 의사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겠음.

질 문

강원도의 각종축제 및 스포츠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인 방안만련, 도비지원 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도에서 개최되는 스포츠대회의 유치금 지원정도, 유치금 지원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 강원도의 전체적 스포츠 행사의 소요비용, 도가 지원하는 예산, 근거, 지원 후 사후 감독 방법?

답 변

스포츠 행사 규모, 행사유치 및 지원방법 관련, 2006년도에 도내에서 개최된 각종 스포츠 대회규모는 국제대회 11개, 전국단위대회 125개, 도 단위 대회 80개, 시·군 자체 대회 8개 등 총 224개 대회가 개최됨.

대회유치 및 지원방법(도 및 시·군), 도 및 시·군과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이미지 홍보 등을 고려하여 유치함. 예산지원은 대회규모 등을 감안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지원함.

대회 유치금 지원과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과 관련 대회 개최와 관련한 유치금 명목의 예산으로 별도 계상된 것은 없음. 다만, 유치후 대회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함.

스포츠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대회참가 인원에 따른 숙식비 등을 직접적인 유발가치로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현재,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강원발전연구원에 수시과제로 의뢰하여 연구중에 있음. 최종보고서를 별도 제출하겠음.

스포츠 행사에 강원도가 지원하는 예산규모와 근거, 지원후 관리 감독과 관련, 스포츠 행사 개최 관련 2007년 예산 총 규모는 1,029백만원으로 각종 도지사기대회 개최, 연례적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종합체육대회, 국제대회(데이비스컵대회) 등에 지원하였고, 지원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권장하여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음.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행사를 주최하는 경기단체로부터 행사 종료후 정산서 징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 호응도, 참가인원, 원만한 대회진행 등을 종합분석 하여 향후 각종대회 유치 시에 참고하고 있음.

나) 교육행정

질 문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가난한 학교현장과 관련하여 도내 학교에 비가 새는 곳, 난방을 하지 않고 교육 하는 곳, 사용연한이 지난 컴퓨터로 교육하는 곳 등 구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하였는지, 파악자료 제출, 학교시설분야에 투자해야 할 시급한 예산부족 현황을 수치화해서 순위별로 데이터 시켜야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저소득층의 학교급식 실태, 첨단교육시스템 확보 등 예산투자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으로 나누어 반영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계획 및 강원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전년도, 당해 연도,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의 연계성 확보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2007년 기준 중기재정계획에는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부문에 506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연도 별 투자금액을 말씀드리면 2006년 92억 원 2007년 70억 원 2008년 112억 원 2009년 116억 원 2010년 116억 원으로 중기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첨단 교육시스템 확보부문에는 컴퓨터 보급 등 13개 사업에 438억 원이 5년간의 투자계획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를 연도별 투자금액은 2006년 54억 원 2007년 49억 원 2008년 135억 원 2009년 99억 원 2010년 101억 원임.

질 문

교육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도 교육재산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

답 변

우리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면적과 재산평가액에 대한 현황은 토지 4,306필지 2,835만 541㎡ / 1조 2,627억 1,240만원, 건물 6,962동 314만 9,526㎡ / 1조 5,866억 1,150만원이며, 이중 각급 학교장이 관리하고 있는 실습지와 임야는 1,174필지 1,725만 7,563㎡ 재산평가액 478억 4,000만원으로 학과 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실습지 및 학교실습 임야에 대해서는 임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재산으로 소규모 실습지는 적극적인 임대를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임야 전반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학교림의 임목 자람이 좋도록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량 숲을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토지와 건물 전반에 대해 2005년도부터 공유재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교환 등 적법한 심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 변경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학급수급 조절기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원주 구곡초등학교의 학기 초 교사부족 및 초과전학 등 학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 향후 대안 제시?

답 변

원주 구곡초등학교는 구곡택지개발지구내의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36학급 규모로 2007년 3월 1일 신설한 학교임. 원주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의 학생모집을 위해 2006년 11월 통학구역 설정이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학

교 홍보와 입학안내를 하였으나 편성학급이 확정되는 금년 2월 6일까지 645명이 등록함에 따라 20학급으로 개교하게 되었음.

그러나 개교이후 일주일 만에 189명의 전입생이 증가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최소 39명에서 최대 43명으로 과밀화되었음. 이러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학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교사의 유보정원이 없어 부득이 교과 전담교사 2명을 활용하여 과밀이 심한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1학급씩 증설하였으며, 기타 학년에 대해서는 2학기에 교사정원 확보상황에 따라 학급증설을 검토할 계획임.

이러한 현상은 원주교육청에서 사전에 안내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년도 말에 전학을 하기 보다는 새학년 초에 전학을 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신설학교 학급편성 시에는 학년초 전학예정 인원을 면밀히 조사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개교 후 학급을 증설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강원도의 중·고생 흡연율과 관련하여 중·고생 흡연율 전국 1위, 강원도 학생들의 전대미문의 생매장 사건 등이 강원도 교육행정이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 바람

답 변

의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듯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한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림. 사건발생 직후 2007년 3월 13일 원주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주재로 관내 교장, 학생부장, 전문직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사태수습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음.

먼저 피해학생은 강원도교육청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주는 강원대학교병원 one-stop지원 센터에 입원시키고, 가해학생 5명은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임시 징계조치로 원주 청소년활동 진흥 센터 등 위탁교육기관에서 특별 선도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원주교육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수습과 사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교폭력사안은 비단 원주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난 3월 16, 17일에는 학생부장 및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연찬회를 속초에서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전달하고 실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감 서한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하여 학교장이 직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시달하였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불미한 학생사안이 우리 도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2) 권석주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인사교류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운영하는 제도적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 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는 결원보충, 직제의 신설·개편, 초과현원 해소, 연고지 배치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도와 시·군간 또는 시·군 상호간에 선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능한「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직렬·직급간「1:1 교류」등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체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상의 문제, 즉 인사권이 자치단체마다 독립되어 있어 강제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는 타 지역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인사성향과 교통·교육, 정주여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도에 오기를 회피하는 경향

등 모두가 만족하는 원활한 교류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인사교류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도에서는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제정하고「인사교류협의회」도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본인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인사교류는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강원도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관광개발이나 관광상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하는지,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과 홍보전략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OK사인을 받을 만한 고객만족 서비스 전략은 있는지, 도의 관광정책에 관하여 고객만족,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측면을 고려하는지, 영월마차 탄광문화촌 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은?

답 변

해외관광객의「강원관광 홍보대사」활용 관련, 관광에서의 홍보는 강원관광을 하나의 상품으로 널리 유통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중 하나임.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설명회, 판촉전, 팸투어, 해외 관광사무소 설치·운영 등 기존 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기 운영중인「Sports & Tourism 홍보대사」를「강원도관광·문화·스포츠명예대사」로 확대 개편(18명→30명)해 나가고 있음.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로 여행하는 강원도민의 해외관광 홍보대사 활용방안은 도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접근, 도민에 대한 홍보·안내, 여행사 협조 등 민·관 협조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음.

관광개발·상품에 대한 성과분석과 관련, 도에서는 크게 “강원권관광개발계획 평가”와 “관광객수용태세 평가”등 두가지를 실시하고 있음. “강원권관광개발계획”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권역별 계획 수립시 과거 5년간의 추진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관광객수용태세 평가”는 1년간 시·군에서 추진한 관광시책을 관광객 유치실적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임.

참고로, 2002~2006년 간 시행된 “제3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주요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예측에 있어서 지역 관광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수준의 지역관광통계 DB 구축이 필요하고, 관광개발 방향에 있어서는 소권별 개발전략을 교통권, 생활권 등의 변화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투자계획에 대한 민자 유치 부문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도에서는 2007년부터 도 단위로 시행하던 관광실태조사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소권별 개발전략을 교통권,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도 전역을 “7대 기능축”으로 특성화시켜 나감은 물론, 민자 유치의 확실한 가시화를 위하여 관광정책과 내에 관광시설유치 전담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음.

또한,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2006 관광객수용태세 평가”를 실시, 7개의 우수 시·군을 선정, 5억 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고객만족 서비스 전략과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관광수요 창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신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통역안내원 배치 운영 등 기존의 관광안내소 운영 강화는 물론, 금년에는 지역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첫 번째 주유소를 “관광안내주유소”로 시범적으로 지정(9개시군, 10개소), 자가운전 여행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또한, 도민의 관광요원화와 강원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도내 6개 초등학교를 “관광교육연구학교”로 지정, 정규 교과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광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도내 5개 대학에 대한 위탁교육 형식으로 5개 과정의 “강원관광아카데미”를 개설, 국제수준의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관광업체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이밖에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택시 노조간부 생활외국어 교육, 관광서비스 노조 종사원 실무연수, 산학협력사업(지역리더교육), 관광사업체 자율적 교육(강

호회), 강원관광 서비스 경진대회 등 관광서비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전도민 관광요원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개발사업의 민자 유치 관련, 당초,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영월 마차지역은 궤도, 갱도 등의 탄광시설이 잘 보전되어 있어, 채탄과 관련된 모든 공정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이 가능하고, 사업성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본 사업은 공공투자 125억 원(50%), 민간투자 125억 원(50%)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향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자 유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고 있음.

먼저, 민자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자본가들에게 많은 관광객 유치 등으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선 공공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민자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 할 계획임.

이에 따라 공공투자(125억 원)로 토지보상비, 용역비 등 35억 원과 기반시설비 90억 원 가운데 전시시설 인 갱도 체험장, 야외전시장, 탄광촌 생활사 전시관 등은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되,

민자 투자 사업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지역주민 운영이 가능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상가 및 편익시설은 공공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을 목표로 하여 투자여건 확충 등을 위해 현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 야외 놀이시설(전자궤도차) 유치 등 대규모 민자 유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를 목표로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코자 함.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월 마차 탄광문화촌이 관광지로서의 면모와 민자 대상사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영월군내 장릉과 별마로 천문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수도권 가족 나들이객, 수학여행단 등 타킷 관광객 중심으로 별도의 마케팅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음.

아울러, 효과적인 민자 유치를 위해 민자 유치 전담반을 구성(도, 군, 자문위원 등) 하여 적극적인 민자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음. 그리고 공공투자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를 대비한 시설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임.

질 문

국제결혼으로 도내 이주한 여성과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도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이들 자녀의(2,280명) 교육문제 방안은?

답 변

먼저,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말 기준으로 2,067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수는 2,281명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국적별로는 중국 855명(41.4%), 일본 393명(19.0%), 필리핀 366명(17.7%), 베트남 282명(13.6%), 기타 171명(8.3%)임.

여성 결혼이민자는 자라난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쉽게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경제적 문제, 가족 간 갈등,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문제는 농촌총각결혼, 저출산 해소 등 사회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따라서 도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조기정착과 건전가정 육성을 목표로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 5개소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구), 한국어, 생활조리, 문화예절 등 교육 및 상담 전담 향후 1시군 1센터 설치를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양육사업 추진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둔 이민자 가족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녀양육 지원.

외국인여성전용 긴급 상담전화(1577-1366) 운영, 6개 국어 상담을 통한 애로 사항과 고민 등 해결, 민간단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확대(12개 단체 65백만원), 멘토링 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교실, 고국의 날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주부의 양모결연사업 추진 등 고향보내기 지원 사업(3개 시·군 18명), 명절위문 및 생일상 차려 주기, 체육대회, 가족 노래자랑 등 앞으로 더욱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체계적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시·군과 연계하여 엄마랑 함께 동요배우기 노래교실 운영, 동화 읽기 모임, 영유아 자녀를 위한 교실 운영, 취학 설

명회 개최, 방과후 학습지도 및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의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도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고령화 사회에 도래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과 경로당 지원액을 증액시킬 계획은,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

답 변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예산증액 관련, 현재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143개소로 시설보호대상 노인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2006년 기준 96.7% 수준임. '08년 7월 노인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 금년도에 요양시설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등 13개소를 신축(사업비 155억 원)하고, 계속사업으로 신축 중에 있는 요양시설 등 22개소가 완공되면 시설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지역 간 시설불균형 현상은 실비 및 유료시설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해소토록 하겠음.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2,474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30억 원을 지원하며, 공동작업장 형태의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에 59억 72백만 원을 지원(경로당별 1백만 원), 노년에 일하는 보람을 갖도록 추진하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 경로당 신축사업에는 도비보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폭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지역 노인활동의 중심 시설화 하여, 맞춤형 노인정보화 교육, '장수춤' 체조 보급, 노인솜씨자랑대회 등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교실, 건강교실 운영, 보람일터와 게이트볼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적성과 능력에 맞는 소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

이와 더불어, 노인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건강대축제 및 노인일자

리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에 67억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여가 활동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일할 능력이 있고 건강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함께하고 존경받는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아울러 노령화의 세계화 추세 등 사회복지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한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점증하여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앞당겨 나가고자 함.

질 문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은,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과제로 설정을 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해결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 변

금년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여성농업인은 농촌의 핵심인력으로 농업·가사·육아·교육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영농참여도는 남성과 비슷하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열악한 실정으로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임.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경제 선진도」,「삶의 질 일등도」시책에 부응하여 2010년까지 도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전국 최상위로 올린다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음.

금년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8개 사업에 108억 원으로 농어업인 자녀 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2,200명에게「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21억 원,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2,000명에게도「보육비」로 2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6,200명에게「고교생 자녀 학자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 및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등을 위한「여성농업인센터」3개소 운영에 3억 원을 지원 할 예정임.

그 외에도,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영농을 대행해 주는 「도우미」 인건비 3억원 지원, 도내 1,100명에 달하는 농촌거주 외국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글교육, 문화적 차이, 가족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모국방문 지원 등「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2억원을 투자, 홍천·횡성·평창군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농촌여성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 자체「특수시책」으로 1억원을 투자「공동취사장 운영」시범사업을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추진하여 농촌여성들이 겪고 있는 취사걱정과 개별적 음식조리에 따른 불편, 인력낭비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겪는 피부노화, 주름발생, 그 외 직업병 문제 해소를 위해「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기자재 공급」사업에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이와 아울러, 도에서는 여성농업인 포상기회 확대,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증대, 교육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의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여성농업인 권익신장을 위한 중앙정부에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문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도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되,

도 나름대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을 적극 개발 시행하는 한편, 금년도에 추진하는 도단위 시범사업의 중앙 시책화와 여성농업인을 위해 발굴된 과제들을 중앙에 건의 하는 등 도내 여성농업인 권익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농지와 관련하여 현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면적을 재조사하여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 요망

답 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92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음.

2005년말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은 1,153천ha로 전체 경지면적의 63.2%이며, 우리 도는 전체 경지면적의 46.1% 이므로 전국 시·도 가운데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지정율이 낮다고 할 수 있음.

‘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함.

농림부에서도 위와 같은 여건과 DDA/FTA 협상 등으로 관세인하, 국내보조 감축, 쌀시장개방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존의 농업진흥지역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2005년부터 전국의 농업진흥 지역이 지정된 1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되거나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음.

따라서 도에서는, 그 동안 시·군과 협조하여 지정 당시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각종 개발 등으로 여건이 변화되어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최대한 조사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농림부,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불가피하게 계속 농업진흥지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농업용수개발 등 기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질 문

소방인력 확충방안에 관련하여 현재의 소방인력,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방안 그리고 항상 지역에 고생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답 변

부족 소방공무원 인력확충 방안과 관련, 우리도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총 1,600명으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의한 기준인력(2교대 기준/2,107명)대비 76%에 불과하며, 119안전센터 등 외근활동 소방공무원 대다수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상황실, 구급대 등 현장 활동이 많은 일부 격무부

서에 근무하는 120명만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음

현 상태에서 전 현장 활동 근무부서를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 537명이 확보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소방공무원 부족현상은 우리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최근 5년간 총 348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해왔으나, 일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하여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50~60명을 증원할 방침이며 증원된 인력은 읍면지역 지역대에 우선 배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내년도에 119통합수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상황관리 인력의 통합(86명→40명)운영으로 인한 잉여인력 46명을 현장 활동 부서로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소방인력 보강을 추진하겠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대책과 관련, 우리 도의 의용소방대는 총 220개대 7,37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에서 지역봉사를 실천하면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지역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3년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고등학생, 대학생)를 대상으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직 활성화와 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연 1회「선진소방관서·의용소방대 비교견학」해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의용소방상」등 각종 특별포상과「소방의 날」및「연말연시」정기포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군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음.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임.

3) 서동철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성과를 정치권 등의 공으로 돌리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

려줌으로서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떠한지? 속초 아이맥스 영화관이 애물단지로 서로 떠밀리고 있는데, 올림픽 유치 열기처럼 과감하게 재투자하여 관광 이벤트 대열에 포함시킬 의향은?

답 변

먼저 관광정보센터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99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징하는 주제관과 타워를 운영하고, 강원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람객 유치를 위해 매주「홍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관광관련 업체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홍보와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금강산과 서·남해안 관광개발, 그리고 해외여행 증가 추세 등 관광환경변화로 인한 설악권 관광객 감소로 인해 아이맥스영화관을 포함한 국제관광정보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위하여 테마관광 전시물 유치 등 다각적·종합적인 검토로 관광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는데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9관광엑스포 당시의 축제 열기를 지속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임.

아이맥스영화관 활성화에 대하여는 현재 '99엑스포 당시 제작한 「아름다운 세상 강원도」를 상영하고 있으나 장기상영에 따른 식상함과 홍보성 영화로 아이맥스의 진수인 3차원의 입체감과 깊이 있는 감동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어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DVD명화와 2014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영화를 병행 상영하여 국민의 동계올림픽유치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아이맥스 新 프로 임차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최첨단 고가의 차세대 영상매체인 만큼 신 프로 임차운영비가 적지 않은데다 (4개월 임차비 2억원, 연 6억 소요) 배후도시의 적은 인구와 관광객 감소 그리고 최근 개장한 센터 인근의 대형영화관 개관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경영수지상으론 적자 운영폭이 가중 될 것입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를 열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장기적이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로 인한 관광시너지 효과를 유발

하는 등 강원관광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밀한 수지분석을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질 문

석호는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자원의 보고인데 관광과 연계 방안은 자연적인 석호를 자연호수로 특별관리하여 관광지로 조성할 의향은? 석호를 바다목장화와 연계 활용하는 방안은?

답 변

우리도 동해안 석호는 송지호, 화진포 등 7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수가 유통되어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자연호이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생태 자원임.

그러나 도시화 및 관광개발 등으로 인한 하수유입으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천진호, 쌍호, 풍호 등 농경지 확장, 자연천이(自然遷移) 등으로 늪지화, 소택지화 된 석호가 다수 있음.

지금까지 송지호, 화진포호 등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수질측정망에 석호를 포함시켜 수질변화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06년까지 송지호, 화진포 등 6개 석호에 대하여 수생식물 식재, 자연형 호안 설치, 퇴적오니준설 등 석호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음.

앞으로 국가(환경부)에서는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고 생태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중점관리 석호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08년까지 2억 원을 투자하여 식생, 동·식물, 어류 서식 실태 등 석호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 후 구체적인 보전계획을 수립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인위적인 수질개선사업보다는 석호별,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복원기술을 개발·시행함으로서「석호」가 친환경적으로 보존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

우리 도에서는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석호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살아있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석호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원 차단과 쓰레기 투기 및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해수 유입 시설 보강 담수어족보호 등 우리도만 가지고 있는 석호의 생태와 경

관을 보전하여, 주변 관광시설과 석호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음.

질 문

어려워지는 중류사회와 서민 계층에 대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농촌의 쌀 유통은 대형마트의 횡포가 심하며, 어민들은 잠깐 실수로 출어금지·면세유 박탈·영어자금 회수, 각종 벌금으로 파탄,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은 도시권의 기업에 밀리고 있는 등 어려운 시기를 타계할 강원도의 특단의 조치와 계획은?

답 변

중소기업 관련 각종 통계에 따르면,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2,052개로 공장등록 2,064개 기업(공장등록기준)의 99.4%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은 61.3%, 출하액은 60.5%, 부가가치액은 56%를 차지, 수적비중에 비해 생산과 이윤이 저조한 실정임. 도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보다 100억이 증가한 총 1,600억 원을 확보·지원할 계획이며,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기업대출금 상한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은행 순수 신용 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보증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도내수출기업 대부분은 연간수출액 100만 불 이하의 영세 기업으로, 원화가치 상승 시에는 채산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 보험료 지원과, 환위험관리에 대한 교육을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권역별(춘천, 원주, 강릉)로 개최하고, 유관기관의 환관리 지원 시책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혁신, 생산성향상 등의 자구노력과 도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빠른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음.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V 등 언론매체에 의한 광고마케팅의 힘은 다른 어떤 마케팅 수단보다도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하에서 막대한 자본에 의한 광고 공세와 대기업의 물량공세 및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는 열악한 중소기업을 더더욱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e-비즈니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제조업의 1/3이 음식료품 업종임을 감안할 때, 청정 강원도의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마케팅 한다면,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강원도의 경쟁력이자 불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강원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인증마크 획득 지원, 그리고 기업의 CEO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현장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겠음.

특히, 급변하는 e-비즈니스 환경하에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더욱더 활성화 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질 문

황폐화 되어가는 어촌의 대책은?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과 어촌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 할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을 도시권 시민들의 제2의 생활공간으로 유도하는 등의 흐름에 대한 강원도의 어촌 살리기 대책은?

답 변

요즈음 우리 어촌실정은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인구의 고령화,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개방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 임.

근래에 들어서는 국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건강과 웰빙 문화의 확산·삶의 질 향상 등으로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과,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어 동해안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수산물을 매우 선호하게 되었고, 영동고속도로 확·포장과 동해안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주말을 이용한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면 현지 어업인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됨.

지금까지의 볼거리·먹거리 위주의 단순관광에서 겪어보고, 느껴보고 같이 생활해보는 체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생활과 애환, 어촌과 해양 문화 그 자체가 도시민들에게는 매우 색다르고 흥미로운 체험거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체험 낚시어선·유어선 보급 및 바다 낚시터 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민속전시관, 해양박물관 건립, 전통재래식 어법의 체험관광 상품화, 풍어제, 일출 이벤트, 어선 승선 및 조업체험 상품개발, 계절별, 어촌별 어류축제, 식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관광과 어업의 접목·도시민과 어업인의 교류·도시와 해양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어촌이 보다 풍요로움을 구가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질 문

동해 해수욕장 4계절 활용방안, 우리는 해운대 곰 수영대회에 한 발 앞서 뜨거운 한증막을 곁들인다면 더 발전된 4계절 관광을 이룩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강원도에서 시도할 의향은?

답 변

지금까지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깨끗한 백사장과 청정한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름 피서기인 7~8월에 약 40일간만 운영되었던 계절적 한계가 있었고, 안보상 설치된 군 경계 철조망이 일반인의 해안접근을 제한하는 등,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 임.

그러나 근래의 관광추세는 국민소득 향상, 주 5일 근무 등으로 해양 레저·스포츠 수요가 급속히 증가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해양관광의 국민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준 높은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해수욕장 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해안 경관을 저해해 왔던 군경계 철조망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점차 경관 휀스로 대체되거나 시설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어, 해수욕장을 4계절 휴양지로 활용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요트마리나 시설도입, 해양 레저·스포츠 시설의 확충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우리도의 해수욕장을 각광받는 4계절 휴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과 저인망, 트롤선의 과도한 어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들이 월선으로 적발될 경우 법령의 엄격한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 변

남북분단의 현실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설정된 어로 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 제34조 및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규정에(해양수산부령 제163호) 의거 형사 벌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어로한계선 주변수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경우 조업과정에서 해황조건에 따라 본의 아니게 월선을 하여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현재, 남북관계 개선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머지않아 북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어업협약이 체결되리라 기대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업질서 유지와 안전조업 측면에서 부득이한 조치임.

다만, 과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는 월선조업이 납북으로 이어져 본인의 불행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처벌기준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어로한계선 주변수역에서 조업제약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처벌 기준을 완화토록 해양수산부와 협의 해 나가겠음.

질 문

도청 공보관실 역할 제고, 광고와 PR를 접목한 MPR가 앞으로 홍보 시장을 점유할 것인데 강원도에서는 미래 강원을 어떠한 홍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습니까?

답 변

현재 우리도의 홍보는 뉴-스타트 강원「경제 선진도·삶의 질 일등도」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도의 최대 현안인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보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도의 가치와 이미지를 전국화·세계화 하기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도 홈페이지와 국내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문화, 관광 등 이미지 홍보, KTX, 수도권 지하철,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 케이블TV, 국제공항의 와이드칼라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도 출신 중앙언론인 등(바이탈포럼, 춘필회, 율곡포럼회 등)인적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공보관실은 도 전체의 포괄적인 이미지홍보에 주력하고 기타 관광, 기업유치, 농수특산물 등은 해당 부서별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림.

앞으로 우리도의 홍보 전략은 홍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강원도를 차별화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 홍보강화 웰빙 트랜드와 국·내외 관광객 1억명 시대를 맞아 천혜의 청정자원, 순후한 인심 등 강원도의 특·장점을 더욱 가치화하여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란 이미지를 타킷화하여 경쟁력 제고, 국·내외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스타-마켓팅 적극추진, 강원도의 이미지와 가치를 인지도와 파급효과가 큰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전국화·세계화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최신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네티즌 3,400만 시대의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 상의 홈페이지와 쌍방향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강화 (강원도 세상 웹진, 싸이월드, SMS 등), 홍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국내·외 각급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토록하고 아울러 홍보전문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의 홍보 전략을 근간으로 이미지 강화, 국·내외 매스미디어 활용, 온라인 홍보, 전문 인적자원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홍보 전략을 추진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청소년 비만 대책은? 청소년 비만이 에이즈보다 무서운 병으로 표현될 만큼 세계적으로 크나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답 변

청소년 시기의 비만은 성인기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로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각급 학교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학생 비만관리 대책에 따라 학생비만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원주, 속초양양, 홍천 지역을 비만관리 표본지역으로 운영 하고 있고, 2006년도 표본지역의 비만학생은 11.2%로 조사된 바 있음.

각급 학교의 자체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외에 표본지역을 비롯한 시 지역청 단위의 지역연합캠프 운영으로 올바른 식이지도, 운동 및 잘못된 생활습관을 위한 행동수정 등을 포함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체험위주의 비만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건강한 학교 환경제공을 위하여 2005년 4월부터 국가청소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서의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건강음료로 대체하도록 권장하는 그린라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도 학생 비만관리 등 건강관리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보다 건강한 강원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바뀌는 제도와 논술고시에 대한 대안은? 바뀌는 대학입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사항은? 도 교육청 차원에서 논술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 변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고사, 구술면접 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내용이 전년도는 교과별 석차백분율과 평어를 사용하던 것을, 교과별 원점수(평균/표준점수)와 교과등급을 반영하는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활용도 영역별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점수를 활용하던 것을 영역별 등급만 활용함.

수시 1학기 모집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 문항이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축소되고, 시험시간도 90분에서 80분으로 줄었으며, 실업계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이 입법예고 되었음.

현재 수도권대학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까지도 많은 대학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을 금년도에 인원을 확대 또는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되고 있는 것임.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예의 주시하며 지난 3월 9일 대입진학담당자 연찬회를 통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책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음.

이에 대비하여 전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CD로 제작하고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주요사항, 대학입시일정표를 포스터형으로 제작하여 학급에 배부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 논술고사 대비 추진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은 2008년 대학입시에 논술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논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학교교육을 통해 논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007년 학교 논술교육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는 독서지도를 기초로 하며, 중학교는 글쓰기와 토론 학습, 고등학교에서는 실제 논술고사에 대응하는 실전지도를 하고자 함. 먼저 논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에서는 강원교육인증제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며,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에서는 토론·논술 수업 전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권장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논술경시

대회와 논술·독후감 발표대회를 개최하며, 기타 사고력과 표현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4) 조영기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 시책과 관련하여 도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과 실적은?

답 변

먼저,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말 기준으로 2,067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수는 2,281명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국적별로는 중국 855명(41.4%), 일본 393명(19.0%), 필리핀 366명(17.7%), 베트남 282명(13.6%), 기타 171명(8.3%)임.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라난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쉽게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경제적 문제, 가족간 갈등,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는 농촌총각결혼, 저출산 해소 등 사회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따라서 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건전가정육성을 목표로「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운영 (※5개소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구), 한국어, 생활조리, 문화예절 등 교육 및 상담 전담 향후 1시·군 1센터 설치를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여성결혼이민자 아동양육사업 추진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둔 이민자 가족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녀양육 지원.

외국인여성전용 긴급 상담전화(1577-1366) 운영, 6개 국어 상담을 통한 애로 사항과 고민 등 해결, 민간단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 확대(12개 단체 65백만

원), 멘토링 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교실, 고국의 날 운영,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주부의 양모결연사업 추진 등 고향보내기 지원 사업(3개 시·군 18명), 명절위문 및 생일상 차려 주기, 체육대회, 가족 노래자랑 등 앞으로 더욱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체계적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시·군과 연계하여 엄마랑 함께 동요배우기 노래교실 운영, 동화읽기 모임, 영유아 자녀를 위한 교실운영, 취학 설명회 개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의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도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강원도 인구 감소문제에 관련하여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접근 교통망의 확충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환경 조성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강원도의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인구대책 방안은?

답 변

최근 인구감소 문제는 광역시와 몇몇 도를 제외하고는 공통된 현상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임. 도내 인구 역시 '78년 185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96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99년 156만 명을 고비로 다시 조금씩 감소추세로 '06 연말 기준 도내 인구는 151만 5천명임.

이러한 인구감소는 사망, 저 출산 등 자연감소와 산업화,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현상에 기인함 → 앞으로 이러한 감소 추세는 계속되리라 예측됨. 그런 반면, 인구수는 지역이나 국가의 힘, 각종 경제지수에 필히 적용되기에,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정 인구수 확보가 최대 과제이기도 함.

따라서,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지역인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내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출산정려정책으로 임신·출산지원 확대를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비 지원(30만원), 임산부 검진비, 영양제 지원·불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64

→74개소), 보육시설 운영지원(767개소), 저소득층 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보육료 지원 등이고, 인구유입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2010년까지 6만개(경제일자리 5, 사회서비스 1), '10년까지 중대규모 우량기업 포함 1,500개 기업유치(기유치 834), 알펜시아리조트, G5,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 기업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 신산업 유치,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복지·교육·환경·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강원도 사람 키우기 집중 추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가장 살기 좋은 환경 가꾸기(생태자원 보전, 경관형성정책 강화 등).

이와 함께 호텔리조트 종사자·군부대·대학생 등 타지 주소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 추진 등 대책 추진, 도전역의 균형발전과 고른 복지·문화·교육 수혜정책을 통해 일부 도시권으로의 집중 현상도 해소해 나 갈 계획임.

질 문

대관령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대관령 생태관광지 개발 대규모사업은 고용창출과 관광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때 도와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에서 도의 역할과 협의 협조사항이 있었는지?

답 변

그동안 대관령 생태순응형 활용계획은 한국관광공사가 대관령고원 생태자원보전 및 활용방안 구상을 한바 있고 ('06년 3월~8월) 삼양축산,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제3섹터 방식으로 생태순응형 대관령고원 활용계획수립 업무협약을 체결('07년 2월)하였고 지난 3월 1일에는 대관령고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07년 중 대관령목장과 인근지역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08년에는 재정경제부에 지역특구사업으로 지정신청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인근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 등과 연계 필요성이

높고 상호 시너지 효과가 필요함에 따라 심도 있는 타당성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함.

이런 맥락에서 지역주민설명회('07. 3. 1.)시 도 환광관광문화국장이 참석하여 기존 관광 숙박시설과의 중복투자 배제, 친환경적 사업추진 등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을 밝힌바 있음.

다만 공신력이 있고 관광자원 조성 경험이 풍부한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에 투자하는데 대하여는 도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우리 도가 이미 용역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대관령 구고속도로 주변 관광자원 조성사업의 곤돌라 설치 등 민자 투자 부문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

질 문

강원도 재정역량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요망

답 변

재정력은 당해 자치단체 전체예산 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점유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 금년도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4.2%로 전국 평균(54.4%)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75%정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도는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율인상과 신규과세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장기적으로는 신세원 발굴과 국세 일부 이양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검토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증대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

의존수입으로 국가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 예산확보 계획 수립, 중앙 일정별 전략적 대처·대응 등을 통해 도정 당면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통계자료를 철저

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군인 수 등 특수여건 발굴·반영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최대한 충당해 나가고 있음.

다만,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만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재정력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력은 한 자치단체의 세입 구성여건을 나타내는 재정지수로써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나 무엇보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 관리 등 질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림

나) 교육행정

질 문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자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성과는?

답 변

우리 도내에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정이 2,067세대이며, 이중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886명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첫째, 부모,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본청의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정보관과 지역교육청의 도서관을 활용하여 성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6년에 42개 기관 51강좌를 통하여 연인원 11,9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외국인 주부와 소외계층의 자활 기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음.

학교 단위의 활동도 권장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양구 해안초등학교를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2006년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안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우리말 배움터를 운영하여 관내 외국인 13명과 한글 미해득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기초적인 생활국

어 교육과 전통예절교육 및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외국인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돕고 있으며. 횡성 강림중학교에서는 외국인 주부 평생교실을 운영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 생활을 해 오면서 언어소통과 문화이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부들의 사회적응력을 길러 주고 있음.

둘째,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 및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보정교육 자료를 3종 5,704질 구입하여 보급하였고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8억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지역교육청 우수사례로는 강릉교육청이 강릉대학교 및 강릉문화원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멘토링 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일대일 학습지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학습요구와 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고 있고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강릉문화원과 강릉영동대학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음.

학교 단위의 상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07년에는 17개 지역교육청에 27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지역 단위의 상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3. 제179회 임시회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정을권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2007년 강원도 8가지 도정기조 실천에 관하여,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일자리 창출, 국제적 네트워크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는?

답 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2010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6만 개 창출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고 이것은 경제적 일자리 5만 개, 그리고 지금 정을권 의원님께서 많은 예를 들으신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리고 특히 경제적 일자리의 경우 안정적이고 번듯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를 들면 NHN 서비스라든지, 일동후디스 등 중대규모 기업유치, 그리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시설 유치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 폐광지역개발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서 2006년부터 2007년 금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1만 5,000개 정도 창출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은 224개 업체에 8,625개임. 통계청 통계인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체를 실제 유치하고 거기에 인력이 쓰여 지고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대형프로젝트 추진,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든지 폐광지개발 등 해서 1,440개, 다음에 호텔, 콘도, 골프, 스키장 이런 관광레저분야가 있음.

이것이 계속 개장되면서 인력을 쓰고 있는 것임. 거기에서 약 1,623개가 되었고 그 외에 예시 든 공공기관인력, 대규모 주택단지관리인력 등에서 3,785개해서 1만 5,477개를 창출을 했고 다음에 서비스 일자리의 경우는 복지, 농림, 교육 등 이것은 우리 국도비를 들여서 6개 분야 61개 사업에 2만 9,000명을 지원해서 신규 일자리는 6,200개 목표해서 9월 말 현재 6,600개 정도 창출을 했음.

질 문

도정 역점시책중 도민 실질이익외 예산편성 부적절사업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경제 특별대책을 위하여 ‘08년까지 1,353억원을 투자하는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서민경제 증대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 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특성상 투자금액 대비 서민경제 증대 성과에 대해 정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다소 어렵다는 점을 우선 양해. 다만, 지난 6월 27일 중소기업청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재래시장 정책

성과자료』에 따르면 시설현대화를 마친 재래시장의 매출이 7.6%가량 증가(미개선시장은 15.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04년 대비 '05년 도내 시장당 1일 평균매출액이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06년 도내 재래시장 경쟁력 전국6위)

도에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재래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증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내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08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1단계 마무리하고, 2009년부터는 경영혁신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임.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에 17개 특성화시장을 시범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하반기까지 특성화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임.

향후 우리 도의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의 추진방향은 먼저, 도내 재래시장별 특화자산의 집중육성을 위해 관광시장의 적극 육성, 대표상품 개발, 시장브랜드화 등을 추진, 공동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재래시장 광역공동상품권 유통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심지 생활권 시장 내 대표상품 공동판매장 설치를 통한 재래시장간 유통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재래시장의 문화·교육공간화를 위해 고객쉼터조성, 이벤트사업 지원, 초등학생 체험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질 문

농어촌 활력화 대책 추진 중 현재 가장 시급한 사항에 관하여 친환경, 브랜드화, 그린투어리즘, 산림자원의 가치화, 새 농어촌 혁신모델, 강원도형 신산업 육성을 지향하는 바, 강원도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은?

답 변

농촌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 사회 또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행속도가 대단히 빠른 형편임.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 강원도 차원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농촌의 후계농업인력, 농촌이 고령화되는 율은 더 심각한 정도임. 농촌지역에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006년 말 현재 29%를 차

지하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임.

전체적인 고령화 인구는 전국보다 높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통계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 자체에 후계 농업인력이 없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촌 고령화 인구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신규 전문경영인을 적극 영입하는 일밖에 없겠다고 보고 있음.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도의 미래농업교육원 장기 과정생 이라든지 농업전문대 졸업생, 농과계통 졸업생 등 이런 차세대 인력들에 대해서 정부융자 외에 창업에 필요한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할 예정임.

2008년도만 해도 3억 원 이상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기존에 후계농업인육성,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제도 등 현행 제도를 병행해서 농촌의 연착륙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음.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적어도 후계인력 8,000명, 다음에 강원농업 CEO 2만 명 양성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음.

다음에 파종·수확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은 당면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고령농 대상으로 해서 농가편의형 농기계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지원할까 생각을 하고 있음.

이것을 위해서 대형농기계를 행정에서 지원 구입토록 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음.

다음에 농촌일손돕기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봉사 인력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조직적으로 센터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봉사인력을 농촌일손돕기 쪽으로 전환시켜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령농 대책으로 은퇴하는 고령농가에게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서 지원하고 이것은 정 의원님도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고령농도 적합한 일거리가 있다고 판단됨.

그래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유휴지 경작, 환경정화 등 노인사업도 투입을 하고

다음에 고령농이나 취약농에 대한 가사도우미, 농촌지역 건강관리실, 도내 건강장수마을 육성 등등을 통해서 특히 농촌에 대한 고령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질 문

도민만족의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금 대폭 확대에 관하여, 국가 예산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이라 생각됨. 특히 기금 편성의 연도별 나열식 소액증액과 주 투자부문이 시설 확충비로 쓰이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령화사회에 맞게 노인의료 수발 복지, 장애인 수발 복지로 사업비 방향전환 모색 의지는?

답 변

우선 사회복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저희가 공약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예산의 거의 30%까지는 사회복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놓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음.

그런데 우선 노인복지의 예만 보더라도, 지금 정 의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다고 보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이것은 노인복지와 연관된 시설들,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쉼터도 있고 또는 경로당 문제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아직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됨.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밀하게 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일반적인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그런데 전자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면서 가고 있지만 후자는 예산 부분에서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음.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기금 특히 노인복지기금도 만들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예산도 쓰고 하고 있는 것임.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실 설치 등등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도 상당수 하고 있음.

저희가 예시로 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유료지원, 장애인수발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 시행, 이것은 내년도 7월부터 될 것임.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음.

노인복지기금 사업에서는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노인 무료급식 등의 부분에 금년도 24개 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부분은 정확하게 문제를 보시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음.

질 문

강원도 전역의 두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4개 권역 고속도로 교통망 확충에 관하여, 4개권역 교통망 확충계획 중 “서울-양양간 150km 고속도로 건설중 동홍천-양양 구간 고속도로 정확한 착공 시기와 2009년에 완공을 약속할 수 있는지?

답 변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문제는 지난번 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상으로 분류했다가 도의회의 노력, 또 지역주민들의 노력, 그리고 강원도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정부방침이 정해졌고 금년도에도 서울~춘천 간을 포함해서 거의 9,000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춘천 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자로 하고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분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2009년 전반기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다음에 현재 국가사업 추진으로 홍천에서부터 양양구간 중에서 춘천~동홍천 구간은 이미 착수되었고 이 사업도 2009년 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음.

현재 공정이 64%인데 나머지 동홍천에서 양양 구간은 71.5㎞으로 이 구간이 문제인데 2조 5,122억 원이 소요됨.

이 사업은 이미 '99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났고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이 될 텐데 내년도 4월에 착공예정임. 착공이 되면 현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물량과 사업기간을 정상적으로 다 주었을 때 빠르면 2013년, 조금 늦으면 2014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질 문

지역개발사업 중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확대에 관하여 도내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면단위의 낙후된 건물과 불규칙한 경관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수십년간 뒤쳐져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과 시·군의 계획부재로 인하여 방치되다 시피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행정국장의 방안과 의지는?

답 변

기본적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 소도읍 사업을 하기 이전에 '72년도부터 도시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행자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2001년도부터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 그러니까 우리 도는 24개 읍이 있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코자 하려면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면지역도 포함시키려고 14개 면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194개 읍이 전부 완료되는 시점인 2012년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음.

앞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다 완료되는 2012년도 이후에 면지역도 소도읍 육성사업의 계획에 따라서 성장전망이 좋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도읍은 읍 단위만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 등이 있음.

질 문

수산질병의 문제와 이에 따른 전문 수산질병관리원 증원에 관하여, 수산자원보호와 회복을 위하여 인천, 경기, 부산, 충북, 제주, 부산,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충남은 수산질병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수산어종의 질병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타도를 이용하는 실정임, 동해안 수산자원과 내수면 자원을 위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은?

답 변

수산질병관리사는 어류의사, 어병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류의사에 준하는 치료자격을 가진 자로 되어 있음. 그런데 수산질병관리원 증원은 정원만 확보된다고 해서 처리될 부분이 아니고 진료실이나 임상병리실, 시설확충, 그러니까 시설확충도 되고 장비도 확보하고 해야지만 인력이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음.

실례로 주문진에 소재하고 있는 동해수산연구소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어병기사 자격을 가진 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을 못 하고 장비나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진한 상태임. 그래서 수산질병관리원 증원은 시설이나 장비확충이 우선 되고 인력증원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

질 문

도내 실국별 재해재난관련 연간 감시예산 사용 합계는? 이와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개정을 위한 국장의 역할에 대하여, 강원도는 5-6년 전부터 해마다 태풍, 홍수, 산불, 폭설 등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도민의 재산과 강원도와 국가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음. 이러한 재난재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타 시도에 비해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면서도 통신두절로 인한 재해재난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무엇이며, 이를 위한 무급통신지원단(아마추어무선 HAM)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의지는?

답 변

연간 실·국별 재난감시예산과 통신두절 시 대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에 대한 답변관련, 금년도에 재난감시예산은 산불예방예산, 재해예방·재난예방 대비 지진·해일 대비 해서 12개 사업에 38억 9,500만 원이 되겠음.

각종 재난으로 인한 통신두절 시에 통신대책은 현재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성전화기 228대가 있음.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마추어 무선연맹 강원지부 소속 3,800여 명의 동호회원이 함께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른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무선통신지원단 운영에 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개정은 지난 3월 22일 의원님께서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같은 건으로 이해를 했음. 거기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종합검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마추어 무선지원단 예산 지원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이 함께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됨.

그러나 아마추어 무선지원단의 육성은 재난예방을 위한 통신망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상사업에 대한 보조지원이 가능한 만큼 금년에 아마추어 무선연맹 강원도지부에 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질 문

아마추어 무선(HAM)을 활용한 재난통신지원체제 구축 예산증액에 관하여 산업화에 따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쓰나미 등 대형 재난재해 발생이 우려되며,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두절될 수 있는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춘천권만 통신 가능한 도청 옥상의 중계안테나를 강원도 전 지역을 보호하고 상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신 가능한 아마추어 무선 중계기를 5개 권역(춘천, 철원, 화천, 홍천은 대룡산에, 원주, 횡성, 평창, 영월은

태기산에, 양구, 인제, 속초, 고성은 한석산에, 강릉, 평창, 양양은 대관령에, 동해, 삼척, 태백, 영월은 함백산)에 설치하면 전기 공급이 두절시, 도로의 파손으로 전화두절시, 휴대폰 기지국 두절시, 위성통신망 기상악화로 통화 불안정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1권역 약 3천만원 예상) 의지는?

답 변

아마추어 무선 HAM을 활용한 통신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증액 문제는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재난예방이나 재난발생 시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음. 따라서 도에서는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 무선사의 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책을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도청 옥상의 아마추어 무선장비 기지국을 금년에 처음 시범 설치를 해서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 가동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는 어떠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가동만 두 번 한 바가 있음.

또한 아마추어 무선 도지부에도 아까 말씀드린 7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도 재난대책본부 구성 시에 아마추어 무선사를 도 재해대책상황실에 함께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정기적인 민간합동 재난비상통신훈련도 지난번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불필요한 하천선 적용으로 인한 국가재산의 낭비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현지 방문을 통한 일부 하천선 재적용에 관하여(요지 : 우선 도내 하천선이 전산화되어 있는지? 하천선을 고지 하기전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마쳤는지? 마쳤다면 출장 기록서는 비치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하천선 변경을 위한 도의 방안은?

답 변

우선 도내 하천선의 전산화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는 국가하천을 포함하여 총 257개 하천 중 169개 하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37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하천선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하천구역을 물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구역은 기본계획 평면도 및 하천대장에 표시되며,

하천구역선을 포함한 하천대장 전산화는「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 지침 (2004. 12. 건교부)」의 하천대장 전산화 및 표준화 지침에 의거 2005년부터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평면도 및 하천대장 포함)은 CD로 제작되어 해당 시·군 및 도에서 관리하고 있음.

하천선을 고시 하기전 위원회 현지방문 여부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위하여 하천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현지방문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으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지침(건교부)」에 의거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하천자문위원회을 구성하여 3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현지를 방문하는 등 기본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하천현황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하천선 변경에 대하여, 하천법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기본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질 문

잘못 축조된 내린천 상류 제방해체를 위한 한강수계사업 진행 여부에 관하여 전 주민이 반대한 제방축조 사업을 십여 년 전 국토관리청에서 강행한 후 강물

이 늘게 되면 저지대 마을이 범람되거나 범람위기에 처했으므로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도정질문을 통해 해체요구를 한 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음. 답변에 의하면 금년 말 사업결정이 되어야하는데 이에 따른 공사 시기는 언제인지?

답 변

내린천 상류 소양강을 포함하여 수립중인「한강2권역(북한강) 유역종합치수계획」추진은 국가 및 지방1급 총 6개 하천에 유역면적 7,789㎢, 하천연장 374.19km에 대하여 유역 내 각종 홍수방어시설의 구조적 대책과 홍수예경보체제 등의 비구조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역의 치수계획 수립·추진 및 최적의 연계운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486백만 원을 투자하여 2004년 11월~2007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2007년 9월 감사원 처분지시(지점별 홍수량 재산정 및 홍수량 고시 재정비 등)에 따른 과업물량 증가로 2008년말 까지 완료할 예정임.

현재까지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유역 내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및 홍수량을 산정하였으며, 2006년 8월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서리지구에 대한 치수방어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도 및 용역사 관계자가 현지 확인 하였으며, 현재 용역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1월까지 홍수량 산정과 관련한 모형 선정을 재선정하고, '08년 3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08년 4월 중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역협의체 협의를 완료할 계획임. 또한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음.

공사시기에 대하여는 하천사업을 위한 사전절차로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반영·수립 절차를 완료한 (2008년 12월 예정) 다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함.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서리제 해체」의 경우도 상기의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 문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데, 사업집행이 안되는 시·군의 문제점과 미집행에 따른 강원도 건설방재국 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도시계획이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도시계획이 새로이 변경 가능함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제 시기에 도시계획 변경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늦추고 도민의 재산을 방치시키며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 변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선계획 - 후개발」체계를 확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의 후속조치로 시·군 전 행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정비함에 따라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전 시군의 도시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전 행정력을 집주 하겠으며, 주민 숙원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이며 관리권자인 시장·군수가 관련절차를 밟아 신청할 경우 법적인 제약사항이 없는 한 빠른 기간 내 처리토록 하겠음.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금회 도시계획재정비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함과 아울러 시·군에서 적립하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20~30%)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활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연찬회 실시 등 시·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농어촌 지방도, 군도, 국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에 관하여 시·군 소재지의 도로를 보면 안전하게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만 농촌의 도로

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도로 건설을 하기 전 사전에 보행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국도, 지방도, 군도 설계·공사를 발주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국장께서는 이를 위해 국도관리청과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 변

일반적인 보도설치는 보행자 수가 150인/일 이상, 자동차 교통량이 2,000대/일 이상일 경우 보행자 안전통행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자동차의 교통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지역 보도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수한 실정 및 일반적인 보도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곳이 대부분으로 미정비 지역이 많은 실정이며, 농촌지역 도로의 경우 농기계 이동 등 저속 교통류의 분리 동선 확보를 통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보도설치 대신 갓길포장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방도 45개 노선 중, 보행자 및 농기계 통행을 위한 통행로 확보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시책사업으로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사업』을 '06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 형평상 추진실적이 미비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예산확보 노력 등 본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특히,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농어촌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하여는 인도 및 갓길포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구를 조사하여 해당 시·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각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행자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질 문

국도 및 지방도 교차로 이정표 및 관광지 표시판 설치에 관하여 홍천군 철정 교차로 및 기린면 방동 교차로 및 도내 필요지역에 지역명 표기, 관광지 표기, 거리표기로 강원도를 찾는 운전자들에게 편리한 안내판 설치 요구.

답 변

교통안내체계를 위한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52조(도로표지) 및 도로표지규칙에 의거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기타표지 등으로 구분, 지금까지 지방도 45개 노선 1,322km에 총 1,264개 설치, 매년 유지보수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설 및 보수·정비를 하고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표지판과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전수 조사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관리주체별로 보수·정비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하겠으며, 특히, 철정 및 방동 등 주요 교차로변에 설치된 표지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조사하여 본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및 운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음.

도로표지판에 표기할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거 대상범위 지정, 기타 관광지의 표지는 시설물 관리 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설표지판에 대하여 허가처리를 신속히 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 해 나가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농어촌 학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 농어촌 학생 감소 대책에 관하여 강원도내 중·장기 폐교계획은 일반통계에 의해 도교육청이 예측, 대상 학교가 잘 나와 있다. 그러나 학생 수를 늘려서 폐교가 안되게 노력하고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농어촌의 작은 마을에 학교는 교육 이외에 지역 정서와 문화, 그리고 살아있는 공간이며, 졸업생들의 희망인 것이다. 교육재정의 이익 논리만 앞세워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학생 수 감소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못했다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강원교육을 지휘하시는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이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농어촌 학교 학생 수 늘리기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 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학생 수 늘리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으며, 주요내용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음.

첫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대체적인 큰 틀의 사업은 열 가지 사업임. 우수고객을 육성한다든지 전문계 고교를 특성화시킨다든지 농·산·어촌에 있는 학생들의 학비를 감면시킨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10개 사업인데 예산은 2,400억 정도가 소요됨.

이런 사업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도의 시 지역을 제외한 11개 농·산·어촌에 방과후학교 활동으로 특별히 매년 87억씩 5년간 계획한 것이 414억원임. 이것을 들여서 방과후학교의 운영지원만으로 따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겠음.

세 번째 주요내용은 우리 강원도가 인구늘리기 대책을 세운 것을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201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음. 이것과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음.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학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교육여건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그 이외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학부모의 한풀이식 교육열-어떻게든지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이라든지 또 사실 농·산·어촌에 일자리가 많지 않는 실정임. 이것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나가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주 미미한 성과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학교들이 있음.

예컨대 정 의원님 계시는 인제 어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가 인근에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한 7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서 지금은 한 100여 명의 학생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평창 면온초등학교가 3학급짜리 조그맣게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6학급이 되었고, 한 60명 이상이 되었음.

또 용전중학교가 골프부를 육성하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며, 장성여고 같은 데가 학생들 학력제고에 엄청나게 노력해서 학생이 느는 추세임.

2) 서동철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어촌지역 옥계시설과 어판장 어민활동 자재 및 시설 등 정비 관련 동해안의 항·포구 등 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방안?

답 변

동해안 항·포구 주변은 집단 취락구조 형태를 이루며 어업활동을 위한 항만 건설과 어로활동을 위한 어선출입항 전경, 어획물의 양육 매매 현장, 항·포구를 중심으로 한 횟집단지 및 건어물상 등이 어우러져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항·포구 전체가 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이러한 것은 우리 도내 수산업이 주로 어선어업으로 그물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 어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여 물양장 공간에 적치하게 됨에 따라 주변공간을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과제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포구 기존시설물을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방침으로 '05년부터 기존의 위판장 지붕시설에 대하여「클린위판장」사업을 추진, 항·포구별로 난립되어 있는 횟집을 정비하기 위한「종합활어회센터」건립으로 깨끗한 항·포구 이미지 제고,「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 지속적 추진과 연계한 항·포구 어업인프라 구축 및 개선,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의 리모델링과 시설의 확대 등을 통한 방치어구 정비 정돈, 항·포구 내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쾌적하고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고 즐길 수 있는 어항(어촌)개발 개념을 도입,「디자인 어촌정책」을 반영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강원도형 동해안 관광포구 조성을 위하여 '08년도 관광어항 모델 설정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와 연계된「어항시설 디자인」개념을 확대하여,「항·포구 및 어촌의 공간 + 해안경관 + 해양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어업활동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해양관광과 휴양,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어촌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앞으로 어항·어촌개발 사업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질 문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접경지역지원법은 2000년 1월 21일 제정 2000년 8월 28일에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었음. 접경지역 종합 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 폐광지역 특별법에 근거한 폐광지역 지원 사업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추진은 부진한 실정임. 그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

답 변

접경지역 사업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나 각종 기업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래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기업 활동을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진행이 되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을 정리를 했음.

그 안에 해당되는 기업 활동은 혜택을 보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혜택을 사실 못 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강원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할 때 접경지역종합계획사업에 포함된 사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일부 있음. 그런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음.

장기계획 내용은 전체 11개 중앙부처가 접경지역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만들 때 어디에 주를 두었나 하면 그간에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고 미개발된 데도 많다 보니까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음.

그것이 행자부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 다른 부처 쉽게 얘기해서 건설, 관광, 산업 이런 데가 쭉 있는데 그런 부처 사업들도 포함시켜서 전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재원지원의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그러다 보니까 기간산업이나 큰 사업들은 속도가 늦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 있는 현안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질 문

설악산외 관광지 케이블카 조성사업 관련 도내 케이블카 현황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 등?

답 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블카나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케이블카 설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환경부의 운영지침도 2004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음.

정부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에 환경 NGO들과의 관계도 전국 자연공원 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가 저희도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있음.

토론회도 우리 강원도에서 함께 개최한 바가 있고 연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환경부장관이 이번 소양강 탁수문제로 인해서 강원도에 방문했을 때도 최근에 직접 건의도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진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우리 강원도가 표방하고 있는 환경정책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이용 이런 측면에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질 문

도내 박물관 운영 관련 박물관 건립 투자현황 및 관리주체 및 설립년도 최근 5년간 수입액 및 관리운영비 지출현황 박물관의 적자운영에 대한 보완 대책?

답 변

운영비가 271억 원이고 수입액이 54억 원으로 적자액이 약 220억이 된다고 한 것은 최근 5년간을 전체로 봤을 때 연간 2006년도만을 가지고 볼 때는 총 적자액이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임.

45억 8,1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국립춘천박물관이 24억 원의 적자를 운영비에서

가져오고 있음. 이것은 경제논리의 적자만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왜냐면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도 있고 문화, 예술 향수에 대한 역사, 전통 이런 것에 대한 도민들의 수혜혜택이 있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립박물관이 1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화진포에 있는 해양박물관은 테마박물관으로서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림.

테마박물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

질 문

속초, 고성, 양양 해변가와 아토피 관련 위 지역 어린이 중에 아토피가 많다는 보도 관련 진상조사 내용?

답 변

지난 2007년 9월 29일자 강원일보에 고성, 속초 등 도내 해안지역에 소아 아토피환자가 많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을 접하고 이렇게 청정한 지역에 아토피환자가 많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공감을 표한 바 있음.

어쨌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더니 위 내용은 단병호 국회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의료기관에 아토피 피부염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단병호 의원실에 동 연구 자료를 요청을 했었음.

그랬더니 그쪽 사무실에서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 통보된 상태고,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보통 농어촌보다 산업화,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고 주요 발병원인은 비누, 세제 등의 피부자극제와 식품알레르기, 집먼지 진드기, 동물 털, 꽃가루 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도 아토피피부염 발생경향이나 주요 유발인자가 고성이나 속초나 이런 해안지역에서 많이 발생 한다는 현재 연구 자료로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봄.

참고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공인된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방법이 없고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너는 아토피환자다 라고 이렇게 진료한 근거만을 가지고 지역 환자 수를, 지역 간 상호 비교를 한 단병호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 저희 도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질 문

노인복지 관련 노인복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 하는가?

답 변

현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한 전국 공통적인 문제점은 노인들에 대한 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으로 인해 복지체감도가 낮고, 서비스의 중복으로 재원의 낭비가 발생되는 점,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해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미흡한 점, 재가서비스 부족 및 여건 미비로 지역사회 정주의식이 없다는 것 등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 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시스템 구축과 건강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생활체육·문화 활동 여건 조성,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상 추진을 위한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의료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노인여가활동 증진 및 사회활동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장기적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중인『저출산, 고령사회대비, 중장기 계획(2008~2020)』결과를 토대로(11월 26일 최종보고회 개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도내 장수지역의 고령친화벨트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도의「생명·건강산업 수도」사업과 연계한 건강·장수연구소, 노인의료·과학연구센터, 한방산업연구센터, 생명과학공원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청정지역으로써 노후에 건강보호나 휴양생활을 하기에 적합하고 관광·스포츠·레저분야에서 외지인 유인 여건이 풍부한 점을 감안, 노인전용 임대

아파트·실버타운 조성 등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와 더불어, 기존의 노인복지시책 방향을 노인이 건강하실 때, 아프실 때, 돌아가셨을 때 등 3단계로 구분, 재정립하여 건강하실 때에는 즐겁고 재미있는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과 노인여가시설을 활용한 취미활동에 대한 시책을 중점개발 추진하고 아프실 때에는 가족부담 없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노인의료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등을 지속 확충하며, 돌아가셨을 때에는 매장, 화장, 수목장 등 본인의 희망대로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장사시설 확충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장수하며 살기 좋은 강원도」이미지의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타 시·도와 차별된 공격적·선점적 대응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농산물 생산 온라인을 농산물 생산조절 능력에 한숨짓는 농민 전국적인 체인망으로 일원화 하여 생산조절 가능한가? 강원감자 광역유통지원사업 관련 국비 2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답 변

전문유통업체 부재로 개별농가 선별, 출하비중이 높아 2~3년 주기의 등락 거듭 ⇒ 적정가격 수취지난, 수매, 선별, 세척, 포장, 판매 등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광역단위 「강원감자유통사업단」설립운영 ⇒ 시장 교섭력 증대

사업개요는 사업기간 : 2008 ~ 2009(2년간), 사업비 90억 원(국비 36, 지방비 27, 자부담 27), 사업자는 감자 주산지농협을 중심으로 별도 법인 설립·운영, 사업내용으로 생산기반(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생력화 장비), 유통기반(감자전용 산지 거점유통센터(APC) 설비 구축), 브랜드관리(브랜드개발용역, 컨설팅, 농가조직화교육, 홍보 등)

추진상황으로는 강원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전략 수립('05년 8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강원감자 대응전략 수립('07.6.13.) - 강원감자 광역유통사업단 중심의 생산·유통전담 방안 마련, 광역유통사업단 설립을 위한 관계관 워크샵 개최('07.6.22), 의견 수렴결과 주산지 농협 대표 전원 유통사업단 참여에 동의, 감자

유통사업단 설립운영 국비예산 추가신청(도 → 농림부, '07.9.11.) ⇒ 농림부에서 감자부문 FTA대책으로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 20억원.

향후계획은 강원감자 광역유통사업단 추진협의회 구성(10월중), 사업단 구성, 법인설립 및 등기·운영방안 확정, 대상 부지 확보, 감자전업농 육성방안 마련 등이고, 감자 전문유통 법인설립 ⇒ 농업회사법인 형태('08년 1월까지), 지방비 확보(도비 + 시·군비) : 10~12월, 향후 전국 감자 주산지 농협 등을 포함한 전국 단위 브랜드로 육성, 비 강원권 거점 산지 유통센타(APC)를 확보하여 민간 중심의 감자 자율 수급 조절 체계 구축 등 계획임.

질 문

산불예방 관련 산불은 예기치 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현황, 대처방안은?

답 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은 11월 1일부터 하고 있고, 산불조심기간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설치기관 : 178개 기관(도, 시·군, 읍·면·동)이며, 산불 홍보대책으로는 산불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산불 공동캠페인」실시, TV동영상, 자막 방송(MBC 4개사, GTB) : 2회 이상/1일, 라디오 스폿 방송(MBC 4개사, TBN) : 3회 이상/1일 등이고,「산불 없는 우리고장」홍보 강화로는 마을앰프 계도방송/ 1일 3회 이상 : 1,962대, 전 행정차량 거리 홍보방송/ 수시 : 426대, 전광판, 입간판 등 다양한 홍보물 설치로 시각적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

산불 예방대책으로 가을철 도 단위 산불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10. 29. 예정) : 55개 기관·단체, 도, 시·군, 군부대, 지방산림청,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등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및 등산로 폐쇄 운영을 11월 1일부터 하고 있고, 산불 취약지 감시인력 배치 : 1일 25,000명/11월 1일부터, 유급감시원 3,000명, 공익 96명, 공무원 4,420명, 리·통장 2,210명, 전문 진화대 648명, 사회단체 14,626명, 공중·지상 간 입체적인 감시·계도활동 전개, 헬기 8대(산림청 2, 임차 6), 무인 감시카메라 105대, 감시탑 408동 등 산불 취약지 주·야간「목 지키기」경계근무

실시 : 580개소, 930명, 동해안지역 군부대 순찰 병행 산불감시활동 전개 : 8군단/1일500명.

조기 진화대책으로「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1단계 : 산불발생 즉시 산불 진화대(940개대, 26,000명) 투입 초기 진화, 2단계 : 최단거리에 배치된 헬기부터 긴급 투입, 3단계 :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 대형 산불 사전예방(방지), 산불 전문 진화대 24시간 비상대기 : 36개대, 648명, 진화헬기 배치 : 36대(임차 6, 산림청 10, 소방 2, 군부대 등 18), 산불위험기 대형헬기 전진배치 : 4대(춘천, 속초, 삼척, 고성),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경우 예비비 긴급 투입, 사전 대처, 산불감시원 증원배치 및 각종 홍보물추가 설치 등 주민 계도 강화함.

최근 5년간 산불피해액 및 복구비 소요현황은 산불피해액 : 30,389백만 원(연평균 6,078백만 원), 복구비 : 47,623백만 원(국비 31,582, 도비 8,855, 시·군비 5,615, 기타 1,571)임.

우리 도에서는 산불예방·감시활동은 물론 산불발생시 초기 진화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형 산불의 Zero화 및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재래시장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 속에 계속투자와 지원, 성과와 향후 계획, 대형 마트에 대처방안?

답 변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도내 40개 재래시장에 대해 1,187억 원 (국 637, 도 136, 시군 345, 자부담 69) 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개선 등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도내 14개 재래시장에 대해 60억원(국 30, 도 8, 시군 14, 자부담 8)을 투자하여 특산품판매장, 상인교육장, 고객쉼터 등의 경영현대화를 추진하였음.

금까지 투자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측정과 평가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7일 중소기업청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재래시장 정책성과자료』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을 마친 재래시장 매출액이 7.6%가량 증가(미개선시장은 15.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04년 대비 '05년 도내 시장당 1일 평균매출액이 2%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재래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 증가와 빈 점포 발생율 감소 등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2008년에도 도내 18개 재래시장에 166억 원(국 100, 도 28, 시군 29, 자부담 9)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시점인 2016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특히, 우리 도는 2009년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에 경영혁신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에 17개 특성화시장을 시범선정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하반기까지 특성화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임.

향후 우리도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의 추진방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도내 재래시장별 특화자산의 집중육성을 위해 관광시장의 적극 육성, 대표상품 개발, 시장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고, 공동판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재래시장 광역공동상품권 유통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심지 생활권시장 내 대표상품 공동판매장 설치를 통한 재래시장간 유통네트워크를 구축 추진해 나가면서, 재래시장의 문화·교육공간화를 위해 고객쉼터조성, 이벤트사업 지원, 초등학생 체험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대형마트 대처방안으로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난 '96년 WTO협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출점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유일한 제한규정이『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시설면적의 일부제한 및 환경·교통영향 평가 실시 등에 불과하여 대형마트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18일 유통업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대형마트 점장 및 재래시장 대표, 유관기관과 관계 전문가 2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간담회 개최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점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상생협의회 구성, 대형마트 내 지역생산품 우선 판매 등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재래시장 등 영세점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에도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

따라서, 도에서는 현실성이 적은 직접적인 규제방안의 모색보다는 간담회 개최결과와 대형마트 규제법안의 추후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미 구성('05.6월)되어 있는『강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보강대하여 도차원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대형마트 출점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사전참여, 영업시간 또는 일부품목 제한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림.

나) 교육행정

질 문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관련, 세계 100위 안에 속한 대학현황과 우리대학의 수준(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강원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낙후된 한국의 대학에 목숨 걸고 있는 우리의 정서 탈피방안, 비 입시 과목인 음악, 도덕, 체육 특별활동 등에 대한 운영실태,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재(학교기피)에 대한 실정과 대책?

답 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중·고등학교 도덕, 음악, 미술, 체육, 특별활동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과목 시간 수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

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을 중학교 연간 136시간, 고1 204시간(12단위)을 신설함으로써 음악, 도덕, 체육, 특활시간외 다른 과목도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인성교육은 위 교과 외에도 창의적 재량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개하고 있음.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운영은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교과군 별로 과목이 조화롭게 선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각 교과 군별로 '택1'하도록 규정함.

특히, 예·체능교과군의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우리교육청이 유일하게 '택 2' 규정을 두어 음·미·체 교육을 통한 정서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또한, 학교의 여건과 학생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성, 개별성, 인간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도록 재량활동, 특별활동, 각종 행사활동 등을 조화롭게 전개하고 있음.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 교과 교육 및 각종 행사활동의 조화로운 실천을 통하여 획일화된 지식 위주 교육을 탈피하여 바람직한 전인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의 교육부재(학교기피)에 대한 실정과 대책은 현재 학업을 포기한 학생 수는: 1,016명 (2006년도)이고, 학업 포기 원인 분석을 보면 가정환경 25.9%, 유학 및 이민 23.6%, 비행 및 장기결석 18.4%, 학습 및 학교부적응 16.1%의 순임. 대책 추진 내용으로는 문제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기적 실시,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상담으로 학교기피현상 해소 하고, 상담전문가 (배움터지킴이 20명, 상담자원봉사자 18명, 사회복지사 6명, 전문상담교사 32명 보호관찰 멘토링 교사 8명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286명)를 각급 학교에 배치.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 상담활동 및 각급 학교에 상담전문가 배치, 대안교실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과 우리교육청 특색사업인 "제자사랑 sweet school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학생들에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 기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3) 홍건표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규정에 없는 기구와 정원 운영 관련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의 규정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는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법적 근거는?

답 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운영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2007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에 따라, ①「국」단위는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 수(9국) 운영

②「과」단위는 자치단체 자율 설치, ③「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 자율 운영(단, 직급별 분포비율 준수)함.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는 도 조직과 사무분장 규정상 9개국, 1개 출장소(동출), 15개 직속기관(소방, 교육원 등), 15개 사업소임.

조례에 없는 기구와 정원 운영 실태로「과」단위는 조례가 아닌「규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 등을 위해「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편제된「과」단위 기구를 활용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정책관」등은 인사상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현재, 도에서 운영되는 T/F조직 운영결과 ① 특별한 행정수요 발생 시 신속한 대처, ② 대국(9개국)체제로 운영됨에 따른 업무 통할문제 극복, ③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의 조정관리 능력제고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질 문

도암댐 문제 해결관련 2005년 12월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에서 댐 문제 최종 결론이 난 이후 2년이 다되도록 착수는 고사하고 필요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것

은 한수원과 관계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해결할 노력과 의지가 부족함.

답 변

도암댐 문제는 1991년 발전용으로 댐 건설 이후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및 홍수 피해 주장 등 주민들의 댐 폐쇄 요구('01년 3월 발전 중단), 2002년 이후 산자부 주관 4차례 중재회의가 결렬됨.

2003년 12월 도에서는 국무조정실에 조정요청, 2004년 7월~2005년 7월 공동용역 시행(도, 한수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년 12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댐의 홍수조절 사용 및 수질개선조치 시행 최종결정.

그간 도에서는 댐 상류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댐 상류 흙탕물저감사업에 '01~'07년까지 30억원 투자('08 : 30억원), 도암댐 상류지역을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 ⇒국비 우선지원, 농약·비료사용량 저감 권고, 휴경 시 손실보상(국비 등), 고랭지 밭 비점오염저감사업 연구용역 : '07.8.~'08.6.(국비 1억 원)⇒ 총 소요사업비 1,000억 원 추정(빗물우회수로, 식생대 조성 등), 홍수조절용으로 사용을 위한 호소 내 수질개선 추진, 관련 시·군 및 전문가 자문 및 협의('06년 10월~'07년 4월) 등 추진을 하고 '07년 11월초 3차 고위급 T/F회의에서 댐 방류수의 구체적 처리방안과 비용문제를 논의함.

앞으로 도에서는 도암댐 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결정대로 수질개선 및 방류수 처리방안이 조속히 확정·시행 되고,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도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질 문

지방채 발행계획 의회 의결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218호의 규정은 지방채 발행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는 담당직원의 구두답변과 공식 문서로 회신도 있었지만 지방채 발행계획의 의회 의결 절차를 집행부 임의로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답 변

지방채발행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시기하고 지방채발행 규모 이런 것을 잘 맞추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구체적 절차가 없는데 내무부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내무부 예규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동시에 하고 있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시기, 규모가 거의 10월 말 정도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상임위별로 충분히 지방채에 관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의상 예산제출 시에 지방채 규모나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

질 문

강원도의 보증채무 관련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발행한 공사채는 모두 얼마이며 강원도에서 보증을 하였는지? 보증을 하였다면 의회의 의결은 언제 받았는지?

답 변

보증한 것은 없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승인을 받는데 100억 미만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100억 이상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은 한 150억 되고 나머지 부분은 100억 이상이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채를 보증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음.

그래서 도에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가 채무보증을 하지는 않았음.

질 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459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 별표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수는 3,437명으로 22명이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2007. 6. 8. 일부개정 조례 제3184호)

답 변

먼저, 조례 제2조의 정원 총수 3,459명과 제3조 별표에서의 정원 총수 3,437명에 대한 22명의 차이는, 동계올림픽 유치단 한시정원 22명이 '07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축된 정원임.

◇ 22명 : 3급 1명, 4급 2명, 5급 6명, 6급 6명, 7급 5명, 기능 2명

조례상 제2조와 제3조 별표의 총수가 다른 사유는, 7월 31일자로 감축된 정원 조례를 조정 입력하는 과정에서 첨부물만 수정하고, 법제관리 시스템 불안정으로 본문은 수정하지 못함. → '07년 10월 19일 수정 완료

참고로, 법제관리 시스템의 자치법규 수정 절차는, 법제부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동 시스템에 로그인 하고, 조례 등의 공포 일정에 맞추어 수정하게 되며, 현재 시스템은 도 홈페이지/자치법규 매뉴얼에 연동 운영되고 있음.

질 문

강원도의 공무원 중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은?

도 본청 11개 실·국·원의 정원과 현원은?

답 변

2007년 10월 20일 현재 도의 총 정원은 3,437명, 현원은 3,446명이며, 소방직을 제외한 정원은 1,837명이고 현원은 1,846명으로 9명이 과원되었고 과원발생 이유는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한시정원 감축(22명, 07. 7. 31.), 동계유치위 파견 별도정원 감축(11명, 07. 7. 31.) 등에 따른것으로, 정원증원 및 퇴직 등 자연감소 방식으로 금년 말까지 해소 가능함.

도 본청 9실·국 41실·과의 정원은 1,012명이나 현원은 1,064명으로 정원대비 52명 과원으로 이를 직류별로 나눠보면 일반직 40명, 기능직 12명임.

본청에 정원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한 이유는 법령제정에 따른 신규사무발생, 도차원의 새로운 시책추진 등 각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임.

실·국별 주요현안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 남북교류협력, 인구늘리기 등

특정현안 추진, 자치행정국 : 국제스포츠위원회 등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산업경제국 : 국내외 기업유치,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방재국 : 국책사업 확보 및 도민 생활기반 조성 등 향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정원범위 이내에서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 문

강원도 행정기구 중 설악수련원, 잼버리수련장, 중도관리사무소, 강원도자연학습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기 전 이들 6개 기구의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었는지? 민간위탁 후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얼마나 줄였으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관리조례는 언제 개정하였는지?

답 변

민간위탁 전 공무원 정원은 53명으로, 잼버리수련장 19, 자연학습원 14, 설악수련원 11, 중도관리사무소 10명임.

감축된 정원과 기구·정원조례 개정시기에 대하여, 감축된 정원은 (상기 언급) 4개 시설 53명이며, 기구·정원조례 개정 시기는 잼버리수련장 '97년 5월 17일(조직개편), 자연학습원 '98년 6월 30일, 설악수련원 '99년 9월 9일, 중도관리사무소 2000년 8월 1일임.

질 문

2006년말 지방세 미징수액은 얼마이며 결손 처분액은 얼마인지? 결손처분을 소홀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답 변

2006년 말 지방세 미징수액은 총 1,376억 원으로 도세가 535억 원, 시군세가 842억 원임. 내역별로는 과년도에서 이월된 체납누적분이 746억 원이고, 과세규모 증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증가분이 630억 원임.

도 차원에서는 체납액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징수포상금제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8월까지 172명에게 57백만 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전년 동기 대비 26억 원(5.4%)의 획기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확대 운영하면서 재산·예금압류 및 공매처분, 행정규제 강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2006년 말 결손처분액은 총 76억 원으로 도세가 22억 원, 시군세가 54억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율을 최근 5년간 비교해 볼 때, 전국평균이 2%인 반면, 우리 도는 1.18%로 훨씬 낮은 실정임.

결손처분은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 될 때(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부족한 금액), ②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압류재산 중 전세권·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③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 ④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 등 법적요건이 충족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재산유무를 조회(연간 20,000건)하여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결손처분을 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연 2회 금융재산 조회(연간 2,700건)를 병행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계속하여 전산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도록 해 나가고 있음.

결손처분을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체납액이 늘어나면 행자부의 교부세 배분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고, 또한 행정낭비로 이어 질 수도 있으므로, 압류 후순위, 추적불가 차량 등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엄격히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1985년 8월 29일 동력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시행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문서에 의해 환경에 미칠 악영향 저감방안으로 설치한 자연환경보전과 공해방지 시설 현황에 대하여

1986년 9월 17일 평창군수가 하천댐 공작물 설치 신고를 수리할 때 붙인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부관 내용은 무엇이며 부관대로 이행되었는지,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관련?

답 변

도암댐 건설당시 동력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댐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 한국전력공사 강릉수력건설사무소는 수질오염 및 부영양화 현상 등의 저감을 위한 저감보를 '90년 12월 2개소, '91년 6월에 1개소 등 3개소를 도암댐 저수지 상류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아울러 평창군이 공작물설치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86년 9월 평창군이 신고수리 한 하천댐 공작물설치 신고는 한국전력이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사전 신고한 사항으로서, 관련부서 및 평창군에 확인한 바, 동 공작물설치신고는 신고사항이므로 평창군에서 별도의 부관을 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댐을 비롯한 전원설비에 대한 준공검사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림.

질 문

2001년 3월부터 발전방류를 중단하고 전력생산을 하지 않으므로 전력생산을 위한 하천댐 공작물 설치목적이 실효되거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허가 취소하고 댐 철거명령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답 변

도암댐이 전력생산이 중단되었으므로 공작물 설치목적이 실효되어 댐 철거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암댐은「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동력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85. 8. 29.)을 받아 추진된 전원사업임.

전원설비인 댐 및 전기시설 등은 전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 및 사업계획승인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전원사업의 변경이나 폐지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하천법 등에 의거 처분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도암댐 갈등문제와 관련 '05년 12월 국정현안 정책조정 회의에서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수질개선사업을 하되 일정한 수질개선이 되면 발전재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최종결정하였기 때문에 철거에 대하여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됨.

그동안 도는 정부 결정 사항인 홍수조절용사용 조기이행을 위해 산자부 및 한수원과 이의 이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07년 10월 제2차 고위급 T/F회의에서 도에서 제시한 L형 취수관의 검증용역 결과 남한강 측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공식적 확인하였고, '07년 11월초 3차 고위급 T/F회의에서 댐 방류수의 구체적 처리방안과 비용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림.

질 문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탐방기반시설의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에 의한 생태관광 활성화 지구별 기본계획의 1단계 사업의 지구별 사업별 추진 현황?

답 변

동강 식물생태관 조성(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모평 지역)으로 동강문화교육 전시지구 : 동강문화교육전시관(2,400㎡), 주차장(1,400㎡), 휴게쉼터(800㎡) 등, 생태숲 지구 : 생태계류원(3,000㎡), 초화류원(1,300㎡) 등이며, 현재실적은 자문위원회 2회, 의원간담회 1회, 용역보고회 3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05년 8월, · 식물생태관, 판매소, 수목원, 계류원, 자생식물원, 광장 등 토목공사 발주 및 착공 : '06년 12월(공정율 30%). 향후계획은 '09년 12월까지 건축, 통신, 소방, 조경 사업 계속 추진할 계획임.

동강 전망 및 생태정보센터 조성(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뒷덕 지역)은 안내 및 야생화관찰지구 : 야생화길 조성(9,500㎡), 안내소(300㎡), 진입로(10,400㎡) 등, 전

망/생태정보센터 지구 : 전망/생태정보센터(3,200㎡), 휴게광장 등, 휴양시설지구 : 주제정원(3,200㎡), 피크닉장(3,600㎡) 등이고, 현재실적은 자문위원회 2회, 의원간담회 1회, 용역보고회 3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전망대, 안내소, 판매소, 주제정원, 피크닉장, 야생화길 등 토목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함 : '06년 12월

사업 지연사유는 사업부지내 보안림 존재로 공사중지, 산림청 보안림 지정협의 및 법률개정 의원발의 건의를 함 : '07년 7월

향후계획은 보안림 해제 후 토목공사 지속추진('10년 12월 완공예정)계획임.

동강생태공원 조성(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목골지역)은 중심시설지구 : 생태정보교육관(3,700㎡), 다양성센터(2,300㎡), 동강광장(2,500㎡), 동강생태관찰원지구 : 관찰로(18,000㎡), 야생초화원(2,500㎡)등, 곤충생태원 지구 : 나비곤충생태관(3,300㎡), 나비생태원(4,700㎡)등임.

현재실적은 자문위원회 1회, 용역보고회 2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함('07년 6일). 사업지연사유는 문화재시굴 및 실시설계 지연이 됨. 향후계획은 토목공사(부지조성) 착공 : '07년 11월중, '10년 12월 완공예정임.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조성(평창군 미탄면 마하지역)은 민물고기생태관 지구 : 민물고기생태관(2,200㎡), 어종연구시설(4,500㎡), 휴게광장(640㎡) 등, 자연하천학습장 지구 : 하천생태체험장(5,300㎡), 주차장(1,300㎡)등, 생태체험마을 지구 : 마을광장(700㎡), 나루쉼터(2,100㎡), 주차장(2,000㎡) 등이고 현재실적으로 자문회의 3회, 실시설계 공모 2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함('05년 2월). 향후계획은 '09년 12월 완공예정이고 이외 단계별 관련사업 진행사항은 통제소(안내소) 4개소를 완료함.

질 문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이나 개수사업 우선순위는 교통량,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서에 의하면 2~6년이나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업장이 9개 노선에 75Km정도인데 확인결과 시·군과 시·군을 연결하는 도내 기간교통망으로서의 지방도라기보다는 읍·면·동이나 농어촌도로로 관리해야 될 정도의 도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 지방도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답 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사업 25개소(터널화10, 확포장9, 설계3, 올림픽도로3) 대부분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5호로 폐지된 “지방양여금법”시행 시 대부분 시작된 사업들임.

지방양여금으로 미확장,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리도 확포장사업”과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터널화, 교량화, 재포장 사업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해 왔음.

사업 선정 시에는 시행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계획 시 경제성, 효율성, 주민수혜도, 호응도, 사업추진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선순위 결정을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왔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그 동안 추진하여 오던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 지방비로 사업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확보할 수 없는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에 따른 것으로, 산과 령(고개) 그리고 큰 강이 많은 우리 도는 터널화, 교량화 사업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음.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총 9개 사업 75km가 있으며 함백~증산을 제외하고 모두 터널화 사업임. 읍·면·동이나 농어촌도로로 추진되야 할 사업은 함백~증산은 당초 탄광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탄광지역 개발 사업이 종결되어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당초 계획인 15km에서 8.3km로 자미원까지 만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량이나 지역간 연결성을 감안하여 본다면 투자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군도 2호선이 연결되는 자미원까지만 투자할 계획임.

지방도 사업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백~증산과 같이 지방도이면서도 다른 사업분야(탄광지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 등)에서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음.

앞으로의 대책은 장기화된 사업 해소대책으로 신규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지방도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

규사업 결정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교통량, 지역개발효과, 균형발전측면 등을 지금 보다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문

하천댐 공작물구조 변경신고 처리관련 1995년 5월 이후 댐의 상시 방류구와 가 배수로를 폐쇄시켜 수질오염 물질이 적체되게 되었는데 평창군에서 구조물 변경 허가 경위에 대하여, 또 하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조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답 변

댐 상시방류구와 가배수로 폐쇄에 대한 구조물 변경허가 경위에 대하여, 도암댐건설은 종전「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거, 당시 동력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국전력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85. 8. 29.),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댐 하단부 가배수로 및 상시 방류구 폐쇄는 '95년 6월 도암댐 오폐수배출문제로 당시 정선군과 정선지역 주민대책위 등이 원천봉쇄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전력이 기존 가배수로 및 방류구를 폐쇄(용접봉인)하게 된 것이며, 하천유지유량을 위한 상시 방류구는 댐 저수위선에 이설·운영되고 있으며, 동 사안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의거 처리할 사항으로서, 하천법에 의한 허가사항은 아님.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고시토록 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도암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댐 하류부의 하천유지를 위한 유지유량을 산정하여, 건설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댐 하류부 유지용수(0.22㎥/sec, 19천㎥/일)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질 문

도암댐 문제 관련 감사실시 관련 1986년 이후 강원도에서 평창군에 대한 종합 또는 수시감사는 몇 회나 실시하였습니까?

강원도지사가 위임한 사무인 지방2급 하천의 공작물인 도암댐에 관한 민원이 1991년 최초로 발생하여 1995년에는 상수도 오염으로 인한 집단 민원해결에 76억 원, 2001년에는 남대천 하구 흙탕물 피해 보상에 43억 원이 지급되는 등 17여 년동안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도 감사관실에서는 위임사무인 지방2급 하천의 관리관청인 평창군에 대하여 감사하여 시공사의 위법부당행위와 감독청의 업무태만 부분을 적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 변

도에서 평창군을 비롯하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행정감사규정, 강원도 행정감사규칙 등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관하여 2년 주기로, 부분감사는 특정한 운영사항이나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사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도의 평창군에 대한 감사실시 횟수에 대해서는 1986년 이후 이미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관련문서가 폐기되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문서보존기간 : 종합감사 - 10년, 직무조사 - 5년), 감사주기 등을 감안할 경우 종합감사는 11회 정도, 부분감사로서는 연 4~5회 정도의 공직감찰과 사안발생에 따라 민원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다음은 도암댐 문제와 관련한 강원도의 평창군에 대한 감사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1년 1월 강릉수력발전소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도암댐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모두 1건으로 확인되었음.

감사종류별로는 종합감사 실적은 없었으며 민원제기에 따라 1건의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민원조사 경위는 무기명으로 제기된 '평창군 소재 도암댐 준설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태만 고발' 민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와 도 감사관실 그리고 평창군 건설과에 각각 제출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2006년 5월 19일 감사원의 민원조사 위탁에 따라 우리 도에서 민원조사를 실시하였음.

민원요지는 도암댐 송천 하상준설사업을 평창군 관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입찰로 처리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허가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점과 모래준설 허가량보다 많은 량의 모래가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으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음.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6년 6월 5일~6월 8일(4일간) 조사반 2명을 현지 파견하여 민원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 바, 송천(지방2급)의 골재채취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상정비 준설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계약절차 없이 사업대행업체를 임의 선정하였는가 하면 허가사항과 다르게 대행업체가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무단 반출한 행위를 확인하여 하천의 골재를 불법채취 및 무단 반출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로 하여금 사법기관에 고발 등 의법조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문책요구(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 3) 하였음.

끝으로, 강원도에서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 평창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음.

도암댐 건설은 1980년대에「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전원개발특례법과 하천법에 의하여 1986년 9월 17일 하천 댐 공작물 설치신고 건에 대하여 신고 수리한 바 있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환경청과의 협의사항인 도암댐 상류의 수질오염 및 부영양화 현상 등의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류지 상류에 저감보(구조물)를 설치하고자 하는 하천공작물 신축허가에 대해서 허가처분 및 준공인가 처리한 바 있음.

따라서 도암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평창군의 사무처리가 있었다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암댐 문제는 수력발전에 관한 국책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강원도에서 댐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현재 산자부,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위급으로 구성된 도암댐 문제 관련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동 중에 있는 만큼 감사를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협의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질 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시책관련 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워 공공시설물 등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주거 및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환경의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지속적인 실태 점검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답 변

도에서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장애인편의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보완 실적은 2004년 기준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법정 편의시설 설치대상 5,161개 시설 19,580개소를 100% 정비·보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이후의 신축건축물 493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90.5%로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음.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편의시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314가구에 949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싱크대 턱 낮추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66가구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무장애공간 조성」동참 캠페인 전개시책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 1,800개소에 대하여 내집앞 턱 없애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범도민적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1개소로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 홍보, 실태조사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도면검토 등의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한 시설물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시·군당 월 평균 5건으로써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과 매뉴얼 개발, 기술자문 및 협의 등 지원수요가 증가되어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면 긍정적으로 검토 할 계획임을 말씀드림.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미비한 점은 즉각 개선하

는 등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마을단위 경로당 운영관련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도내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경로당별 연간 유지관리비 지원규모는 얼마이고, 2007년도 강원도 전체 예산은?

답 변

2007년 9월말 현재, 도내 경로당은 총 2,576개소로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군에서 재정여건과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별 연간 1,220천원에서 2,73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총 운영비(난방비 포함) 지원액은 4,241백만 원임(도비 138백만 원)

금년도에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는 모두 4개 사업에 7,029백만 원으로써(도비 777, 시·군비 6,252), 경로당 운영지원(난방비+운영비)에 4,241백만 원, 경로당 활성화(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등)에 196백만 원, 경로당 신·증축 지원에 2,511백만 원을 모범경로당 컴퓨터지원(시군별 3개소)에 81백만 원을 지원함.

2008년부터는 경로당을 실질적인 지역노인의 중심시설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시·군별 1명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영세경로당 260개소에 주·부식비를 지원(개소 당 1,200천 원)하며, 노후 경로당 10개소에 대해 신·증축비 지원(개소 당 1억 원), 도내 전체 경로당에 대한 노년신문 구독비 지원(년 5만원), 경로당내 예절교실 운영 지원(시군별 모범경로당 1개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사업과 PC지원 사업 등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몽골 튜브도 자매결연 교류관련 몽골 튜브도와 자매결연은 언제 체결하였으며 그간의 교류사업 추진실적,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은 의회의 의결 사항인데(지방자치법 제35조 10항) 의결은 언제 받았으며 의결 당시 교류목적과 교류사업

내용은(문서에 명시된 사업)?

답 변

몽골 튜브도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강원도가 주창하여 창설된 동북아 지사·성장회의의 회원이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1999년 10월 강원도 속초시에서 열린 「제6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에 처음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 2000년 11월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된 「제7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에 정회원으로 가입, 이어 2003년 11월 6일 강원도와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로 이어져 왔음.

그간의 교류사업 추진실적으로 양 도지사간 업무협의 상호방문 (방문 : 2회, 영접 : 2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상호 참가 (9회 : 튜브도, 10회 : 강원도), 행정·관광·축산·농업분야 관계공무원간 상호교류(영입 : 15회 27명, 파견 : 5회 11명),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 지원사업 : '04~'06년(3년간), 강릉 국제청소년 예술축전 참가 (영입 : 4회 61명),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심포지엄 개최 (영입 : 3회 12명), 동북아 국제교류 대학생 포럼 (영입 : 4회 16명), 기타 「몽골유목문화·관광체험장」조성 강원도 대표단 파견과 「EATOF 유스캠프」튜브도 학생 참가 등 양 지방정부간 분야별 활발한 교류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2007년 신규 지원 사업으로 '06년 12월 튜브도지사가 직접 지원 요청한 튜브도 준모드시 「강원도길 조성」과 「종합운동장 대수선」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써, 지원타당성 여부를 검토·분석한 후 '07년 3월 13일 사전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튜브도의 현 경제상황, 사업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난 5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지원 사업비 500백만 원 전액을 계상하였음.

이후 6월에 지원 사업 대상지의 현황, 공사여건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6명의 도 대표단을 구성(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2, 도로교통과장, 국제협력실장, 담당자, 통역)하여 방문함. 1차 방문 이후 8월에 토목, 건축 등 실무공무원단을 구성하여 튜브도 관계 공무원들과의 사업추진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튜브도정부와의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 및 완공을 위한 실무지원을 시작함.

총 지원 사업비 5억 원 중 지난 9월 3일자로 선급금 150백만 원, 10월 18일자로 제1회 기성금 200백만 원 등 총 350백만 원을 각각 예산편성 과목에 의거 해외자본이전 하였으며, 나머지 150백만 원은 사업의 준공상황에 따라 이전할 계획임.

현재까지 각 사업별 공정율에 대해서는 현지 기후와 사업여건변수에 따른 튜브도정부 명의의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정식 서한문을 요청할 계획 임.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은 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지방자치법 제35조 10항) 의결은 언제 받았으며 의결 당시 교류목적과 교류사업 내용은,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의 의회의결 사항 관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5(교류협력의 범위)의 규정의 “교류협력”이라 함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매결연 체결(‘03. 11. 6.)전인 2003년 3월 27일 제138회 강원도의회 2차 본회의에「강원도와 몽골중앙도간의 자매결연협정 체결동의안」을 상정, 원안가결로 의결을 받아 동년 4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음.

의결당시 교류목적과 교류사업 내용은 의결당시 협정서 문안에 명시된 교류목적은「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체결(1999. 7. 10.)이래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와 넓어진 관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 간의 관계를 공식적인 자매관계로 한 차원 높이고, 양 지역은 물론 양국 관계발전에도 기여하는데 대해 상호 공감함을 전제하고, 향후 농업,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본 협정의 정신과 목표를 구체화하여 실현시키기 위한 매년 실무책임자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음.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몽골 튜브도와의 자매결연 체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교류실적 등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렸음.

앞으로도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중·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

국제교류 중심거점지역으로의 기반구축"과 "교류 다변화" 시책 사업의 실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림.

나) 교육행정

질 문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금 지급관련 금년도 (3. 20. 제173회) 제1차 질문시 소규모 통폐합 학교지원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하고 국비에서 원리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시 재원조치 내용은?

답 변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지난 '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저 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전망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소규모로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0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음.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폐합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이 계획에 의해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본교폐지·통합 1교당 10억 원, 분교장폐지 1교당 3억 원, 분교장개편 1교당 2천만 원을 통학비와 교재교구구입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임.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4월 4일 본교폐지 3교, 분교장폐지 40교, 분교장개편 29교, 학교통합 4교 등 79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폐합 4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3월 1일 본교 1교와 분교장 3교를 폐지하고 본교 1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한데 이어 2007년 3월 1일에는 본교 1교와 분교장 10교를 폐지하고 본교 3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였음.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2006년도분이 19억 2천만 원, 2007년도분이 40억 6천만 원으로 모두 59억 8천만 원이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폐교대상 지원금에 대

한 방침은 2006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중 현금으로 교부하고, 2007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집행하고 추후 원리금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급한 통학버스 구입비 4억 5천만 원은 우선 자체재원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재교구구입비와 환경개선사업비는 교부금 교부 및 지방채 발행계획 통보 즉시 조치하여 통폐합에 따른 투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질 문

읍·면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관련 인구 2~3천 명 정도의 면소재지에 학교마다 체육관을 건립하였는데 어떤 읍·면 소재지 지역은 학교가 2~3개 학교가 있어도 체육관이 1개소도 건립되지 않고 있어 사업 선정이 순수성·공정성 보다는 특정인들의 영향력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별 체육관 건립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답 변

○ 다목적실(실내체육관) 현황

(2007. 9. 1. 현재)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434 (72)	145	33.4%	164	62	37.8%	115	81	70.4%	7	3	54%	720	291	40.4%

※ 중·고 병설학교의 경우 중학교 24개교는 병설고등학교에, 고등학교 3개교는 병설중학교에 다목적실을 보유하므로 실제 다목적실 보유학교는 291개교이나, 병설학교 공유를 감안하면 318개교(44.2%)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명이상 학교 다목적실(실내체육관) 현황

(2007. 9. 1. 현재)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학교	보유	비율
126	98	77.7%	77	46	59.7%	80	65	70.4%	3	1	42.8%	286	210	73.4%

※ 중·고 병설학교의 경우 중학교 12개교는 병설고등학교에, 고등학교 2개교는 병설중학교에 다목적실을 보유하므로 실제 다목적실 보유학교는 210개교이나, 병설학교 공유를 감안하면 224개교(78.3%)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목적실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우천시 체육활동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시설로써 다목적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08년까지 다목적실 신축은 향후 통폐합을 고려하여 학생수 2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하여 민자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었으나 부지여건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학교가 있음.

따라서, 부지확보 예산이 필요하며,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다목적실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있음.

4) 남경문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하여 재가 진폐 근로자의 처우개선, 요양 진폐 환자에 비해 열악한 재가 진폐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강구?

답 변

요양 진폐환자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폐 요양환자로 판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지원함.

▶ 평균(1인기준, 월) : 290만원(요양진료비 140만원)

※ 요양환자 수 : 전국 3,071명 (도내 1,329명, 43.3%)

재가 진폐 환자에 대하여 동 법률에 의거 진폐 환자로 판정은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 환자로 환자 수는 전국 62,801명(도내 8개 시·군에 3,107명)임.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1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약품 구입비, 예방 접종비 667백만 원을 지원(도 30%, 시·군 70%)하고 있음.

재가 진폐 환자 지원 대책으로 우선 재가 진폐 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함. 따라서 도에서는 재가 진폐 환자의 현황과 생활정도를 파악하여 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질 문

재가 진폐 근로자에 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및 지원 대책은?

답 변

재가 진폐 근로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도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등 기 시행중인 시책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고 있음.

재가 진폐 근로자 중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기 시행중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누락자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음.

재가 진폐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진폐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은 우선적으로 정부(노동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우선, 도 차원에서는 관내 재가 진폐 근로자 현황과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 시행중인(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 장애인수당, 진료비 지원 등) 시책에 누락이 되어 있는 가구는 즉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을 추진.

현재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등 현황을 확인 중에 있음

질 문

재가 진폐 근로자 및 진폐 요양환자에 대하여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 대정부 대책은?

답 변

진폐 재해자를 위한 진폐 합병증 인정, 장애등급 심사, 보험급여기준, 요양 대상환자 결정, 각종 보상·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노동부(도내 5개 노동지청)와 근로복지공단(도내 5개 지사)의 전담업무로써, 정부(노동부)에서도 2001년 9월 「진폐 환자 보호 종합대책(6개항)」을 마련, 언론에 보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부족과, 업무추진 부처 간의 이해부족,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환자

상존 등으로 진폐 재해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전담부서 설치, 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도에서는 2001년부터 진폐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폐 재해자 협회 자활 목공예품 가공사업('01~'07년/ 108백만 원), 재가 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07년/ 10백만 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01~'07년/ 3,107명/ 2,824백만 원)등의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폐협회 활성화를 통한 진폐 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중앙부처(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 재가 진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 촉구해 나가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공립학원 설립에 관하여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골에서도 공부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립학원이 없는 지역을 묶어서 정책적으로 공립학원을 설립할 의지는 없는지?

답 변

도내 학원은 2007년도 6월말 현재 2,420개소로 해마다 계속 증가추세임.

※ '03년(1,516 개소), '04년(2,192 개소), '05년(2,312 개소)
'06년(2,391 개소)

공립학원 설립추진의 문제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률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인의 경우 학원설립이 가능함. 우리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학원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는 없음.

공립학원 미설립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재정으로 지역교육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숙사, 방과후 학교 활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질 문

다목적실 건립과 비정규직 정원에 관하여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특정 학교에 편중되는 이유는?

답 변

다목적실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 우천 시 체육활동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시설로써 다목적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08년까지 다목적실 신축은 향후 통폐합을 고려하여 학생 수 2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하여 민자 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었으나 부지여건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학교가 있음.

따라서 부지확보 예산이 필요하며,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도 다목적실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있음.

참고로 학생 수 200명 미만인 정선정보공고 다목적실 신축 이유 및 200명이 넘는 사북·고한지역 학교 제외 이유로 2005년 대상학교 선정 당시 정선정보공고 학생 수는 202명임.

사북고한 지역은 학교 통폐합 문제 등으로 다목적실 신축 보류

※ 사북초는 2008년도 노후교사 철거로 추진 가능

태백, 정선, 철원지역 중학교에 다목적실이 없는 이유는 정선, 철원지역 중학교는 병설중학교로서 고등학교와 공동 사용함. 태백지역 중학교는 대부분 200명 이하 학교이며, 200명이상 학교인 경우 부지협소로 당초 학교 측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음.

다목적실 신축 지원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을시 대응투자 방식으로 BTL사업으로 추진함. BTL사업 추진 방침은 학생 수 200명 이상 학교 중 신축 여건이 갖춰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 2007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규모 다목적실 확충을 위한 예산소요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정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다목적 교실 신축 추진 목적은 소규모 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활동 및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함이고, 추진 방향은 다목적교실 신축 5개년 계획 수립 : 2008년~2012년(5개년), 사업대상 : 학생 수 50명~ 200명 학교, 소요예산 : 1,063억 원(201교)이며 교육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재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임.

5) 진기엽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알펜시아 조성사업 관련 알펜시아 사업비와 분양율 저조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 변

알펜시아리조트 조성 공사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중임. 알펜시아리조트 3개 지구의 총 공정은 23%로서, 골프빌리지 지구 20%, 리조트빌리지 지구 15%, 동계스포츠 지구 38%이며, 특히 내년 2월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 개최를 앞두고 동계스포츠지구의 바이애슬론경기장은 금년 10월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

분양과 관련하여 오히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기존 상품의 고품격화를 통하여 마케팅 포인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조기분양을 위하여 분양전략을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계획한 분양목표를 달성토록 할 것임.

①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정주형 빌라에서 알파인스타일의 Second Home으로 상품컨셉을 재설정하는 등 마케팅 포인트를 획기적으로 강화

- 전세대 옥외 데크에 자쿠치(야외 월풀욕조) 도입
- Master Bedroom에 Sky View를 위한 천창 및 벽난로 도입
- Master Bedroom에 히노끼탕(일본식 편백나무욕조) 설치
- 재택근무가 가능한 오피스공간 확보

※ 힐사이드빌라 : '07년 8월초 공사중단 → 고객수요에 맞추어 재설계중(미국 BSA사)

• 기본설계(10월중 완료 예정) → 실시설계(11월중) → 공사재개(11월말)

② 분양전략 보완을 위해 차수별 분양제 도입 : 창립회원은 10% 가격할인 및 리조트내의 스키장 및 워터파크 사용권 부여 등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De-Marketing 컨셉 새로도입. 기존의 Mass Marketing과 혼합 기법에서 De-Marketing으로 전면 전환 모델하우스가 설치되는 신설홍보관에 De-Marketing 컨셉 도입.

※ De-Marketing :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아닌 타켓을 정하여 마케팅(Mass Marketing의 반대개념)

분양대행사 확충 : 현재 1개 대행사 ⇒ 3개 대행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간내 목표달성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제도 도입

※ 당초 1개(시대 D&C) ⇒ 추가 2개(랜드코프, 라이온마케팅)

※ 힐사이드빌라 등 분양실적 ⇒ 알펜시아사업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민감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함.

사업비 조달문제에 대하여 작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알펜시아조성사업을 위한 사채 3,500억 원을 발행승인 받았음. 3,500억 원중 현재 3,000억 원은 차입하였으나, 아직 50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채 3,000억 원을 추가 발행받아 사업비조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질 문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도 수탁사업 관련 수탁사업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 변

농정산림분야 위탁 대상(관리・운영)시설로 자연휴양림(사북면 지암리 산5번지) 720ha / 운영인력 8명, 숲속의집(10동), 향토나무방(1동) 등 54개 산림휴양시설, 춘천수렵장(서면 오월리 산46-1외1) 1,140ha / 운영인력 9명, 조수관리사(1동), 휴계시설(1동) 등 31개 휴양 및 부대시설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03년 4월 1일~'07년 12월 31일(협약체결 1차 '03. 3. 26.・2차 '05. 12. 27.)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음.

위탁사유로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경영개선 및 대고객 서비스 증진을 위함이고 위탁기관선정 근거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제6조에 의거 선

정하고 있음.

위탁주요조건은 강원도자연휴양림·춘천수렵장관리조례 준수 위탁운영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지 않고(신규시설 투자비용은 지원),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일부 임대는 사전에 승인 받아야하며(관리 철저), 휴양객 등 안전관리철저 및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부여, 위탁자의 지도·감독과 위탁자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등임.

위탁운영 상황으로 '03년 4월 1일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시설운영에 따른 '06년 매출수입은 '05년과 비교하여 소폭하락 하였으나 '07년도 9월까지는 13% 향상되고 있음.

휴양림은 입장객의 매년 증가추세로 계속 신장될 것으로 사료되나 수렵장은 운영비용 과다 및 이용객이 적어 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운영 활성화 대책으로 휴양·편익시설 보완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강화로 이용객 유치를 확대하고, 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이벤트행사 확대 개최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해 나갈 것임.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위탁사업인 중도관광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 2007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2년간) 위탁운영해오고 있으며 최초 위탁은 2001년 8월 1일임. 위탁업무로 재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운영, 관광객 편의도모 및 안전관리, 입장료, 시설사용료(주차료, 숙박료, 야영료) 및 위탁재산의 임대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임.

운영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객은 2004년 138,983명 이었으나 2006년은 92,62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는 2004년 겨울연가 영향으로 관광객이 특히 많았으며 이후 예년과 같은 수준임.

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적자규모는 148,088천 원이며, '06년 97,132천 원의 적자(최근 3연간 평균 49,362천 원) 발생. 중도관광지는 현재 12명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4명, 상용 일용직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도관광지 운영이 매년 적자가 증가함에도 그동안 입장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사유는 중도관광지 운영·관리와 입장료 징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도선료는 (주)맥도에서 받고 있어 운영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95년 운영초기 도선료 및 입장료는 600원으로 동일하였으나 현재 입장료는

600원에서1,300원으로 인상된 반면 도선료는 600원에서 3,000원으로 500% 인상, 중도관광지 입장료는 1,300원으로 유사 20개 관광지 평균 2,560원에 비해 50% 저렴하나, 매년 (주)맥도의 도선료 인상으로 이용객 입장에서는 매년 요금이 인상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입장료에 도선료 포함시 4,300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약 70% 높아 “소비자 물가정책 심의회” 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11월부터 매장 문화재 시굴 등 관광객 이용이 통제되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인상을 보류하고, 숙박시설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07. 9. 28.)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출증진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으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이용율 제고를 위해 서바이벌게임(에어볼), 가족과 즐기는 오토카, 솟대·장승체험 프로그램, 뗏목체험 프로그램, 메밀단지조성, 꽃길조성, 숙박시설 연중가동으로 숙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고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날 기념행사, 발명의 달 오픈데이, 솟대·장승체험행사, 2006월드컵 응원전 유치(SBS), 춘천막국수축제, 춘천닭갈비축제, 민족극 한마당 행사, 이유라 예술단 공연, 시화전 및 시낭송회 개최(민예총), 야외음악회, 추억의 모닥불 등의 사업을 했으며,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음용수 수질개선, 족구장 전면 보수, 자전거도로 연장공사, 쓰레기함 보수, 민박 옥상방수, 관광지내 안내표찰 정비 등과 수영장 보수, 방갈로 동파방지 공사, 움집보수 및 파고라 보수공사, 음용수 수질개선공사(‘06년), 공원로 보수공사(’06년), 족구장 보수공사(‘06년) 등의 시설정비를 함.

DM 및 인터넷 홍보를 위해 수도권 및 도내 공공기관, 단체·학교법인 등에 이용안내 DM발송 (‘06년 4건 3,657매 / ‘07년 2건 2,800매), 인터넷 포탈사이트 키워드 광고(네이버, 야후, 다음, 엠파스, 네이트, 싸이월드) (‘06년 5회 / ‘07년 4회)를 함.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도내 입영장병 및 환송객 유치를 위해 강원지방병무청과 우대할인 협약 체결(‘07.2.13.), 강원지방병무청과 숙박시설 우대할인 협약체결(30%),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지방병무청 중심으로

민·관·군 상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대학 MT 및 세미나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교와 우대할인 협약체결(강원대학교/'07. 3. 1.), 비수기 평일 이용 할인협약체결로 관광지 활성화 추진, 지역 대학 편의제공을 통한 공사의 지역사회 기여도 증진.

방송사 홍보(MBC, KBS, GTB, GBN 방송등의 협조체계 구축)는 월드컵 길거리 응원전, TV속 세상, 불꽃놀이, 열린아침, 행복한 오후 등 방영함.

단체고객 이용할인을 위한 도선업체 및 입주업체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업장내 식당 및 도선업자 단체고객 20~30% 할인 합의 등임.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최원자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 청년실업 정책에 관하여 2007년 청년실업 사업 및 예산은, 도지사 공약에 명시된 도 실업문제 해결 관련 조례 제정은?

답 변

도의 청년실업대책사업 추진과 관련 최근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기피, 경력직 우선채용 등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고학력화와 이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미스 매치되는 등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임.

우리 도의 경우도 아직까지 제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로 인해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문제는 우리도 뿐만 아닌, 비수도권 전체의 일반적 현상임.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실업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으로 ① 우선, 기업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역점, ② 또한, 청년층 취업 제고를 위

한 직접적인 취업활동 사업 추진 ③ 공급적 측면에서 산업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아울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도의 살림이 넉넉지 못하지만, 금년도에 광역 고용정보망 구축, 청년층 취업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인턴제 등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청년실업대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실업률('07년 9월 현재) 1.6%로 전국 최저수준이며 전국평균 3.0%, 또한 인구감소에도 불구,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임을 말씀 드림.

실업문제해결 관련(실업극복센터설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청년실업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실업극복취업센터 설치운영관련 조례제정을 공약한 바 있음.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센터설치에 관하여는 먼저, 정부의 지역단위고용정책이 노동부산하 고용지원센터(도내 5개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도의 정책 또한, 전담부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시스템상의 중복성과 재정적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궁극적으로는 노동부산하 지역고용지원센터 기능의 지자체 이관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타시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음.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도와 시군을 통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기능을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업극복센터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이와 관련한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토록 하겠음.

질 문

강원도 및 도내 자치단체 민간위탁/외주용역화 추진에 관하여 각종 업무의 민간위탁이 도 및 도내 자치단체에서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업체와 자치단체의 유착, 대시민 서비스 질의 하락, 인상되는 용역비와는 반대로 저하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음. 이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

답 변

최근, 일부 시군에서 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및 외주화 등을 검토·추진하면서 대상시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음을 보고 받은 바 있음. 그러나 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외주화는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문제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 시장·군수 회의 시 민간위탁 등에 대한 자치단체 역할 당부와 외주화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등 관심을 가지고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음.

질 문

2010, 2014, 2018 동계올림픽 관련 유치비용관련 집행내역 공개에 관하여

답 변

2010년의 경우 163억 원 투입, 2014년의 경우는 351억 원 정도 집행. 수입은 각각 국비 30%, 도비 30%, 나머지는 기업후원금임. 2014년의 경우 더 들어간 것은 준비 및 활동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났고, 해외 P/T(8회), 국제대회 참가(40회) 등 유치활동 증가, IOC의 광고허용으로 해외언론 홍보비가 더 들어가고, 유치신청계획서 작성, 컨설턴트 운영 등 조직운영비 증가 등임

유치위원회는 별도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예산 및 결산심의·보고하고, 감사까지 다 받음. 또한 IOC윤리규정에 따라 IOC가 별도 회계법인을 지정해 구체적으로 따져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관련 회계법인에서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IOC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공개 못할 일도 없지만, 세부내역을 다 공개했을 때 상세한 내용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관적 해석을 하고 →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등 그 자체가 국제무대 등 대외적으로 과연 전략적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감사원 감사청구 - IOC의 결산감사절차 등 인정

질 문

강원도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 시행에 관하여 강원도 주택보급률은 126.8%(2005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전세금은 2,573만 원(2005년)으로 전국 평균 5,109만원의 절반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 도단위 중 전·월세 비율이 가장 높음. 도내 심각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답 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법적근거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8조)과 2004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제2조)으로서, 추진배경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안정을 모색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주요내용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방식이고, 민간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일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방식임.

① 우리도의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 9월말현재 도내 매입임대주택은 총 4,737호로서, 공공기관 매입임대(대한주택공사) 113호, 민간매입임대 4,624호임.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5만호의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을 통해 매년 6,500호 정도를 매입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7년까지 160호를 배정받아 현재까지 113호를 매입완료 하였음.

※ 강원도 2007년도 배정 : 80호(매입완료 33호, 매입중 47호)

민간 매입임대는 임대사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평균 1,100호 정도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실정임.

②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매입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매입임대 주택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현재 이율 5.0%, 3년이내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과 취·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등 세재지원 기준 개선 등의 건의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등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강원도 저출산 해결 대책에 대하여 강원도와 18개 시·군 저출산 대책과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

답 변

2006년도 강원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국평균 1.13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2006년 합계출산율은 전년대비 0.8% 증가에 머물러 전국평균 합계출산율 증가율 4%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강원도 저출산 현상이 타 시·도보다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007년도 강원도 저출산 대책 현황은 道와 시·군은 교육청과 함께 총 53개 사업에 94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추가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84개 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 道에서는 광범위한 저출산 대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팀 신설('07. 5. 21일)하고 '강원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구축을 위해 '강원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계획'('08-'20)을 수립중이며('07. 11. 26일 최종보고회 예정), 그 일환으로 (가칭) 「강원도 저출산 대책 조례안」을 검토 중임.

官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民과 官이 함께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다자녀가족 우대카드인 반비다복카드 도입을 추진 중이며('07.8.7일 이후 지속),

주요 저출산 대책인 출산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시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5개 사업(8개 세부사업)을 실시중이며, 道 차원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육아용품 30만원 지원, 산전 검진비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실시중임(600백만 원).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유 수유 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도비 10백만 원, 민자 5백만 원) 시군 차원에서 정선, 화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출산관련 특수시책을 추진 중이며, 총 2,68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08년도에는 산전 검진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을 인구대체수준인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2,950백만 원의 예산을 수립중이며(도비 885, 시·군비 2,065),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도비 20백만원).

보육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시책으로 교육청과 함께 31개 사업 총 87,55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道 차원에서 특수시책 추진을 위해 4,47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시군 차원에서 평창, 인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보육관련 특수시책을 추진 중이며, 총 95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2008년도에는 누구나 혜택 받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건강검진비 지급 2,324백만 원(도비 697, 시·군비 1,627), 보육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6개 사업에 3,349백만 원(도비 1,175, 시·군비 2,174),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인증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2,167백만 원(도비 671, 시·군비 1,496)을 확보할 계획임.

2007년도 강원도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으로 道 출산지원 특수시책인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이 셋째아 이상 임신·출산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낮아 수혜대상을 둘째아 이상 임신·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자 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07년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08년 6개소를 추가로 확충해나갈 예정임. 더불어 평가인증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 및 사이버가정학습 내실

화를 위해 9개 사업 4,710백만 원을 투입하였음.

道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내실화, 위스타트 마을 조성,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공부방 확충·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총 4,461백만 원을 투입하였음. 저출산의 원인은 열악한 출산·보육여건 및 사교육비 부담과 함께 경기침체에도 있는 만큼 道에서는 3각 테크노 2단계 전략을 수립하는 등 경제살리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가족 친화적 사회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사회단체를 망라한 '강원도 출산·양육 후원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07. 10. 18일), 명실상부한 民官 네트워크로 자리 잡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07년 11월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 사회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본 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한 각 사회주체의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에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대책이 포함되도록 권유해 나갈 예정임.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공기관이 먼저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저출산 대책 관련 강연회 개최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더불어 가족 친화적 사회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프로그램 등에 사회복지기금 120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임.

보다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여러 기관·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저출산 대응조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구성·운용할 예정이며, 원주시가 저출산고령화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에 대응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임.

질 문

강원도 노인 복지에 관하여 국가적으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강원도는 이미 노인층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그러나 다수의 노인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 제도 외에 도내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강원도의 독자적인 정책을 요구함.

답 변

도내 노인인구는 2007년 6월말 기준 약 197천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전국평균 9.3%),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비율이 약 18%로 전국평균 14%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감안하면, 도내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노후생계안정 지원차원에서 2007년도까지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현금 급여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였고, 2008년부터는 전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도내 전체노인의 65% 가량에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20,000원서 83,640원까지 현금이 지급될 계획임.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개선차원에서는 보다 많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만,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초노령연금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비율이 전체 강원도 예산의 19.9%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현금급여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당분간은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현금급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 보다는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창출 기관) 지정확대 등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확충, 노인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시설 조성, 지역노인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노인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후, 기초노령연금 운영실태(소요예산 증액추이 등)와 정부의 노인시책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생계보전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강원도 농업 대책에 대해 한미 FTA에 따른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도 농업 종합계획인 <농업 농촌 희망찾기 10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이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에 관하여

답 변

한·미FTA 협정 타결 등 개방화에 따른 우리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인「농업·농촌 희망 찾기 10개년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라, 개방을 통한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 농산물시장의 관세철폐와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2006년 2월 한·미 양국 간 FTA협상 공식선언 이후 협상이 급진전되어 금년 7월 2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강원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협상결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와 함께, 21세기 지속가능한 강원 농림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농업·농촌 희망 찾기 10개년 프로젝트」는 농산물 수입개방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6개 민감품목에 대해 지난해부터 도 자체적으로 영향분석과 대응방향을 강구하였고, 농업계 관계자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강원농업 경쟁력제고대책」연구용역 결과 등 우리도가 준비해온 대응대책과 농림부의 보완대책을 종합하여 수립한 계획임.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의 주요 성장·발전지표 설정,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경쟁력 저하품목 ⇨ 규모축소, 작목전환 유도, 대체작목 개발, 경쟁력 강화품목 ⇨ 규모화, 전업화, 시설현대화, 고품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농업소득 견인「5大 신성장 동력」집중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선진도 실현⇨전국 최고화/'17까지 친환경농업비율 29%, 농촌관광 활성화⇨전국 최고수준 유지 /

‘17까지 3,800만 명 유치, 공격적 수출농업 확대⇨전국 상위권 유지 / ‘17까지 6억불 달성, 산림농업 소득 창출⇨전국「최고·최대」/ ‘17까지 4,900ha조성, 향토가공 산업 집중육성⇨농외소득 창출견인 / ‘17까지 80개소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프로젝트 실천을 위해 ‘08~’17년까지 11대 부문, 20개 분야, 314개 사업에 6조 6,547억 원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48%, 도비 및 시·군비 33%, 융자·자부담 29% 차지함.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대책의 실효성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안은 대정부 건의.

예산확보의 실현성과 관련해서 ‘08년 도비 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49%인 425억 원이고, 자체사업을 위한 도비 소요액은 444억 원(51%)이나, 부담 가능액은 289억 원으로 155억 원이 부족하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후순위 사업 등은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대비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

나) 교육행정

질 문

강원도 장애인 교육 전반에 관하여 특수학급 설치, 장애학생 직업 교육 강화 등에 관한 내용, 장애인교육권 연대 농성 과정 중 구속 인사에 관한 고소 취하 등에 대하여

답 변

도내 특수학급은 유 5, 초 206, 중 43, 고 14학급 총 26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학교 1,057교 대비 설치학교수가 257교로 특수학급 설치율은 24.3%이며 이는 전국평균 23.5%보다 상회하고 있음. 광역시를 제외한 타도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충남이 25.0%로 1위, 우리도가 24.3%로 2위임.

2008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은 유 1, 초 6, 중 7, 고 1학급 등 총15개 학급이며,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강릉아산병원에 설치할 계획임.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인

이상(유치부는 3인 미만도 가능)이고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 교원 수급 및 시설, 예산,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증설하고 있으며, 학교급간 특수학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특수학급 신·증설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수학급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개 산업체와 산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실습을 강화하고, 졸업 후 취업과 연계하는 등 직업교육의 내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수교육에서 차지하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등특수교사 임용공개경쟁시험에서 직업교과 전공 교사를 선발하고 있으나, 직업교과의 경우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원이 적어 필요인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도는 중등특수교사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전체 239명의 중등 특수교사 중 205명이 직업교육 연수를 받아 85.8%가 이수하였음.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활동비 지원은 강원도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한 사항으로, 2008년도에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12억6천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학습권 보장,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있는바, 2007년 현재 264명이 배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20명을 증원 배치할 계획임.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학급운영비 증액.

2007년 3.1%인 도교육청 전체 예산대비 특수교육관련 예산을 2008년도 3.5%, 2009년 4%로 확대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며, 2007년 특

수학급운영 목적경비 150만원을 2008년도에는 100% 증액하여 기존 특수학급은 급당 300만원, 신증설 특수학급은 500만원을 증액 지원할 계획임.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학교관리자의 특수교육 이해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바,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통합학급 교사 80명의 60시간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통합학급 교사 연찬회 245명, 대학부설격연수원에서 통합학급 교사 100명 등 425명이 연수를 받고 있음.

학교관리자 직무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위탁하여 유, 초, 중, 고 학교장(감) 42명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의하여 더 많은 인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8년부터는 교육행정직 연수 시 특수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할 것임.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 도내 6개 특수학교에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해나고 있으며, 2007년 특수학교 급식 사업은 7개교 937명에 대해 식품비 1,500원과 운영비 1식1인당 13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8년도는 식품비를 300원 인상하여 1,800원을 지원할 계획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2007년 9개 지역교육청에서 2008년도는 17개 모든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8억5천만 원(청당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개 지역교육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나갈 것임.

강원도장애인교육권연대의 농성과정에서 연대소속 인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구속된 인사는 강원도교육청의 고소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불법집회로 구속된 것이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또한 공공기관인 우리교육청 명의로나, 공인인 교육감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질 문

해고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에 관하여 해고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범죄자도 아닌 전임강사들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조사하고, 전임강사들과 계약서 체결시 있지도 않았던 교장들로부터 '채용계약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도교육청은 전임강사들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 교육청은 해고로 인해 벌어진 서로간의 반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 의사 등에 대하여

답 변

유치원 계약제강사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채용당시의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전자문서 조사 및 학교장 확인서를 징구한 것임. 유치원 강사제도의 경우 2004년 말에 유치원 담임교사 정원이 100% 배정됨에 따라 더 이상 전임강사제를 유지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음.

이에, 전임강사 등 29명이 스스로 고용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2005년 초에 한시적 계약제 강사제를 도입하였으나, 당초 지침에서 정한 29명의 정규교사가 배정됨에 따라 임용요건이 완성되어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것임.

현재 강원유아교육 여건 및 유아인구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유치원 강사제는 필요성이 없으며, 현 시스템 하에서도 정상적인 유아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 문

강원도 교원수급 정책에 관하여 강원도 교원확보율은 중학교가 82.9%에 불과하고 비전공 과목의 상치교사만 281명에 이르는 실정임.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은 240명의 중등교원을 감축하기로 계획. 이는 교육의 질을 더욱 낮추고 도가 추진하는 학력향상에도 역행하는 처사임. 이에 대한 대책과 교원충원을 필요성에 대하여

답 변

교원 정원의 배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급 계획에 따르므로 우리도 자체 감축 또는 증원이 불가함.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원 배정 방법 변경으로 2007년까지 학급 수 기준 정원배정을 2008년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전환 추진

중임.

교원 정원 배정 방법 변경 시 전국평균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낮아 정원 감소 폭이 커질 것을 우려 교원정원 배정 방법 변경에 따른 대책을 위해 교육감 회의(2007. 9. 12.),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방문(2007. 8. 17., 2007. 8. 24.), 담당자 정원 회의시 건의(2007. 9. 4., 2007. 9. 13., 2007. 9. 28., 2007. 10. 10.), 관련단체 성명발표(전남지사 2007. 8. 13.,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2007. 8. 3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7. 10. 9.) 등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도와 연계하여 요구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적용 시 소규모 학교를 고려한 차등적용 건의, 소규모 학교 기존 배정인원 우선 배정 요구 등이며 소규모학교 많은 도 지역을 지역4군 (강원, 전남, 전북, 경북)으로 분리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차등적용하기로 우리도의 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용함.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 소규모학교의 기존 배정인원(중학교 3학급 8명) 우선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초등학교 120명 이하 학교 현행 정원 유지 건의하고 정원감소 폭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겸임교사 확대, 부전공연수 확대, 강사임용 등 상치교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안사항으로 건의 예정임.

2) 황 철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 개발공사 관련하여 부당 업무수주에 대하여, 이에 관련한 우리도의 문제점 및 대안은?

답 변

감자원종장 이전사업, 한국여성수련원 건축사업 등의 개발공사 위탁시행은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근거하여 각사업 주관부서에서 개별 관련법 등을 따져 시행함. 道사무의 개발공사 대행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대행사업 관련 개별법과 충돌에 대하여 충돌조항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로 하여금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 받도록 조치함. 향후 대안으로 유권해석결과에 따라 개발공사 대행사업의 범위·한계 등 규정 마련.

개발공사에 사업대행시 사전 타당성 검토절차 마련을 위해 사안 발생시 “대행 타당성 검토반” 등 구성, 경제성·효율성·공사의 수탁능력 등 사전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대행이 필요한 경우, 자체 T/F팀 운영 긍정적 검토하겠음.

공사에 대한 道의 감독한계 관련,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자치단체(道)의 지방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향이 사장의 책임경영, 사후적 지도·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적 지도감독, 경영에의 적극 관여 ⇨ 사후적 지도·권고, 지방공사의 단독사업 경영권(융통성) 등 사장의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토록 함.

질 문

강원도발전연구원과 관련하여 운영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대안은?

답 변

과다한 연구과제로 연구성과 저하관련 지방자치 진전에 따라 연구수요와 연구방향도 다양화됨에 따라 연구과제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연구원의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에 주력코자 외부 수탁과제보다는 도정 현안 중심으로 과제연구 방향 전환, 관련부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등 연구과제 완성도 제고 등에 노력하고 있음.

이자율 하락 등 재정기반 취약문제는 IMF를 전후로 이자율 하락, 도내의 취약한 연구기반으로 인해 연구원의 재정기반이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이자수입과 이자율은 IMF를 기준으로 절반수준으로 하락되어 더불어, 도내의 취약한 연구수요로 수탁수입 증대가 곤란함.

연구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충이 선결과제로 수입기반 확충을 위해 기금확대 : 201억원 → 300억원이상,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수탁과제 수입 증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임금인상 억제 등 예산을 절감함.

연구에 전념할수 있는 연구환경이 미흡하여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은 공영빌딩 3개층을 임대하여 사용중으로 연구공간의 분산배치, 연구 및 회의공간 부족 등

연구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안정적 연구환경조성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청사확보 필요함.

대부분 시·도연구원은 독립청사 또는 도·시·군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추세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환경조성 및 성과제고위해 독립청사 신축 필요함.

활성화 방안을 위해 수탁과제보다 도정정책과제 위주로 연구·지원기능 전환, 도·시군과 정책공조 강화, 지역현안 관련 과제발굴 확대를 하고 도정현안, 정부정책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규제완화 TF팀운영, 수자원관리센터신설, 한미·EU FTA대응 등 전략 TF팀 강화, 강원4대포럼 및 동해안포럼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확대 및 독립청사" 추진을 위해 기금을 현재 201억원 → 300억원이상 확대하고 독립청사 신축추진(800평, 40억원 내외)을 해 나갈 계획임.

또한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도입, 복식부기 도입, 고객만족도 조사, 외부전문가와 네트워킹 강화 및 국내외 연구·교류협력 확대를 해 나가겠음.

질 문

강원도 문화재연구소 관련하여 업무 전반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이에 관련한 우리도의 문제점 및 대안은?

답 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강원문화예술진흥조례 제18조, 강원문화재단 정관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근거로 2001년 7월 7일 설립되어, 1실 4팀 35명(정규직 9, 비정규 조사요원 26)으로 구성됨. 주요기능은 문화재의 조사·연구,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등이고 2007예산은 6,650백만 원('06년 이월급 2,700백만 원)임.

문화재연구소 "신규 발굴 허가제한" 내용은 발굴허가 제한기간은 보고서 제출 후 6개월간(2008. 1. 5.까지)이며 발굴허가 제한사유로 「강릉보현사 식당선원 신축 부지 내 유적」 발굴보고서를 제출기한(2년)내 미제출한 것이 요인이며 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발굴수요 폭증과 민원발생 등에 따른 것임.

도의 추진상황은 (재)강원문화재단 정관 제8조제5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도 문화예술과장”이 감사가 되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 결여, 신규발굴허가 제한 처분 등 각종 규정 미 개정으로 많은 문제 야기됨.

따라서, 강원문화재단에서 2007년 8월 20일 道 감사관실에 정밀감사를 의뢰하여, 도 감사관실에서 2007년 8월 23일 ~ 8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2007년 10월 9일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행·재정 및 신분상 처분요구”함과 아울러 “감사결과 개선·건의”를 요구하고 강원도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함.

향후 대책 중·단기대책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직안정 및 사기진작 대책 시행, 타 시·도와 공조, 제도 개선방안 지속 건의(도⇒문화재청)를 하고 장기대책으로 발굴기관 확충을 위한 조사인력 육성, 도내 대학박물관(5개소) 활용대책 마련, 중요유적 이전복원 및 대체부지 조성 대책 건의, 문화재보호법 관련조항 개정 지속 촉구(도⇒문화재청)를 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중점 협의,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3) 정을권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재조정에 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실태,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방안?

답 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정 시에 당해 문화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도 지정 문화재는 강원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각각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도내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지정문화재는 총 489점임. 우리 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중에 도심지역을 포함한 지역에 287점에 대한 보호구역으로 346㎢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음. 이 346㎢는 강원도 전체면적으로 보면 약 2%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불편이 있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그래서 그동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도는 물론이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현재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 허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을 수 있느냐, 개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림.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최소한 2010년도까지는 미리 보호구역을 조정 결정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최종적으로 이 지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고 그 밖의 지역은 현상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을 확인원에 나오도록 해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여기에서 아무런 현상변경 허가 신청 없이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2010년까지 되는 것으로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지정 문화재도 우리 도에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빼고 타 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 도비 2억 원과 시·군비 2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 2006년 3월부터 내년 말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도 지정문화재 211점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는 현재로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서울시는 도심지역에 이미 건축물이 들어와 있고 훼손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반경 500m를 다 지정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빠지는 부분도 있음.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문화재로 인한 현상변경 허가지역은 구분이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어떤 지점에 당간지주라는 문화재가 있을 때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미리 지정을 안 해 놓은 당간지주일 경우에는 그 당간지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함.

그러나 그 문화재로부터 이미 훼손된 지역을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최소한의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는 현상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음.

그래서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 도에서 도 지정 문화재는 도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는 타 시도와 함께 문화재청 주관으로 국비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서 100m 또는 200m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100m 이내에서는 현상변경 허가를 안 받는다는 그런 지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500m 반경 전체를 지정을 안 하고 건축이 이미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반경으로 계산을 안 하고 동쪽 방향은 50m가 될 수도 있고 또 서쪽 방향은 200m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경계지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을 이번에 재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강원도 문화재위원들과도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그런 쪽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질 문

시·군단위 지역축제 과잉 개최 문제에 관하여 도내 지역축제 현황 및 실태, 축제의 통합 실시로 내실을 기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 변

도내 지역축제의 현황은 지난해 기준으로 마을단위의 크고 작은 축제를 포함

해서 도내에서는 모두 89개의 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됨. 이들 축제 중에서 정부와 도 차원에서 지원·육성하고 있는 축제는 모두 19개로 문화관광축제 6개, 도 대표축제 13개임(공동개최 축제 2개 포함 - 비목, 도솔산).

또한, 이 19개 축제에 대해 금년도 국·도비는 전년보다 4억3천만이 증가한 12억3천5백만 원(국비 65, 도비 58.5)이 지원되었음. 지난해 도 지원축제의 성과(효과)는 모두 19개 축제에 71억 2천 8백만 원의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자되었으며, 관람인원은 6,685천명으로 축제 당 35만 명이 다녀감.

이중 외부용역 또는 자체분석을 실시한 13개 축제의 직접적 경제효과는 1,038억 원으로 나타남 (투자액의 21배). 또한, 지난해 문화관광부 평가결과, 양양 송이축제가 외지인 비율이 99.1%로 1위, 산천어축제가 97.5%로 2위로 조사되었으며, 방문객 1인당 지출액도 송이축제 166천원(1위), 빙어축제 98천원(2위)로 도내 축제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이 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금년도 전국 최우수축제 7개중에서 도내 축제가 2개(마임, 송이)가 포함되었으며, 국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였음(총 35억원 중 650백만원, 19.1%)

축제의 과잉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축제 수가 증가하고 있고 유사한 축제의 중복 또는 과잉 개최되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함. 반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지역 통합 등 경제적 측면 외에 긍정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림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축제가 시군이나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로써 각각의 개최목적, 주최기관, 소재 등이 상이하여 도에서 인위적으로 통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소재나 프로그램, 개최시기 등이 유사하여 통합필요성이 있는 축제는 해당 시·군과 협의 또는 개선을 적극 권고해 나가겠음.

또한, 시·군의 우수한 축제는 집중 지원 육성해서 경쟁력 있고 내실있는 축제로 적극 키워 나갈 것임.

질 문

노인복지에 대하여 강원도 노인복지 정책 방향(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답 변

우리 道에서는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라는 시책 기조 하에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노인복지 선진도」실현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① 안정적 노인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의 1시·군 1개소 목표 추진, 노인일자리 박람회의 개최방법 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노인현금급여의 적기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②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의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지속 확충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환자의 진료비(본인부담금) 감면과 안질환 시술비 지원, 도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노인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③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 운영사업을 확대,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바우처 사업과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정착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노인 실비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확대, 학대받는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학대예방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음.

④ 노인여가활동 기반조성을 통한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2010년까지 1시·군 1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경로당의 지역노인 중심시설화 추진 및 노인쉼터 조성과 실버예술단 설치 지원 및 노인정보화사업 확대 추진, 노인솜씨자랑대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및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 노인문화제 등 특색 있고 건전한 노인참여프로그램 지속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 道만의 특수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복지선진도 구현에 한발씩 다가설 계획임을 말씀드림.

질 문

농가 한우 출하가격과 소비자의 한우쇠고기 가격에 대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가공・수송 등 유통개선(중간마진 축소) 방안?

답 변

한・육우사육 현황은 '00년말에는 106천두수 이었으나, '04년이후 65천두가 증가하여 '07년 6월 현재 174천두 임. 호당사육 두수는 '00년 4.8두에서 5.8두가 증가한 '07년 6월 현재 10.7두임. 사육농가는 '00년 22천호에서 6천호가 감소한 '07년 6월 현재 16천호임.

시・군단위 브랜드는 홍천 늘푸름한우 등 3개소, 광역브랜드는 2개소임. 전국축산물 브랜드전에서 '04년 이후 4년 연속 대상 수상(횡성한우 2회('05, '07), 대관령한우 2회('04, '06)을 함.

한우 산지가격은 큰 수소의 경우 '06년말 대비 11.6, FTA발표 대비 7.9% 상승, 암송아지의 경우 '06년말 대비 25.3, FTA발표 대비 19.3% 하락함. 축산농가의 한우사육 경영비 절감은 최소한 24%이상 절감함. 자급사료 확대생산, 급여를 통한 경영비 절감(7%절감),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17% 절감)을 함.

축산물 유통개선 방안은 축산물 유통에는 생축 유통과 도축된 축산물 유통으로 구분됨. 생축은 생산자단체(40%), 수집 반출상(30%), 우시장(30%)을 통해서 도축장으로 출하하고, 도축된 축산물은 대형유통업체(30%), 도매상(40%), 정육점(20%), 대량수요처(10%) 로 공급 되는 등 5~7단계의 형태로 유통함.

유통단계별 마진율은 일반정육점에서 구입한 후 도축・판매의 경우 → 35% 정도, 유통업체(생산자단체 5.2%, 물류센터 17.4%,대형유통업체29.8%)별로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마진발생 : 최소 5.2~최고47.2%

유통개선 방안으로 한우농가의 브랜드 참여 확대로 유통단계 최소화 추진(5단계),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판매점 설치지원으로 직거래 확대 및 산지가격 등락에 따른 유통업체의 소비자 가격 견제 : ('07년) 29개소(5개 브랜드) → (향후) 50개소(6개 브랜드), 강원도내 브랜드별 자체 전문판매 및 음식점 판매로 유통마진 17%정도 절감 추진 : (현) 4개소→(향후) 40개소로 확대,

농가 개별적으로 산지수집상을 통한 출하보다 생산자단체(조합)를 통한 계통출하를 적극 유도, 강원도 한우 가치제고를 통한 유통 차별화 실현 등 강원도 한우의 유통비용 최소화 노력으로 소비자가 거부감 없이 즐겨 찾도록 최선 다해 나가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초·중등학교 학군제(통합구역) 제도의 불이행에 대하여 지역학군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답 변

초·중학교 학생은 거주지(주민등록지)에 따라 해당 초·중학교에 취학하여야 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입학 또는 전학 불가. 그러나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속칭 위장전입)으로 타 학교에 취학하는 사례가 있음.

이는 학부모 입장에서 좀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되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임.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주민등록을 근거로 입학 또는 전학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구위반 사례가 없도록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위반사례를 단속하도록 협조요청,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자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2005~2009년)을 수립하여 농산어촌 학생 교육기회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교원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육성 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음.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당장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교실 확충, 급식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음.

4) 김동일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도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하여 국유지와 같이 불법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노후건축물 신·개축 불가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제도개선 대책은?

답 변

우리도의 도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총 257동 23,975㎡로 속초, 철원, 고성지역이 전체 무허가건물 점유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는 속초시 청호동(속칭 아바이마을)과 철원 화지리, 고성 거진지역으로 이지역 주민들은 6.25때 피난 내려와 도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건물 이기 때문에 건물의 증·개축 불가 등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음.

도유지내 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로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지침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단의 토지 면적이 기준이하 (시의 동지역 1,000㎡, 시·군의 읍·면지역 2,000㎡)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양성화건물 포함)에 한해서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반면에, 국유재산은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음을 「건축물대장」으로 입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점유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문서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확인한 출장복명서 및 무허가건물대장, 건물과세대장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수의매각이 가능함.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유재산법과의 법적용 형평성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차원에서 국유지 매각기준과 같이 건물과세대장 등도 매각 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고자 강원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초청 간담회시 의견개진과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한편,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공유재산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고, 행자부에서도 우리도의 건의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의원님께서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러한 매각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나) 교육행정

질 문

학교장 출장 및 여비에 대하여 학교장의 장기간 출장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차질과 여비의 과다지출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와 대책은?

답 변

학교장 장기간 출장이 초등학교 교장 보다는 고등학교 특히, 중·고 병설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장의 출장이 많음. 체육선수 육성, 연구학교 운영, 학교 및 지역 행사 등에 참석할 목적으로 학교장 출장이 다소 많음.

중·고 병설학교장의 출장이 단설학교장 보다 많은 것은 병설학교의 경우 교장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3학교의 교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중학교장, 전문계 고교장, 일반계고교장, 여기에 연락책임 학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출장 요인이 많음. 체육선수 육성학교의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선수격려, 연구학교 운영관련 회의, 관내학교 및 지역행사 참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학교장 출장이 많음.

대책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출장 억제, 각종 회의는 가급적 당일 오후에 실시하는 방안 모색, 학교 및 지역행사 참석에 교감이 대신하여 참석이 가능하면 출장 분산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

4. 제182회 임시회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임용식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관광과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하여 강원겨울축제는 세계화를 목표로 특성화가 필요하고,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북지역 겨울철 관광상품 개발 및 양양공항 내 면세점, 세관, 검역소 등 기본적 인프라 확보 필요, 대책은?

답 변

종합적으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 우선 동해안지역에 지금 많이 편중되어 있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현재는 계절적으로 보면 사계절 관광이 더 두드러지게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지역별로 편중문제는 영서 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원을 조성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음.

지금 저희들은 겨울축제에 대해서는 눈과 스키 그리고 얼음을 주요 주제로 해서 겨울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현재 눈과 스키 중심은 동남아권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관광객 유치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명 해외축제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저희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됨.

또 그 외에 지금 대관령 눈꽃축제라든가 태백산 눈꽃축제, 산천어 축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유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중심에서

앞으로 외국인 유치도 그 안에 좀더 가미를 시켜 가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좀더 여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원도와 가장 제1의 관광자원으로 꼽았던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보는 관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체험관광으로 돌리면서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부분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것을 명소화 시키거나 아니면 명품화 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보다 더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을 저희가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겨울철 관광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세기 이용률이 지난해 보다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다방면 쪽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겨울상품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여기에서 나갈 때에 전세기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2~3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세기가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도내의 수요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는 그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성사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음.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동남아나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들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눈 스키 등 겨울관광 상품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을 얼마만큼 느끼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설악동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오색 케이블카, 지금 현재 DMZ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관광 조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설악동

재정비나 오색 케이블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도록 하겠음.

양양공항의 문제는 우선 국내선과 관련해서는 육상교통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노선이 존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서울 노선도 없어졌고 부산도 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관광객과 관련된 노선이용 문제인데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강원도에 와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 선호 경향이 강원도는 예컨대 볼거리 이런 것들은 많아서 경유관광은 되는데 머물면서 휴양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품과 여건이 현재 구비가 못 되어 있음.

예를 들면 태국의 치앙마이라든지 또 필리핀의 세부라든지 그런 휴양만 목적으로 해서 2~3일씩 들렀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애매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 같이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유적이 있어서 그것만 보러 갔다 오는 그런 것도 조금 애매하고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강원도를 둘러보고 혹시 서울 쪽 주변지역을 반드시 들리려는 경향이 있음.

더군다나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공항 하나로 목적을 하고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이우식 국장이 얘기를 드렸지만 청주공항하고 비교를 보통 하는데 지금 양양 쪽은 국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시장이 아주 빈약한 것임.

그런데 청주만 해도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그 주변지역에서 청주를 이용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이 있음. 그런 측면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제주도하고 아까 비교하시는데 지금 외국관광객이 제주도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만이 채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150만이 오는 것으로 많이 오는 편임.

다만 양양공항을 이용하고 직접 오는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하고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같이 협약도 했고 중국하고도 지금 논의를 계속 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부정기적인 전세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질 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투자성과 및 실용주의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답 변

지방분권 관계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하면서 사업이 시행 첫 해에 전국 최우수 실적을 거양했음.

분권아카데미 관계는 지금 분권과 균형발전 부분이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가치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앙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당위성을 주장도 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방분권아카데미의 기능과 운영은 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과도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함.

지금 분권아카데미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공무원과정이 있고 민간교육과정 이렇게 두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지자체 관련된 위탁교육 과정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이나 단체가 요구에 의해서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방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설계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음.

이것은 분권아카데미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생을 차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 요구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질 문

강원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하여 강원인구 늘리기는 도정의 주요 과제로서 실효성 있는 시책이 발굴되고, 정밀하게 추진되어야 함. '07부터의 종합대책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도정시책 중에서 인구 늘리기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집합한 대표적 전시행정으로서, 공무원만 바쁨,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필요, 견해 및 향후 계획?

답 변

도내 인구는 1999년도 156만 명을 고비로 2006년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자연적 요인(출산율 감소)과 사회적 요인(교육, 일자리 등)이 있음. 인구수는 지역이나 국가의 힘, 각종 경제지수에 필히 적용되는 항목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가 최대과제임.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도에서는 강원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개별사업단위로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결여됨.

인구시책 성격상 도정 전반에 걸쳐 연관된 시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단기적·중장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따라서,「인구 늘리기」관련 시책들의 시너지효과 촉진을 위해 '07년 9월 개별+종합부서별 유기적 종합협력체계 확립,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종합관리시스템」구축함.

이러한 관점에서「강원인구 늘리기」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08년도에는 이의 실현을 위해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향후 도에서는 인구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유입 최대화 및 인구유출 최소화 대책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강원발전연구원 2008년도 기본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지역주도형 인구증가시책을 지속 발굴, 도내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유동인구의 주민등록 이전 대책 추진과 「강원도사람 키우기」연계 지역인적자원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또한, 도전역의 균형발전과 고른 복지·문화·교육 수혜정책을 통해 일부 도시권으로의 집중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

질 문

읍·면·동 및 산간오지마을 정보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보화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노력 긍정평가, 하드웨어 구축 못지않게 활용이 매우 중요, 이에 대한 대책?

답 변

강원도의 정보화 수준은 2007년말 중위권 수준으로 2010년 전국 상위권(5위 이내) 목표임.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은 정보이용시설이 643개소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2007년까지 776개 마을 16,174개 가구, 2008년엔 173개마을 1,469개 가구에 보급을 하여 2008년까지 20가구 이상 집단마을 보급 완료 예정임.

전국 정보화마을 구축 현황을 보면 338개 마을(강원도 ⇒ 46개 마을)로써 전국 대비 강원도 비율이 14%임.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전자상거래 이용현황이 13,269건 806백만 원으로 2002년 대비 11,700% 신장, 2006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체험관광 이용현황은 1,225건 261백만 원으로 2003년 대비 4,275% 신장, 2006년 대비 148% 증가함.

농어촌 정보화지도자 육성 계획은 4개 분야 4,120명으로 그간 도에서는 정보화에 소외된 도민에 이용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여, 도민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관리를 하고 있음.

마을별 자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디지털공부방을 항시 개방체제로 운영하며, 인터넷 교육방송 정보제공 등 기 구축된 시설에 대하여는 정보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구축시설 활용 향상을 위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시설 항시개방 유도, 중고생에 인터넷 교육방송 정보 제공, 여러 분야 활용을 위한 표준교재(디지털강원) 항시 비치, 구축 시설(컴퓨터, 프린터 등) 최적화를 위한 이상유무 점검, 전자상거래 및 예약관리 이용으로 소득창출 연계, 마을 정보화지도자·정보화마을 운영관리자·농어촌 정보화지도자를 통한 지속적 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

나) 교육행정

질 문

농어촌지역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및 통학버스 운영에 대하여 농어촌 지역은 몇 개 학교당 원어민 교사 1명 배치로 1~2주에 한 번씩 교육의 기회가 주어짐,

절대부족, 대책? 폐교지역 등에 운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같은 지역 중·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필요, 교육감 견해?

답 변

원어민 교사배치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것을 말씀드리면 영어가 228명, 일본어가 2명, 중국어 5명, 러시아 1명해서 공식적으로 잡히는 집계는 236명으로 잡혀 있음.

교육시간은 각 학급에 당초계획에는 주당 1인당 22시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황은 그렇고 또 배치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학교에 먼저 배치를 했음. 그 이유는 중학교에 배치를 해 놓아야 초등학교까지 순회근무가 가능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학교 배치가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순서는 그렇게 정한 것임. 정한 이유는 중학교 먼저 배치를 해야 초등학교의 순회근무가 가능하고 다음 두 번째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고등학교,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19학급 이상인 경우에 한 학교당 2명, 7학급에서 18학급이 한 명, 그 이하는 2~3학교를 묶어서 지금 현재 한 명을 배치하고 있음.

지금 현재 계획은 2008년까지는 모든 중학교에 하나 정도 갈 수 있도록 배치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학급 수가 많은 데 먼저 배치를 하겠음. 그리고 2010년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배치를 완료하려고 함. 초등학교까지는 아마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음.

저희 도도 지금 지자체에서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대학과 위탁한다든지 지역의 기관과 위탁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대학에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음.

이 기회에 존경하는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난 2007년 6월 8일자 공문으로 지금 임용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책임을 지는 중심 학교 교장이 여건을 감안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침이 내려가 있음.

2) 김기남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저수지 안전상태와 관련하여 도내 저수지 개·보수 현황과 안전성 문제는?

답 변

도내 저수지가 모두 326개소가 있고 농촌공사 관리가 75개소, 시장·군수 관리가 251개소가 있는데 그때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총 개·보수 대상이 135개소로 파악이 되어서 계획에 들어갔고 전체는 약 3,000억 원이 소요가 됨.

10개년 계획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작년까지 55개소에 743억 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실시되었고 금년에는 23개소에 153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그래서 2011년으로 보면 추진 정도가 약 3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데 잔여 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음.

그리고 물 폭탄관련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되겠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안전성 문제를 전체 3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는데 313개소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13개소가 재해에 일부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음.

그래서 13개소에 대해서는 특히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12개소이고 시·군이 1개소인데 농림부가 지난해 정밀안전 진단을 요청해서 농림부가 현지 확인을 했고 재해취약 정도가 경미한 3개소는 관리 주체에서 자체 정비를 완료했음.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지금 2개소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강릉 오봉저수지, 철원 토교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은 개·보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그래서 연내 완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8개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더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지금 3월 31일까지 다시 한 번 또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농촌공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응급조치, 장단기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안전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주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음.

질 문

저출산·고령화 사회 관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및 추진방향?

답 변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인류가 안고 있는, 세계가 안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로 지금 갈 것 같음.

우리 도 차원에서도 가임여성층 감소로 출산율이 정체상태에 있고 그중에서 이미 횡성, 영월 같은 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이미 하고 있음.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보면 새정부 출범을 하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화가 예상됨.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이것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보육정책을 별도로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위스타트라든지 희망스타트 실시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고, 다문화 가족 포용 문제, 그다음에 고령사회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강원도도 별도로 저출산·고령화팀을 지난해 5월에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었고, 중장기 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 4대 정책 목표 9개 추진과제, 고령화 정책 4대 정책 목표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음.

그리고 강원도의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계획 실천을 위해서 다음 달에 강

원도 저출산 대책 조례도 의회에 제출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논의하고 좋은 방안이 조례로 만들어지기를 제가 기원하겠음.

그리고 현재 도가 국·공립 보육시설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저출산 대책 부분에서는 그나마 전국 시·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 친화사업의 전략적 육성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냥 외형적인 부분을 떠나서 산업화와 연결을 짓는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강화하겠음.

질 문

인적자원개발(강원사람키우기)의 중요성 및 대책과 추진방향?

답 변

지금 인적자원개발 문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국가나 지역을 이끌어 온 최고의 어젠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 이런 표현도 썼었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모든 국가가 치열한 인재확보 전쟁,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war for talent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고 있음.

다행히 새 정부에서도 국정지표 5개를 설정했는데 그중에 하나 인재대국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일찍부터 '강원도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차원에서 강원도 사람 키우기 추진을 쭉 해 오다가 지난해 10월에는 강원도 사람 키우기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있음.

여기에는 2015년까지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두 26개 지표를 설정하고 3개 분야 7대 전략을 마련해서 돈도 들여서 하려고 함.

지금 금년도에 70개 사업에 1,335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맞춤형 인재육성을 하려고 함. 이것은 저희가 미래인재육성재단도 만들고 후원회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미래인재 육성, 그다음에 지역산업 마이스터 육성, 지역사회 선도 리더 육성 이런 것들, 또 도민 전체 기본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인적자원프로그램 실시를 하고 있음.

그다음에 있는 자원의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며, 그래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도 출신 인적자원, 예를 들면 2030 젊은 인재라든지 하는 것도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 또 도 연고 인적자원들 이것을 전부 도의 인적자원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런 것을 산·학·연·관 간에 네트워킹 또는 유기적인 협력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 인재육성운영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사람 키우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음.

질 문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생적인 문제는?

답 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청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음.

그리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복지수요를 폭주시키게 되고 또 노인부양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으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구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됨.

질 문

현재 고령화 사회에 맞게 강원도내의 노인복지, 일자리 제공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답 변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음. 지금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특히 고령화 대책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한 노인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소득이나 복지, 의료, 산업, 문화 등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내

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내에 저출산·고령화팀을 편제하여 인력을 보강해서 내부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의 발굴과 대내외 연고활동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민간부분의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단체, 즉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합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저희는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추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노인문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로 강원도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답 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노후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 도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노인 일자리 창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인들의 일자리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 등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선, 지역 내 고용여건과 근로방식 등이 감안된 실현가능성이 높은 노인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봄.

노인 일자리는 ①임금수준의 적정성과 장기고용 등 안정성 ②참여어르신의 만족도와 근로환경의 안전성과 적합성 ③사회적 유용성 등 공익성 ④지역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정부시책에 대한 반영 여부 ⑤기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봄.

따라서, 노인 일자리는 노인을 복지소비자에서 복지생산자, 사회발전 기여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 도에서는, 일하고 싶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질 문

농촌지역의 노인문제 대책은 도시지역과 달리 어떤 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하는가?

답 변

농촌지역은 생활환경이나 여가생활시설 또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도시지역보다는 열악한 편이므로,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노인 단독가구 등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방향을 둔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봄.

구체적인 예로는 농촌의 경우에는 노인복지 예산의 적정수준을 배분하고 의료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우선적 설치와 노인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쉼터 등 노인 여가시설을 우선 확충하는 등 농촌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질 문

1촌 1촌장제를 시범운영 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방안은?

답 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풍습인「효」문화가, 산업사회의 발달과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 청소년 가치관 변경 등으로 인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도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세대간 이해의 폭을 넓혀 아름다운 효 문화를 계승·발전하고 확산시켜 나가고자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앙양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선작 모음집을 발간, 각급기관과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모범경로당 1개소씩 선정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한자·서예·예절교실 등을 운

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음.

또한, 道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학당」 운영과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효 실천 확산을 위한 효도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중 인력파견형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지식이나 경험 많으신 노인을 교육기관 등에 강사로('07년 415명, '08년 608명) 파견하고 한자, 전통예절 등을 가르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촌 1촌장」 사업도 효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시·군과 적극 협의하여 모색 하겠음. 이와 더불어, 웃어른 찾아 세배 드리기, 장수노인하례식 등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 축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음.

질 문

희귀 산야초와 산나물 보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에 주근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법적 근거는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도내에서는 한 건도 고발된 적은 없음.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근이 채취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음.

질 문

축산물(한우) 유통구조 개선관련 현 5~7개의 유통구조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2013년까지 4단계로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통단계가 단계별로 수집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래서 단계별로 2013년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4단계로 정착시킬 계획임.

나) 교육행정

질 문

남북교류 계획과 방향에 대한 의지와 방침은?

답 변

지난해 12월 26일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우선 금년 사업으로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금년에 만들고, 관련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세 번째는 사업 중에서 창구개설과 북한 쪽과의 접촉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함.

이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첫째는 우선 기금을 조성하려면 조례 자체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미 타 시·도가 서울,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강원도는 남북이 접해 있는 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임.

지원 사업으로 첫째, 저희는 지원해 주는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교류, 교원교류, 공동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함. 그리고 저희는 알다시피 남북강원도와의 교류인데 서울은 강원도와 한 것은 아니므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한 것이나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는 저희와는 조금 다름. 저희는 남북강원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음.

질 문

도내 초·중·고 교장의 출장일수의 편차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는?

답 변

수업일수가 220일인데 180일을 출장을 간 것으로 365일로 보면 반을 출장 갔

는데 이렇게 간 이유에 대하여는 초등의 A교, 중학교의 B교, 고등학교의 C교가 제일 많이 갔는데 행정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설된,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 건데 이 분들이 그 대상자들임.

그래서 어차피 출장을 갔기 때문에 3개월은 행정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는 기간이 포함이 되어서 183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초등 A교, 중학교 B교, 고등학교 C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중학교는 행정연수원이고, 고등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공업계에 관련되는 학교인데 그런 관련되는 출장이 많아서 그렇지 초등학교·중학교는 두 분 다 행정연수원에서의 3개월이 포함된 것임.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교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저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현장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출장은 지양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한 대로 교장은 판단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므로 아무리 작은 초등학교라고 해도 그 학교 기관의 장으로서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지역사회하고 유대도 강화해야 되고, 자료도 모아야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제를 제가 달았듯이 출장을 위한 출장, 즉 다시 말하면 다른 학교 교장이 가니까 나도 간다든지 이런 출장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를 하겠음. 그러나 경영자가 경영목표를 세운다든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지역사회하고 유대를 강화한다든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것은 막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함.

3) 박명서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행정구역 조정 관련 행정구역을 지역 현실 및 주민편익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소규모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답 변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통신의 발달, 또 도시화 내지는 인구감소, 산업화 등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거기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도 좌우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 것이 요인이 되어 행정구역 조정신청이 없지 않았나 생각함.

소규모 지역에 대한 통합문제를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필요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함.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이후에 통·리·반을 경계조정 포함해서 신설 내지 조정해서 약 77건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30세대 미만 통·리가 약 150개 통·리 정도 됨.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여건을 좀 살펴보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좀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단위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번기회에 서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음.

질 문

2010년도까지 우리 축산물을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이런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2010년까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 변

지금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가 되고 또 관세가 인하되면서 수입축산물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입축산물의 소비는 늘어나고 반면에 국내산 축산물은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하락이 예상되지만 그렇지만 도내산 축산물의 경우 한우를 보면 현재 품질이 전국에서 제일 좋으므로, 그래서 이런 고품질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돼지와 닭은 현재 브랜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현재 중간평가는 되고 있음.

그래서 앞으로도 고품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최대 강점인 청정성

하고 안전성을 집중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도내산 축산물 판로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함. 그래서 현재는 축산물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늘어날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내용들을 착실히 추진하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질 문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사료 값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든가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 변

사료 값 인상이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35% 내지 50%를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지금 32.4%나 인상이 되었음.

그래서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인수위원회에서 1조 원을 융자지원을 해서 3%를 농가에 융자지원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도의 축산규모로 볼 때 500~600억 정도가 배정되지 않겠느냐 생각함. 그래서 그 3%에 대한 이자를 도가 이차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며, 혹 그리고 정부가 배정하는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100억 원을 농협하고 협의를 했음.

추가로 100억을 더 농가에 사료비로 융자해 주고 그에 따른 이자도 지방자치단체가,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음. 다만 초식가축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초식가축은 젖소가 되는데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사료비 절감을 2013년까지 12% 정도 줄여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초식가축이 아닌 돼지와 닭이 문제가 되는데 돼지와 닭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 사업을 금년 당초계획이 14억 1,0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다 14억 2,000만 원을 더 보태서 28억 3,000만 원으로 경영합리화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켜 주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 문

축산분뇨 자원화 관련 청정강원 축산을 지키기 위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장기대책은?

답 변

지금 현재 총 발생량을 88% 정도는 퇴비화·액비화로 해서 자원화 되고 있고, 나머지는 축산분뇨 공공폐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12%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산을 경영해야 하는 데에는 도시민이나 농민들이 다 인식을 하지만 분뇨처리를 하는 시설을 어디에다 한다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음.

그래서 그런 민원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민원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다 보니까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렇지만 이월이 되더라도 민원도 해소하고 축산분뇨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지금 도가 주지하고 보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회사 이레라는 회사에서 친환경 축분 연료화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도내 횡성지역의 1개 농가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음. 그래서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시험 연구 중이기 때문에 효과는 사후에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 시험 연구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분뇨화 자원을 하든가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음.

나) 교육행정

질 문

학교 엘리트체육의 내실화 관련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우수지도자 확보 및 향후 관리대책은?

답 변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지도자는 매년 2005년부터 5명씩 증원시킵니다만 155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며,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게 53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교자체로 운영하는 곳이 174명이고 도합 382명임.

학교자체로 지도자를 쓰는 경우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학

교 자체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경우, 또 지자체의 일부 지원을 받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독지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 해서 보수도 조금 차이가 남.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자체로 운영하는 174명을 사실은 도교육청이 전부 흡수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산이라고 하는 한계 사항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있는 것임.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5년부터 매년 5명씩 증원을 해 가고 있는데 전국 시도의 현황을 보면 저희 숫자가 중간 정도임. 저희보다 인원이 많은 데가 한 반 정도 있고,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는데 이것은 향후 도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53명과 맞추면서 지금 종목 수로는 31개 종목에 지원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인원도 확대하고 보수도 135만 5,000원을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생활비가 안 되므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음.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조영기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독거노인 관리 실태 및 지원 현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 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강원도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만 2,198명으로 약 13.4%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사업은 일단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강원도의 복지시책을 기조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

중요한 4개 부문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노후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다

음에 시니어클럽을 그동안 3개소 운영했는데 2개소를 금년에 추가해서 모두 5개소의 시니어클럽이 확대 개편되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임.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과 수발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모두 13개소의 노인요양시설과 9개소의 재가노인시설을 신축하고, 차상위계층 76명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해 드릴 예정임.

또 234명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파견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면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519명의 노인들에게는 가사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음. 또한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내실화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프로그램과 다양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음.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승인·지정하고 요양보호사 양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임.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는 노인 여가활동 기반 조성과 여가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음.

5개 지역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 87개의 농어촌 지역에 노인쉼터를 조성해서 노인쉼터는 금년이 되면 675개가 조성되겠음. 그리고 약 2,600여 곳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영세 경로당에 대한 주·부식비 지원, 또 시·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금년의 신규 시책사업임. 충효교실 운영비·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서 경로당이 명실상부하게 노인·어르신들의 중심 시설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강원어르신 한마음축제라고 역시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만 다양한 축제와 노인솜씨자랑대회 등 특색 있고 다채로운 노후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강한 노년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예정임.

마지막으로 효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향민이 많은 우리 도에서는 그 특성을 감안해서 실향민 어르신을 모시고 금년에 금강산을 방문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음. 그리고 학생들에게 효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효친 앙양 글짓기나 포스터 공모전 개최와 사랑의 학당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분야의 중대성으로 신규 시책과 행정 수요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 조직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리고 정부 시책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지역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배분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따라서 도에서는 기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을 타당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전면 재검토하고 있음.

앞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나 소득 보장의 한 형태로 노인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노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 기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차원에서 지역 사회의 노인 여가 중추 시설로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로당을 실버문화 거점센터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 실태 평가를 통한 제도를 내실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한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노인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나가겠음.

독거노인 개선 부분은, 그래도 배경은 조금 말씀드려야겠기에, 2007년 12월 말 현재 저희 강원도의 독거노인은 3만 8,000명으로 집계하고 있음.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지도사 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정부의 20% 예산 절감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29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 대상자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게 되면 수혜자들이 한 달 정도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대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예년대로 지원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

질 문

강원도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파병)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지원 확충방안은?

답 변

도내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를 합하여 18,995명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역으로는 국가에서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매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7조 내지 제10조에 의거 의료지원, 양로보호, 국립묘지에의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양로시설에 무료보호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보조비 15만원을 지급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궁, 국·공립 공원, 휴양림,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도차원의 지원으로는 이미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를 포함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2006. 11. 10.)으로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와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선양사업으로는 단체운영 및 현충시설 건립사업, 선양사료 발굴사업, 전적지 순례사업, 호국안보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관련 5개 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일부 시·군에서는「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9일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중에 있고,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한「강원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동 조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겠음.

질 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 그리고 향후 지원 확충계획은?

답 변

도내 여성 결혼이민자 현황은, 2007년 말 현재 2,8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자녀는 2,985명이고,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이웃사촌 결연사업 등 열린 다문화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금년에 24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의 운영확대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은 물론 종합적인 가족복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07년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구에서 5개소가 운영하였고, 금년에 동해와 홍천, 횡성을 확대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은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여성에게 6개 권역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18개 시·군을 총괄하는 사업으로 방문 한글지도사 72명, 아동양육지도사 95명이 총 596가정을 주 2회씩 방문하게 됨.

또한 강원 열린 한마음 이웃사촌 결연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와 지역 내 기관·단체 및 여성지도자가 1:1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정서안정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아울러 도에서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지난해 11월 9일 제정하여 외국인이 불편함이 없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문제점 및 향후 지원 확충 계획은 현재 권역별로 운영되는 가족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08년 8개소에서 내년에는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결혼이민자 방문지도사 파견과 병행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대학과 4월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의 영어, 일본어 등 자국어를 활용한 방과 후 아동지도사를 양성, 일자리를 제공할 예

정이며, 133명의 통역 및 번역 인적자원을 발굴,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임.

아울러 계속 늘어나는 결혼이민자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군과 단체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음.

질 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촉구에 대하여 ①이상고온,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해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해상황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앙부처 건의실적 등)과 우리도의 대책은? ②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이외의 지원실적 현황은? 그리고 문제점과 추진대책은?

답 변

이상고온,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한 수확량 감소는 2007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8월 이후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 등으로 쌀이 10a당 생산량이 평년대비 2.6%인 12kg 감소, 과수는 당도가 낮아져서 상품성 저하됨.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문제점은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농업분야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일조량 부족과 이상고온피해 지원기준 없음.

그간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일조량 부족 등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기준을 동법에 추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07.11.20.) 하였고, 앞으로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가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농작물재해대책법 이외의 지원실적은 지난해에 우박피해 농가에 193백만 원 지원, 냉해예방용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지난해와 금년에 4억 원씩 지원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에 2개 작물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0개 작물로 확대 시행함.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으로는 대상품목이 10개 작물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농가의 가입율이 낮으며, 보험적용이 태풍, 우박 및 특약 2가지로 단순한 것임.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감자, 콩 등 5개 작목을 보험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2011년까지 재해보험대상품목을 30여개 작물로 확대할 계획임.

우리 도에서는 농가의 보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부담액의 50%를 추가로 지원('08년 보조예산 9천만 원, 300ha) 등 향후 제도개선과 농업인의 요구 및 대상품목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 농가의 가입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음

질 문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심화, 발전에 대하여 ① 우리도의 대표브랜드로 추진해 온「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현황 및 지원마을의 소득향상 등 주요 성과분석 현황은? ② 사업추진과 정의 문제점은 있었는지? ③ 향후 보완대책 및 세부추진 방향은?

답 변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전국 최초, 유일의 농어촌 혁신운동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농어민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자조정신에서 출발하여 범도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전개함.

지난해까지 175개의 우수마을을 선정, 875억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 지원, 도내 농어민들의 자신감 회복, 마을발전역량 배가, 상부상조 풍토조성, 전국단위 공모사업 선점 등의 성과 거양.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 일부 마을은 운동시작 초기의 적극적 추진열기 지속되지 못하고, 사업선정 및 집행과정에서 지역민심이 분열되는 사례 등 발생함.

향후 보완·발전 대책을 강구 부작용 최소화, 확산·정착노력 강화해 나갈 것으로, 지금까지 우수마을 선정·지원 등에 주력해 오던 것을, 앞으로 마을발전을 이끌어 가는「마을리더」육성과 기존 우수마을 「사후관리」등 소프트웨어적 시책의 보강이 필요 판단됨.

도와 시·군에서 마을지도·점검을 확행 하고 문제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및 합법성 확보 강화해 나가고, 기존 우수마을에 대한 지속화·활성화 방안 모색함은 물론 금년부터「대표모델마을」확대(2마을/2억원→3마을/6억원)으로 지속적인 추진 열기 확산, 기존마을 활성화 동기 마련함.

나) 교육행정

질 문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는 학력 향상, 농산어촌과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등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학생 수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은 없는지를 교육감님께서 평소의 교육 철학과 풍부한 교직 경험, 그리고 소신을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 변

우리 도는 농산어촌·광산촌 학교가 학교 수 대비 80% 정도 되고,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약 48.1% 정도 되므로, 그래서 정부의 기준대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시키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학교의 약 39%가 없어져야 함.

그래서 우리 도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또 그 기준대로 하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음.

첫 번째로 우선 그 지역의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70%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1면에 1개는 유지해야 되겠다, 1개면에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제외 대상임.

또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사항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폐합을 실시하도록 해서 2009년까지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도 나름대로 통폐합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인데, 그러니까 우선 70%가 동의해 줘야 된다, 그리고 1면 1교는 유지한다고 하는 것임. 거기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끔 2009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매년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음.

질 문

방과후 학교 운영을 공교육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운영 실태 및 지원 내역,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 변

강원도 방과후 학교 운영 실태는 저희 초·중·고 총 642개 교 중에서 99.2%에 해당되는 637개 교가 지금 현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참여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 23만 250명의 70.4%인 16만 2,068명임.

운영 프로그램 수로는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279개 교가 운영하고 있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초등학교가 100% 다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82.7%, 고등학교는 68.7%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중학교가 98.2%, 고등학교가 95.7%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7.4%의 학교에서 총 3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방과후학교의 지원 내역은 우선 2008년도 예산액을 보면 166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166억 2,200만 원, 2006년도에는 64억 5,000만 원, 2005년도에는 15억 원이 투입되었고 저희가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158%를 더 지원했음.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초등부 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전담 인력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래서 현직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담이 우려되고 있고, 다음에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우수 강사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

책정되어 있는 강사 비용으로 원거리의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수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다음에 방과후 학교 담당 교사들의 업무 또한 과중한 것이 사실로써, 그런 문

제점이 있고,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의 지자체 대응 투자가 추경에 의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저희의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들 수 있겠음.

개선 방안으로는 저희가 보육프로그램 시설 및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전문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겠고, 다음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인 자원이라든지 퇴직공무원, 학부모 자원, 유관기관의 인적 자원, 정부 유관 부처의 강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음.

다음에 지역 대학 및 비영리 기관의 위탁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 지역 저소득층 학생의 자율 수강권 활용은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해서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도록 하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의 지자체 대응 투자분의 본예산 편성을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학교시설 활용에 대하여 도내 학교(초·중·고)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주민개방 활용실태 및 사용료 징수와 사용현황, 그리고 개방에 따른 주민호응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대책은?

답 변

학교 시설의 개방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높은 편임. 그렇지만 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육성 종목의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

우선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고 그 방법도 학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전체 세입에 포함해서 일반과 함께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체육관사용료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입을 잡고 사용할 때는 역시 전체 세입에 포함되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호인들 관리를 잘하면 어떤 동호인들이든지,

어떤 주민들이든지 우리가 개방한 시간에만, 그렇다고 24시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에만 어느 누구든 운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그와 같은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와 같은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음.

2) 김동일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내 공중화장실 관련 ①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그동안 강원도의 노력은? ② 행사시 많은 여성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2006년도 11월에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이 법정 규정으로 개정되었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전까지는, 저희들 도에서도 2000년부터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중화장실을 계속 개선해 왔었음.

그런데 사실 그때는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을 없애고, 깨끗한 화장실 중심으로 갔었는데 사실 2006년도에 이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남·여 화장실 변기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신축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 기준에 맞게끔 해서 그 이후에 15개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고요, 문제는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576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은 화장실이 지금 현재 시행령 규정에 맞는 그런 변기 비율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더 쏟아야 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는, 이 부분을 강제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단체, 특히 시·군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수한다든가 할 때 특히

이 점을 고려해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법 규정 개정을 통해서 도나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화장실 문화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나가겠음.

특히 개정 전에 설치하여 변기 규정에 맞지 않는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마침 저희들이 현재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특히 도로변 화장실, 도로변 휴게실에 대해서는 강원도형 관광휴게소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화장실 부분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또 아까 말씀드린 행사장 문제는 제가 인제 빙어축제 때 한 번 나가서 이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화장실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해서 불편은 좀 덜어졌지만, 그래도 워낙 행사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 요새 첨단 모바일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서 나오고, 특히 여성 전용으로 별도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 같은 데에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가 시·군에 권고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강원도내 경로당시설 관련 경로당 출입구 및 2층 ~ 3층 계단 사용 시 어르신께서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세부 기준을 보면 주출입구나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여야 하고,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여야 하고, 주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 또는 승강설비 설치와 통행에 지장이 되는 턱 높이 차이는 제거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된다는 것 등임.

그 디딤판 자체가 넓이 기준이 28cm이고 높이가 18cm인데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 것임.

그래서 보완 대책으로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서는 핸드레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손잡이를 벽면이나 또는 계단에 설치해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음.

질 문

강원도내 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도내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은 여성의 경제활동보다 높음.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육성과 권익향상을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은?

답 변

우리 도에서는 2006년도에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전문 인력화, 복지 증진, 소득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을 계속 강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연차별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이와 함께 각종 농림분야의 시책사업이라든가 계획 수립 시에 여성농업인의 지원 시책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겠음.,

또한 여성농업인이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라든가 또 여성농업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장기적인 과제로 채택해서 연구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음.

질 문

강원도내 초등학교 운동장 오후개방에 따른 도민의 효율적 이용방안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학생탈선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와 지자체의 협조로 가로등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답 변

지난번 문화체육관광부 VIP 업무보고 때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스포츠 생활화, '누구나 문을 열면 스포츠'라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 단위 체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시설의 지속 확충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야간 체육 활동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운동장·체육관·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의 의무적 상시 개방 추진도 들어가 있음.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명간 공공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그런 개방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음.

그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기금이 포함되든 국비가 포함되든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군과 잘 협의하고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강원도 접경지역내 초·중등학교 관련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교육예산지원이 전무함.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우리 도는 접경지역이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춘천의 일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전 지역이 해당됨.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법의 내용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도 지사에게 주면 시도 지사님이 그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6개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체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도로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들임.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들이 교육 문제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그런데 지금까지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그 예산은 물론 거기 나오는 예산 가지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도 같은 경우에 18개 지자체에서 우리 도만큼 이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도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2006년에 160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음.

그래서 꼭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되는 예산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까지 따로 예산 편성을 안 했지만 그 밖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많으므로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하겠음.

3) 김대천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 기업유치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기업유치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중 첫째, 서울에 있는 기업이 그대로 오는 유형이 하나 있으며, 그다음에 서울에서 기업을 하다가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부지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강원도로 와서 확장을 하는 그러한 유형도 있음.

그것을 가지고 이전창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기에 따라서 기업 이전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음. 하여튼 우리도의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질 문

이명박 실용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도의 최대 현안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 정부에 적극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강원도의 어떤 전략이 있는지?

답 변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또 직접 기업체를 방문한 현장에서도 같이 토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 첨단복합의료단지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두 가지 주장과 기류가 있음. 하나는 신약제품단지, 그다음에 의료기기단지, 이것을 다 묶어서 한 단지에 넣어서 만들겠다는 그런 주장과 기류가 있음.

지금 우리 강원도처럼 신약과 의료기기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합쳐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 정책으로 또 지역의 노력으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대로 원주를 중심으로, 또 신약은 다른 지역으로 이미 투자가 되고 선택·집중이 되어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제3의 장소에 새로운 단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데를 분산해서 집중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기류와 주장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하는 부분임. 그래서 그날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공감을 가진 바가 있음.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이것을 결정할 때 이 점을 유념해서 꼭 분산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그런 근거하에서 예컨대 충북지역의 제약단지와 연관되어서 이미 투자하고 있는 것, 우리와 가까우니까, 또 원주가 의료기기로서는 전국 선두로 나가고 있고 하니까 충북지역하고 패키지로 연대해서, 크게 보면 광역적으로 클러스터가 되면서 좁게 보면 각각 분산해서 집중화시키는 그쪽으로 전략을 추진해 가려고 함.

질 문

이명박 실용정부의 2단계 조직 기능개편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직 기능을 1) 경제 복지 문화관련 조직정비 등 대국대과로 개편하고 2) 소규모 동통·폐합, 위원회 및 한시기구 일제정비 3) 인구감소지역 적정인력 규모를 재설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방침 & 강원도에 적합한 개편방안은?

답 변

우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를 들면 지난 3월 15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자치단체 경제·복지·문화 관련 조직의 적정한 개편, 또 소규모 동 통폐합, 위원회 및 한시기구 일제 정비, 또 상수도 등 사업 기능의 공사화 또는 민간 위탁,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공무원 수 조정 문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이런 보고를 쭉 했는데 이것은 당위성도 있고 방향을 바로 설정해 나가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세부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지방단위에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기본적으로 이 보조에 맞추면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기구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나름대로 개편 작업도 하고 지금 각 시·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

인원 감축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이미 1차 했지만 금년 4월부터 경제·복지·문화·농업 등 분야별로 조직진단을 다시 정밀히 하려고 함.

그래서 쇠퇴하거나 유사 중복된 사무 기능도 좀 통폐합을 하고, 관련된 인력도 조정하고, 민간 위탁 대상 사무도 발굴하고 등등 해서 추진을 하고, 또 특히 인구 감소지역의 인력 감축을, 이것은 자칫하면 전국이 획일적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정 수준으로 시·도의 실정에 맞게 분석을 해서 대처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음.

질 문

동해안 주문진의 경우 영동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이고 속초-삼척 간 중간지역으로써 대규모 해양문화촌 건설을 추진할 의향은?

답 변

관광 플러스 해양체험시설, 각종 컨벤션 시설, R&D 연구 기능까지 포함한, 그래서 이것을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리고 해양 관련 기업까지 유치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한 아이템 플러스를, 우리 도정 정책을 잘 만들어서 동해안에 획기적인 관광단지를 하나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강원발전연구원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은?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강원발전연구원의 혁신 방안이 있다면?

답 변

신청사 건립추진은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그런 제기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화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병행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니까 한 800평 정도의 사무실 부지 면적에 한 4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연구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그래서 물론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고, 또 연구원 개인 개인의 자질 향상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도 자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연구원 개인 아니면 연구원 간의 네트워크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음.

질 문

공공디자인 진흥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계획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공공디자인 엑스포 유치'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의향은?

답 변

공공디자인엑스포 유치 팀구성 등에 대하여 일단 실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음.

질 문

도내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가?

답 변

도내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이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 보았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보니까 15개 대학에 2,000명 정도의 외국인 대학생이 있

는데 사실 그게 저희 도뿐만 아니라 도에 주재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음. 협조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도도 그렇지만 법무부와 관련된 일이기도 한 사항임.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음.

질 문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 공사비 책정 관련 강원도의 입장 및 대책? 미시령터널 적자 보존액? 향후 증감 추이 정도는?

답 변

얼마 전에 서울~춘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 사업과 국가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이 입찰 방법,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됨.

우리 도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의 지분은 5%인 160여억 원으로 전부 지역개발기금에서 빚내서 투자를 하고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통행료 산정 협상 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적자폭이 2006년도 7월 1일부터 개통해서 6개월 동안에 14억 9,000만 원 적자가 났으며, 지난해에 37억 원이 일단 적자 보전이 들어왔음.

1년에 37억 원을 우리 도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것임.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적자폭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질 문

농림식품부 전환에 따른 농촌식품산업 육성에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이 예고되고 있는데 강원 농업식품 개발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 변

식품을 개발해서 자원화 하는 그런 농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농업 기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식품산업 적극 육성으로 농업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가공 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래서 이런 정부 기조에 맞도록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도의 시책이 정부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음.

5. 제185회 임시회

가. 제2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이병선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의 대책과 도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 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전략에 있어 좀더 지역특성에 따라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5+2광역경제권 계획을 밝힘.

이에 대응해 강원도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축을 형성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

①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권에 이르는 수도권 배후 신기업 벨트 축 ② 종축으로 계속 가면서 백두대간 생태축 ③ 동쪽으로는 동해안권 발전축 ④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 평화지대 축 ⑤ 폐광지역을 포함한 남부권은 고원관광휴양 축.

광역적으로는 울산 - 경북 - 강원도로 이어지는 동해안 광역권, 다음에 경북 - 충북 - 강원도 남부권을 잇는 중부내륙권, 다음에 경기 - 인천 - 강원도를 연결하는 DMZ접경지역 축,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서 이안에서 5대 SOC사업을 포함 성장동력이 되는 주요한 프로젝트들을 각 지역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런 대안을 5+2광역경제권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전략으로 마련하고 있음.

원주로 계획된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 기업도시의 경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고, 춘천의 기업도시는 MOU체결까지 한 상태로 추진 중이고 강릉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는 등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 균형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음.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추진활동을 하고 있고 지방세개편 문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임.

질 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강원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 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당초의 지침과 우리 강원도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음. 먼저 지방의 조직개편 지침은, 우선 기구는 본청 및 소속 하부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대국대과 등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인력은 비용 개념에 입각해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2007년도 말 총액인건비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에 최근 5년간 인구 증감 변동 분을 적용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증가한 정원을 감축 목표로 제시했음.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원이 129명으로 제시되었는데 저희들이 107명으로 감축 규모를 잡았음.

다음에 우리 도의 입장은 정부의 실용적 조직개편에 맞는 도 조직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획일적 감축이 아닌 순기능적 감축, 조직 안정으로 전문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기구는 쇠퇴사무 기능 및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원칙으로 했고, 필수 기구를 제외한 최소의 기구만 대과 체제로 유지하도록 했음.

사업소는 유사 기능 통합 및 민간 위탁 전환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으며, 그리고 인력은 행안부의 인구 증감 변동에 따른 획일적 기준은 우리 도에서 배

제했고 강원도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행정 및 인력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발생되므로 따라서 우리 행안부에서 제시한 인력 감축 목표인 129명 중에서 인구 증감 변동 분 22명을 제외하고 107명만 감축하는 등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음.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다음 달에 상정하겠습니다만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 그렇게 규정을 두어서 공직 안정에 힘을 쓰겠음.

그리고 초과 현원 107명은 지금 경제라든가 FTA, 관광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 봤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었고, 반면에 최근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 및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지방정부의 조직도 작고 알뜰한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해당 부서의 관계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다만, 정부가 강원도의 면적이나 산림, 물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 강원도의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감축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그래서 도에서는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조직을 정립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하며, 기능과 조직의 광역화를 통해서 신규 현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여건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양양국제공항의 운영 실태와 향후 활성화 대책은?

답 변

김해노선 조기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해양부, 대한항공 등을 방문 도차원의 재

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운항재개를 위해 대한항공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양양-김해노선의 조정안은 주 4회에서 주2회 감편을 하되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탑승률 적자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임.

백두산 관광의 거점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왔고 국내선 취항 항공사의 결손보전금·모객장려금·홍보비 등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의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고, 양양공항을 출발할 때 국제선 개설 및 신설 항공사에 우선 취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요청을 하고 있음.

국내선의 경우 전담 여행사를 통한 홍보 강화와 탑승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저비용 항공사 유치 등 노선을 다양화 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 국내 여행사가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 공항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계절상품을 활용한 부정기성 전세기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

질 문

도내 18개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문제점과 향후 전망은?

답 변

기 조성된 도내 산업단지는 총 35개소 9,159㎡이며, 1,04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지난해 10월 완공된 횡성 공근 농공단지가 공사완료 이전에 선분양 되는 등 기업환경이 어려운 태백장성 농공단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됨. 이에 따라 추가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한 형편이며,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각테크노밸리 전략을 기반으로 한 지역특화 전략 산업단지 27개소 12,106㎡를 신규 조성중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허가가 많고 복잡하여 처리기간이 2-4년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6월 5일 공포함. 이에 따라 종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2단계의 인허가를 산업단지 계획으로 통합하고 개별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재해영향 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통합 실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기

간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모든 건설공사가 실시대상임에 따라 조사기관 부족으로 신청 후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대기기간이 현재 6개월 이상 걸리고 있고 또한, 대부분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부담 등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정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음.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향후 전망은 도에서는 신규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조성이 최대한 조속히 완공되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확대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하는 등 기업유치 노력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음.

질 문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에 따른 동해안권(강원, 경북, 울산) 블루벨트 대책과 문제점은?

답 변

강원, 울산, 경북 등 3도가 공동으로 입안한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동해안 3도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거점발전을 위한 공동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7월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으로 정부에 승인을 요청함.

종합계획 수립 후 동해안 발전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위해 10월중 24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실시계획 수립, 사업자 지정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 구체화할 것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3도 공동이익이 합의 도출되도록 공동노력이 필요하고, 종합계획 반영사업의 정부계획 반영과 재원확보 등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3도 공동노력과 지원을 다할 계획임.

나) 교육행정

질 문

BTL 사업의 현황과 장·단점 등 문제점은?

답 변

저희 BTL 사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축 2개 교, 신설 3개 교, 체육관이 45개 교 해서 50개 교에 대해서 999억 9,200만 원이 투자되어서 지금 준공되었거나 공사가 추진 중에 있음.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고유가에 따라 3개 학교에 대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속초여중, 거진중학교, 조양초등학교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 건설사인 양우건설하고 태양건설 종합주식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태양건설 주식회사에서 이 공사를 기피하였음.

그래서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제명 처리를 해서 지금은 양우건설에서 6월 24일자로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5월 26일 교과부에서 건축 BTL 사업 물가변동분 반영 방식 변경이라는 공문이 왔음.

그래서 그게 재정경제부에서 5월 20일자로 물가 사전 반영을 전에는 물가 인상 요인을 3%로 추정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물가변동분을 감안하지 않고 불변가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나중에 물가변동분을 별도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음.

그래서 기 협약 업체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되고 신규로 하는 데는 전액 그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시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재정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 원 정도를 재정적으로 투자해야 함.

2) 김시성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잘못된 “미시령 통행량 조사 용역보고서”에 대한 책임문제? 미시령 터널의 계속되는 적자부분에 대한 강원도의 향후대책은? 미시령터널 이용 영동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 문제?

답 변

미시령 터널 실시설계 당시 3,0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 재정여건상 대안으로 제시된 민자 유치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 추진을 하게 된 것임.

교통량 조사의 경우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6월,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에서는 10월에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교통량 조사 결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또한 교통량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는 당시의 사회 지표와 영동북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연계교통망 건설계획 등을 분석한 연관 교통량을 낸 것임.

2006년 터널 개통 이래 2007년까지 통행료 보존금액이 52억여 원이고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 중장기 대책을 강구중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영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의 경우 통행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존금액의 증가 등으로 도 전체의 세금으로 보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설악권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 방안, 대책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인 “설악권 리조트 테마파크” 추진상황? 설악권 집단시설 재정비 추진상황? 설악동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답 변

경관 관광도 있지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몇 가지 구상하는 것들이 있음. 예를 들면, 양양의 민자 사업, 속초권의 설악동 재개발 사업, 전용 쇼핑 공간 조성 등 노력을 하고 있음.

강원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속 긴장하고 신경을 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 이며, 설악권을 비롯한 기존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예산 투자 등에도 확대 노력해 나갈 것임.

질 문

강원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마케팅 전략은? 동해안 관광 개발 관련 추진사업 현황은?

답 변

타 시·도의 특성화된 관광정책으로 인해 강원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강원관광이 한 걸음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호기로도 볼 수 있음.

정부의 관광정책과 타 시·도의 추진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 청정성을 토대로 하는 생태관광자원 육성 또는 세계에서 유일한 DMZ를 활용한 관광자원, 폐광지역과 백두대간 등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강원도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

정부에서는 현재 동해안권 개발 계획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동서남해안권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차원에서 대응해 나간다면 좀더 발전적인 관광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질 문

동해안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은?

답 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철책선을 경관펜스로 대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현실을 인정해서 2007년도에 중앙 5개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동해안 철책선 철거계획을 2007년 5월 31일 확정하였음.

2007년부터 철거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1차 단계인 2009년까지 전체적으로 절반정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007년부터는 경관펜스로 하지 않고 철조망 대신 감시할 수 있는 과학 장비로 대체하고 있음.

질 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 및 어민 지원 대책은?

답 변

어업의 경우 생산비의 50%정도를 유류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 강원도의 경우 면세유 인상 차액분이라든지 영어자금 이차보전 이라든지 재해예방을 위한 어선 보험 일부 보전이라든지 이러한 자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향후 계속되는 유가상승에 따른 항구대책으로 국가에서 하는 감척사업이라든지 유가환급금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업구조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라고 해서 적정 어획량을 조절하는 제도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하여 도나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나) 교육행정

질 문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문계(보통과) 고교로 전환에 대한 문제?

답 변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는 전국적인 상황인데 일반계 고교로의 요구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이것은 일반계 고와 전문계 고의 비율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일반계 고와 전문계 고의 학생 비율을

따지면 전문계가 27.4%, 일반계가 72.6%인데 유사한 타 시·도와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낮음. 예컨대 충북이 전문계가 36%, 충남이 30%, 경북이 30.8%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무조건 요구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일반계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대학을 가는 데는 전문계가 훨씬 유리함. 예컨대 전문계 특별전형이 있는데 5%를 특별전형하는 것이 있고, 또 수능에도 직업탐구능력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만 응시가 가능함. 세 번째는 내신 관리도 전문계가 낫기 때문에 실제 대학을 가는 데는 일반계보다는 전문계가 훨씬 유리함.

3) 김동일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도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경영부실과 만성 적자 누적에 대한 강원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답 변

IMF당시인 98년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조정이 있은 후 지금까지 정원을 재조정하지 못한 결과 정원대비 109명의 현원이 과원이 된 것으로, 2007년도 을지대학병원의 용역 결과 현재 의료원의 병상 수 또는 규모로 봤을 때 현 인원이 필요한 인원으로 판단은 되나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임.

공보의 보다 봉직의와 관련된 실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 도의 여건상 유능한 봉직의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초래 되는 결과임.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목적 달성 수행을 위해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선 자체적인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제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관된 모든 주체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

질 문

강원도민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서민경제 진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기업유치 등

산업경제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① 2010년 까지 일자리 5만개 창출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이에 대한 견해와 현실적인 대책은? ②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③ 고유가 현상에 대한 사회적 전반적인 강원도의 대책은?

답 변

① 일자리 5만개 창출계획은 기업유치, 공공분야 대형 프로젝트, 관광레저 시설유치 등 기반조성과 경제진흥에 따라 얻어지는 경제적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까지 13,830개, 금년도에 10,300개, 앞으로 25,900개를 창출목표로 함.

지금까지 창출 실적으로는 2007년까지 16,527개를 창출하였고, 금년 1/4분기 1,084개를 창출하여 총 17,611개로 목표(5만개)대비 35%를 달성하였음.

경제적 주변상황으로 유가급등에 의한 사회전반에 걸친 건설경기 부진 등 경기침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정부 분권화 정책 추진 지연, 기업의 투자위축과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등 주변여건은 좋지 않음.

그러나 적극적 기업유치 노력, 관광레저 시설 유치 등의 경제 진흥 전략에 의해 일동후디스를 비롯한 중·대형 기업의 가시적 이전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알펜시아 등 대형프로젝트도 지속 추진되고 있으므로 금년 10,300개 일자리 목표달성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② 소비자 물가와 관련 최근의 물가동향은 전국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작년 4/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전월대비 0.9%, 전년 동월대비 5.6%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타 시·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이는 대도시 유통센터를 거쳐야 하는 유통구조상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도에서는 최근 물가여건을 반영하여 도차원의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 시행하였음. 우선, 물가인상심리 차단을 위해 도와 시·군관리 공공요금을 금년내에는 지속 동결해 나갈 방침이며,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중인 강원물가정보망 기능을 확대하고, 또한 물가상승 단계별 기관별 자동대응 매뉴얼 지침화하여 체계적인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역할분담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자율참여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으로 앞으로 도와 시·군의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③ 고유가 현상과 관련 도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산업경제분야 6대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 추진하는 등 장·단기적 관점에서 고강도 대책을 실행하고 있음.

우선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보호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범도민 에너지 절약운동의 전개로 생활속 실천 가능한 12대 과제를 강력히 실천하도록 하고, 범도민 에너지 절약 실천 참여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 한편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과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우선 친환경 청정에너기 개발을 도모해 나가고, 친환경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의 조성과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내 최고, 최대의 풍력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초고유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도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음.

질 문

FTA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축산(한우, 육우, 돼지)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보호대책은?

답 변

도에서 축산농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6일 농업인대표, 농·축협, 시군관계관 등 25명이 참석한 농가경영 안정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료가격 인상에 따

른 도 차원 지원과 유기질 비료 보조율 인상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가경영안정 종합대책에 반영함.

5월 1일에는 한미쇠고기 협상타결 관련 축산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에 반영함.

강원도 한우발전대책 주요내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화, 규모화를 촉진하고 청정성과 안정선 확보로 소비자 신뢰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세계 최고품질로 차별화된 강원도 한우 통합 명품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대책의 주요내용임.

또한 강원도 양돈업 대책으로 도에서는 청정,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구축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14개 사업 948억원을 투자하여 품질고급화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시설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완벽한 분뇨처리로 친환경축산 경영 및 분뇨 자원화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가축질병 근절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등 양돈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음.

4) 권순일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강원 관광정책 관련 강원 관광의 중심방향(포커스)은 무엇인지?

답 변

강원관광의 중심방향은 한국관광의 1번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관광허브에 두고 이것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고품격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볼거리나 즐길 거리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최근의 관광형태의 변화에 따른 관광을 통해 직접체험을 하는 부분에 집중, 관광서비스의 질을 선진화 하고 고급화 하는 정책에 치중, 대외적인 홍보 강화와 해외 마케팅에 대해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함.

강원도의 대표 관광 상품 중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는 동강 생태체험관, 인제 생명동산 조성 등 자연을 모토로 하는 청정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환경부나 문화관광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 문

도내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에 대하여 폐광지 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및 향후 대응 방안은?

답 변

2004년도에 동해시의회에서 처음 정부에 건의한 이후로 여러 가지 관련 근거라든가 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있어서 탄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광종과 관련해서 석회석 분야만 폐지 지원을 하기에는 어렵고 이것은 여타 광종하고 마찬가지로 사기업인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시설한 지역에 정부에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임.

그래서 특별법 제정보다는 광해방지법에 저희들이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항목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음.

앞으로 특별법의 제정은 제정법대로 가더라도 조금 더 수월한 광해방지법에 관련 조항을 넣어서 그런 방향으로 석회 광산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함.

질 문

도내 복지 관련 정책 및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답 변

시설 평가시스템은 정부차원과 도에서 하는 방식 두 가지로써, 보건복지가족부

에서는 사회복지법에 의거 전국을 여러 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가장 규모도 크고 신뢰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고,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한 평가 결과를 환류 시키는 일을 하는데 중간에 현장점검이라든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확인점검 관리를 하고 있음.

새로운 정부 초기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당초예산을 배정 받은 것 조차도 아직 확대 시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추가 확정내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 등 노력하고 있음. 도 사회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 관리체계에 대한 기본 매뉴얼 정립 등 재검토 추진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중학교 학군제 폐지에 대한 도의 의지와 신규 설립 학교와 기존 학교의 시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답 변

동해시가 특수한 경우로 1996년부터 학군제가 아닌 공동지구로 운영하고 있어 희망초등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학군제를 폐지할 경우 또 다른 불만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학군제 운영에 대하여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차, 2차, 3차까지가 있는데 2004년까지 마쳤음. 2005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유형별 사업 위주로 하였는 바 종합적인 만족도를 충족할 수 없어 학교별로 집중투자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이에 따른 재원은 가능한 한 지자체의 협조를 받고, 도 출신 출향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지원협의회 발족을 통한 재원의 확보 등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나. 제3차 본회의 질문 및 답변 요지

1) 이영덕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소방서 미 개설 지역 추진에 대하여 미개설 소방서 설치년도 및 위치 결정?

답 변

소방서 미설치된 7개 군지역(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은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횡성군, 2010년도에 평창군, 2011년도에 인제소방서를 신설토록 하고, 나머지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소방서는 2012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임.

소방서 설치기준은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시·군단위로 설치하고 있는데 해당 시·군의 소방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서 설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기준이 상위에 있는 군의 경우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지연됨에 따라 보류가 된 것임.

평창소방서 신설부지 선정문제는 도가 향후에 평창군과 평창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음.

질 문

도민체전 미개최 시·군 순회개최 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미개최 사유, 미개최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

답 변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개최 시 시·군에 대한 배려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체전 개최 시 시·군의 시설여건과 재정부담, 대회유치 의지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함. 개최지 결정은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각 종목별 시설 수용능력이나 자치단체의 개최의지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임.

향후 미개최 시·군에 대한 배려와 인접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분산개최를 하는 방안 등 시·군의 경제유발 효과 및 체육인프라 구축 등이 될 수 있도록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질 문

상수도 누수율 개선대책에 대하여 시·군 운영 상하수도 누수율이 높아 주민에게 요금이 전가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답 변

도내 18개 시·군에 현재 93개 정수시설이 있는데 전국평균 누수율 15%를 훨씬 상회하는 28%의 누수율을 나타냄으로써 연간 512억 원에 해당하는 누수환산액을 보이고 있음.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도내의 경우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고 지형적으로 표고차가 심하고 취수원과의 거리, 상수도 사업의 영세성과 소규모 취·정 수장이 다수 산재돼 있는 것이 주요인임.

국·도비 지원 없이 시·군 재정에 의거 운영되는 사업으로 누수의 원인인 노후관 교체를 위한 재정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 최근 국비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2008년도부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

현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물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누수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투자를 한다면 18%대정도로 누수율을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관건이 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음.

2) 남경문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폐광지역 활성화에 대하여 폐광지역의 토지효율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별계획지역을 지정하여 용적율 및 고도제한을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 변

고한 사북지역은 2003년도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대폭 늘리고 자연 녹지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용도를 높이게 하면서 다만 도시 미관 같은 것을 고려해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했던 것임. 현재 카지노가 활성화되어 가는 등 현지 지역여건들을 고려했을 때에 용적율과 고도 제한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또한 수익률을 좀 높여서 투자를 활성화 시켜 주거 수급 공급을 늘리도록 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음.

질 문

강원랜드 배당수익금 재투자에 대하여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를 통해 강원랜드에 2대주주로 참여, 배당수익이 강원개발공사에 귀속 사용되고 있음. 수익금 일부를 폐광지역 주택난해소 및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주거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 변

2008년까지 강원랜드에 출자해서 받은 배당금 수익은 385억 원 정도 되고, 주식은 계속 보유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배당금 수익금으로 사북 고한지역에 대한 주택사업을 위해 투자해 나가기는 액수가 적은 실정임.

도에서 배당이익을 환원도 시켜주고, 폐광지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고 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일부 꼭 필요한 주택사업도 하고 있음.

폐광 사북 고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도 직접하고 또 민자 아파트 등등 공공주택 건설도 있고 해서 축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 추진 계획도 있음.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경영계획도 있으므로 그것을 전부 분석해서 폐광지역을 위한 임대아파트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임.

동원탄좌 지역 300세대 이주 문제와 강원랜드가 개발섹터 안에 들어서 이주하지 못하는 문제 등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 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종합계획 수립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출산·양육 지원조례 제정과 노인 장기요양제도 내용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 방안 등)

답 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을 지원하는 조례보다 진일보한 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를 준비하고 모든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내용으로는 가임 젊은 여성층과 젊은 남성층의 경제적 활동이 수월하도록 가능한 일과 가정이 양립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우리 도에서 특징적으로 0세에서부터 대학 입학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이음새 없는 아주 최소한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중 셋째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입학등록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전 학년 등록금을 지원해 줄 예정이고, 0-5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일반가정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음.

당장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므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확보를 해나갈 것이고, 조례안에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와 함께 민·관이 합쳐서 출산·양육 후원협의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 관 베이스와 함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적인 도내 기구로 2개가 운영이 되겠음.

나) 교육행정

질 문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군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8개시·군중 6개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수농산물 지정에 한우쇠고기를 추가하는 것은 현재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쇠고기의 우수농산물 지정에 한우를 추가할 것인지, 수입쇠고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답 변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도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하였지만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음.

3) 김양호 의원

가) 강원도정

질 문

삼척 제4 LNG 생산기지 유치를 위한 그동안 강원도 차원의 대책 및 방파제 건설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답 변

근본적으로 항만 건설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므로, 호산항 지역이 최종 입지로 확정이 될 경우 국가지정 항만으로 지정 전액 국가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등 적극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나, 국가지정 항만으로 지정받지 못할 경우 부산시의 사례 등을 참고 서로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생각이고 도와 시의 부담문제 그리고 인접부지에 종합발전 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남부발전(주) 측과의 공동부담 등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가 성공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임.

삼척지역을 LNG생산기지화 하면서 에너지의 산업단지를 중심지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울산하고 경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해안 일정벨트를 에너지벨트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방제산업단지도 하고, 종합발전단지하고 첨단LNG산업단지를 하고 하면서 삼척을 포함 동해항과 강릉 일부지역까지 포함, 결국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켜 이쪽 지역을 종합발전단지 지역으로 가려고 추진할 생각임.

최종입지 확정 문제를 포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차 내일 출장을 가는데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른 변수가 없도록 확실히 하고 7월 초쯤이면 그것을 확실히 붙들어 매는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있으며, 유치했을 때

공사기간 중에 고용효과가 1일 1,000여명 정도해서 연간 30만 명 창출이 되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300-400명 내외의 상주 고용효과가 생길 것이며, 지방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한 규모로 진전될 것임. 이외에도 천연가스 공급으로 인한 경제의 안정성과 주민생활 편익 또 국가전략산업의 발전 등 이지역이 장차 종합발전단지로 발전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SOC사업의 개선효과를 거양하게 됨.

질 문

수도권 규제완화, 5+2 광역경제권과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하여 정부의 서·남해안 초광역 경제권 개발구상에 따른 정책변화의 가능성과 지방정책 실종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전략은?

답 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방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흡수할 여력이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조이므로, 13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과밀반대연대 시민모임 등과 전반적인 연대를 통해서 더 이상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논리도 개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5+2광역경제권중 강원도는 특별지방광역경제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발표 이후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방침이나 내용에 대한 것은 없었고, 9월까지 어떤 기본안을 구상할 것으로만 확인이 된 사항으로 남해안쪽 선벨트와 관련한 청와대 국정수석의 발언 내용을 보기는 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음.

동해안발전특별법은 동해안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보장이 취지이고, 남해안은 다도해 지방의 규제완화가 서해안 쪽은 특정지역개발이 그 입법취지이므로, 우리 도에 실익이 되는 쪽으로 후속조치를 정부하고 잘 협의 처리해 나 갈 것임.

향후 20년 정도이후 동해안 지역의 비전을 가지고 전략구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일 경북·울산과 함께 기본데이터에 근거해 논의를 할 계획임.

질 문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답 변

당초 계획 당시 9개 사업에 1,267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397억, 지방비 170억, 민자가 700억 원이었었는데 민자 부분은 새롭게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현재의 시설들, 삼탄시설이나 도계 사택부분 등을 민자 투자로 감안해서 재원에 포함했던 것인데,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민자 부분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고, 사업은 삼척지역 3개중에 2개 사업이 포기를 해서 조정이 된 것임.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조정하여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현재 시·군이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지난 5월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임.

질 문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상황과 관련하여 피해복구 조림지의 사후관리와 활척이 저조한 임지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산불피해 면적은 국유림, 민유림 합쳐서 2만 3,000ha정도이고, 복구는 1만 2,000ha정도를 인공조림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은 복원 쪽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복구예산은 986억 원이었음.

수종은 전문가나 교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50여종을 선택하여 결정 한 것이고, 활착율은 당해 연도에 조사하였는데 작은 나무는 98%, 큰 나무는 92-93%정도 되었음.

동해안 산불피해 4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보완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완 조림을 하도록 하겠음.

제4절

행정사무감사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개 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0월 21일 개회된 제1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12명, 기획행정위원회 10명, 교육사회위원회 9명, 산업경제위원회 10명, 관광건설위원회 10명으로 전의원이 참여하였다.

나. 자료 제출 요구

1) 감사 자료의 요구 현황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총 874건으로서 강원도에 754건, 강원도교육청에 120건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요구 자료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임위원회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총 계		874	15	234	250	132	243
강원도	소 계	754	15	234	130	132	243
	공보관실	4					4
	국제협력실	17		17			

구 분		상임위원회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강원도	감사관실	25		25			
	기획관리실	48		48			
	자치행정국	65		65			
	환경관광문화국	130					130
	보건복지여성국	109			109		
	농정산림국	53				53	
	산업경제국	39				39	
	건설도시국	104					104
	소방본부	17		17			
	미래기획단	18		18			
	동계올림픽유치단	12		12			
	농업기술원	19				19	
	공무원교육원	9			9		
	보건환경연구원	5					5
	강원도립대학	12			12		
	환동해출장소	21				21	
	의회사무처	15	15				
	강원발전연구원	7		7			
	강원도개발공사	14		14			
	강원도체육회	11		11			
교육청	소 계	120			120		
	강원도교육	120			120		

다. 감사 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 11월 27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기획행정위원회

2006년 11월 21일 평창 동계올림픽수해복구현장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22일 감사관실, 국제협력실, 23일 미래기획단, 기획관리실, 24일 동계올림픽유치단, 자치행정국, 28일 소방본부, 29일 강원도개발공사, 30일 강원도체육회,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 11월 21일 보건복지여성국을 시작으로 22일 도교육청, 23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8일 강원도립대학 시설 현지 확인, 29일 도교육청 관련시설 현지 확인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지 확인을 하였다.

4) 산업경제위원회

2006년 11월 21일 농정산림국을 시작으로 22일 농업기술원, 23일 환동해출장소, 24일 수산자원연구소, 27일 산업경제국, 28일 감자원종장, 29일 산채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5)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 11월 21일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22일 건설방재국, 23일 환경관광문화국, 27일 건설방재국 현지 감사, 28일 환경관광문화국 현지 감사, 29일 도로관리사업소의 현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감사 결과

1)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2006년 12월 15일 제17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

차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되어 2006년 12월 15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으로 이송하였다.

구 분	합 계	시정·처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계	208	208	-	-
의회운영	9	9	-	-
기획행정	44	44	-	-
교육사회	53	53	-	-
산업경제	76	76	-	-
관광건설	26	26	-	-

2)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결과 요지

가) 기획행정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 제 협력실	1. 부문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11개국 14개 지방정부에 대해 현 교류관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류가 전혀 안되는 곳은 정리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협정체결지역 중 교류가 미흡한 지역은 - 자매결연 6개 지역 중 • 미국 콜로라도주(91.12.10.) 1개 지역과 - 부문별 협정 8개 지역 중 4개 지역임 • 미국 네바다주(98.2.12.) : 경제 • 남아공 음뿌말랑가주(00.2.21.):관광 등 • 우크라이나 오뎃사주(00.4.7.):관광,문화 • 멕시코 오와하카주(00.7.18.):문화,체육 등 ※ 부문별 교류는 '99 국제관광EXPO시추진 ⇨ 거리, 현안 협력사업의 미흡 등 교류가 저조한 지역도 있으나 협정파기는 국제관례와 향후 재개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코자 함
	2.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제도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2004부터 독일도민회와 공동추진 - '04 : 모범청소년 15명 (항공료 자담) - '05 : 탄광지역고교생 16명 (전액무료) - '06 : 탄광지 16, 접경지10 명(전액무료) ⇨ 효율적 연수를 위해 문제점 개선 및 대상자, 방문지역 등 계속 보완 발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 제 협력실	3. 속초항을 통해서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연해주 방문 시 인천공항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속초항을 적극 활용 하도록 강구해 주기 바람	○ '06.12월 현재 연해주 방문방법 - 속초 ↔ 블라디보스톡 (동춘항운) ※ 주1회, 22~24시간 소요 - 인천 ↔ 블라디보스톡 (항공편) ※ 수시, 2시간 소요 ⇨ 백두산항로 이용 시 과다한 시간소요로 출장기간 연장 등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백두산항로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단체여행 시에는 속초항 이용을 적극 권유하겠음
감사관실	1. 애향파수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위촉방안에 대해 현 시장 · 군수가 아닌 NGO 등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애향파수관 운영규정 개정('06.8월) • 시장 · 군수 추천 없이 도지사가 직접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애향파수관 일제 정비결과('06.9월) • 해촉 : 활동실적이 저조한 자 25명 • 위촉 : NGO단체 임직원 등 37명 ○ 향후 추진계획 - NGO 임직원 등 제보능력 우수자 위촉 확대 • 활동실적이 저조한 자를 해촉하고 • 관련 NGO 단체 등 추천 및 기타 제보능력을 갖춘 인사 등 선정 위촉 확대 → 매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 - 활동우수 애향파수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해외연수기회 부여, 도지사 표창 등
	2.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같은 사안을 유사한 여러 건으로 소 제기할 경우 하나의 사안으로 보아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 수임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 같은 사안을 동일 시점에 유사한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여러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분류하여, - 사안의 내용에 따라 승소율이 높은 고문변호사 1인을 선임하고, - 변호사수임료 약정 시 개별사건으로 위임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협의 · 약정, 수임료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절감 추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감사관실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좋은 제도이므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 고충민원 조사 · 처리를 담당할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설치근거법령 제정 · 공포 ('05.7.29.) - 고충위에서 관련조례 제정과 직제 · 인력 및 운영예산 확보 등 기구설치 요청('05.10.28.) ○ 기구설치에 대한 검토 결과 - 주요기능 : 민원인 권익구제, 불합리한 제도개선, 민원안내 등 - 위원회 구성(10명) : 부교수 이상, 판 · 검사 및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등 - 사무기구 설치 • 설치규모 : 과 단위 • 직제 :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직속 - 문제점 등 검토 • 시민고충위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을 지자체 자체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 현 정원을 조정 · 설치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 고충위에서 행자부와 정원확보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나 답보상태임 • 시민고충위 설치 시 고충 · 고질민원의 경우 감사부서 이첩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무중복 우려 ※ 모든 민원을 시민고충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조정 · 권고기능 밖에 없어 옥상옥 위원회로 전락 우려(타 시도 미설치) ○ 향후 추진계획 - 고충위와 행자부간 사무기구 설치, 정원확보 문제 해결 이후 설치 검토 - 타 시 · 도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시행착오의 최소화 - 감사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이후 관계 법령과의 관계 등을 재검토 후 설치 추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감사관실	4. 시 · 군의회 감사를 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크게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	○ 기 조치한 사항 - 시 · 군의회에 대한 감사실시 근거 마련 • 강원도 감사규칙 개정('06.11.10.) ※ 개정내용 : 감사대상을 시 · 군 본청, 직속기관에서 의회부서 추가 ○ 향후 추진계획 - 시·군 정기 종합감사시 시·군의회 감사 강화 •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추적 확인 및 장기 휴면계좌 확인 등
	5. 향후 시군 감사 시 인사와 복무분야의 감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람	○ 그간 시 · 군 인사분야 감사실태 - 시 · 군 종합감사 시 인사와 조직,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공정성 · 형평성을 벗어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법령 위배사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음 ○ 앞으로도 - 위와 같은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하되, - 특히 신규임용 또는 승진자에 대한 후보자 명부 작성과 임용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를 강화할 계획임
기 획 관리실	1.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도의 대응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 수도권규제완화 입법 저지 -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하여 법률 제 · 개정 저지 ○ 비수도권의 규제사항 완화 추진 - 토지이용 용도지역 지정 축소 등 - 규제법률 개정(의원입법 추진) ○ 수도권과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한강수계 물관리, 관광, 교통, 접경지역관리 등 ○ 정부 및 정치권의 수도권규제완화 동향관리 → 신속한 대응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구심 대응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기 획 관리실	2. 시군에 대한 재정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추진하여 주기바람	○ 현행, 행자부 주관 기초 및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석 실시 결과 페널티, 인센티브 부여 ○ 도 자체 실시여부는 가중 제재 측면도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시행여부 결정
	3.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운영되어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정비하여 주기 바람	○ 93개 위원회-법령 66, 조례 25, 훈령 등 2 ○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추진 - 기능중복, 유사위원회 통·폐합 -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지속 건의 - 여성위원·시민단체 추천위원 확대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호혜적 원칙에 따라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은 상호 호혜 및 신뢰를 기반으로 중앙·각급 단체로부터 모범적 사례로 평가 ○ 향후에도 농·수산업, 한방 협력 사업 추진 등 북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내실과 효율을 도모하겠음
	5. 도내 원어민교사 확대배치관련, 배치기준에 의거 접경·폐광지역 등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교육청 점검도 아울러 추진하기 바람	○ 배치실적 : 225 → 99명(44%) - 접 경 : 26 → 22명(85%) - 폐 광 : 42 → 29명(70%) - 농·도심 : 157 → 48명(30%) ○ 현지점검계획수립 추진('07. 5) ⇨'10년까지 225명 배치 목표
	6. 재정보전금 등 시군 교부시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배정 추진바람	○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개정 추진('07. 상반기) • 인구수 60% · 인구수 50% ⇨ · 도세징수40% • 도세징수40% · 재정력역지수10%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기 획 관리실	7. FTA체결이후 사실상 학교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불가능 하니 미제정 시군에 대하여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기 바람	○ 학교급식식재료지원조례 미제정 시군 제정 촉구('07. 1.12.) - 동해, 삼척, 홍천 등 7시군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추진('07) - 2개 군(철원·화천), 665백만 원 ⇨ 2011까지 도내 전체학교 확대시행
자 치 행정국	1. 도유재산을 기 임대한 자가 재임대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길 바람	○ 도유지(농경지) 불법전대 관련 도·태백시 합동 현지확인 실시 - 일시 : 2006. 11. 29. ~ 12. 1. - 대상 : 태백시 일원 표본지역으로 설정 • 99필지(田) / 509,834㎡ - 확인자 : 4명(도 2, 태백시 2) - 확인방법 : 현지 농가방문 탐문조사 실시 • 무사마귀병 약제수불대장 및 호우피해 농가 조사자료 등 확인 • 약제수불자, 실경작자, 임대인 청문 실시 확인서 징구 ○ 현지 확인 및 조치결과 - 불법전대행위 적발 : 2명(3필지 /39,334㎡) - 대부계약 해제조치 : 2006. 12. 15. ○ 향후계획 - 매년 4~8월 실시하는 정기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1만㎡이상 대규모 농경지에 대해 도에서 직접 샘플링 조사 - 태백시 일원 도유지 불법 전대 행위 지속관리. 향후 영농철에 정밀 실태조사 실시
	2. 다면평가제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이나 30%를 반영하는 것은 타 시도에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토해주길 바람	○ 다면평가 반영비율은 2004년 제도도입 당시 20%로 하였으나 평정결과 반영 정도 미흡, 2005. 7월부터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30%로 조정한 바 있고, 16개시도중 4개시도가 30%, 7개시도가 20%를 반영하고 있음 ○ 반영비율의 조정은 하위직 승진과 직결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평정방식의 변경 등과 연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 치 행정국	3. 지방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준수 및 자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시간외근무 확인 방법이 자치단체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지문인식기, 카드체크기, 대장작성 등)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도 자치단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등 ○ 시간외 수당은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도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 그러나, 앞으로 도 및 시군에서 시간외수당운영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자체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음
	4.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군과 협정 체결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자치단체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자치단체별 직장협의회의 반대 등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도·시군간 인사 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한 바 있으나 시군 별로 여건이 달라 통일된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도·시군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5. 도청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설문을 재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길 바람	○ 2007년 2월중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재설문을 실시하여 ○ 설문결과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소방본부	1.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전에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 소방검사 민원담당자 직무교육 실시(월1회) - 엄정한 법집행 및 불이익 처분 사전 방지 지도 ○ 주요 업종별 위반 사례 홍보 -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연2회) - 민원업무 처리 시 주요 법령 위반 사례공지 (안내문 배부 등)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소방본부	2. 행정대집행 등 각종 협조 요청 시 협조한계를 감안하여 과잉 진압이 안되도록 해줄 것	○ 처리결과 : 본부장 특별지시 2회 - 과다 소방력 지원 지양 - 상황별 신중한 검토·조치 - 월1회 이상 교양교육 ○ 향후계획 - 소방력 지원 및 현장 활동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철저 - 교양교육 정례화(월례조회 등)
	3. 상업밀집지역 등 전기 취약지점은 단순한 홍보로는 부족하며 특단의 대책 필요	○ 소방 검사자의 전기안전공사 등 교육 기관의 교육 기회 부여 - 전기 분야 기본 지식 습득 ○ 소방학교에 전기·가스시설 등 전문 교육과정 개설 건의 ○ 주요 화재 취약 지구 소방검사 시 합동점검 정례화(전기안전공사 등)
	4. 여성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강구 필요	○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 대회 개최 - 시 기 : '07. 9월 - 종 목 : 심폐소생술 등 - 목 적 : 여성대원 응급처치능력 향상 및 대원간의 화합단결 등 ○ 면지역 여성의용소방대 확대 - 20개대 600명('07년) ○ 부부 의용소방대원 인센티브 부여 - 자녀 장학금 우선 지급 - 각종 포상 추천 시 우대 등
	5. 영서지역 의용소방대에 산불진압 방연마스크 등 최소장비 지급 검토	○ 영서지역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 개인안전장비 지급 - 대 상 : 88개대 3,800명 - 지급장비 : 고글, 방연마스크 - 지급방법 : 산화출동이 많은 지역 순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추진 ※ 영동지역 : '06년 旣 지급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소방본부	6. 차량보강 5개년 계획 추진 시 초창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07.~11.) 수립 시 반영 - 진압 차량 우선 교체 - 전체 노후도 판단 조기교체
	7. 노후 차량 중·고가차, 굴절차 등 고층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부터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검토	○ '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07.~11.) 수립 시 반영 - 고가차 및 굴절 차량은 국비보조사업 추진 - 노후 차량 우선 교체 (속초, 강릉 : 08년 반영) - 기준 대비 부족 시·군 우선 배치 (정선, 양양 :'09년)
	8.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소방서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설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09년 평창소방서 설치 - 6개 군(횡성, 인제, 화천, 양양, 양구, 고성)은 소방 수요 등을 고려하여 08년 이후 계획 수립 시 반영
미 래 기획단	1. 철원평야 지역의 땅값 상승 등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요망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난개발 대책 수립 시행 - 도, 철원군 부동산 투기 대책반 운영 - 거래,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중개업소 지도 점검 - 투기 발생 우려가 현격히 증가 시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2. 혁신 포스터, 표어 등 관련 문구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혁신 표어 및 포스터는(06.5.16.~6.30, 4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07년에는 주민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공모 우수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보완
	3.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시 참여 기업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한 업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 참여기업 기업신용도 등 적합 여부 검토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규정에 의한 전담 기업 출자 자격기준 적합업체 참여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BBB 이상) - 출자 자격 기준 미달 기업도 건실한 업체는 건교부 승인 후 참여 검토 (출자 자격 완화 관련 법 개정 중)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미 래 기획단	4. 직원들의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벤치마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 지역발전 및 미래성장 전략수립 등 관련 교육·세미나·공청회 등 적극 참여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등 교육 훈련기관 ○ 지역개발 등 활성화 지자체 지역 밴치마킹 계획 별도수립 추진 - '07년 3~5월경 경제자유구역, J프로젝트 등 서 남해지역
동 계 올림픽 유치단	1. 각종 대회 참가 시 선수나 임원들의 유니폼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 방안도 규정 범위 내에서 강구 해 주기 바람	○ 유니폼을 활용한 홍보는 - 국내대회에서는 제한이 없으나, 이 경우에도 스폰서의 지위가 우선이 됨. -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IOC가 공식 초청한 행사 또는 IOC가 별도 제약을 두는 경우에는 홍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후보도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체육기관·단체들과 연계하여 엠블럼 및 슬로건을 적극 활용하겠음(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연맹 대상 협조공문 발송 조치)
	2.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가 대부분 찬성이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반대하는 여론에 대한 당위성 등 홍보를 강화해 줄 것	○ 국정홍보처가 실시('06.11.15.~17.)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국 91.6%, 강원도97.3%, 평창 96.0%가 동계올림픽을 지지하고 있으나, 유치과정에서의 과다 예산투입 및 유치 실패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유치 성공시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당위성을 중점 홍보하여 반대 여론을 최소화해 나가겠음.(파급효과 등을 강조한 언론 캠페인 전개 등)
강 원 도 개발공사	1. 道로 부터의 수탁사업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계획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판촉활동 - 춘천시와 공동으로 춘천 호수축제 (수상 레저 축제)개최 추진 - 판촉 활동 강화 및 직원 능력 개발 • 학교, 공공법인 등 단체 고객 방문 판촉 • 체육 단체 유치 • 외부 교육 참가 마케팅 전문성 향상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 원 도 개발공사		- 관광사업장별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잠재고객 유인 • 중 도: 축구연습장, 메밀꽃 축제, 중도 문화단지 • 수렵장: 멧돼지 시식, 클레이 사격 대회 • 휴양림: 민물고기, 수목 생태관광 • 단체고객 대상 동물 판로 개척
	2. 알펜시아 사업장 등 토지보상관련 지역주민 생활대책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길 바람	○ 토지소유자 - 협의양도인에 대해 협의보상금의 10% 상당액을 알펜시아 분양상품에서 할인 분양(할인전 분양가로 환매보장) ○ 가옥주 - 법 제78조에 의한 이주단지조성 후 조성원가 70%선 공급(이사회 조성계획 승인) 또는 이주정착금 중 택1 및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급 - 협의양도인에게 상가 우선 임차권 부여 ※ 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세입자 -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지급 ○ 영업인 -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휴업손실 보상금 지급 ○ 영농인 -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영농보상금 지급 ○ 지역주민 지원 계획 - 지역발전기금 지원 등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및 추진 예정(ex, 취업, 장학기금, 용역 · 공사 등의 참여 제공 등)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 원 도 개발공사	3.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	○ 직급별 연장 수당 한도 책정(3/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 - 2급 : 8시간/월 - 3급 : 10시간/월 - 4급 : 12시간/월 - 5급 : 15시간/월 - 6급 : 20시간/월 ○ 연차휴가 사용 독려 및 잔여연차에 대해50% 연가보상비 지급(1/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 - 2006년 잔여연차에 대해 50% 연가보상비 지급예정
	4. 춘천, 속초 등의 임대 APT 하자 보수를 철저히 추진해 줄 것	○ 하자 처리 현황 - 반기 1회 시설물 점검 :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점검 - 1년차 하자 처리 및 종결(2006.12. 7.) - 연2회 정기 하자 점검 실시 : 외부 용역업체 선정(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 6월, 11월 실시) - 수시 하자 접수 및 처리 ○ 향후 추진 계획 - 반기1회 시설물 점검 - 연2회 정기 하자 점검 실시 : 외부 용역 업체 선정 - 수시 하자 접수 및 처리 - 해빙기 등 계절별 시설물 관리 점검 - 하자 기간별 시설물 점검 및 하자 기간 만료 3개월 전 재점검 등 하자 보수를 철저히 추진
강원발전 연 구 원	1.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 시켜주기 바람	○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년 1회 정례화 하도록 하고 도의원님들이 소속 상임위, 해당 시·군 등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구자문회의를 활성화 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발전연구원	2. 각종 연구성과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줄 것	○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3. 연구원이 개원된 지 12년이 지났으므로, 연구원 연구 방향을 정책연구 비율이 확대되도록 재정립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연구원의 연구과제 비중이 지역계획 등 수탁연구보다 정책적 연구과제 비중이 강화되도록 연구과제 운영을 바꿔나가겠음. ○ 이를 위해 도정 및 시군정을 선도하는 정책과제 개발 체제를 정비하고, 연구 결과가 도정 및 시·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음. ○ 또한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도정 주요 현안 이슈 분석, 정책제안, 시책방안 등의 단기성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겠음
	4. 강발연에서 발간되는 각종 서적에 대한 발간 후 효과에 대해 feed back해 볼 것	○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행정적용 정도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5. 교수들에게 주는 연구용역에 대해 정산 시 학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입금 지급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주기 바람	○ 연구원이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경우 대부분 외부 전문가 인건비로 위탁용역비가 지급되며 학생들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다만 위탁연구수행계획에 학생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음
강원도체육회	1.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지도자 처우개선은 도와 긴밀히 협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 '07년도에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기본급 5%를 인상할 계획임
	2. 보조금 정산에 대해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켜 기일내 엄수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06.12.21. 강원체육인 연수회시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앞으로 보조금 정산 기일 엄수를 철저하게 실시하겠음.

나) 교육사회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1. 강원도재활병원이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데 병원증축이나 신축에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를 준비하고 추진할 TF팀의 구성에 대하여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강원도재활병원 신축에 따른 설계 및 건축공사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담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TF팀 구성은 인사·조직관리 부서와 협의추진
	2. 성매매방지와 관련하여 2년간 시·도 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오는데 개선대책 검토	○ 2005년도 평가 - 평가영역 : 예방, 보호, 집행 분야 • 예방 : 교육, 정책, 협력관계 • 홍보 : 보호조치, 지원 프로그램 • 집행 : 행정단속, 경찰합동단속 등 - 평가결과 : 예방과 보호는 보통, 집행 분야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미흡 ○ 2006년도 평가 대비 - 시설증가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중장기계획 수립(06.7월) - 예방프로그램 : 각종 기금의 예방교육반영 - 협의체운영: 실적 미흡기관 노력제고 요청 - 홍보활동 • 시설 및 NGO단체의 참여활동 적극 반영 • LED등 홍보매체 활용결과 포함 ○ 평가매뉴얼(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광역시와 분리평가 요구 등 - 집행분야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평가요청 ○ 취약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 도·시군 → 자체추진분야 - 유관기관 → 협조요청 - 민간단체 → 보조사업 활용
	3.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확대운영 대책을 강구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 현 황 : 2개소(춘천, 강릉) · 춘천 YWCA : 69과정 724명 · 강릉 YWCA : 22과정 379명 - 사업비 : 303백만 원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 여 성 국		○ 2005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지방이양 되어 분권교부세와 도비 지원 ○ 2007년 상반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하여 추가 설치 시 건물 임대료 및 운영비등 지원방안 강구
	4. 재활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이전시 까지 2년이 걸리는데 현시설의 미비점 보완 관련 개선요구	○ 향후 추진계획 - 과다한 예산투자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방시설 확충 등 미비점을 최대한 개선·운영
	5. 재활병원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의 개선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재활병원 가동율 제고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해 적자발생을 최소화
	6. 재활병원의 자원봉사자 필요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 향후 추진계획 - 간병인 등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시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인력지원 등 적극 추진
	7. 강원도 5개 의료원의 체불금의 빠른 해소 대책 강구	○ 처리결과 - 06년 제2회 추경예산 및 07년 당초예산 반영을 위한 출연 심의(06.9월) • 출연요구액 : 26억원 • 용도 : 체불임금 및 단기부채 해소 ⇨ 심의결과 : 출연유보 - 지방의료원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06.10월) • 경영개선대책, 부채해소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을 위한 출자·출연 심의 및 예산요구(26억원)
	8. 지방의료원의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	○ 처리결과 -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개최(06.12월) ·협의내용 : 의료원과 지역보건소, 소방서 간 연계체계강화 ※ 의료원검진지원차량 구입예산 지원 : 원주시 25백만 원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 협의회 정례회 및 참여기관 확대 -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공공의료사업 전개 -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 의료원운영비를 지원받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
	9. 의료원 원장 채용 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검토	○ 처리결과 - 전문성을 갖춘 원장 선임을 위한 심의 기구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수립·시행(06.12월) ○ 향후 추진계획 〈삼척의료원장 채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06.12월중 • 도의회 추천 1인 등 포함 7명 내외 - 삼척의료원장 심의 : 07.1.~2월중 - 삼척의료원장 선임 : 07.3월중 〈원주·강릉·속초·삼척 의료원장 채용〉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07.3월중 - 원주·강릉·속초·영월의료원장 심의 : 07.4.~5월중 - 원주·강릉·속초·영월의료원장 선임 : 07.6월
	10. 보건복지여성국 조직의 업무량 과다와 관련 인원 충원을 강구	○ 인력 확충 실적 - 사회복지과 : 1명(8급, 파견) - 보건위생과 : 1명(정원 증원) ○「저출산고령화 대책팀」 신설계획 수립, 조직관리 부서 제출(06.11월) - 신설(안) : 1담당 5명 ○ 향후 추진계획 - 조직개편시 저출산고령화대책팀이 신설되도록 조직관리부서와 지속 협의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11.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팀구성과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 요구	○ 저출산고령화 대책팀 신설계획 수립, 조직관리 부서 제출(06.11월) - 신설(안) : 1담당 5명 ○ 저출산고령화 대비 조례제정 - 중앙정부 및 타 시도의 동향과 사례를 분석 후 조례제정 추진
	12.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	○ 추진실적 - 2006~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 계획 수립('06. 8.~11월) - 건강한 임신·출산지원사업 추진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최대 300만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2주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시범)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모든 출생아 • 미숙아 등 의료비지원 : 최대 7백만원 •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등 - 보육부담 경감 • 저소득층 및 두자녀 이상, 만5세아,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 육아지원 확충 • 공립보육시설 운영 : 64개소 •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0세아 249천원, 1세아 104천원, 2세아 69천원) •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 43개소, 장애아 보육시설 19개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도 자체 출산장려시책 추진 • 출산육아용품 지원 : 30만원 • 산전검진비(초음파, 기형아검사) 지원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2만원 상당 - 건강한 임신·출산지원사업 지속추진 -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등 지원 대상자 점차적 확대 -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 -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 시설 확대 운영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13.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을 강원도 차원에서 검토	○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 법·제도의 개선과 연관된 사안이므로 정부와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
	14. 금연 클리닉과 관련하여 금연상담사와 건강실천사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검토 요망	○ 검토결과 -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국민건강 증진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인력을 선발·운영토록 보건복지부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연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은 불가능함 ○ 향후 추진계획 - 일시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사를 사업의 연속성 등 상시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건의
	15. 저소득 주부일자리 창출과 관련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되도록 강구	○ 추진실적 -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프로그램 운영 • 참여실적 : 42업체 50명 • 소요예산 : 센터당 5,000만원 • 취 업 : 29명 • 취업분야 : 독서지도사, 사서, 상담, 간병, 보육교사 등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저소득층 주부인턴제 확대 운영(75명, 150백만 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속 개발 - 07.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 12개 단체 64백만 원
	16.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액의 증액과 사회단체가 주로 민·관·군 같이 추진하도록 검토	○ 추진실적 - 총 581가구 650백만 원 지원 • 도배 및 장판 : 126가구 • 보일러수리 및 교체 : 111가구 • 지붕수리 : 186가구 • 담장 및 벽체보수 : 34가구 • 기타 : 124가구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 가구당 지원금 : 최대 300만원 - 도·시군비 예산지원액 : 150만원 - 집수리자활사업 추가금액 : 150만원 - 사업추진 : 시·군 자활사업 집수리사업단, 공공근로,자원봉사자,유관기관·단체등의 인력을 활용토록 되어있어 민·관·군이 함께 추진중임 ○ 향후 추진계획 - 시·군별 수요량을 감안, 확대 검토
	17.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관리자양성을 적극 검토	○ 처리결과 - 2007년 관리자 배치계획(06.12월) • 6개 시군 : 07년 당초예산 확보 (원주, 태백, 속초, 평창, 정선, 양구) • 기타시군 : 07년 제1회추경 예산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재정부족으로 예산 미반영 시군은 노인일자리사업 복지형 일자리로 보조인력 지원 ※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 요청
	18. 법정 전염병과 관련하여 강원도 발병율이 높은데 적극적인 예방대책 강구	○ 향후 추진계획 -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강화 • 21개반(도 1, 시군 20) -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152개소 - 질병정보모니터 강화 : 1,355개소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강화 -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 : 주 2회 이상 - 질병발생 유행예측사업 실시 • 각종질병 유행예측시 주의보, 경보 등 예보강화로 사전 대비
	19.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과 관련하여 사고시 응급실까지 가는데 처방을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	○ 추진실적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인건비 및 시설·장비비 지원 • 3개소 393백만 원(인제, 양구, 고성)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 여 성 국		○ 향후 추진계획 - 07년 지원확대 : 3 → 6개소 지원 • 취약권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 -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취약지 응급의료지원 병원간 통신체계 구축 • 병상정보제공 등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공무원 교육원	1. 교육원 편성교과목 중 지방의회 관련 교육과목 편성을 검토바람	○「지방의회 실무과정」신설(′07년) - 대상 : 6급 이하 의회업무담당자 및 희망자 - 회수·인원 : 1회 25명 - 기간 : 1주(비합숙) ※ '07년도 교육운영 타 교과과정에도 의회실무특별과정 편성·운영
	2. 중견관리자양성과정 교육 수료 후 관련 자치단체에서 적재적소에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구 바람	○ 시·군 인사부서에 적재적소 배치 협조 공문 발송('06.12.26.) - '07중견관리자 사후관리 시책과 연계, 교육성과 및 활용도 설문 평가실시 (기관장 대상)
	3. 공무원교육이 월등히 나아지기 위한 교육개선·발전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토록 바람	○ 공무원교육원 직원 워크숍 개최 - 일시 : '06.12.22. 09:00~17:00 - 대상 : 교육원 전직원 - 내용 :「강원도공무원교육원 발전 방안 모색」특강 및「직원 토론회」실시 ○ 향후계획 - '07년 분기별 특강 및 토론회, 민간교육기관 벤치마킹 실시
	4. 공무원의 퇴직 후 사회참여 의식 교육에 관심이 부족한데 체계적인 공무원 노후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바람.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과정」신설(07년) - 대상 :'07년 퇴직예정 및 희망 공무원 - 회수·인원 : 1회 25명 - 기간 : 3일(비합숙) ※ 호응도가 좋을 시 확대운영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무원 교육원	5. 공무원교육원이 일반인이나 퇴직공무원의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남·여 구분없이 봉사·치매 관리 관련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고령화대비과정」 신설('07년) - 대상 : 노인요양시설근무 민간인 등 - 회수·인원 : 1회 30명 ※ 퇴직예정공무원사회적응과정 연계 세부교과목 편성·운영
	6. 민간인교육의 저조이유가 이·통장 교육이 빠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고 예산지원 등 검토바람	○ '07 민간인 교육과정 확대운영 - 기존 : 4개 과정 1,147명 - 신설 : 6개 과정 410명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자치역량 강화: 200명 • NGO행정협력과정 : 25명 • 보조단체회계실무자과정 : 100명 • 재해대비과정 : 30명 • 고령화대비과정 : 30명 • 퇴직예정공무원사회적응과정 : 25명 ※ 이·통장 시책교육 실시 1,500명 (자치지원과 주관)
	7. 전도민관광요원화과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대상자의 확대 대책을 강구바람	○'07년도 전도민관광요원화과정 적극 홍보 및 교육대상자 확대 운영 - 관광서비스업종사자(기존) → 서비스업종사자+민간단체(개선) ※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교육생선발 - 교육과정 적극 홍보 • 교육 1개월전 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시군정 홍보지 등 게재
강원도립대학	1. 물품구매 현황과 관련하여 물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실험 실습 기자재나, 사무기기 등 물품을 구매할 시에는 적시 적소에서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물품수급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2.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부를 운영함은 쉬운 일이 아님, 우수 선수 확보 방안 강구	○ 대학체육부는 여자축구부, 여자탁구,우슈부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구와 우슈는 개인종목으로서 강원도 체육발전과 전국체전 등위 부상을 위하여 수차례의 입상 실적이 있어 대학의 홍보에도 기여한 바 있으나,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립대학		여자축구부의 경우는 '05. 3월 창단하여 전통과 역사, 인지도가 타 대학에 비해 다소 뒤지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 관심과 애정을 두고 노력한 결과 우수 선수를 다수 확보 하였으며,선수 수급과 운영엔 문제가 없음
	3. 자원봉사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2006학년부터「사회봉사와 지역사회의 이해라는 봉사과목을 개설하여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2007학년도에는 「봉사과목」의 개설로 봉사활동 체험을 통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계획임 ※ 2007학년도 교육과정에 「사회봉사와 지역사회의 이해」과목을 지속 운영할 계획임 【봉사체험 활동계획】 - 지역어르신 맛사지 봉사 -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 지역행사 크린봉사대 운영 -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 컴퓨터 무료 수리 학생봉사대 운영 - 독거노인 김장나누기 봉사
	4. 여학생 인력개발프로그램 관련 계획을 강구하기 바람.	○ 2006학년도에 운영한「경쟁력강화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 중 -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 ITQ정보화자격증 취득지원 - 스킨스쿠버자격증 취득지원 - 영어캠프, 스키캠프 운영 상대적으로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 2007학년도 프로그램 개발 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립대학		【여학생인력개발 프로그램 계획(안)】 - 레크레이션 강좌 - 피부미용 강좌 - 압화 강좌 - 웰빙화장품 만들기 강좌 등
	5. 고령화시대와 관련, 관련학과를 검토하기 바람.	○ 현재 노인복지관련 학과는 기존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과는 포화상태로 졸업자의 취업 등 한계로 선호도가 낮은 실정임 ○ 그러나, 노인복지 중에서도 세분화 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인력양성 필요성과 수요가 예측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 기본적으로 학과신설은 정원증원불가로 현재의 입학정원 500명 내에서 신설을 검토하여야 함 ○ 그러나, 2007학년도에 해양경찰과와 소방환경방재과의 개편, 유아보육과 신설로 단기적으로 학과의 신설은 어려움 ○ 향후 정원의 증원 또는 학과의 신설 필요성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6. 지자체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취업률 제고에 노력 경주하기 바람.	○ 취업관련종합대책 - 취업지원센터(종합인력개발센터) 설립 운영 • 종합지원 체계구축 ⇒ 취업 지원 및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 취업지원기본계획('07.1.25.)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노동부 강릉고용안정센터) • 취업정보제공 전용 홈페이지 개설기업체 협약 등 연계교육과정 개발 • 취업관련 취미/특기강좌개설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관련하여 필요 인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06년 필요 인원 97명 확보 완료. ○ 양질의 원어민교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교육청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직접 확보방안 마련 예정임.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서 교습소가 학원과의 행정처분기준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요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 9. 22. 개정되어, 현재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이 2006.12.18.~2007.1.7.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음. ○ 우리도 교육청은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 12. 26. 제1차 개정회의를 실시하였고, 2007. 1월중 제2차 회의를 실시할 예정임. ○ 현재 학원·교습소의 행정처분기준의 형평성 결여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보완적인 다수의 의견이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3. 학교급식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미급식학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미 급식학교 급식실시 방안 마련 - 추진내역 :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 및 공동조리 급식 추진(6교) - 향후추진 : 미실시 2개교에 대하여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 강구
	4. 학교급식 위생점검과 관련하여 학교별 급식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점검을 바람.	○ 학교별 급식소위원회 구성 현황 - 대 상 : 모든 급식학교 - 운영내용 : 급식업체 선정 및 급식 모니터링 등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및 자문 활동 수행 ○ 학교급식위생점검 추진현황 - 대 상 : 조리실 설치 전체 급식학교 - 실시방법 : 학교별 연 2회 이상 실시 • 식중독 발생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특별위생점검 병행실시 등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5. 폐교의 대부료 수입과 관련 주민시설 중 복지시설 등에 대해 대부료 감면 또는 면제를 검토 바람.	○ 폐교재산을 주민복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으며, ○ 또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2006. 6. 28.) 개정을 통하여 주민복지시설로 대부할 경우 연간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였음.
	6. BTL사업과 관련하여 저가 낙찰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을 바람.	○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배점 기준을 당초 기술점수 500점, 가격점수 500점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술점수 600점, 가격점수 400점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사업고시에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기본설계를 미리 제공하여 품질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7. 수능 후 농어촌지역의 학교수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능 후 교육과정 운영 지도 계획 시행 (2006. 11. 23.) - 학교별 수능 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인근 학교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각종 체험학습의 합동 운영 모색 - 대학별 맞춤식 진학지도 및 예절학교 등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유해 영상물 및 불법 영상물 시청 예방 ○ 각종 기관장 회의를 통한 수능 후 특별 면학 프로그램 적극 추진
	8. 수업료 미납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망	○ 수업료 미납액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경제사정 곤란, 학부모 관심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 우리도교육청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학비(학교운영 지원비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 또한, 가정형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담임교사의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9. 전국소년체전 단복구입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우리청에서 납품받은 제품과 최초 요구한 제품의 사양이 상이한 점에 대한 검수의견을 조달청에 통보하여 조달청 물품검사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금액에서 13,341,120원을 감액처리 하였음. ○ 향후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계약소요기간, 제작 및 납품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발주토록 하고 계약에서 납품까지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양질의 제품을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10. 나이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방지책과 운영상 일선 직원의 교육대책 등 방안을 강구 바람.	○ NEIS를 통한 학교회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회계부정 사안으로 NEIS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님 ○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담당자가 NEIS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발생되었으므로 상위 직급의 관리자에게만 수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완료하였음. ○ 향후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할 것임.
	11. 2008년도부터 고입제도 지필고사에 체육과목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체력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체육 혁신 방안으로 학생 체력검사 개선을 위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 학생체력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연구결과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면 체력검사개선 내용 및 타 시·도의 사례를분석하여 선발고사에 체력검사 점수반영 여부를 연구·검토 할 것임
	12.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지원기구와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	○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교육청지원단 조직 운영 - 2006. 12. 22.(금) 13:30 강원도교육청지원단발대식 및 유치결의대회 실시 • 부교육감을 지원단장으로 하여 19명으로 지원단을 구성 유치붐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 실시 • 강원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홍보행사와 싸인벨트행사 실시 - 향후 추진 계획 • 2006. 12. 26.~29.까지 평창, 강릉, 정선, 고성지역 릴레이 형태의 발대식 및 행사 실시 • 2007년 전 지역교육청으로 확대실시 • 2007. 7월 개최지 확정시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행사 추진
	13. 167회 임시회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 조례에서 관사 관리와 관련 인계인수 시 관사용 비품 관리가 문제되어 관사용 비품대장의 비치와 관리, 변상책임 등이 지적되었는데 교육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시정 바람.	○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일시 : 2006. 12. 22. - 내용 : 관사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2항) 신설 •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출납및운용-카드를 비치하고,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14. 잡수입 중 위약금이 많은데 담당직원의 증원 등 시정을 바람.	○ 위약금은 대부분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연체에 따른 가산금, 시설공사 및 물품 납품 지체상금 등이 포함 되며, 모든 제반 업무를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단지 위약금으로 인한 별도 증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 재산 전반에 대한 담당직원의 증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15. 학부모들의 제 자식 챙기기 등 개인 이기주의 만연으로 문제가 많은데 학부모의 교육 등 계획을 세워 추진 바람.	○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위한 안내 자료 40,000부 제작 보급 • 시기 : 2007. 1.~2월 • 내용 : 학교 교육과정 안내, 자녀 교육 방법, 생활안전 지도 - 학부모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교육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 1,201명 ○ 지역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장학지도를 통해 지도
	16. 스쿨존과 관련하여 연차별 계획을 세워 철저히 추진 바람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 및 시·군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스쿨존 지정과 관리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2007년 협조문서 발송 • 도교육청 ↔ 강원도지방경찰청 • 지역교육청 ↔ 시·군경찰서 - 장학지도를 통한 스쿨존 관리 강화
	17. 학교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획기적으로 검토 요망.	○ 현재 강원도교육청 소속 전임지도자는 2007년 150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도대표로 선발된 팀과 다수의 선수가 확보된 학교에 배정하고 있으며,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 전임지도자에 대한 보수는 현재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1,35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육성종목의 수에 비해서는 지도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 지원금의 상향보다는 지도자의 인적확충에 노력하여 매년 10명정도의 지도자를 확충하였고 ○ 향후 적정선의 인원이 확충되면 지도자의 인건비를 실적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음.
	18. 대학을 제외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주택 재개발을 시행하는데 현황 및 대비책 등 강구하기 바람.	○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에서 주택 재개발에 따른 학습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학교보건관리 기본방향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 2007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및 소음측정 등 년2회 실시하여 학교 내·외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제거에 노력할 것임
	19. 도내 조부모 학생현황과 관련하여 학비 감면, 중식 지원외 특별지원을 검토 바람.	○ 저소득층자녀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에 대하여 소년소녀 가장을 우선 지원 하였고,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은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가진 도내 17개 시·군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 향후 조부모가 보호자인 학생에게 소년소녀 가장 수준으로 PC 및 인터넷통신비와 강원교육장학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
	20.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 자원봉사자의 의무 배치 규정과 예산의 지원을 검토 바람.	○ 2006년도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상담자원봉사자를 18개교에 36명을 배치하였으며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하였음.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담 자원봉사자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또는 폐지할 것임. ○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다) 산업경제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1.「강원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명칭변경 및 사업확대 ⇒ 강원 농특산물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사업	○ 사업명칭 변경 조치예정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디자인개선 포장재 제작, 용기금형 개발 등을 포함한 사업임으로, 명칭 변경은 추후 검토하겠음 ○ 금후 사업 확대 계획 -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출하개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업체를 확대 선정하고, - 현행 포장 디자인개선, 포장재 제작에 품목당 지원액 5백만원을 07년부터 10백만원으로 지원
	2.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품목확대 요구	○ 현행 지원대상 - 산업자원부 고시 물류표준 설비 인증을 받은 15종, 230품목 지원대상 ○ 향후 지원품목 확대 - 농업인이 선호하는 주요품목은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파렛트 등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물류장비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품목확대를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임
	3.「농업 경영컨설팅」 문제점 ⇨ 사전에 컨설팅업체의 제안서를 수개월 전에 신청인이 볼 수 있도록 조치후 신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하는 사업으로, - 희망농가 및 경영체는 시군 및 컨설팅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열람 할 수 있으며, - 다중게시판 공고문 게시, 반상회, 각종 회의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 인증업체를 신속히 인증공고하고, - 기존 인증업체(2년간 유효)에 대하여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 '07년 컨설팅 희망농가가 컨설팅업체 결정 전 각종 정보를 사전 수집 가능토록 홍보활동 강화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4. FTA관련 강원농정 전반의 대응책 마련	○ 현재 대책수립 중 - 대책의 골간은 농가는 전업화 · 규모화해 나가고, - 품목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화 해 나가되 수출농업 · 친환경농업 · 관광농업 확대방향으로 수립예정
	5. 벼 수매시 품종 혼합 막는 것 ⇒ 생산이력제 실시 정착	○ 현재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하여 벼 매입단계에서부터 품종별로 분리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 일부 민간업체와 농협에서 싸이로 등 보관시설 부족 등으로 다소 품종 혼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지도 · 관리해 나가겠으며 • 시군 및 농업 지침시달 :'06.12.11. ○ 아울러, 분리보관 및 가공을 통한 벼의 지역별, 품종별 생산이력을 명확히 하여 고품질 강원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6. 민간자본 보조, 경상보조 지원후 사후관리 철저 ⇒ 목적외 사용 등	○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7. 산림 부분도 농가소득증대, 일거리 창출 위해 장기 노력	○ 제2차 산림농업육성계획 수립 - 기 간 : 2007~2010 - 사 업 량 : 1,639ha - 사업내용 : 산더덕, 산약초, 특용수, 곰취, 음나무, 장뇌삼, 산채재배 등 ○ 산림부문 일거리 창출 - 산림농업을 임업 선진도 모델로 정립하여 도시민 휴양 · 체험의 장으로 유치하고, -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산채, 약용수 등을 복합생산 하여 산림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많은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8. 농업용 기반시설 부담금 인하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중으로 향후 법률안 개정시 부과금이 면제될 예정임.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430호 ('06.11.30.) ※ 부과금 면제대상 농업기반시설(개정안)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양곡도정업 신고 건축물, 농산물 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
	9. 비 우량농지 농업진흥지역 제외 요망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조정할 계획임 - 실태조사 : '05. 3월~'06. 7월 - 조사기관 : 한국농촌공사, 시군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관리기준 확정 ('07. 1월~'07. 3월) • 시군 요청에 의한 도지사 진흥지역 변경승인 요청 ('07. 3월~4월) • 농림부 승인 통보 및 도지사 변경고시 ('07. 5월~'07. 6월)
	10. 학교 우유급식 어린 마음에 상처안가도록 지급방법 등 개선·관리 요망	○ 학교우유급식 실태조사 실시 :'06.11.28~12. 8 ○ 학교우유급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지급 방법을 시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음.
	11.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관리개선(산림청 벤치마킹)	○ 현재 운영·관리 중에 있는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의 홈페이지를 새로운 감각으로 정비 예정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확대와, 기획전시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강화 예정 ○ 산림청 전시시설 내용 확인후 산림박물관 개선에 적극 반영 예정.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12. 진품센터 홍보 또는 이익 중 확실한 컨셉을 정하고, 일요일 개점방안 및 재고자산 손실처리 방법 개선 검토	○ 향후 운영활성화 방안 - 홍보·마케팅 전략 등 공익성에 중점을 두되, 농산물판매도 고려하여 장외시장개척 등 영업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 조직을 재정비하여 경영난 해소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 일요일 개점방안 - 일요일 휴무 없이 근무 방안 검토 예정 - 휴무제 시행방법 개선 여부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 〈개선 검토〉 • 일요일 휴점 없이 1~2명 필수요원 근무 •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 휴무방안 ○ 손실처리 방법 개선 -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통한 상품관리 철저 - lose율 이외의 손실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처리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개선
	13. 벼 육묘은행사업 확대 추진	○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개별농가 육묘부담 해소를 위하여 “벼육묘은행” 설치 사업을 추진 - 사업기간 : 2001~2010 - 사 업 량 : 50개소(당초 30개소) - 사 업 비 : 3,000백만 원 ○ 2006년까지 추진실적 : 21개소 - 사업비 투자 : 2,100백만 원 ○ 사업대상 지역을 50ha이상으로 완화하여 2010년까지 50개소 확대 설치할 계획 임.
	14. 백두대간 보호지정마을 지원사업 내실있게 입안하여 지원하고, 잘되는 곳은 적극 지원	○ ‘05~’06년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사후 관리 실태조사실시 - 점검마을 : 60마을 - 점검기간 : ‘06.11.24. ~11.30.(7일) - 점검인원 : 12명 - 검검결과 : 목적대로 사용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05 ~ 2010년 - 사 업 량 : 150마을 - 사 업 비 : 26,098백만 원 (국 18,269, 도2,348 시군 5,481) - 사업내용 : 농림축산업관련 소득사업, 유기영농 지원사업, 편익 및 복지증진사업(수도시설, 마을회관, 가로등 설치 등) 등 ○ 우수마을 선정 지원 - 마을평가 및 선정 : '07년 10월중, 1~3마을 - 지원금액 : 200 ~ 500백만 원(2008년 지원) ※ 대표마을선정 1~ 3년 집중
	15. 산림농업, 강원도만의 정책으로 추진 요망	○ 산림농업 육성은 목재 생산과 산·약초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병행 생산하여 산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 '00년부터 '06년까지 1,046ha를 조성 재배 중에 있으며 - '07년도에는 총 4,057백만원을 투자하여 429ha의 임산물(산·약초등) 생산단지를 조성 할 계획 임 ○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중장기 계획에 의거,총 22,225백만원을 투자, 248개 단지, 1,639ha를 조성하여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소득원으로 자리 매김 하겠음.
	16. 한우 인공수정 100%까지 확대 추진	○ '07년도 한우인공수정 지원계획으로 총가임암소의(60,543두) 61%인 37,000두에 대하여 인공 수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 지역명품강원한우브랜드육성 : 21천두 • 영동강원한우광역브랜드육성 : 6 〃 • 지역명품4개브랜드·시군육성 : 10 〃 ○ 연차적으로 한우의 인공수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table>
<tr><th>실 국</th><th>시정 · 처리 요구 사항</th><th>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농 업
기술원</td><td>1. 건강관리실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강구
※ 관리자 소정의 수당 지급 방안 검토</td><td>○ 추진현황
- 사업량(02~05설치운영) : 71개소
- 운영비 지원 : 개소당 1~1.5백만 원
○ 금후계획
- 건강관리실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운영비를 연료비 위주에서 관리자 수당 지원 등으로 도 지침 강화
- 이장 이외 전담관리자 지정 유도
- 현장 점검 강화
※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종료 : 2007년</td></tr>
<tr><td></td><td>2. 시·군별 농협, RPC 공장 자체 브랜드 개발, 상표등록 및 공동 사용 약정체결 등 추진</td><td>○ 강원 쌀 브랜드 현황('06년)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용자(업체 등)수 (A)</th><th rowspan="2">브랜드수 (B)</th><th rowspan="2">사용자당 평균 브랜드수 (B/A)</th><th colspan="2">특기사항</th></tr>
<tr><th>상표·의장 등록</th><th>품질 인증</th></tr>
<tr><td>시군단위 공동브랜드</td><td>22</td><td>8</td><td>0.36</td><td>5</td><td>1</td></tr>
<tr><td>RPC브랜드</td><td>16</td><td>51</td><td>3.19</td><td>2</td><td>16</td></tr>
<tr><td>- 농협RPC</td><td>10</td><td>31</td><td>3.10</td><td>2</td><td>14</td></tr>
<tr><td>- 민간RPC</td><td>6</td><td>20</td><td>3.33</td><td>-</td><td>2</td></tr>
<tr><td>RPC 외 개별브랜드</td><td>31</td><td>42</td><td>1.35</td><td>7</td><td>2</td></tr>
<tr><td>계</td><td>69</td><td>101</td><td>1.46</td><td>14</td><td>19</td></tr>
</table>
○ 2010 브랜드쌀 육성 추진(농림부)
- 목표 :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
- 중점 추진과제
• 브랜드경영체의 농가조직 · 규모화 추진
•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한 품질 균일성 확보
•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우수브랜드 인증제 도입 추진
• 쌀 브랜드 경영지침서 제작 · 보급
• 쌀 품질검정(인증) 전문기관 설립 추진 ('08년 출범 계획)
※ 브랜드 관리주체는 농정분야 이며, 농업 기술원은 기술적 대책 추진</td></tr>
</table>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 금후계획 - 고품질벼 품종 확대재배 -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기술보급 - 쌀 시장개방대책 시범사업 추진
	3. 농·특산물 이용 연구 시 사전·사후 「식약청」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포함 되도록 행정적 요구 요망(농산물이용시험장)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새로운 원료를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용근거 자료 및 안전성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며 - 또한 식품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정성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기업 및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음 ○ 금후 추진계획 - 새로운 식품원료로서 경제성이 있을시 예산 및 근거자료 확보에 노력하겠음 • 대상시험 : 안전성,단독·반복 투여 독성, 생식·발생독성, 발암성, 면역·유전 독성
	4. 「농산물 생산이력제」 도내 집중 홍보 요망(작물경영연구과)	○ 현 황 - '04~'06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추진해 오던 생산이력시범사업은 완료됨 • '06년2월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로 법제화됨 ⇨ 농산물 생산이력 표기 사용 불가 • 기존의 생산이력제 대상농가 홍보는 농림부 추진 생산이력추적 관리 농산물로 변경 ⇨ 계속 생산 가능 ○ 기 추진 내용 - 농림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06년부터 농업인 및 소비자 홍보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 농산물 생산이력 추적관리 농산물은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산물과 연계한 추적 및 역추적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table>
<tr><th>실 국</th><th>시정 · 처리 요구 사항</th><th>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농 업
기술원</td><td>5. 약용작물(열매,뿌리)건조기 연구·개발 요구(경유, 석유연료 이용하지 않은 것)</td><td>○ 현재 보급되고 있는 건조기 실태
<table>
<tr><th>작물명</th><th>기 종</th><th>건조형태</th><th>건조량</th><th>가 격
(천원)</th></tr>
<tr><td rowspan="2">벼</td><td>곡 물
건조기</td><td>원적외선
순 환 식</td><td>5.4톤</td><td>8,100</td></tr>
<tr><td>곡 물
건조기</td><td>상온통풍
교 반 식</td><td>30.0톤</td><td>24,000</td></tr>
<tr><td rowspan="2">약 초
(구기자,
오미자)</td><td>농산물
건조기</td><td>열풍건조</td><td>400kg</td><td>4,100</td></tr>
<tr><td>마이크로파
건 조 기</td><td>전자파
조 사</td><td>300kg</td><td>25,000</td></tr>
<tr><td>고 추</td><td>농산물
건조기</td><td>열풍건조</td><td>650kg</td><td>4,500</td></tr>
</table>
<table>
<tr><th rowspan="3">작물명</th><th colspan="5">건조비용</th></tr>
<tr><th colspan="3">연료</th><th colspan="2">전기</th></tr>
<tr><th>유 종</th><th>소요량
(ℓ)</th><th>비용
(원)</th><th>소요량
(㎾)</th><th>비용
(원)</th></tr>
<tr><td rowspan="2">벼</td><td>백등유</td><td>80</td><td>53,600</td><td>50</td><td>1,950</td></tr>
<tr><td>-</td><td>-</td><td>-</td><td>1,200</td><td>44,400</td></tr>
<tr><td rowspan="2">약 초
(구기자,
오미자)</td><td>실내등유</td><td>150</td><td>100,500</td><td>60</td><td>2,220</td></tr>
<tr><td>-</td><td>-</td><td>-</td><td>10</td><td>370</td></tr>
<tr><td>고 추</td><td>실내등유</td><td>160</td><td>107,200</td><td>80</td><td>2,960</td></tr>
</table>
※ 각 기종 공통으로 기초 · 전기시설 미포함
(초기 함수율 23 → 15%로 건조)
○ 금후 계획
- 농업기계의 기술연구 시스템이 갖추어진 중앙단위 연구기관(농업공학연구소)에 석유에너지 대체 가능한 약용작물 건조기 개발 보급 건의
- 약용작물분야 시범사업중 건조기 필요 사업에 시범요인 반영</td></tr>
</table>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6. 일반적 행정지원사업과 차별화가 약하거나, 농정산림국과 중복되는 업무는 한기관으로 이관하고 시험·연구·기술지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방안 강구	○ 법적근거 -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으로 구분 실시(농촌진흥법 제12조) ※ 시범사업 :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시범 추진하여 성공시 시책사업(행정지원)으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사업(국가사무) ○ 추진실태 -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의 농정산림국 이관문제는 농촌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지원받아 동법 제3조에 의거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 국가사무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금후계획 - 도비사업에 대하여는 시범사업 과제선정 심의회(매년 9월)를 통하여 농정산림국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7. 연구·개발부분 예산지원 집중하고 연구·개발부분 예산지원(확대)과 관련하여 상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필요(작물경영연구과)	○ 현 황 - 2007년도 농업기술원 총 예산규모는 258억원으로 연구개발부분 예산은 전체의 29%인 75억 원이며 특히 상품 생산 가능 연구비는 90백만 원이 지원 ○ 향후 추진 계획 - 다소 부족한 연구개발부분 예산은 국비 및 추경예산확보, 긴축재정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으며 기확보된 상품생산 가능 연구비는 넉넉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상품 생산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예산 확보에도 더더욱 노력하겠음.
	8.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대형기종까지 확대요망	○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대농업인서비스 강화와 자가 정비능력 현장교육으로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 농기계순회수리는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등 대형기종 위주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04) 65회, 1,173대 수리 - (05) 65회, 1,367대 수리 - (06) 74회, 1,472대 수리 ○ 앞으로도 도에서는 대형기종·신기종 위주로 수리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집중교육으로 내구년한 증대와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추진
	9. 강원감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 인력 보충 필요(산학협력방안 포함)	○ 그간의 추진상황 - 2003. 1월 감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제 조정 • 산채시험장내 감자 연구 담당 신설 • 연구인력 2명을 전담 배치하였음 - 그 결과 감자 신품종 개발 사업 추진 • 연간 6만여 계통 공시 ⇨ 2005년 2품종 신품종 출원 ○ 향후 추진계획 - 부족된 연구인력은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효율을 강화 시켜 나가겠음 시험장, 국가연구소, 원종장, 칩가공회사 등
	10. 강원도 만의 특색있는 시험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 현황 및 기 조치 사항 - 강원도 만의 특색있는 시험연구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권역별특성화 농업 전략을 1차(2001~2005년), 2차(2006~2010년)로 기 수립하여 - 우리 도의 장점인 청정성·진품성·효능성과 다양한 농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권역별로 비교 우위의 특화작목을 추천하고 각 작목별 특성화방안을 제시하여 시험연구 계획 수립 시 반영 추진하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수산자원 연구소	1. 어족자원 고갈 대비 자원 조성을 위한 연구인력·시설 등 인프라구축 기본계획 수립·추진	○ 장기 발전계획수립 추진 및 인력, 예산, 장비 등 연차적 확충계획 수립 추진
	2. 어패류 사료 등 연구개발 지적 재산권 적극 확보 바람	○ 어·패류 사료개발 등 신기술 자체 개발시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추진
	3. 동해안의 인기어종(고가어종)의 종묘생산 확대	○ 쥐노래미, 뚝지, 꼼치, 털게 등 시험생산 추진중
	4. 사업예산이 총예산의 32%에 불과하므로 사업예산 증액 요망	○ 신규사업개발과 연구 추진으로 사업예산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음
	5. 방문객의 효과적인 이해와 홍보를 위하여 연구소의 종묘별, 수족관 시설 설치	○ 시설부지 및 예산확보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6. 연구소 전문연구인력 보강	○ 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계획
	7. 배양장 시설 확대로 치어·종묘생산 증대	○ 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시설확장 및 신설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8. 강원도립대학·강릉대학 등과 기술교류 및 공유방안 강구	○ 도립대 및 강릉대학과 상호 정보교류 및 털게시험종묘생산 및 해삼사료개발 공동 추진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9. 동해안 적조현상 대비책 적극 강구	○ 동해안 적조발생시 어·패류에 공급되는 해수는 10㎛이하의 마이크로 필터로 여러 차례 여과된 해수를 공급할 계획임
환동해 출장소	1. 수산업 증·양식 활성화 방안관련 ○ 말라카이트그린 파동 이후와 이전을 비교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	○ 파동 전·후 비교 - 양식장 : 118개소 → 95개소, - 생산량 : 2,000톤에서 40~50%감소 - 가 격 : ㎏당 1,000~2,000원 하락 ○ 대 책 - MG대체 약품개발·우량종묘 공급 지원 강화 - 송어가공공장 건립 및 브랜드화로 다양한 제품개발 및 홍보
	○ 어병관련 안전성 확보 대책 추진	○ 수생균치료제 대체 약품개발 - 바이오사이드, 포비돈아이오다인 ○ 양식장 국제적 위생관리 기준인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 - 생산·출하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시설 개선 및 컨설팅 ○ 공수산질병관리사 개인병원 개설 유도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 출장소	○ 토속어종 조성기반	○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을 위하여 인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06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 : 3.23. ⇨ 1,096백만 원(기금796, 군비300) ○ 재해발생과 관리운영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06신활력 사업으로 토속어종 생산시설 확충, 사업포기 : '06.8월 ○ 금후,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을 확충하여 토속어종을 확대생산 보급할 계획임.
	2. 경계철조망 철거 및 휀스 대체 적극 추진	○ 군 경계철조망 완화사업 지속추진 - '06 추진 : 18개소 8,104m(4,492백만 원) - '07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동해안 6개 시군 • 사업량 : 8km(경관휀스 대체) • 사업비 : 5,000백만원(국 2,000, 지 3,000) ※ 지방비 중 1,958백만원만 확보되어 부족액은 '07년 추경반영
	3. 해양쓰레기 불가사리 수매사업 실질적 효과 거둘 수 있도록 실시	○ 해안가쓰레기수매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동해안 어업인 생계지원」 차원에서 추진 - 사 업 비 : 1,000백만 원(국600,지400) - 사업기간 : '06.5. ~ 12월 - 인 건 비 : 일당 35,000원 - 10월말 참여인원 : 10,638명 ○ 동 사업 추진으로 어업인 생계지원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며, 특히 항포구 주변 및 해안가 청정 환경조성에 기여 하였음. ○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대하여는 어업인들의 참여확대와 적극적 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 '07년 수매단가를 인상하고 ※'06년 kg당 500원 → '07년 800원 - 불가사리 산란기 집중구제 추진(공동구제) : 4월 ~ 7월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 출장소	4. 연안침식 관련 장기적 모니터링 구축 등 사전예방대책 수립	○ 동해안 침식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용역 추진 - 용 역 명 : 연안침식방지기술개발연구용역 - 사 업 비 : 28,000천원(도비) - 용역기간 : 50일간('06.12.~'07.2월) - 용역업체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거 본 용역 점진적 실시 ['07년도 사업비 : 120백만 원(도비)]
	5.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 기금목표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 ○ 학자금 및 생활안정지원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 강구	○ 도내 전체 유가족 346가구중 생활이 어려운 약 14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목표 기금 20억원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액 약 8천만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미흡함(학자금제외, 가구당 400천원 지원) ※ '06년도 140세대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등급 20등급 이하 ○ 50억원 정도로 기금확대 조성시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금확충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음
	6. 어획금지기간 현실과 맞게 개선 조치 - 대게 금지기간 : 6.1.~11.30.	○ 대게 생태학적 특성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6.11.~'07.12. - 포획대상 : 대게, 붉은대게 암컷 - 조사기관 : 동해수산연구소 - 조사구역 : 고성군 연안일원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지기간 조정 건의 및 협의(해양수산부)
	7.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을 폐지하고 의무적인 보험가입 방안 강구	○ 현재 정부에서는 어선원보험·어선보험으로 구분하여 톤급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어선원62~14%, 어선54~14%)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 의무적 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5톤 미만 어선에 대한 보험료 전액지원시 어선원 보험료에만 연간 약 1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어 지원에 한계성이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출장소	8.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법적문제로 어민들과 불화음이 없도록 검토 추진	○ 현행 침체어망인양사업 추진과정은 - 용역실시 ⇒ 공개입찰 ⇒ 사업자 선정 ○ 동 사업 추진시 지역 어업인들과 사전 협의 · 조정 등을 거쳐 불협화음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9. 삼중망 어구에 대한 대책 조기 수립으로 어민 기반조성에 대처	○ 삼중자망 등 어구별 비교조업 실시 - 기간 : 1년간(07.1월~07.12월) - 대상 : 184척(양양군관내자망어선) - 어종 : 뚝지, 꼼치, 넙치 - 참여 : 동해수산연구소, 어업인, 도 ○ 비교조업 실시결과 분석후 확대여부 등 판단 및 대체어구 개발
	10. 문어 연승 봉돌사용이 환경오염 방지에 호응이 좋음, 확대추진 요망	○ 문어 연승 봉돌제작지원 사업이 많은 어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어 '07년도 동사업 확대 추진 - 사업비 : 150백만원(도비60,시군60,자담30) - 사업량 : 428척(42,857개) - 대상시군 : 5개시군 - 지원율(%) : 도비40, 시군40, 자담20 ※ 양양군 : 문어연승어업 종사자 없음
	11.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30개 마을 중 어촌이 2개 마을에 불과, 어촌마을 확대선정 방안 검토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정산림국에서 주관하며, 농어촌의 마을수를 기준으로 우수마을수 선정 ○ 향후 어촌마을 확대를 위하여 담당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하겠음 - 농어촌의 산업적 비중과 동해안 관광객 수 등을 종합 검토협의
	12. 내수면 어족자원 서식지 제공을 위하여 어도대신 보 중간에 돌망태보 설치 시범사업 추진	○ 기존 개발되어 있는 어도시설 표준 모형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 돌망태 보 시설에 대한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 출장소	13. 바다목장화 사업 확대와 동해안 어족 보호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동해안 서식어종 조사 용역 추진 검토	○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확대 - '06년 : 1개소(강릉 정동진), 10억 - '07년 : 2개소(강릉 정동진,속초 대포동),16억 ○ 국가기관 주도로 장기간 연구용역시행중 - 추진기간 : '03~'10(8년간) - 용역기관 : 국립수산과학원(해양환경부, 어업자원부, 동해수산연구소)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대응책 강구
	14. 한미·한중 FTA대응을 위한 대책 준비 철저	○ WTO-FTA 협상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용역을 추진중(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협상타결에 대비한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을 수립, 대응책을 마련하겠음. - 자율관리형 어업확대 등 자원관리체제 개선 - 소비자 지향적 수산물관리 - 직접지불제 도입 등 합리적 지원체제 확립 - 인력육성, 연구개발등 새로운 발전 동력 확보 - 다기능 어항개발 등 어촌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등
	15. 해수욕장, 리조트 등 몇 곳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파급효과 거양하는 방안	○ 동해안 해수욕장 발전방안 마련 추진 - 1단계 : 동해안 해수욕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통합홍보, 시설물 사용료 일원화 등 - 2단계 : 해수부의 해수욕장 관리법 제정('08 입법)과 연계하여, 국비확보를 통한 전략적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추진하겠음
	16. 동해안 환경변화에 대응한 어종 변화 예측 후 대응책 강구	○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추진기간 : '03~'10(8년간) - 용역기관 : 국립수산과학원(해양 환경부, 어업자원부, 동해수산연구소)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응책 강구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1. 중소기업 대출시 시중금리 유동성에 따라 이차 보존액도 유동성 금리 적용 방안 검토	○ 처리결과 : 종결 - 현재 우리 도는 전국 최고수준의 이차 보전 : 3~5% - 자금이용 기업체의 경우 상한금리 적용에 의한 저리금리혜택 및 전국 최고수준의 이차보전 수혜 - 매년 11개 시중은행과 상한금리 협약 체결 : '06년 은행평균 6.62% ⇨ 따라서 유동금리 적용은 곤란함
	2.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조기 착공하여 공단 활성화로 업체의 불이익 방지	○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2008년 - 위 치 :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 규 모 : 3,000톤/일 - 사업비 : 7,014백만원(국비 4,910 시비 2,104) ○ 추진상황 - 개발 기본계획 수립:'05.11.~12. - 실시설계중 : '06. 5.~'07. 1. ※ 처리공법 설정에 따라 계획보도지연 ○ 향후 추진계획 - 기본,실시설계 및 승인 : '07. 3. - 공사착공 : '07. 4. - 공사준공 : '07. 12.
	3. 유류의 세목중 지방주행세 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배분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개선방안 강구	○ 향후 추진계획 - 세목조정 건의 등 정책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음 ※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4.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주차장 확대, 신용카드결재 확대유도 집배송 활성화 유도,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재보험으로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중장기 및 2007년도) 수립 • 1단계 시설현대화사업 완료(2002~2008) 이후 2011년까지 대형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 중점 확대설치 예정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 주차장부지가 부족한 도심지 생활권 중 심시장의 경우 시장 또는 주변건물의 옥상 및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설치 추진 • 신용카드결제 확대 및 집배송 활성화 등은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은 '07년 1월중 화재보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후 효과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
	5.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으로 끝내지 말고 문제점 해결 추적 관리 요망	○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자 사후관리 추진 • 대상업체 : 838업체(예상) • 관리인원 : 13명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 방법 : 분기 1회 업소방문 지도 • 내용 : 자금집행확인, 경영지도, 애로사항 수렴 등 ※ 소요예산 : 10백만 원
	6. 강원전략산업기획단, 광범위한 연구가 아닌 기업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요청	○ 처리결과(그간 추진내용 및 성과) - 강원도 시군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도내 벤처기업 R&D 연구비 지원 • 산업정책개발을 통한 국비 유치 : 총 913억원 • 산자부 R&D 연구비 : 50과제 168.2억 운영 - 기업지원 관련 • 벤처기업 신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형태로 도내 기업지원 활동 수행중 • R&D 멘토링센터 사업을 통해 국비 유치를 위한 사업기획 지원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기업에 대한 R&D지원 및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 계획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7.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조속 해결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2008년 - 위 치 : 주문진읍 교항리 일원 - 규 모 : 3,000톤/일 - 사업비 : 7,014백만원(국비 4,910 시비 2,104) ○ 추진상황 - 개발 기본계획 수립:'05.11.~12. - 실시설계중 : '06. 5.~'07. 1. ※ 처리공법 설정에 따라 계획보도지연 ○ 향후 추진계획 - 기본,실시설계 및 승인 : '07. 3. - 공사착공 : '07. 4. - 공사준공 : '07. 12.
	8. 홍천 상오안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문제 해결 요구	○ 처리상황 : 추진 중 - 전용 간이상수도 설치 : 1개소 - 마을 간이상수도 공급 : 2개중 1개 시설 ○ 향후 추진계획 - 간이상수도 1개 시설 추가공급 및 자체 시설 개발추진
	9. 강원랜드의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여도 제고 및 지역주민이 바라는 공적 성격의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요망	○ 처리결과(그간 추진상황) - 강원랜드 지역기여도 제고 • 종사원 4,030명중 강원도민 2,724명(68%) •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 '07년 717억원 • 콤프의 지역사용 : 1,195업체 92억원 • 아웃소싱을 통한 지역업체 육성 지원 : 1,525억원 • 건설공사 지역발주 : 3,287억원 •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 901억원 • 복지재단 운영 등 내실 있는 사회공헌 사업 추진 • 지역영세상인 실질적 수혜폭 확대 ※ 재래시장 식자재구매 : 12개시장 윤번제 실시 · 콘도·스키장내 업장 지역주민 임대:41개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 카지노리조트사업 추진 • 카지노호텔 674실(하이원호텔 197, 카지노호텔 477실), 카지노장 4,813평, 테마파크 3,143평, 종업원 숙소 947실 • 골프장(18홀), 스키장(18면), 콘도(403실) ○ 향후 추진계획 - 강원랜드 2단계사업 추진 : 6개사업 선정 ⇨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시하는 아이템 적극 발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 • 종합레포츠단지, 블랙밸리 투자, 동강 리조트투자, 연수원 신축 등 ○ 카지노리조트단지 보강을 위한 발전전략 추진 - 카지노장 증축, 동원부지 개발, 스키타운 조성 등
	10.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조성사업은 운영사례 조사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주요 물류센터 현장방문 추진 • 기 간 : '07. 1월중(2박3일) • 대 상 : 광주물류센터 등 2개소 • 방문자 : 도의원, 도 및 원주시 담당자 등 ○ 물류센터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2월중
	11. 춘천, 원주, 강릉 중심의 집중 투자를 주변시군으로 확대시켜 균형개발 추진	○ 향후 처리계획 - 3각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추진 • 사업기간 : 2006~2010 • 사 업 비 : 1조 3천억원 • 사업내용 : 도내 18개 시·군을 총 망라 지역특화사업을 발굴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12. 송전탑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 강구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이해관계자 상호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도의 조정기능 제고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감 자 원종장	1. 조직배양실 및 실험실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 조직배양실 및 실험실운영 - 인력배치 운영 • 기능직1, 일용직1 활용 • 조직배양 증식재배 • 지금까지 조직배양 : 2,256주 (대서1,508주, 두백748주)
	2. 종자연구관련 업무 통합으로 행정연구등 업무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 업무통합 조직관리계 추후 계획 - 산채시험장, 감자종자보급소, 감자원종장 ※ 연구인력 요구 : 조직관리계
	3. 연구인력 조기확보 대책추진 (기존 인력 재배치 포함)	○ 연구인력 조기확보 - 도 조직관리계 연구직 인력보강 요구 (인력보강 승인신청 : 1. 5일)
	4. 신품종 개발노력 적극추진 (육종확대 보급노력)	○ 신품종 개발노력 - 신품종 「하령감자」 및 외국 우수 품종(5종)수집 선발시험 추진 • 유리온실이용 대량 증식예정 • '08부터 대량생산 농가공급
	5. 원활한 종자 생산으로 종자공급, 가격 조절 기능강화	○ 원활한 종자생산으로 종자공급 가격 조절기능 강화 - 씨감자 검사규정 개정검토 • 현30~250g ⇒ 30~330g개정 - 농림부, 도 건의 (별지공문)
	6. FTA 관련 감자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추진	○ FTA관련 대응책 수립추진 - 계획서 : 별도 송부
	7. 감자원종장 내에 연구소 설치 및 연구진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검토 요망	○ 감자원종장 연구소 설치 및 근무환경 개선 검토 - 연구소 설치는 기구통합 등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추진. - 근무환경 개선 검토 • 산간오지로 직원 숙소 : 8동 신축 사용 (신축 건물로 관사 사용 중)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감 자 원종장	8. 식용감자 생산에서 가공용 감자재배 전환과 가공용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	○ 식용감자에서 가공용 감자 재배 전환 가공용 재배면적 확대추진 - '06가공용 감자 : 6.5ha ⇨'07확대재배계획 : 7.1ha
	9. 수입용 감자(전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추진	○ 수입용 감자 대응 품종재배 육성 - 품종 : 하령감자 및 외국품종(5종) 수집선발 육성 추진 - 외국품종 선발 2010년 농가공급 계획하에 추진
	10. 강원도 감자로 감자떡 브랜드 개발 차별화하는 방안검토	○ 강원도 감자 가공제품 브랜드 방안 추진 - 감자가공제품 시식회 개최 • 감자쥬스, 감자칼국수, 감자식빵, 감자호떡, 감자찐빵 등 브랜드화 추진
	11. 제주도 감자와 경쟁력 분석, 우위확보 방안 강구추진	○ 제주도 감자와 경쟁력분석 우위확보 방안강구 - 제주도 감자와 대체할 고랭지에 적합한 품종육성 ⇨ 하령 감자 및 외국 품종(노랜드 등 5종) 수집 선발 육성
산 채 시험장	1. 강원도의 특색있는「미래 기능성 건강식품」을 연구·개발하는 시험장의 연구시설 노후 및 규모 미흡 ⇨ 개선 요망	○ 연구시설 현황 - '92 년도 설립한 산채시험장 청사 및 부대시설(1,512㎡)은 청사 누수, 화장실 노후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수가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시험연구시설 시설개선 (하우스18동 2,970㎡)과 - 청사 및 관리사 보수(500㎡) 등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2. 낡고 오래된 시설로 냉·난방 효율이 낮아 근무환경 열악함 ⇨ 화장실 냉·난방시설 시급한 교체 및 건물 증·개축 검토	○ 시설현황 및 문제점 - 청사 및 시험연구 시설에 소요되는 연료비는 연간 25백만 원으로 약 20백만 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채 시험장		- 청사 내 난방시설은 주철관으로 연료 소모량에 비해 열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07당초 예산에 연료비 부족분 20백만원을 확보하고 - 시설 난방 점검 등 시설진단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3.「감자연구」 부분은 감자원종장과의 일원화 방안 검토 추진	○ 감자 관련 기구현황 - 도내 감자관련 기구는 산채시험장 감자 연구담당(품종개발), 감자원종장(씨감 자생산) 감자보급소(씨감자보급)이 있음 ○ 감자원종장 이관 검토 - 신품종 개발시 경계 병해충 접종 등 씨감자 생산 위험요소 많아 세계적으로 육종업무와 생산업무는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농업선진국인 미국, 캐나다,화란,독일, 일본 등 육종 업무와 씨감자 생산업무 일원화 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없음
	4.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사업”에 즉시 접목할 수 있는 책임 연구 추진	○ 연구 추진상황 - 산채시험장 연구수행 중인 과제는 총 20과제 (감자11, 산채9)이며 - 신품종 개발, 농가 애로기술 해결, 현장 접목 연구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개발기술은 조기에 농가 실용화 할 수 있도록 파급 효과를 거양 하겠으며 - 우량종묘보급 등 농업인 소득 증대와 연계된 사업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채 시험장	5. 신세대 입맛에 맞는 산채시험 연구 추진	○ 현 황 -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산채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 신세대는 산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부응한 새로운 산채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산채개발을 위한 신품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신세대선호의 산채를 발굴 개발해 나 가겠음
	6. 수량, 품종개량도 중요하지만 저장 · 유통기술 개발도 적극추진	○ 현 황 - 산채류는 대부분 단순가공에 의해 보존 · 유통되고 있으나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저장 · 가공 · 유통 기술의 개발도 필요한 시점임 ○ 향후 추진계획 - 개발 품목에 대한 기호성 평가 및 저장 가공성검정 등을 병행하여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라) 관광건설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보관실	1. 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관한 민원성 글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삭제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삭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민원성 글들을 임의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합리적인 절차 들을 밟고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강원도 및 시 · 군의 홈페이지 운영규정(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 관리부서 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되고 있음. - 삭제된 게시물은 해당 담당자가 관리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보관실	2. 동계올림픽홍보는 국내인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인천공항 수화물장 한 곳에만 홍보물을 설치한 것은 동계올림픽 홍보효과가 매우 떨어지므로 내년도부터는 외국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공항 입출구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007년 이후 도정 홍보 방향은 전국화, 세계화를 추구하고자, 국제공항 및 전국 CA-TV방송광고 등 광역적이고, 글로벌한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있어, - 기존 인천공항 내 와이드칼라를 1층 수하물장에서 2층 입국심사대로 위치를 조정·확대하여 추진하고, - 그 외, 도내외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제주, 김포, 양양공항 내 와이드 칼라설치로 국내외민을 대상으로 한 인바운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도IC 인근) 대형 야립 광고를 시행 하므로써, 2014 동계올림픽 개최 공식 후보도시인 평창의 존재와 위상을 알려 유치 확정을 위한 홍보추진에 전력을 다하고자 함 ※ 2007년도 신규·확대 홍보매체(2종 5개매체) - 인천 신 공항 고속도 야립 간판 1, - 국제공항내부 와이드칼라 4
	3. 동트는 강원은 외국기관 및 유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대표 정기간행물로 매년 동일대상 기관에만 배포하는 경향이 있어 그 홍보효과가 의문시됨. 향후에는 배포 대상기관 및 개인 또는 배부처 등을 다변화 시켜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알 수 있는 간행물배포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 동트는 강원의 주요 배부처는 현재 - 도정 관련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 도내대학 및 도서박물관, 전국 교육 기관 - 기업체 및 은행 등 경제관련 기관, 콘도 호텔, 국내외 여행관련기관 - 출향도민 및 주재 대사관, 종교 및 문화 관련 단체·기관, 언론사, 병의원, 다중 집합장소 등으로 ○ 총 70개 분야의 관계 기관에 배부되고 있으며 - 추가적인 배부가 요구될 경우 자체적 검토를 통해 수시 보완하여 추가 배부하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관광문화국	1. 시·군 무분별한 축제 난립과 관련 -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제도 도입 - 축제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경쟁력 없는 축제 통폐합 - 경쟁력 있는 축제는 적극 발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처리결과 - 축제의 평가, 경쟁력 있는 축제에 대한 국도비 집중지원 등은 『1시군1대표축제』 육성시책을 통해 기 시행중 ○ 향후계획 - 축제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 관광상품성이 없는 축제에 대하여 정비 유도 계획
	2.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 수질개선사업비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비로 경기도에 660억원, 우리도에 16억원만이 지원됨 - 배분기준에 문제가 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 배분구조를 우리 도에 유리하도록 추진	○ 처리결과 -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06.12.12.) •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불합리 (지원방안, 계획수립 절차 등) ○ 향후계획 - 주민지원사업 추진관련 제도개선 건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현행 추진지침 불합리 개선 • 배분기준 개선(상류 기여부분 포함 또는 실질적 수질개선 사업으로 전환 등)
	3. 도내 폐비닐 재생업체 지원 - 환경부 수질오염기금 일부를 업체에 지원	○ 처리결과 -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94년부터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재활용사업 창업 대행비 지원과, 재활용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실시 - 수질오염기금 지원사항은 기금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지원계획 없음.
	4. 북한강 상류지역 댐 어도 - 각 댐마다 어도가 설치되지 않아 하천생태계 질서 파괴 - 자연생태계 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댐어도계획서 수립 중앙부처 적극 요구	○ 처리결과 - 북한강수계 댐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도설치 건의조치 ※ 원주지방환경청 정례협의회 안건 상정 · 협의 ('06.12.20.)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관광 문 화 국		○ 향후계획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계획 제출시 댐 소재 시군에서 타당성 검토후 연차적으로 어도 설치 추진
	5.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관련 - 각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달라 혼란,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 발생 가능성 - 도에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음식물 처리에 대한 지침마련 시군에 배포하는 방안	○ 처리결과 - 2002.3월 환경부에서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운영지침"이 시·군에 배포 되어 활용중임 - 07년 1월중 시군 지도점검 실시하여 기 시달된 운영지침을 준수토록 조치할 계획임
	6. 태백「철암세상」관련 - 철암세상사업 주민 반대로 국비 지원 기대 어려움 - 관련 부서에서는 탄광지역생활 현장 보존·복원사업 관련하여 국비지원을 반드시 받아 추진	○ 처리결과 - 대안사업 선정 요구 (태백시)철암 ⇨ 소도 광산역사 체험 촌 -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 대안 사업으로 "소도 광산역사체험촌"포함 제출 ⇨ 사업계획 반영 및 국비확보 적극 추진
	7. 민·외자 관광사업 관련 -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외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추진	○향후계획 - 외자유치시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운영 • 향후 관광의 성향분석 및 제출된 사업의 타당성 분석 • 사업의향자에 대한 대안 제시 등 • 투자유치 분야 및 규모 설정 - 최상의 민자유치 투자상품 개발 • 토지의 가치, 주변지역 장기발전계획, 주변여건 등 정밀 분석 • 이용 토지에 대한 컨설팅 분석 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 맞춤형 투자유치 상품 개발
	8.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방안 및 자연공원 층고제한 관련 - 도의 의견과 해당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 용역결과에 반영	○처리결과 - 2006.12.12. 용역납품 완료 • "친자연적 집단시설지구 정비 방안"은 국립공원 관련사항임 • "자연공원 층고개선 용역"(KEI)은 의견수렴 보완 완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관광 문 화 국	9. 국제관광정보센타 운영관련 - 지출액이 수입보다 10배 이상 초과 운영관리의 문제점 대두 - 국제관광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극대화 및 흑자전환 대책강구	○향후계획 - 강원관광의 명소로 운영 • 엑스포 관람시설 고객만족 운영 • 홍보안내 및 관광정보서비스 강화 •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 강화 등 - 긴축예산과 조례 등의 운영현실성을 고려 자체시행 가능대책 지속추진 • 인건비 절감 지속 추진 정규직 (최초설립시) 14명 ⇨ 현 8명 통역안내원 (〃) 10명 ⇨ 현 8명 연수생, 공익근무원제도 적극 활용 중 • 대책개발 관련 전문기관 용역의뢰 검토 및 예산편성 요구(2007~8년)
	10. 강원관광산업 타도에 비교 경쟁력 저하 - 동해안 항포구에 대한 관광전략 미흡 - 동해안 항포구에 대한 차별화 된 볼거리 등 전략수립 추진	○처리결과 - 어촌, 어항 관광자원화 추진중 • 지역별 규모화된 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한 다기능 복합어항,어촌체험마을, 요트마리나 시설 등 관광자원화 추진 • 다기능복합어항 조성 : 3개소(안목항, 대포항, 대진항) • 어촌체험 마을조성 : 9개소 ※ 기 조성 : 5개소, 추가조성 : 4개소
건 설 방재국	1. 미시령터널은 설악권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으나 미시령터널이 개통된 이후 과다한 통행료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차원에서 미시령터널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것 보다 국비나 도비로 건설했어야 합니다. 또한 추정교통량 과다산정 또한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근 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도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나 운영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추후 운영결과 검증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건 설 방재국	2. 403도로는 1개 군민이 주 도로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2군단 군인 가족들도 대다수가 이용하여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구간 도로선형 개선이나 대안으로 나온 새밑고개 터널화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난 5년 동안 방치되어 온 새밑터널 사업에 대한 국비 등을 확보하여 조기 착공토록 조치하기 바람	○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착수시기를 결정하는 등 지역민의 편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조정 등 조기 착수 여부를 검토해 보겠음
	3. 자전거도로 지원 사업이 시를 중심으로 일부 시군에만 편중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군단위 지역 중 특히, 농어촌지역이 문화시설 혜택으로 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농촌지역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시군별 형평성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 현재 자전거 도로 중앙지원 사업은 사업효과가 높고 자전거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생활권과의 연계 및 관광·레져 지역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는 사업효과가 낮은 농촌지역이라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사업기대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 추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4. 우리 도내에 고속도로사정은 타도와 달리 매우 열악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전체적으로 비싼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에 대한 통행료 인하대책을 세워 정부에 건의하기 바람	○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음
	6. 미시령터널입구에 부속시설로 휴게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찾기가 어렵고, 주차장시설이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근거리에 있지 않아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바람	○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이용자 편익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해 나가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건 설 방재국	7. 재난이 발행할 경우에 소방 119구조대가 있으나 이들의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구조대가 소방 구조대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구조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 안전문화운동시책 중 안전점검 필수 장비, 수상구조, 구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시군 및 안전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원이 경미한 것이 사실이며 재난구조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8. 하천법에는 영구 공작물 설치를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선군 조양강 둔치에 자연석 공원과 테니스장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더 큰 수해를 일으킨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데 더 큰 원인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도 단위 하천횡단 공작물 설치 허가·협의 시 유수소통 지장 여부를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허가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하천공작물 설치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수계별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의법처리 ○ 시군에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시 유수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허가 요건을 강화토록 지시
	9. 시군마다 불법광고물이 시내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수립 - 도 및 시군자체 연중 단속실시 ○ 2014동계올림픽 현지실사 전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2007. 1월중) - 점검대상(18개시군) : 도로변, 휴게실, 공공시설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 점점결과 조치계획 : 불법광고물 설치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적의조치
도로관리 사 업 소	1. 북부지소가 관할구역은 타소에 비해 유사한 업무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10명 정도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로관리에 부실 우려됨으로 타 지역과 형평성 및 도로 관리 안전 측면에서 조속히 조직 개편을 증설하여 북부 영서지역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원활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원이 증원되도록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환경연구원	1. CCA방부목은 그 유해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역 주민에게는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유해성에 대한 홍보 방안 대책 등을 강구하기 바람.	○ CCA방부제란 - 목재 등이 미생물이나 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폭 넓은 항균력을 지닌 약품. 세계시장의 90%를 점유. 우리나라는 75%이상을 현재 사용 중. 산화금속염의 비율에 따라 CCA-1CCA-2,CCA-3으로 구분되며 CCA-3가 대부분 사용됨. ○ CCA방부제에 함유된 유해중금속 으로는 비소와 구리, 크룸 등이 함유되어 있어 목제 등에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방부제로 현장 적용시 오일코팅 처리로 강수로 인한 유출을 최소화 시키고 있음. ○ CCA 방부목 설치 시 준수사항 으로는 - CCA처리 방부목은 크롬화된 동, 비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을 목재에 함침 시킨 제품으로 신체접촉을 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 시공 시 남은 방부목재를 태우거나 톱밥 등을 토양에 살포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주지시켜야 할 것임 ※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내 방부목 설치에 따른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방부목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토양과 하천에 대한 오염여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방부목에 대한 유해성은 인증되고 있으나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징후 여부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후 불합격 횟수가 2회 이상 되는 마을 상수도로 보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됨.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 수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바람.	○ 수도법에 의하면 마을상수도의 관리자는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이고, 마을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예산과 개선기간이 수반 됩니다. - 2회 이상 수질검사 불합격 된 곳을 수시 파악하여 대장균군, 일반세균 등 미생물 관련 항목만 부적합한 곳은 염소소독시설을 개선, 소독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도의 해당 부서와 시장·군수에게 촉구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환경 연 구 원		- 지질과 관련한 불소, 알루미늄, 망간, 철 등 중금속 항목과 수질오염과 관련한 질산성질소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상수원의 대체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 단계적인 계획수립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관련부서와 마을상수도의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에게 촉구하겠음
	3. 음식물 쓰레기는 그 수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리하기도 매우 곤란함. 민간 기업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퇴비화 방안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민간연구소와의 협력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획기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인력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 현재 연구원에서 이러한 분야까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술은 아직 민간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대기업의 참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 됨. ○ 따라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상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1차 현장 에서 완전 소멸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2차 오염 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정부차원에서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원에서 1999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유형별 성분 분석과 고속발효기의 효율 성능을 분석하여 부산물로서의 효용가치 여부를 조사한 예는 있으나 추후 인력 및 예산지원이 허락하는 대로 보강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부서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마) 의회운영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의 회 사무처	1.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기존 원거리 지역 의원들에게 등원시 지급하던 여비가 금지되었는데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행사 참석시 여비 지급 요망	○ 지난 12월부터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단위 주요행사에 의회차원에서 참석시 여비를 지급해 오고 있음. - 참석여부 파악 → 의장님결재 → 여비지급 ○ 앞으로도 도단위 주요행사 참석시 각 전문위원실을 통해 참석여부를 알려오시면 의장님 결재 후 처리해 드릴 계획임. ※ 여비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때
	2.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무환경 개선 (2의원 1책상 ⇒1의원 1책상)	○ 회의실 등 전반적인 사무환경 개선은 “의사당” 증축과 함께하여 검토할 계획임. ○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1의원 1책상을 비롯한 1의원 1사무실 제공 등도 반영하게 됨.
	3. 의회사무처 속기사 직급상향 조정 요망	○ 속기사는 일반경력직렬 중 “기능직”의 “워드필기” 직종으로 분류되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해 운영됨. ▷ 속기사 정원 : 8명(8급 1명, 9급 7명) ▷ 속기사 현원 : 8명(8급 7명, 9급 1명) ※ 사무처 “워드필기” 15명 중 속기사는 8명이며, 근속 승진에 의해 정원보다 현원 직급이 높음 ○ 정원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도의 전체적인 정원관리와 연계시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이를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4. 의원 홈페이지 내용 중 도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 할 수 있는 의원발언대 공간 확보요망	○ 기존의 의원소개 싸이트의 “의원발언대”내에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코너가 운영되고 있음 (사무처에서 올려드림) ○ 의원님이 직접 도민에게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는 공간은 의회홈페이지내에 “의회광장”의 “정책 및 의견제시“ 코너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의 회 사무처	5. 각종 도의회 행사와 강원도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행사 일정관리 철저	○ 도의회차원의 연찬회, 총회, 각종 이벤트 행사 등 계획은 의사일정과 의장님 일정, 도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고 있음. ○ 도의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6. 도의회 의원연수 등에 활용할 전문 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검토	○ 도의원 연찬회시 수준높은 강사진을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 강습기관 단체, 국회, 대학교수 등 강사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방의회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의원님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을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강사진 데이터베이스는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하여 운영할 계획임.
	7. 의회청사 사무실배치(안)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검토 요망	○ 의사당 증축에 대하여 “의정대표협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완료한 상태임 (1.22 의원총회시 배부) ○ 실시설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반영시켜 나갈 계획임.
	8. 도정질문을 연 2회 각 3일씩 12명의 의원이 하는데, 2일씩 연 3회 실시 방안 강구	○ 2006연말 도의원 설문 결과 연간 도정질문운영 횟수를 연 3회 각 2일씩 8명의 의원으로 개선을 희망함에 따라 ○ 이를 2007년도 의회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나갈 계획임.
	9. 상임위원회 기능 및 명칭 (세부 · 전문적) 조정 방안	○ 상임위원회 구성의 개편에 대해서는 전체 도의원 설문 결과 현행 상임위원회를 유지하는 의견이 63%로 나타나 현시점 에서는 이를 보류하되, ○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편입될 전망으로 있어, 제8대 도의회 개회시에 재검토할 예정임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개 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0월 21일 개회된 제1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12명, 기획행정위원회 10명, 교육사 위원회 9명, 산업경제위원회 10명, 관광건설위원회 10명으로 전의원이 참여하였다.

나. 자료 제출 요구

1) 감사자료의 요구현황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891건이며 강원도에 769건, 강원도교육청에 122건을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요구 자료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임위원회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총 계		891	25	201	256	186	223
강원도	소 계	769	25	201	134	186	223
	공보관실	12					12
	국제협력실	11		11			
	감사관실	15		15			
	기획관리실	52		52			
	자치행정국	66		66			
	환경관광문화국	119					119
	보건복지여성국	106			106		
	농정산림국	79				79	
	산업경제국	46				46	
	건설도시국	81					81

구 분		상임위원회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강원도	소방본부	12		12			
	미래기획단	7		7			
	동계올림픽유치단	0		0			
	농업기술원	34				34	
	공무원교육원	15			15		
	보건환경연구원	11					11
	강원도립대학	13			13		
	환동해출장소	27				27	
	의회사무처	25	25				
	강원발전연구원	9		9			
	강원도개발공사	17		17			
	강원도체육회	12		12			
교육청	소계	122			122		
	강원도교육청	122			122		

다. 감사 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11월 19일 미래기획단을 시작으로 20일 감사관실, 소방본부, 21일 자치행정국, 22일 강원도체육회, 강원발전연구원, 23일 기획관리실, 26일 강원도개발공사, 27일 국제협력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 11월 19일 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21일 도교육청, 26일 원주반곡초중학교, 강원예술고등학교 현지확인, 27일 강원도립대학의 감사를 실시하였다.

4)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 11월 19일 농정산림국을 시작으로 20일 산업경제국, 21일 내수면개발시험장, 농업기술원, 22일 환동해출장소, 23일 가축위생시험소, 산림개발연구원, 26일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5) 관광건설위원회

2007년 11월 19일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현지확인 및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일 동강관리사업소 현지감사, 21일 도로관리사업소 현지감사, 22일 환경관광문화국, 26일 건설방재국, 27일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감사 결과

1) 감사 결과 및 처리 현황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2007년 12월 14일 제180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되어 2007년 12월 14일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으로 이송하였다.

구 분	합 계	시정 · 처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계	260	260	-	-
의 회 운 영	13	13	-	-
기 획 행 정	51	51	-	-
교 육 사 회	51	51	-	-
산 업 경 제	116	116	-	-
관 광 건 설	29	29	-	-

2)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결과 요지

가) 기획행정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국 제 협력실	1. 동북아지사·성장회의가 1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교류국 관련 체험지가 없음. 고성 등지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 검토	○ 도의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08년도 연해주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지사·성장회의에서 회원국별 특성을 살린 전통가옥, 문화예술거리 등 각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체험공간 조성 등 제안 계획
	2. 연해주 방문 시 고려한인회는 복잡한 세관절차 및 동춘호 운임 부담이 큰 사항을 조정 해 주기 바라고 있음	○ 통관절차 간소화 문제와 선박운임 조정 문제는 2008. 제13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양자회담 공식 제안 계획 ○ 항로 및 해로개척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환동해권 물류망 확보에 다각적 노력
감사관실	1. 애향파수관제도는 파수관 수에 비해 제보실적 미흡→ 실태분석 보완	○ '07년도 애향파수관제 운영 실적 - 애향파수관 정비(238명→233명) • 활동실적이 저조한 자 해촉 : 21명 • NGO단체 임직원 등 위촉 : 16명 - 제보사항 접수·처리:98건(2006년 : 70건) - 합동연찬회 개최(1박2일) : 165명 -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7개 시·군 -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외국 연수(15명) - 애향파수관 홈페이지 개설·운영(07.1.1.~) ○ 향후 추진계획 - 연도별·시군별·개인별 제보활동 등 실태분석을 통하여 조직 일제정비 • 실적이 저조한 자를 과감하게 해촉 - 우수 애향파수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해외연수기회 부여, 도지사 표창 등 - 애향파수관 전용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도·시군의 시책, 사업계획 등 자료제공 • 애향파수관 활동 우수사례 전파 - 애향파수관 합동 연찬회 및 시군 순회간담회 등 내실 운영 ⇒ 2008.1월중 애향파수관 운영 실태분석 및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감사관실	2.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 수시 감찰활동 강화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실태 조사」실시 - 기 간 : 2008.1.~2월 - 조사대상 • 시·군보조금예산및집행사항('07 ~ '08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 조사결과 활용 • 보조금 집행사항을 사전검토,「2008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 적극 활용 ○ 수시 감사활동 전개 - 대상 : 5개시·군 (실태조사 결과 취약분야 등 선정) ※ '08년 종합감사 대상 시·군 제외 - 시기 : 하반기 중 - 중점감사사항 • 보조금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이행사항 • 보조금 목적외 사용, 지출절차의 적법성 등 - 결과조치 •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신분상·재정상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강구 (제도개선 등) ○ 2007년 추진실적 - 설연휴 등 취약시기 및 산불예방, 기업 지원관련 공직감찰 실시(7회) - 적발 및 조치내용 • 행정상조치 96건(시정 60, 주의 36) • 신분상조치 45건(경징계 4, 훈계 41) • 재정상조치 10,612천원(회수8건 9,735, 추징1건 877천원) ○ 2008년 추진계획 - 시 기 •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및 상시 직무감찰 활동 실시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상황에 대한 수시감찰 실시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감사관실		- 주요 감찰내용 • 취약분야 직무관련 금품·뇌물·향응수수 등 공무원윤리강령 위반행위 • 시간외 근무상황 부당체크 및 허위출장 계상 후 개인 착복행위 • 법집행 해이 및 민생안정 저해행위 등
	3.「청렴강원」실현을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교과목에 '목민심서'포함 등)	○ 08년 공무원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교육(목민심서 포함) 확대 요청 :'07.11.30.(도→인재개발원) - 08년 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과정에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등 청렴교육 확대 반영 - 반영결과 : 36개 과정 116시간 ※ 2007년도 실적 : 22개 과정 65시간 ○ 국가청렴위 주관 청렴전문가과정 및 청렴사이버과정 교육참여 확대 추진 - 2008년도 교육수요 조사 중 ※ 2007 교육실적 : 88명 • 청렴전문가 19명, 청렴사이버과정 : 69명
기 획 관리실	1. 접경지역 지원법이 행정자치부 중심 사업에 국한되고, 타부처는 무심한 상태, 타부처의 의무참여 등 강행규정(법)개정 지속건의	○ 효율적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04~'07) : 13회 ○ 행자부에서 접경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7.5.~8., 한국지역경제학회) ○ 연구용역결과 바탕으로 세부실행 계획 수립 추진('07.10.~12.) - T/F팀 운영(행자부, 시도, 민간전문가 등 10명) -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마련 ⇨ 향후 세미나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후 실행 계획 확정 및 추진('08.1.~2월)
	2.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되고 있으나, 보호구역완화 미흡,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과 배려 차원에서 계속적 완화 노력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관련통합법 제정('07.11.) - 민통선 축소 : 15㎞ → 10㎞ - 개별군사시설 : 1㎞ → 500m 등 ○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추진(국방부→인수위) - 접경지역의 제한보호구역폐지(민통선이남15㎞) → 군사시설별 보호구역으로 완화(500m~5㎞) - 시설별 개발제한 범위 축소 등 ⇨ '08 상반기중 관련조항 개정 추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기 획 관리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관리·지도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재정악화 예방 및 무분별한 기채발행, 외상사업 제재 강화	○ 시군 재정운영 관리·지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석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관리중임 ○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행정자치부 시군별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토록 하고, ○ 道에서는 주기적인 재정공무원 연찬회 개최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시군의 건전재정운영 지도에 최선의 노력 경주
	4.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조례 미제정으로 자치단체 불이익 → 지속적 사후관리 조치	○ 학교급식지원사업은 -'07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사업 추진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 연차별로 확대 2011년까지 도내학교 100% 시행을 목표로 추진 ※ 07년 도비시범사업 → 철원, 화천 (도 30%, 시군 70%) ○ 현재 조례는 17개 시군이 완료되었으며 제정추진중인 영월군은 '08 상반기 중 완료 ⇨ 향후 시군 자체사업 시행촉구 및 도비지원 사업 확대, 사후관리, 감독 강화 계획
	5. 강원도 출연기관(특히 도지사가 대표로있는 기관) 지원금 관련 회계 부적절 사례 발생 시 패널티 적용, 감사관실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 (강원발전연구원)	○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우 - 도 출연기관으로서, 매년 2~3월중 전년도 예산 및 기금 운영, 일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회계부정행위 적발 시, 연구원 징계약정 기준에 의거 엄정하게 처분 조치할 계획 ○ 이와 병행하여 - '07년부터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 개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명령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기 획 관리실	6. 7+6플랜사업의 전반적 사업성 분석 및 평가필요, 사업 부진의 경우 적극적 사업폐지 검토 요구	○ '7+6플랜'은 - 「7대 기능축+6대권역」 축으로 강원도의 공간구조와 지식산업을 근간으로 한 우리 도의 최상위 공간발전 전략으로, - 도전역을 미래지향적인 신도시 조성과 지역별 특성화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총 대상사업은 139개사업으로 - 7대성장축외 6대권역사업은 제3차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지고, - 관련 사업은 직무성과평가계획에 의거 별도로 평가와 분석을 하고 있으며, -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추진 재검토를 요구하고, 부진 지속시 사업정지 등 강력대처
	7. 7+6플랜,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등 강원도의 총괄적인 정책 추진 시 벤치마킹차원 관련 공무원 해외선진지 탐방 주문	○ '07년도 소관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 강원도형 미래도시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강원도의 미래발전모델이 될 만한 선진 도시를 선정, 강원도적으로 접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선진지 벤치마킹 • '07.10.~11월, 3개팀 28명, 러시아 등 • 시책발굴 건수 : 44건 - 디자인관련 시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 선진국의 경관보전과 디자인 분야에 대한 선진지 우수사례를 도정에 접목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시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고자 선진지 벤치마킹 ▪ '07.11.~12월, 2개팀 23명, 영국 등 ▪ 시책발굴 건수 : 16건 ○ 앞으로도,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틀과 실제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시책화에 최대 노력 경주 ⇨ 제안된 시책에 대하여는 도정시책화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지속관리 추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 치 행정국	1. 직무후생복지 관련, 퇴직자들에 대한 예우와 사기앙양대책 강구('퇴직공무원 퇴임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 검토)	○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검토 - 퇴임식 정례화 : 상하반기 실국단위로 실시하되, 예산지원 검토 - 공로연수활동 적극 지원 •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등 작성·발간 희망시 소요경비 지원 • 부부동반 해외연수(기실시) ○ '퇴직공무원 퇴임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가능(자치법 제22조) -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도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제정 불가 ⇒ 공직퇴임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
	2. 신규 공무원은 선교육, 후임용 제도 강화, 청렴교육과정 개설 교과목에 '목민심서' 필수과목으로 포함	○ '07년부터 인재개발원에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을 개설하여 선교육, 후임용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08년 계획 : 2기 360명(9월, 11월) ○ 인재개발원에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청렴윤리관련 교과목을 편성 운영할 계획 - 기본교육과정 : 3개 과정 - 전문교육과정 : 46개 과정 - 장기교육과정 : 1개 과정 ※ 교과목에 목민심서 편성
	3. 도정기록의 체계적관리운영 관련 단순 행사위주 편년체 방식 지양, 내용의 역사적 중요성 위주 기록 정리	○ 도정의 다양한 각종 행사, 정책 자료 등을 기록 부서에서 직접 기록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각 사업부서에서 정리보관 후 문서기록실에 이관 보존하고 있음 (영상물 : 공보실, 연설문 : 비서실) ○ 현재 전산시스템(전자결재, 업무관리)에 중요한 사료는'지식관리시스템 '內'도정사료방' 코너에 분야별 축적되어 지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 치 행정국	4. 미수복 도민회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도민체전 등 행사 입장 시 소개 멘트 등 방안 강구	○ 올해부터 미수복도민회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소개멘트 및 입장순서 등 배려
	5.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관련 기 추진 사업에 대해 평가분석 실시 및 기획관리실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방안 강구	○ '07년도에 추진한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부족으로 강원도만의 자연환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 향후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 노력과 함께 기획 및 입안단계부터 전문가 참여와 디자인 개념의 적극적 반영을 위해 「디자인 강원 자문단」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와 연계 우리도의 이미지에 맞는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을 시행 할 계획
	6. 도와 시 · 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 결원보충, 직제의 신설·개편, 연고지 배치 등 요인 발생 시 지속적인 인사교류 추진 ○ 「1:1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자 생활안정 여건조성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 건의 추진
	7. 도민의 날 행사추진 관련,시군 의견을 취합하는 등 평가 철저	○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지원하여 왔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 더욱이,'08년에는 시군 지원 예산이 미반영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경예산 확보 및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지속 노력 해 나가겠음 ※ 도민의 날 관련 시군 행사 지원현황 - '06년 : 380백만원(도비280, 시군비100) - '07년 : 200백만원(도비100, 시군비100) - '08년 : 미 반 영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 치 행정국	8.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생활체육 경기 단체지원조례' 제정 검토	○ 각종 체육대회 지원은 기준을 정해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나, 향후 대회지원에 관한 타시도 사례조사 및 자문,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9. 청소년 육성 관련, 청소년 여가 활동 프로그램 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도록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추진하면서, ○ 프로그램 참여, 성과증진을 위해 -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강화 -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장소)및 길거리 캠페인 전개 - 청소년 시설 · 단체 연계사업 개발 - 프로그램 설문실시 등을 통한 피드백 추진
소방본부	1. 강원소방정책의 장단기 비전 마련 (장비확충, 인력, 예산, 확보 등)	○ 소방정책 장단기 기본계획 수립(08. 1월) - 인 력 :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하여 3교대 근무확대 중점으로 인력확보 추진 - 장 비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소방 장비보강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후 소방차량 연차적 교체 - 예 산 : 강원도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속적 예산확보 추진
	2. 소방서 미설치 시 · 군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완 등 확실한 추진 요	○ 군지역 소방서 신설 기반조성 - 미설치 지역 : 7개군 • 횡성, 평창, 인제, 화천, 양구, 양양, 고성 - 추진방침 : 단계적 추진 • 총액인건비 및 수요와 관할인구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 추진 • 횡성(09년), 평창(10년), 인제(11년) 화천 · 양구 · 양양 · 고성(2012년 이후)
	3. 안전소방관리체계의 보완관련, 국민의 소방 책임주지 교육과 소방업무의 한계 명시	○ 추진실적 : 376,917명 소방교육 실시 - 이 · 통장, 각종 단체 등 : 336,710명 - 아파트 단지 부녀자 등 : 17,867명 - 다중이용업소시설 관계자 : 22,340명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소방본부		○ 추진계획 【상업밀집지역】 - 소방안전점검 및 지도(분기별) - 소화기 비치 및 소방안전교육(월 1회) - 상가 및 시장 대표자 간담회(연 1회이상) - 관서장 현장 확인(연 2회이상) 【다중이용시설】 - 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대피능력 교육 : 특별 소방검사 시 실시(연중)
	4. 소방청사 건립 시 강원도형 표준 모델을 만들어 추진방안 강구	○ 청사 신축 시 반영 검토 - 소방특성에 맞는 표준과업지시서 작성 - 관서별 최소 건축 연면적 기준 적용 • 소 방 서 : 2,500 ~ 5,000㎡ • 안전센터 : 500~830㎡, 지역대 : 330~500㎡ - 소방 고유공간 표준화 및 시설규격화 • 차고, 대기실, 식당,사무실, 회의실, 호흡보호실, 소독실, 세차시설 등
	5. 화재 등 예방을 위해 시·군 소방서장 분기별 예방칼럼 게재 등 홍보활동 강화	○ 홍보매체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연간 소방관서별 칼럼 보도추진 - 소방관서장 별 보도일정 별도 지정 추진 ○ 보도내용 - 지역별 소방안전 대책 및 시기별 화재 예방 당부, 소방정책 등
	6. 소화기 비치를 건물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등 개선점 검토	○ 건축허가 소방동의 및 완공 시 소화기 설치 위치 지도 강화 - 복도(벽체 매립형), 거실(주 출입구) - 소화기 위치표지는 축광·발광형 소재 표지판 부착 등 ○ 소방검사 시 소화기 설치위치 재조정 및 유지관리 철저 지도 - 설치위치 임의 이동 제한 - 소화기구 주변 광고물 등 부착 엄금 ○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방방재청 건의 (08년 상반기) - 현행 : 1.5m 이하 설치 - 개정 : 1.5m 이하의 벽면고정 내지 벽체 매립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미 래 기획단	1. 강릉 복합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재검토·평가로 평가가 낮을 시 도시추진 재검토	○ 1차 사업타당성조사('07.5.~11월)결과 개발 가용지 면적이 전체 부지면적의 31% 수준으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변경하는 부지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 평가후 신중히 추진 할 계획임.
	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 개발 추진과 관련, 기반조성 사업에 국비가 60~80% 지원, 도비 지원 계획 조속 수립 (일반 부지 매입 국비확보 및 도비 지원 계획 수립)	○ 반환기지 활용계획 확정 후 수립 :'08. 6이후 - 국비지원은 2차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 후 지원규모 확정(중앙발전위 심의) • 국비 협의(국방부·예산처 등) :'08.2.~5월 - 도비지원계획은 정부의 국비지원규모 확정 후에 수립추진 : '08. 6월 이후
	3. 2월, 7월, 11월 업무보고시 추진사업 연계 보고	○ 업무보고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임.
	4. 서울대 이전사업인 대학도시조성 서울대 시스템 면역 의학연구소 건립,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관련, 사전 환경성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면밀한 행정 지원	○ 대학도시조성 - 시기 도래시 사전 환경평가 시행 ○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 홍천군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08.6)시 환경영양평가 실시 계획임. ○ 그린바이오첨단 연구단지 - 사전 환경성평가를 실시하였음.
	5. 강원도 콜센터 운영 관련,이용 실적 저조 및 문의 내용이 단순사항으로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철저한 평가로 사업 추진 재검토	○ 운영성과 분석 : '08.1월 - 분석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 자체평가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08.2월 - 분석자료에 의한 활성화 방안 등 ○ 성과분석 보고(의회) : 2월회기 중
	6. 미래기획단 업무의 광범위로 현 인원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업무조정 검토 및 공무원들의 역량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2007.12.28일자로 입법예고된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2008.1.11.) - 담당직제 신설 ⇒ 비즈니스센터지원담당(4명증원) - 소관업무 조정 추진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업무 ⇒ 지역개발과 이관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미 래 기획단	7. 한국혁신분권센터 건립, 강원발전연구원 청사와 연계하여 검토	○ 시설부문은 행사규모·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 기능부문은 전문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자문 파트너로 활용할 계획임
강 원 도 개발공사	1. 알펜시아사업의 분양율 미공개에 대해 명확한 사유 및 대책 요구	○ 분양율 미공개 사유 - 알펜시아 1차분양상품은 VVIP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디마케팅을 통하여 진행 - 알펜시아 사업성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요망 ○ 분양성 확보 대책 - 골프코스홈 설계를 VVIP고객의 Needs를 완벽 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획기적 개선 - 가격차수정책 도입·400세대에서 302세대로 공급물량 대폭축소·부가혜택 확충 - 기존 계약자를 통한 MGM 마케팅 극대화·금융 기관 PB센터와 협력하여 고객 DB 적극활용 -「Alpensia Lounge」오픈, 기계약자와 가망 고객을 위한 체험 공간 제공 - 고품격의 브로슈어·홍보영상 등을 상품의 격을 표현하는 Communication Tool로 전면 재제작
	2. 알펜시아 사업의 분양대행사 1차 분양부진에 따른 책임추궁 요구 및 대책 강구요망	○ 분양대행사 1차 분양 부진에 따른 조치사항 - 실적 점검을 통한 부진 마케터 정리 (2007년 7월 40명→2007년 12월 현재 23명) - 보전적 고정비용을 폐지하고, 2008년 1월부터 철저한 실적급으로 지급 ○ 향후 대책 - 마케터 일일활동 및 실적 철저히 감독 - 마케터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자질 검증을 통한 우수 마케터 확충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 원 도 개발공사	3. 분양 대행사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 추진실적 - 2007년 분양 업무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1회 실시한 바 있음 ○ 향후 계획 - 2008년에는 분양업무에 대하여 반기 1회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분양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음
	4. 알펜시아 사업은 개발공사가 진행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분양대행사 또한 경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알펜시아 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	○ 알펜시아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강원도 지역 발전 도모 - 소득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고품질 여가 공간 제공 - 시설확충을 통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및 국제대회 유치·개최 지원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성 확보 -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미국 ECS와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 -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시공업체를 선정 • A공구 : 동부건설컨소시엄 • B공구 : GS건설컨소시엄 • C공구 : 태영컨소시엄 • CM사업단 : 한미파슨스컨소시엄 - 알펜시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운영 전문가 집단들과 협업 수행 • 마스터플랜 수립 : Cuningham Group, Thomas Consultants • 골프코스 설계 : Robert Trent Jones Jr. • 골프코스홈 설계 : Gensler, BSA Architects, Y Group, PaperScape • 운영 : Troon Golf, Intercontinental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 원 도 개발공사		○ 향후 계획 - 알펜시아의 주력상품인 골프코스홈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및 분양대행사를 포함한 분양정책의 획기적 보완을 통하여 분양성을 강화 - Weekly Checkup System을 통한 공사일정 준수 및 최고품질 확보 - Global Standard 수준의 운영시스템 도입/가동 등을 통하여 성공적 사업완수 예정
강원발전 연 구 원	1. 연구원에 부원장 직위 도입후 효과를 검토해 주길 바람	○ 부원장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원의 경영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관리기능이 강화됨. - 연구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총괄 -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평가 등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질적 수준 향상 - 연구원 경영평가 총괄 지원 - 연구원 경영목표 관리 기능 강화
	2.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원들의 재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요망	○ 연구원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연구성과의 양과 질, 원내외 활동, 근무평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기초한 연봉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07년에 연구원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하여 평가 결과와 재임용계약을 연계시키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8년부터 시행 예정임.
	3. 연구원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청사확보계획을 강구해 주고, 공무원 교육원 근처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람	○ 현 청사는 공간확보 제한으로 3개층에 분산 배치 ○ 기구확대로 연구실 공간확보가 필요하나 추가 임차가 불가능한 상황임 ○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청사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 ○ 공무원교육원(인재개발원)내 부지 등 강원도 소유 공유지를 확보하여 청사 건립 추진 ○ 향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발전연구원	4. 강원도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동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주길 바람(철원 평화산업단지, 경원선 금강산 전철복원 등)	○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2007년에 기본연구과제로 '강원도 접경지역의 잠재력 실현방안:철원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을 수행 ○ 2008년 연구사업 목표의 하나로 '시장개방, 남북협력강화, 신정부 수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연구의 강화'를 설정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중장기남북교류협력방안 등 과제 추진 계획임.
	5. 인문학분야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정신문화 기반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 인문학 분야에 대한 연구수행을 위해 '강원학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자체 연구과제로 '재중 강원인 생활사 조사연구, '비지정 석조문화재 전수조사 연구, '강원학 교육 교재제작, 그리고 공모과제로 '강원도 전설의 유형과 분포,'한국의 작가, 강원의 작가'를 수행하였음. ○ 이후에도 강원도의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과 연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문학 분야의 연구 사업 추진 계획임.
	6. 도내 시·군 축제가 너무 많으므로 연구·진단해서 축제의 성과 등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주문함	○ 연구원 차원에서 축제 연구는 '강원도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강원도 문화관광축제 상품화 방안 연구'를 이미 수행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 '강원도 지역축제 파급 효과 분석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음. ○ 2006년 과제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도차원의 축제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별도의 정책브리프로 발간할 계획임.
강원도체육회	1. 도비보조금 집행후 정산서가 철저하게 처리 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길 바람	○ 표준정산 양식배부, 전무이사회 등 회의시 정산 교육(년2회이상) 및 예산투명화 정착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체육회	2. 각종 체육대회 물품구매 시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도·감독해 주고 정산서 제출 후에 물품구매에 대한 현지 확인 요망	○ 현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산서제출시 물품구매 현지 확인 강화
	3. 도민체전 미개최지역(군지역)에 대해 개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도민체전은 자치단체 유치신청에 의해 개최지 결정, 숙박 및 시설 취약시 인근 시·군과 분산개최 홍보로 미개최군 유치신청 적극 유도
	4. 도민체전 입장식 소개 멘트의 개선과 참가 단체 중 소외 단체(미수복 강원도민회 등)에 대한 특별배려 요망	○ 금년부터 미수복도민회의 소외감 불식을 위해 대책을 강구 하겠음 - 소개멘트 및 입장순서 등 배려
	5. 강원체육의 종합적인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을 검토해 줄 것	○ 도와 협의, 자문기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방안 강구
	6. 도민체전의 출전선수가 일부 급조되는 폐단이 있으므로, 도민체전의 등위 제 폐지나 생활체육과의 통폐합 등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람	○ 도민체전시 시군과열경쟁으로 일부 문제가 발생, 각계 여론을 수렴,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생활체육과의 통폐합 및 등위제 폐지 등을 신중검토
	7. 체육 꿈나무를 집중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특화된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	○ 꿈나무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더욱 발전시켜, 특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나) 교육사회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 여 성 국	1. 도내 보건의료원중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대한 대책 강구	○ 처리결과 - 응급분만 대비 응급이송연계 체계 구축 - 응급환자이송단, 보건소, 119 등 ○ 향후계획 -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여 임신상담, 진료 등을 지원 조치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2. 도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과 관련, 국·도비 및 시군, 노동부 등 중복 지원되는 과정이 합반 운영되고 있음. 지도 감사 후 결과 보고	○ 여성인력개발센터(2개소) 취업과정 - 여성 직업훈련 교육훈련비 부담 • 일반과정 : 수강생 본인 • 무료과정 : 노동부,산업인력공단등에서 지원 - 직업훈련 교육시 제과·제빵기능사, 아동미술치료사, 직업상담사 등 일반과정과 무료과정을 일부 통합 운영한 사례가 있음 - 여성가장, 실업자 등 무료지원대상이 적어 일반과정과 통합운영의 필요성 대두 ⇒ 수강료중복지원 등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점검 예정(08.2월중)
	3. OECD국가 중 결핵환자 비율이 가장 높음.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 강구	○ 처리결과 - 결핵 유병률이 높은 65세이상을 대상으로 무료이동검진 및 감염원 조사 • 결핵·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 4,788명 검진 ⇒ 115명 발견 • 감염원조사 및 DNA 지문검사관리 · 결핵신환자 281명 발견 · 13개유형 33명(조사대상군 선정) •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 1차치료 실패자(48명)를 전문치료기관 이송·치료 ○ 향후계획 - 결핵·호흡기 무료이동검진 확대 - 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강화 - 결핵 1차실패자 재치료 강화 - 잠복결핵 및 NTM결핵환자 조기발견 -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4. 5개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과 위탁경영 추진 등 대책 제출	○ 처리결과 - 의료원 경영혁신 연구용역(07.12월) - 속초의료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진 교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07.12월)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 향후계획 - 의료원장 경영성과 계약제 시행 - 의료원 경영혁신 연구용역 결과에 의료원 조직개편안 마련('08.3월)
	5.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입 저조, 자금 운영에 대한 대책 강구	○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기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통합 기금의 금고선정 공모를 통해 고금리 은행에 예치 ※ 지침 : 원금보장 상품 신탁을 규정
	6.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여성수가 많은 원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추진, 현황 제출	○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 2개소 - 춘천(98.12월 개소), 강릉(00.8월 개소) ○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인구가 많은 원주에 신규설치 적극 검토중 - 도여성발전조례 제정(07.9.28)으로 여성 인력개발센터 설치근거 마련
	7. 다문화가정지원관련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에 집중됨,대책 강구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6개소)를 설치하여 한글· 문화 교육,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아동양육지원)사업을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8개 시군에 전개할 계획임
	8. 출산 및 지원과 관련 출생아 수는 감소하나, 예산은 증가, 과감한 프로그램 수정	○ 출산 및 지원사업 - 국비지원사업(임산부·영유아 검진, 불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과 道 출산장려사업이 있음. - 출산지원사업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함.
	9. 각종 도지원 행사에 관계직원 직접 참석, 목적에 맞는 행사 추진여부 확인 점검	○ 도지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목적에 부합된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담당 직원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10. 한국여성수련원 관련 소나무를 훼손하지 말고, 철저한 사업 추진	○ 소나무보호 추진 실적(06~07년) - 문화재 · 소나무 보호를 위한 설계변경 - 소나무 병해충방제 및 관리 작업 - 송림경계지역 보호펜스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생태조사 실시('08.1월) • 보호소나무 표찰 및 관리카드 작성 - 병충해 방제, 수시 예찰활동 실시
	11. 노인학대유형 및 실태와 관련 문제점, 대책이 미흡함. 사업기관 증설, 인력증원, 보수현실화, 일선기관 정보공개, 상담원 법적권한 강화등 대책 마련	○ 사업기관 증설 및 인력증원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1개소 • 도내 전 지역이 1일 생활권이며, 타시도 노인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관의 증설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건비 지원 확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음 · 현행 6명→7~8명으로 확대 추진 - 보수현실화 추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노인복지회관 종사자와 동일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가 2007년 대비 기본급 7% 인상금액을 2008년 예산에 편성하였음.
	12.. 노인돌보미제도 시행 상 지원자들이 포기하고 자원봉사자 서비스가 낮아 문제가 됨.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추진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07.5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 시행초기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 등으로 신청자가 적어 지원자들의 서비스 제공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완화와 차상위 계층이 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50%) 등으로 신청자의 증가로 지원자들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13. 성매매단속 관련, 피해여성이 정상적 생활이 가능토록 실질적 대책 수립	○ 성매매 피해여성의 지원 대책 추진 - 중앙 기금 지원 사업 • 법률지원 : 1인당 250만원이내 • 의료지원 : 1인당 300만원이내 • 직업훈련 : 1인당 210만원이내 • 신용회복 :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 성매매피해 관련시설 운영 • 상담소(1개소) 운영 • 보호시설(1개소) 설치예정('08년)
	14. 아동급식비 집행 잔액 관련, 시군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 관계직원 직접 현장파악 등 집행 잔액을 다른 항목으로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 급식 누락자 방지대책추진('08년) - 급식실태조사 매뉴얼 마련, 점검실시 ○ 시군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 급식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15. 도청 임산부 지원시설 및 복지혜택이 미비. 도의 대책은	○ 향후계획 - 道 임산부지원 복지대책 추진 - 모유 수유실 설치 적극 검토 -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음
	16. 보건진료소 근무자 현황과 진료소 설립 취지에 벗어나지 않았는지, 통합 운영 방안 등 검토	○ 처리결과 -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완화는 일상·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임 - 보건진료소는 고령화된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밀착형 보건기관으로서 1차 진료와 주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1차보건의료 활성화 강조(07.12월) ○ 향후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부 보건기관 기능개편 안에 따라 역할 정립
	17. 사회단체 각종행사비 지원과 관련, 단체통합 등 예산 집중 효율화 대책 강구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실과에서 지원하는 내역(단체, 금액)을 제출받아 정보공유를 통해 동일 단체·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건복지여성국	18. 여성수련원, 재활병원, 노인 전문병원과 관련하여 업무 전반 TF팀 구성 추진	○ 처리결과 - 여성수련원,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건립 추진 TF팀 구성 - 한국여성수련원 자문공무원 구성 6명 (07.7월) - 재활병원 TF팀 구성 : 14명(07.5월) - 노인전문병원 자문단 구성 : 5명(06.7월) ○ 향후계획 - 여성수련원 건물인수 및 정상운영을 위해 TF팀 구성 계획(08.9월)
	19.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대책 강구	○ 향후계획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 화장시설의 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고 있으므로 • 화장장이 없는 시군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화장장 설치를 추진 ○ 화장장 신규 설치시 도비지원 등을 추진
강원도인재개발원	1. 영어교육센터(경기영어마을)와 관련하여 원어민교사가 떠나고 내국인이 운영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	○ 처리결과 - (재)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운영실태 현지조사 실시(2007.11.22) : 2명 • 시설 및 교육현황, 강사 확보실태 등 ○ 추진계획 -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영어교육센터에 위탁할 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위탁 추진
	2. 의무적 교육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인력, 시설, 장비 보강 등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바람.	○ 처리결과 - 기관명칭 변경(2007.12.21.) : 지방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 교육장비 확충 : 음향장비를 중심, 강의에 필요한 장비 확충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인재개발원		- 교육시설 개선 • 생활관(65실) : 온돌→침대(2인 1실) • 대강의실(2실) : 좌석교체, 리모델링 등 • 주변 산책로 보수 : 3개 코스(2.5km) • 청사 보안시스템 강화 : 본관, 생활관(2동) • 운동기구 보강 : 8종 11대 • 중앙화단 및 보·차도 경계석 보수 조경석(150m), 보·차도 경계석(500m) ○ 추진계획 - 교육과정 확대 : '07년 69개과정 102회 → '08년 71개과정 124회 - 교육장비 지속확충 : 3종 56백만원 - 교육시설 개선 : 9개 사업 6,459백만원 - 기구 개편 및 정원증원 추진 • 기구 : 교육운영과 교육운영·평가분석팀 → 교육운영과 교육운영1·2팀 • 정원 : 4명(일반직 6급이하) 증원
	3.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인식이 미흡함. 내년 과정에 1시간이라도 관련 시간을 편성 바람.	○ 추진계획 - 기본교육과정 : 소양 교과목 2시간 편성·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1일(7시간) 실시 - 전문교육과정 : 소양 교과목 2시간 편성·운영 - 장기교육과정 : 소양 교과목 3시간 편성·운영 및 사회봉사활동 분기별 1일(7시간) 실시
	4. 공무원이 강의 준비가 안되어 평가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부실한 강의가 되지 않도록 외부강사를 적극 확대 바람	○ 추진계획 - 공무원 강사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선별적으로 배치하고, - 직무 관련 교육을 제외한 과목에 대하여는 가능한 외부강사 활용 ※ 2007년도 민간인 강사 초빙실적 : 3,722시간 (전체 강의시간 중 76%)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인재개발원	5. 장애인 공무원교육이 수요가 많고 합격률이 좋음. 교육기간을 늘려주기 바람.	○ 추진계획 - 인재개발원 시설여건 및 교육생 사정 등을 고려,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의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종전대로 5주 유지 • 교육시간 : 주간 → 야간까지 확대 ⇨ 교육만족도, 합격률 등 교육성과를 종합 분석 교육기간 확대등 운영방법 개선추진
	6. 인재개발원이 지역 주민과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함. 특히, 민간교육과 관련하여 1일 200명인데 시·군별로 나누어서 확대 교육하기 바람	○ 추진계획 - 도민대상 교육과정 확대 :'07년 8개과정 835명 →'08년 9개과정 1,380명 - 도민대상 교육과정 운영방법 개선 • 전문교육과정(6개과정 6회) : 30명이내 인원대상 교육 실시·시책교육과정(3개 과정 6회) : 종전과 같이 교육 실시
강원도립대학	1. 도립대학에서 보유중인 실습선(경양호, 해송호)이 규모가 작고 노후 됨. 실습선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기 또는 중기계획을 세워 실습선 확충에 노력(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방법등 모색)	○ 보유 실습선에 대한 신조대체(500톤급) 필요성은 절감하나 - 현실적으로 120억 상당의 건조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 - 가능한 빠른 시간내 타 공유·국가소유 선박을 대상으로 무상관리전환 검토 - 전문 교육기관(해기연수원) 등 위탁교육 방법은 검토 결과, 본 대학과의 실습 과목에 대한 컬리큘럼 운영상 곤란
	2. 외국 유학생 중 취업생도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신중히 검토 추진	○ 외국 유학생에 대한 학사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음 - 학기중 유학생의 취업 예방·지도 ※ 단, 방학기간중에 절차에 따라 출입국에 신고한 후 아르바이트 근무허용 - 수업일수 부족 유학생의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하고 있으며 - 향후 유학생 입학허가 단계에서부터 면접 또는 서류심사 강화를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에 선발 중점을 둠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립대학	3. 외국대학과 자매교류 및 국제교류 활성화	○ 현재까지 처리결과 -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아시아권대학 우선자료수집(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권 등) • 대 상 : 도 및 강릉시 자매결연 지역 우선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실질적 국제교류가 가능한 국외대학 선정 및 사전 협의(6월중) • 대 상 : 1 ~ 2개 대학 • 교류내용 : 학술 및 체육교류 등 - 국외대학 각종 학술지 등 자료교환 추진 ※ 추진성과에 따라 향후 유럽및 기타 대륙권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4. 교수 재임용 시 교수 업적 평가와 학생 평가 등 실시	○ 교수 재임용 시 평가 관리는 -「강원전문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 1년 단위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매학기 종료 후 수강신청기간에 교과담당 교수별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 교육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관리 등을 통해 교수학습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를 하겠음
강원도교육청	1. 도내 원어민 교사 학력, 경력, 채용현황과 관련하여 채용 시 자격미달 등이 있는데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사증제도(E-2비자) 개선내용을 교육기관에 안내 -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 초빙 학교 - 자체 원어민 모집 학교 - 지역교육청 및 원어민 배치 중심학교 ○ 원어민 채용시 해외 주재 공관과 긴밀한 협조 - 1차 합격자 서류 확인 강화 - 적격자 비자발급 신속 처리 협조 ○ 학위증 제출시 학력검증문서 확인 ○ 현재 고용 원어민 상세한 신상명세 관리 철저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2. 폐교를 임대할 때 임대계약서상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점검하기 바람	○ 폐교재산 활용기본계획상 1년에 2회이상 실시 시하는 실태점검과 연계하여 임대계약서상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곳을 점검하겠음
	3. 특수 학급 재학생 통학비와 관련하여 장애인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관심을 바람	○ 2007년도에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과 학생 보호자의 통학비를 장애정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학급 재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학급 재학생의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4. 장애인연대와 협의된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제출바람	○ 협의된 항목 중 예산확보 내역은 붙임 자료와 같음 : 장애인연대 협의사항 중 예산반영 현황
	5.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환에 따른 학생수급, 전환학교의 지원내용과 문제점, 공유지관리계획을 세워 제출바람	○ 전문계에서 일반계 전환에 따른 학생수급 - 학생들의 진학욕구 충족을 위한 일반계고 선호, 전문계고 인식부족에 의한 기피현상 심화 등으로 일반계 전환에 따른 일반계과정의 수급엔 어려움이 없으나 소질과 적성, 흥미와 관심에 따른 전문계고를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문이 좁아지는 어려움이 있어, 미래지향적인 학과 및 특성화 개편 등을 통한 전문계고교의 위상강화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전환학교 지원 내용 - 전문계를 일반계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자재 확충 등 예산 지원은 없음 ○ 전문계를 일반계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현 학과유지와 전문계고 교육의 발전적 개편 등은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계로의 개편은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전공교사의 과원 발생 및 불용기자재 발생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 추이에 따른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할 것임 ○ 공유지관리계획 - 전문계에서 일반계로의 전환에 따른 공유지 관리 사항 발생시 학교의 처리계획을 제출받아 학교운영지원과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존, 매각, 학교자체 활용 등의 공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6. 교장 승진이 25~26년 걸리는데 타 도시에 비해 많이 걸림.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바람	○ 5학급 미만 학교에 배치된 교감 정원 조정, 병설학교 교감 정원 조정 시 기준 완화 건의(교원정원 담당자 회의 2007.08.28, 09.04, 09.13, 10.10) ○ 전문직 경력 교감을 전문직으로의 재전직을 허용하고 교감 및 교감 자격 소지자의 전문직 임용 확대로 교사의 교감 승진기회 확대
	7. 조부모 학생과 관련하여 대책이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가 개별 상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외 사업이나 대책을 바람	○ 조부모학생 중 기초생활대상자에게는 학비 감면과 중식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조부모학생 중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은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활동 뿐 아니라 1교사-1학생 결연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담활동 강화
	8. 학원·교습소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미가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 강원도학원조례에 보험조항이 있어 대부분의 학원·교습소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2007.09.23. 상향된 금액으로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토록 하였고 유예기간을 2개월을 두었으나, 기존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개발된 보험상품이 없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회 가입에는 어려움이 있어, 홍보 및 계도로 조례가 정한 금액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예정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9. 교사수급대책과 관련하여 정원 감소 및 결원으로 인한 교육저하 및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함. 새로운 방향제시 등 대책을 바람	○ 교원수급관련 정책 수립시 강원도 여건을 반영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방문 건의 (2007.08.24.) ○ 교원 정원 담당자 회의시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단위와 공조하여 정원정책 조정을 건의 (2007.08.28., 09.04., 09.13., 10.10.) - 교사 1인당 학생수 적용시 소규모 학교를 고려한 차등 적용 건의 -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기존 배정인원 우선 배정 건의 ○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을 지역4군(강원, 전남, 전북, 경북)으로 분리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차등 적용하기로 우리도의 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용 ○ 농산어촌 우수고 예산 지원, 지자체 지원금 확보, 자율학교 및 연구학교 지정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이탈 완화 ○ 농산어촌 지역 고교 학생의 수시 모집에 대한 맞춤형 진학 지도로 상위권 대학 합격자 증가 ○ 대입 수시 전형에 목표를 둔 맞춤형 학습관리 철저 ○ 겸임교사 확대, 부전공 연수 확대, 강사임용 등으로 상치교사 해소에 노력
	10. 전국소년체전 출전학교 학교장 출장 관련하여 미흡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전국소년체전 관련 출전학교장의 출장 시 출장 본연의 업무(선수격려, 상대팀에 대한 정보 분석 등)에 충실하도록 행정 지도
	11. 최근 3년간 비만 학생 현황 및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비만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대책을 바람	○ 비만 관리와 예방을 위해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지역연합건강캠프를 운영(8지역)하였으며, 2007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도 하였음 ○ 향후 2008년 비만관리 연구시범학교 운영(2년차), 지역연합캠프를 확대하는 등 비만학생 관리에 노력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12. 교직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바람	○ 징계로 인하여 비정기전보 대상자는 타시·군으로 전보 조치 ○ 징계를 받았던 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 의결 요구될 경우 징계감경 불가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이상 처분받았을 경우 정부포상(퇴직포함) 추천 제외
	13. 행복한 학교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많은데 주민친화적인 학교공원화 사업 등 확대 추진 바람	○ 행복한 학교가꾸기 사업의 주민친화적 학교공원화 부문 확대 추진 - 학교공원화 사업 사례 • 횡성초 생태학습장 연못 조성 • 남호초 야생화 식물원 조성 • 금광초 야외학습장 조성 - 학교공원화 사업 사례 적극적 홍보 적극 확대 • 본청 홈페이지 업무자료실 탑재 • CD제작 각급학교 보급 • 각종 회의시 추진 사례 소개
	14.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통폐합학교 도서관 설치의 어려움,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데 대책을 바람	○ 2008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시 통폐합대상학교에 작은 도서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0,000~20,000천원의 예산 지원 계획 ○ 지속적으로 사서교사를 임용 배치할 계획임 - 2008년도 사서교사 8명 신규 임용 예정
	15. 학교체육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체육에 대해 거부감이 많음. 예산지원과 지도자배치 등 개선을 바람	○ 현재 육성하고 있는 육성종목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당학교와 협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 ○ 예산지원 역시 도대표팀(선수)과 육성종목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함과 동시에 지도자의 배치는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음
	16. 학교폭력사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바람	○ 2008년도 1월중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2008년도에 각종사업 추진 예정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 교육청	17. 흡연 관련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예방지도를 하기 바람. 관련 예산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 바람	○ 중등교육과-2160(2007.02.14.)에 의거 흡연 예방 교육계획 시달 - 관리자 교육과 학생부장 연찬회 시 흡연 예방교육에 있어 학생은 물론 교사의 금연운동을 함께 펼칠 수 있도록 지도 - 학교의 전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운동 전개
	18.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대책방안과 관련하여 교사의 교통지도 의무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시행계획 '1-4 스쿨토피아 구현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으로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연간 21~23시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담임교사별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19. 학교체육 전담지도자의 연봉이 적은데 정규직화 방안과 사기진작책을 마련 바람	○ 현재 도교육청 학교체육 경기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정부차원에서의 비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어 자체적인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등급제로의 전환을 통해 봉급체계를 상향시킬 계획임
	20. 학원·교습소 단속현황과 관련하여 지역별 단속실적이 편차가 심함. 형식적 단속을 피하고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춘천, 원주, 강릉교육청 관내의 학원·교습소 지도·단속실적이 지역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발생 할 수 있으나, 향후 연간 지도·점검계획, 점검횟수 등을 검토하여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21. 학교 해외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자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과 철저한 감독을 바람	○ 중등교육과-4316(2007.03.14.)호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침 안내 : 국내 및 도내 경제사정을 고려 해외 수학여행 지양 ○ 중등교육과-6856(2007.04.06.)호에 의거 수학여행 추진 철저 : 국외 수학여행 지양 및 분리실시 금지, 불참학생 지도 철저 ○ 중등교육과-7718(2007.04.16.)호에 의거 수학여행시 안전관리와 분리시행 금지

<table>
<tr><th>실 국</th><th>시정 · 처리요구사항</th><th>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강원도
교육청</td><td></td><td>○ 중등교육과-15884(2007.09.19.)호에 의거 수학여행 내실화 및 학생 지도철저 : 국외 수학여행 지양, 분리 실시 금지, 80% 이상 참가 시 시행</td></tr>
<tr><td></td><td>22. 방과후 학교 개선 방향으로 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td><td>○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자치단체 대응투자 실적
<table>
<tr><th>지 역</th><th>지자체
대응투자</th><th>지 역</th><th>지자체
대응투자</th></tr>
<tr><td>원 주</td><td>350,000</td><td>평 창</td><td>300,000</td></tr>
<tr><td>양 양</td><td>254,500</td><td>정 선</td><td>314,000</td></tr>
<tr><td>삼 척</td><td>300,000</td><td>화 천</td><td>120,000</td></tr>
<tr><td>홍 천</td><td>300,000</td><td>인 제</td><td>300,000</td></tr>
<tr><td>횡 성</td><td>234,925</td><td>고 성</td><td>300,000</td></tr>
<tr><td>영 월</td><td>300,000</td><td>합 계</td><td>3,073,425</td></tr>
</table>
○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정책과-2321(2007.12.10.)호를 통해 자치단체에 2008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안내 및 예산확보 요청
○ 2008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 본예산 확보(3,405,990천원, 지역당 227,066천원 지원) 및 자치단체당 약 227,000천원 이상 대응투자 유도</td></tr>
</table>

다) 산업경제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1. 시설재배농가 유가인상 지원 대책은	○ 현재까지 지원실적 - 2001년부터 현재까지 도에서는 유가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하였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총 7,771백만원 투자(벙커C유보일러73개소, 보온커텐 41ha, 온풍기 87대, 지붕난방 등 6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시설원예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08년~17년, 50억)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 고온성 작물보다는 저온성 작물 위주의 입식지도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저온성작물·채소류 : 딸기, 토마토, 오이, 호박, 배추, 상추, 시금치 등 화훼류 : 팬지, 페츄니아, 데이지, 프리뮬러, 꽃양배추 등
	2. 축산농가 톱밥구매 보조금 지원문제검토 - 지자체별 사용량 파악 및 지역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강구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구입 지원 사업 현황 - 도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에 톱밥지원은 2001년과 2002년도에 추진하였으나 • 지역별 공급단가, 생산량, 품질 등의 문제가 있어 중단하였음 - 11개 시군에서 톱밥지원사업을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며, 시군별 지원 비율이 상이함 • 3개시군(영월, 평창, 인제)에서는축협과 공동사업 추진 • 특히, 정선군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이 아닌 농가 자체구입 후 정산을 실시, 농가별 구입가격의 차이가 있음 * 구입가격 : 2,000 ~ 3,000원/20kg/포 ※ 시군별 톱밥소요량 및 톱밥지원 사업내역 별도 붙임 ○ 향후 추진계획 - 시군에서 톱밥지원사업 추진시 공동구매토록 지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3. 버섯 재배사 리모델링 사업 - 시설비 지원의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 노후재배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주요시설의 경우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음 - '08년부터는 더욱 세분화하여 시설별 리모델링 기준단가 적용 ‣ 07년 지원기준 단가(165㎡기준) • 우 레 탄 : 3,500천원 • 균 상 시 설 : 8,000천원 • 가 습 시 설 : 800천원 • 냉난방시설 : 5,000천원 • 트롤시스템 : 600천원
	4. FTA대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 확대, 미활용 버섯사 활용 방안, 비축미 감소 대책	○ 한미FTA 협상체결 등 개방화에 따라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사업비를(당초) 작년 대비 10.1% 증액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 (07년)4,736억원(국비2,449/51%) → (08년) 5,216억원(국비2,472/47%) / 10.1%↑ ○ 대부분 노후화된 버섯재배사를 보유한 일부 부업농에서 버섯가격 하락 등으로 미활용 - 지속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연중생산 가능한 첨단재배사로 전환 활용토록 추진 ○ 비축미 문제는 정부에서 FAO 권고 등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감소하였으나 07년에는 전국 43.2만톤을 매입하고 08년에 적정비축 규모를 재검토 할 계획임.
	5.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현 30일에서 현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확대	○ 농가 도우미 이용일수 확대문제 -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영농대행 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출산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 도우미 제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 되어 오다가, - 2005년부터 지방이양, 분권교부세를 지원 받아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 시군별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간연장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을 판단하여야 함으로 도 차원에서 일률적인 지급단가 및 지급 일수 확대는 곤란

<table>
<tr><th>실 국</th><th>시정 · 처리요구사항</th><th>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농 정
산림국</td><td></td><td>- 대다수의 사업시행 시군에서는 현행지침(3만원/ 30일지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군 재정형편에 알맞은 자율적 판단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지침을 통보할 예정임</td></tr>
<tr><td></td><td>6. 농가소득 목표수립 미흡, 소득의 연차별 목표 근거 없음
⇒사업계획과 연계된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추진</td><td>○ 농가소득 전망은 쌀값 등 농업소득추이, 농외 소득과 이전소득의 증가, 향후 다양한 직불제 도입가능성에 대비한 증가추이, 농가호수 감소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 농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향후 농업 전망을 감안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이 되도록 검토</td></tr>
<tr><td></td><td>7. 기계화 경작로 조기 포장
⇒ 전체의 60% 정도로 미약. FTA 등 대비, 영농기반 시설 조기 완료</td><td>○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의해 농림부주관으로 1995~2014년(20년)까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의 주요 농로와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간의 낙후되어 있는 농로 등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도, 시·군 10%)로 국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 년도별 “농림부 국비지원 결정금액”에 따라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 도에서는‘07년까지 전체계획 대비 61%가 완료된 상황으로 향후 545km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적극 협의 후 추진토록 노력하겠음.
※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현황
(단위 : km, 억원)
<table>
<tr><th>구 분</th><th>전 체</th><th>기추진</th><th>향 후</th><th>비고</th></tr>
<tr><td>추진기간</td><td>'95~'14(20)</td><td>'95~'07(13)</td><td>'07~'14(7)</td><td rowspan="3">진도
61%</td></tr>
<tr><td>사 업 량</td><td>1,424</td><td>879</td><td>545</td></tr>
<tr><td>사 업 비</td><td>1,482</td><td>900</td><td>582</td></tr>
</table>
</td></tr>
</table>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8. 강원도 소득작목선정 집중육성 ⇒ 기후온난화로 사과 등 과원 조성 가능지역 북상, 적정 과원조성 추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등	○ 사과재배 가능지역 북상 중 - 지난 30년간 연평균기온이 2~3℃ 증가 하였으며, 향후 온난화가 지속되면 사과의 재배적지는 경북이 아닌 강원도 내륙지방 및 분지 특징을 지닌 고랭지대 이동 예상 - 사과재배 연평균 기온(13℃이하) - 사과기온 상승시 미치는 영향 ※ 수량증가, 납작한 사과발생, 당도 및 착색도 저하 - 품질저하 ○ 향후 추진계획 - 키낮은 사과원조성 추진 • 과실생산 노동력절감 등 생산성향상,고른 착색을 통한 당도 높은 고품질 생산 유도 ※ 키낮은 사과원 비율(%) ▶ (06년) 18% → (10년) 30% - 생산기반시설지원 및 무병건전묘목지원을 통한 안전한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경쟁력제고지원 지속추진 ▶ (07년) 3ha→ ('08) 5ha→ ('10) 10ha *사과 소득액 증가도모(10a/천원) ▶(06년)3,532→(08)3,700→(10)4,000천원 - 부실과원, 경쟁력저하과원 정비를 통한 적정 과원 면적 유지 *적정 사과원 면적유지(ha) ▶ (06년)203→(08년)250→(2010년)300ha
	9. 한우 인공수정을 통한 우량 한우 육성 대책 강구 ⇒ 가임 암소 인공수정 실시로 우량 한우 육성방안 마련	○ '07년 한우인공수정사업 지원현황 - 지원두수 : 66천두(가임암소의 95%) * 가임암소(추정) : 69천두 • 도 지원사업 : 37천두(56%) • 시군 자체사업 : 29천두(44%) ○ 향후 추진계획 - 가임암소 전 두수 가축인공수정 사업지원 추진 - 한우농가 교육시 가축인공수정의 필요성 및 장점 교육 실시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10. 산림 수해방지대책 중 사방댐 설계시 친환경 모델 사업으로 추진 ⇒ 지역별 장소별 적정모형 설치, 바다와 연결되는 곳 해일피해 예방대책 검토	○ 사방댐은 재해예방효과가 탁월한 시설로 입증되어 지속적으로 확대설치 계획 * ('07년) 38개소 → ('08년) 5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사방댐은 강원도 지형에 맞게 계통적으로 시설하되 친환경적인 공법을 다양하게 도입 반영할 계획임 • 친환경소재 사용 : 전석 등 채집자재 활용 • 수변지역 경관 조성 : 관목류 및 정자목 식재 • 구조물 차폐 : 담쟁이 등 덩굴류 식재 • 어류생육환경조성 : 어도설치, 수층부외 지역 콘크리트구조물 지양, 버들 등 식재 - 사방댐 준설은 토·사석의 만적으로 인한 가옥등 2차피해 우려지에 한하여 실시하고, 산기슭을 고정하여 계상이 안정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 - 해일 등 해안침식 예방대책과 연계 준설 여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11. 농어촌진흥기금 미 신청 시·군 독려로 사업화 진행	○ 지원계획 홍보 적극 추진 - 지원계획 공고 : 2,900개소 (시군, 읍면동, 농수축협과 마을단위까지 게첨) - 반상회보, 도·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신문·방송, 각종교육기회 활용 홍보 등 ○ 시군 신청상황점검 및 신청독려 추진 - 자체기금조성·지원 시군에 대한 신청 독려 및 지도 - 지원조건비교, 도 기금 신청토록 추진
	12. 축산예산 중"양계시설 현대화" 사업비 계상(1억)	○ 향후 추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깨끗한 사육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 2008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를 확보"양계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지원방안 강구 • 사업량 : 육계사 10개소 • 사업비 : 550백만원 * 도비 소요예산 : 100백만원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정 산림국	13.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지원 전·후 소득 비교 분석 효율적사업 추진 ⇒ 휴경·유휴농지에 특용·약용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여 농가소득 창출	○ 고랭지역 경제작물 식재 지원과 생약초 특화단지조성 지원 등을 통해 특·약용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고소득 특·약용작물의 재배를 적극 유도
	14. 산림복합 영농(경제수, 특용수 식재재 및 약초.산나물, 버섯 등) 적극 추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08년도 19개소를 비롯하여 2017년까지 350개소를 조성할 계획 - 현지 연찬회 등을 통한 정보교환 및 재배기술 교육 실시
	15. 임도의 관광자원화 방안 적극 강구	○ 현행 임도사업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품질 우선의 구조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위주로 추진 - 신설을 당분간 중지하고'09년까지 물관리 위주의 구조개량, 보수사업 실행 ○ 향후 추진계획 - 임도의 이용주체 및 활용도의 다양화로 녹색쉼터, 녹색레포츠 등의 체험시설로 부각 됨에 따라·활용성·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지관리 사업 중점 추진 (절·성토면녹화, 노면관리 등) • 다양한 이용객 수용을 위한 용도별 코스 정비·개발 및 홍보(시군홈페이지 게재 등) • 맨발 마라톤대회 개최('08년) ▶ 장 소 :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내 임도 ▶ 기 간 : '08. 10월(산의날 기념) ▶ 사업비 : 30백만원
산 업 경제국	1. 신재생에너지산업 유치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 기준단가(생산)가 높아 민간 유치에 어려움. 해결 대책	○ 정부에서는 초기투자비 과다로 인한 경제성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융자지원제도, 보급보조사업,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 융자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 대상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제도 - 보급보조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일정부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 - 발전차액지원제도 :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확보를 위하여 생산한 전력을 산자부 고시 기준 가격으로 15년간 지원하는 제도 ○ 그러나 산지관리법에서 30만㎡이상인 경우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최대 75%)로 제한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등과 같이 보전산지 편입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
	2. 탄광지역개발비 지원 불균형 ⇒ 규정 개정 건의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정부 합의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원기준 변경은 어려움 ○ 하지만 정부에서는'04년 이후 정책적으로 영월, 보은, 상주에 지원 최소 단위인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탄개비 지원액 = 지역별((지원기준액 - 전년도 석탄관련 지원액)*지원율)의 합
	3. 폐광지역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도의원과 사전협의 ⇒ 폐광지역 주거 환경사업 교육 환경 개선사업 등	○ 조치계획 - 향후 폐광지역 관련 신규사업 계획 수립시 사전협의하겠음 ※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특별대책 관련 '08.1월중 협의 예정
	4. 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과 회생지원 자금의 탄력적 관리 및 거치기간 연장	○ '08년 "L-BIZ 자금" 운영계획 - 자금종류 및 지원규모 • 중점육성산업 지원자금 : 100억원 • 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 : 60억원 • 회생지원 자금 : 10억원 ※ 총지원액 170억원 범위내 탄력적 운영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 지원기간 • 중점육성산업 지원자금 : 5년 • 재해 · 재난기업 지원자금 : 5년 • 회생지원 자금 : 2년(당초 1년)
	5.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기준 완화	○ 보증심사 완화를 위한 조치 - 출연확대 : 30억원 → 70억원 - 특례보증 협약체결 : '08. 1월중 ※ 보증제한 대상 조건 완화 등 협약
	6.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결과 각 대학에 통보(선의의 경쟁유발)	○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결과 통보 - 매년 각 대학별 사업종료시 과제발표회 실시 및 최종보고서 제작 배포 추진중 ○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운영평가 통보 - 담당기관인 강원지방중기청과 협의후 추진
	7. 양양군 심층수 관련 전용 농공단지 적극 검토	○ 농공단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정권자인 양양군에서 입지 및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 지정 신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기 계획중인 양양그린농공단지"와의 우선순위 등
	8. 상품권 위조방지 대책 강구	○ 조치계획 - 재래시장 상품권 관련 순회교육시 위·변조 식별교육(형광등 활용)실시 - 상품권을 취합하는 각 상인회에 위·변조 감별기 보급 예정 ※ 재래시장 상품권은 최초발행시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위·변조 방지기술(은화, 미세문자, 형광잉크)을 적용하여 제작하였음
	9.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특히 증산농공단지 향후 대책,	○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08년부터 2010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강을 통한 입주기업의 불편해소와 - 농공단지 운영 우수시군 시상제 도입으로 시군간 경쟁 유발을 통한 단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 증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 조기가동 독려 및 입주계약 해지요건 발생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토지실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임
	9-1. 송전철탑 민원해소 대책 등	○ 처리계획 - 道의회에서 '07.10.25. 송전탑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08.12.31.까지 • 도내 송전탑 건설관련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 제반대책 - 道는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를 위하여 •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 주민의견 수렴토록 조치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및 주민피해 최소화방안 강구토록 한전에 협조 요청 • 산자부 관련법령 입법예고시 주민피해 등 민원해소에 대한 도 의견전달 계획 - 산업자원부에서는 민원해결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법령개정 용역 중
	10.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 처리결과 - 강원도는 2007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 특성화시장 육성을 포함한 7대 전략 17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 많은 성과를 이룸 ○ 향후계획 - 강원도는 2008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08. 1월중 수립하고, - 2007년도 주요 이행과제를 내실화 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

<table>
<tr><th>실 국</th><th>시정 · 처리요구사항</th><th>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산 업
경제국</td><td>10-1. 강원랜드 도의회 감사 수감 대상 지정 검토</td><td>○ (주)강원랜드는 강원도의 소속·하부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님
○ 다만 도에서 출자한 강원개발공사가 66억원을 투자(지분율 6.6%) 하였으므로 의회요구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음</td></tr>
<tr><td></td><td>11. 공단 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td><td>○ 산업단지내 불법건축물은 건폐율에 의거 제한됨에 따라 발생
-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 추진
※ 현행 법령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table><tr><th>구분</th><th>농공단지</th><th>국가·일반산업단지/공업지역</th></tr><tr><td>건폐율</td><td>60%이하</td><td>80%이하 / 70%이하</td></tr><tr><td>용적율</td><td>150%이하</td><td>일반공업지역 : 200%~350%
준공업지역 : 200%~4000%</td></tr></table>○ 공업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 건폐율을 공업지역 건폐율 적용 개선 중('08농림부)
- 건폐율 60%이하 → 70%로 상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td></tr>
<tr><td></td><td>12. 춘천 한방병원 앞 도로 양편 버스 승강장 신설(일반노선)</td><td>○ 처리결과
- 한방병원 앞은 중앙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국도5호선 진출입 도로가 혼재한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현재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시 안전사고 위험 등이 예상되고,
-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방병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1일 64회(2개노선) 운행하고 있어 환승에 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td></tr>
</table>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 시외버스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잦은 정차로 인한 시외버스고유기능상실과 함께 장거리 이용객의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불가함. - 다만, 춘천시에서 2008년도에 한방병원 옆 폐도로부지 및 인근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조성후 춘천시 및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검토할 계획임
	13. 재래시장(홍천 구시장) 재건축 분양	○ 향후계획 - 재건축사업은 특별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수립,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시장정비사업 대상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 홍천시장상인들이 사업비를 자체 부담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홍천시장 상인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교육)하여 시장상인회를 구성토록 하고, -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아케이드,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소방시설 등의 설치·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14.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활성화 대책 추진	○ 처리결과 - 강원도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이후 홍보·판매 대책을 3회에 걸쳐 수립·시행 - 이를 근거로 도내 기관·사회단체 및 중견기업체(240개소) 등에 문서와 방문 등을 통해 지속 홍보와 협조 요청 중 - 재래시장 상품권 애용캠페인을 대학동아리와 연계하여 7회에 걸쳐 실시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 업 경제국		- 일간지, 인터넷 및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상인 대상시장별 순회교육을 10개시장에서실시 ○ 향후계획 - 설맞이 재래시장상품권 애용캠페인을 도내 전지역에서 16회 개최할 예정이며, - 방문 및 주요매체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 '08년 3월중 상품권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시행
	15. 공단 내 오·폐수 처리시설 신설 ⇒ 농공단지(상오안)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조기공급	○ 폐수처리시설 신설 - 홍천군 및 농공단지입주자협의회를 통해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희망여부를 조사 - 입주업체의 2/3가 원할 경우 적극 지원 • 조사실시 : 입주업체 전수('08.3월중) ○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 홍천군이 상수도 확장 공급 사업 추진 계획 - 1단계로 홍천읍 화양교 → 상오안 농공단지까지 금년에 착공 및 용수공급 계획임 〈사업개요〉 • 사업명 : 홍천상수도확장공급(2006~2011) ※ Q=25,000㎥/일 → 35,000㎥/일 • 사업비 : 350억원(국160,도 20,군20,기타150)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중('07.11.~'08.9.) • 1단계(홍천읍 화양교→상오안농공단지) 공사지역 행정절차 이행 중(도로굴착 등) ※ '08사업비:5,000백만원(국400,도30,군4,570) • 1단계 공사 착·준공 :'08.4. ~ 12.
내수면 개 발 시험장	1. 재활용 수족관 전시확대추진 (고유어종인 퉁가리 전시)	○ 시험장 현관입구에 재활용 수족관 추가 설치와 고유어종 확대전시 완료 - 추가전시어종 : 퉁가리, 송사리(2종) - 전시일 : '07.12.28. ※ 재활용 수족관 추가설치 : 2개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수면 개 발 시험장	2. 치어방류 시 서식 환경 개선 후 방류 추진 검토	○ 방류예정 수면에 대한 사전 현지답사 및 서식어종 등을 조사후 방류대상 어종 선정 - 오염원이 없고, 서식자원이 감소한 지역을 선정 방류하여 효과 거양 및 서식환경 개선
	3. 시험장 연구직 배치로 시험 연구 사업 역점적 추진 ⇒ 수산연구직 충원 등	○ 시험장 직제중 수산연구 복수직에 대하여 인사담당부서와 협의 연내 수산연구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4. 시험연구결과 양식장에 도입 활용	○ 양식장을 방문하여 시험장에서 시험 연구한 신품종 및 경제성 어종 종묘생산 기술을 전수받을 의사가 있는 양식장에 대하여 직접 지도로 보급할 계획
	5. 메기, 뱀장어 서식지 환경개선 을 위해 돌망태 보가 효과 있는지 연구 추진	○ 돌망태 보가 설치된 수역에 치어를 방류하여 돌망태 보의 효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 연구하여 결과에 따라 시군과 협의 확대 추진계획
	6.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대한 연구 실적 및 예산 미흡, 연구사 확보 및 사업비 예산에 적극 대처	○ 신품종 및 토산 관상어 개발 실적 - 신품종생산 : 꺽지 2,000마리 - 토산관상어생산 : 돌고기외 2종, 3,000마리 ※ 연구기관간 기술교류체결(06.7. ~ 08.7.) • 국립수산과학원 중부내수면연구소 ○ '08년도 시험 · 연구 사업비 확보 - 사업비 : 207,000천원(07:195,000천원) - 사업추진계획 • 어 · 패류 종묘생산 : 187,000천원 • 어족자원 연구개발 : 20,000천원 ※ 도립 내수면시험장 지원사업비 (10억원)로 노후시설물 보수 · 보강 ; 4개사업 추진 ○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연내 연구사가 충원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
	7. 수산질병관리원 조기개설 및 수산질병 관리원 1명 증원 검토	○ 인사담당부서와 협의 연내 수산연구사 (수산질병관리사)가 충원되도록 조치 계획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내수면 개발 시험장	8. 수산질병관리원 검사장비 8억 5천만원 연차별 예산확보 대책	○ 수산질병 검사장비는 '08년 1회 추경부터 2010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 계획
	9.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및 직원 증원 검토	○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08년 1회 추경 시 확보 후 용역 조사결과에 따라 건립 및 직원 증원을 적극 추진 계획
	10,「소형제설기」 구입요구.(부지면적이 넓어 폭설 등에 따른 과다 인력 소요)	○ 07년 테니스장 환경정비 사업비로 제설기 구입 완료 - 구입일시 : '07.12.11. - 구입금액 : 6,000천원 - 최대능력 : 900kg/min - 작업구역 : 테니스장 및 청사주변
	11. 다슬기 양식을 시험 사업으로 책정 추진	○ 06년도 다슬기 전용수조(2조) 시설로 '07년 500천패 생산 및 방류 완료 ○ 08년도 전용수조 추가시설 및 종패 확대 생산 -'08 다슬기 전용수조 추가설치 • 사업량 : 3조 • 사업비 : 1억원 -'08 다슬기 종패생산계획 : 600천패
농 업 기술원	1. '06년「행감」시 「식용 가능한 식물 식약청 신규등록」 요구 →「복잡한 절차, 많은 예산」 소요.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업무분장」 및 08년 당초예산 반영 건의	○ 신규 식품원료 등록 조건 - 식용근거자료 • 30년이상 식용근거, 3개국 이상에서 판매 근거자료 - 독성에 관한자료 • 단회투여독성 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 (3개월이상), 유전독성시험 등 ⇒ 최소 200백만원 소요 ○ 금후계획 - 식품원료로서 등록을 필요한 작물에 대하여는 농가, 가공업체 등과 공동적으로 대처, 적극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 -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비타민나무 잎 : 07. 12월 식품소재 등록)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2.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생 사후관리 대책 강구	○ 교육수료 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단기과정 : 농정시책, 정보화교육, 영농 기술교육, 농기계운전 · 정비 • 교육수료 후 설문조사 실시 • 농업인 요구사항 적극 반영 - 장기과정 : 미래농업대학과정, 기계화 영농사반 • 교육 수료생에 대한 영농정착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 • 수료후 영농자금 지원 알선
	3. 전통 벤처 농가 육성 시 사업 확정 전 타당성 분석 등 대책 강구	○ 추진현황(07) : 5개소, 500백만원 - 사업추진 : 3~11월 - 사업내용 : 사업장확보, 가공시설 · 기자재 설치, 부대시설 등 - 대상시군 : 강릉, 태백, 평창, 정선, 철원 ○ 금후계획 - 사업량(08) : 2개소, 200백만원 - 사업시군의 대상 확정에 따른 일반 행정 및 제반 처리사항 등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지도
	4. 농업 업무 관련 농정산림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 강구	○ 추진현황 - 농정산림국과 시책업무 합동보고회, 업무 관계간 협의회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금후 조치계획 - 현행보다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험연구설계 및 각종사업 평가회시 농정산림국 관련 부서의 업무관계자 참여를 정례화 하여 -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과 성과가 있는 각종 시범사업이 조기에 시책화할 수 있는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5. 품목연구회 운영철저 관리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지역별 특화작목에 대한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주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육성하고 있으나 - 일부 연구 모임은 자조적인 활동이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07조직현황〉 • 조 직 수 : 70품목 228개회 6,932명 • 정기학습활동 : 1,072회 25,834명 ○ 금후 조치계획 - 농업인연구회 조직 재정비를 통하여 자조적인 생산활동 중심의 조직체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 전담지도사 배치와 맞춤형 과제교육을 통해 생산·유통·판매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 핵심모임체에 대한 특성화사업 및 현장애로 문제 해결 과제지원 등을 통해 기술 농업 실현의 선도 조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08추진계획〉 • 맞춤형 과제활동 지원 : 1회/분기 • 특성화사업 지원: 3개회/165백만원 • 현장문제 해결지원: 2개회/272백만원 • 농업기술 정보제공 : 2종(주간1, 월간1)
	6. 탑라이스 쌀 홍보대책	○ 그동안 추진상황('07.11.~12월) - 쌀 생산량 : 3개소 616톤 - 홍보활동실적 • 도단위 홍보협의회('07.11.14.):12명(도 3, 시군 9) ▶식당(도내, 수도권),소비자초청행사(체험, 시식회) ▶출향인사방문 홍보(기업CEO,고위공직자 등)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학교급식 추진, 다양한 채널 활용 최고급 시장 개척 등 • 군단위 홍보활동 전개 ▶서울 APT단지 판촉행사 : 3회 88단지 ▶지역 전문식당 확보(5개소), 콘도 · 마트입점(6개소) ▶탑라이스 출시 소비자 초청행사 : 2회 110명 ○ 금후 추진계획 - 도와시군 공동 판매 · 홍보 적극 전개- - 단계별, 월별 추진계획 수립 : 80% 이상 판매 목표 • 경기 · 서울최고급시장개척 (백화점, 마트, APT 등) 100개소 이상 • 지역출향인사초청 우수성홍보 (홍보물, 소포장 기념품) : 1,200명 • 관내 초 · 중 · 고교 학교 급식 조례제정 : 2개군 • 전문식당 확대(10개소),언론보도(수시), 기념품 제작(앞치마, 시장바구니) - 철저한 고객관리(D/B화) : 지역축제 초청, 단체장 인사장, 농산물 홍보 ※ 도단위 판매 · 홍보비 예산 확보 주력
	7. 강원의 맛(저장식품, 김치, 떡) 책자 추가제작 배부처 확대추진	○ 저장식품 자료집 추가제작배부(완료) - 제작내역 : 1,500부 → 2,500부 확대 • 추가제작 : 1,000부 ⇒ 예산절감 유보액을 해제, 추가 제작하여 시 · 군청 및 읍면동민원실, 농협, 우체국, 도서관 등 배부처 확대 - 기 제작된 강원의 맛 자료집 전자책(e-book) 홍보강화로 한정 발간 책자에 대한 수요충족과 강원음식문화 보급기여 ※ 게재사이트 : 기술원홈피, 사이버 강원관광 홈피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8. 자원식물 개발 등 적극적 추진 조기 생산 ⇒ 업무보고 나열식 지양, 발전적 보고	○ 06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자생식물 개발사업을 추진중 - 06년에는 실내적응 가능한 자생식물로 봉의꼬리, 주저리고사리, 세뿔석위 등 선발 - 07년에는 조직배양 및 분주를 이용한 번식방법을 개발하였음 ○ 금년도에는 조직 배양묘를 이용한 대량증식 기술 활용과 자생화재배 농가 와 연계하여 상업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실증 등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9. 친환경농업 신기술개발에 노력	○ 최근 3년 친환경농업 신기술개발 추진 성과 - 고랭지 성토지 시비법 개발 - 경사지 토사유실 저감기술 개발 - 천연물질 이용 병해 방제기술 - 배추 뿌리혹병 종합방제기술 개발 - 벼, 상추 유기재배 가이드북 작성 - 배추 유기재배 병해충 방제기술 ○ 08년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사업계획 - 경사지 토사유실 저감기술 개발 - 농약·비료 사용 절감 연구 - 토양병해 친환경 생물농약 개발 - 고추 친환경농업기술 모델 개발 - 유기재배 양분관리모델 개발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기술개발 등
	10. 외국인 농촌여성 사업 확대 추진	○ 2007년 추진실적 : 40회 706명 - 교육, 전통식문화체험, 생활상담 등 다양한 농촌 생활적응사업을 추진함. ○ 2008년에도 외국인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교육(의식주, 가정관리, 전통문화 등)등을 지원하여 실시 계획함.
	11. 뿌리혹병(무사마귀병) 퇴치 총력	○ 년도별 발생현황 - (05년)692ha, (06년)402ha, (07년)345ha로 감소추세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 뿌리혹병방제법 연구개발 성과 - 저항성 무품종 선발('97,'99) - 잡초기주 및 간이검정법 개발('00) - 종합방제기술 개발('01) - 병원균 오염도별 최적방제기술 개발('01) - 저항성 품종, 약제 및 석회시용 등('06) - 홍보 리후렛 제작 각 시군센터 배부('07) ○ 배추, 무 등 십자화과 채소의 토양병해 중 뿌리혹병은 방제가 어려운 병으로 그간 품종, 경종법, 화학적 방제법등 다양한 해 최소화 방안을 연구하여 영농활용 자료로 보급하였음 ○ 금후 고랭지채소 발생 뿌리혹병, 바이러스, 무름병 등 주요병해 예찰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 노력
	12. 미래농업을 위해 한국농업 대학생 육성 및 관리 철저	○ 현황 및 문제점 - 강원농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후계인력 육성 차원에서'04년부터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강한농업 연구회"조직을 통하여 영농정착에 따른 지역간 정보교류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 그동안 지원되던 국고 보조예산이'08년도부터 중단되어 육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 〈'07 추진결과〉 · 도내 졸업생 : 134명('07) · 주요지원사업 • 선진농업국 연수 : 1회(18명) • 마케팅 리더교육 : 1회(40명) • 연구회 활성화 워크숍 : 1회(42명) • 농업연구회 소식지 제작 지원 등 ○ 금후 조치계획 -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예산확보 노력 - 졸업생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와 체계적 학습 활동 지도를 통하여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이 강원농업을 대표한 선도학사농으로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육성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08추진계획〉 • 자체예산 확보 : 12,800천원(도비) • 미래농업CEO양성교육 : 2과정 60명 (실습, 토론, 견학 등 프로그램 구성) • "강한농업연구회"각종 활동 지원 등
	13. 지구온난화 대비 대체작목으로 사과 재배 확대 방안 강구	○ 우리도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사과 재배 확대 방안으로 ○ 기상장비 이용 강원도 재배가능지역을 선정 국지기상측정과 기존식재 지역의 사과 나무 수체 및 과실특성조사 등 기초자료 수집과 ○ 그동안 사과재배부적지로 분류되었던 태백, 평창, 철원 등 지역에 묘목을 신규 식재하여 월동 상태와 수체 및 과실특성 검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후 우리도 사과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14. 벼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 및 신품종 개발 등에 노력	○ 재배기술 보급 - 현재까지 개발된 건답직파, 담수직파 등 재배유형별 기본기술은 영농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보급하여 07년 도내 71.5ha 재배중임 - 앞으로 재배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입모율 향상 잡초방제 및 앵미도복 경감 등 영농 교육 및 현장기술지원을 통해 꾸준히 보급하고, 연찬회 등을 통한 기술홍보 노력 ○ 신품종 개발 - 개발된 직파전용 19개품종중 우리도 적응 품종은 5품종임(화안, 광안, 중안, 청담, 주안1호) - 자체품종육성 이전까지 작물과학원 등에서 개발되는 직파품종의 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

<table>
<tr><th>실 국</th><th>시정 · 처리요구사항</th><th>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농 업
기술원</td><td>15. 장수마을 지원후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교육, 평가실시</td><td>○ 건강장수마을은 마을당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선정 장수마을(12개소)의 경우 2007년으로 지원이 완료됨
○ 따라서 2008년부터 장수마을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활력화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 6마을 30백만원(마을당 5백만원)
- 춘천, 원주, 강릉, 홍천, 철원, 고성
○ 앞으로도 장수마을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할 계획임.</td></tr>
<tr><td></td><td>16. 버섯재배사 미활용 시설활용 대책 강구</td><td>○ 버섯 재배시설 현황
<table>
<tr><th colspan="6">시설 현황(동,㎡)</th><th rowspan="3">사용 비율 (%)</th></tr>
<tr><th colspan="2">계</th><th colspan="2">사용현황</th><th colspan="2">미사용현황</th></tr>
<tr><th>동수</th><th>면적</th><th>동수</th><th>면적</th><th>동수</th><th>면적</th></tr>
<tr><td>2,461</td><td>350,690</td><td>1,923</td><td>276,009</td><td>538</td><td>74,681</td><td>78.7</td></tr>
</table>
○ 미활용 요인
- 자재값은 계속 상승추세이나 버섯가격은 낮고 소비 둔화로 농가소득이 낮은 경향임
• 배지값 : ('05) 250원/kg → 300(20%↑)
• 가 격 : ('00) 6,157원/kg → ('06) 4,218 → ('07) 3,140('00년 대비 49%↓)
• 소 비 : ('00) 1,507g/1인 → 1,086(△28%)
- 노후재배사 신규투자 기피 생산성 저하
• 생산성 : 21kg/3.3㎡(도평균의 72%)
※ 우리도는 대부분 균상재배로 병·봉지버섯보다 품질은 우수하나 경기, 남부지방의 공장형 병재배 대량생산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태임
○ 기술적 대책
- 세부실천 계획 수립 추진
• 신품종 육성 : 2010년 목표 5품종
※ 고품질 다수성(3종),기능성 약용 버섯류(2종)
- 생력화 기술 실증시범 확대(배지제조기 중점)
• ('07년) 17대 → ('10년) 30대</td></tr>
</table>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 국내 우수사례 파급, 교육 · 현장 기술 지원 강화 ○ 시설활용 적극적 검토('09년 시책반영) - 내부시설 개선을 통한 타작목 전환검토 - 병 · 봉지재배 농가실증 시범사업 전개
	17. 농기계 운전 정비교육 실적 미흡,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농기계 운전 · 정비교육 실적 - 2007년도 실적 : 10회 275명(계획대비 86%) ○ 원인분석 및 대책 - 대학생농기계반 교육 미실시 및 교육 불참으로 실적 저조 • 사유 : 강원대학교 학적관리 변경 - 교육과정편성시 교육이행여부 심층판단후 실시
	18. 조직관리운영- 부장명칭의 적합성 여부와 도청과 차별 된 이유 (앞으로의 방향)	○ 도 기술원 부장직위는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2호의 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구 · 지도관은 단일호봉으로서 명확한 직위표시는 없으나 각종수당 등을 통하여 본청 국장급에 준하여 예우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은 도와 협의 후 검토하겠음
	19. 업무보고서 작성시 연초계획 대비 예산 및 사업추진실적이 수록되도록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업무보고는 전략 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주요 성과위주로 작성,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설명이 미흡한 면이 있었음 - 이는, 농업기술원 업무특성인 연구 개발과 기술보급시범사업대부분 예산규모가 적은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자세한 사업별 추진실적 수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 시험연구개발 : 200과제/년 • 기술보급시범 : 150사업/년 ○ 금후 조치계획 - 전략목표에 대한 이행과제별 세부시행 연구과제나 각종 시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분류 패키지화하여 사업예산 및 추진상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체계를 개선토록 조치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 업 기술원	20. 시험장 연구 실적보고서 제출과 시험 연구결과 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농가에 보급한 내용 (지역별)	○ 조치결과 - 시험장연구실적보고서및 과제 발굴시 현장 의견 수렴결과등 자료작성제출(보고) 완료 - 신품종 및 우량종묘 보급실적(2007) • 찰옥수수(미백찰)등 39종 53.5톤,종묘59만 7천본을 보급하여 373억 농가소득 창출
	21. 내구연한이 지난 검사기기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	○ 91년도 부터 국가균형발전 사업 추진 일환으로 연구기반조성을 위한 국비확보 - 각도별 매년 18억원 내외로 시설보완 등 연구장비 구입비로 활용 ※ 2008년도 예산확보: 18억3천5백만원 (농산물 저장시설 및 연구장비 현대화등 8사업)
	22. 강원으뜸벤처기업 육성 시 품목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 2007벤처농가 품목현황(5개소) - 절 임 류 : 정선(짱아치류), 강릉(밑반찬류) - 전통장류 : 태백(청국장), 평창(전통장) - 떡 카 페 : 철원(떡 케익 등 각종 떡류) ○ 금후계획 - 사업발굴·선정시 전통한과, 전통장, 절임류, 약초 엑기스 등 중복되는 품목은 지양하고 - 쌀 개방에 따른 쌀가공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쌀 제품 발굴 육성(시군당 1개소 기준)
환동해 출장소	1. 불가사리 산란기 집중 수매 대책 수립 추진 요망	○ '08년산란기특별구제 대책추진(시 · 군 조치) - 기 간 : 4월~7월 - 대 상 : 나잠, 관리선, 자망·통발 등 - '08년도 사업량 : 500톤/400백만원 ※ 7월말까지 년간 사업량의 80% 집행을 목표로 추진
	2. 인공어초시설해역 폐어망 오폐물수거 대책추진 철저	○ 어초어장관리 사업추진 - 사업기간:2004년부터 계속사업 추진중 - 사업대상:6개시군 어초어장해역 22,262ha - 수거실적 : 4개시군(강릉, 속초, 고성, 양양) 연안해역 15,206ha 29톤 수거처리완료 - 사업내용 : 어초어장 시설상태조사시 확인된 폐기물 전수 수거 · 처리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 출장소		※ 동해 · 삼척해역은 2008년 상반기까지 수거할 계획이며, 매년 해역별 어초어장 관리사업추진시 지속적으로 폐어망 · 그물 수거처리계획
	3. 송어훈제 가공공장 국 · 도비 지원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관리 · 감독 강화	○ 송어훈제 가공공장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 조건부여 - 재산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행위 금지, 불가피할 경우 도 승인 - 원재료 도내산 사용과 지역인력 우선 채용 및 어업인 주주참여 항시 개방 - 정기검사 및 전문경영인 영입 의무화 ○ 또한 보조사업자 간 협약서와 보조사업의 건실한 운영방안과 재산권사유화 예방 지침 운영 시 준수 조건 명시 -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운영상태 점검으로 사후관리에 만전
	4. 연안 침식 방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 검토	○ 현행 연안정비 사업비 균특회계로 분류된 예산체계를 일반국비 전환 및 국비 지원율 상향(50 ⇒ 80%)조정 지속건의(2회) ※ 관련 부처 간 적극검토 협의 중
	5. 해난 유가족 사후관리 중 명절 위문품 금액을 현행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지원 검토	○ 07년 해난유가족 명절 위문품전달 - 135세대 100천원(총 13,500천원) ○ 200천원 인상지원 검토와 관련, - 예산범위 내에서'08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운용 위원회 개최 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검토 지원계획
	6. 농업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비 보조 비율은 40~50%이나, 어업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비 보조 비율은 80~100%로 형평성 유지 및 사업별 보조율 정형화	○ 사업간 자부담 비율의 형평성을 고려, - 타시도 및 농업분야실태 등을 참조, 비교해 정형화하는 방안 검토 추진(08년 상반기)
	7. 내수면담당 미설치 시군에 담당제 설치 및 인원증원	○ 현재 5개 시군에 해양수산직 배치(11명) - 춘천(5), 평창(1), 화천(2), 양구(1), 인제(2) ○ 총정원제 운영에 따른 여건을 감안, 가능한 배치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출장소	8. 다슬기종패방류사업 확대	○ '07년 다슬기종패 방류 : 1,902천마리 ○ '08년 다슬기종패 방류계획(5~9월) - 방 류 량 : 3,000천마리('07대비 158%) (무상 600, 유상 2,400) - 사 업 비:30,000천원(연차적 방류량 확대) ○ 국민 건강기호품종 확대방류로 어업인소득 증대 기여
	9. 민물고기 서식지 확보 차원 돌망태보 시범 설치 후 비교 평가	○ 농업용"보"어도설치 : 408개 ○ 돌망태"보"어도설치 수요조사 실시 - 기 간 :'08. 1월까지 - 대 상 : 도내 18개 시·군 ※ 타 시·도 실태조사 병행실시 ⇒ 조사결과에 따라 돌망태 "보" 설치여부 최종 확정 ○ '08년 시범추진 협의 - 대 상 : 2개 시·군(평창, 인제군) - 사업규모 : 2개소, 205백만원
	10.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강릉대학교와 위탁교육 체결	○ 최고수산경영과정 이수인원은 - '95년 과정개설 이후 500명임(년 20명 내외) - 과정생 대다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최고수산경영과정 수료생들은 - 동창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활발히 진행중임 - 또한, 수료생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계획(강릉대)하고 있음 - 아울러,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중
	11. 심층수관련사업시행시 환동해출장소 차원의 업무지원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07.8.3.('08.2.4.시행) ○ 해양심층수 자원센터 건립 - 사업기간 : '08 ~'09(2년) - 사업규모 : 10,213㎡(부지 33,000㎡)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비10,000, 도비10,000)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 출장소		- 생산능력 : 1,000만마리 이상/년 ※ 2010년부터 시험운영 착수 ○ 해양심층수 어업소득 지원방안 강구 - 지원대상 : 수산 증양식분야 - 지원방법 : 국 · 도비 일부 보조지원 형식 ○ 전담인력 확보 · 배치 추진 -「조직담당」부서와 협의, 필요인원 배치 (기구) 방안 강구
	12. 신규사업 수행시 사전조사 철저 (수협 추가분)	○ 국제적위생관리기준도입(HACCP)사업중 추가 소요액은 전문가 컨설팅 결과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별도 증빙자료 기 제출
	13. 요트마리나시설 예산확보	○'07년까지 10억원투자, 계류시설 일부완료 - 사업비 : 10억원(도비5, 군비5) - 사업량 : 호안30m, 계류시설78m (17척접안) ○'08년에는 국가어항개발계획 반영, 요트 마리나 시설마무리 - 사업비 : 26억원(국비16,도비5, 군비5) - 사업량 : 호안 260m, 계류시설 113m, 전기·수도시설, 조명시설 등 ※ 국비16억원(확보)은 국가어항개발 사업비로 국가에서 시공(호안 260m) ○ 지방비(10억원) : '08.1회 추경예산 확보 추진
	14. 수산물 국내외 시장개척 적극 추진	○ 강원 수산물 해외세일즈 활동으로 수출 330만불과 14만불의 외자를 유치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정 강원 수산물의 국내외시장 개척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에 노력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출장소	15. 조개(패류)류 채취 금지기간 현실적으로 변경 추진요망	○ 금지기간 완화 건의조치 : 3회 ○ 금지기간 완화건의 지속추진 - 자원관리 정책과 법령체계 정비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중 - 법령체계정비시 패류채취금지 기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및 관리
	16. 체험관광 낚시어선을 내수면 어업인에게도 건조보급지원	○ 내수면어업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07제2회 추경예산에 어선건조 사업 반영추진 (12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7척(0.5톤이상 FRP) /112백만원 -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 대상(3개시·군) : 춘천, 양구, 인제 - 지원단가 : 척당 16백만원 이내(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07시범사업 추진후'11년까지(5년) 년차적으로 확대추진 계획
	17. 환동해출장소 연구기능 보강 - 연구인력 2명 증원요망 - 연구소, 시험장 등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요망	○ 향후 신규 및 결원 발생 충원시 연구인력 우선 배치 등 미래지향적 인력배치 추진 ○ 장기적으로 연구인력 증원을 본청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배치 추진
	18. 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재검토 - 연료절감기 지원 사업 등 ※ 08년부터 사업지양	○'07사업규모 : 200대/200백만원 - 추진실적 : 79대 완료, 121대 반납 ○ 부진사유 - 연료절감기의 효과 미흡으로 사업 신청 기피, '08년도부터 사업중단 ⇒ 동 시범사업을 토대로 '08년부터는 검증이 입증된 사업만 추진
	19.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대책 강구	○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효율성 도모 -'05년 : 내륙 11개시군에 야간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야간투시경 보급 -'06년 : 구입장비 범위의 확대보급 (무전기,써치라이트,쌍안경,잠수복,고무보트 등) ※ 2년간 도비 85,000천원 지원 ○ 앞으로 시군에서 장비구입지원 요청시 적극 지원 검토계획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출장소	20. 종묘 방류 사업에 있어 해면과 내수면의 국도비 지원 내역이 다른 이유와 국비를 많이 확보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종묘방류사업비 지원실태 - 국비지원:국비70%, 도비 15%, 시군비 15% - 도비지원 : 도비 30%, 시군비 70% ○ 해면, 내수면 국 · 도비 지원율이 다른 이유 - 해 면 : 국비 41%, 도비 21%, 시군비 38% - 내수면 : 국비 28%, 도비 24%, 시군비 48% ※ 국 · 도비 지원사업 지원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면 · 내수면별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원율 상이 ○ 수산종묘방류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매년 국비예산 점진적 확대 투자
	21. 어촌체험관광마을 지원사업을 “내수면사업”에도 실시(2회)	○ 내수면 어촌체험마을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결과 - 시군에서는 마을기반시설 및 수산자원조성 위주로 신청→ 체험관광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개발 보다는 치어방류,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지원 요구 - 내수면어업인들의 생활지역 분산으로 체험마을 조성 지난 • 지역별 어업인들의 분산거주 등으로 소규모 사업비(5억원)에 의한 투자효과 저조 및 미흡이 예상 ⇒ 내수면 어촌체험마을 조성계획은 기반시설 조성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계획 수립 중지 및“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국가계획에 반영 조치 ○ 정부「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상황 (해양수산부 주관) - 계획수립 : 시행방안 연구(‘07.11월) - 주요내용 : 도내 3개권역 개발대상 반영 • 신규권역 : 북부내수면권역(춘천, 화천, 양구, 인제) • 재정비권역 : 강릉시 강동권역, 양양군 강현권역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동해 출장소		- 사업비 : 권역당 50억원(국비 80%, 지방비 15%, 자담 5%) ※ 재정비권역은 권역당 30억원 규모 지원 - 사업시행 : 08년 권역별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
	22. 종묘방류 치어구매 입찰시 도내어민들 치어 구매 가능토록 양식장 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어가소득 향상 적극 지원	○ 방류종묘 매입실적 - 도내 지역제한 자가 종묘생산업체 공개 경쟁 입찰 ※'06까지 : 전국대상 공개경쟁 입찰 ⇒ 우리 도 건의로 제도개선 ○ 다만, 단일 품종일 경우 인근 시 · 도 포함 입찰 ○ 양식어가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내 서식품종 위주 방류확대
가축위생시험소	1. "검사방역과"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과」로 분리	○ 지금까지 추진사항 -「가축위생시험소 조직보강(안)」 수립(07. 9. 21.) ○ 향후 추진계획 - 조직보강 관련 부서와 협의 지속 - 처리결과는 산업경제위원회보고 ('08년 상반기 회기 중)
	2. 업무분담 - 수의직의 전문성, 행정업무와 분담노력	○ 지금까지 추진사항 -「가축위생시험소 조직보강(안)」 수립 (07. 9. 21.) - 수의업무 연찬회 개최 (07. 12.14.) ○ 향후 추진계획 - 원활한 행정 업무지원을 위한·본지소의 행정직 보강 협의 (조직, 인사 부서) - 수의업무 전문화를 위한 업무전담제 확대 및 업무연찬회 개최
	3. 검사장비 현대화로 효율적검사, 안전성 확보 요망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유지 관리 및 보강 • 2007년 축산물 검사장비 보강(11대) 및 노후장비 교체 (1대) • 장비 수리 · 보수(18대)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축위생시험소		○ 향후 추진계획 - 정밀검사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성능 업그레이드 실시 • 소모성 부품교체 및 성능 업그레이드 - 노후장비 교체 및 필요한 시험장비 년차적 보강 ※ 2008년 축산물 검사장비 예산확보 • 예 산 액 : 270백만원(국 135 · 도 135) • 구입장비 : 형광검출기 외 4 종
	4. 국제적으로 신종 동물 질병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건강 위협요인으로 작용, 종합대책수립 추진으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사항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검사 • 수입입식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질병 검사 : 닭 11,900수 , 돼지 171두 - 광우병(BSE) 검사 : 575두(3,384점)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 3,285수(건) ○ 향후 추진계획 - 검역원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신종질병 유입 정보 공유화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강화를 위한 검사 강화
	5. 축산물청정농장 인증제 확대와 인증농가 사후관리 철저 요망	○ 청정농장 인증제 추진사항 - 인증현황 : 총 136개소 (한우 1, 젖소 123, 돼지 12개소) - 검사항목 및 점검 기준 보강 연찬회 개최 ('07. 12. 14.) ○ 향후 추진계획 - 청정농장 인증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인증지침 개정 요구(도 축산과) • 인증대상확대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시행
	6.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 이전 장소 조기 확정과 국비확보 노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이전 장소 보고(07.6.14.) - 농림부에 이전계획 설명(07.11.20.)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축위생시험소		○ 향후 추진계획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 협의(농림부) - 2009년도 예산확보 계획
	7. 가축위생시험소 업무 중요함 - 축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방역, 시험 등 인력, 장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사항 - 「가축위생시험소 조직보강(안)」 수립 : '07. 9. 21. - 장비 보강 :13대, 노후장비 1대 교체 ○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예산확보(장비구입) • 사업비 : 355백만원(국비 165, 도비190) - 인력보강을 위하여 조직부서에 요청
	8.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검사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행 인수공통전염병은 방역실시요령을 제정하여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 • 결핵병 검사 16,758두, 브루셀라 검사 125,977두, 광견병 검사 56두 ○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가축방역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철저한 검사 - 철저한 검색 및 도태강화로 인체 감염 사전 차단
	9. 축산물 항생제 검사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축장 출하 축산물 대상 검사 실시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 5,441건 • 식용란 검사 : 261건 - 유해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출하축에 대한 철저한 검사 - 허용기준치 초과 농가 특별 관리 및 해당 축산물 식용금지 * 6농가 / 9두 ○ 향후 계획 -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 방안 지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축위생시험소		• '08년 축산농가별 질병 및 항생제 내성균 검사 확대 - 위반농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및 관리
	10. 시험연구용 장비를 최신 장비로 확보하여 시험사업 효과 극대화 요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재 수의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 연구사업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 및 신기술 현장 적용 - 시험장비 활용을 위한 개업수의사와의 검사 의뢰 요령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보유한 가축방역장비(70기종 269대), 축산물검사장비(91기종 251대)에 대한 노후장비 점검 및 업그레이드 실시 - 향후 노후장비 교체 및 필요한 시험장비 연차적 보강 - '08년 예산확보(장비구입) : 355백만원 (국비 165, 도비 190백만원)
	11. 결핵, 브루셀라병, 광견병 검사 철저 요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결핵병 검사 : 16,758두 - 브루셀라병 검사 : 125,977두 - 광견병 검사 : 56두 - 한·육우 및 젖소에 대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검진으로 질병 조기 근절을 목적으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모든 농장 암소 전두수 정기검진 및 수소(거세제외)검진 등 대상 확대 - 검사를 위한 농가교육 및 홍보 강화 - 야생동물에 대한 광견병검사 및 예방약 접종 등 인체감염 사전차단을 위한 방역사업 지속 추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가축위생시험소	12. 타지역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초등 대응 능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신속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관회의 개최 : 3회 - 비상방역상황실설치·운영 : 11월 1일 ~ 익년 5월 30일 - 유입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혈청검사 실시 - 초등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CPX 실시 - 긴급대응 매뉴얼 작성 비치 - 비상방역용 소독약품 비축 ○ 향후 추진계획 - 비상방역상황실 운영 - 유입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 - 타 시·도 발생시 도 경계지역 차량이동 통제 및 소독 강화
산림개발연구원	1. 산불예방대책 수립 - 민유림, 국유림 등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 운영 - 봄철(2.1.~5.15.), 가을철(11.1.~ 12.15.)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도, 시·군, 국유림관리소, 군부대, 기타 기관·단체 등 ○ 체계적인 감시·진화 체제 구축 - 감시카메라 3개소, 감시초소 4개소, 산불 감시원 배치 15명(2008년 : 공공근로자 15명 추가 배치) - 자체 진화대 조직·운영 및 시·군 진화대와 공조체제 유지 ○ 산불예방 홍보활동 강화 - 현수막 등 게첨 : 400점 - 산불예방 결의대회 등 : 4회
	2. 2006년도 호우피해지역 산림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비 : 95,852백만원	○ 호우피해지 산림복구 완료 - 사업량 : 4개사업(산사태 557ha, 야계사방 7km, 사방댐 105개소, 임도 1.5km) - 사 업 비 : 82,504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8. ~ 2007. 7. 30.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림개발 연구원		○ 개선복구 추가사업 추진 계획 - 사업량 : 3개사업(산사태 23ha, 야계사방 5.8km, 사방댐 64개소) - 사 업 비 : 13,348백만원 - 사업기간 : '07.8.29.~ '08.6.30. (동절기 공사 중지 2007.12.14) ⇒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추진
	3. 경제수종 등 도입 식수방안 적극 검토	○ 2008년 조림사업 계획으로 추진 - 경제수 : 33ha • 고로쇠, 소나무, 물푸레나무 등 - 경관조림 : 3ha • 경관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충족 시킬 수 있는 수종 식재 ⇒ 산림청 선정 경제수종으로 조림 실시, 도유림의 자원화 촉진
	4. 실적위주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돈 되는 연구를 해 줄 것 - 가시없는음나무, 노랑무늬붓꽃, 땃드릅 나무 등	○ 대량증식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화 실현 - 가시없는 음나무 : 식용, 약용 - 노랑무늬붓꽃 : 관상 원예용 ○ 땃두릅나무 대량증식 방법 개발 - 기관분화 및 생장 배지 구명 - 순화방법 및 현지 적응 시험 - 기술개발 후 대량증식 농가보급으로 소득화 추진
	5. 기 설치한 임도의 지속적인 보수관리로 수해피해의 원인 제거 노력 경주	○ 보수관리 지속추진으로 피해방지의 사전 방지대책 강구(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 - 2008년 사업계획 • 사업량 : 구조개량 14㎞, 보수 10㎞, 임도관리원 2명 • 사업비 : 932백만원
	6. 등산로 시공시 갈지자(之)형으로 시공 검토 - 산지파괴 최소화, 폭우 시 토사유출 피해 최소 등	○ 2008년도 사업설계 및 시공에 반영 추진 - 사업량 : 3㎞ - 사업비 : 92백만원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산림개발연구원	7. 임도 구조개량 시 콘크리트보다 가능하다면 자연석으로 시공(친환경 시설)	○ '08년부터 구조물 시공 대상지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 시설물 최대한 설치 - 사업량 : 14㎞ - 사업비 : 864백만원
	8. 기내 증식에 의한 대량생산 방법 특허 등록 관련 - 예산확보로 대량 증식시설 확충하여 지속적인 묘목공급체계 기반 구축	○ '08년 추경에 예산 확보 순화실 설치 후 대량증식 및 농가보급 소득화될 수 있도록 추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9. 도유림을 희망농가에 임대	○ 농산촌 주민의 도유림 사용허가 신청 건은 최대한 수용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길림성 경제무역 사무소	1. 매장(전시장) 진열상품 중 공산품은 6개월, 식품류는 3개월기간 정기교체 협약 명기	○ 現 상설전시관을「강원도홍보관」으로 운영 - 수시교체 가능한 제품 엄선전시(기업과 정기교체 협약체결) - 그 외 다른 제품은 홍보영상물을 활용전시 효과를 극대화
	2. 직원 근무복장 통일 및 명찰 패용 바람	○ '08년부터는 근무복 착용 및 명찰을 패용하여 근무토록 조치
	3. '08년부터는 근무복 착용 및 명찰을 패용 하여 근무토록 조치	○ 길림성내 무역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매입 방안 旣 검토 - 자치단체 해외재산매입제한으로 건물매입은 어려움(사유재산 불인정) - 감사원에서도 각 시도에 해외사무소 필요성 재검토 권고 - 현사무소 소재 화거대하 빌딩은 장춘시 중심 및 코리아타운 인근으로 사무실 위치로 적합 ○ 사무소 매입으로 인한 이전보다는 현 위치 내에서 사무소 이전 추진 - 건물매입시 수십억원 소요예상 - 향후 건물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비도 많이 소요될 전망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길림성 경제무역 사무소	4. 직원(일용인부) 인건비 매년 인상율 적용 편성 노력 (공무원 급여 인상폭 선에서)	○ '07년 직원 인건비 - 총액 : 15,500천원(1인당 연 5,000천원) - 인건비 외 보험료 등 별도지급 : 5,000천원(3명) ※ 보수수준 : 중국 대졸자 기준 中上 수준 ○ '08년 지급계획 - '05년, '06년 보수동결로 전년보다 2,500천원의 인건비를 추가계상 (16.1% 증) - 향후 공무원 급여인상폭과 직원들의 사기 등을 감안하여 편성 지급
	5. 전시장리모델링사업은 강원도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고품격 매장으로 추진 ※ 10번 내용 참조(연계부분있음)	○ 길림성사무소내 상설 전시장 이전 및 리모델링 추진 - 길림성사무소를 화거대하빌딩 2층에서 14층으로 이전 구축
	6. 경제무역사무소 예산지원 배려	○ 길림성사무소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편성운영 - 매년 비슷한 수준, 큰폭의 증감 없음 - 경상예산 별도 사유없이 증액은 어려움 사업예산은 사유발생시 우선 예산 편성 - 대중국 수출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 사업추진(전시회 · 시개단 운영 등) ○ 향후 신규사업은 별도예산 편성, 사업추진
	7. 치치하얼 강원도 상품판매 전시장 종료 후에도 상담 · 판매가 연결되도록 노력	○ 치치하얼 강원도상품판매전시장 운영현황 - 기간 : '07. 2.~12월(10개월) - 성과 : 참가10기업중 7기업이 대리점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대리점 미발굴 기업이 지역내 대리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당기업과 홍보중점 - 바이어 알선,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등 적극 지원
	8.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에 노력	○ 추진현황 - 중국어판 신농촌 책자 3,000부 배부 (동북3성내 1,910개 기관 · 단체)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길림성 경제무역 사무소		※ 책자 배부시 사무소 명의로 서한문, 강원도 홍보물, 관광홍보물 동송배부 - 도지사 내방시 대학특강, 도지사친필서명 책자배부(동북3성내 지방정부) ○ 향후 추진계획 - 도지사 대학특강 실시 - 언론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 추진 - 도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한 특별기획 보도를 통해 관광상품과 연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
	9. 강원도민회 결성 확대 (현 3개지역 151명, 현교민 2천여명)	○ 현 황 - 강원도민 거주 약 2천명,도민회 결성-북경, 천진, 심양 (대부분 투자업체, 주재원) ○ 향후 추진계획 - 위 3지역 도민회와 협조체제 구축 - 청도, 상해, 장춘 등에도 도민회 결성 적극 추진 - 길림성사무소가 위치한 조양구내 코리아 타운을 기반으로 한인회內 강원도민회의 결성을 확대추진
	10. 사무실이전시 전시장을 현대 감각에 맞게 백화점 수준으로 설치	○ 현 전시장의 규모 및 전시물품수 축소, 전시장과 홍보관을 병행한 「강원도 홍보관」으로 종합 구축 - 무역사무소로서의 기능보완을 위하여 코너별 · 업종별로 구분하여 상담장 설치 • 「강원도 홍보관」은 기존의 도내제품 전시 규모는 축소하되 도정, 관광, 제품소개, 기업정보, 동계올림픽 등을 포함한 영상물을 최대한 활용
	11. 소장 직급상향(5급→4급) 및 6급 직원 증원방안 검토	○ 무역사무소는 도내상품의 전시홍보,수출입 상담, 투자상담등의 경제교류가 주요임무임 - 경제교류 외에 문화,체육,예술 등 길림성과의 우의증진에 관한 사무 처리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길림성 경제무역 사무소		- 경제교류 외에 길림성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국제협력실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경제교류 추진만을 위한 소장의 직급상향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 향후 기능 활성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5급인 길림성 내에서는 준과장급 형태로 임시운영 또는 직원증원 검토계획

라) 관광건설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보관실	1. 홍보매체별 홍보효과를 분석하여 홍보효과가 좋은 매체를 중심으로 道 이미지와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방안 강구	○ 07.11.20.~12.20.기간중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한 홍보효과조사 결과에 의거 홍보 매체별 접촉률과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매체를 중점 활용 할 계획임. ○ 동영상 홍보매체에 방영될 영상물은 우리도의 관광,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 대표 이미지 CF와 농수특산물·기업유치CF 등 총3종을 2008년 제작·활용할 계획임
	2. 간단하면서 명료한 강원도 슬로건 재선정 요망	○ 대표 브랜드 슬로건은 상징적, 포괄적인 이미지를 담고,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도 기획관실 주관으로 공모전을 추진중 임 ※ 브랜드 슬로건 공모 • 응모기간 : '08.1.16. ~ 2.15.(1개월) • 시상내역 : 최우수 1건(500만원) 가작 5건(각 50만원)
	3. 타 지자체에 설치된 道홍보물에 대한 정기점검 촉구	○ 현재 운영중인 홍보매체의 실태점검은 협약에 의거 한국언론재단 월 1회 점검 및 도 자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보관실		○ 1차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결과를 별도 확인하는 2차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익년도 매체확정을 위해 신규매체 위주의 현지 점검을 년1회 실시하는 등 년간 총6~7회에 걸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점검할 계획임.
	4. 언론방송의 오보에 대한 시정	○ 보도자료 제공시 간담회등 사전설명 및 자료 조기제공, 충분한 보조자료 제공 등으로 오보 사전 예방 ○ 오보에 대한 사후조치 - 해당언론사, 취재기자등에 정정·해명보도 요청 - 해명자료 배포등을 통한 타 언론사 확산 방지 ※ 필요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
환경관광문화국	1. 도립국악관현악단의 연습장 및 공연장 확보방안 강구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 제3조(기능)의 규정관련	○ 도립국악관현악단 연습장 건물의 노후화 및 분야별 연습공간과 방음 시설의 부재 등 연습장 및 공연장 확보 필요 ○ 강원국악예술회관에 연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기존 입주단체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협의 검토 ○ 장기적으로 연습장 및 공연장 신축검토
	2.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추진시 의회에 사전협의 및 동의촉구	○ 향후 주요시책에 대하여 사안별로 수시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 비회기시 : 전문위원실을 통한 협의 - 회 기 시 : 직접 협의
	3. 매년 반복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재검토	○ 낭비적이지 않고 효과적인 용역을 위하여 「조사주기」를 조정하겠음 ○ 강원관광실태조사의 경우 -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조정할 계획 ※ 2008년도는 미실시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관광문화국	4. 설악산 탐방로 확대 및 관광케이블카 설치방안 강구	○ 설악동 탐방로 확대 협조요청 - 일 시 : 2007. 11. 28. - 장 소 : 설악산사무소 - 방문자 : 환경관광문화국장 - 내 용 • 설악산 탕방로 확대 요청 • 설악동 재정비 및 활성화 적극 지원 • 오색케이블카 설치 지원 등 〈처리결과〉 - 탐방로 추가 개방 : '07.12.16.(10개구간) ‣ 비선대~마등령~오세암~영시암 : 7.4km ‣ 마등령~회운각 대피소~대청봉~한계령 : 12.5km ‣ 비선대~회운각 대피소 : 5.5km ‣ 백담사~구렴동~대청봉 : 12.9km ‣ 오세암~봉정암 : 3.5km ‣ 장수대~대승령 : 2.7km ‣ 대승령~한계령 갈림길 : 6.7km ‣ 남설악탐방지원센터~대청봉 : 5.0km ‣ 흘림골 입구~용소폭포삼거리 : 3.6km ‣ 남교리~대승령 : 8.6km ○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 위치 : 양양군 오색~대청봉간 - 내용 : 자동2선식 곤도라(중간지주 5개) * 수송능력 : 300~400명/H - 거리 : 수평 4.53㎞, 경사 4.73㎞ * 자연보존지구 4.11㎞ 포함 - 사업비 : 150억원(추정) 〈처리결과〉 - 설악산사무소 방문 협조요청 : '07.11.28., 환경관광문화국장 - 환경부 건의 : 제한규정 완화, 친환경적 시범사업 선정 우선 추진 • 환경부차관 래도(11.8.), 시도 환경국장 회의(12.7.)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안사항 건의 • '08.1.22., 도지사

<table>
<tr><th>실 국</th><th>시정 · 처리요구사항</th><th>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환경관광
문 화 국</td><td>5. 강원문화재단 및 문화재연구소 운영체계·운영방식 개선 촉구</td><td>○ 강원문화재연구소 직원처우개선 계획 수립
- 비정규직(계약직)의 정규직전환
• 대상 : 계약직 24명
- 휴일근무수당 지급 현실화
• 현장 휴일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휴일 근무수당으로 지급
○ 강원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일부 개정(안) 승인 : 강원문화재단이사회
- 정원(17명→45명) : 선임연구원1, 연구원(4,5급)23, 사무원4명 총28명 증
- 조직(5팀→6팀) : 조사기획팀 신설, 유물보존팀을 과학보존팀으로 명칭변경
※ 2007.11.1일부터 현재까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수사 진행중인 바, 수사결과 운영체계,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조치계획임</td></tr>
<tr><td></td><td>6. 민간투자 사업추진에 만전</td><td>○ 투자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공격적 민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 여건·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 상품 개발
○ 민자사업의 신속 지원을 위한 「one-Stop total service」 체제 구축</td></tr>
<tr><td></td><td>7. 태백산도립공원 당골 주차장 정비</td><td>○ 당골(소도집단시설지구) 주차장 현황
<table>
<tr><th>주차장명</th><th>면적(㎡)</th><th>현상태</th><th>비고</th></tr>
<tr><td>계(4개소)</td><td>31,956</td><td></td><td></td></tr>
<tr><td>제1주차장</td><td>6,769</td><td>블럭포장</td><td></td></tr>
<tr><td>제2 〃</td><td>6,197</td><td>〃</td><td></td></tr>
<tr><td>제3 〃</td><td>10,415</td><td>〃</td><td></td></tr>
<tr><td>제4 〃</td><td>8,575</td><td>쇄석부설</td><td></td></tr>
</table>
〈향후계획〉
- 제4주차장의 포장사업계획 수립
- 기포장 주차장의 소파보수 검토</td></tr>
</table>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환경관광 문 화 국	8.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촉구	○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도비확대 지원 - (07당초)460→(07추경) 585백만원 증액125, 당초대비 27%증 ○ 08문화관광축제 등급상향 및 확대선정 - (07년)6개→(08년) 7개(증1개) - 산천어축제등급상향 • (07년) 유망 → (08년) 우수 - 문화관광 예비축제 신규 진입 • 정선 아리랑제(08년 신규) ○ 08년 문화관광축제 국비규모 대폭 확대 - (07년)650→(08년)1,050백만원, 증액400, 07대비 61.5%증 ○ 08도비지원 : 당초400백만원 확보 - 추경을 통해 증액반영 요구예정
건 설 방재국	1. 남춘천역 앞은 강원도의 얼굴인데 주거 환경은 70년대 영평정 폐광지역 간이역을 방불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춘천역 부근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추진현황 - 11토지구획정리사업 • 위 치 : 남춘천역 서측(여관단지) • 시행자 : 토지조합 - 남춘천 시가지 조성사업 • 위 치 : 공지천변(유승아파트 앞) • 시행자 : 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 역사이전('09년 준공예정) • 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역사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 광장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08.7월 춘천시) ○ 향후계획 - 남춘천 역사가 현위치에서 춘천역방향으로 약 1㎞ 이전 신축됨에 따라 - 현재 역사의 기존 노후 상가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예정 중에 있으며, - 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3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우선 검토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건 설 방재국	2.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원인제공자는 행정기관에 있는데 귀책사유도 없는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정책 건의하기 바람	○ 지적불부합지정리 개선방안 -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사업촉진을 위한 지적경계정비 사업 추진 - 경계분쟁에 대한 정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계획(국책사업) -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지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정비하기 위한 지적불부합지를 포함한 지적 공부 일제정비 계획임 - 지적경계정비 대상지조사 완료(2007년) • 대상지 선정 : 73만필지 2,275㎢ (총대상 : 241만필지,16,533㎢) ○ 향후 추진계획 -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 • 2008 ～ 2010년 :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 사업 실시 • 2011년 : 특별법 제정 • 2012년 : 사업 확산 -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소유자 동의 기준 •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기준 • 권리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법령제정시 소유자 동의, 청산, 거소불명자의 조치 등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
	3. 지방도상 터널내 전기시설 미비와 누수현상이 많은데 지방도 터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도내 지방도 터널은 21개소로서 대부분이 1종, 2종 시설물로 매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년1회 자체 소방정밀점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월1회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이상 발생시 긴급보수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터널 환경조성 최선을 다하고자 함.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건 설 방재국	4. 지방도 전산화사업은 앞으로도 10여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2~3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예산범위 내에서 년도별 계약체결 하였으나 잔여물량은 총괄발주 방식으로 변경 검토 ○ 확보된 예산 3억원이외에 총괄발주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1회추경확보하여 추진.
	5.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부문 투자가 부진하여 미진한 계획들은 계획에서 삭제해 정리하기 바람	○ 추진현황 - 도로 기반시설사업 • 사 업 량 : 서학~만항외 26개사업 • 사 업 비 : 315,430백만원 ('07까지 투자액 : 212,496백만원) • 추진실적 : 14개 사업완료 (13개사업 추진중) • 성 과 : 추가 국비확보(증 247억원) ○ 향후계획 - 도로 기반시설사업 • 조기완료를 위해 국비집행 철저 등 지속추진 - 민자사업 • 추진 중인 사업은 행정지원 강화 • 미추진사업은 사업별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가능사업과 불가사업으로 분류, 불가 사업은 건교부와 협의 후 사업 취소 계획.
	6. 동·서·남해안권역 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SOC사업의 조기 확충으로 도내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논리와 계획을 강구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바람	○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권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08정부교체를 계기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 인수위원회 건의 •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민자착수 건의 • 동해북부선 철도 → 실시설계 건의 • 동해고속도로 → 주문진~양양간 '09완료 삼척~동해간, 양양~속초간 : 09착공건의 - 현안사업의 중앙부처 방문건의예정
	7. 도내공사중단된 현장이 46개소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경관도 가꾸고 안전성을 생각해서라도 펜스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착공후 1년이상 공사중단 건축물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 중단건축물 전수 조사 실시 • 기간 : '08. 1월 • 대상 : 연면적 300㎡이상 건축물 ‣ 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중점 조사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건 설 방재국		- 중단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기간 : '08. 3월 (해빙기 대비) • 대상 : 위험요소 우려 건축물 중점 점검 ○ 중단건축물 해소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해소방안 계획 수립 추진('08. 2월) - 행정적 해소방안 • 공사재개 독려 및 제3자 인수 유도 •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마련 ‣ 위해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유도 ‣ 시군담당자의 담당관리 책임자 지정 ‣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확행 -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시책 추진과 연계하여 불량경관 저해요소 제거 - 제도적 해소방안 • 건축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운영 시행 ‣ 대상 :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 • 소규모 중단 건축물에도 동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선 건의
	8. 미시령관통도로와 관련하여 매년도에서 많은 금액을 손실 보상하고 있는데 건교부에 매수를 건의 또는 도에서 매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미시령터널을 장기적으로 국가매수, 단기적으로 손실보전재원의 국비전환을 위해 중앙방문건의 등을 통해 관철되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대처
	9. 위험도로 정비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지도 56호 원암지구 구간처럼 3년간 교통사고가 47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사고다발지역을 우선하여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 2004년도에 수립된 위험도로개선사업 중 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 사고다발지역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10. 도내 하천 및 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도지사에게 건의하기 바람	○ 조직관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건 설 방재국	11.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권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SOC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 영남권과 연계한 교통망에 대해서도 조기 완료 및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 - 국도7호선(북면~근덕)2개구간'08완료추진 -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08착공 추진 - 삼척~동해간 고속도로 '09착공추진
	12. 지역내 소하천 보에 쌓여 있는 골재를 준설하면 2중 3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	○ 하천시설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상지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
보건환경 연 구 원	1. 민원발생지역 시료채취 개선요구	○ 위 사항은 강원도사무위임규칙(별표1, 환경정책과 소관 21번항목 및 맑은물보전과 소관 17번항목)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 현재 시장·군수의 관리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민원 및 오염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하여 관련기관(도.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검사가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동강관리 사 업 소	1. 동강유역내 매입사유지에 대한 관리 방안 요구	○ 본 사항은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소관사항으로 매입토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건의하여 "동강유역 매수토지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으로 동강 유역내 매입사유지 관리 대책을 협의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음.
자연환경 연 구 사 업 소	1. 한강수계기금 확대 지원 방안 강구	○ 한강수계관리기금위원회로부터 자연환경 연구관 조성(연구·교육기자재 구입)건으로 '07~'08년까지 797백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받았으며, '08년부터 자연생태계 및 생태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 향후 청정산업대상범위 확대 건의 및 향후 자체 연구범위를 넓혀 기금을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자연환경연구사업소	2. 연구공원 자연환경 보전대책 강구	○ 인근마을주민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환경감시대 운영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산불예방 감시원 근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안정적인 공원 운영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지속 추진,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도로관리사업소	1. 지방도상 절개지의 낙석, 산사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개지에 고유 번호를 부여, 데이터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바람	○ 도내 지방도상 관리되고 있는 주요 절개지는 총 114개지구로 지구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 왔으며, ○ 도내 주요 절개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 관리되고 있는 114 개지구의 재난 위험지역을 보완 · 재 수립 계획에 있음. ○ 재 수립된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지역에 대하여 지구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절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의회운영위원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의회사무처	1. 법령 및 훈령에서 정한 외에 의정활동에 요한 제반 의회비의 확대편성 방안 강구	○ 의회비 9개목은 행정자치부 규정, 도 조례 등으로 이미 정해짐 - 보수경비 : 도 조례 - 국내여비 : 실비보상 (도조례) -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 행정자치부 훈령 - 기타사항 : 요율에 의한 경비 ○ 공통업무추진비(2억7,600만원)집행계획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검토하는 방안 강구 예) 행사비를 줄이고 회의비 증대 ○ 사무처운영 예산중 의회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함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의 회 사무처	2. 각 시·도의회 직원 및 의회비 현황을 비교분석 후 상세자료 제출	○ 의회비 9개목이 조례나 행정자치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시·도간 차이가 나는 것은 - 의정비(월정수당) 지급 규모면에서 큰 편차가 있고 - 국내여비(실비급)은 시·도간 거리와 특성 등으로 차이가 있음 ○ 우리도는 전국 16개시도중 9번째 수준이며 전국 평균 1인당 67백만원, 강원도는 1인당 63백만원임 ○ 의원 1인당 직원수는 1.8명, 16개시도중 11번째임
	3. 의회수첩 제작시 사무처 직원의 담당 업무 및 사진 게재 요망	○ 의회 업무노트와는 별개로 직원사진, 근무부서 등을 게재힌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
	4. 사무처기능 활력화를 위한 계약직 채용 등 외부 전문가 영입방안을 검토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조례 제3157호, 206. 12. 29.)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계약직, 별정직 및 기능직의 임용 권한이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는 과원으로 외부영입 채용은 어려운 실정임 ○ 강원도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신규임용이 가능하므로 영입시기와 인원 등을 검토 중에 있음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회 청사 시설물 개선	○ 현 의회건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토록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 증축하는 의사당은 설계 시 노약자·노인·임산부에 관한 편의시설 증진법에 적합하도록 시설(화장실, 엘리베이터)을 반영함 ○ '08년 의사당 리모델링 설계시에도 장애인이 의회방문 시 불편이 없도록 보완설치 계획임
	6. 도의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개선과 접근성 향상 및 의정 홍보자료 업그레이드 등 홈페이지 관리 철저	○ 홈페이지 접속 시 첫 화면의 배치를 현재 법률, 법규 등 입법 정보에서 의정 활동 안내를 위한 의정홍보 및 의견접수 등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텐츠로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컨텐츠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최신자료 업데이트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7. 의회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사실에 입각한 자료가 언론보도 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 철저	○ 현재 창구일원화(부서별 → 공보팀 → 언론사) 운영방식으로 보도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사실에 입각한 내부결정 사항이 언론보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실 국	시정 ·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의 회 사무처	8. 의원 개인별 지역구활동 언론사 동정 게재 등 의정활동 홍보강화	○ 의원 개인별 동정 게재에 대하여 상임위별 철저한 파악, 언론사와의 협력으로 형평성 있게 언론보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의원동정에 대하여 지방지외에 케이블 TV방송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9. 자료실 신간 서적 및 자료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의회 홈페이지 내 별도 자료실이 링크 되어 있음)
	10. 집행부의 각종 자료 적기 제출과 좌편 철 및 지질 조정으로 예산 절감 방안 강구	○ 집행부와 협조(12월 중 공문시행)하여 각종 자료 법정기간 준수 및 지질 조정 등 낭비 요인을 줄이고, 절약하도록 시정 조치하겠음.
	11. CD회의록 확대 등 회의록 간편화 및 각종 의원 배부 자료의 간소화 도모	○ 회의록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선호도(책자 · CD)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CD회의록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책자회의록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음 (가급적 1의원 1종 배부 원칙) ○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 중 공통으로 제공 가능한 내용은 최소화해 나가겠음(일일도의회 운영 상황 등은 위원실 게시판에 게시 등
	12. 의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등 개최시 주제별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석하도록 내실 있는 계획으로 성과 극대화 방안 강구	○ 향후 토론회 개최시 사전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 수립 ○ 토론회 참석률 제고와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13. 특별위원회 및 의원연구회 활동 보좌시 국회·중앙부처의 각종 자료 발굴 지원 등 적극적 보좌 요망	○ 특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타 시도 의회 및 국회의 관련 정보 적시 제공과 이해 관계자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활동 보좌 ○ 연구회 구성 목적에 맞는 맞춤형 지원 추진 - 연구회 관심사항 수시 제공 - 연구회 활동 촉진을 위한 능동적 대처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등)

제5절

진정 및 청원 처리

1. 진정 처리

가. 총 괄

제7대 전반기 중 진정서가 114건이 접수되어 108건이 접수·처리되었으며 6건은 불수리 처리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 13건이 제출되어 접수·처리하였으며 2007년도에 65건이 제출되어 6건이 불수리 되었고 59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 36건이 제출되어 접수·처리하였다.

나. 접수 현황

1) 위원회별 현황

접수된 114건의 위원회별 내역은 운영·예결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17건, 교육사회위원회 12건, 산업경제위원회 17건, 관광건설위원회 45건, 송전탑피해대책위원회 7건, 총무담당관실 1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다.

2) 접수 형태별 현황

진정서의 접수 형태별로 보면 우편 97건, 인터넷 14건, 직접 방문 3건이다.

다. 처리 현황

1) 위원회별 처리 현황

총 접수·처리한 114건 중 운영·예결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17건, 교육사회위원회 12건, 산업경제위원회 17건, 관광건설위원회 45·건, 송전탑피해대책위원회 7건, 총무담당관실 1건, 타기관 이송 5건, 불수리 6건, 미 회부되어 직접 처리한 것이 3건이다.

2) 처리 유형별 현황

교육청 등 이송 처리한 것은 5건, 불수리 6건, 직접처리 3건, 총무담당관실 1건, 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듣거나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처리한 것이 99건이다

라. 처리 결과

1) 총 괄

총 접수된 진정서 114건 중 목적을 달성한 것이 16건, 향후 검토 또는 추진 상황을 설명한 것이 75건으로 나타났으며 11건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과 지역 개발 및 제도 개선 사항으로 목적이 미달성되었고, 5건은 타 기관 이송, 6건은 불수리로 처리하였고, 1건은 해명 및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다

2) 목적 미달성 내역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내용별로 보면 법령상 제약으로 인한 것이 5건, 정책상충 6건이다.

2. 진정 목록 및 처리 현황(2006. 7. 1.~2008. 6. 30.)

진정번호	진 정 인	건 명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분야
1	서울시 이○○	강원도개발공사 관할 휴양지 입장료 징수 부당	'06. 7. 19.	'06. 8. 9.	참고	기행
2	한○○(인터넷 접수)	결산검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요구	'06. 7. 31.	'06. 8. 11.	해결	의회 운영
3	춘천시 송○○	403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 설계변경 요구	'06. 9. 6.	'06. 10. 9.	불가 (정책)	관건
4	삼척시 홍○○	국도 7호선 연장 및 노후 교량신설 요청	'06. 9. 6.	'06. 10. 9.	참고	관건
5	춘천시 이○○외 28명	의암리~팔미2리간 우회 도로 개설 요구	'06. 10. 9.	'06. 11. 10.	참고	관건
6	춘천시 김○○	대추나무골 학교용지 제척 건의	'06. 10. 27.	'06. 11. 28.	참고	관건

진정번호	진 정 인	건 명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분야
7	원주시 이○○	경순왕 영정각 복원사업 공개 건의	'06. 10. 27.	'06. 11. 17.	참고	기행
8	철원군 구○○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예산삭감 촉구	'06. 10. 30.	'06. 11. 6.	참고	기행
9	창원시 전○○	박용성 IOC위원 사면 요청 철회	'06. 11. 6.	'06. 11. 15.	참고	기행
10	원주시 임○○	문막 스타벨리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 반대 건의	'06. 12. 5.	'07. 1. 8.	참고	관건
11	원주시 안○○	문막 스타벨리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 반대 건의	'06. 12. 6.	'07. 1. 8.	참고	관건
12	평창군 김○○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확포장 공사 요청	'06. 12. 7.	'07. 1. 8.	참고	관건
13	경기도 김○○	경원선 복선전철 동두천 연장과 관련 주민불편 개선	'06. 12. 29.	'07. 2. 1.	참고	관건
14	철원군 윤○○외 24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신분보장 요청	'07. 1. 9.	'07. 2. 13.	불가 (법령)	교사
15	춘천시 이○○	6.25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07. 1. 10.	'07. 2. 5.	참고	교사
16	화천군 김○○외 12	화천농협 하나로마트 시설확충 반대	'07. 1. 16.	'07. 2. 6.	해결	산경
17	서울시 송○○	대한안마사협회 강원지부 수련원 사업 지원 철회	'07. 1. 17.	'07. 2. 13.	참고	교사
18	원주시 전○○ 외 1,500명	원주시 문막읍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치 건의	'07. 1. 24.	'07. 2. 7.	참고	교사
19	춘천시 전○○외 80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07. 2. 2.	'07. 2. 27.	참고	관건
20	속초시 최○○	동해안권 사회간접자본 조속한 확충과 양양공항 활성화 대책	'07. 2. 2.	'07. 2. 28.	참고	관건
21	서울시 남○○	교복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화 제안	'07. 2. 5.	'07. 2. 23.	참고	교사
22	정선군 최○○외 100	동강지역 자연휴식지 입장료 징수 철회 건의	'07. 2. 7.	'07. 2. 27.	해결	관건
23	춘천시 원○○외 50	골프장 건설공사 계획반대	'07. 2. 8.	'07. 2. 27.	참고	기행
24	포항시 장○○	순회지료교사 부적합 행동 자제요구	'07. 3. 5.	'07. 3. 12.	이첩	

진정번호	진 정 인	건 명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분야
25	춘천시 이○○외 49	마을안길 확장공사 건의	'07. 3. 6.	'07. 4. 3.	참고	기행
26	인제군 조○○	인제군 북면 원통~서화 구간 육교설치	'07. 3. 6.	'07. 4. 5.	해결	관건
27	태백시 남○○외 640	도시계획도로 공사 촉구 건의	'07. 3. 14.	'07. 4. 5.	해결	관건
28	춘천시 박○○	동면 만천리 골프장 건설 반대	'07. 4. 2.	'07. 4. 3.	이첩	
29	영월군의회 의원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 유보	'07. 4. 2.	'07. 4. 3.	참고	관건
30	영월군의회	시멘트 공장 환경관련법 규제강화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07. 4. 16.	'07. 5. 18.	참고	관건
31	횡성군 최○○외 23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반대	'07. 4. 18.	'07. 5. 15.	참고	산경
32	춘천시 송○○	지방도로 개설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보상요구	'07. 4. 20.	'07. 5. 22.	참고	관건
33	원주시 조○○외 990	원주 제1군 지원사령부 문막읍 동화리 이전반대	'07. 5. 3.	'07. 5. 11.	이첩	
34	원주시 조○○외 1000	원주스타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골프장 건설반대	'07. 5. 8.	'07. 6. 20.	참고	기획
35	삼척시 김○○	새카지노 예정후보지 확정 통보	'07. 5. 14.	'07. 5. 14.	불수리	
36	속초시 최○○	춘천~양양구간 동서고속도로 중단에 대한 견해 및 입장 건의	'07. 6. 4.	'07. 6. 27.	참고	관건
37	춘천시 전○○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 춘천 유치 건의	'07. 6. 4.	'07. 7. 10.	참고	산경
38	속초시 최○○	인천~속초구간 한국형 초고속철도 건설 건의	'07. 6. 7.	'07. 6. 27.	참고	관건
39	춘천시 양○○	소양강 흙탕물 피해대책	'07. 6. 7.	'07. 6. 8.	불수리	
40	횡성군 연○○외 133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07. 6. 14.	'07. 7. 16.	해결	산경
41	원주시 김○○외 79	농로다리 건설을 위한 비용지원 및 토지매입 건의	'07. 6. 15.	'07. 7. 19.	불가 (정책)	기행
42	정선군 정○○외 86	상수원 보호구역내 농촌주택 개량 허가 요구	'07. 6. 18.	'07. 7. 10.	불가 (법령)	관건
43	태백시 주○○외 1	강원랜드의 복지사업비 확대 요구	'07. 6. 27.	'07. 7. 25.	참고	산경

진정번호	진 정 인	건 명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분야
44	삼척시 곽○○	개인운영지원시설에 인건비 지원 요구	'07. 7. 2.	'07. 7. 19.	참고	교사
45	횡성군 서○○외 46	문화재 인근의 축사부지 형질변경 허가 취소 요구	'07. 7. 4.	'07. 8. 7.	불가(법령)	관건
46	-	일제침략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일시불 보상금 지급요구	'07. 7. 10.	'07. 7. 10.	불수리	
47	고성군 김○○외 39	삼포, 문암 관광레저타운 개발권 취소	'07. 7. 12.	'07. 8. 1.	불가(정책)	관건
48	춘천시 원○○외 12	춘천시 남면 후동리 골프장 조성반대	'07. 8. 7.	'07. 9. 19.	불가(법령)	기행
49	정선군 김○○외 106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반대	'07. 8. 7.	'07. 9. 3.	참고	관건
50	정선군 이○○외 116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반대	'07. 8. 8.	'07. 9. 3.	참고	관건
51	춘천시 춘천시번영회	평창동계올림픽 1차,2차 유치실패 원인 및 행사비 규명의뢰	'07. 8. 20.	'07. 9. 19.	참고	기행
52	삼척시 김○○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 및 환경에 관련된 조례 제정	'07. 8. 20.	'07. 9. 12.	불가(법령)	관건
53	김○○(인터넷 접수)	국립공원내 부당한 수수료 징수 관련 건의	'07. 8. 20.	'07. 9. 12.	참고	관건
54	속초시 박○○외 208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조속한 추진요구	'07. 8. 23.	'07. 9. 19.	참고	관건
55	정선군 정선군의회	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 청원과 관련한 정선군의회 의견서에 대한 해명 및 수정	'07. 8. 29.	'07. 9. 11.	해명 및 내용 수정 요구	관건
56	춘천시 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요청	'07. 9. 12.	'07. 9. 19.	참고	총무
57	삼척시 문○○	공영주차장 부당 이용요금 징수	'07. 9. 18.	'07. 9. 21.	이첩	
58	강릉시 신○○외 4,702	강릉도립미술관 강릉유치를 위한 건의	'07. 9. 21.	'07. 10. 22.	참고	관건
59	강릉시 정○○외 10	강원도립미술관 영동권 건립 요청	'07. 9. 27.	'07. 10. 22.	참고	관건
60	춘천시 최○○	택시기사가 손님 폭행 후 도주	'07. 9. 28.	'07. 9. 28.	불수리	

진정번호	진 정 인	건 명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분야
61	원주시 성○○외 100	원주시 북원주분기 송전선로공사 강제수용재결 및 공사강행의 부당성	'07. 10. 8.	'07. 10. 16.	이첩	
62	평창군 김○○외 130	태기산 풍력 발전 단지 건립 반대	'07. 10. 12.	'07. 11. 9.	불가(정책)	산경
63	태백시 홍○○	축사 옆 인근지역 탄광설립으로 인한 식수오염 대책 요구	'07. 10. 18.	'07. 11. 19.	참고	산경
64	강릉시 김○○외 21	강원도립미술관 강릉유치를 위한 건의문	'07. 10. 22.	'07. 10. 22.	불수리	
65	평창군 원○○외 1,048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 건의	'07. 10. 22.	'07. 11. 23.	참고	산경
66	강릉시 박○○외 102	주공 강릉 입암7차 국민임대주택 건설반대	'07. 10. 25.	'07. 12. 6.	참고	관건
67	춘천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학교 수업지장	'07. 10. 30.	'07. 11. 19.	참고	교사
68	인제군 엄○○외 124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촉구	'07. 11. 1.	'07. 12. 4.	참고	산경
69	고성군 최○○외 100	북천강 하천제방 보강 축조 공사	'07. 11. 1.	'07. 11. 6.	해결	
70	춘천시 양○○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및 피해보상 요구	'07. 11. 5.	'07. 12. 6.	참고	산경
71	춘천시 민○○	송전철탑 시설 반대에 대한 협조	'07. 11. 5.	'07. 11. 19.	해결	산경
72	속초시 조○○외 1,600	설악동 거주하는 전체 주민에 대하여 이자 보전요구	'07. 11. 9.	'07. 12. 4.	불가(정책)	관건
73	김○○(인터넷 민원)	신탄리~의정부 구간 환승불편 해결 및 운임경감 요구	'07. 11. 12.	'07. 11. 19.	불수리	
74	정○○(인터넷 접수)	송전철탑을 마을을 우회하여 건설할 것을 요구	'07. 11. 19.	'07. 12. 4.	참고	송전
75	춘천시 김○○외 28	춘천시와 홍천군 경계의 군도 비포장 구간 도로 확포장 요구	'07. 11. 28.	'08. 1. 8.	참고	관건
76	속초시 최○○외 32	설악동 이자보전 조속히 집행 협조요청	'07. 12. 5.	'07. 1. 8.	참고	관건
77	원주시 ○○스님	치악산 구룡사 문화재 수장고 신축예산 지원요청	'07. 12. 5.	'08. 1. 9.	불가(정책)	관건

진정번호	진 정 인	건 명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분야
78	속초시 권○○	송전선로 공사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공사시행 요구	'07. 12. 11.	'07. 12. 28.	참고	송전
79	정선군 권○○외 9	송전선로지역 주민 피해대책 촉구 협조 요청	'08. 1. 17.	'08. 2. 11.	참고	송전
80	태백시 박○○	마을의 노후 교량 교체 요구	'08. 2. 22.	'08. 4. 21.	해결	기행
81	강릉시 김○○	5.31선거당시 공약에 대한 진행 및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 요구	'08. 2. 22.	'08. 3. 3.	참고	직접(의원)
82	인제군 최○○외 14	인제군 용대리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매표소 이동	'08. 2. 26.		해결	직접(의장)
83	홍천군 변○○외 50	불법전용농지를 원상회복 하지 않고 현 상태로 게이트볼장 사용 요청	'08. 3. 5.	'08. 4. 21.	해결	산경
84	춘천시 이○○외 236	남산면 수동리 골프장 조성반대	'08. 3. 19.	'08. 4. 21.	참고	산경
85	인제군 채○○	송전탑, 선로 건설시 마을주민과 협의 후 공사시행	'08. 4. 4.	'08. 4. 21.	해결	송전
86	춘천시 하○○	춘천시 아동범죄 예방대책 요구	'08. 4. 15.	'08. 4. 29.	참고	교사
87	인제군 김○○	인제고려병원 공중보건의 추가배치 요구	'08. 4. 18.	'08. 5. 15.	해결	교사
88	원주시 오○○	송전선로 경과지 비교검토서 백지상태에서 재작성 요구	'08. 4. 23.	'08. 5. 15.	참고	송전
89	인제군 방○○	인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08. 5. 6.	'08. 6. 17.	참고	관건
90	화천군 김○○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08. 5. 22.	'08. 6. 20.	참고	송전
91	춘천시 경○○외 5	환동해출장소장 후임자 전문직 인사발령 요구	'08. 5. 14.	'08. 6. 17.	참고	기행
92	철원군 김○○외 27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송전선로 노선 변경 요구	'08. 5. 15.	'08. 6. 18.	참고	송전
93	양양군 김○○	마을 부녀회장들에 대한 지원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기행
94	양양군 김○○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교사
95	양양군 이○○	경로당 운동기구 및 지원금 인상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교사
96	양양군 전○○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원규제 완화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교사

진정번호	진 정 인	건 명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분야
97	양양군 김○○	농업용 전기 '갑 등급' 시설분야 확대 적용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산경
98	양양군 김○○	해변가 철조망 철거 요구	'08. 5. 16.	'08. 6. 20.	해결	산경
99	양양군 김○○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 확대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산경
100	양양군 김○○	설악산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관건
101	양양군 이○○	시가지 침수방지 공사지원 요구	'08. 5. 16.	'08. 6. 20.	해결	관건
102	양양군 이○○	한계령 진입국도 확장공사 추진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관건
103	양양군 이○○	도내 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관건
104	양양군 김○○	폐철광지역 폐공가 철거 요구	'08. 5. 16.	'08. 6. 20.	해결	관건
105	양양군 이○○	설악산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관건
106	양양군 이○○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요구	'08. 5. 16.	'08. 6. 20.	참고	관건
107	태백시 장○○	환경영양평가 대상사업의 토석 채취 범위 시정요구	'08. 5. 22.	'08. 6. 18.	참고	관건
108	서울시 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오대산 보관 요구	'08. 5. 27.	'08. 6. 20.	참고	관건
109	고성군 함○○외 17	국회연수원 고성건립 촉구	'08. 6. 9.	'08. 6. 20.	참고	기행
110	서울시 구○○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	'08. 6. 16.	'08. 7. 4.	참고	관건
111	동해시 이○○	수산동물 질병관리법 제정 이전 상태로 활게류 수입 요구	'08. 6. 18.	'08. 7. 14.	참고	산경
112	평창군 군의회 의장	감자종자보급소 존치 요구	'08. 6. 18.	'08. 7. 14.	참고	기행
113	평창군 김○○	감자종자보급소 유치 요구	'08. 6. 23.	'08. 6. 30.	참고	기행
114	강릉시 정○○	지방세법조례안 도의회 의결시기에 대한 질의	'08. 6. 24.	'08. 6. 27.	참고	기행

3. 청원처리

청원은 제7대 전반기중 1건이 제출되어 처리되었다. 2007년 6월 14일 개인택시조합 태백시 지부장 정연철 외 417인이「강원랜드 사업장에 대한 택시 공동 구역 운영」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제177회 강원도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2007. 7. 18.)에서 본 청원을 심의한 결과 “택시운송사업장의 변경은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장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의건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함에 따라「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의거 도지사에게 이송하였다.

제3장

연찬회 · 교류 · 행사

제 1 절

연찬회, 간담회 등

1. 도의원 연찬회

가. 2006년도 의정 연찬회

2006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강원도립대학에서 도의원 40명 및 사무처 간부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 연찬회를 가졌다.

1일차는 이기순 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국회사무처 최민수 전문위원과 박봉국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원장으로부터 각각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각종 사례 중심의 깊이 있는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도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산 분야에 대하여 박석규 강원도립대 컴퓨터응용학과 교수로부터 인터넷 활용 방법 등의 정보화 교육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진행한 양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었다.

2일차에는 양양 양수발전소를 견학하고 연찬회를 마무리 하였다.

나. 2007년도 의정 연찬회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에서 도의원 37명 및 사무처 간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 연찬회를 가졌다.

이기순 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국회사무처 윤진훈 전문위원과 최민수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으로부터 각각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일문일답사례 동영상을 시청 하였다

2. 의원 총회

가. 2007년도 의원 총회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속초 농협연수원에서 도의원 40명 및 사무처 간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의원총회를 가졌다.

의원총회는 박명서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이기순 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이준연 운영위원장의 2007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안건별 토의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일차에는 속초 소재 한화리조트에 있는 KBS 드라마 대조영 세트장을 시찰하고 의원 총회를 마무리 하였다.

나. 2008년도 의원 총회

2008년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양양 솔비치 대명콘도 피카소홀에서 도의원 40명 및 사무처 간부 9명, 관계 직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의원 총회를 가졌다.

의원 총회는 박명서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이기순 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의사담당관의 2007년도 의회운영 결산보고에 이어 이준연 운영위원장의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안건별 토의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일차에는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복원 현장을 시찰하고 의원 총회를 마무리 하였다.

3.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

가. 2006년도 연찬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준연)는 2006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설악한화리조트(속초시 소재)에서 운영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및 당면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의회 제도 및 운영 등을 연찬하기 위하여 열렸다

1일차는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수행 기법에 대한 특강과 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등 당면 사항 논의가 진행되었고, 2일차에는 국제관광정보센터를 시찰하고 연찬회를 마무리 하였다.

나. 2007년도 연찬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준연)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 2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의정 기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찬을 통하여 의정 활동에 활력을 증진하고, 당면 현안 사항 및 향후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열렸다.

1일차는 지방의정 기법 관련 연찬과 당면 현안과 관련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2일차에는 의회운영 관련 협의의 시간을 갖고 연찬회를 마무리 하였다.

4.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

가. 2006년 하반기 연찬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선)는 2006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춘천

수렵장에서 기획행정위원 및 전문위원, 소관 실 · 국장, 강원발전연구원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위원회 소관 9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 사항 보고 청취를 통해 향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토론과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1일차는 국제협력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미래기획단, 동계올림픽유치단,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 사항 청취를 하였고, 2일차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일정에 대한 협의의 시간을 갖고 연찬회를 마무리 하였다.

나. 2007년 하반기 연찬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선)는 2007년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원주 오크벨리에서 기획행정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상반기 의정활동 결산 및 9월 임시회 · 하반기 주요일정 등에 대해 토론하기 위하여 열렸다.

1일차는 2007년도 상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 활동을 결산하고 2007년도 하반기 의정 활동 방향과 9월 임시회의(제178회) 일정, 의정보고서 제작을 협의하였으며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검토하였다. 2일차에는 연찬회 종합 정리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 하였다.

다. 2008년 상반기 연찬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선)는 2007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 솔비치리조트에서 기획행정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첨단 소방안전시설 운영 실태 및 오색 수해 복구 현장을 시찰하였다.

5. 교육사회위원회 연찬회

가. 2006년 하반기 연찬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기남)는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강릉시 강원도 교직원수련원에서 교육사회위원 및 소관 실국장,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향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토론과 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1일차는 보건복지여성 분야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2일차에는 강원도립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사회위원 간담회 시간을 갖고 마무리 하였다.

나. 2007년도 연찬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기남)는 2007년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강릉시 강원도 교직원수련원에서 도의장, 교육사회위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향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토론과 위원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1일차는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2일차에는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 마무리 하였다.

6. 산업경제위원회 연찬회

가. 2006년도 연찬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동해 망상

오토캠핑리조트에서 산업경제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제7대 강원도의회가 구성된 후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 정립과 상임위의 효율적 운영방향,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핵심전략 토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나. 2007년 하반기 연찬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틀간 양양 에어포트콘도텔에서 산업경제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하반기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첫째날은 동해안 연안침식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제7대 강원도의회 개원 후 지난 1년간의 의정성과 및 2007년도 하반기 상임위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둘째날은 연안침식 발생현장, 해양심층수 개발현장 및 요트마리나 시설 등 현안과 관련된 주요 현지사업장을 시찰하였다.

다. 2008년 상반기 연찬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틀간 홍천대명비발디파크에서 산업경제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상반기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첫째날은 강원도 군납농가대표와 도내 농수산물 군납사업의 합리적 방향 논의, 친환경 유기농업 국제규격 주요내용과 향후 실천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 집행부 당면현안사항 보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둘째날에는 (주)메디슨, 태양3C(주) 및 느티나무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기업 및 직장보육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7. 관광건설위원회 연찬회

가. 2006년 하계 연찬회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철)는 2006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설악파크호텔에서 제7대 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하계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CMI대표 전미옥 씨를 초청하여 “브랜드관리와 리더쉽”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으며 도의원의 이미지 브랜드화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박호창 의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축제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축제 관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집행부 간부와의 간담 및 실·국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나. 2007년 하계 연찬회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와 발전과제 등을 연찬하여 최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건설위원회 2007년도 하계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무, 관광산업 분야, 환경관리 분야 등에 대한 연찬으로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의 발전방향 제시로 시대에 부응하는 상임위원회 의정상을 구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다. 2008년 신년 연찬회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철)는 2008년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2일간 강원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신년연찬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의정활동 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은 이후에, 도 대표 홍보동

영상 시사회, 도로관련 SOC사업 국비확보 현황과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시설 건립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받고 토의 실시하였다.

연찬회 일환으로 변화관리의 창안자인 서 근석 국제능력개발원장으로부터 특강을 통하여 변화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1월 17일(목)에는 2008년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도내 각종 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

가. 2006년도 연찬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을권)는 2006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의회 대회의실에서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연찬회 및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강원도 및 교육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예산심사기법 관련 전문가 특강과 의정활동 전략 강의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열렸다

1일차는 국회사무처 정재룡 이사관의 예산심사기법 특강과 국회사무처 이율복 연수국장의 예결위운영관련 의정활동전략 강의, 강원도교육청의 '07년도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개요 설명을 진행하였다 2일차에는 강원도청의 '07년도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개요 설명을 듣고 연찬회를 마무리 하였다.

나. 2007년도 연찬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일)에서는 2007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제7대 강원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보다 더 심도 있고 효

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렸다

1일차는 신해룡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였으며, 강원도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2008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과 예산 개요, 재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문답 시간을 가졌다.

2일차는 예결위 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연찬회를 마무리 하였다.

다. 2008년 상반기 연찬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김동일)에서는 2008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연찬회는 2008년도 당초예산안 의결이후 조직개편과 자체사업경비 15% 절감 등 사유로 제출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법 연찬 및 예산안 사전설명을 위하여 열렸다

1일차는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로부터 지방 예산안 심사기법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였으며, 강원도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과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일차는 철원지역 재래시장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탐방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찬회를 마무리 하였다.

9. 특별위원회 활동

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2014년 동계올림픽의 강원도 평창 유치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06년 7월 21일 본회의 의결로서 상임위별 3명씩 총 12명의 의원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이인섭, 부위원장 박호창)에서는 해수욕장, 전국체전 및 도민체

전 등 각종 행사 장소를 찾아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는 2006년 10월 20일 2014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지지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13일 까지 16일간 2014 동계올림픽의 유치염원과 범 도민 유치열기 확산의 의지 결집을 위한 도의회 및 시 · 군의회 공동 릴레이 거리홍보 활동을 전개 하였다. 거리홍보는 국도와 지방도 843km를 걸었고 도 · 시 · 군의원 209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2007년 3월 27일에는 동계특위 위원과 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D-100일 전국 합수 합토 기원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통계특위 위원들이 2007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3대 명산(백두산, 태백산, 한라산)과 2개의 명섬(울릉도, 백령도) 현지에서 채토, 채수한 것을 봉송하여 사용하였다.

동계특위는 2006년 7월 21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활동하는 동안 2회의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6회의 홍보 캠페인, 10회의 각종 간담회 및 회의 참석, 탄원서 송부, IOC총회 등 27건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주관 하였고 경기장 시설 및 예정부지 방문 등 총 44회의 현지 활동을 하는 등 2014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6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개최지 결정을 위한 IOC총회에서 러시아의 소치가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나.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

2006년 7월 14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피해 원인 규명 및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06년 7월 21일 본회의 의결로서 상임위별 2명씩 총 8명의 의원으로 호우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융길, 부위원장 홍건표)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빠른 복구 지원을 위하여 3차례의 특위 임시회의 개최, 3차례의 현지 실사를 하였고 의장단과 함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특별재난지역선포와 관련 강원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려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8월 10일 춘천, 강릉, 영월, 화천, 철원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기도 하였다.

특히 2006년 7월 25일 도의회 의원과 사무처직원 모두는 인제, 평창 지역에서 제방 쌓기 등 수해 복구를 위한 일일봉사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2006년 8월 1일에는 수해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서울 명동 등에서 도내 수해 지역 관광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대언론 홍보도 함께 진행하여 뉴스의 초점이 되기도 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강원도의 피해 실상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우특위의 활동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고 급감하던 관광객들도 차츰 늘어나 도내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7월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10월 22일~23일 이틀 동안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강풍과 집중호우가 내려 해안지역과 항구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도민들이 또 한번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호우특위의 최선을 다한 복구 지원 활동은 피해 주민들의 생업 현장으로의 빠른 복귀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 송전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강원도내 고압 송전선로 공사에 따른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대책 등을 위하여 ‘07년 10월 25일 본회의 의결로서 상임위별 2명씩(직무소관 상임위원회 1명 추가배정) 총 9명의 의원으로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임용식, 부위원장 김양호)에서는 도내 송전탑 관련 현안 파악과 함께 ‘08년 말까지 활동하게 될 기본계획을 채택하여, 송전탑 피해지역 시찰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08년 2월 28일부터 이틀간 도내 송전탑 설치지역 중 평창군, 인제군 지역을 직접 찾아가 송전탑 피해지역을 둘러보며 지역주민으로부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송전탑 설치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을 ‘08년 3월 20일 채택하여 관련 정부 부처로 발송하였다.

라. 댐 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도내 소재 소양강댐, 도암댐, 한탄강댐 건설관련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08년 2월 19일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별 3명씩 총 12명의 의원으로 댐 주변지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최경순)에서는 3개 댐과 관련한 현안을 파악하고 '09년 2월말까지 활동하게 될 기본계획을 채택하여, 댐 현지 시찰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08년 4월 24일 도암댐 현지시찰에서는 지역의 댐관련 피해현황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생생하게 듣고 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였고, 국토해양부의 한탄강댐 건설 가시화와 경기도의 댐건설 찬성에 대하여 한탄강 댐 건설 반대 건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하였다.

10. 의원연구회 활동

가.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

강원도내 기업유치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과 기업유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총 15명 의원으로 구성된「기업유치지원을 위한 강원도의원 연구회」(회장 이성기, 간사 김대천)는 2006년 9월 14일 등록하고, 10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구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2006년에는 11월 15일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의 기업유치 현황 및 이전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업인의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한 도내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업유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부산 신항만과 컨테이너부두,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항만 배후시설 조성사업장 등을 돌아보았다.

2007년에는 2월 13일 연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 15일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도연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홍보를 위해 2007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석하였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일본계 회사(로드웨이, 아이웨이브) 관계자 5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9월 11일 도청 신관대회의실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강원도 설명회에 기·강·연 이성기 회장이 참석하여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연구회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1월 14일 연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활동 향상을 위하여 의정연수회를 다녀왔다. 그리고 3월 14일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제24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에 기·강·연 김대천 간사가 참석하여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지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나. 민생 114 강원도의회 연구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정치실현을 연구 목적으로 총 19명 의원으로 구성된 「민생114 강원도의회 연구회」(회장 심재영, 간사 김동일)는 2006년 12월 15일 등록 후, 2007년 3월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강원도민의 민생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기능 향상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연구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2007년에는 3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간 활동계획 수립과 공동의제 선정 및 민생 리포터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4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연구회 연구과제별 조편성과 자료수집 방법 및 민생현장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2008년에는 2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간 활동계획 및 민생현장시찰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전년도에 일궈온 연구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3월 3일부터 이틀간 민생현장 시찰을 하였으며, 3월 20일 대회의실에서 민생현장 시찰 결과보고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나타난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특히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양일간 동해안 및 폐광지역 일대에 펼쳐진 민생현장시찰에서 연구회는 민생을 두루 파악하기 위해 힘썼으며, 도민의 민생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정별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1일차인 3월 3일에는 주문진항 및 주문진 수산시장 시찰, 강릉

수협 회의실에서 수협 및 수산시장 관계자와 면담, 북평산업단지내 수산물 가공공장 견학 및 수산물 가공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2일차인 3월 4일에는 태백문화원에서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관계자와 재가진폐환자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간담회와 영월의료원에서 진폐병동관리 실태 확인과 진폐 환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요구 사항을 청취하였다.

현지 활동을 통한 도민 의견은 집행부와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다. 도민 삶의 질과 중심 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잡힌 중심의정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1940년대생 총 12명 의원으로 구성된 「도민 삶의 질과 중심의정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회장 김영칠, 간사 홍건표)은 2007년 2월 13일 등록 후, 4월 1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연구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구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2007년도에는 6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연간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12월 21일부터 이틀간 연구회 연찬회를 열었다.

특히 2007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양일간 철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는 DMZ시찰과 전문가 특강, 2008년 활동계획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일정별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 첫날인 12월 21일에는 3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학도병 전적 기념관 설치 사업협의와 위문금을 전달하였고 평화전망대 및 DMZ 시찰, 철원지역 연고 기업인 (주)그래미 남종현 회장의 특강을 듣고, 연구회 자체회의를 가졌다.

자체회의에서는 연구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유의견을 나누었다. 둘째 날인 12월 22일에는 철원지역 소공원 실태 확인과 (주)그래미 본사 공장 견학을 하여 시설 및 제품 생산라인을 견학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5분 자유발언의 합리적 운영 제언” 등 의정과 관련한 연구회의 의견을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 전달하여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제2절

국제 교류 활동

1. 강원도의회 해외 방문

가. 도의회 대표단 일본 미야기현의회 방문

○ 기　간 : 2006년 11월 1일 ~ 11월 4일

○ 방문단 : 도의원 9명

- 이기순 의장, 한일국제교류협회 이성기 회장, 박호창 부회장, 진기엽 의원, 조영기 기획행정부위원장, 김대천 의원, 박융길 의원, 이영덕 의원, 정을권 의원

○ 주요내용

- 양 도·현의회 간 교류 증진 방안 및 도·현청 간 교류 협력 논의
- 미야기현 주요 기관 방문 및 시설 시찰(산업기술센터, (주)일본세라믹, 센다이 핀란드건강복지센터, 특별양호노인홈, 가네사키 어묵관 등)
- 현의회 의장 주최 만찬, 일한친선 마야기현의회 의원연맹 주최 만찬 등

나. 도의회 대표단 중국 방문

○ 장　소 : 중국 지린성,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 기　간 : 2007년 5월 30일 ~ 6월 4일

○ 방문단 : 도의원 2명(이기순 의장, 이강덕 의원)

○ 주요내용

- 양 의회 간 교류 활성화 협의 및 상호 방문 사전 협의 등

다. 도의회 대표단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 기　간 : 2007년 8월 30일 ~ 9월 3일
○ 방문단 : 도의원 8명
- 이기순 의장, 백선열 부의장, 박상수 산업경제위원장, 남경문 산업경제 부위원장, 권순일 관광건설 부위원장, 고진국 의원, 김양호 의원

○ 주요내용
-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및 교류 협력 방안 협의
- 지린성 주요 기관 방문 및 시설 시찰(장춘 하이테크기술개발구, 일기자동차공장, 강원도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등)
- 지린성장 예방, 인민대표대회 주최 만찬,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참가 등

라. 도의회 대표단 중국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 기　간 : 2007년 10월 8일 ~ 10월 12일
○ 방문단 : 도의원 6명
- 최재규 부의장, 정충수 한중교류협회장, 김기남 교육사회위원장, 황철 교육사회부위원장, 임용식 의원, 장세국 의원,

○ 주요내용
-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및 교류 협력 방안 협의
- 안후이성 주요 기관 방문 및 시설 시찰(허페이 하이테크기술개발구, 랑야산 등)
-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및 외사판공실 주최 만찬 참석 등

마. 도의회 대표단 러시아 연해주의회 방문

○ 기　간 : 2007년 10월 29일 ~ 11월 2일
○ 방문단 : 도의원 8명
- 이기순 의장, 이병선 기획행정위원장, 최경순 의원, 최원자 의원, 유순임 의원, 김동자 의원, 이기찬 의원, 김시성 의원

○ 주요내용

- 연해주의회 의장 예방 및 교류 협력 방안 협의
- 연해주 주요 기관 방문 및 시설 시찰(태평양 어업 및 해양지 학술연구소, 선박통제관리센터, 고려인 정착촌 등)
- 연해주 부지사 예방, 연해주의회 의장 주최 만찬 등

2. 외국의회 등 강원도의회 방문

가. 일본 토야마현의회 대표단

○ 기　간 : 2006년 10월 10일

○ 방문단 : 20명 (요코다 야스히로 현의회 일한우호연맹회장, 토야마현내 시의원 11, 정의원 4, 직원 4 등)

○ 주요내용 : 도의회 및 도청 예방, 도의회 의장 주최 오찬 등

나.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기　간 : 2006년 11월 2일 ~ 11월 3일

○ 방문단 : 8명(마펑쥔 부주임, 양샤오밍 비서장, 위원 3, 인민정부 3)

○ 주요내용

- 도의장 및 행정부지사 예방, 한중국제교류협회장 주최 오찬
- 애니메이션박물관, 산림박물관, 소양댐 등 시찰

다. 중국 지린성 정치협상위원회 대표단

○ 기　간 : 2007년 4월 10일 ~ 4월 11일

○ 방문단 : 10명(위엔위시우 단장, 조우지안후아 정협 제안위원회 주임 등)

○ 주요내용 : 도의회 예방 및 견학, 한중국제교류협회장 주최 오찬 등

라.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

○ 기　간 : 2007년 4월 23일
○ 방문단 : 5명(스코로보가토바 이리나 부지사, 레바 빅토르 주의원 등)
○ 주요내용 : 도의회 예방, 도의장 주최 오찬 간담회 등

마. 중국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기　간 : 2007년 5월 24일 ~ 5월 25일
○ 방문단 : 6명(뤼쩐판 부비서장, 띵따오롱 주임, 차이씨우렌 전국인민대표대회 안후이성 대표 등)
○ 주요내용 : 도의회 예방, 가나안농군학교, 춘천환경자원사업소 방문

바. 일본 나가노현의회 대표단

○ 기　간 : 2007년 6월 5일
○ 방문단 : 34(현의회 의원 19, 민단간부 15)
○ 주요내용 : 도의회 예방 및 교류 협의, 도의장 주최 오찬, 설악산 방문

사. 중국 지린성 정치협상위원회 대표단

○ 기　간 : 2007년 6월 12일
○ 방문단 : 5명(쑨야오팅 부주석, 한궈이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 주요내용 : 도의장 예방 및 환담, 새농어촌건설운동 모범지역 시찰 등

아. 일본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 기　간 : 2007년 11월 4일 ~ 6일
○ 방문단 : 18(다카하시 쵸우이 의장 등 의원 12, 민단간부 1 등)
○ 주요내용 : 도의회 예방, 한림대학교, 강원랜드, 테크노벨리 방문 등

자.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기　간 : 2007년 12월 2일 ~ 12월 4일
○ 방문단 : 6명(탕시엔치앙 부주임, 주팅스 환경보호위원회 주임 등)
○ 주요내용
- 도의장·도지사 예방, 의장 주최 만찬, 한중국제교류협회장 주최 오찬
- 하이트맥주 강원공장 시찰 등

차. 일본 돗토리현의회 의장 일행

○ 기　간 : 2007년 12월 9일 ~ 12월 10일
○ 방문단 : 7명(데츠나가 유키노리 의장, 히라이 신지 지사, 민단단장 등)
○ 주요내용 : 도의장 예방, 도지사 주최 만찬 등

카. 필리핀 세부주지사 일행

○ 기　간 : 2008년 2월 18일 ~ 2월 21일
○ 방문단 : 11명(가르시아 지사, 아그레스 A 막팔레 주의회 부의장 등)
○ 주요내용 : 도의장 예방, 도-세부주 자매결연식, 애니메이션박물관 시찰 등

타. 중국 지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

○ 기　간 : 2008년 4월 13일 ~ 4월 15일
○ 방문단 : 6명(탕시엔치앙 부주임, 자오빙저 비서장 등)
○ 주요내용 : 도의장·도지사 예방, 하이트맥주 강원공장 시찰 등

파. 일본 돗토리현 교육장 일행

○ 기　간 : 2008년 5월 14일
○ 방문단 : 7명(나카나가 히로키 교육장, 다나카 노리야스 총무과장 등)
○ 주요내용 : 도의회 예방, 강원도교육청 방문 등

하. 중국 길림일보사 대표단

○ 기　간 : 2008년 6월 24일
○ 방문단 : 7명(리우춘 부사장, 자오페이광 편집실 주임 등)
○ 주요내용 : 도의장 예방, 강원일보 방문 등

3. 해외 연수

가. 기획행정위원회

1) 개　요

○ 기 간 : 2007년 4월 23일 ~ 5월 3일 (11일)
○ 장 소 :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4개국
※ 포르투갈 리스본 의회,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경찰청, 프랑스파리 라데팡스・쌍머흐시청, 네덜란드 신・재생에너지 제도 비교 등
○ 인 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이병선), 직원 2명

2) 연수결과

① 포루투갈

○ 리스본 시의회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본업이 따로 있으며, 정치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시의회는 특별한 의사당이 없었고, 의사당으로 쓰는 건물은 평상시에는 극장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며, 본 회의가 있을 경우 의사당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와 본회의장 배치가 다른 점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본회의장 앞 쪽에 의원들과 마주보며 일렬로 앉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단상과 의원석의 높이를 비슷하게 설치하였다

○ 자연스런 경관조성

포르투갈은 자연경관을 잘 보존해 놓은 국가이다. 시내에도 푸른 잔디밭이 도처에 조성되어 있으며,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정구역 별로 주택의 색깔이 거의 통일되어 같은 색깔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다소 단순하고 식상한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시사점이 될 만 했다.

○ 간판정비

대부분의 유럽도시가 그렇지만, 번잡한 시내 한 가운데에도 건물에 돌출된 간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시내에 수많은 간판, 현수막 등이 난잡하게 조성되어 도시경관을 헤치는 주범으로 여겨지는데, 수많은 건물들이 있음에도 간판은 최소한의 규모로 조성되어 도시가 깨끗하고 정갈해 보여 도시경관 형성에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도(道) 역시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등의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러한 유럽의 제도는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② 스페인

○ 마드리드 자치경찰청 방문

스페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구분되어 있었다. 지방경찰은 대부분 기초자치정부의 경찰로 구성되며 국가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자치경찰은 자치정부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모든 기초자치정부에 대해 의무적인 자치경찰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었다. 자치주 별로 다양한 자치규약 체제와 자치주경찰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각 기초자치정부의 조례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마드리드 자치경찰의 순찰차 내부 견학과 함께 음주측정 방식 등에 대해 견학하였다. 경찰관들이 주민과 아이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에 자치경찰제야말로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안전과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마디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 도시개발

스페인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의 거리에 서 있으면 마치 중세도시의 한 가운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그 정도로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로마시대 건물들이 아직도 시내에 남아 있는데 건물의 외관 변경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내부 리모델링만 가능하여 외부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다.

③ 프랑스

○ 신도시 라데팡스(수호구역) 견학

파리의 신도시 라데팡스는 파리 교외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파리의 중심지역에 있는 튈르리 공원, 콩코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등은 라데팡스 지구까지 일직선으로 뻗어 도시를 관통하는 축을 형성한다.

라데팡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현대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시내 중심부에서는 건축물 보호지역이라 대규모의 신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크게 상업지구와 주택지구, 공원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근교에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단순 도시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라데팡스는 프랑스의 또 하나의 상징물인 신 개선문을 중심으로 첨단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어 단순한 도시기능 뿐 아니라 그 기능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신도시와는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다.

○ 쌍머흐 시청 방문

쌍머흐 시는 파리 인근에 있으며 프랑스 자치조직 중 최하위인 꼼뮨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이다. 4월 30일 오후 2시 시청을 방문하여 뮬라흐 부시장을 예방하고 쌍머흐 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견학하였다.

시의 인구는 약 75,000명 정도이며, 의원내각제의 정치 체제로 운영되고 49명의 의원이 있어 그 중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는 데 현재 한명이 30년째 의장과 시장직을 맞고 있다. 의원 중 14명이 부의장 겸 부시장 역할을 하는데, 시청 내부에 예식장이 있어 돌아가면서 주례를 보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비교적 프랑스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으나 시청운영에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청안에 예식장을 운영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각종 도서관 등의 시설은 시청이 언제든지 열려있어 공무원들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④ 네덜란드

○ 풍력발전단지

네덜란드도 풍력단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네덜란드의 지형적인 특성상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미관과 장소의 제약, 기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육상보다는 해상이 선호되고 있다.

현재 약 13곳에서 가동하고 있으며, 1년에 24만 가구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연간 50만 4,000톤가량 감소시키는 효과와 이를 환산하면 47억원 상당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다.

특이한 것은 가정에서 전기를 주문할 수가 있었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쓸지,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할 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1) 개 요

○ 기 간 : 2006년 10월 31일 ~ 2006년 11월 7일 (8일)
○ 장 소 :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4개국
※ 아르카디아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방문
○ 인 원 :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8명(위원장 김기남), 직원 2명

2) 연수결과

이들 기관의 방문을 통해 얻어내 성과는 당장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나 아이

디어를 얻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와는 제도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 활동에 있어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면들을 소관 분야에서 적용해 나가기 위하여 해외연수 기간 중 방문했던 기관들을 통해 얻어낸 사례들과 여러가지 특징적인 정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위스의 교육·사회복지 제도를 분석해보면, 1848년 이전에 이미 초등교육 제도가 정비되었고, 74년에는 의무 교육 제도가 확립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4개의 공용어를 위한 어학 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사회복지 제도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환자, 임산부, 일시적 지체장애자에게 무상치료 또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수당을 주며, 노인, 환자, 영구적 지체장애자, 유족 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실업보험 가입은 급여를 받는 모든 고용인들에게 의무적이다. 폭넓은 식이요법과 함께 우수한 의료진과 현대적 병원 시설이 국민 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아르카디아 양로원은 시소속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68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하여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약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 소유로 시설과 장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노인분들 개개인을 위한 매일 매일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생활하게 된다.

개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 1명당 한달 치료비 약 4,000 CHF, 숙식 및 거주비 등을 포함해서 약 8,000 CHF 총합계 12,000 CHF (한화 약 900만원 정도) 되며, 이런 개인 양로원은 주로 부자 노인들이 거주하는 특수 양로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강원도도 좋은 지역적 환경 여건에 비추어 중류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할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두번째로, 프랑스는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 교육 제도(만 6세에서 16세까지)와

전문 기술 교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와 같은 입시 혼란과 대학병은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혁명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교육은 공교육 체제로 국가가 주도하는 한편,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해 주는 사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자유, 무상, 무종교, 의무(10년, 6-16세) 및 국가에 의한 자격과 학위의 관리라는 5가지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복지정책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받는다. 일찍이 시작된 시민혁명, 그로 인해 국민정서 깊숙이 자리잡은 국민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누구든지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벨기에는 각각의 언어연방 정부가 있어 각 정부가 자신의 언어를 통한 교육을 전담한다. 네델란드어는 플랜더스연방이, 불어는 왈론연방이 브뤼셀을 포함한 지역 근방은 두 연방 모두가 참여하여 교육을 관장한다.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무료교육이고 학부모들은 방과후 특별 활동비와 급식비등을 부담하게 된다.

벨기에는 유럽 최고의 보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약국과 응급처치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 시스템자체는 국가 보험과 사립보험으로 구분된다. 벨기에 국가 보험인 Mutuelle 시스템의 장점은 자신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의사, 개인병원, 종합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비는 국가보험은 미리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제하고 차액을 지불하면 되고 사립보험의 경우에는 먼저 전체 금액을 지불한 후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서 환급금을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약시 환급 비용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병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전문의를 예약하여 진료받을 수도 있고 직접 응급실을 통하여 당직의의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일반의를 거치지 않는 이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벨기에의 의료시스템의 편리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교육제도의 특징은 교육이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 외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 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립학교일지라도 전액 보조를 받는다.

의무교육기간은 7~16세의 10년간이다. 초등 교육은 9년(4～12세), 중등 교육은 7년(13~18세)이고 그 다음으로 전문 교육, 고등 교육이 있다. 초등 과정에서는 상급부터 영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으며, 중등 과정에는 일반학교, 대학진학학교, 직업학교 3종류가 있는데, 이중 6년간의 대학 진학 과정을 마친 사람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네덜란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지출이 여전히 높아서 네덜란드의 헬스케어 및 복지 부문 예산 지출액은 2004년에 60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2003년도에 비해 4.3% 증가한 것이라고 네덜란드 통계청이 밝혔다. 네덜란드의 복지 부문 지출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년평균 10% 수준을 기록해 왔으나 200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지 지출 예산의 삭감 노력으로 복지 부문 지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3%의 증가율은 임금 수준 상승에 동반된 불가피한 실업급여 지출 증가분이 반영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개선과 예외적 의료비용 보전법의 적용 강화에 따라 복지 혜택을 대폭 삭감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 기술된 내용과 같이 유럽의 4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2006 교육사회위원회 해외 연수를 통해 얻어낸 내용들은 향후 의정 활동을 통해 발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1) 개 요

○ 기 간 : 2007년 3월 26일 ~ 4월 4일(10일)

○ 장 소 : 이집트, 그리스, 터키 등 3개국

※ 이집트 국제농업센터, 고린도 과수 농장, KUMKAPI 수산 시장 등

○ 인 원 :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박상수), 직원 2명

2) 연수 결과

이번 해외 연수는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 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수행능력 함양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첨단 농·수산업의 진흥 대책 등 농어촌의 자립역량을 제고하고, 강원도와 방문국간 국제 교류 기반 구축 및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 이집트 국제농업센터 (EICA)

EICA의 소장과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는 마음은 따뜻해 보였으나, 정보화 교육 장비의 경우 486수준의 PC가 쓰이고 있었으며, 교육생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 온 훈련생들이었다. 북한 유학생도 2명이 있었는데 카이로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EICA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농업 부문 전문 지식 및 기술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농업 인재 훈련 등 인력육성기관으로,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던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곳이었으나, 비록 후진국을 상대로 농업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국제적 영역을 넓혀가는 측면은 우리도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

○ 이집트 카이로 칸칼릴리 재래시장

카이로 동쪽에 위치한 칸칼릴리 시장(Khankalili Bazzar)은 한국의 남대문 시장,

용산 전자 상가, 노량진 수산 시장을 섞어놓은 듯 했고, 혼잡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호객행위도 심했다. 하지만 쇼핑 품목이 다양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실제적인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칸칼릴리 시장은 600여 년 전부터 이집트의 대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기능해 오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과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묵던 숙소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

지금도 장신구, 카펫, 향신료, 골동품, 낙타, 수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보석으로 장식된 펜던트에 상형문자로 이름을 새겨주는 곳도 있다. 예전엔 칸칼릴리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우리가 칸칼릴리 시장을 찾은 것은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경우 대형마트로 빼앗긴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기 위한 특성화, 차별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집트는 전국토의 95%가 사막으로서, 나일강 하류에 형성된 델타지역 등 주요도시에 6,700만 국민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비집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아직 현대화된 대형마트 입점이 문제화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재래시장처럼 사람 구경하기 힘들다는 걱정은 있을 수 없었다.

○ 그리스 고린도 과수농장

그리스는 미국처럼 대단지 과수원이 거의 없고 모두 가족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과수원이라는 가이드 안내에 한국처럼 1~2ha 규모로 생각하고 방문했다.

우리가 방문한 과수원 주인은 고린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제법 큰 식당을 경영하면서 처남 가족과 함께 과수원 15ha를 경영하고 있었다.

한국 농가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규모의 전업농에 해당되었는데, 그들 말로는 과수원만 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아서 식당업과 함께 겸업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농업 경쟁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 등 몇몇 농업 강국을 제외한다면 해결책은 인력 육성에 달려있다는 견해에 모두 동감하였다.

우리를 안내하는 과수원집 겉모습은 매우 훌륭한 저택으로서 뒤뜰에는 2필의 말과 갓 태어난 망아지 한 마리가 귀엽게 뛰어 놀고 있었으며, 안주인의 모습은 한국 농부의 아내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풍요로운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것은 문화의 차이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과수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점심을 먹는 식당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가 열심히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생활전선에 나와서 고생하는구나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과수원과 식당을 겸업하는 그 집 아들인데, 일요일이어서 용돈을 받기 위해서 집안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터키 쿰카피 수산시장

Kum-Kapi 수산 시장은 보스포러스 해협과 지중해와 만나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해변을 따라 어시장과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다. 수산 시장은 매일 경매가 열리며 바닥에는 타일로 깔려 있으며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여 매우 위생적인 시장이었다.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으며 냉동 생선은 없었고, 2일 정도 판매 후 잔량은 모두 폐기한다. capariz 라는 길에는 생선구이 집들이 즐비하다.

수산 시장은 도매와 소매를 함께하고 있었으며, 취급하는 주요 생선은 멸치, 돔, 고등어였으며, 모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것 같이 신선해 보였으며, 냉동 생선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판매상들의 말에 의하면 2일 정도 판매하고 남는 것은 모두 폐기한다고 했다.

수산 시장에서는 판매할 물고기를 사진에서와 같이 생선을 종류별로 한 마리씩 얇게 펴서 줄을 맞추어 진열해 놓은 특이한 모습이었는데, 매우 깨끗해 보였으나, 한국의 수산 시장과 같이 냉동 시설이 없어 비위생적인 것처럼 느껴졌으며, 생선은 99% 구워 먹고, 우리와 같이 횟감으로 요리해 먹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스탄불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있는 2000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동서양 문화와 상업의 교류지로서 세계를 지배한 3대강국인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다.

도시 곳곳에 과거 번영의 흔적들을 보존해 놓고 있어 생생한 역사의 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1,20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해안의 대도시이지만 대륙적 기질을 가진 탓인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수산물 소비문화 및 수산업이 발달되지 않은 곳으로서 우리나라 양식업 수출 가능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연수 기간 중 3개국을 방문하여 농 · 수산업을 포함한 경제 동향을 직 · 간접적으로 비교 시찰 하였다. 이번 이슬람 및 지중해 문화권 산업 시찰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 ·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와 상대적 차이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 활동에 있어, 해외 연수 기간 중 얻어낸 사례들과 여러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부분들을 소관 분야에 발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다.

라. 관광건설위원회

1) 개 요

○ 기 간 : 2006년 12월 15일 ~ 12월 24일(10일)
○ 장 소 : 뉴질랜드, 호주 등 2개국(교통 및 환경시설, 주요 관광 시설 등)
○ 인 원 : 관광건설위원회위원 10명(위원장 서동철), 직원 2명

2) 연수결과

금번 해외 연수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련 사항 및 유명 관광지 운영 사례, 자원 재활용 시설 등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의 견문을 넓히고, 최근 세계관광의 흐름을 파악하여 강원관광의 현주소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교통안전 및 환경정책 등 견학 성과를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견문을 넓히는데 있었다.

연수대상 국가를 뉴질랜드와 호주로 한 것은 “지구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 불리는 두 나라가 비록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원시 마오리의 전통과 유럽 이민의 전통을 잘 조화시켜 자연과 더불어 새롭게 근래에 형성된 또 다른 지구상의

독특한 문명권을 보여주는 곳으로, 강원도가 지향하는 자연환경의 관광 자원화에 대한 비교·체험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로 선정하였다.

이번 연수 기간 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3개소와 교통 및 환경 시설 2개소를 방문하고 뉴질랜드와 호주의 주요 관광 시설 및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하여 얻은 성과는 당장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와는 제도적으로나 사회 환경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정 활동에 있어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면들을 소관 분야에서 적용해 나가기 위하여 해외 연수 기간 중 얻어낸 사례들과 여러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New Zealand)의 교통안전 실태

뉴질랜드는 보행자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보행자 보호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가 있으며, 노견에 위치한 보행자 건널목 버튼을 누르면 도로 맞은편에 사람 모양의 녹색등이 켜져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해도 무단횡단이 아니고 20m이내인 곳에서만 보행자의 위반으로 간주 된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은 모두 무단횡단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부 도로에는 대부분 중앙선 부근에 흰색 빗금을 친 폭 1~2m의 플러시 메디안을 설치하여 보행자 횡단 시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자동차가 안 올 때 횡단하도록 안전을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책이지만, 차량의 양보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새로운 보행자 사고 감소 대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병원에 실려 오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며 15세 이상 모든 운전자와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15세 미만 어린이에 어린이에게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적발되면 어린이 1인당 약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면에 흰색 전조등 후면에는 적색 점멸등 및 적색 반사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시드니(Sydney)의 대중교통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의 주요 도시인 시드니市의 대중교통은 크게 도시철도(City Rail), 버스(Bus), 페리(Ferry)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관리주체는 도시철도국, 대중교통국, 민영버스 회사이다.

오스트렐리아 TNT 하버링크 모노레일(Harbour link monorail)이 있는데 오스트렐리아 건국 2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시드니(Sydney)의 달링하버 지구(Darling Harbour region)가 재개발되어 문화 시설, 쇼핑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도심이 탄생하였다. 이 지역과 도심지를 연결하는 루프선(loop line)으로 된 모노레일이 1988년에 개통되었다.

시드니하버의 페리는 시드니처럼 바다가 도시 깊숙이 있는 곳은 육로보다 페리가 더욱 빠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도 시드니하버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상품 이다.

트래블 패스라는 티켓이 있는데 이 티켓은 복합적 통행수단에 모두 이용 가능한 것, 존에 근거한 요금으로 티켓이 부여한 기간 내에 제한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정기권, 버스만, 또는 버스-페리, 또는 버스-페리-철도에 이용될 수 있다.

○ 호주(Australia)의 생태 관광

호주의 생태 관광은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여행 방식이나 여행 문화로서 친환경적 관광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도시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광형태이다.

생태 관광은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소규모 그룹의 여행, 자연 보호와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의 환경윤리를 익힌 전문 가이드의 동행, 출입 제한 구역이나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시설 등 특별 지역에 대한 훼손 금지, 보호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관광 이익의 환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호주의 생태 관광 산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전기금 조성, 외화 수입,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개발도 생태 관광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잭슨스 랜딩 재개발은 수변 경관 설계를 이용, 환경을 수리한다는 개념에서 시도된 것으로 생태·복원·예술·문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그리고 브리즈번의 로비나 타운은 교외 지역의 친환경 신도시로 단지 한가운데에 상업과 업무, 레크레이션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센터를 조성했다. 또한 크리스탈 워터스는 버려진 목초지에 집과 도로, 저수지 등을 세심하게 생태학적으로 디자인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했다.

○ 호주의 자원 재활용시설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츄로라재활용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자석분 류기, 압축기, 원심분리기, 유리분쇄, 자동운반기, 공기정화기, 대용량 저장 컨테이너 등의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재활용 형태를 살펴보면 목재는 잘게 만들어서 도로변 또는 공원의 정원수 밑에 잡초 자람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폐기물은 집하장에서 수집한 후 매립지에서 매립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었으며 고철 등은 한국 등지로 수출하고, 재활용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정화 후 정원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대하는 사례는 볼 수 없다.

제 3 절

협의회 · 행사

1. 전국 시 · 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가. 협의회 연혁 및 현황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993년 8월 26일 출범한 임의단체에서부터 발족되었다. 당시에는 울산광역시의회가 창설되기 전이기 때문에 15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1인, 총무 1인으로서 임기는 2년이었다.

협의회의 사단법인화의 노력과 지속적인 위상 및 기능 강화의 요청에 의하여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고, 동년 12월 31일 협의체의 설립신고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는 비로소 법적 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협의회의 역할은 ①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②의회 공동의 문제 협의 ③주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 ④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에 대한 중앙정부에의 건의와 이에 따른 결의문과 성명서 채택 등 대외 의견 표방 활동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활동 ⑤선진 의회 모델의 연구·검토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의 제고 ⑥지방자치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 ⑦지방자치에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자료 수집과 교환 활동으로 되어 있다.

협의회는 1991년 8월 3일 서울시의회 김찬회 의장이 제 1대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8년 6월 30일 제10대 박주웅 협의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17여 년 동안 총 10명의 협의회장이 재직하며 활동하였다.

협의회는 법률 기관 이후의 협의회 대수(代數)를 회원의 임기가 아닌 임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부여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회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임원진의 임기는 전 · 후반기로 나누어 1년마다 임원진을 새로이 구성하였는데 제 10대 전 · 후반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0대 전반기 (2006.8.3.~2007.8.30.)	10대 후반기 (2007.8.31.~2008.6.30.)
회 장	박주웅(서울)	박주웅(서울)
부 회 장	강박원(광주), 김문규(충남) 김병곤(전북), 박판도(경남)	장경훈(대구), 박창규(인천) 김종철(전남), 오장세(충북)
감 사	박창규(인천), 이상천(경북)	강박원(광주), 이상천(경북)
사무총장	김철욱(울산)	김철욱(울산)
정책위원장	김영관(대전)	김영관(대전)

나.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는 ①지방의회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개발, ②지방의원의 유급제 · 보좌관제 · 후원회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개발, ③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 관련 시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연구, ④기타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협의회 회원 중에서 추천한 6인 이내의 회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제10대 전후반기 협의회 임기 중 구성 · 운영한 정책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0대 전반기 (2006.8.3.~2007.8.30.)	10대 후반기 (2007.8.31.~2008.6.30.)
위원장	김영관(대전)	박주웅(서울)
위 원	조길우(부산), 장경훈(대구) 양태흥(경기), 이기순(강원) 오장세(충북), 김종철(전남) 양대성(제주)	조길우(부산), 양태흥(경기), 이기순(강원), 김문규(충남), 김병곤(전북), 박판도(경남) 양대성(제주)

다. 협의회 사무처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처에는 총무과, 의사과, 정책과를 두고 있다. 현재 사무 직원은 회장이 속한 시·도 공무원 중에서 파견하거나 유급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무처 직제와 정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계약직
정 원	15	1	-	3	6	3	2
현 원	10	-	1	-	5	2	2

※ 현재 직원 8명은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 전문직 2명은 자체 채용

라.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안 건)
2006년도 정기회	'06. 8. 3.	서울특별시의회	○ 임원 선출의 건, 2005년도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제3차 임시회	'06. 9. 14.	경상북도의회 (포항 힐튼호텔)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건의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 ○ 지방의회의원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제도 부활 건의 ○ 서류제출요구 법규 개정 건의 ○ 행정사무감사 기간 법규 개정 건의 ○ 지방의회 기능직(필기)의 일반직화 건의 ○ 의회 공무원의 의사수당 지급 ○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의견 제시의 건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안 건)
2006년도 제4차 임시회	'06. 10. 19.	광주광역시의회	○ 규칙 등에 대한 조례 위임 범위 준수 여부 검토 규정 설치 건의 ○ 원격지 회의 출석비 부활 건의 ○ 지방공무원 계급 명칭 변경 ○ 지방공무원 수당 제도 개선 건의 ○ 지방의회 전문위원에게 서류제출요구권 부여 건의 ○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 국회 「의정자문관」파견 협의 요청에 대한 협의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공동 선언문 ○ 사무처 차장 직위 신설 및 전문위원 직급 상향 ○ 지방의원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한 시·도의회 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 건의 ○ 지방의원 의정 활동 우편요금 감면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2006년도 제5차 임시회	'06. 12. 6.	부산광역시의회	○ 시 · 도의원에 대한 후원회 구성 ○ 사무처 차장직위 신설 및 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 ○ 전문위원 직급·정수의 자율화 요구 ○ 서류제출요구 법규 개정 건의 ○ 2007년도 광역의원 전체 토론회 제안 ○ 지방의원 국외 여비 현실화 건의 ○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 ○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 ○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 결의안 ○ 포뮬러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 결의안
2007년도 제1차 임시회	'07. 3. 7.	대구광역시의회 (한국패션센터)	○ 시 · 도의회 의장 표창 시행 효력 구비를 위한 건의의 건 ○ 사무처 직원의 공동 세미나 운영의 건 ○ 의정 운영 지원 경비 현실화 건의의 건
2007년도 제2차 임시회	'07. 4. 11.	울산광역시의회	○ 시 · 도교육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원 관리 개선 건의의 건 ○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한국지방자치학회) ○ 울산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 성명서 채택의 건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안 건)
2007년도 제3차 임시회	'07. 5. 25.	경기도의회	○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의 건 ○ 용도 지정 교부 경비 등의 지방의회 보고 제도 도입 건의의 건 ○ 지방의원 징계 심사 제도 개선 건의의 건 ○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원 수당 지급 건의의 건
2007년도 제4차 임시회	'07. 6. 27.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갯벌타워)	○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중 일부 개정 정관안 ○ 사무처 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안 ○ 용도 지정 교부 경비의 예산 운용 개선 건의의 건 ○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 특위활동결과보고서 기한 개정 ○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 건의
2007년도 정기회	'07. 8. 30.	대전광역시의회	○ 제10대 후반기 협의회 임원 선출의 건 ○ 예산안 ○ 지방의회 관련 사항의 조례 입법 확대 건의의 건 ○ 지방의원 공공요금 지원 건의의 건
2007년도 제5차 임시회	'07. 9. 28.	강원도의회 (베어스타운 관광호텔)	○ 2008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계속) ○ 2008년도 세출 예산 비목(위탁교육비 · 직무연찬비) 신설 건의의 건 ○ 서류 제출 요구 방법 개선 건의의 건 ○ 국토 ·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건 ○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결의문 채택의 건
2007년도 제6차 임시회	'07. 10. 23.	충청북도의회	○ 재의 요구 처리 절차 개선 건의의 건 ○ 2008년도 세출 예산 비목(위탁교육비 · 직무연찬비) 신설건의의 건 ○ 서류 제출 요구 방법 개선 건의의 건 ○ 국토 ·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건의의 건
2008년도 제1차 임시회	'08. 2.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협의회 정관 중 일부 개정 정관안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 책정 기준 개정 건의의 건 ○ 의정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의 건 ○ 지방의정 성과공표제 도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안 건)
2008년도 제2차 임시회	'08. 4. 17.	전라남도의회	○ 청원경찰에 대한 의사수당 지급 건의의 건 ○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서 채택의 건
2008년도 제3차 임시회	'08. 5. 14.	전라북도의회	○ 2007년도 세입 · 세출 결산(사무총장 제출) ○ 교직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제도 개선 건의의 건(충청북도의회 의장 제출)
2008년도 제4차 임시회	'08. 6. 25.	경상남도의회	○ 교육비 특별회계 간주 처리 예산편성제도 개선 건의의 건 ○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마. 정책위원회 운영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안 건)
제1차 정책 위원회 회의	'06. 10. 19.	광주광역시의회	○ 지방의회 의원 원격지 회의 출석비 부활 건의의 건
제2차 정책 위원회 회의	'07. 4. 12.	울산광역시의회	○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원 보좌관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제3차 정책 위원회 회의	'07. 6. 27.	인천광역시의회 (송도갯벌타워)	○ 용도 지정 교부 경비 등의 지방의회 보고 제도 도입 건의의 건 ○ 지방의원 징계 심사 제도 개선 건의의 건
제4차 정책 위원회 회의	'07. 10 23.	충청북도의회	○ 세출 예산 비목 신설 건의 ○ 서류 제출 요구 방법 개선 ○ 도시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권한 강화
제5차 정책 위원회 회의	'08. 4. 17.	전라남도의회	○ 5급 전문위원 정수 책정 기준 개정 건의의 건 ○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서 채택의 건

2.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가. 구 성

전국 시 ·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규약 제7조, 제8조에 의거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1회, 임시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8월과 12월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회　　장 : 김진수(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 부 회 장 : 이준연(강원), 송재용(대전), 이탁우(전남), 김진옥(경남)
○ 감　　사 : 김병윤(전북), 고봉식(제주)
○ 사무총장 : 류규하(대구)

나. 기 능

1) 시 · 도의회 공동이해 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
2) 시 · 도의회 상호간 정보 교환 및 주요 현안 사항 협의
3) 협의회에서 채택된 결의 및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4) 시 · 도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 자료 등 정보의 지원
5) 기타 본회의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

다. 운영 현황

회의 및 개최지	제출처	안 건 명	회의 결과	처리결과	비 고
1차 ('06. 8. 9.) 서울	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개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
	협의회	제5기 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선출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
	협의회	제2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부산광역시의회 개최 (9.20.)
2차 ('06. 9.20.) 부산	서울	의회사무처 차장직위 신설 및 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4차(광주)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심사 보류됨
	서울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대전	지방의원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한 시·도의회 의원 인턴 보좌관제 도입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4차(광주)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강원	지방의회 의원 교통비 지급 건의	보류	-	-
	전북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 우편요금 감면을 위한「우편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수정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4차(광주)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07. 9. 3. 행정자치부 건의)
	회장	제3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경상북도의회 개최 (10.20.)
3차 ('06.10.20.) 경북	서울	전문위원 직급과 정수의 자율화 요구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심사 보류 됨
	경북	서류 제출 요구 법규 개정 건의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됨
	강원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회장	제4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울산광역시의회 개최 (11.23.)

회의 및 개최지	제출처	안 건 명	회의 결과	처리결과	비 고
4차 ('06.11.23.) 울산	서울	2007년도 광역의원 전체 토론회 제안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울산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경기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사무처 내 교육 전담 부서 신설 건의의 건	보류	-	-
	전북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여비 현실화 건의의 건	수정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심사 보류 됨
	대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	보류	-	-
	인천	2014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전남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기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6년 제5차(부산)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회장	제5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광주광역시의회 개최 ('07.1.6.)
5차 ('07. 1. 6.) 광주	사무총장 (대구)	'06년도 협의회비 수입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
	회장	2007년도 협의회 기본운영 계획 보고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
	광주	사무처 직원의 의정 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운영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1차(대구)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회장	제6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대구광역시의회 개최 (2.22.)

회의 및 개최지	제출처	안 건 명	회의 결과	처리결과	비 고
6차 ('07. 2.22.) 대구	경남	시·도의회 의장 표창 시행 효력 구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1차(대구)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어 수정 의결됨.('07. 3. 9. 행정자치부 건의)
	회장	광역의원 전체 토론회 세부 계획안 토론	보류	자체처리	(계속논의)-
	회장	제7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인천광역시의회 개최 (4.19.)
7차 ('07. 4.19.) 경기	서울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정원 산정 요구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정책위원회 심의한 후 제4차(인천) 임시회 안건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 '07. 9. 3. 행정자치부 건의
	강원	용도 지정 교부 경비의 예산 운용 개선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3차(경기)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정책위원회 회부되어 심의 후 제4차(인천) 임시회 안건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 '07. 6.29. 행정자치부 건의
	회장	광역의원 전체 토론회 세부 계획안 토론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	-
	전북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개정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
	회장	제8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대전광역시의회 개최 (5.10)
8차 ('07. 5.10.) 대전	대전	예결위원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과목 설정 내용 변경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정책위원회 심의한 후 제4차(인천) 임시회 안건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대전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3차(경기)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정책위원회 회부되어 심의한 후 제4차(인천) 임시회 안건 채택되어 원안 의결 됨 '07. 6.29. 행정자치부 건의
	회장	전국 시·도의원 토론회 세부계획안 토론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	-
	회장	제9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강원도의회 개최 (6.12)

회의 및 개최지	제출처	안 건 명	회의 결과	처리결과	비 고
9차 ('07. 6.12.) 강원	서울	(가칭) 지방의회 의정 연수원 설립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4차(인천)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4단체협의회 공동으로 국회건의 수정의결
	전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개정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4차(인천)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의결 '07. 6.29. 행정자치부 건의
	제주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과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4차(인천)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되어 원안의결 '07. 6.29. 행정자치부 건의
	회장	제10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 (자체처리)	충청북도의회 개최 (7.5)
10차 ('07. 7. 5.) 충북	경기	2008년도 세출 예산 비목 (위탁교육비 · 직무연찬비) 신설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5차(강원)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정책위원회 회부되어 심의한 후 제6차(충북) 임시회 안건 채택 수정의결('07.10.29. 행정자치부 건의)
	충북	서류 제출 요구 방법 개선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5차(강원)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정책위원회 회부되어 심의한 후 제6차(충북) 임시회 안건 채택 수정의결('07.10.29. 행정자치부 건의)
	회장	제11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 (자체처리)	충청남도의회 개최 (9.10.)
	회장	협의회 임원 선출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 (자체처리)	-
11차 ('07. 9.10.) 충남	서울	국토 ·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방의회 권한 강화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7년 제5차(강원)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정책위원회 회부되어 심의한 후 제6차(충북) 임시회 안건 채택되어 정책위원회 계속검토
	회장	제12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 (자체처리)	전라남도의회 개최 (10.25.)

회의 및 개최지	제출처	안 건 명	회의 결과	처리결과	비 고
12차 ('07.10.25.) 전남	대전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 책정 기준 개정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8년 제1차(제주)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정책위원회 회부하기로 의결
	경북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개정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8년 제1차(제주)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정책위원회 회부하기로 의결
	회장	제13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경상남도의회 개최 (11.28.)
13차 ('07.11.28.) 경남	회장	협의회 부회장 개선의 건	의결	자체처리	-
	회장	제14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전라북도의회 개최 ('08.3.6.)
14차 ('08. 3. 6.) 전북	회장	지방의회 성과공표제 도입반대 결의안 채택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8년 제2차(전남)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 - '08. 2.28. 행정안전부 건의
	회장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결정 제도 개선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08년 제2차(전남)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채택 - '08. 4.21. 행정안전부 건의
	회장	제15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최 (5.9.)
15차 ('08. 5. 9.) 제주	회장	일반회계 및 교육비 특별회계 간주처리 예산편성 제도 개선 건의	의결	의장협의회 상정	-
	회장	제16차 협의회 개최 장소 선정의 건	의결	의장협의회 보고(자체처리)	인천광역시의회 개최 (6.13.)
16차 ('08. 6.13.) 인천	회장	부의안건 처리 결과 보고	의결	자체처리	-

3. 강원자치봉사대상

가. 제정 의의

강원자치봉사대상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직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해 98년 12월 12일 “강원도의회 자치봉사대상규정”을 제정하여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민일보사가 공동으로 99년부터 매년 9월 6일(강원도의회 개원기념일)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나. 시상 내용

○ 시상부문 : 5개부문(일반행정, 교육, 소방, 경찰, 대민지원(軍))
○ 시상인원 : 부문별 각1명
○ 시상명의 : 강원도의회 · 강원도민일보사 공동 명의
- 시상내용 : 상패
※ 2005. 8.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수상자 현황

○ 제8회(2006. 9. 6.)
- 일반행정 : 김시준(강릉시 구정면사무소 지방농업주사)
- 교육행정 : 김수영(영월공업고등학교 교사)
- 경찰행정 : 김광호(철원경찰서 경무과 경위)
- 소방행정 : 김경희(춘천소방서 후평파출소 지방소방교)
- 대민지원 : 임휘국(육군 제1670부대 소령)

○ 제9회(2007. 9. 6.)
- 일반행정 : 이광영(태백시 세무과 지방세무주사보)
- 교육행정 : 조영민(강릉 주문진초등학교 교장)
- 경찰행정 : 이필규(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 소방행정 : 박주용(삼척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교)
- 대민지원 : 박상균(공군 제8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 원사)

4. 강원 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가. 의 의

강원 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 · 군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강원 발전을 위한 결의와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2000년부터 강원도의회와 강원일보사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전야제와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되며 매년 9월 중 강원도의회 개원기념일을 전후하여 도내 8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나. 2006년도

※ 2006년 7월 14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도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

다. 2007년도(제6회 대회, 강릉)

○ 주 제 : 한 마음 한 뜻으로 강원 발전 앞당깁시다.
○ 일 시 : 2007년 5월 22일(화) ~ 5월 23일(수)
○ 행사 내용 및 장소
- 1부 행사(전야제) : 강릉종합체육관
- 2부 행사(체육대회) : 강릉종합운동장

○ 체육대회 우승 : 강릉 팀

江原道議會 歷代 議員 人名錄

初代 議員

1956. 9. ~ 1960. 12.

趙漢珪 議員
(원주시 1)

安明漢 議員
(원주시 2)

金 三 議員
(강릉시)

朴泳千 議員
(춘성군 1)

韓錫虎 議員
(춘성군 2)

許萬壎 議員
(홍천군 1)

許忠煥 議員
(홍천군 3)

元世基 議員
(홍천군 3)

李庚潔 議員
(횡성군 1)

李海俊 議員
(횡성군 2)

金興培 議員
(원성군)

林龍俊 議員 (前半期議長)
(춘천시)

李鍾春 議員 (後半期議長)
(홍천군 2)

李周基 議員
(영월군 1)

嚴秉燕 議員
(영월군 2)

李德鎬 議員
(평창군 1)

崔鍾龜 議員
(평창군 2)

洪泰植 議員
(정선군)

張厚植 議員
(명주군 1)

金元起 議員
(명주군 2)

金振伯 議員
(명주군 3)

金孟甲 議員
(삼척군 1)

金道俊 議員
(삼척군 2)

李 俊 議員
(삼척군 3)

朱鎭喆 議員
(울진군 1)

安鍾鉉 議員
(울진군 2)

姜相日 議員
(울진군 2)

第 2 代 議員

1960. 12. ~ 1961. 5.

吳 雲 浩 議員
(춘천시 1)

孫 斗 鍾 議員
(춘천시 2)

白 完 基 議員
(원주시 1)

金 寅 植 議員
(원주시 2)

洪 憲 杓 議員
(강릉시 1)

崔 燉 虧 議員
(강릉시 2)

金 熙 重 議員
(춘성군 1)

朴 鍾 萬 議員
(춘성군 2)

李 在 勳 議員
(홍천군 2)

李 庚 燦 議員
(횡성군 1)

朴 炅 杓 議員
(횡성군 2)

金 榮 一 議員
(원성군 1)

許 萬 壎 議員 (前半期議長)
(홍천군 1)

元 濟 益 議員
(원성군 2)

崔 冕 翰 議員
(영월군 1)

朴 來 緖 議員
(영월군 2)

李 德 鎬 議員
(평창군 1)

權 五 哲 議員
(평창군 2)

鄭 慶 珍 議員
(정선군 1)

崔 燉 旭 議員
(정선군 2)

石 鍾 文 議員
(명주군 1)

尹 相 奭 議員
(명주군 2)

朴 舜 根 議員
(삼척군 1)

李 震 轍 議員
(삼척군 2)

崔 殷 奭 議員
(삼척군 3)

鄭 東 洙 議員
(삼척군 4)

張 聖 業 議員
(울진군 1)

安 鍾 鉉 議員
(울진군 2)

第 3 代 議員

1991. 7. ~ 1995. 6.

咸 鍾 浩 議員
(춘천시 1)

朴 壽 福 議員
(춘천시 2)

李 鐘 九 議員
(춘천시 3)

許 樑 議員
(춘천군 1)

黃 石 重 議員
(춘천군 2)

鄭 上 澈 議員
(원주시 1)

咸 泳 九 議員
(원주시 2)

鄭 德 重 議員
(원주시 3)
'91. 7. 8 ~ '93. 7. 3

林 炳 華 議員
(원주시 3)
'93. 11. 13~최종

裵 慈 玉 議員
(원주군 1)

金 柄 贊 議員
(원주군 2)

金 鳴 起 議員
(강릉시 1)

金 南 勳 議員
(강릉시 2)

金 振 河 議員
(강릉시 3)

鄭 仁 壽 議員
(명주군 1)

廉 燉 鎬 議員
(명주군 2)

朴 洛 晋 議員
(명주군 3)

全 億 燦 議員
(동해시 2)

鄭 鴻 敎 議員
(동해시 3)

方 恒 錫 議員
(태백시 1)

鄭 圓 敎 議員
(태백시 2)

曺 益 煥 議員
(태백시 3)

李 寬 熙 議員
(속초시 1)

尹 重 國 議員
(속초시 2)

全 商 基 議員
(속초시 3)

鄭 義 道 議員
(삼척시 1)

宋 永 基 議員
(삼척시 2)

金 是 濫 議員
(삼척군 1)

黃 金 泉 議員
(삼척군 2)

金 斗 溢 議員
(삼척군 3)

崔 慶 植 議員 (前後半期議長)
(동해시 1)

張 元 俊 議員
(홍천군 1)

高 光 桓 議員
(홍천군 2)

李 起 運 議員
(홍천군 3)
'91. 7. 8 ~ '92. 3. 11

金 相 弼 議員
(홍천군 3)
'92. 7. 11 ~ 최종

趙 泰 鎭 議員
(횡성군 1)

宋 仁 鎬 議員
(횡성군 2)

金 炯 在 議員
(영월군 1)

金 德 龍 議員
(영월군 2)

李 泰 明 議員
(평창군 1)

朴 東 洛 議員
(평창군 2)

劉 燉 大 議員
(정선군 1)

成 熙 稷 議員
(정선군 2)

閔 光 基 議員
(정선군 3)

李 熙 雄 議員
(철원군 1)

任 隆 鎬 議員
(철원군 2)

宋 林 秀 議員
(화천군 1)

鄭 忠 洙 議員
(화천군 2)

李 炳 才 議員
(양구군 1)
'91. 7. 8 ~ '92. 3. 16

金 利 洙 議員
(양구군 1)
'92. 7. 11 ~ 최종

李 海 天 議員
(양구군 2)

李 基 淳 議員
(인제군 1)

邊 完 基 議員
(인제군 2)

咸 哲 勳 議員
(고성군 1)

李 英 九 議員
(고성군 2)

金 鑄 赫 議員
(양양군 1)

鄭 相 澈 議員
(양양군 2)

第 4 代 議員

1995. 7. ~ 1998. 6.

咸 鍾 浩 議員
(춘천시 1)

黃 煥 道 議員
(춘천시 2)

李 鐘 九 議員
(춘천시 3)

許 樞 議員
(춘천시 4)

李 茂 淳 議員
(춘천시 5)

林 相 奎 議員
(원주시 1)

孫 淑 子 議員
(원주시 2)

安 相 賢 議員
(원주시 3)

李 守 遠 議員
(원주시 4)

沈 相 基 議員
(원주시 5)

盧 昇 鉉 議員
(강릉시 1)

宣 福 基 議員
(강릉시 2)

柳 憲 洙 議員
(강릉시 4)

金 燾 起 議員
(강릉시 5)

朴 洛 晋 議員
(강릉시 6)

金 振 東 議員
(동해시 1)

吳 元 一 議員
(동해시 2)

崔 埈 杓 議員
(동해시 3)

朴 金 龍 議員
(태백시 1)

鄭 圓 敎 議員
(태백시 2)

俞 王 在 議員
(속초시 1)

尹 重 國 議員 (前半期議長)
(속초시 2)

崔 相 畢 議員 (後半期議長)
(강릉시 3)

金 吉 貞 議員
(속초시 3)

鄭 在 旭 議員
(삼척시 1)

金 源 秉 議員
(삼척시 2)

李 相 俊 議員
(삼척시 3)

金 東 烈 議員
(삼척시 4)

金 斗 溢 議員
(삼척시 5)

黃 永 哲 議員
(홍천군 1)

李 相 九 議員
(홍천군 2)

高 鍾 學 議員
(홍천군 3)

元 鐘 益 議員
(횡성군 1)

全 仁 鐸 議員
(횡성군 2)

金 炯 在 議員
(영월군 1)

嚴 文 燮 議員
(영월군 2)

許 大 成 議員
(평창군 1)

李 相 明 議員
(평창군 2)

崔 振 圭 議員
(정선군 1)

成 熙 稷 議員
(정선군 2)

梁 承 旭 議員
(철원군 1)

具 本 元 議員
(철원군 2)

宋 林 秀 議員
(화천군 1)

申 二 澈 議員
(화천군 2)

金 利 洙 議員
(양구군 1)

朴 秀 根 議員
(양구군 2)

李 基 淳 議員
(인제군 1)

朴 炳 龍 議員
(인제군 2)

金 源 基 議員
(고성군 1)

尹 承 根 議員
(고성군 2)

李 鎭 浩 議員
(양양군 1)

鄭 相 澈 議員
(양양군 2)

姜 英 淑 議員
(비례대표)

李 壽 揆 議員
(비례대표)

尹 亮 召 議員
(비례대표)

崔 惠 卿 議員
(비례대표)

李 勳 議員
(비례대표)

權 五 正 議員
(비례대표)
'95. 7. 1 ~ '97. 2. 4

池 南 基 議員
(비례대표)
'97. 2. 12 ~ 최종

第 5 代 議員

1998. 7. ~ 2002. 6.

李 茂 洵 議員
(춘천시 2)

鄭 然 大 議員
(춘천시 3)

徐 鍾 乙 議員
(춘천시 4)

郭 魯 麟 議員
(원주시 1)

林 相 奎 議員
(원주시 2)

安 相 賢 議員
(원주시 3)
1998. 7 ~ 2000. 2. 12

金 學 泳 議員
(원주시 3)
2000. 6. 9~최종

李 寅 燮 議員
(원주시 4)

朴 洛 晋 議員
(강릉시 1)

辛 昌 承 議員
(강릉시 2)

鄭 仁 壽 議員
(강릉시 3)

李　勳 議員
(강릉시 4)

金 振 東 議員
(동해시 1)

吳 元 一 議員
(동해시 2)

朴 金 龍 議員
(태백시 1)

孫 石 岩 議員
(태백시 2)

金 吉 貞 議員
(속초시 1)

張 東 希 議員
(속초시 2)
1998. 7 ~ 2000. 12. 27

李 相 俊 議員
(삼척시 1)

許　樞 議員 (前後半期議長)
(춘천시 1)

李 連 雨 議員
(삼척시 2)

黃 永 哲 議員
(홍천군 1)
1998. 7 ~ 2000. 2. 12

朴 柱 善 議員
(홍천군 1)
2000. 6. 9~최종

高 鍾 學 議員
(홍천군 2)
1998. 7~1998. 7. 21

李 相 九 議員
(홍천군 2)
1998. 11. 18~최종

元 鍾 益 議員
(횡성군 1)

全 仁 鐸 議員
(횡성군 2)

嚴 玟 鉉 議員
(영월군 1)

嚴 文 燮 議員
(영월군 2)

金 秀 暾 議員
(평창군 1)

李 相 明 議員
(평창군 2)

劉 燉 大 議員
(정선군 1)

成 熙 稷 議員
(정선군 2)

金 圭 世 議員
(철원군 1)

曺 圭 竝 議員
(철원군 2)

李 天 圭 議員
(화천군 1)

鄭 忠 洙 議員
(화천군 2)

鄭 哲 洙 議員
(양구군 1)

李 海 天 議員
(양구군 2)

李 基 淳 議員
(인제군 1)

邊 完 基 議員
(인제군 2)

金 源 基 議員
(고성군 1)

辛 明 善 議員
(고성군 2)

朴 隆 吉 議員
(양양군 1)

咸 鍾 善 議員
(양양군 2)

千 熙 淑 議員
(비례대표)

沈 在 千 議員
(비례대표)

權 赫 姬 議員
(비례대표)

李 鍾 根 議員
(비례대표)

印 鉉 商 議員
(비례대표)

第 6 代 議員

2002. 7. ~ 2006. 6.

崔 大 和 議員
(춘천시 1)

白 善 烈 議員
(춘천시 2)

池 成 培 議員
(춘천시 3)

柳 鍾 浩 議員
(원주시 2)

李 寅 燮 議員
(원주시 3)

崔 在 圭 議員
(강릉시 1)

宋 範 鎬 議員
(강릉시 3)

崔 漢 植 議員
(동해시 1)

吳 元 一 議員
(동해시 2)

朴 茂 奉 議員
(태백시 1)

鄭 圓 敎 議員
(태백시 2)

李 秉 宣 議員
(속초시 1)

金 吉 貞 議員
(속초시 2)

李 相 俊 議員
(삼척시 1)

朴 相 洙 議員
(삼척시 2)

朴 柱 善 議員
(홍천군 1)

金 箕 男 議員
(홍천군 2)

元 鍾 益 議員
(횡성군 1)

全 仁 鐸 議員
(횡성군 2)

金 鍾 勳 議員
(영월군 1)

嚴 文 燮 議員
(영월군 2)

宋 英 集 議員
(평창군 1)

李　勳 議員 (前半期 議長)
(강릉시 2)

沈 相 基 議員 (後半期 議長)
(원주시 1)

李 俊 淵 議員
(평창군 2)

劉 昶 埴 議員
(정선군 1)

金 秀 雄 議員
(정선군 2)

丘 寅 鎬 議員
(철원군 1)
2002 .7 ~ 2004. 7. 20

金 東 日 議員
(철원군 1)
2004 .10. 30 ~ 최종

池 庚 烈 議員
(철원군 2)
2002. 7. ~ 2005. 12. 29

金 秀 哲 議員
(화천군 1)

鄭 忠 洙 議員
(화천군 2)

崔 圭 和 議員
(양구군 1)

崔 炯 智 議員
(양구군 2)

李 基 淳 議員
(인제군 1)

丁 乙 權 議員
(인제군 2)

金 源 基 議員
(고성군 1)

徐 東 哲 議員
(고성군 2)

朴 隆 吉 議員
(양양군 1)

金 燉 佾 議員
(양양군 2)

李 吉 元 議員
(비례대표)

柳 浩 順 議員
(비례대표)

朴 鳳 林 議員
(비례대표)

高 銖 靜 議員
(비례대표)

議 政 白 書

2008年 12月 日 印刷
2008年 12月 日 發行

發 行 : 江原道議會
編 輯 : 江原道議會事務處
印 刷 : 대한인쇄기획

連絡處 : 200-020 春川市 中央路 1
江原道議會事務處 總務擔當官室
電 話. (033)249-5044
FAX. (033)255-8167

[비 매 품]